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27-0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미래환경 변화와 농식품부 기능 재설정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한
「미래환경 변화와 농식품부 기능 재설정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8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과제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문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세진	영남대학교	균형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표은아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보조원	우희정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조사원

위탁연구진

책임연구원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소장
연구보조원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농업,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하기 위해 3대 핵심과제, 5개 실천계획을 수립
 - 미래성장산업화 달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을 다각적 측면에서 즉, 산업적인 측면, 미래(식량안보)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수정 보완된 “6차 산업” 역시 산업중심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농업관련 조직이 이러한 변화·정책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인지 전반적인 점검·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기
 - 글로벌 및 국내 농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부각되는 농정수요의 다양화·복잡화 문제나 농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재조정 및 조직재설계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본부의 기능·역할 진단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굴하여 농식품부의 역할 재정립 및 조직개편 방향 제시
 - 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진단하여 향후 보강·축소 해야 될 분야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리.
 -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굴,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정인력 진단, 행정기능 및 직무분석, 효율적 조직 및 인력재배치 방안을 마련

3.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분석을 통한 핵심 아젠다 도출

- 환경분석에서는 대내외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반응, 대응, 자기조절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핵심 어젠다 도출
 - 외부 환경분석에서는 글로벌 미래 변화를 견인할 거시적 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

한 전망과 진단을 통해 미래의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농림축산식품부(조직) 역량분석에서는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엇을 수용해야 하고(반응), 무엇을 돌파해야 하는지(대응), 또 어떻게 전략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지(자기조절, 제어)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활용

2)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및 인력 진단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영역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

- 기능 및 조직구조상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조직의 미션달성과 발휘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및 기능을 새롭게 설계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체계를 설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기능 및 직무분석(과별 업무·소요 인력 등 조직 진단)

3) 조직 재설계 방안 제시

○ 마지막 대안으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는 조직의 보강·축소 등 조직개편 방향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원칙과 방향을 제시
- 구체적 조직개편 대안 및 논거를 마련

제2장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분석

1. 미래환경 트렌드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표 2-1> Driving force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야	Driving force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 문화	국제	가. 인구증감의 불균형과 급속한 노령화 나. 윤리적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식품시장 감소: 1인당 식량 소비량 감소, • 1인 식품과 관련 음식 시장 증가 • 농촌 생산기반 붕괴: 농민 고령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농지 황폐화 등 • 마을 공동체 붕괴, 농업 기술 및 자원 전승의 어려움 • 소비자 요구와 음식의 다양화-가공식품, 음식의 질,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와 고도화 진행 • 전통 음식문화 쇠퇴 • 식탁과 생산 현장의 거리 확대에 따른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 몰이해 • 농가소득의 양극화 문제: 기업법인과 소규모 농가 갈등, 겸업 농과 고령농가와의 역할 분담 • 외국 농어촌 노동자 유입 확대
	국내	가. 100세 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다.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생산의 윤리성 확보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 주력 형성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관광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 농촌 다문화 가정 확대 • 귀농수요로 농촌인구 안정화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과학 기술	국제	가. 스마트 모바일 기술 나. 나노, 바이오, 유전자 등 생명연장 과학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생산의 실현: 기계의 자동주행으로 규모한계 타파 • 다수확 고품질 작물생산 • 중노동, 고위험 작업에서 해방 • 일하기 쉬운 농업 • 소비자와 실수요자에게 안심과 신뢰 제공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국내	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변화 초래 나. 스마트 기기와 SNS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 유연제 근무 확대 등은 귀농수요 증가와 도농 간 물리적 거리 축소
경제 산업	국제	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쇠퇴 나. 저성장 시대의 본격화 또는 성장의 종언 라. 중국의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고급소비시장; 중국, 일본 등) • 맞춤형 농업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 식품 시장 확대: 농업의 산업화 •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 농수산물 소비의 양극화

분야	Driving force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생태 환경	국내	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나. 소득 불균형 확대와 소득 양극화 다. 여성경제활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문 각종 정부지원의 한계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의 수입증가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생산구조 변화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세계 식량이나 사료, 에너지, 비료 자원 등의 수요 증가 세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음식 관련 시장 규모 확대, 한식 관심 대형 식품 기업은 글로벌 상품 등의 판매 강화
	국제	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녹색문명으로의 전환 나. 자원고갈의 가속화와 자원확보경쟁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 및 곡물 가격 지속 성장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농업) 등 확산 농수산 해외의존도 심화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해 증가 및 농산물의 생산구조 변화
정치	국내	가. 잊혀진 계절: 기후변화 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재해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곡물가와 비료가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 온실 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 신종질병의 창궐로 AI 등 방역대책의 일상화 호우 증가에 따른 토사 재해 등 발생 증가
	국제	가. 동아시아지역의 패권 다툼 확대: 미국과 중국의 각축 나. 비전통 안보의제의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안보의 대두 농어업 인구의 정치 영향력 약화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한중일 FTA 등 국제 무역: 농업발전

2. 미래수요와 농식품부의 역할

<표 2-2> 미래 농촌수요와 농식품부의 역할

수요	농식품부의 역할	현 농업기능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고급소비시장; 중국, 일본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의 수입증가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생산구조 변화 음식 관련 시장 규모 확대, 한식관심 대형 식품 기업은 글로벌 상품 등의 판매 강화 농수산 해외의존도 심화 온실 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 식량안보의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농업의 확대 폐기물 농업 자재의 재활용 실질적인 온실 가스의 배출 삭감 기술 개발 식품 관련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식품 로스 삭감 및 식품 재활용 식량 안보의 확립 식량 안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전예방책 미흡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 등의 수출 촉진의 저해 요인 제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 계획 필요 	국제농업 통상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다수확 고품질 작물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생산의 실현: 기계의 자동주행으로 규모한계 타파 	농림연구정책

수요	농식품부의 역할	현 농업기능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노동, 고위험 작업에서 해방 일하기 쉬운 농업 소비자와 실수요자에게 안심과 신뢰 제공 맞춤형 농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극 도입하여 누구나 농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 신기술의 농기계분야에 적용하여 농기계 분야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제 근무 확대 등은 귀농수요 증가와 도농 간 물리적 거리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구조 조정 	농림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 생산의 윤리성 확보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고급소비시장; 중국, 일본 등) 농수산 소비의 양극화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생산 비용 절감, 안정적 농산물 생산, 고품질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품종 개발 가공·업무용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국내 농업 생산이 대응력 미흡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에 대응 한 생산·공급 체제 구축 	농산물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자재의 안전 확보 식품의 안전성 향상, 농업의 체질 강화, 환경 대책 등의 기술적 지원 	농산물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과 농업의 결합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력 양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생산비용 적용 식량 자급률 확대 	농업·농촌 정보화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과학농업·농촌 기술지원농업 경영· 기술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곡물가와 비료가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식량이나 사료, 에너지, 비료 자원 등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 농업) 등 확산 농수산 해외의존도 심화 호우 증가에 따른 토사 재해 등 발생 증가 농업부문 각종 정부지원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집적·집약화 등에 의한 농업의 구조 개혁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통한 국내외 수요 농업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은 그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 보조금 지원 	농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생산기반 붕괴: 농민 고령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농지 황폐화 등 농가소득의 양극화 문제: 기업법인과 소규모 농가 갈등, 겸업농과 고령농가의 역할 분담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외국 농어촌 노동자 유입 확대 청장년 전업농 주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귀촌의 적극 지원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인공지능, 로봇의 적극 도입 농촌 다문화 정책 추진 과학기술과 결합된 농업인 육성 	농촌개발·복지증진 농업인력양성 지역농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공동체 붕괴, 농업 기술 및 자원 전승의 어려움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진흥·활성화 농촌에서 지역 자원의 보존·계승 농지·농업용수 등 보전 활동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농촌정책

수요	농식품부의 역할	현 농업기능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의 개척 • 젊은 후계자의 확보 • 매력 있는 농촌 만들기 •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기술개발 • 경제·사회적 가치 높이는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및 곡물 가격 지속 성장 •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수입의 안정적 확보 • 개인 농업의 육성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해예측 서비스 제공 	식량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질병의 창궐로 AI등 방역대책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질병에 대응한 방역기능의 확대 • 전염성 질병과 식물 병해충의 각종 물가 대책 • 검역과 함께 방역기능 확대 • 동식물 검역 수험 방법·체제 구축 	농림축산검역 식품검역축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식품시장 감소: 1인당 식량 소비량 감소 • 1인 식품과 관련 음식 시장 증가 • 소비자 요구와 음식의 다양화-가공식품, 음식의 질,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와 고도화 진행 • 전통 음식문화 쇠퇴 • 식품 시장 확대 •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생산물의 질 제고 • 맞춤형 소비자 식품 개발 • 농업의 산업화 • 식품산업 수출 진흥정책 제고 	식품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 과일 재배 •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해 증가 • 다수확 고품질 작물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종자 보급 •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 농촌 재해 보험 확대 	종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기술 개발 • 농업 분야의 행정 데이터의 오픈화 • 농지 정보의 전자지도 및 기준 제정 • 표준화를 통한 개별 시스템의 통합·발전·데이터 교환 표준 통신 규격 등의 표준화 농사자재, 사료, 농산물 등의 공통 코딩을 위한 검토 • 개별 데이터와 노하우의 취급 규칙 화에 의한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규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기술·노하우의 수출, ICT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사업, 로봇 기술을 활용한 사업 등) • 농업 생산의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 계열 연구 기관과 ICT 기업과의 연계 체제 구축, 로봇 기술의 안전 확보 • 로봇 기술의 위험 평가 방법의 확립 • 모델 검증 등을 통한 안전 지침의 순차적 개발 • 기술 개량 후의 잔존 위험에 관한 보험 등의 도입 	농업기술연구 ·개발

3. 농업·농촌 분야 SWOT 분석¹⁾

<표 2-3> 농업·농촌·식품 분야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지속적인 기술혁신 높은 농업기술 수준 친환경농업 육성과 다원적 가치 증대 직불제 등 정부지원 정책 확대 ICT·BT 융복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생산성 낮음 영세소농구조 경지면적 협소 높은 생산비용 기계화 제약 낮은 식량자급률 중간조직의 역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품질경쟁력 및 수출전략작목 확보 첨단기술 개발 규모화·조직화·전문화된 경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보조·지원 vs 성과 간의 괴리 기후변화 식량안보 시장개방, 가격경쟁력 약화 농업 비중 및 인력 감소 연구개발사업 간 중복 및 민간참여 부족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보전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국민 여가 공간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식량의 안정적 공급처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복지수준(의료·보육·교통 등) 부채, 연금, 세금 문제 정보 미흡 농가소득 침체 농촌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차 산업화, 농촌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 관광·체험·휴양시설 확대 주거환경 개선 테마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 농촌 일자리 창출 주체적 의식·가치관 변화 지역발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고령화 다문화시대 도래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계층 간 소득격차 지역 간 불균형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세 높은 잠재가능성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고용창출 효과 지역별 고유 특산품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쟁력 부족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양극화 식품행정체계, 안전관리 수준 낮음 식품산업 인프라 미비(R&D, 통계, 제도 등) 높은 식재료 해외 의존도 원료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시장 확대 전통식품·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식품안전성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와 수요 증대 건강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도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식품 수입 증가 외국 대형외식업체 국내 진출 (외국계 브랜드 시장 잠식 심화) 식생활 패턴 서구화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경쟁심화 국제곡물가격 급등 및 GMO 증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경기부진, 생산비 증가 등 업계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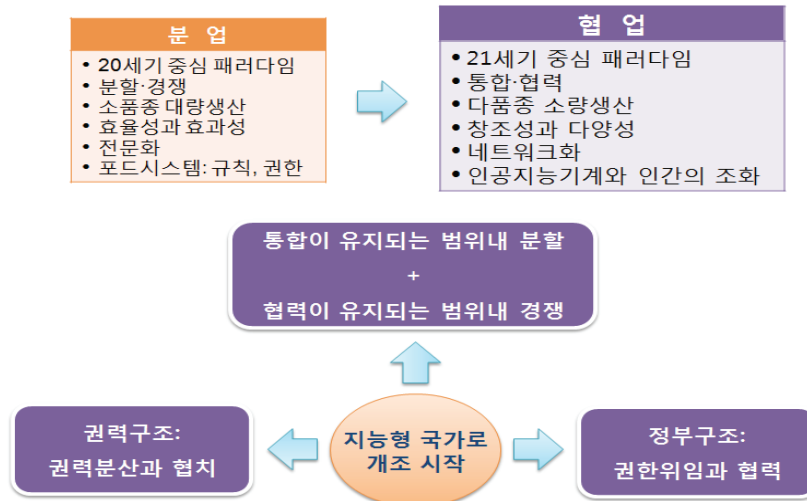
자료: 이용선 외(2016)에서 인용.

1) 이용선 외(2016) 연구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내용은 추가 보완하였다.

4.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과 목표 재정립

1) 시대정신

-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
 - 지금까지의 정부가 개별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미래정부는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완전히 새로운 정부 모델을 개발: 지능형 국가로의 개조 및 전환 시작
 - 정부구조는 권한의 집중, 부처 이기심 등에서 권한위임과 협력의 형태로, 권력구조는 권력분산과 협치로 개조
 - 통합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분할을 진행하고, 협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함



<그림 2-1> 국가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2) 새로운 정부 출범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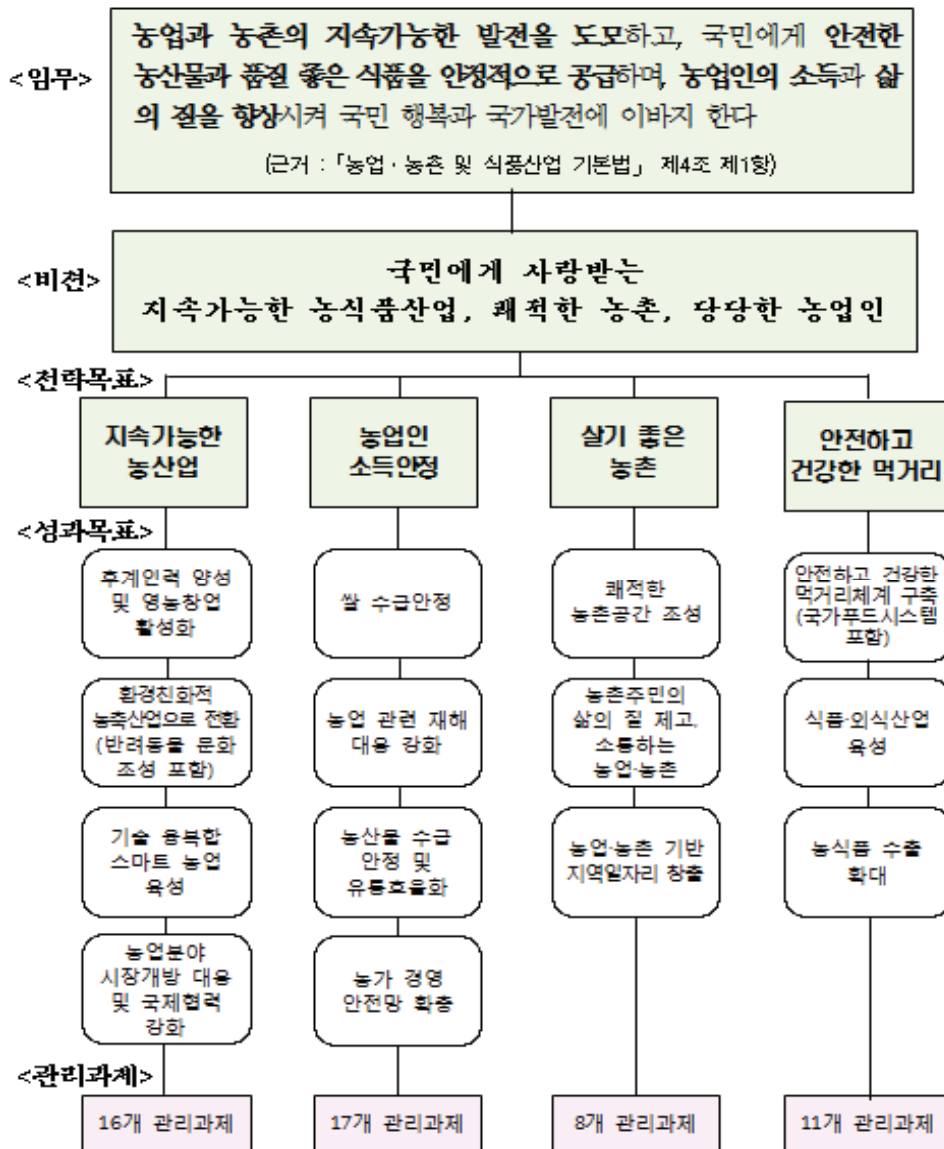
<표 2-4> 국가 중심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 민주주의의 특성 구분

구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준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3) 문재인정부의 과제

- ①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
- ②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 ③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

4)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비전(Vision)과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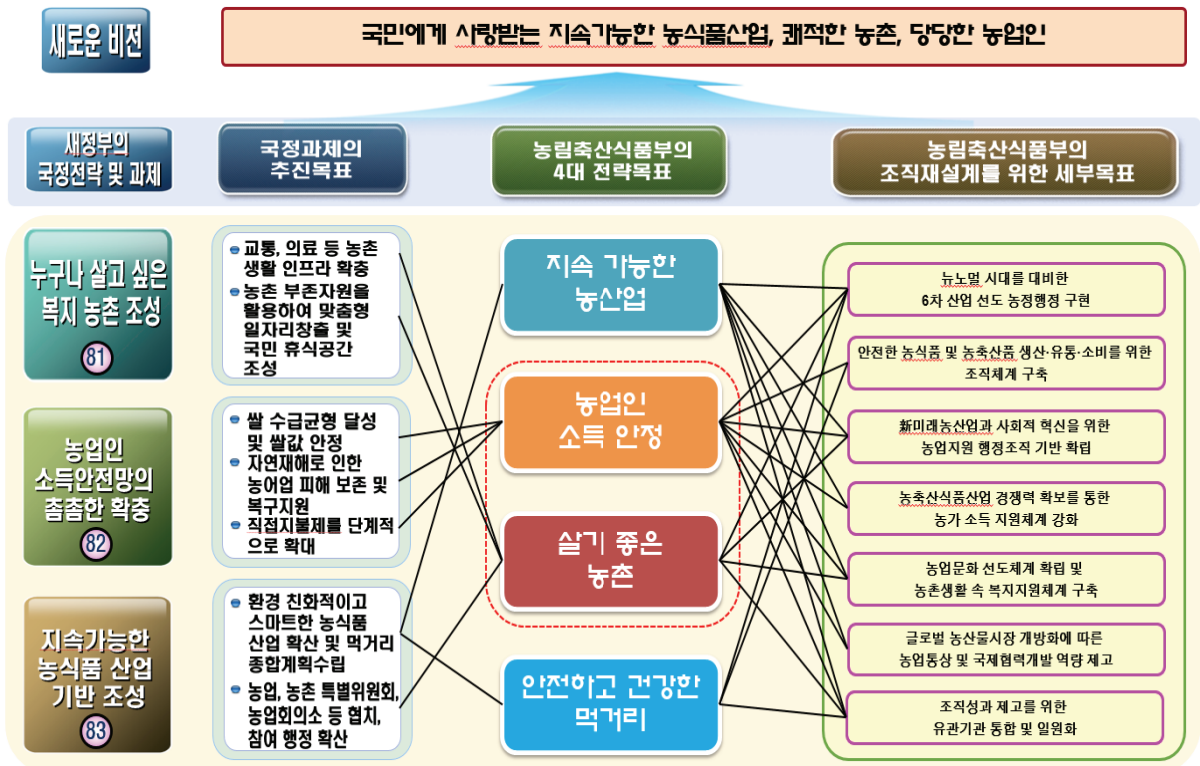
<그림 2-2>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7). 성과관리 계획 자료(내부자료).

5.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재설계를 위한 세부목표²⁾

1)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간 연계성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부 차원에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롭게 설정한 조직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을 분석
-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개 과제(81번, 82번, 83번 과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성을 가진 과제
 - 분석 결과, 4대 정책목표 중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iii) 살기 좋은 농촌과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그러나 4대 정책목표 중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그리 높지 않음



<그림 2-3>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간 연계성

-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설정한 조직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도는 현재 중심의 정책은 잘 반영되어 있으나, 미래지향성은 부족
 - 따라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중심의 정책기능(농업인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은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능(지속가능한 농산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을 확

2)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제5장 조직 재설계 방향에 기술되어 있음.

대해 나가는 조직 운영 전략이 필요

2) 조직재설계를 위한 세부 방향 도출

- 농업의 지능화; 인공지능(AI)관련 새로운 조직 및 기능이 필요하고 강화
- 농업의 효율화 : 데이터 기술 등 기술과 농업 융합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양성이 필요
- 농업의 과학화: 과학기술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에 힘 써야 할 것
- 농업의 안전체계 구축: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
- 사회변화(1인 생활로의 변화, 1인가구 증가, 혼술·혼밥 등)에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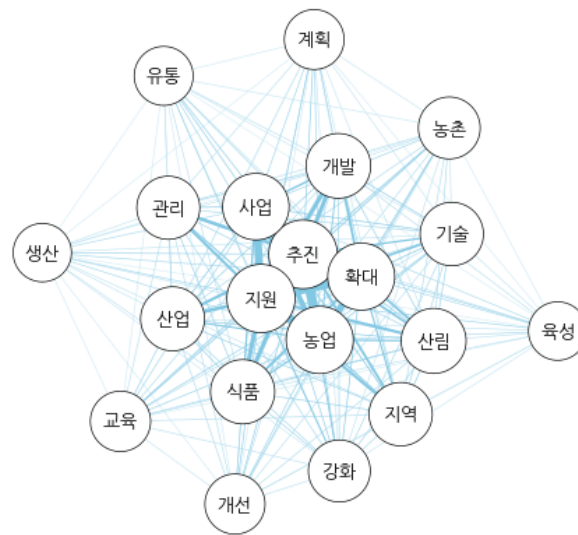
제3장 기능진단 및 재설계

1. 거시기능 분석

○ 업무보고서 키워드 분석



<그림 3-1> 업무보고서 키워드를 활용한 word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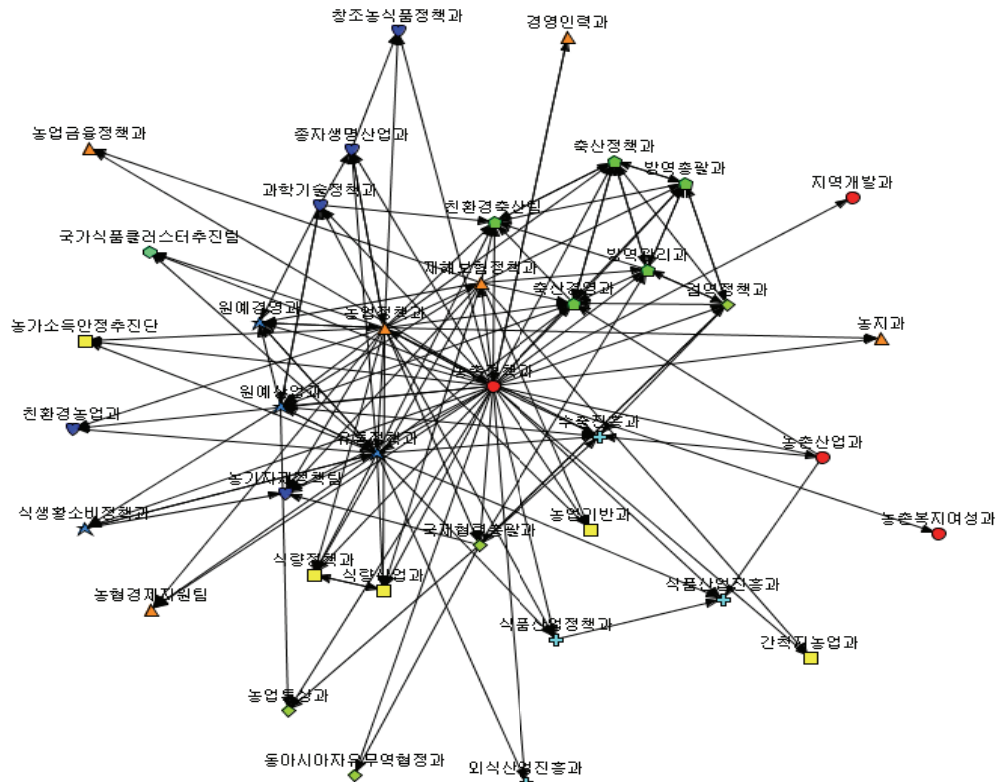


<그림 3-2> 단어연결망 분석 결과

- 빈도가 높은 단어(추진, 지원, 사업 등)가 몇가지 안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 관련 업무 기능과 사업은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음
 - 빈도가 낮은 단어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 단어들을 추가하여 새롭게 시도했다는 것을 유추

- 농림축산식품부는 융합 협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거시기능의 확장이 잘 이뤄지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 내외부적인 일하는 방식의 개혁 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2. 내부기능 분석: 네트워크 분석



<그림 3-3> 분화(GT>45) 결과 업무 협조(공무) 네트워크(8개과 제외)

- 기능의 독립성과 중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찰 수 있었음
 -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등은 거의 모든 부서와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 독립적이며 타부서와는 중복이 되지 않음
 - 반면 검역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등은 기능에 있어 중복
- 계획부서와 집행부서로 구분이 가능
 - 발신이 현저히 높은 부서는 그 기능에 있어 주로 계획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
 - 빈도가 높은 상위 부서들은 문서를 수신하기보다는 발신하는 경향이 큼
 - 반대로 주로 문서를 수신하는 부서는 기능에 있어 정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판단할 수 있었음

	발신 ↑	수신 ↓
기능 분류	계획 부서	집행 및 시행부서
빈도 횟수	전체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전체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성 정도

- 발신횟수가 높은 부서가 전체 네트워크 빈도횟수로 비교했을 때 빈도가 높은 부서에 배치
- 반대로 하위 50%는 전부 수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서를 많이 주고 받았다고 반드시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기능의 조정 및 검토가 필요

3. 기능진단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대분류	중분류	기능 진단 주요 내용
거시기능 분석	발전계획 목표별 거시기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거시기능은 균형있게 잘 수립되어 있음 • 실제로 진행된 목표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능이 균형있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농촌, 농업, 축산 이외의 기능과는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몇 년 간은 농촌,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능은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인재양성 포함)
	역대 농식품부 거시기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능과의 융합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임 • 거시적 기능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내부기능 분석	네트워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기능의 독립성과 중복성에 대한 내용 확인 • 내부 기능에 있어 계획부서와 집행부서로 구분 가능 •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서에서의 적극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기능의 이관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



〈개선사항(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실행에 있어서도 균형감 필요 • 거시, 미시(내부)기능 모두 협업, 융합에 대한 적극적 자세 필요 • 미래농촌, 농업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기능 수행 필요 • 대내외 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필요 • 지속가능한 내부 기능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적 조직 운영 필요

제4장 주요 국가의 농업 정책 변화와 조직의 기능 변화

1.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지향하는 일본

- 일본은 농업농촌 정책의 커다란 전략을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수립
 - 식문화·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통한 국내외 수요확대
 -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산물 생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도시농업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
 - 농업위원회 및 농협개혁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약화 하는 생산현장의 강화
- 일본의 농림수산업 조직과 인력은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예산은 새로운 기반정비사업과 농산어촌 활성화에 많이 투입
 - 2015년도의 대규모 조직·인력개편 이후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아베 정부의 농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에 따른 ‘강한 농림수산업 기반 만들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 그 중에서도 농업농촌정비사업(대구획 토지개량)에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일본은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기업의 자본과 기술·노하우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기반정비 사업에 투자
 -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및 마을소멸을 막기 위한 직접지불 및 다면적 기능지불교부금 등 농산어촌 활성화 및 지속성에 관심과 예산을 투입

2. 농업의 현대화가 최대 목표인 중국

- 농업현대화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4화동보(四化同步)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서 최우선 국정 과제 2014년부터 3년 연속 중앙1호문건의 키워드로 등장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
 - 농업현대화 계획은 농정의 4대(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유통) 축과 관련된 추진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농업분야 적용을 위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인터넷과 농업의 결합, 농업의 6차산업화, 뉴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내수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농민재산권제도 개혁도 중시
- 중국의 정부조직은 2013년 개편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관련 업무 추진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특징
 - 농업관련 업무 담당 중앙 행정부처를 농업부로 일원화하는 조직체계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

3.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를 증시하는 미국

-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를 증시하고 있으며, USDA는 농업과 농산물의 유통 관리 뿐 아니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의 식품 소비까지의 영역을 관장
 - 재정적자 압박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환경보전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증진
 -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음

- USDA의 부서들은 할당예산과 인력이 비례하지 않는데, 지급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는 예산이 많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되어있고, 서비스 업무를 하는 부서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있지만 사용예산이 크지 않음
 - 2016 회계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분야는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분야 (69.52%), 그 다음으로는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15.36%) 분야.
 - USDA는 추세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농업법이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부분의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음

- USDA의 사업 중에서는 사실상 복지기능을 하는 것이 많음
 -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4.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독일

- 독일의 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체화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의 초기 단계 농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성 조사에 역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바뀌고 있음
 - 바이오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원료작물의 재배를 장려.

- 현행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2000년대 초반 광우병 파동으로 기존의 농림수산업에다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가되어 2013년 초반까지 이 체계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이후에도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는 BMEL이 계속 담당
 - 농업·농촌분야의 업무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

- 독일 연방정부의 농림식품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정책이며, 그 다음이 주정부와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는 농업구조개선 공동임무(GAK)임

5. 농가 소득안정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쓰는 프랑스

- 프랑스 농업은 EU의 확대,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기업적 논리의 수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 대응
 - 또,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에너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활동이 새로운 가치 창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의 유지와 창출, 근거리 사회적 활동망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력

- 프랑스 농정은 다른 영역의 공공정책과 함께 국가정책 목표에 보다 합리적으로 부합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분권화 및 분권화된 서비스의 개혁, 근접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6. 농촌공간을 중시하면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영국

- DEFRA의 창설은 환경규제를 농촌관점에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짐
 - 환경보전, 농촌계획, 지방의 자율성 등의 문제를 농업적 관점이 아닌 영역적(Territorial)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제시
 -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개발의 필요성 강조

-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비농업적 경제활동 지원 및 농민들에게 대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 등의 조치들이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
 -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광우병(BSE)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식품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제5장 직무 분석

1. 분석의 개요

1) 직무 조사의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 직무 값과 업무의 비율을 기준으로 단위 업무당 직무량을 도출하고, 적정 직무량을 산출

2) 조사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과장급 이하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조사 실시
 - 업무량은 응답자의 총 업무량(100%) 중 단위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 중요도는 단위 업무별 결재 책임자의 직급으로 측정하였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무의 중요도는 증가한다고 봄(1점 “담당 이하“, 2점 “과장급 결재“, 3점 “실/국장급 결재“, 4점 “차관급 결재“, 5점 “장관급 결재“).
 - 전문성 요구정도는 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1점 “6개월 미만“, 2점 “6개월-1년“, 3점 “1년-3년“, 4점 “3년-5년“, 5점 “5년 이상“).
 - 업무특성은 조직 내부고객 대상, 외부고객 대상 여부로 측정(1 “내부고객“, 2 “외부고객“, 3 “내외부고객“, 4 “해당 없음“).

3) 직무량 산출

- 기준근로시간을 1,968시간(52주×5일×8시간)으로 잡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2016년도 기준 공휴일 14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외한 뒤 1 manpower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설정
 - 2016년도 기준 각 부서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기준근로시간에 합산하여 적용
 - 이 때 응답자의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과 부서의 초과근로시간 평균 값의 합

4) 직무가치 기준 직무량 비교

- 부서별 업무의 중요도 및 전문성 요구 정도, 업무 특성 수준에 따른 manpower(직무량)의 분포와 관련하여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manpower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부서 전체의 직무량 분포 현황을 분석
 -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가 높은 직무에 manpower가 집중되어 있을수록 부서 전체의 직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5) 부서별 직무조사 응답 현황

<표 5-1> 부서별 직무조사 응답 현황

국/실(응답자)			실/과(응답자)		정원	정원대비 응답비율 (정원 내 공무원 기준)		
1	지원부서	118	대변인실 *기간제 4명 포함	13 (4)	16	81.3%		
			감사담당관실	13			14	92.9%
			운영지원과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4명 포함	22 (4)	30	73.3%		
			정책기획관실	58			67	86.6%
			비상안전기획관실	4			6	66.7%
2	농촌정책국	45	농촌정책과 * 파견자 5명 포함	9 (5)	13	69.2%		
			지역개발과 * 전문임기제 1명 포함	12			12	100.0%
			농촌복지여성과	8	9	88.9%		
			농촌산업과	11	12	91.7%		
3	농업정책국	54	농업정책과	13	15	86.7%		
			농지과	11			13	84.6%
			경영인력과	8	9	88.9%		
			농업금융정책과	10	12	83.3%		
			재해보험정책과 *파견자 1명 포함	7 (1)	8	87.5%		
			농협경제지원팀	4			6	66.7%
4	식량정책관	46	식량정책과	13	15	86.7%		
			식량산업과	11			11	100.0%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파견자 1명 포함	6 (1)	7	85.7%		
			농업기반과	6			11	54.5%
			간척지농업과	9			11	81.8%
5	국제협력국	43	국제협력총괄과	14	17	82.4%		
			농업통상과	9			9	100.0%
			검역정책과	10	11	90.9%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0	11	90.9%		
6	축산정책국	52	축산정책과	14	17	82.4%		
			축산경영과	12			13	92.3%
			방역총괄과	9	10	90.0%		
			방역관리과	10	11	90.9%		
			친환경축산팀	7	8	87.5%		
7	식품산업정책관	43	식품산업정책과	12	15	80.0%		
			식품산업진흥과	7			8	87.5%
			외식산업진흥과	6	7	85.7%		
			수출진흥과 *지원근무 1명 포함	9 (1)	10	90.0%		

국/실(응답자)		실/과(응답자)		정원	정원대비 응답비율 (정원 내 공무원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견자 4명 포함	4 (4)	5	80.0%	
8	유통소비정책관	47	유통정책과	16	17	94.1%
			식생활소비정책과	10	12	83.3%
			원예산업과	11	12	91.7%
			원예경영과	10	11	90.9%
9	창조농식품정책관	49	창조농식품정책과	14	16	87.5%
			과학기술정책과	9	10	90.0%
			친환경농업과	10	11	90.9%
			중자생명산업과	10	11	90.9%
			농기자재정책팀	6	7	85.7%
총합계		497	477 (20)	556	85.8%	

주: 괄호 안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과견자, 지원근무 등임

2. 부서별 직무 분석 결과

1) 지원부서

<표 5-2> 지원부서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 기획 및 계획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 영상광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 언론인터뷰 및 기고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농업인단체와의 업무 협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 	0.5
감사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감사 한국마사회 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신고 일상감사 지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항 	0.5
운영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 인원협의 및 심사인원 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합 평가 글로벌 중장기 인재양성 교육, 상훈, 징계 업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운영 관리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행사지원 	0.5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표 5-3> 정책기획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기획재정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당면 농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국회대응 • 경제정책 방향 수립 • 재정관리 편성 총괄 •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답변서 제출 • 국회 및 정당업무 • 신규 농축산식품산업 예산 심의 	2	-	0
창조행정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 국정과제 총괄 • 농식품정책자료집 발간(분장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 • 정책실명제 •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 금요농정토론회(분장외) •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0.4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입법추진 업무 총괄 • 농식품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식품규제발굴 및 개선 •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계 정책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 평가 • 농축산식품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농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 농림축산식품통계 증장기 발전 방안 • 통계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 • 통계관련 규정 운영 •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정보보안 계획수립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회 참가(분장외) • 부서개인별 정보보안지수 운영(분장외) • 전자기파 공격 대응(분장외) • 일일정보보안 뉴스작성 및 공유(분장외) 	0.1
비상기획 안전기획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훈련 실시 • 읍지연습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3) 농촌정책국

<표 5-4> 농촌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농촌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3	-	-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관한 관리 감독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경영 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단체,전문교육기관, 지자체 교육훈련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실습교육장 운영지원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0.5
지역 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농촌복지 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 	2	-	-

4) 농업정책국

<표 5-5> 농업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한반도 농업, 농촌 발전전략 	2	-	-
농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지역개발관련 협의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농업진흥지역 운영 농지보전 제도 운영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농지종합정보화 	2	-	-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농업금융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	-
재해보험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손해평가관리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2	-	-
농협경제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경제사업 점검, 평가계획 수립 농업축산부문 신규투자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 및 조합경제사업 지도감독 	1	-	-

5) 식량정책관

<표 5-6> 식량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식량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1	-	-
식량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해충예찰, 방제계획 수립 및 총괄 쌀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	-	-
농가소득 안정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	-	-
농업 기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농어촌정비법 운용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	-	-
간척지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배수개선 계획 	1	-	-

6) 국제협력국

<표 5-7> 국제협력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국제협력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 시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 간담회 개최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분장외) 	0.2
농업 통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농산물 반입 	0.2
검역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검역관련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생검역 수입검역 및 통상업무 식품방역법령 운용 식물검역제도 수립 식물검역관련 주요정책 수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업무 식품검역제도 수립 	1	-	-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투자, 지재권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2	-	-

7) 축산정책국

<표 5-8> 축산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축산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기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등급제도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축산분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3	-	-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산업 육성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 •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축산 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 낙농진흥법 운용 	1	-	-
방역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 수의사법 운용 • 돼지열병 등 증가축 방역대책 •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2	-	-
방역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약품 관련 법령 • 축산물안전관리 효율화 및 여건 조성 •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 광견병 방역대책 • AI 방역대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안전분야 예결산 • 축산물 안전분야 국회대응 	0.1
친환경 축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수급안정 •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이용대책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련 단체 지도감독 • 축산기자재업무총괄 • 기록물관리, 서무업무, 기타 업무 등 	0.1

8) 식품산업정책관

<표 5-9> 식품산업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식품산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식품산업정책업무 총괄 및 기획 	-	-	-
식품산업 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관련 법제정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1	-	-
외식산업 진흥과	-	-	-	-
수출 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1	-	-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국회대응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0.5	-	0.5

9) 유통소비정책관

<표 5-10> 유통소비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유통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선정지원 및 평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공약사항)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핵심과제) 	1	-	-
식생활 소비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푸드스텝 제도 도입 등 식생활교육 및 계층별 영양지원 강화(공약사항) 	-	-	-
원예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지채소생산안정제 추진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인삼산업 종합계획 인삼산업법 운용 	1	-	-
원예 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전문점 및 화훼판매코너 설치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FTA 보완대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청탁금지법, 시장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	-	-

10) 창조농식품정책관

<표 5-11> 창조농식품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투 입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창조농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2	-	-
과학기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1	-	-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불체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0.1
종자생명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상임위원 및 간사) 	2	-	-
농기자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자재산업육성 정책 및 기획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추진 4차산업 대응 첨단농업기계화 추진 여성친화형농기계 종합보급대책(공약) 	1	-	-

제6장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7대 목표

1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6차 산업 선도 농정행정 구현
2	안전한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3	新미래농업산업과 지역농정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지원 행정조직 기반 확립
4	농축산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지원 체계 강화
5	농업문화 선도체계 확립 및 농촌생활 속 복지지원 체계 구축
6	글로벌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 역량 제고
7	중복·분산된 기능 재편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그림 6-1>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7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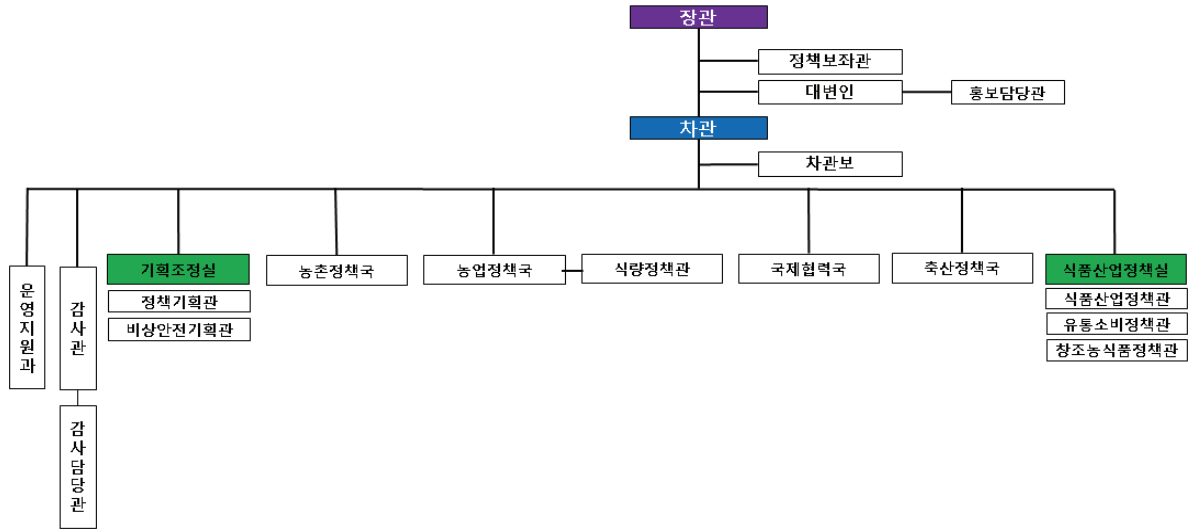
개편 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부처차원의 행정수요 대응 및 핵심기능 이행을 위한 조직 신설 - (新)기능 확대에 따른 통솔 범위 조정을 위한 조직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중복·분산된 기능에 대한 재조정 - (現)조직 기능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부서 간 기능 이관
	강화	- (新)농정 실행력 강화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통폐합	- (現)중복·유사기능 간 통폐합에 따른 재조정
조직명칭 변경		- (新)미래환경변화 대응 조직개편의 당위성 및 기능적 명확성 제고

<그림 6-2>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방향

산출기준(단위부서)		세부 내용
인력증감 산출 도출 기준		- 인력증감은 개별 단위부서의 직무 기준으로 분석 - 정량적으로 미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직무가 아닌 (現)직무를 기준을 우선 적용 - 정성적으로 미래 업무량이 증가 혹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 및 감축안 제시
인력 소요 분석	투입시간 기준	- (증가) 현재 담당 업무의 직무량이 0.5 manpower이고 추가 투입필요 수준에 대해 30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0.5의 30%인 0.15 manpower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 - (감소) 현재 담당 업무의 직무량이 0.5 manpower이고 추가투입 필요 수준에 대해 -30%로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나 중요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제하에 현재 투입 manpower의 30%에 해당하는 0.15 manpower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
	업무 중요도 및 전문성 기준	- (증가) 중요도 수준과 전문성 요구 수준 중 최소 1개 이상 평균 4점 이상인 직무군은 업무량 증가 수요가 높고, 전문성 혹은 중요도가 높은 직무이므로 우선적으로 증가가 필요한 직무로 판단 - (감소) 중요도 수준과 전문성 요구 수준이 모두 평균 2점 미만인 직무군은 업무량 감소 필요성이 높고, 전문성이나 중요도가 모두 낮은 직무이므로 우선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직무로 판단
	환경분석 및 초과 소요 평균 업무량 기준	- 환경 분석 및 기능 분석 결과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의 경우 직무분석 결과와는 별도로 추가투입 인력에 반영함 - 과소요 평균 업무량이 0.3 이상일 경우 1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는 교육,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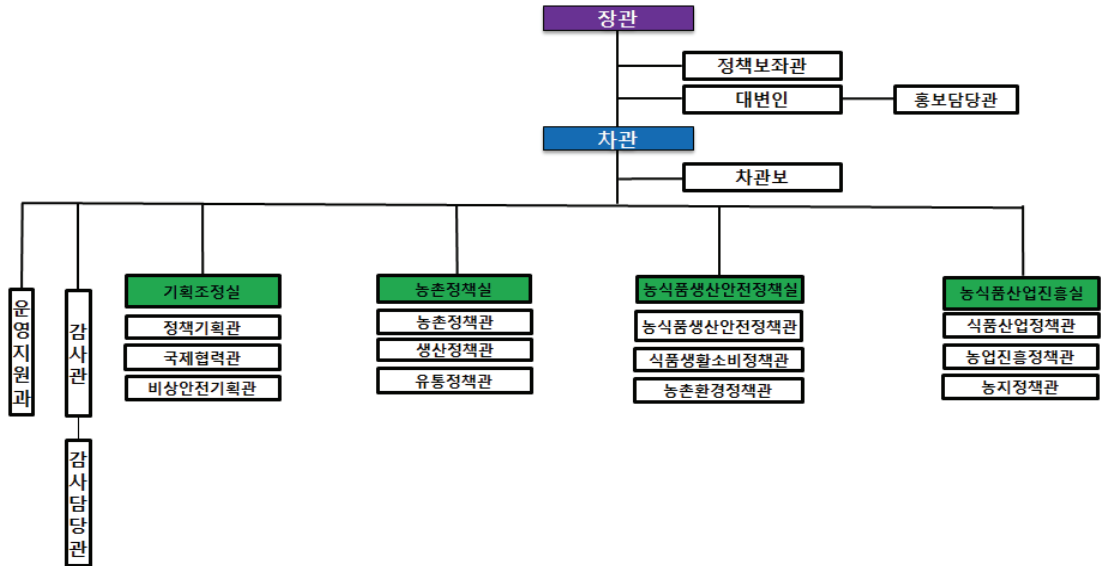
<그림 6-3>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기능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력 증감 산출 기준

2.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안)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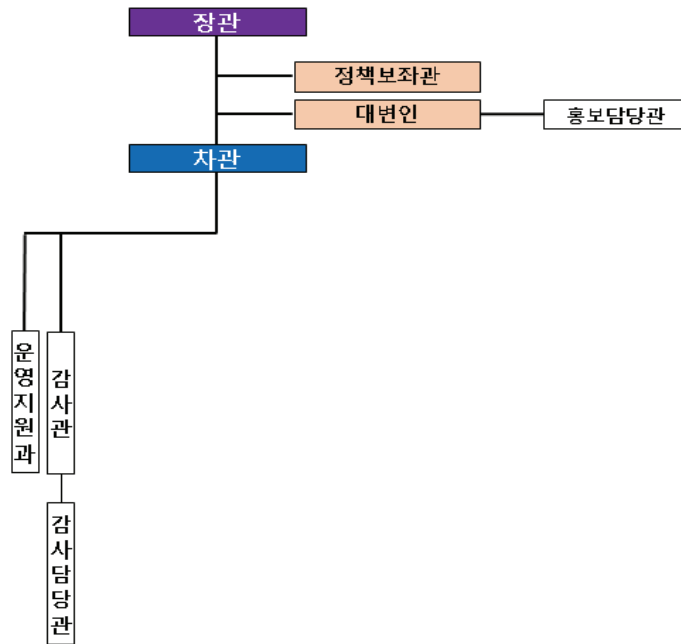
<그림 6-4>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5> (新)농림축산식품부의 4실 체제

1) 지원부서 조직 재설계 방안



<그림 6-6>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2) 기획조정실 조직 재설계 방안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국제협력관 산하 국제개발협력담당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국제협력국 기능 → (現) 기획조정실로 이관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ODA 관련 기능 →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 농식품통상담당관 및 자유무역협정담당관 기능 강화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국제협력국 → (新)국제협력관으로 명칭변경 (現)국제협력총괄과 → (新)국제협력총괄담당관으로 명칭변경 (現)농업통상과 → (新)농식품통상담당관으로 명칭변경 (現)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新)자유무역협정담당관으로 명칭변경

<그림 6-7>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그림 6-8>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3) 농촌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농촌정책실 →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을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일부 기능 → (新)농촌정책실로 이관

<그림 6-9>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 신설 • (新)유통정책관 소속의 식품유통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 신설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 (新)농촌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 → (新)농촌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축산경영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원예산업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유통정책과) → (新)유통정책관으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 농촌복지, 경영인력, 농식품·농축산물 유통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식량정책과 → (新) 생산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10>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그림 6-11> 농촌정책실 재설계(안)

4) 농식품안전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소속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新)식품생활소비정책관, (新)농촌환경정책관 신설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축산정책국 기능(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검역정책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기능(친환경농업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로 이관

<그림 6-12>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소속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 신설 • (新)식품생활소비정책관 소속 → (新)식생활정책과, (新)소비자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 신설 • (新)농촌환경정책관 소속 → (新)농촌환경정책과, (新)동물복지과 신설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방역총괄과 및 방역관리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친환경축산팀 → (新)농촌환경정책관으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소속의 검역정책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의 친환경농업과 → (新)농촌환경정책관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농축산품 안전관리 기능, 검역 및 방역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 동물복지 기능 등

<그림 6-13>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식품생활소비정책관, 농촌환경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다음의 <그림 6-14>는 농식품안전정책실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그림 6-14>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재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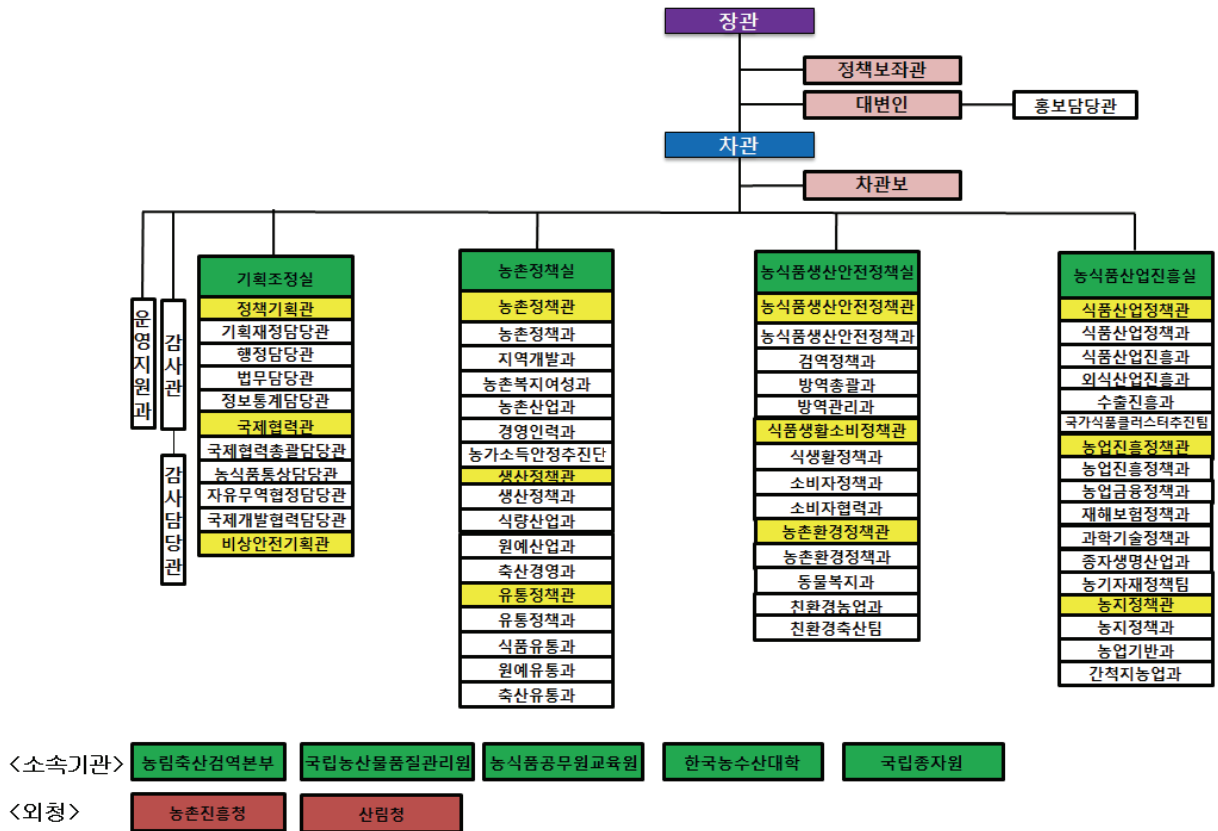
5)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설계 방안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 농식품산업진흥실 소속 → (新)식품산업정책관, (新)농업진흥정책관, (新)농지정책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업진흥정책과로 명칭변경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과학기술정책과, 중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금융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지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現)식량정책국 소속의 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창조농식품정책과 기능 → (新)식품산업정책관 소속 식품산업정책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 기능, 농업진흥 기능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농업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의 농업진흥정책과 명칭변경 (現)농지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의 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15>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그림 6-16>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그림 6-17>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안)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3
1. 연구내용 및 방법	3
1) 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과제 도출	3
2)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및 인력 진단	4
3) 조직 재설계 방안 제시	6
2.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7
3. 연구분석틀	9
제2장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분석	10
제1절 미래환경 트렌드	10
1. 사회	11
1) 인구구조의 고령화	11
2)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11
3) 계급화 현상의 심화	12
4) 삶과 죽음의 질(저출산·다사망 시대)에 대한 관심 증가	12
5) 외국 인력의 유입	13
6) 기본소득 논의의 본격화	13
2. 기술: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기계의 출현	14
1)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14
2)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16
3)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19
4)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자 컴퓨팅, 3D프린터	20
3. 경제: 저성장, 소득불평등, 일자리 감소	21
1) 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 (뉴노멀 시대의 도래)	21
2) 넥스트11: 포스트 브릭스	23
3)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가계부채 증가	25
4) 실업률(청년) 증가 및 고령 빈곤층 증가	25
5) 세대 구분 없는 실업 노선	26
6) 공유경제의 부상	27
7) 규제프리존 통과를 통한 미래 신산업 발굴	27
4. 환경	28

1)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	28
2) 지구온난화	29
3)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	29
4)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30
5) 자원 고갈의 가속화	31
6) 에너지 신산업의 부상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기술 연구 확산	33
5. 정치: 민주주의 성숙과 실버민주주의	33
1) 권력중심의 이동: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33
2) 초연결사회와 직접민주주의 확대	34
3) 실버민주주의의 도래	35
4) 국제사회로부터의 역할 확대 요구 증가	36
5)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의 여파	36
6) 테러에 대한 대응체제 논의의 증가	37
제2절 미래환경변화와 농식품부의 역할 변화	38
1. 정부 기능 변화: 정형적 업무는 인공지능이 비정형적 업무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 ·	38
1) 정부관리 지원	38
2) 국방	39
3) 공공질서 및 안전	39
4) 경제산업	40
5) 환경	40
6) 공공건설	41
7) 보건	41
8) 문화	41
9) 교육	41
10) 복지	42
2. 위치기반: 시공간의 자유	42
3. 권한: 고도집권화와 완전분권화	45
4. 시사점: 미래환경과 농업	46
1) 미래 수요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46
2) 미래수요와 농식품부의 역할	52
제3절 농업·농촌 분야 SWOT 분석	58
1. 강점 요인	58
1) 농업부문	58
2) 농촌부문	58
3) 식품부문	58
2. 약점 요인	59
1) 농업부문	59
2) 농촌부문	59
3) 식품부문	59

3. 기회 요인	59
1) 농업부문	59
2) 농촌부문	59
3) 식품부문	59
4. 위협 요인	60
1) 농업부문	60
2) 농촌부문	60
3) 식품부문	60
제4절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과 목표 재정립	62
1.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Vision)과 시대정신	62
1) 시대정신	62
2)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비전(Vision)과 전략목표	65
2.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재설계를 위한 세부목표	67
1)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간 연계성 분석	67
2) 조직재설계를 위한 세부 방향 도출	70
제3장 기능진단 및 재설계	73
제1절 미시기능 분석	75
1.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방향 및 핵심기능	75
2. 발전계획 목표별 기능진단	78
3. 역대 농식품부 거시기능 분석(업무보고서 키워드 분석)	80
1) 전체연도 분석(2006 ~ 2016)	80
2) 연도별 분석	85
제2절 공문서 분석: 네트워크 분석	106
1. 부서 간 협업 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109
2. 부서별 협업 네트워크	112
1) 간척지농업과	112
2) 검역정책과	112
3) 경영인력과	113
4) 과학기술정책과	113
5)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14
6) 국제협력총괄과	114
7) 농가소득안정추진단	115
8) 농기자재정책팀	115
9) 농업금융정책과	116
10) 농업기반과	116
11) 농업정책과	117
12) 농업통상과	117
13) 농지과	118

14) 농촌복지여성과	118
15) 농촌산업과	119
16) 농촌정책과	119
17) 농협경제지원팀	120
18)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20
19) 방역관리과	121
20) 방역총괄과	121
21) 수출진흥과	122
22) 식량산업과	122
23) 식량정책과	123
24) 식생활소비정책과	123
25) 식품산업정책과	124
26) 식품산업진흥과	124
27) 외식산업진흥과	125
28) 원예경영과	125
29) 원예산업과	126
30) 유통정책과	126
31) 재해보험정책과	127
32) 종자생명산업과	127
33) 지역개발과	128
34) 창조농식품정책과	128
35) 축산경영과	129
36) 축산정책과	129
37) 친환경농업과	130
38) 친환경축산팀	130
3. 시사점	131

제4장 주요 국가의 농업정책 변화와 조직의 기능 변화 135

제1절 일본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조직의 기능변화 135

1. 일본 농정의 흐름	135
1) 1970년대 이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135
2)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35
3) 아베 정권의 농업·농촌 정책	136
4) 아베정부 농업·농촌 구조개혁 핵심사항	137
2. 일본의 농식품 조직 현황 및 시사점	140
1) 농림수산 관련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준정부기관) 현황	140
2) 농림수산성 조직체계	141
3) 2015년도 농림수산성 조직 개편의 방향 및 특징	144
4) 동식물 방역시스템	145

3. 일본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움직임	148
1) 일본의 다원적 가치 및 일본형 직접직불제	148
2)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등 최근 농업 동향	149
4. 일본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150
1) 농정변화와 시사점	150
2) 농림수산성 조직 및 정원 변화 및 시사점	150
3) 2017년도 일본 농림수산부문 예산 현황 및 시사점	151
제2절 중국 농업정책과 조직의 기능변화	153
1. WTO 가입 후 중국 농업정책의 변화	153
1)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시기(2003~2012년)	153
2) 시진핑(習近平) 정부 시기(2013~현재)	154
2. 중국의 농업현대화 계획	155
1) 산업경쟁력 제고	156
2) 농가소득 증대	160
3) 농촌복지 향상	163
4) 수급·유통 안정(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	164
3. 농업부의 기능 변화	166
1)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166
2) 중국 농업부 및 소속기관	175
3) 중국 농업부의 예산 및 인력	180
4. 시사점	183
제3절 미국의 농정변화와 농정조직의 변화	184
1. 미국의 농업법을 통해 본 농정의 변화	184
1)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184
2) 2008년 농업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187
3) 2014년 농업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190
2. 미국 농무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192
1) 미국 농무부의 조직	192
2) 미국 농무부의 예산과 인력투입 변화	204
3. 시사점	215
1) 농업법에서 나타난 시사점	215
2) 농무부를 통해서 본 시사점	217
제4절 독일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조직의 기능변화	219
1. 독일 농업정책의 기본틀과 정책 중점의 변화과정	219
2.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	220
1) 조직의 역사 및 변천과정	220
2) 조직의 구성	222
3) 예산 구성	224
4) 연방식품농업부(BMEL) 본부 조직	225

3. 시사점	226
1) 업무 영역	226
2) 예산 영역	227
제5절 프랑스 농업농촌정책과 조직의 기능 변화	228
1. 프랑스 농업·농촌정책의 변화	228
1) 1970년대 이후 프랑스 농정의 변화	228
2) 2006년 농업기본법의 주요 전략과제	229
3) 주요 추진과제	231
2.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	232
3. 프랑스의 2014-2020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	237
4.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조직과 기능변화	238
1) 정부조직 내 농업식품산림부의 위상	238
2) 농업식품산림부의 기능변화	241
3) 농업식품산림부의 예산 구조	242
4) 농업식품산림부의 조직	243
5) 농업식품산림부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248
5. 요약 및 시사점	250
제6절 영국 농림수산 관련 중앙부처의 변화 검토	252
1. DEFRA 창설 개요	252
1) DEFRA의 목적(Aim)	252
2) DEFRA의 우선 과제(Objectives)	253
3) DEFRA의 중요 활동(Principal Activities)	253
2. DEFRA의 기능과 역할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	254
1) 새로운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	254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추 부서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	254
3) 농촌문제의 전담 부서로서의 DEFRA의 역할	255
3. 영국 농림수산 관련 부서의 조직 구조 변화	256
1) 개요	256
2) 장관관 구성(Ministerial Team)의 변화	259
3) 실무부서의 변화	264
4. DEFRA 예산과 인원 변화	269
1) 연간예산 변화	269
2) DEFRA 근무인원	270
5. DEFRA 창설 과정을 통해서 본 시사점	272
제7절 주요 국가의 농정변화 요약	274
1. 주요 국가의 농정변화 요약	274
1)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지향하는 일본	274
2) 농업의 현대화가 최대 목표인 중국	274
3)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275

4)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독일	275
5) 농가 소득안정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쓰는 프랑스	276
6) 농촌공간을 중시하면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영국	276
2. 농식품 관련 기능 조정에 주는 시사점	277
1) 농업·농촌 정책방향에 주는 시사점	277
2) 예산과 조직에 주는 시사점	278
제5장 직무 분석	287
제1절 직무 분석 개요	287
1. 분석의 개요	287
1) 직무 조사의 목적	287
2) 조사 방법	287
3) 직무량 산출	287
4) 직무가치 기준 직무량 비교	287
5) 부서별 직무조사 응답 현황	288
제2절 현재 투입 manpower 분석	290
1. 지원부서	290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293
3. 농촌정책국	296
4. 농업정책국	300
5. 식량정책관	303
6. 국제협력국	307
7. 축산정책국	310
8. 식품산업정책관	313
9. 유통소비정책관	316
10. 창조농식품정책관	319
제3절 추가 투입 manpower 도출	323
1. 지원부서	323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324
3. 농촌정책국	326
4. 농업정책국	328
5. 식량정책관	330
6. 국제협력국	332
7. 축산정책국	334
8. 식품산업정책관	336
9. 유통소비정책관	338
10. 창조농식품정책관	340
제4절 추가 및 감소 필요 직무와 인력	342
1. 지원부서	342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343
3. 농촌정책국	344
4. 농업정책국	345
5. 식량정책관	346
6. 국제협력국	347
7. 축산정책국	348
8. 식품산업정책관	349
9. 유통소비정책관	350
10. 창조농식품정책관	351
제6장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352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방향	352
1. 우리나라 농정환경의 변화와 핵심이슈	352
2.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방향성	354
제2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단기(안)	358
1. 지원부서 조직 재설계 방안	361
2. 정책기획관 조직 재설계 방안	363
3. 농촌정책국 조직 설계 방안	365
4. 농업금융지원국 조직 설계 방안	367
5. 식량정책관 조직 설계 방안	369
6. 국제협력국 조직 설계 방안	370
7. 축산정책국 조직 설계 방안	372
8. 방역정책국 조직 설계 방안	374
9. 식품산업정책관 조직 설계 방안	376
10. 유통소비정책관 조직 설계 방안	377
11. 미래농식품전략관 조직 설계 방안	379
제3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안)	382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1안)	383
2.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2안)	407
3.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3안)	430
참고문헌	452

< 표 차 례 >

<표 1-1> Driving force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예시)	3
<표 2-1>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전망	11
<표 2-2> 정부의 단계별, 공간, 시간, 업무 관리	43
<표 2-3> Driving force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46
<표 2-4> 인공지능이 농업부문의 일자리 영향 정도	50
<표 2-5> 농업·농촌 경제·사회 전망	52
<표 2-6> 미래 농촌수요와 농식품부의 역할	55
<표 2-7> 농업·농촌·식품 분야 SWOT 분석	60
<표 2-8> 국가 중심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 민주주의의 특성 구분	64
<표 3-1> 농업·농촌 분야 외부환경 변화와 영향	74
<표 3-2>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 정리	75
<표 3-3> 새로운 농정의 기본방향	76
<표 3-4>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76
<표 3-5> 전략방향(목표)별 관련 년도별 업무계획 목표(또는 사업)	77
<표 3-6> 발전계획(목표) 별 기능 진단	79
<표 3-7> 단어별 빈도 분포	82
<표 3-8>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주요 기능	106
<표 3-9> 간척지농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2
<표 3-10> 검역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2
<표 3-11> 경영인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3
<표 3-12> 과학기술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3
<표 3-1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네트워크 분석결과	114
<표 3-14> 국제협력총괄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4
<표 3-15> 농가소득안전추진단 네트워크 분석결과	115
<표 3-16> 농기자재정책팀 네트워크 분석결과	115
<표 3-17> 농업금융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6
<표 3-18> 농업기반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6
<표 3-19> 농업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7
<표 3-20> 농업통상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7
<표 3-21> 농지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8
<표 3-22> 농지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8
<표 3-23> 농촌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9
<표 3-24> 농촌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9
<표 3-25> 농협경제지원팀 네트워크 분석결과	120
<표 3-26> 동아시아자유무협협정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0
<표 3-27> 방역관리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1
<표 3-28> 방역총괄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1
<표 3-29> 수출진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2
<표 3-30> 식량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2
<표 3-31> 식량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3

<표 3-32> 식생활소비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3
<표 3-33> 식량산업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4
<표 3-34> 식량산업진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4
<표 3-35> 외식산업진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5
<표 3-36> 원예경영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5
<표 3-37> 원예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6
<표 3-38> 유통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6
<표 3-39> 재해보험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7
<표 3-40> 종자생명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7
<표 3-41> 지역개발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8
<표 3-42> 창조농식품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8
<표 3-43> 축산경영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9
<표 3-44> 축산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9
<표 3-45> 친환경농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30
<표 3-46> 친환경농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30
<표 3-47> 문서 발신 및 수신 현황 정리(경영, 운영, 기획 등 8개 부서는 제외)	131
<표 3-48> 기능 진단 및 조직개편 개선사항 도출	134
<표 4-1> 일본 식량자급률 목표치	137
<표 4-2> 일본 주요 기업들의 농업 진출	139
<표 4-3> 일본 농림수산물 관련 정부기관 및 주요 기능·인력 현황	140
<표 4-4> 일본 농림수산물 조직구성 및 주요기능·역할	141
<표 4-5> 일본 중앙부처 산하 지역조직 현황 및 주요기능	142
<표 4-6> 일본 중앙부처 산하 지역조직 현황 및 주요기능	143
<표 4-7> 일본 농림수산물 동물위생과 조직 및 주요업무	146
<표 4-8> 중산간지역 교부단가표	148
<표 4-9> 환경보전형 직접지불 단가표	149
<표 4-10> 2004~2012년 중앙1호문건	153
<표 4-11>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농업분야 중점 추진과제	154
<표 4-12> 2013~2017년 중앙1호 문건	155
<표 4-13> 중국의 농업현대화 계획 개요	155
<표 4-14>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시 농업관련 조직 개편 내용	167
<표 4-15> 중국의 향후 정부조직 개편 전망	170
<표 4-16> 국무원 농업·식품관련 부처와 기능	172
<표 4-17> 국무원 직속 행정기관과 주요 기능	173
<표 4-18> 국무원 산하 정책연구 공공기관과 기능	174
<표 4-19> 국무원 부처 산하 행정기관과 기능	174
<표 4-20> 중국 농업부 본부 조직	175
<표 4-21> 농업부 실·국과 기능	176
<표 4-22> 농업부 산하 공공기관	177
<표 4-23> 중국 농업부의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180
<표 4-24> 중국 농업부의 항목별 예산지출액 및 비중	181
<표 4-25> 중국 농업부의 농림수산물 지출항목의 지출액 구성	182
<표 4-26> 환경보전 프로그램	186
<표 4-27> 2002년 미국 농업법 개요	187

<표 4-28> 2014 농업법 재정지출 소요 예상치 비교(향후 10년간 합계, 2014-23년)	191
<표 4-29> 주요 정책 부문별 향후 10년간 예산소요 추정액 비교(2014-2013)>	192
<표 4-30> 2016 USDA 현황	195
<표 4-31> USDA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204
<표 4-32> USDA 인원과 인원 비중의 추이	205
<표 4-33> USDA 부문별 인력 추이	208
<표 4-34> USDA 부문별 예산 추이	209
<표 4-35> USDA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예산지출과 농무부 지출에서의 비중	211
<표 4-36> 보조영양지원제도(SNAP)의 대상자와 예산지출 추이	212
<표 4-37>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조직 변화 I (2000~2005)	220
<표 4-38>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조직 변화 II (2006~2012)	221
<표 4-39>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조직 변화 II (2013~2017)	222
<표 4-40> 2015년도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및 산하 기구 구성	223
<표 4-41>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사업)예산 구성	224
<표 4-42>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본부 조직	225
<표 4-43>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변화	234
<표 4-44>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기여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235
<표 4-45> 프랑스의 2014-2020 공동농업정책 주요 추진 내용	237
<표 4-46> 국가의 31개 분야별 임무와 일반예산(2017)	238
<표 4-47> 중앙부처별 및 직원수 (2017)	239
<표 4-48> 정부조직 내 농업식품산림부 비중 (일반예산, 인력)	240
<표 4-49>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분야별 인력운영	240
<표 4-50>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명칭변화	241
<표 4-51>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기능변화	241
<표 4-5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예산구조(2017)	242
<표 4-53> 프랑스 농업관련 산하기관(Etablissement)과 정책수행조직(Opérateur)	248
<표 4-54> MAFF의 목적과 목표	252
<표 4-55> DEFRA(환경식품농촌부) 본부의 조직도	268
<표 4-56> DEFRA 연간 예산 변화	270
<표 4-57> DEFRA 근무 인력 변화	270
<표 4-58> 나라별 농업·농촌 관련 중앙부처 예산	279
<표 4-59> 나라별 농업·농촌 관련 중앙부처 인력	281
<표 4-60> 국외사례의 조직재설계 개선안 도출	282
<표 4-61> 국가별 분석결과(요약)	283
<표 5-1> 부서별 직무조사 응답 현황	288
<표 5-2> 지원부서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290
<표 5-3> 지원부서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291
<표 5-4> 지원부서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292
<표 5-5>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294
<표 5-6>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	295
<표 5-7>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295
<표 5-8>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297
<표 5-9> 농촌정책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298

<표 5-10>	농촌정책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298
<표 5-11>	농업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01
<표 5-12>	농업정책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02
<표 5-13>	농업정책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02
<표 5-14>	식량정책관실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04
<표 5-15>	식량정책관실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05
<표 5-16>	식량정책관실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06
<표 5-17>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07
<표 5-18>	국제협력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08
<표 5-19>	국제협력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09
<표 5-20>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11
<표 5-21>	축산정책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12
<표 5-22>	축산정책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12
<표 5-23>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14
<표 5-24>	식품산업정책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15
<표 5-25>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15
<표 5-26>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17
<표 5-27>	유통소비정책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18
<표 5-28>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18
<표 5-29>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320
<표 5-30>	창조농식품정책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321
<표 5-31>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321
<표 5-32>	지원부서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3
<표 5-33>	지원부서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3
<표 5-34>	정책기획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5
<표 5-35>	정책기획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5
<표 5-36>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7
<표 5-37>	농촌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7
<표 5-38>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9
<표 5-39>	농업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29
<표 5-40>	식량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1
<표 5-41>	식량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1
<표 5-42>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2
<표 5-43>	국제협력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3
<표 5-44>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4
<표 5-45>	축산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5
<표 5-46>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6
<표 5-47>	식품산업정책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6
<표 5-48>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8
<표 5-49>	유통소비정책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38
<표 5-50>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40
<표 5-51>	창조농식품정책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340
<표 5-52>	지원부서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2
<표 5-53>	정책기획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3

<표 5-54> 농촌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4
<표 5-55> 농업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5
<표 5-56> 식량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6
<표 5-57> 국제협력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7
<표 5-58> 축산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8
<표 5-59> 식품산업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49
<표 5-60> 유통소비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50
<표 5-61> 창조농식품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351
<표 6-1>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기능 요약	353
<표 6-2> 기능분석 결과와 조직개편 개선사항 도출	354
<표 6-3> 국외사례 분석결과 및 조직설계 방향 도출	355
<표 6-4>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360
<표 6-5> 단기(안)의 장단점 비교	361
<표 6-6>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362
<표 6-7>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364
<표 6-8> 농촌정책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65
<표 6-9> 농업금융지원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68
<표 6-10> 식량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70
<표 6-11> 국제협력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71
<표 6-12> 축산정책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73
<표 6-13> 방역정책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75
<표 6-14>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76
<표 6-15> 유통소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78
<표 6-16> 미래농식품전략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80
<표 6-17> 농림축산부 조직개편 대안별 장단점(중장기 비교)	382
<표 6-18>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385
<표 6-19>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387
<표 6-20>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389
<표 6-21>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390
<표 6-22> 비상안전기획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91
<표 6-23> 소득복지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93
<표 6-24> 농촌개발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94
<표 6-25> 농촌환경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95
<표 6-26>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98
<표 6-27>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399
<표 6-28>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00
<표 6-29> 소비안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03
<표 6-30> 안정공급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04
<표 6-31> 방역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05
<표 6-32> 농림축산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409
<표 6-33>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411
<표 6-34>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412
<표 6-35>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414
<표 6-36> 비상안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14

<표 6-37> 농촌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17
<표 6-38> 생산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18
<표 6-39>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19
<표 6-40>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22
<표 6-41> 식품생활소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23
<표 6-42 > 농촌환경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23
<표 6-43>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26
<표 6-44>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27
<표 6-45> 농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28
<표 6-46>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431
<표 6-47>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433
<표 6-48>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435
<표 6-49>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436
<표 6-50> 비상안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37
<표 6-51> 농촌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39
<표 6-52> 생산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40
<표 6-53>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41
<표 6-54>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43
<표 6-55> 농촌환경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46
<표 6-56>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48
<표 6-57>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	449
<표 6-58> 농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45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내용 및 목적	2
<그림 1-2> 직무 분석 프로세스	4
<그림 1-3> 직무 분석 세부프로세스	5
<그림 1-4> 직무 분석 세부프로세스기능조정 분석	6
<그림 1-5> 직무 분석 세부프로세스기능 재조정 증거	6
<그림 1-6> 조직진단 연구분석틀	9
<그림 2-1> 외국 인력 구성도	13
<그림 2-2> 주요 경제 강국들의 실질 GDP 비중 (2010-2030)	22
<그림 2-3> 3대 경제대국의 경제적 지배력 (1870-2030)	23
<그림 2-4> 경제성장률	24
<그림 2-5> 조세부담률	24
<그림 2-6> 소득분배지표	26
<그림 2-7>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26
<그림 2-8> 연료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	28
<그림 2-9> 20세기말 대비 21세기말 기온변화(℃)	29
<그림 2-10>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30
<그림 2-11> 글로벌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압력 요인들 (2000-2030)	31
<그림 2-12> 주요 에너지 수요 성장 추이 (2020 - 2035)	32
<그림 2-13> 글로벌 물 수요 및 공급량 (2005 vs. 2030)	32
<그림 2-14> 한국의 민주화지수	34
<그림 2-15> 정부의 권한	46
<그림 2-16>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율	53
<그림 2-17> 국가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63
<그림 2-18>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	63
<그림 2-19>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도	66
<그림 2-20>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간 연계성	68
<그림 2-21>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들	69
<그림 3-1> 전체연도 빈도 높은 단어들	81
<그림 3-2> 전체연도 단어들 빈도분포	81
<그림 3-3>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82
<그림 3-4> 전체연도 wordcloud	83
<그림 3-5> 전체연도 단어연결망	84
<그림 3-6> 2006년 전체 단어들 빈도 분포	85
<그림 3-7> 2006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86
<그림 3-8> 2006년 wordcloud	87
<그림 3-9> 2009년 전체 단어 빈도 분포	88
<그림 3-10> 2009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89
<그림 3-11> 2009년 wordcloud	90
<그림 3-12> 2010년 전체단어 빈도 분포	91
<그림 3-13> 2010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91

<그림 3-14> 2010년 wordcloud	92
<그림 3-15> 2011년 전체 단어 빈도 분포	93
<그림 3-16> 2011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94
<그림 3-17> 2011년 wordcloud	95
<그림 3-18> 2012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95
<그림 3-19> 2012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96
<그림 3-20> 2012년 wordcloud	97
<그림 3-21> 2013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97
<그림 3-22> 2013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98
<그림 3-23> 2013년 wordcloud	99
<그림 3-24> 2014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99
<그림 3-25> 2014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100
<그림 3-26> 2014년 wordcloud	101
<그림 3-27> 2015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101
<그림 3-28> 2015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102
<그림 3-29> 2015년 wordcloud	103
<그림 3-30> 2016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103
<그림 3-31> 2016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104
<그림 3-32> 2016년 wordcloud	105
<그림 3-33> 농림축산식품부 부서(과)간 협업 네트워크(전체)	109
<그림 3-34> 이분화(GT>100) 결과 업무 협조(공무) 네트워크	110
<그림 3-35> 농림축산식품부 부서(과)간 협업 네트워크(8개과 제외)	110
<그림 3-36> 이분화(GT>45) 결과 업무 협조(공무) 네트워크(8개과 제외)	111
<그림 4-1>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개편 개요	145
<그림 4-2> 일본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 체계	147
<그림 4-3> 중국의 정부조직도(2017년 4월 현재)	171
<그림 4-4> 중국 농업부 및 산하 기관 구성(2017년 4월 현재)	179
<그림 4-5> 중국 농업부의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181
<그림 4-6> USDA 조직도(2017 개편안)	193
<그림 4-7> USDA 조직개편안 모식도	194
<그림 4-8> USDA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205
<그림 4-9> USDA 인력과 인력 비중의 추이	206
<그림 4-10> 2017년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 예산 구성비	210
<그림 4-11> USDA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실 예산지출과 농무부 지출에서의 비중	211
<그림 4-12>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 부문 예산 변동 추이	212
<그림 4-13>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인력 추이	214
<그림 4-14>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예산 추이	214
<그림 4-15> 보전프로그램 등록 면적 추이	215
<그림 4-16>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연계	233
<그림 4-17> EU 공동농업정책 지출구조의 변화	233
<그림 4-18>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조직의 흐름도(파리본청)	243
<그림 4-19>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조직도 개요(파리본청)	244
<그림 4-20>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기업경제환경성과실 조직도	245
<그림 4-21>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식품실 조직도	246

<그림 4-2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교육연구실 조직도	247
<그림 4-23> DEFRA의 조직 구조(2015년)	257
<그림 4-24> DEFRA의 조직 구조(2010년까지)	258
<그림 4-25> DEFRA의 조직 구조(2011년부터)	258
<그림 4-26> MAFF의 장차관 구조 (2000년)	260
<그림 4-27> DEFRA의 장차관 구조(2001-02년)	261
<그림 4-28> DEFRA의 장차관 구조(2004년)	262
<그림 4-29> DEFRA의 장차관 구조(2009년)	263
<그림 4-30> DEFRA의 장차관 구조(2010년)	263
<그림 4-31> DEFRA의 장차관 구조(2015년)	264
<그림 4-32> MAFF의 조직구조(1996년)	265
<그림 5-1> 지원부서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292
<그림 5-2> 정책기획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296
<그림 5-3>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299
<그림 5-4> 농업정책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03
<그림 5-5> 식량정책관실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06
<그림 5-6>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09
<그림 5-7>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13
<그림 5-8>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16
<그림 5-9>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19
<그림 5-10>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322
<그림 5-11> 지원부서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24
<그림 5-12> 정책기획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26
<그림 5-13>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28
<그림 5-14> 농업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30
<그림 5-15> 식량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32
<그림 5-16>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33
<그림 5-17>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35
<그림 5-18>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직제 순)	337
<그림 5-19>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39
<그림 5-20>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341
<그림 6-1>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7대 목표	356
<그림 6-2>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방향	357
<그림 6-3>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기능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력 증감 산출 기준	357
<그림 6-4>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359
<그림 6-5> (新)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5국 체제	359
<그림 6-6>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362
<그림 6-7> 정책기획관 재설계(안)	364
<그림 6-8> 농업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365
<그림 6-9> 농촌정책국 재설계(안)	367
<그림 6-10> 농업금융지원국 조직 개편 방향	368
<그림 6-11> 농업금융지원국 재설계(안)	369
<그림 6-12> 식량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369
<그림 6-13> 식량정책관 재설계(안)	370

<그림 6-14> 국제협력국 조직 개편 방향	371
<그림 6-15> 국제협력국 재설계(안)	372
<그림 6-16> 축산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373
<그림 6-17> 축산정책국 재설계(안)	374
<그림 6-18> 방역정책국 신설 방향	375
<그림 6-19> 방역정책국 재설계(안)	375
<그림 6-20> 식품산업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376
<그림 6-21> 식품산업정책관 재설계(안)	377
<그림 6-22> 유통소비정책관 조직 재설계(안)	379
<그림 6-23> 미래농식품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379
<그림 6-24> 미래농식품전략관 재설계(안)	380
<그림 6-25>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1안)	381
<그림 6-26>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384
<그림 6-27> (新)농림축산식품부 4실 체제	385
<그림 6-28>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388
<그림 6-29>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390
<그림 6-30>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391
<그림 6-31>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392
<그림 6-32>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392
<그림 6-33> 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안)	396
<그림 6-34>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397
<그림 6-35>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400
<그림 6-36> 안전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402
<그림 6-37> 소비안전정책관, 안정공급정책관, 방역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402
<그림 6-38> 안전정책실 재설계(안)	405
<그림 6-39>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중장기 1안)	406
<그림 6-40>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408
<그림 6-41> (新)농림축산식품부의 4실 체제	408
<그림 6-42>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411
<그림 6-43>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413
<그림 6-44>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415
<그림 6-45>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416
<그림 6-46>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416
<그림 6-47> 농촌정책실 재설계(안)	420
<그림 6-48>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421
<그림 6-49>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식품생활소비정책관, 농촌환경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	421
<그림 6-50>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재설계(안)	424
<그림 6-51>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425
<그림 6-52>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428
<그림 6-53>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2안)	429
<그림 6-54>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430
<그림 6-55> (新)농림축산식품부의 3실 2국 체제	431
<그림 6-56>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434
<그림 6-57>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436

<그림 6-58>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437
<그림 6-59>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438
<그림 6-60>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438
<그림 6-61> 농촌정책실 재설계(안)	442
<그림 6-62>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443
<그림 6-63>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재설계(안)	445
<그림 6-64> 농촌환경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445
<그림 6-65> 농촌환경정책국 조직 재설계(안)	446
<그림 6-66>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447
<그림 6-67>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450
<그림 6-68>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3안)	45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및 이에 따른 세계판도의 변화가능성에 따라 한국은 국가경쟁력 강점과 약점을 직시하고 미래의 전략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분야에서도 시장개방 폭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소비·생활 패턴 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농업은 농업 경쟁력 제고, 농업인 소득 증가, 농촌주민 복지·삶의 질 개선 등 정책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에서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 고령화, 농업·농촌의 악순환 구조(생산성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 지속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지속하면서 대내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내에서도 현행 농어업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처럼 농업·농촌은 성장정체와 소득부진이라는 오래된 숙제 이외에도 환경·식품안전·식량·지역·에너지·자원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이와 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이 급속한 개방화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요소들, 즉 식품안전문제, 환경 및 자원문제, 농촌지역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 농업,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하기 위해 3대 핵심과제, 5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비전,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계획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미래성장산업화 달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을 다각적 측면에서 즉, 산업적인 측면, 미래(식량안보)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된 “6차 산업” 역시 산업중심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업 관련 조직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인지 전반적인 점검·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기다. 현재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민영양, 타 산업과 융복합(로봇·드론 등)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즉 글로벌 및 국내 농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목받는 농정수요의 다양화·복잡화 문제나 농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재조정 및 조직재설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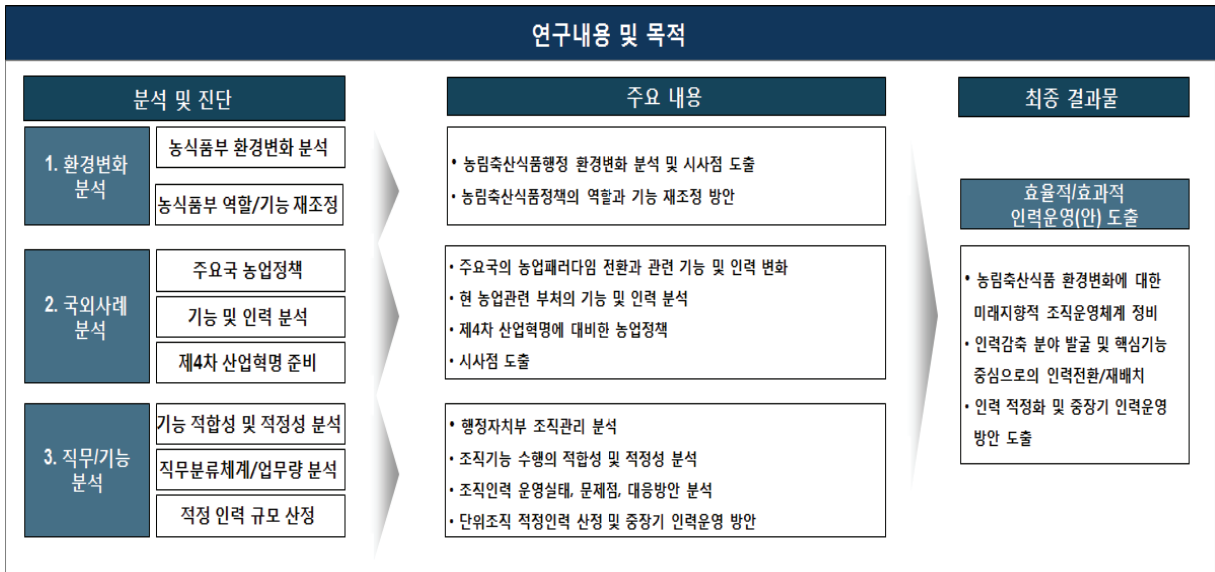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본부의 기능을 진단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굴하여 농식품부의 역할 재정립 및 조직개편 방향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진단하여 향후 보강·축소해야 될 분야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굴,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정인력 진단, 행정기능 및 직무분석,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1.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과제 도출

환경 분석에서는 대내외 미래환경변화에 대해 반응, 대응,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현재의 환경 분석과 더불어 미래의 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의 변화들이 가져올 주요 이슈(기회와 문제) 제시 및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글로벌 미래 변화를 견인할 거시적 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진단을 통해 미래의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대외 환경 분석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진국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국내의 환경변화상황과 연계하여 전망하고 진단하였다.

<표 1-1> Driving force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예시)

분야	Driving force		한국 농업의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
사회 문화	국제	가. 인구증가의 불균형과 급속한 노령화 나. 윤리적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농어촌 노동자 유입 확대 • 농수산물 생산의 윤리성 확보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관광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 농촌 다문화 가정 확대 • 귀농수요로 농촌인구 안정화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 식단의 서구화와 분식화로 농산물 소비 감소
	국내	가. 100세 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다.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다양화	
과학 기술	국제	가. 스마트 모바일 기술 나. 나노, 바이오, 유전자 등 생명연장 과학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생산성 확대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 유연제 근무 확대 등은 귀농수요 증가와 도농 간 물리적 거리 축소
	국내	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변화 초래 나. 스마트 기기와 SNS의 확산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조직) 역할 분석이다. 대내외 환경 분석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SWOT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엇을 수

용해야 하고(반응), 무엇을 돌파해야 하는지(대응), 또 어떻게 전략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지(자기조절, 제어)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 및 전략(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스캐닝을 통한 변화의 추세 파악과 징후 감지하는 것이다. 환경스캐닝은 일반 환경을 보다 동질적이고 관리 가능한 하위 범주인 STEEP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TEEP은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 5개 영역에 대한 관찰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및 인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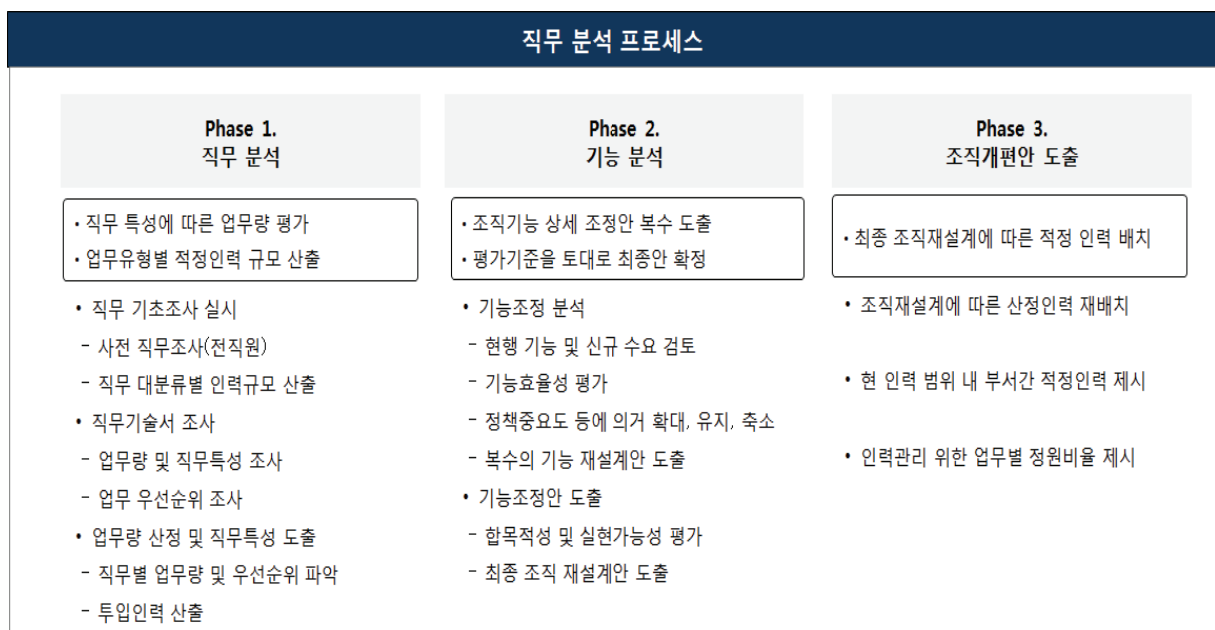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구조 및 기능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영역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이다.

둘째, 기능 및 조직구조상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조직의 미션달성과 발휘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및 기능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는 기능영역에 대한 진단을 하여 기능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조직의 미션달성과 핵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 기능을 재조정하였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션에 부합하는 효율적 기능수행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부처 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조정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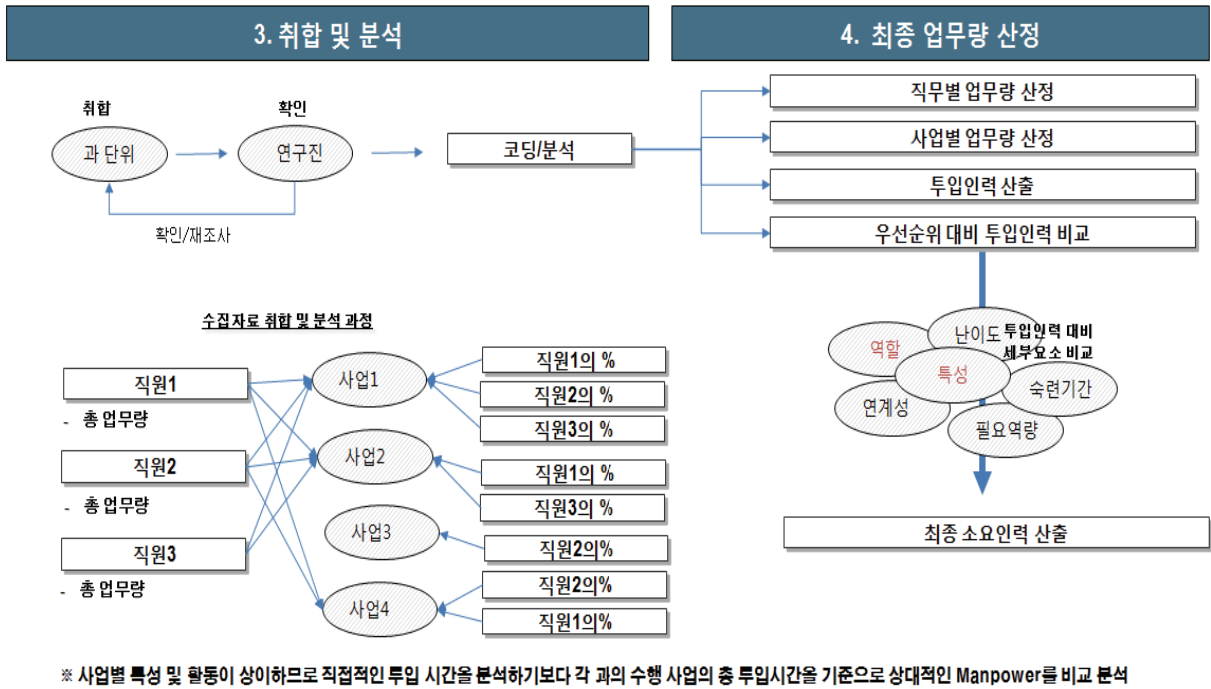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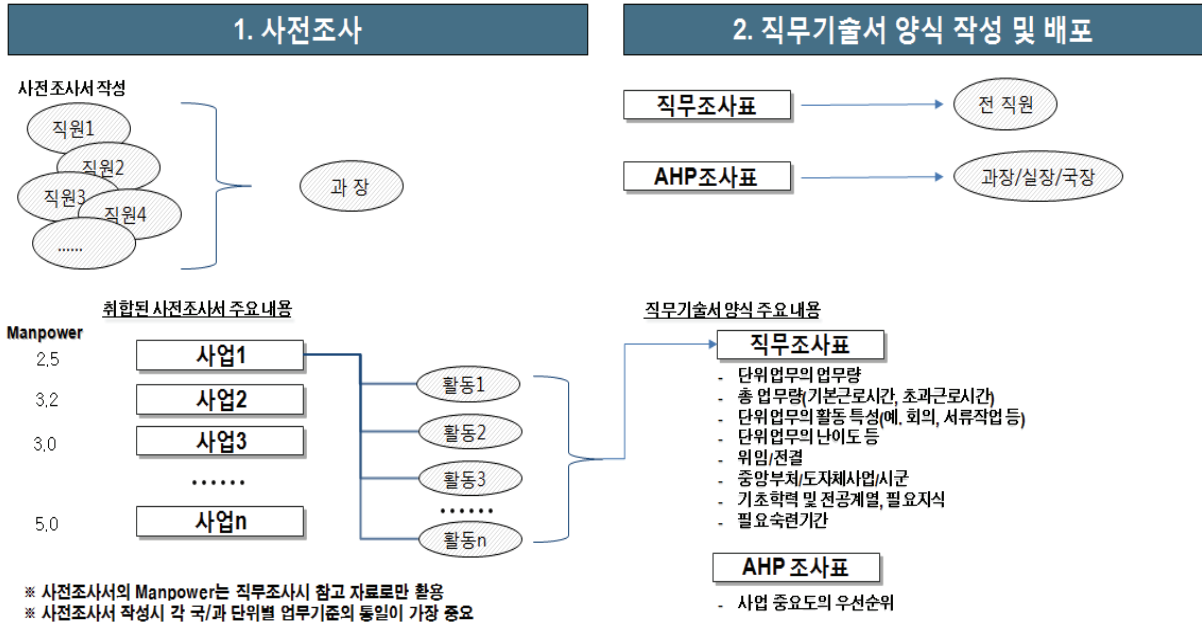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체계를 설계할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기구, 정원 등을 통해 적정인력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기능 및 직무(과별 업무·소요인력 등 조직 진단)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정인력 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직무 분석 프로세스

이를 위한 추진방법 및 전략(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제도분석,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3> 직무 분석 세부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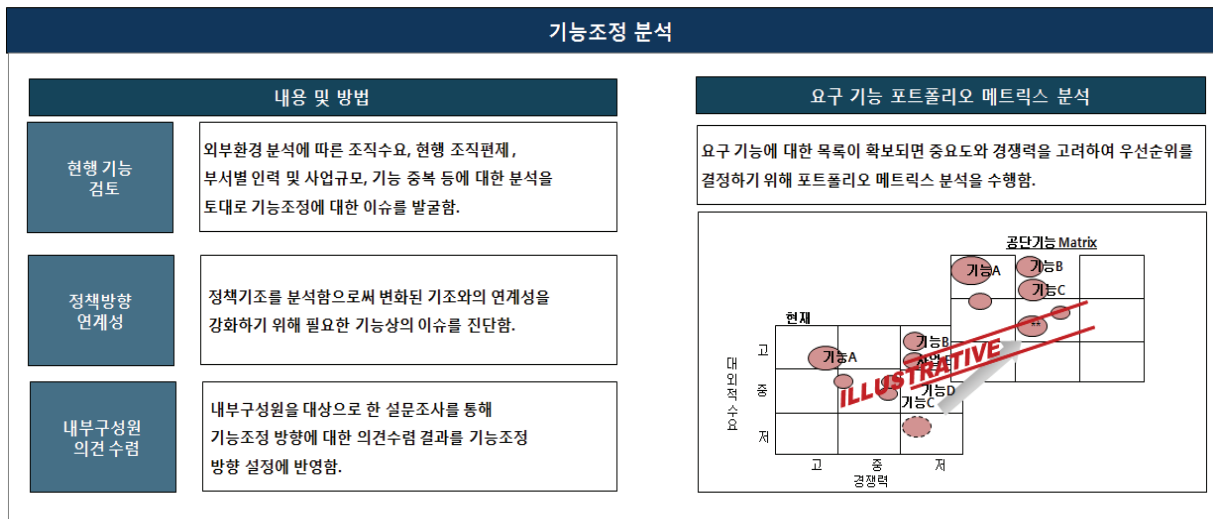
조직재설계와 농식품부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하였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농업관련 조직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은 주요국 농정정책의 패러다임 분석, 조직 및 기능, 인력 변화 분석,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농업부분의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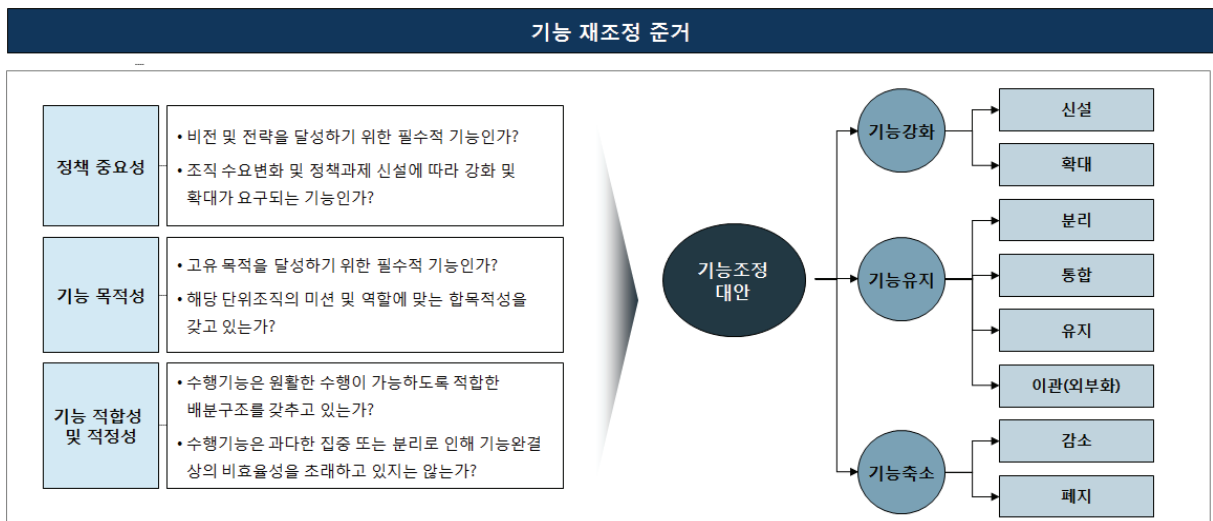
3) 조직 재설계 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는 조직의 직제 신설·유지·강화 등에 관한 조직개편 방향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환경 분석,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향해야 할 미시적 조직개편 대안 및 논거 제시하였다. 대안별 논거는 선행연구,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부처 의견을 근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 및 전략(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직무 분석 세부프로세스기능조정 분석



<그림 1-5> 직무 분석 세부프로세스기능 재조정 준거

2.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본 연구에 참고문헌으로서 도움이 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식품안전관리, 농정분야 거버넌스 구현 방안,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관련 조직 혁신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유석 외(2015)는 정부간 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농정을 기획·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 정부의 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서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효율적이다.

김완배 외(2013)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의 가속화, 가격은 중국에 밀리고, 품질은 일본에 뒤지는 샌드위치 신세, 수입농산물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는 불투명한 미래 등 한국농정의 현실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농업 경영악화 속에서도 도시 근로자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 실현 농가가 상당수 존재하고, 농가 평균소득의 2~3배 소득농가가 전체의 20%를 상회한다면 연평균 1만명 수준의 귀농·귀촌 가족 수와 귀농인구 중 40~50대 비중이 60%를 넘는 것은 농업노동력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수지맞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비전으로 6대 농정목표(△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가소득 제고 및 소득 안정망 구축 △농민복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새로운 성장분야 육성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 및 통일농업 대비 △농정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정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호 외(2012)은 정책대안으로 중 하나로 농정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관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통합적인 농정 추진체계 구축,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의 정책 추진체계 유도, 실질적인 전문가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양병우·이소영(2010: 73)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주된 골자는 위생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과 안심관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고,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정보교환을 통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위험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위해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 및 위험정보전달 체계 등을 제도화 하였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에서 사후검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위험(혹은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는 별도로 위험평가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설치되지 못한 점, 식품기준·규격설정 업무는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담한다는 점, 검사업무 역시 식품체인 단계별로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담한다는 점, 이러한 품목별, 식품체인단계별 다원적 분산관리체계 아래에서는 여전히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황혜신 외(2009)는 농정시스템 중에서도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집행시스템, 식품안전시스템, R&D 시스템과 농어민단체 거버넌스 개선에 연구 초점을 두며, i) 농어업정책의 방향은 1차 산업 육성에서 농식품 가공, 유통·수출 등 2차, 3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체계의 정비, ii)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농어업 생산품 안전관리 역할, 즉 약품·항생물질 등의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지도·감시하는 일관된 농수산물 안전관리 역할의 강화, iii) 농업 R&D시스템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첨단기술개발로 효율성 높은 조직의 추진, iv) 수요자 중심의 농정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민단체 역할의 제고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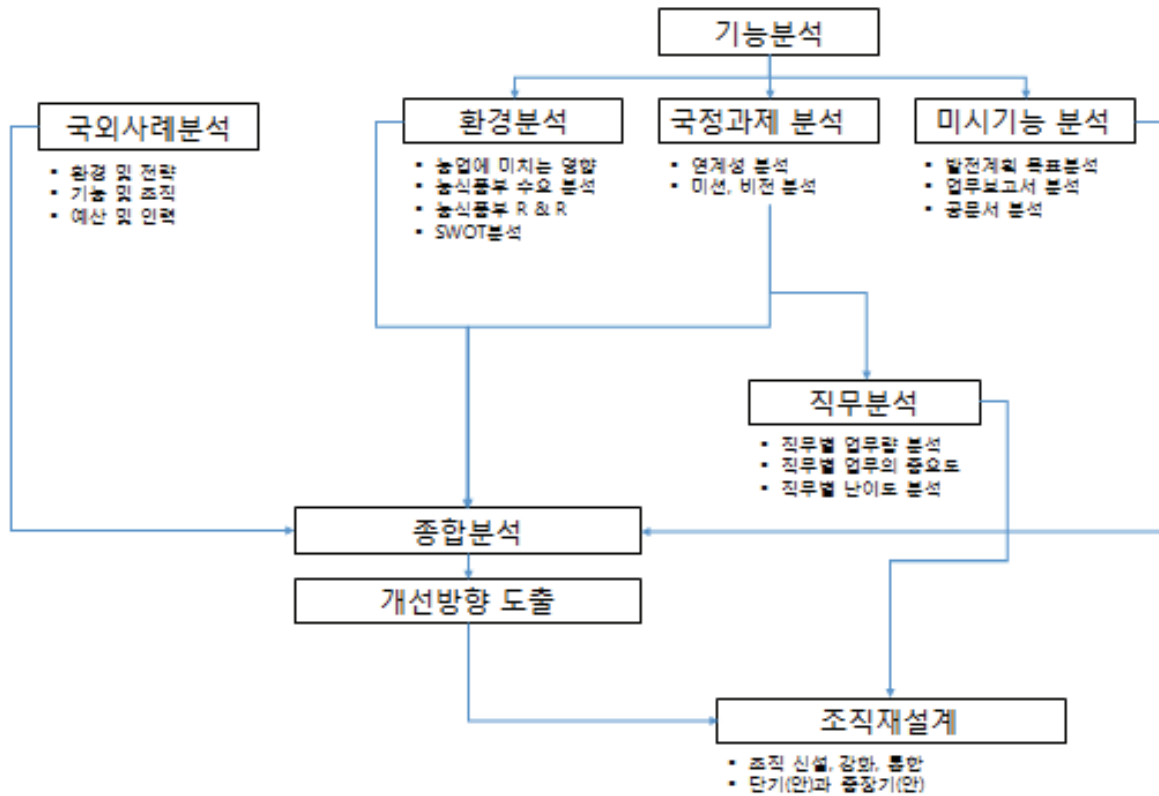
배종하 외(2009)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 하였다. 즉,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을 품목이 아닌 기능으로 통합하여 차관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본청과 지역본부 및 지역사무소로 구성된 현장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의 관련 업무를 통합조직으로 흡수하고 농수축산물 위험평가 기능을 확대·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진(2008: 148-149)은 현재 식품 종류에 따른 담당부서가 달라서 식품관리업무가 중복·분산되어 있어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신종 식품은 그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이나 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며 이 독립적인 기관을 통하여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다양한 식품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될 것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주 담당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식품을 함께 다루면서 식품에 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분야에서 계속 선출되어온 것도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나 관심이 부족한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의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법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의약과는 별도로 식품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개별 기능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연구가 핵심이었으며, 종합적이고, 거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부 중심의 전체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재배치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분석틀

본 조직진단은 국외사례분석, 환경분석, 국정과제 분석, 미시기능 분석,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재설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6> 조직진단 연구분석틀

제2장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분석

제1절 미래환경 트렌드

Kuhn(1962)이 강조한 패러다임¹⁾의 변화는 사고의 틀의 변화가 새로운 문제해결을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분업과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이 문제 해결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포스트 신공공관리(Post-NPM)에 들어서면서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과 문제 해결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행정 패러다임은 특정 시대에 행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이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 및 문제해결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행정학에서의 환경은 행정조직 경계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 그리고 행정이 전문화된 통치기구로서 공공부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 정책이 집행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은 민간 영역 즉 행정조직 이외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은 외부환경으로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하고 있다(이종수, 2012).

환경과 행정과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행정과 행정조직(정부 등)은 사회의 지배적인 형태와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은 여러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행정은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고 대응할 때 존재 가능하고 또한 발전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며 그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정치 민주화 30년간 겪어왔던 패러다임의 변화 그 이상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이점에 직면해 있다. 향후 20년 후 한국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시스템으로부터 먹거리까지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화의 주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학자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를 변화시킬 주요한 트렌드이자 추동력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격동 등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서용석 외, 2016: 57).

이러한 트렌드들은 그 자체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요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20년 후 한국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핵심 동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 동인은 기존 미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농식품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²⁾. 영향요인은 환경 분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로 구분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1) Kuhn(1962)은 패러다임(paradigm)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본 연구의 핵심동인은 최호진 외(2008) 미래선진한국의 행정연구, 황혜신 외(2009)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김윤권 외(2012)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조직 재설계 연구, 이재호 외(201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서용석 외(2016)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사혁신을 위한 미래백서 연구 용역,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빅데이터로 본 2017년 STEEP별 이슈 전망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

1.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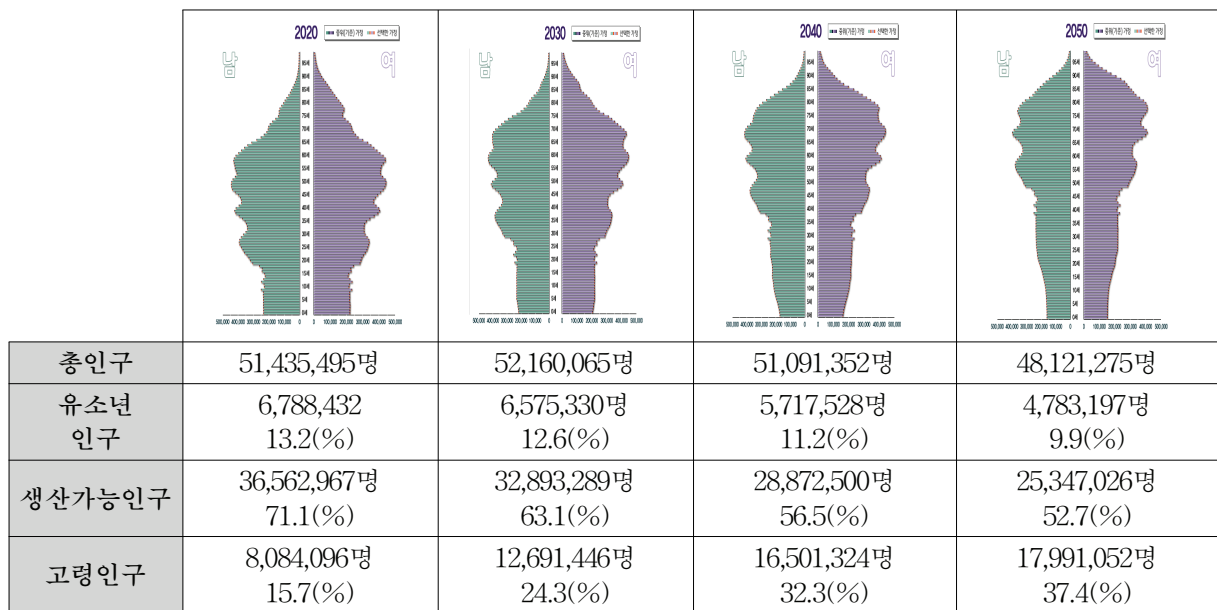
1) 인구구조의 고령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2015-2045년 사이 노인 부양비율은 17.3%에서 60%로 내외로 세배 이상 높아지고 총인구는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의 급격한 변화와 생산가능 대비 부양노인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일으킨다. 기존에는 지역갈등, 노사갈등이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 들어서면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 갈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격렬한 갈등은 미래 한국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될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여기에 고용 없는 저성장이 겹치면서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간 갈등의 폭풍에 더욱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용석 외, 2016: 14).

<표 2-1>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전망



출처: 통계청a(2016).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추계교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2)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싱글족과 노인 단독세대, 덩크족, 독신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57). 특히 1인 가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니즈(Needs)를 피력하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³⁾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거대상자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0).⁴⁾

3) “나홀로 가구가 대세…1인 가구, 520만 시대”, 연합뉴스 2016.9.7.

4)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의 배경에는 높은 실업률, 만혼, 결혼 포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밀집

또한, 기존에는 많이 보이지 않던 여러 부부와 자녀가 모여 사는 공동체가족, 일정기간 다른 자녀를 위탁 양육하는 위탁가족, 동성끼리 부부로 사는 동성애가족 등의 가족형태도 등장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미래 한국은 경제와 신체·정신의 양극화이다. 경제 분야의 양극화는 계층 갈등의 미래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수준은 보장하겠지만 로봇자동화와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은 한국사회에서 직업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부의 편중 현상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일인당 로봇도입이 세계 1위의 국가이며, 미래에도 가장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국가군에 속해 있다(Harold, Michael, and Justin, 2015; 서용석 외, 2016: 16).

3) 계급화 현상의 심화

무엇보다도 양극화되는 정보화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결합할 경우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의 직업군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Carl and Michael, 2013).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은 육체노동자와 의사, 변호사 등 한국의 중산층을 떠받칠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적 역동성의 상실을 가속화할 것이다. 부의 대물림으로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끊겨질 것이다.⁵⁾ 부모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인생진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계급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뚜렷해질 것이다. 투자대비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신분상승을 겨냥한 과도한 교육투자도 거의 사라질 것이다. 대신 부모나 친척이 해온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전문화된 지식을 숭상하는 일본식 장인문화가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0).

4) 삶과 죽음의 질(저출산·다사망 시대)에 대한 관심 증가

일단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위생 상태가 좋아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 인프라가 널리 확산되고, 건강검진이 크게 강화되어 큰 고통을 유발하는 병이나 난치병에 걸리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령 인구의 나이 기준이 기존보다는 높아져 이전보다 더 많은 나이까지 일을 하게 되지만, 많은 부분 자동화되고 로봇이 대체하게 되어 이전보다 여유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 등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다양한 자기개발 관련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국내와 국외로의 이동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 이동과 해외로의 이동이 더욱 쉬워져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빈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기본 생활 지원형 복지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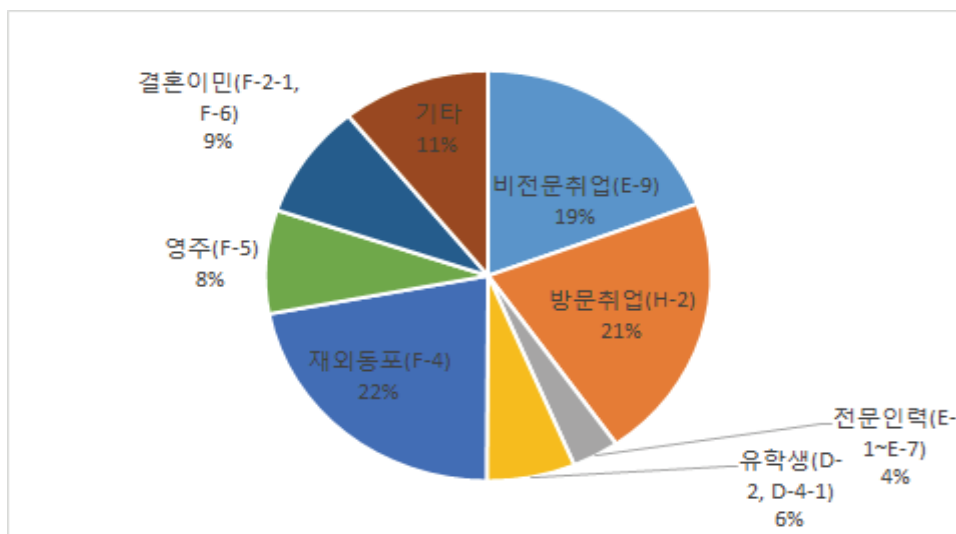
5) 오늘날 한국은 금수저·흑수저라는 자조적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가 끊겨가고 있다(서용석 외, 2016: 19).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미래에는 삶의 질뿐 아니라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다가 여유를 갖고 건강하게 죽음을 준비한 후 죽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여유 있게 계획을 갖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서비스와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초고령의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초고령층이 모여 사는 전용타운 건설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실버타운의 변형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른바 웰다잉을 기치로 내세우는 실버타운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그 안에서 가능한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분위기 또한 밝을 것이다(서용석 외, 2016: 56).

5) 외국 인력의 유입

세계가 글로벌화 될수록, 한국 사회 역시 다원화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도 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54).

1992년 65,673에서 2015년 1,143,08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과 유학생은 4%와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 외국 인력 구성도

출처: 통계청b. 2016. 국적,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검색일:2016.09.24.)

6) 기본소득 논의의 본격화

기본소득 논의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로 가시화되었으나, 이러한 논의의 근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실업,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어 있는 이슈이다. 향후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며, 다양한 정치·사회적 논의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에서 복지정책의 핵심적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2).

2. 기술: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기계의 출현

기술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양대 축이다. 본 연구는 농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들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1)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1) 클라우드: 전산자원에서 인간, 아바타 클라우드로

클라우드(cloud)는 본래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구름처럼 존재하는 외부의 전산자원을 빌려서 비용절감을 꾀하는 서비스를 뜻했다. 미래사회에는 타인의 인지기능과 신체, 로봇까지 실시간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아바타 클라우드의 개념까지 진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직접 가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타인의 신체, 지각기능에 접속해서 원격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이다. 역으로 타인의 삶과 행복을 대신해서 경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2).

노동시장에서도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만큼 실시간으로 빌려 쓰는 ‘온 디맨드(on-demand) 휴먼 클라우드’가 보편화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인간 노동의 파편화와 정규직의 소멸을 우려하는 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노동력 제공회사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노동할당량과 임금수준을 보장하도록 관련기업들에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2).

(2)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핵심

디지털 환경에서 쏟아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미리 예측하는 빅데이터(big-data) 기술은 미래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빅데이터는 마치 일기예보가 지역별 날씨를 알려주고 경제뉴스에서 증시의 주가변동을 보도하듯이 개인의 일상,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예상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스케줄과 관련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정보와 예측이 제공될 것이다. 출근길의 어느 곳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 외국에서 수입된 특정한 식재료가 세균오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떤 식당이니 오늘 점심때는 가지 말라고 주의 줄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뉴스정보의 절반은 빅데이터 관련 분석 내용이 차지하고 제품과

6) “[찾이슈 기본소득]② 기재위·복지위·환노위 의원 54% 기본소득,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 조선비즈 2016.9.21.

서비스 가격도 실시간으로 연동될 것이다. 치안분야에선 전국의 CCTV, 센서망과 연계한 빅데이터 예측이 범인의 도주경로를 파악하거나 범죄예상지역에 경찰을 사전에 투입해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데 뚜렷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대중들이 이리저리 쏠리면서 빅데이터가 권력의 통제도구로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한다는 우려도 나타날 것이다. 일부 대학과 쇼핑몰에서는 디지털데이터의 생산, 전송을 아예 차단해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빅데이터 프리존도 곳곳에 생겨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유통, 폐기와 관련한 범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주도의 상설감시기구를 승인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3).

(3)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에서 ‘만물인(萬物人)’ 인터넷으로

일상의 다양한 사물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꾸준히 지능화되면서 거의 모든 물건이 인격성을 띠는 ‘만물인’ 인터넷(Internet of Thing person)으로 진화할 것이다. 초기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변 사물을 작동시키는 만능스위치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다음에는 연결되는 사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2040년대에는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이 필요에 따라서 대화 기능과 인지능력을 갖춘 일종의 가상 인격체처럼 작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4).⁷⁾

사물인터넷 분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소형 생활가전 중심의 상용화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의 발달로 소형 생활가전에서 제조기업(스마트팩토리), 공공시스템 분야로 IoT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상 생활로부터 축적된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 문제 및 IoT 기기를 경유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 증가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분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의 부재로 인해 신시장 창출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8).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행위능력을 지닌 ‘가상인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동으로 일련번호를 발급하고 소유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4).

(4) 가상·증강현실: 가상과 현실 구분이 없어지는 지각혁명

미래사회에는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에서의 고사처럼 가상과 현실의 차이가 희미해진다(서용석 외, 2016: 25). ICT 콘텐츠 분야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콘텐츠의 대중화를 통해 혼합현실(Mixed Reality)⁸⁾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에 국

7) 예를 들어 침대와 조명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언제 깨울지 판단하고 이제 일어나 학교 가라는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가상의 가정부가 집집마다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 인격체는 일상을 에워싼 사물인터넷망을 통해서 언제, 어떤 장소든지 등장해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모든 사물에 갖든 새로운 인간형, 만물인(萬物人)이라고 부른다(서용석 외, 2016: 24).

한 되어, 제조시스템 등 타분야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콘텐츠의 파급력이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 및 트레이닝 분야에서 킬러콘텐츠 등 장시점이 혼합현실 시대로 넘어가는 임계점(critical mass)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5).

또한, 2020년대 후반 쯤에는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친 환자를 위한 홀로그램 기반의 증강현실 메이크업 장치가 등장하여 헬멧을 닮은 홀로그램 장치를 착용하면 끔찍한 화상을 입은 얼굴도 지극히 멀쩡한 모습처럼 주변 사람에게 보일 것이다. 이후 홀로그램 메이크업 장치는 가장 인도적인 첨단기술의 활용사례라는 찬사 속에 폭발적 인기를 끌 것이고, 목도리, 안경과 같은 형태로 소형화되면서 일반인에게 점차 확산될 것이다.⁹⁾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실제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맨 얼굴을 함부로 노출하면 오히려 실례로 간주될 정도가 될 것이다. 젊은 세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5).

행정측면에서 가상, 증강현실의 확산은 행정서비스 채널도 현실세계와 가상, 증강현실의 융합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가상현실 정부포털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실제 주민센터에 들어간 것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도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인이 있는 장소 어디라도 함께 접속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6).

2)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1) 인공지능: 영혼의 일부로서 인공지능

알파고 쇼크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 산업으로의 응용 및 활용 확대도 모색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4).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인류의 지배적 지위가 위협받고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진화는 2045년 시점에서 볼 때 아직 사람과 비슷한 종합적 판단력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서용석 외, 2016: 26-27).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언어(음성)처리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4)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한 외국어 실시간

8) 가상의 영상을 현실에 겹쳐서 더욱 발전된 가상 세계를 만드는 기술(AR, VR의 경계 파괴)을 의미(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5).

9) 특히 노년층은 주름살, 처진 피부를 수술하는 것보다 웨어러블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수십 년 젊은 외모로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젊은 여성들은 매일 화장을 하듯이 증강현실 메이크업기기를 활용해서 독특한 외모로 변신하는 상황을 즐길 것이다. 길거리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기이할 정도로 젊은 얼굴을 가진 노인이나 피부 문제를 시각적으로 커버한 중년 여성들이 흔해질 것이다(서용석 외, 2016: 25).

번역이 확산되면서 외국어 교육시장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노인들도 인공지능을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사회적응능력이 높아져 지적인 수준에서 세대 간 격차도 줄게 될 것이다. 전지전능한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을의 위치로 전락하고 대부분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우려는 결국 과장된 것으로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기술에서 유용한 도구로 위상이 바뀐다면 핵심 원인은 인공지능의 내재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의 인터페이스는 외부 기기에서 안경, 콘택트 렌즈, 다음은 뇌신경의 생체신호와 실시간 연동시키는 서비스로 진화할 전망이다. 대중들은 외부 정보기기를 조작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머리 속에서 특정한 키워드나 문장을 떠올리면 저절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결과가 떠오르고 마치 본래부터 알고 있던 지식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두뇌연동 서비스는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용자의 활동능력을 놀랍도록 향상시키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대중들의 시각은 결국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입출력 단계가 두뇌 속에서 수행될 뿐이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위협적인 타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을만한 두뇌, 확장된 영혼으로 간주될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른 분배와 민주적 통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6: 27).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일자리 대체와 윤리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장치와 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4).

(2) 로봇: 로봇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동화 세상

로봇기술의 미래를 묘사하는 SF영화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인간형 로봇이 등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미래사회에서 로봇기술의 활용은 SF영화 속의 로봇세상과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현장에서 로봇자동화는 꾸준히 발전해 제조업의 노동인력의 수요는 꾸준히 줄어들게 된다. 의료, 물류, 국방, 치안 등 전문분야에서 로봇자동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날 생활 속의 로봇아이템을 예상해보면 노약자의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착탈식 웨어러블(wearable) 로봇이 야외활동을 나갈 때 입는 등산복처럼 노령화 사회의 필수품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서용석 외, 2016: 27-28).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인간을 돕는 서비스 로봇분야에서는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히트상품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을 닮은 덩치 큰 로봇이 가정과 사무실,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을 소비자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봇이 요리와 집안에서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공상과학속의 장면도 끝내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6: 28).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과 연동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끄는데 비하면 인간형 로봇에 기반한 서비스는 아직도 대중화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귀찮고 힘든 일을 로봇이 전부 처리하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로봇의 시중을 받으면서 즐기는 세상은 향후 수십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로봇자동화 장비보다 인간이 작동과정에서 개입하는 원격로봇장비를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더 주는 식으로 자동화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전망이다. 로봇기술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켜온 자동화세(robo-tax)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되어서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실업자들의 재교육, 취업알선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서용석 외, 2016: 28-29).

(3) 드론: 혁신적 이동수단임과 동시에 제한된 과급효과

드론(drone)은 2010년대 이후 물류시장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무거운 화물을 실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드론 운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역별 드론관제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정해진 루트만 비행하고 추락에 대비한 낙하산 부착이 의무화됐다. 인구밀도가 낮은 도서지역, 농촌에서 드론은 소규모 택배용도로 쓰이지만 도심지역은 비행 중 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민간의 드론 사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국내 물류수송분야에서 드론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서용석 외, 2016: 29).

또한, 드론은 운송·레저·농업·치안·소방 등 산업 분야별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공간·정밀지도데이터의 원활한 유통문제에 대한 선결이 필요한 상황이다.¹⁰⁾ 이와 관련하여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 해당 대역의 조종기 및 비행체 개발, 안전성 점검 등 선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며, 드론의 공격, 감시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여지가 있어 상용화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9).

(4)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unmanned vehicle)는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시판되는 차량 대부분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할 것이며, 전국의 도로 인프라와 교통법규도 자율주행에 맞춰서 바뀔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교통사고율도 자율주행차의 보급에 따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자율주행차량의 확산은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놀랍도록 바꿔 놓을 것이다. 한편, 운전을 못하는 청소년이나 여성, 노년층의 자가용 활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소비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주차장이 부족해 차량접근이 힘든 도심지 상권에도 유동인구가 밀려들고 부동산 가격이 다소 오를 수도 있다. 운전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는 자율주행기술 덕분에 주차장에 파킹된 차량의 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자율주행차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적절한 장소에서 바꿔 타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30).

자율주행기술은 근거리 이송, 택배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소형 무인카트가 아파트 단지, 주택가를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고객이 주문한 택배물품, 세탁소에 맡긴 옷, 반찬거리, 배달음식까지 전달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 실버타운에서는 치약, 우유 한통, 생선 한 마리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카트가 없으면 생활이 곤란할 지경까지

10)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해 전국을 커버하는 드론시스템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범죄, 재해현장에는 치안용 경찰 드론이 어김없이 먼저 출동해서 초기 현장통제를 수행하고 달아나는 용의자를 공중에서 쫓기도 한다.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형 드론은 소방서의 인명구조, 교외지역에서 부유층의 레저용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탑승형 드론이 도심지에서 널리 쓰이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서용석 외, 2016: 29-30).

이르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에서 자율주행용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관리가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공직진출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30-31).

3)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1) 바이오기술: 인명은 재전(在錢)이라

미래에는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이제 하늘의 뜻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달렸음이 확실해 질 것이다. 돈만 지불하면 줄기세포를 분화시켜서 손상된 피부, 장기를 대체하고 신체의 노화 속도도 크게 줄여서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신체적 장애도 첨단 의학과 로봇기술의 덕분에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태아의 유전자 배열을 조작해서 더 건강하고 신체조건이 뛰어난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시술이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출생부터 과학적 검증을 마친 우월한 유전자와 위험성을 내포한 열등한 유전자로 나뉘지고 있다. 맞춤형 아이들이 성인이 될 무렵이면 한국사회의 통합을 깨뜨리는 최대의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서용석 외, 2016: 32).

이제 한 사람에 부여된 생물학적 수명은 주어진 유전자, 생활패턴, 재정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는 노년층의 경제적 능력이다. 노인들은 자산이 있으면 항노화 치료요법을 받으면서 유의미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다가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급속한 노화를 겪게 되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대다수 노인들은 은퇴시점을 가능한 늦추고 의료쿠폰을 받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노동을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서용석 외, 2016: 32-33).

미래의 정부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가격이 비싼 항노화 치료의 의료보험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고령층 유권자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선거 때마다 항노화 치료요법의 보험 커버리지를 늘리는 등 실버 민주주의의 위력에 휘둘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용석 외, 2016: 33).

(2) Nano Technology

나노기술은 특히 생명공학과 융합해서 미래 한국인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나노스케일의 극소형 센서를 몸속에 주사하면 상세한 몸 전체의 혈관지도가 나온다. 미세한 핏줄의 어느 곳이 막히고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2030년대 이후 한국인의 혈관질환 사망률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면 나노로봇을 몸속에 주입해 병든 세포나 해로운 독소만 골라서 제거하고 맹인의 망막세포를 되살리는 단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분자단위에서 인간의 신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매우 부유한 계층은 인류가 추구해 온 무병장수의 꿈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셈이다. 반면 한정된 지구 생태계에서 너무 급진적인 수명연장과 신체 조작은 인류공동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이 크다. 종교계나 환경단체는 의학분야에서 첨단 나노기술을 적용하는데 제한을 두자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서용석 외, 2016: 33-34).

특히, 나노기술은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나노로봇을 투입해서 특별한 질병치료가 아니라 노화세포를 제거해 수명을 크게 늘이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부유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노기술의 혜택을 받는 부유층과 그렇지 못해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이 예정된 사회적 소외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서용석 외, 2016: 34).

4)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자 컴퓨팅, 3D프린터

(1)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남아도는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송전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2045년 기준 국내 총 전력 공급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대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동과 오피스 빌딩, 개인주택은 대부분 에너지저장시스템 시설을 기본사양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해당 건물의 유리창과 지붕에 부착된 태양광 발전, 유휴시간대의 전력, 전기차 배터리 여유분 등을 수시로 모아서 아파트 가구에 적절히 배급하게 될 것이다. 덕분에 아파트, 개인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차 충전 및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부 상업용 빌딩은 외부 전력을 전혀 쓰지 않는 100% 에너지자급 인증을 받는 사례도 늘게 될 것이다. 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에 따라서 주택가를 뒤덮는 전신주와 전력선이 상당수 사라지고 도시미관도 한층 미려해질 것이다(서용석 외, 2016: 34).

에너지저장시스템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203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의 CO2 배출증가세도 크게 줄어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저장시스템 대중화로 인한 배출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산업용 전력시장과 북한의 전력인프라 재구축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34-35).

(2)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양자역학을 활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초병렬적으로 계산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은 미래사회를 움지에서 움직이는 지능 인프라로 작동할 전망이다. 대부분 컴퓨터 전문가들은 2020년대 미국을 선두로 양자 컴퓨팅 기술의 실용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초기 양자컴퓨팅 기술은 국방, 과학연구용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차츰 개인이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산된다. 결국 2030년대에 이르러 컴퓨터의 성능은 인간이 체감하기에는 사실상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균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한대에 가까운 양자컴퓨팅의 연산능력 덕분에 기상예측이 눈에 띄게 정확해졌고 무인자동차의 도로상황 인식능력과 길 찾기 기능은 인간을 단연 능가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신약개발에 따른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성을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약품을 맞춤형으로 개발해주는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이다.¹¹⁾

11) 양자컴퓨팅 기술과 관련해서 해커들이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기존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시나리

정부입장에서 양자컴퓨팅의 실용화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투자대비 효과를 계량하는 작업을 거의 실시간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컴퓨팅을 통해 산출한 행정서비스의 효과분석은 정부조직의 개편과 공무원 인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서용석 외, 2016: 35).

(3) 3D 프린팅 (3D Printing)

3D 프린팅은 이론상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미래 한국의 가정에서 매장에 가지 않고 3D프린터로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직접 출력하거나 각종 물건의 부품을 뽑아서 사용하는 상황이 보편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3D프린팅이 제조업, 유통업의 공동화를 불러오는 파괴적 영향력 때문에 일부 기업도산과 사회적 갈등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3D프린팅 서비스를 생산물의 디자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조사 또는 관련 유통업체에서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해서 3D 프린팅 기술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24시간 편의점이나 대형 유통점이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온갖 3D프린팅 상품의 제작 및 유통채널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 때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품은 대체로 보급형으로 인식되고 사람이 직접 만든 수제 상품은 훨씬 비싼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외진 곳에서도 3D프린터를 통해서 어지간한 물건은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골이나 외딴 섬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저렴하고 가벼운 폴더형 하우스가 보급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¹²⁾ 3D프린팅의 확산과 대형제조업의 공동화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족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물건을 일정규모 이상 판매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서용석 외, 201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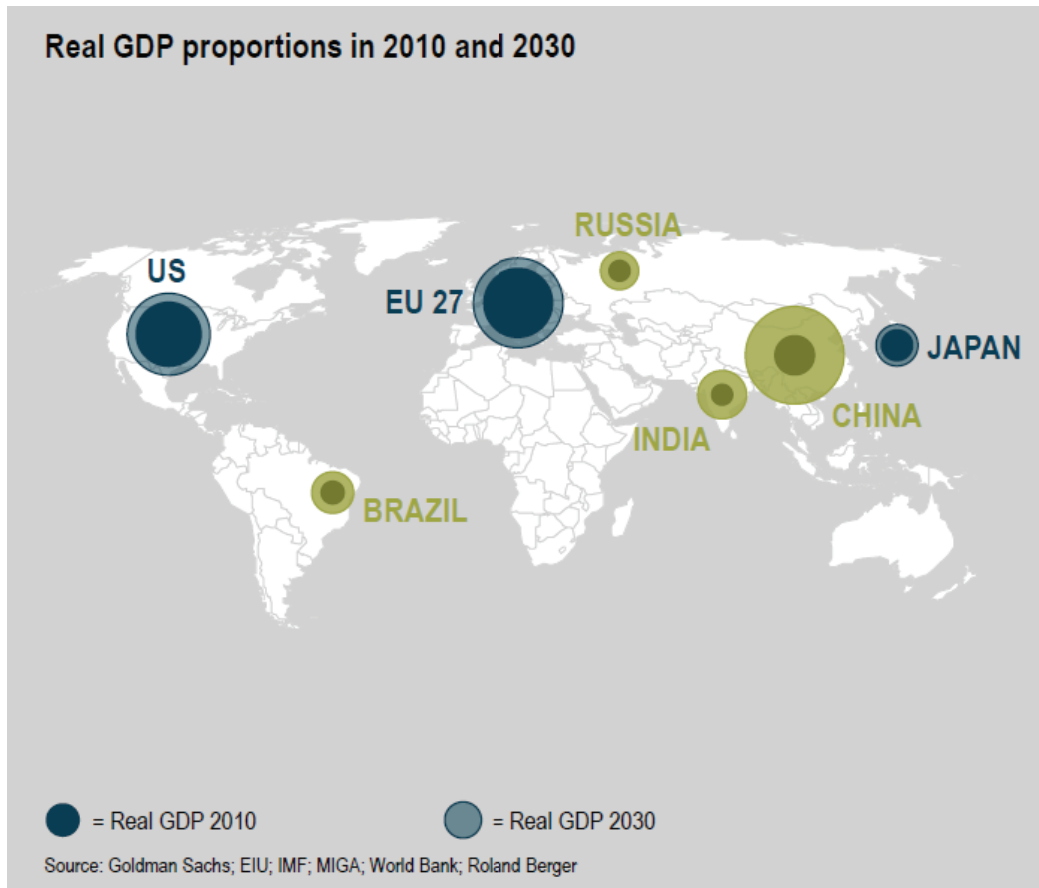
3. 경제: 저성장, 소득불평등, 일자리 감소

1) 글로벌 저성장 경제 환경 고착화 (뉴노멀 시대의 도래)

뉴노멀(New Normal)이란 세계 경제의 재편을 통해 떠오르게 되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이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직후 세계 최대의 채권운용회사 ‘핌코’의 CEO 무하마드 엘 엘리언(Mohamed El-Erian)이 뉴노멀 현상을 거론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령화, 소비위축, 투자부진, 소득불평등, 규제강화,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래리 섬머스가 지적한 장기 정체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서용석 외, 2016: 37).

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세계 보안시장에 일대 특수로 이어진다(서용석 외, 2016: 35).

12) 의학분야에서 3D프린팅을 이용한 연골과 치아, 뼈, 피부, 장기 등의 속성제작은 많은 환자들의 재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큰 화상을 입거나 신체 일부가 손상되어도 의학용 3D프린팅을 활용해서 훨씬 신속한 재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6: 36).



<그림 2-2> 주요 경제 강국들의 실질 GDP 비중 (201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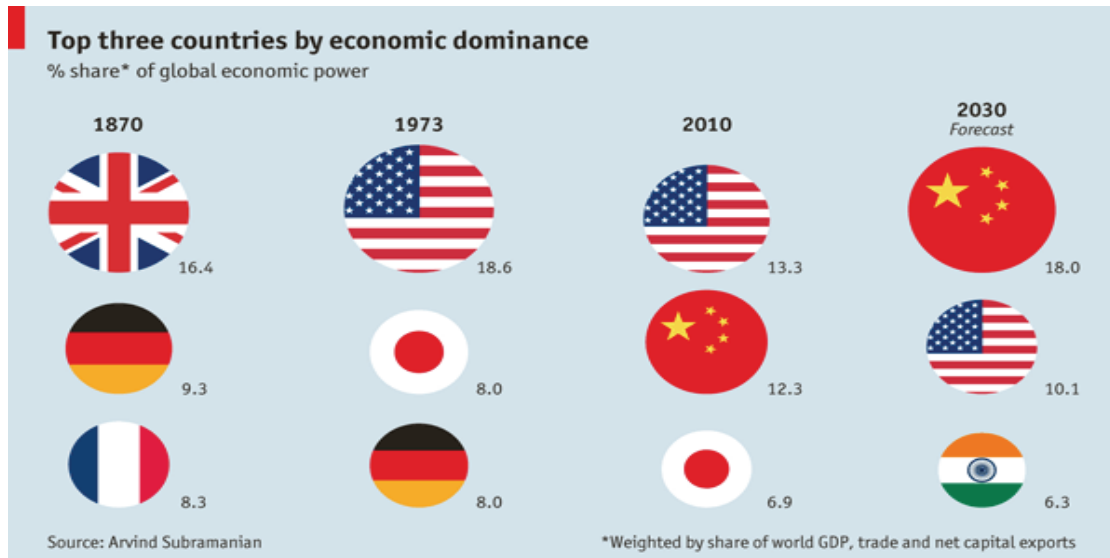
출처: Trend Compendium 2030,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2030년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8%에서 36%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브릭스 국가들의 실질 GDP는 향후 20년 동안 연간 7.9%씩 성장할 전망이며, 수출도 연간 7.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의 중산층은 현재보다 150% 증가할 것이며, 현재의 8억 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¹³⁾

현재 중국의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9.0%로 인도(8.4%), 브라질(5.5%), 러시아(5.3%)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30년 중국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미국의 1970년대 수준과 영국의 19세기 말 수준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는 단극화 경향을 보일 것이며, 그 주인공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다. 한편 2030년 인도의 경제적 영향력은 2010년의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다. 2050년경이 되면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될 것이며, 미국과 인도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브라질도 세계 경제 톱5 안에 진입하게 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5대 경제대국에 모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⁴⁾

13)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Trend Compendium 2030, 2011.

14) The Economist, "Global Economic Dominance: Spheres of Influence", 2011, <http://www.economist.com/node/21528591>.



<그림 2-3> 3대 경제대국의 경제적 지배력 (1870-2030)

출처: <http://www.economist.com/dailychart/2011/global-economic-dominance>

2016		2030		2050	
국가	구매력지수 GDP	국가	구매력지수 GDP	국가	구매력지수 GDP
중국	21269	중국	38008	중국	58499
미국	18562	미국	23475	인도	44128
인도	8721	인도	19511	미국	34102
일본	4932	일본	5606	인도네시아	10502
독일	3979	인도네시아	5424	브라질	7540
러시아	3745	러시아	4736	러시아	7131
브라질	3135	독일	4707	멕시코	6863
인도네시아	3028	브라질	4439	일본	6779
영국	2788	멕시코	3661	독일	6138
프랑스	2737	영국	3638	영국	5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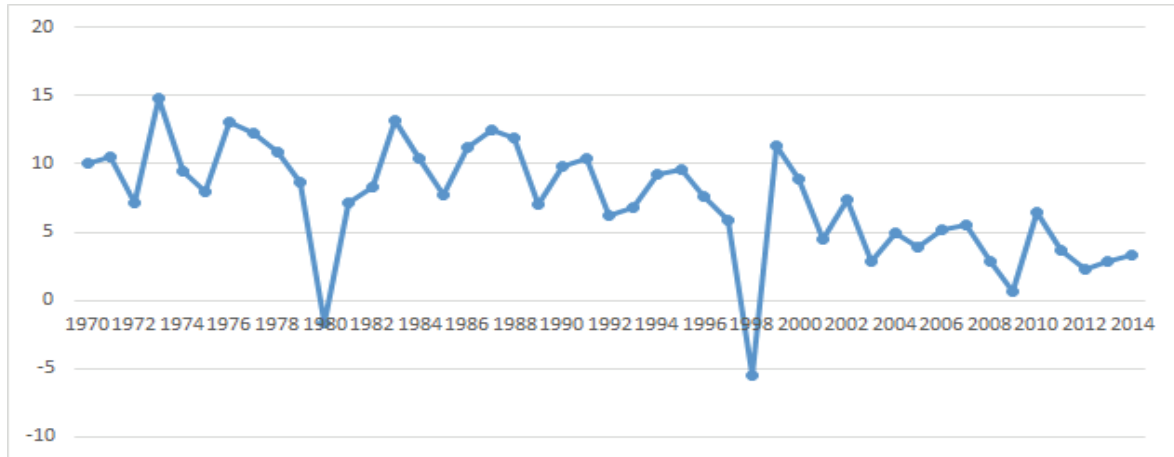
2) 넥스트11: 포스트 브릭스

넥스트 11¹⁵⁾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30년까지 연 5.9%에 달할 것이며, 실질 수출 증가율도 세계 평균 6.8%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아세안5의 실질 GDP는 연 6.6% 증가하여 글로벌 GDP의 약 4.0%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아세안5의 실질 수출량도 연 6.4% 증가하여 세계 추출의 약 4.8%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넥스트11의 중산층도 2030년까지 약 120%(7억3천만 명) 가량 증가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는 향후 20년 내에 약 3억3천명이 새로이 중산층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넥스트11 국가들의 총 GDP는 G7 국가들

15) 넥스트11은 브릭스에 이어 성장 잠재력과 투자 전망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는 11개의 신흥 경제국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05년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하여 언급한 11개의 신흥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베트남, 이란,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의 1/10 수준이지만, 205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G7 국가들의2/3 수준까지 따라잡을 전망이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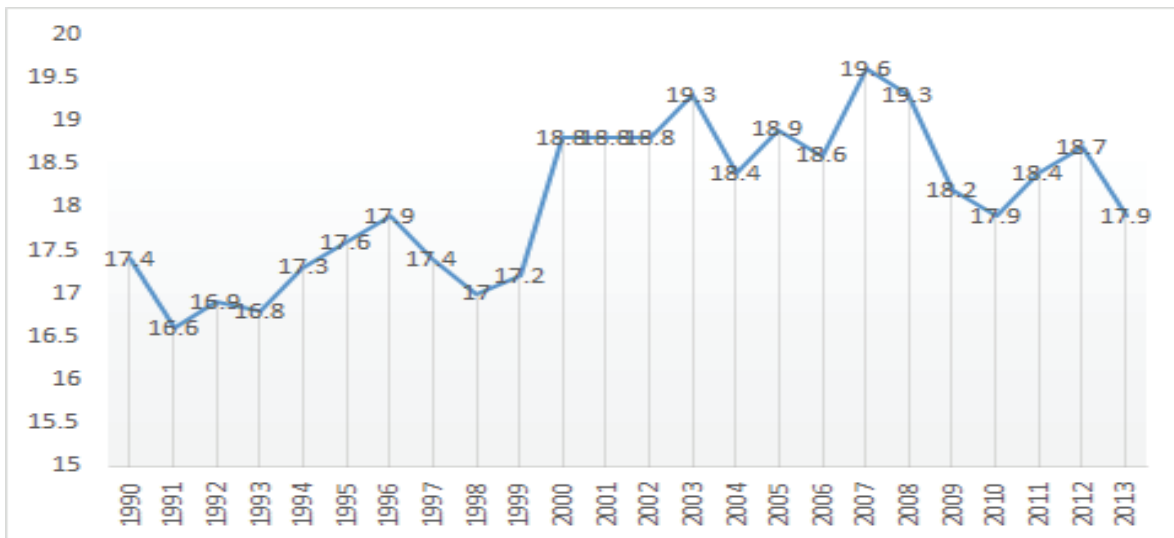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시기를 거쳐 저성장의 시대로 변화였다. 비록 OECD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 2011-2015년 경제성장률은 2.75%의 성장률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OECD, 2016: 6).



<그림 2-4> 경제성장률

출처: e-나라지표(2016). 홈페이지

경제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으나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5> 조세부담률

출처: 통계청(2016). 홈페이지.

16)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Trend Compendium 2030, 2011.

3)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가계부채 증가

2016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초과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부동산시장의 양적완화로 인한 주택자금대출이 최고치에 달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의지가 희박한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서용석 외, 201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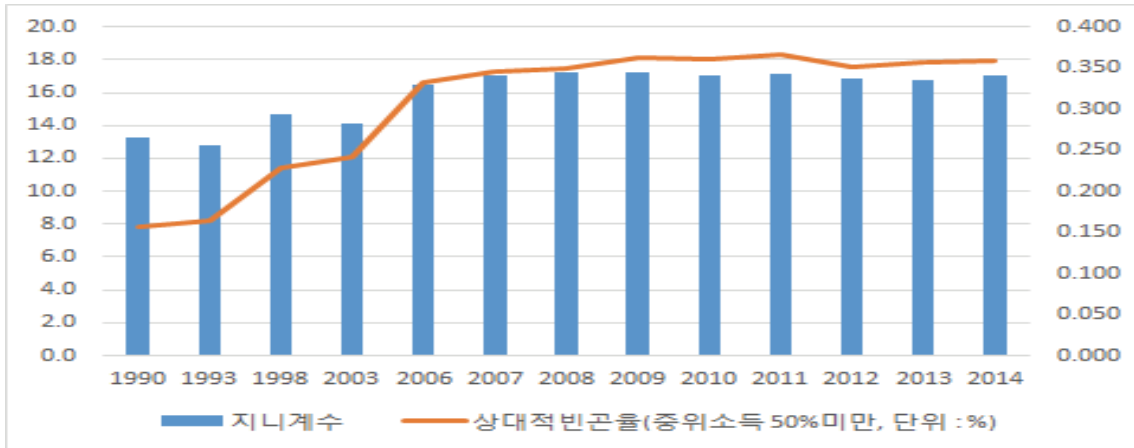
소득계층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데 반해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투자형 대출이 확대되는 등(현대경제연구원, 2013)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에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7년 140.5%, 2010년 154.0%, 2013년 160.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KDB산업은행, 2014).

그러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사상최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세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 등으로 경기를 낙관한 주택거래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과 정부정책의 경향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2020년 이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이탈, 그리고 국내 부동산의 거품 붕괴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저금리 기조에서 무리하게 부채로 주택을 구입한 가계가 부동산을 내놓고 실질주택가격은 2019년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인사측면에서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가계부채 증대는 복지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를 높여서 관련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6: 41-42).

4) 실업률(청년) 증가 및 고령 빈곤층 증가

기술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3D프린팅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향후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총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감(純減)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의 감소와 맞물려 고령인구의 빈곤 또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5.1%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서용석 외, 2016: 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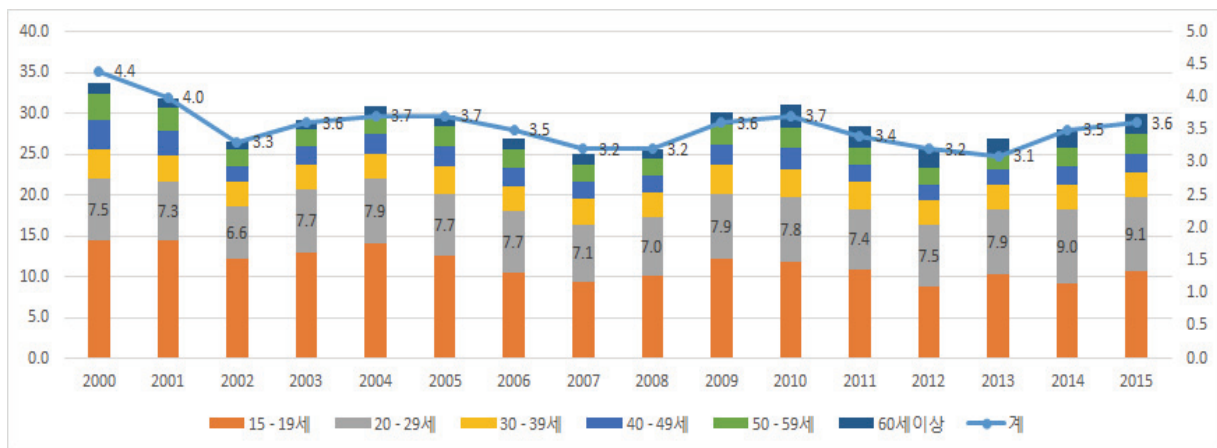
낮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득불평등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볼 수 있는 소득분배지표와 빈곤율 추이를 보면,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 모두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소득분배지표

출처: 통계청a(2016). 홈페이지

노동시장 문제로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초래되고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 고용률은 OECD최저 수준이며, 고령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여 질 낮은 일자리와 자영업 쪽으로 이직하면서 노인 빈곤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OECD, 2016).



<그림 2-7>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출처: 통계청a(2016). 홈페이지.

5) 세대 구분 없는 실업 노선

ILO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실업자가 2억 11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는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청탁금지법 여파에 따른 본격적인 고용 축소, 구조조정 여파로 중장년층 실업자 증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전체 신규채용 축소 등이 주요 고용 악재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진에 맞추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경기동향을 통해 볼 때, 고용시장에 대한 핵심 요소로 내수와 물가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소비활동과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5).

6) 공유경제의 부상

공유경제란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는 않는 실물자산, 지식, 시간, 경험 등을 상호 빌려주거나 교환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지칭한다. 협력적 소비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소비와는 달리 자신이 가진 자산과 기술과 자산을 필요한 다른 이에게 서로 대여하고, 또한 차용해서 쓰는 공유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비의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공유경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협력적 소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쓴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 특정인이 가진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배하는 방식, 실물자산이 아니라 재능·기술·자금·시간 등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 이용자로서는 자주 쓰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적 지출을 억제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또한 공급자로서는 남아도는 잉여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여도 하고 수익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양희동, 2014).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가계소득 저하, 실업문제 등은 소비주체들의 인식변화를 불러오게 되어 소유보다는 유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주목받게 되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업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전통경제는 소유를 바탕으로 한 자원을 소비하는 형태이며 이는 자원고갈을 불러온다. 또한 목표는 이윤창출이나 이는 과잉소비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하게 되어 개인과 개인 간의 공유(P2P)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의 발달로 공유경제는 부상을 넘어선 확장단계로 들어서고 있다(서용석 외, 2016: 43-44).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지난 2013년 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활성화된 거래와 낮은 구매 비용 덕택에 매년 80%가 넘는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현재 세계 공유경제의 95%를 북미(65%)와 유럽(35%)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2014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양희동, 2014). PwC의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경제시장은 2025년까지 클라우드펀딩, 온라인 직원채용, P2P 숙박, 카셰어링 서비스등 5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약 3,350억 달러(약 35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자동차, DVD 등의 렌탈 분야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온라인 인력공유,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공유경제 분야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장에서 공유경제의 부상은 소유권과 과세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또한 공유경제로 인한 국민들의 만족과 이득을 계량화하는 새로운 소득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서용석 외, 2016: 44).

7) 규제프리존 통과를 통한 미래 신산업 발굴

규제프리존¹⁷⁾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IoT,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 기반의 지역전략산업들이 4차 산업군에 포함되는 것들을 감안하면, 규제프리존은 4차 산업 활성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특례¹⁸⁾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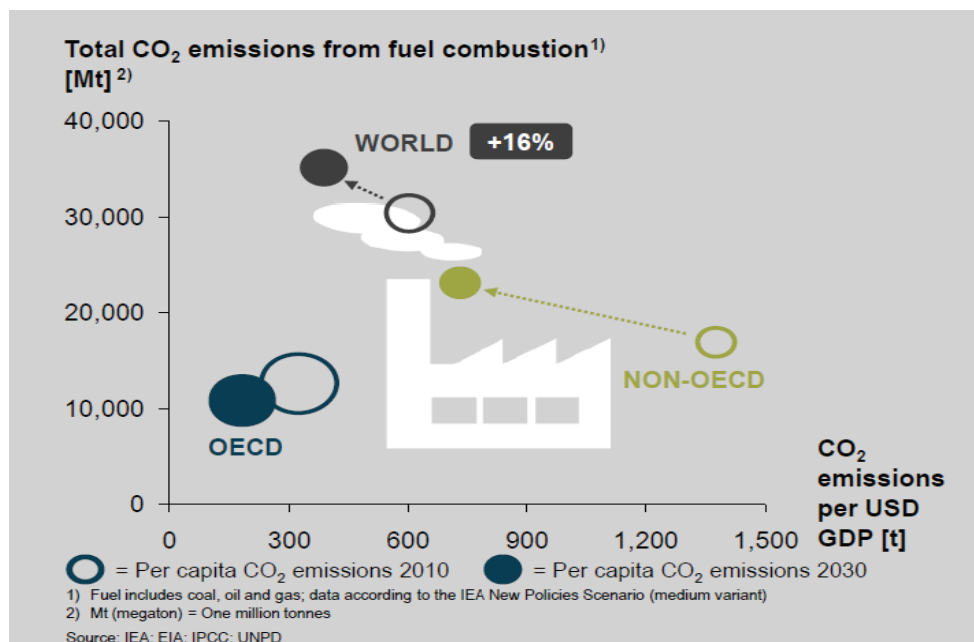
17) 규제프리존은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5).

이외에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 사업 특례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정책의 이해도 및 활용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5).

4. 환경

1)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

2030년까지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로부터 나오는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은 현재보다 16% 증가한 약 3만 5천 메가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44%)의 탄소 배출 증가율과 비교해서는 감소된 수치이다.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량이 향후 20년간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은 14%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0.7%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면, 非OECD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간 1.6%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중의 탄소 농도는 430ppm 이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⁹⁾



<그림 2-8> 연료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

출처: Trend Compendium 2030,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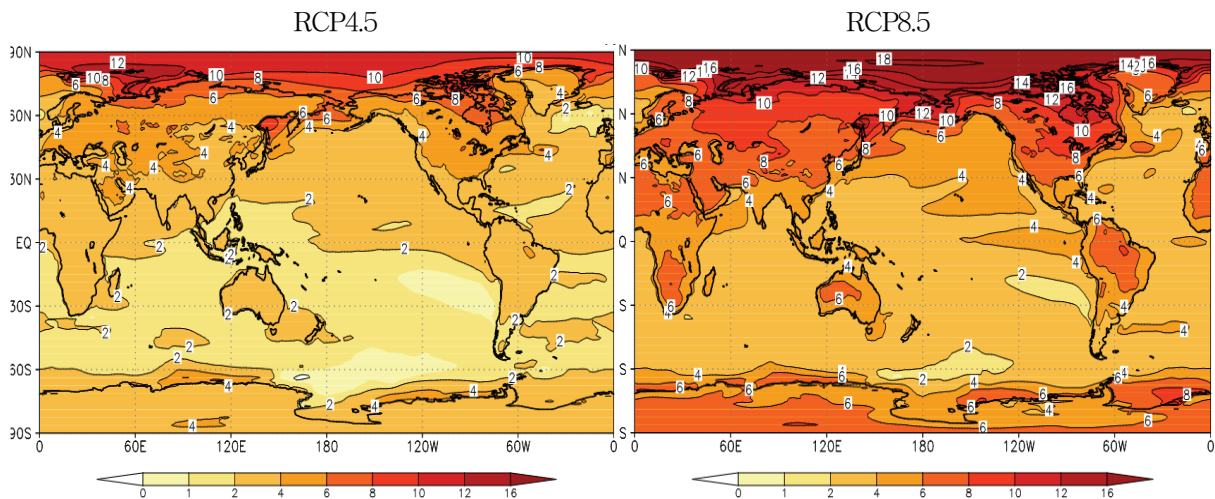
18)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은 법령상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소해 주는 시스템을 의미함(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5).

19)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Trend Compendium 2030, 2011.

2) 지구온난화

191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이 0.74°C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7°C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온난화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서용석 외, 2016: 58).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30년까지 0.5°C에서 1.5°C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21세기 말기까지 1.1°C에서 6.4°C 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²⁰⁾ 대지는 열을 저장하는 물의 수요 때문에 부분적으로 바다보다 더 따뜻해 질 것이다. 기온 증가의 편차는 지역에 따라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 대부분 지역; 모든 아프리카, 유럽, 북아시아와 중아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중미와 남미 지역들이 세계 평균기온보다 따뜻할 질 것이다. 남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와 남부 남미 지역도 세계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사회적, 기술적,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 인해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8억에서 67억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¹⁾



<그림 2-9> 20세기말 대비 21세기말 기온변화(°C)

출처: 기상연구소, “새로운 미래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자료 산출”, 기상청, 2011.6.27.

3)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홍수, 폭설, 한파,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해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가뭄과 대홍수의 강도와 빈도가 지난 3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9).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임은 자명하다(서용석 외, 201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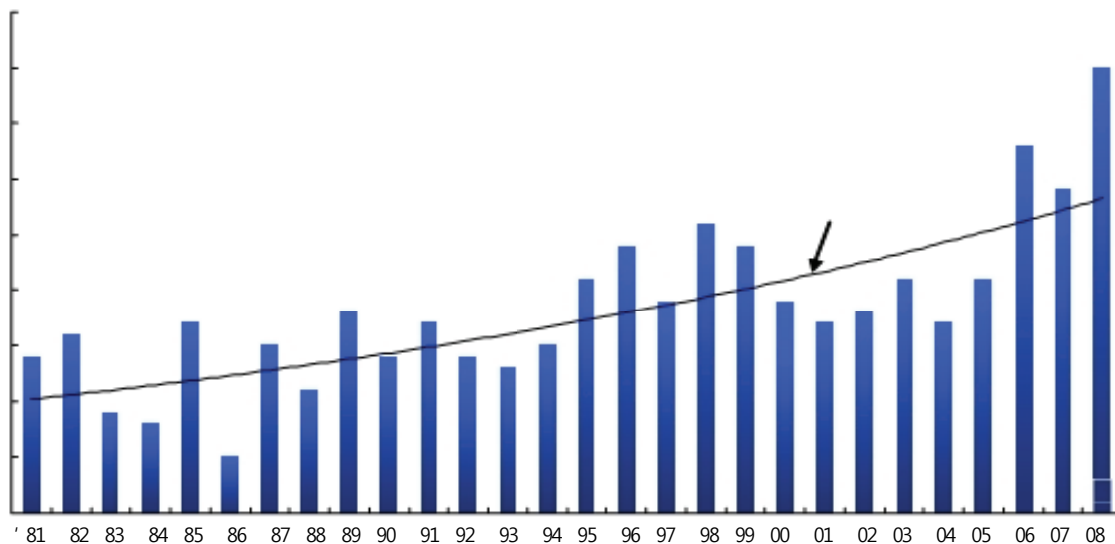
최근에 북반구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고, 남반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20) IPCC,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한글번역), IPCC, Geneva, Switzerland, 2007.

21)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이변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북반구인 중국 베이징에 2010년 1월 3일 59년 만에 최고 수준인 33cm의 폭설이 내렸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는 1월 10일 최저기온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1.7°C를 기록하였다.²²⁾ 대표적인 겨울철 휴양지인 마이애미의 1월 중평년(1971년~2000년) 최저기온이 15.6°C나 내려가기도 했다. 남반구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 2009년 12월 25일~2010년 1월 7일 폭우가 쏟아져 9개 지역이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케냐에서는 2009년 12월 27일~2010년 1월 25일 홍수로 40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²³⁾

2001년 이후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 하였다. 기후변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이라는 것이 2007년 IPCC 보고서에 의해 판명되었으며,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따른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⁴⁾



<그림 2-10>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출처: 박환일, "불편한 진실 Revisited",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10.

4)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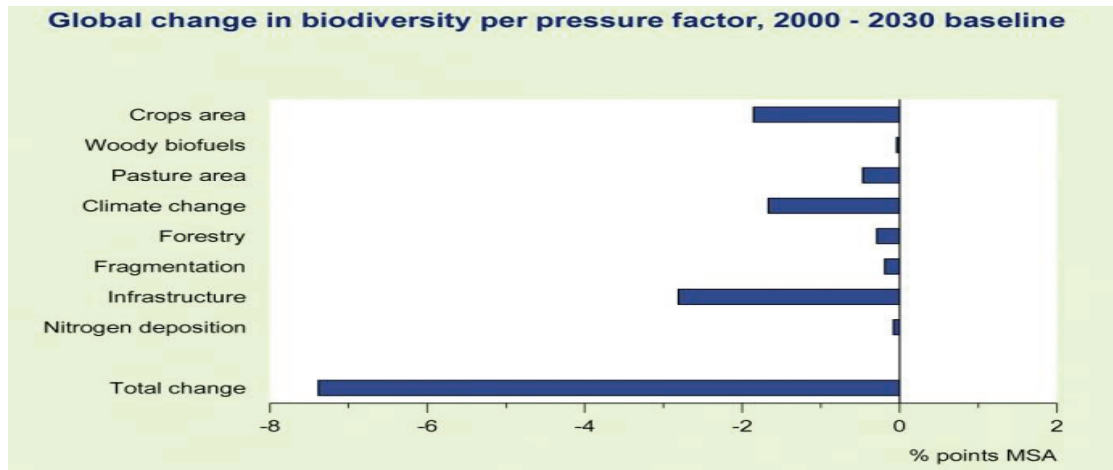
2030년 세계의 생물 다양성은 기존의 70%로부터 65%까지 5%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생물 다양성의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는 농업용 토지 이용의 증가, 확장된 인프라, 기후 변화, 그리고 임업용 토지 이용의 증가일 것이다. 2.0°C 증가한 기온은 20%에서 30%로의 종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2030년 산호초의 60%가 어업, 오염, 재난, 급속히 퍼지는 외계 생물과 산호 탈색에 의해 손실될 수 있다.²⁵⁾

22) 이지훈, "기상이변의 경제학",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23) 박환일, "불편한 진실 Revisited",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10.

24)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5)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 2008.



<그림 2-11> 글로벌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압력 요인들 (2000-2030)

출처: <http://www.globio.info/assessments-with-globio/global-regional-assessments/78-oecd-environmental-outlook-to-2030>.

5) 자원 고갈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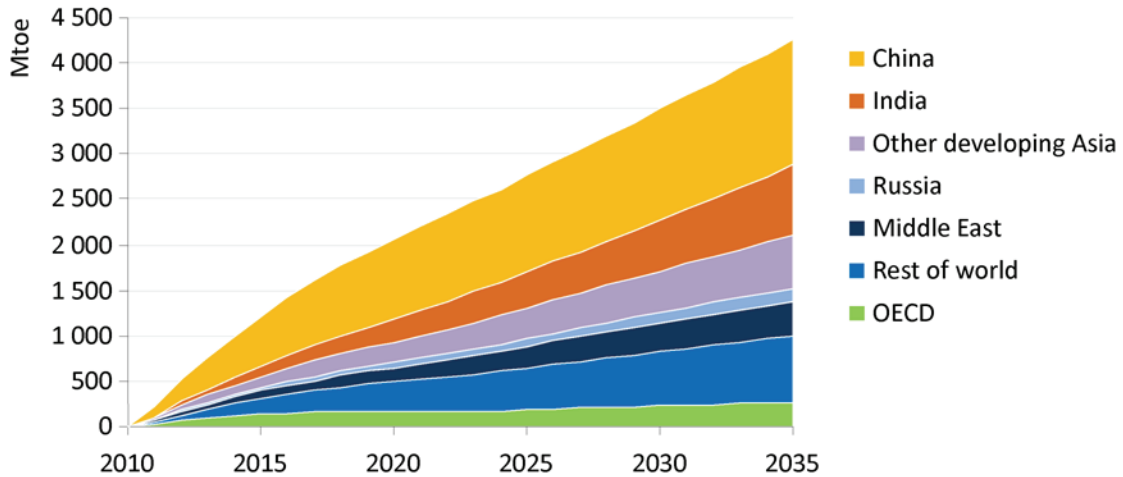
World Resource Institute에 따르면 천연자원 가채 기한은 석유가 40년, 가스 58년, 구리는 28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보다 비관적인 견해들은 석유 고갈이 2030년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향후 중국과 인도 등 신흥산업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의 확대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즉각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2030년도까지 총 에너지 수요와 가격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2030년도까지 총 에너지 수요는 현재 보다 약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160억 톤에 해당된다. 원유 가격과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 가격은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79%이상 에너지를 더 소비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에서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에서는 급격한 인구 성장과 지역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도시화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소비 형태의 변화와 이로 인한 막대한 수요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아시아에서만 에너지 소비가 1990년에서 2030년까지 거의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²⁶⁾

2030년 한 해 세계 용수량은 현재의 4조 5천억 입방미터에서 6조 9천억 입방미터로 53%가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하는 인구와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농업에서의 물 수요는 2030년까지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한 수자원에 대한 확보는 향상될 것이며, 2015년에는 인류의 86%가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총 물 수요는 2030년까지 선진국에서보다 18% 더 빨리 증가할 것이다. 이는 현재에 비해 약 58% 증가한 수치이다.²⁷⁾

26) EIA(Independent Statistic & Analysis), Annual Energy Outlook 2012 with Projection to 2035,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2.

27) Giulio Boccaletti, Merle Grobbel, and Martin R. Stuchty, "The Business Opportunity in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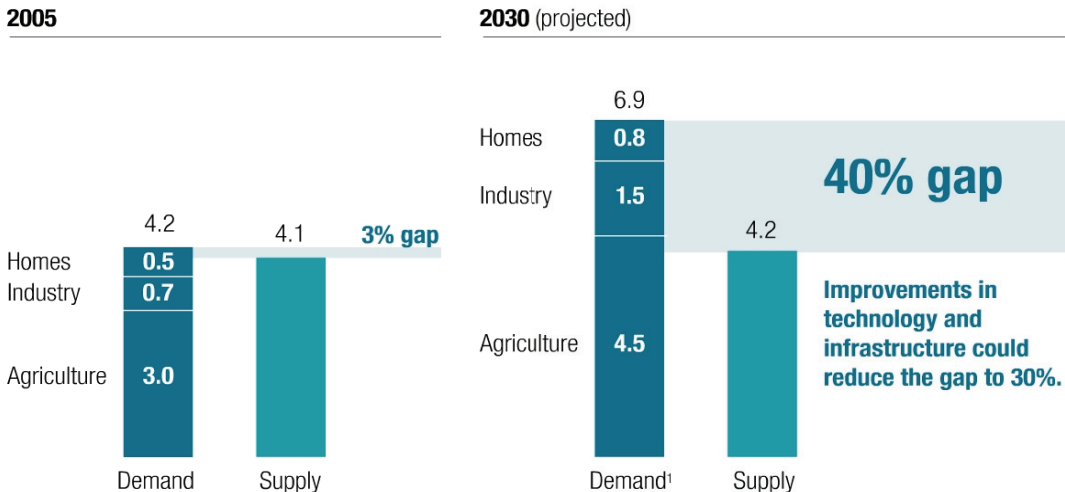


<그림 2-12> 주요 에너지 수요 성장 추이 (2020 - 2035)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11.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2030년까지 약 6조 9천6억 평방미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빠른 수요의 성장세는 공업에 의한 수자원 수요 일 것 같지만 농업은 여전히 수자원 수요의 2/3를 차지할 것이다. 증가하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50%까지 농업용수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수자원 공급은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4조 2천억 입방미터 선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요보다 2조 7천억 입방미터 부족한 양으로 인류는 엄청난 물 부족에 고통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²⁸⁾

Global water supply, trillion cubic meters



<그림 2-13> 글로벌 물 수요 및 공급량 (2005 vs. 2030)

출처: <http://aquadoc.typepad.com/waterwired/2010/08/world-water.html>

식량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의 수요의 급

Conservation”, McKinsey Quarterly, No.1, 2010.
28) Ibid.

증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1인당 음식 소비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2030년에는 세계 평균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현재 보다 6.6% 증가한 2,960 칼로리에 달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 수요와 칼로리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곡물을 포함하여 몇몇 식량의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 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9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나, 식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²⁹⁾

6) 에너지 신산업의 부상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기술 연구 확산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가 국가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투자와 개발의 중심 영역 분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8).

또한, 지난 몇 년간 증가한 재난, 자연재해(폭염, 한파)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이어져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신재생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의 저비용 에너지 확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9).

따라서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으로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연구에 정부부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신기술 확산을 위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정치: 민주주의 성숙과 실버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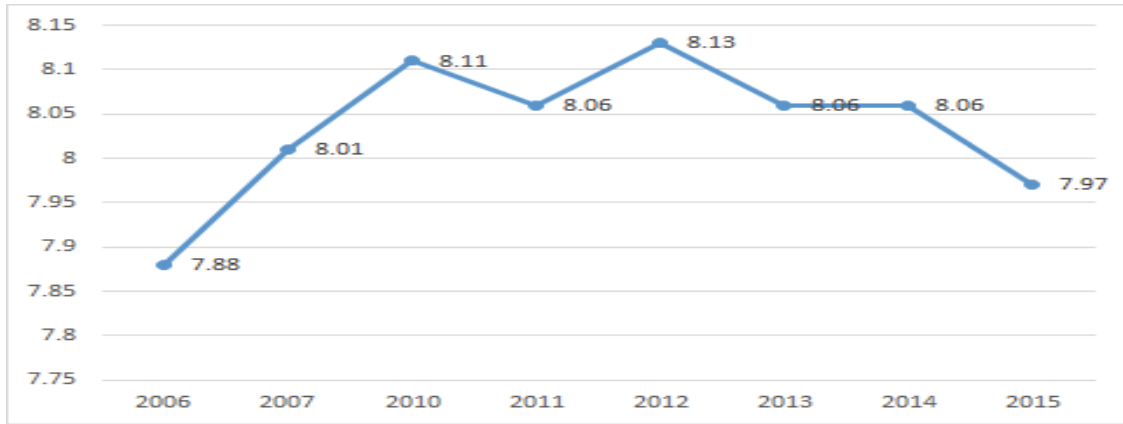
1) 권력중심의 이동: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우리나라는 국회의 입법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부 권한이 절대적으로 강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부족하다.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67개 국가를 상대로 민주주의 수준을 시민의 권리 및 선거절차, 다원주의, 정부 기능,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문화의 다섯가지 범주로 산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의 추이(그림 1)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2006년 7.88에서 2012년 8.13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7.97로 하락했다. 이는 전세계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으나 최근 5년간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레임덕(Lame Duck)으로 대표되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이 문제시 되고 있다. 5년 단임제는 차기 대권 경쟁을 가열시켜 레임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국회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1987년 대선을 통해 확정된 정치지형은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위상이 불분명 한 점, 행정부가 법안 제출권이 초래하는

29)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Trend Compendium 2030, 2011.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외형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 운용은 내각제의 성격을 띠는 면이 있어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어 정부 입법이 의원 입법보다 통계상 훨씬 더 많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등 엄격한 권력분립이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그림 2-14> 한국의 민주화지수

출처: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5: Democracy in an age of anxiety. 2006-15. 15쪽.

향후 한국정치의 권력중심은 점진적으로 행정부에서 의회로 그 추가 기울어질 것이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무원 인사측면에서 정권의 부침에 신경을 덜 쓰고 직업공무원제를 안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 정책의 경우 공무원들은 일관성 측면에서 보다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추진하고 다양한 부서경험보다 전문성을 쌓는 캐리어를 선택하는 공무원들의 비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노동 3권도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2) 초연결사회와 직접민주주의 확대

초연결 네트워크사회가 될 2030년경에 국가 권력은 약화되고 기업과 개인, 온라인 네트워크,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³⁰⁾ 디지털 정치, SNS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정치적 얽힘은 훨씬 더 증대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망이 보편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개인 중심의 정치참여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다양한 영향력 행사 집단으로 인해 희미해 질 것이며 사이버 정치활동 증가와 사이버 공동체의 이익단체화로 인해 갈등의 축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서용석 외, 2016: 47).

네트워크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된다. 이는 정치시스템이 실질적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인터넷상의 토론과 비평 등이 활성화 되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기존의 연고형 폐쇄적 집단 중심 정치참여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 중심의

30) World Economic Forum(2008) Future mapping 2030

정치참여 형태로 변화될 것이며 권위와 집단, 조직을 중요시하는 개념이 열어지고 개인주체의 정치참여와 함께 속의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존재한다(서용석 외, 2016: 47-48).

공무원의 역할도 국내 법제도에 기반한 기획, 집행보다는 여러 이익집단간의 이해조정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높게 평가받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대 정부는 공무원 승진시험에 협상술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넣거나 주민센터에는 자동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외국출신 민원인을 상대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서용석 외, 2016: 48).

3) 실버민주주의의 도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대비 노년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령층이 국가의 의사결정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고령사회가 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실버 민주주의(노령화 민주주의³¹⁾)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간주하고 18세 이상 유권자 중 50세 이상 인구비중을 계산해보면 일본은 이미 2002년에 50%를 넘어섰고 프랑스 역시 2014년에 5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면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용석 외, 2016: 48).

일본의 사례를 비추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2013 회계연도 예산 기준으로 연금, 간병보험, 의료보험을 모두 포함한 사회보장 급여 규모가 110.6조엔을 기록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경상 GDP의 23.4% 수준으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수지의 악화와 사회보장 지출의 팽창은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가져오고 이는 생산적인 재정지출 위축을 초래해 저성장과 고용부진을 불러오게 된다. 이는 다시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서용석 외, 2016: 48-49).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 무려 257.1조엔으로 늘어날 것 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는 2050년 기준으로 예상 국민 소득의 6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에 의한 사회보장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국민의 조세부담도 확대된다. 결국 소득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 재정의 부담비율은 계속 치솟아 71.6%에 달할 전망이다(이혜림, 이지평, 2014).

이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세대회계³²⁾이다. 1954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수익이 지불금액보다 4천만 엔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1986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약 8300만 엔 정도 지불금액의 초과가 나타났다. 즉, 이 두세대 간에는 1억 2000천만 엔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노령민주주의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조건 및 예산 배분 등이 투표권이 집중되는 고령층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의 유권자의 투

31) 전성인, 노령사회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 주간경향 1122호, 2015.4.2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504141027171>

32) 한 사람이 평생동안 도로, 의료, 연금 등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세금 및 보험료 등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액의 차액을 연령별로 계산한 것. 호세이 대학(法政大學)의 오구로(小黒)교수가 계산.

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점점 이러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용석 외, 2016: 49).

이러한 사회에서는 청년층을 포함한 노년층 이외의 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다수의 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 때문에 노년층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고령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소외받아온 젊은 세대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고령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도 유권자의 인생주기에 따라 투표권 비중을 조정해서 고령층에 과도하게 몰린 정치권력을 분산하는 법제도의 도입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용석 외, 2016: 49-50).

4) 국제사회로부터의 역할 확대 요구 증가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와 같은 테러조직의 등장으로 국제적인 대규모 무차별 테러에 대비한 국제적인 협력 및 방어체계가 절실해 지고 있다. 향후 국제적으로 대량 살상무기와 무차별 테러에 대비한 범세계적인 공조가 강력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한 무기 등의 구입요구와 군사적 영향력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서용석 외, 2016: 50).

또한 중국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메르스(MERS) 및 지카 바이러스 등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판데믹(pandemic)과 같은 범국가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장 자원의 활용과 배분 측면에서도 외교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즉,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군사력 증강 및 외교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위상 증대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정부개발원조 분야의 국제적인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정부에 비해 공무원의 해외파견이 적다는 판단하에 2017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공무원 채용 및 승진과정에서 국제정치와 지역정세, 외국어 실력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서용석 외, 2016: 50-51).

5)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의 여파

최근 우리나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의 발생이 각종 정책추진의 제약 및 사회 불확정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조기 대선 정국이 전개되면서 개헌 이슈, 선거제도와 관련한 이슈, 대선후보 주자들의 공약에 대한 이슈 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 육아정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공약으로 쏟아내며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을 통해 제시된

공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소보다 짧은 대선 준비기간으로 인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가짜 뉴스, 가짜 트위터 댓글 등과 같은 정보를 판별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34).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짧은 대선 준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관련 정치·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대응과 정보의 홍수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허위 또는 가짜 정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 테러에 대한 대응체제 논의의 증가

전 세계적인 테러 위협 속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전후로 테러 발생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국내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이 행사를 전후한 시기에 각종 테러 위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점차 이러한 테러 위협의 대응을 위한 정책 이슈가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물리적 테러 공격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 등을 염두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35).

제2절 미래환경변화와 농식품부의 역할 변화

1. 정부 기능 변화: 정형적 업무는 인공지능이 비정형적 업무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

본 연구에서 정부의 미래기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UN통계국의 정부기능 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1) 정부관리 지원

먼저 외교측면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외교의 증대 및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ODA사업을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다변화 및 다양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순방 및 외빈의 방한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외교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은 ODA사업과 연계된 외교일 것이다.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인력이 참여하여 지원해야 하는 활동이다.

다음으로 문화외교이다. 미래의 가장 큰 자원은 문화를 포함한 창조산업이다. 문화가 국부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문화외교가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류라고 문화산업의 전파는 산업 이식을 넘어 국가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안보외교측면에서 보면,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갈등, IS테러에서 보듯 한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외교 역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분야의 경우 기능 측면에서 보면 인력규모 자체보다는 기능 전환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은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할 경우 외교인력의 내부 양성과 우수인재의 외부 임용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직모형 측면에서 보면 외교의 경우 전통적 조직모델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현재의 직급체계를 축소하고, 현장 중심의 직급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무원의 양성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배양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인력이 공무원으로 유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부처간 정책수립 및 집행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조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조정부서의 인력도 증가해 왔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관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과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기능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국민, 부처간 갈등조정 업무기능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국정총괄 운영의 경우 향후에도 인간 영역에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인력 증원이 반드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조정업무의 상당수는 기계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계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인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에서 평가와 관리된 부분의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현재는 과학적 기법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반자동화에 그쳐 인력 요소가 필요하다. 미래에서는 평가의 대부분은 자동화처

리를 거쳐 분석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의사결정 요소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평가 담당 공무원은 관리와 관련된 최소 인력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기능은 부패관련된 기능은 자동화를 통해 투명해지므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관련 기능 역시 국회 등에 이관될 경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규제개혁 업무 역시 자동화, 지능화될 경우 상당부분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기계화될 경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 진화되면 새로운 규제영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규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 규제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한 규제 기능은 자동화와 함께 여전히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가장 자동화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관리지원 업무 기능이 행정관리, 법제관리, 조달, 통계 등은 인공지능 등으로 업무 영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인사정책의 관리도 인사심사 및 지원은 자동화 될 것이며, 인사정책 수립 기능만이 남을 수 있다. 통계도 통계조사작성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 등 자동화가 높아 통계기획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2) 국방

국방 기능은 국가가 존재한 이래, 가장 필수적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방기능의 기본적인 국가비상대비 관련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병력자원의 축소 등 군대의 인력은 감축하나 국방부가 하는 업무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통일업무의 경우 통일 여부에 따라 정책기능이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당연히 기능이 사라질 것이며,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는 통일정책수립 등 주요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3)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는 법의 집행과 관련된 기능이다. 기능의 경우 첨단지능 범죄나 경찰로봇 관리 등으로 기능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진다. 경찰의 경우 교통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의 일상화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관련 기능은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경비인력의 경우 로봇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신 기계와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여 정보 등의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경찰의 경우 인력 재배치 논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출입국 관리나 교정시설관리는 로봇으로 상당수 대체될 것으로 보여 지며, 검찰기능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 안전분야는 로봇으로 상당수 대체될 것이다. 사물인터넷, 지능형 빌딩과 주택으로 전환하여 화재 등을 사물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감지할 것이며, 화재나 긴급구조 등도 로봇의 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다.

4) 경제산업

거시경제와 관련된 조세정책과 경제정책업무는 정책조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협력의 경우 글로벌화로 인해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물가정책 기능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의 경우 시장분석기능은 인공지능화 될 것이며, 경쟁법 집행의 경우 기능은 유지될 것이나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정금융 기능의 일부는 인공지능화 될 것이며, 국세관리의 경우 상당수는 인공지능으로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관리 역시 기획이나 기계를 이용한 감시기능은 유지될 것이나 지역별 관세집행 등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기계를 관리할 최소기능만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정책의 기능은 새로운 거래 시스템, 금융업종에 대한 규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일반적 금융정책 기능은 유지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정보분석 역시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나 필수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농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물론 기획수립 등의 정책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은 대폭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예를 들어 산림감시기능 등은 드론 등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농업과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도 자동화될 것이다.

무역 및 투자진흥기능, 산업지원 관리 기능, 산업기술 진흥 및 표준화 등 2차산업 기능은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이라고 보여 진다. 정보통신정책 기능 역시 로봇으로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기술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조정, 감독, 평가하는 업무들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과학인력육성 및 국제협력기능 역시 메가트렌드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특허기능 역시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주도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등록 관리의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 등을 활용할 경우 관리가 단순화, 시간 단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의 서비스 분야의 기능 중 미래에 사라질 기능은 우정사업 기능일 것이다. 드론 등 신기술로 인간이 배달하는 역할은 사라질 것이다. 철도 역시 자동화로 공공기관 인력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5) 환경

환경에서 자연환경 보존은 현황조사가 중요한데, 기술에 의한 대체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물고기, 드론을 통해 상시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 및 상하수도 관리 역시 사물인터넷과 기계의 연결로 인해 환경정책 등 기획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은 상당수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공공건설

건설교통의 기능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육성이나 통상외교 등도 가치선택의 문제로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기능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진다.

7) 보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을 동시에 담보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배양연구, 유전자 조작, 인공수태, 반인반기계 등 생명윤리 관련 기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의료체계의 경우 원격진료, 로봇에 의한 사전 검진 등 자동화로 전달체계 관련 집행기능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건강보험관리는 자동화 업무로 일선기관의 집행업무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역과 검사도 로봇에 의한 검사가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은 그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나 실제 인력의 증가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 및 미세조작 기술 등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이를 응용한 신약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신약 출원허가 등이 대폭 증가될 것이나 자동 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 인력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가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 창궐과 국제화로 빠른 속도로 전지구적으로 전파될 수 있어 국제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8) 문화

문화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는 기계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며, 산업측면에서도 문화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이 부분의 기능은 확대될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의 IT산업과 연계되어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화가 가장 많이 이뤄져, 다른 나라의 자국문화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 국제협력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진다. 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능은 관광분야이다. 기술발전으로 시공간을 넘어서는 조직모델의 발전에 따른 유연근무제 확대, 삶의 질이라는 문화생활이 확대되어 정부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9) 교육

지식기반사회에서 노동 및 자본 투입을 통한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전문기술직과 지식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고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인력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노령 인구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양주의 정책에서 고급인력 등 질 위주의 정책, 인력 수요와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미리 미래 기술 및 지식수요에 대한 예측 모델 확립이 필

요하다. 교육기능은 축소보다는 이관의 문제로 보인다. 지방으로 교육기능을 이관할 경우 중앙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10) 복지

복지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회복지정책 수립개발의 기능은 확대될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 기능과 아동복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집행기능은 전달체계의 통합과 자동화로 단순화될 것이며, 집행부문을 담당할 공무원은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며, 대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복지 업무가 확대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평생직장 개념의 소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정책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수요와 가사부담 감소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확대되어 관련 기능 역시 확대 될 것이다. 재택근무 및 원격근로, 임시계약, 파견직 등 다양한 업무형태의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여 근로기준 설정 및 감독의 기능의 강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미래 정부의 기능을 보면, 기계로의 대체 여부에 따라 기능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획기능은 기계로의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며, 대신 집행기능은 기계로의 대체, 자동화가 이뤄져 많은 기능이 민간에게 위탁되거나 대규모 인력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위치기반: 시공간의 자유

미래 정부조직에 미칠 또 하나의 요소는 공간이다. 이미 유비쿼터스 사회, 만물사회 등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미래에는 공간이 자유로워 질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이뤄질 것이다. 정보 통신기술의 혁명은 국제 간 통신의 양과 질을 증가시켜 모든 곳이 네트워크화 될 것이며, 지능화 될 것이다. 즉, 네트워크 기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 인간의 동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최근 업무의 핵심은 정형화된 근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사무실도 업무 처리 공간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장치들이 서로 연결된 환경에서 개인과 집단의 균형, 가정과 직장의 조화, 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공간·시간·일 관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간의 변화는 창의 기반, 생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하는 것이다(김윤권 외, 2014:11).

이병하 외(2012:18)에 따르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은 공간관리, 시간 관리, 일 관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간측면에서의 변화는 폐쇄적인 사무공간은 개방형의 협업업무 환경과 기능중심의 공간 할당을 통해 효율적인 협업업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하여 물리적 공간의 확장성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실제적으로 정서적 소통 강화, 소속감, 연결성 강화와 실천을 통해 창의적 소통,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현재 많은 기업들은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생각 하에 업무 패턴과 동선, 직원의 욕구를 파악하여 공간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시간 관리이다. 기존의 시간 관리는 매우 경직적이었다. 조직중심의 시간 관리였으며, 개인에 맞는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미래에는 공간과 더불어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최근 시간 관리를 보면 유연근무제와 더불어 시간제 공무원 도입 등 개인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야근감소와 여가시간의 확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확보될 것이다.

셋째, 업무관리이다.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과 동기부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지성의 활용,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회의문화, 평가제도 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일 관리아말로 업무효율성을 제공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 관리를 위해 꾸준히 혁신을 추진했다. 인프라/지원체제 정비, 업무흐름 개선, 자발성과 관리자 의식 제고 등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였다.

넷째, 공간, 시간, 업무 관리를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단계적 전략의 추진이야말로 창의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WLB(work-life balance)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우진, 2011).

<표 2-2> 정부의 단계별, 공간, 시간, 업무 관리

	1단계: 체감형 변화 추진	2단계: 실천과 효율제고	3단계: 선순환 구조 정착
공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오피스 추진 - 물리적 사무공간 혁신 개인화와 교류성 확대 모바일 오피스 활용 스마트워크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활용, 소통 효율 제고 - 정서적 소통 강화 - 소속감, 연결성 강화 - 지속적 교육/캠페인 - 룰과 에티켓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 기반 생산성 향상 - 창의적 소통의 증가 - 새로운 가치의 창출 - 성공사례 확산
시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관리제도 확산 - 집중근무시간제 - 타임오프제 - 자율출근제 - 완충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환경 정비 - 동료시간 배려 -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 여유/여가시간 장려 - 지원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WLB의 구현 - 업무만족도 향상 - 업무공간 만족도 향상 (물리적·심리적 환경) - 개인/팀 자율성 향상 - 잔업 감소효과 체감 - 여가시간 증가 - 로열티 증가
업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성 확립/동기부여 - 역할/책임의 명확화 - 집단지성의 활용 - 회의문화 개선 -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효율 제고 - 인프라/지원체제 정비 - 업무흐름 개선 - 자발성(업무의욕) 제고 - 관리자 의식 제고 	

출처: 김윤권·이재호·윤광석. 『정부·지방자치단체 스마트오피스 적합모델 연구』. 2014. pp 12-13. , 원저: 이병하 외. 한국의기업의 워크스마트 실천방안. 『SERI연구보고서. 2012. p.18.

먼저 공간의 자유로움이 가져올 변화는 현재와 같은 공무원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청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청사로 통합될 것이다.

하나의 청사는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거점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완전 분산화된 곳에서 개별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의 자유로움은 새로운 도구, 업무절차, 그리고 팀워크와 관리방식으로의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한 업무 방식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행동방식과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상이한 기대치를 요한다(Lake, 2013: 11). 특히 새로운 업무문화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아우름으로써 개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협업적인 문화는 공간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의 회의를 여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공간의 자유로움은 업무생산성 향상, 끊임 없는 커뮤니케이션, 국민과의 점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과의 점점 확대는 물리적 공간의 점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온-오프라인에서 24시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의 자유로움은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출·퇴근시간 관리 등은 역사 속 유물이 될 것이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출장과 업무마비 등 역시 미래인 에게는 낯선 일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공간이 갖는 의미가 약해지는 원인은 사회생활의 변화이다. 최근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면이 갖는 의미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간의 관계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공간 패러다임과 변화 측면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개방적인 업무 환경으로의 변화가 요구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오피스의 활성화, 조직 환경의 변화, 웹 테크놀로지의 대중화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오피스의 활성화란 IT기술기반으로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사무실의 휴게 공간과 업무 공간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조직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개인 능력보다 조직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업무환경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간 토의가 편안하게 이뤄지는 공동 공간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며, 조직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의 대중화이다. 인간과 사물인터넷기술의 교감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을 업무 공간에 활용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드러내 기보다는 내재화시켜, 공간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기반의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될 미래에는 공간, 시간, 일 관리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가 요구된다. 또 공간과 시간의 자유로움은 창의기반, 생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할 것이다. 즉 공간의 자유로움에서는 공무원이 지시적, 통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자율적, 개방적, 촉진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공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를 넘어 자유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권한: 고도집권화와 완전분권화

현대사회는 자본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시대였지만, 기술의 발전 특히 IT기술은 모든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누구든 자신의 방에서 원하는 물건을 3D로 만들어 낼 수 있고,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공고했던 권력의 힘이 없어지지 않는지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 측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변화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종교, 과학 등 다방면에서 권력은 더 이상 과거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권력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권력을 쉽게 얻지만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또 한 순간에 잃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권력 강화와 쇠퇴가 한순간에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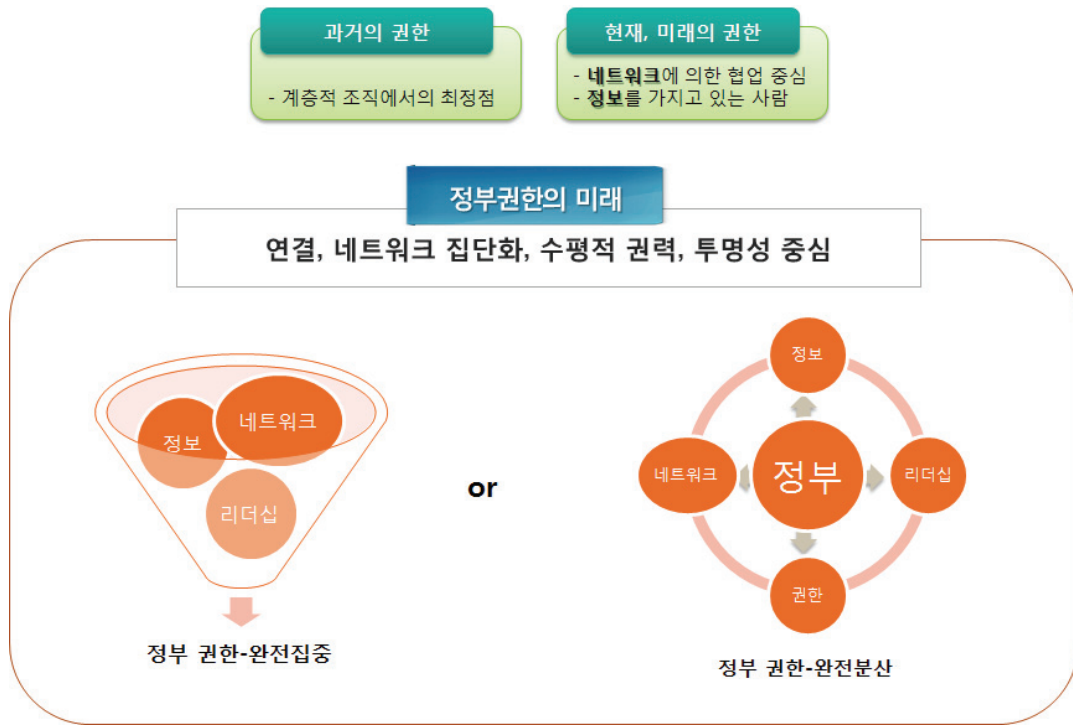
정부의 권한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되고 있다. 계층적 조직에서는 최 정점에 있는 사람이 최고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네트워크화 되면서 권한이 현업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반드시 분산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층제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듯 미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즉 정보의 접근은 분산되고 있지만 많은 정보에서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한의 고도 집권을 이룩할 수 있으며, 고급정보가 아닐 경우 정보접근의 권한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권한 역시 정보접근과 정보의 질에 따라 고도집권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완전분산도 이뤄질 수 있다. 권한의 변화는 정부리더십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리더십은 반응적·연결적·창의적·공유적 리더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집단 차원에서도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될수록 서로 연결된 집단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공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도차원에서 보면 수평적 권력성과 제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연성 권력이 진행될 것이다. 즉 연성 권력은 단순히 공식적 권위와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 준자발적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핵심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권한의 문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체계로 이어지는 집행기능은 더 이상 지방이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남는 것은 개별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획기능인데,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권이라 할 것이다. 현행 시군구, 읍면동의 계층제는 소멸되고 대신 중앙과 거점지역별 권한문제가 새롭게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사라지고 거점별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앙과 지방관계가 확립될 것이다.

결국 미래 정부는 개인 외 의제설정 권한이 확대될 것이다. 먼저 네트워크 행위자가 대거 출현할 것이다. 이는 연결적 리더십을 요구할 것이다. 또 네트워크가 집단화 될 것이다. 이는 창의적 리더십과 공유형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미래사회의 제도는 수평적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수평적 관계는 소프트 리더십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결국, 미래는 개방형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권한의 미래는 연결, 네트워크 집단화, 수평적 권력, 투명성을 중심으로 고도집권화 될 수도 완전 분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5> 정부의 권한

4. 시사점: 미래환경과 농업

1) 미래 수요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물론 기획수립 등의 정책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산림 자원화와 환경 보존, 중자산업의 지적 재산권 강화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관리와 관련된 기능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표 2-3> Driving force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야	Driving force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 문화	국제	가. 인구증감의 불균형과 급속한 노령화 나. 윤리적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식품시장 감소: 1인당 식량 소비량 감소, • 1인 식품과 관련 음식 시장 증가 • 농촌 생산기반 붕괴: 농민 고령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농지 황폐화 등 • 마을 공동체 붕괴, 농업 기술 및 자원 전승의 어려움 • 소비자 요구와 음식의 다양화-가공식품, 음식의 질,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와 고도화 진행

분야	Driving force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가. 100세 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다.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음식문화 쇠퇴 • 식탁과 생산 현장의 거리 확대에 따른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 물이해 • 농가소득의 양극화 문제: 기업법인과 소규모 농가 갈등, 겸업농과 고령농가와의 역할 분담 • 외국 농어촌 노동자 유입 확대 • 농수산물 생산의 윤리성 확보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 주력 형성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관광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 농촌 다문화 가정 확대 • 귀농수요로 농촌인구 안정화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과학기술	국제	가. 스마트 모바일 기술 나. 나노, 바이오, 유전자 등 생명연장 과학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생산의 실현: 기계의 자동주행으로 규모한계 타파 • 다수확 고품질 작물생산 • 중노동, 고위험 작업에서 해방 • 일하기 쉬운 농업
	국내	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변화 초래 나. 스마트 기기와 SNS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와 실수요자에게 안심과 신뢰 제공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 유연제 근무 확대 등은 귀농수요 증가와 도농 간 물리적 거리 축소
경제산업	국제	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쇠퇴 나. 저성장 시대의 본격화 또는 성장의 종언 라. 중국의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고급소비시장; 중국, 일본 등) • 맞춤형 농업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 식품 시장 확대: 농업의 산업화 •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국내	가.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나. 소득 불균형 확대와 소득 양극화 다. 여성경제활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소비의 양극화 • 농업부문 각종 정부지원의 한계 •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의 수입증가 •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생산구조 변화 •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 세계 식량이나 사료, 에너지, 비료 자원 등의 수요 증가 • 세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음식 관련 시장 규모 확대, 한식관심 • 대형 식품 기업은 글로벌 상품 등의 판매 강화
생태환경	국제	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녹색문명으로의 전환 나. 자원고갈의 가속화와 자원확보경쟁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및 곡물 가격 지속 성장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농업) 등 확산 • 농수산물 해외의존도 심화
	국내	가. 잊혀진 계절: 기후변화 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난·재해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해 증가 및 농산물의 생산 구조 변화 • 국제 곡물가와 비료가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

분야	Driving force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 • 신종질병의 창궐로 AI등 방역대책의 일상화 • 호우 증가에 따른 토사 재해 등 발생 증가
정치	국제	가. 동아시아지역의 패권 다툼 확대: 미국과 중국의 각축 나. 비전통 안보의제의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의 대두 • 농어업 인구의 정치 영향력 약화 •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 한중일 FTA등 국제 무역: 농업발전
	국내	가.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시민들이 정치·행정 과정의 참여증대 나. 북한 문제의 국내화·내부화 다. 안전·불안 요인의 증가	

위의 표를 재정리하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한국사회가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농업·농촌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도시보다 먼저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력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고령 친화적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시대로 인한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또한 안전과 편의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저성장 시대의 경제, 사회적 가치 재정립 필요³³⁾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어 농업·농촌계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경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1%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세기에만 예외적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았다. 21세기에는 다시 2% 이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수에 의한 자본 집중화, 인구 증가를 하락³⁴⁾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규모화와 전문화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정책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소득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했고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장주도 정책은 단기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의 분배 불균형,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 유효수요 감소, 사회·정치의 불안정성 증가, 자연자원의 수탈적 이용 등 부작용이 심화된다. 따라서 부(GDP) 이외의 다른 경제·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³⁵⁾.

33) 김병률 외. 2017.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연구 내용의 일부 인용

34) 토마피케티(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35) 정의의 제1원칙-평등의 원칙; 정의의 제2원칙(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차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절차적 정의, 원초적 입장(최초의 상황);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형식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도 성장 중심의 규모화와 전문화만을 강조하는 대신 소득의 양극화, 세대간 갈등, 지역간 불균형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3)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준비 필요

세계경제는 금융위기(2008년) 이후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³⁶⁾’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은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세계경제의 변동에 저항력이 높고 식품수요의 다변화 및 증대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및 창농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미래학자들은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 이후 물질과 지식정보의 과잉을 넘어서, 이성보다는 감성, 물질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감성사회(Dream Society)’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산업이 되어왔으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이후 전개될 ‘감성사회’에서는 농업의 성장산업화 잠재력이 주목된다. 의식주 문화는 물론, 여가생활에서도 감동, 느낌, 스토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농업·농촌은 감성과 가치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과 속도보다는 여유를 중요시하는 슬로우 라이프 실현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신농업(New Agriculture)의 도래와 농업·농촌 부문의 4차 산업혁명

농업은 기존 농산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배양육, 해수 농업 등 새로운 생산영역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애그로 연료(agro-fuel), 미세조류 등을 이용한 엘지(algae) 등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거나 세포공학을 이용하여 기존 축산 과정을 넘어 배양육 등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빅데이터, IoT, AI, 바이오, 플랫폼 기반 등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 경제, 사회 행동과 결합되어 일어나고 있는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직업종사자 다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업무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인공지능이나 자동화와 같은 기술이 자신의 모든 업무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첨단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 자료에서 현재 농림어업관련 종사자들의 52.3%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체 분야 평균 44.7%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농업·농촌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영국 BBC는 자동화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직업별로 보여주는 뉴스 서비스를 2015년 9월부터 시작했다. 영국 국민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향후 기술 진보가 자신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데 얼마나 위협을 가하는 수위인지, 동일 직종의

초점을 맞춰야 함.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NcZD&articleno=122

36) 뉴노멀: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 부채 증가 등이 지배적인 경제 질서

노동자 규모와 평균 임금을 알아볼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가장 큰 직종은 텔레마케터로 나타났다. 영국 내에서 연간 1만 9,768파운드의 소득을 얻는 텔레마케터의 채용 규모는 4만 3,000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텔레마케터 직종이 사라질 가능성은 무려 99%라고 한다. 이 밖에도 첨단기술로 대체될 위험성이 90%가 넘어서는 직업은 총 51개에 달한다. 또한, 앞으로 20년 이내에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가능성이 큰 직종 15개 군의 채용 규모는 152만 7,000명에 달한다. 특히, 조만간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일자리는 단순 사무직에 포함되어 기존의 육체노동이 자동화로 사라질 것이란 통념을 무색케 한다. <표 1-5>가 보여주듯이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인간노동력 수요의 감소는 육체노동을 넘어서 사무직으로까지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15년 6월, 호주의 호주경제발전위원회(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가 발표한 ‘기술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에 호주 노동자 500만 명, 노동인구의 40%가 자동화 기술의 확산에 따라 해고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술 진화에 밀려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는 육체노동을 넘어서 사무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알려준다. 특히, 미래에 사라질 일자리 가운데 지역공무원이 96.8%에 달하는 것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농업부문의 일자리 역시 상당부분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4> 인공지능이 농업부문의 일자리 영향 정도

순위	직업	위험성
25	Fishing or agricultural manual worker	95.4%
33	Public services associate professional	94.5%
37	Retail and sales worker (other)	94.4%
54	Human resources administrative worker	89.7%
67	Farm worker	86.5%
74	Fishmonger or poultry dresser	84.6%
92	Forestry worker	80.5%
96	Agricultural machinery driver	79.4%
97	Agriculture or fishing professional	79.2%
108	Farmer	75.8%
116	Marine and waterways transport operative	72.2%
204	Na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ve worker	38.8%
254	Public relations professional	17.5%
308	Manager in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4.7%
308	Manager in forestry, fishing or related services	4.7%

출처: BBC. 2017. Will a robot take your job?.

그렇지만 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현대 농업은 ICT·BT·ET·NT와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 기술은 농업을 첨단화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생산비 증가, 수요 다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스마트팜 확산, 유통혁신, 바이오 식의약품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³⁷⁾

최근에 영국의 블랙시트, 미국 트럼프 정부의 탄생, 유럽 정치계의 극우화 바람 등 글로벌화에 대한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왔다. FTA,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을 형성하는 등 전 지구적 시장경제의 출현이 있었다.

글로벌화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값싼 수입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6)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치 증대도 예상³⁸⁾

세계화, 기술의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여가와 문화에 대한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향토문화 자원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역할이 식료품 생산 및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너지 연료 생산 기능,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 소비패턴도 변화함으로써 농업·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회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환경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농촌다움을 지닌 농촌에 대한 신수요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7) 새로운 가치지향 사회 도래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또는 식품 안전성 중시 확대

미래에는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문화 등에 대한 국민의식이 증대하여 삶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 세계화, 기술 발전,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여가활동이 개인의 삶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생산활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감성·가치·여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단기적인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휴양 공간이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어메니티, 식품 안전성, 맛과 영양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은 여유와 낭만적 요소를 보유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

농업·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푸드 확산 및 다각적인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와 접목된 농업·농촌에

37) 이 내용은 이용선 외(2016)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 및 보완하였다.

38) 이 내용은 이용선 외(2016)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 및 보완하였다.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이웃과 사회를 고려한 소비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동물복지, 공정무역, 저탄소 푸드마일리지, 로컬푸드, 슬로푸드 등의 운동은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로 연결될 전망이다(이용선 외, 2016).

2) 미래수요와 농식품부의 역할

(1)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감소 지속

다수의 FTA 이행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가격경쟁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016년 전체 농축산물 수입(241억 달러)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약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수입농식품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국내 식량자급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2015년 식량자급률은 24%에 불과). 이러한 수입증가는 실질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 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재 등 경영비 상승으로 실질 농업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축소가 전망되고 있다.

<표 2-5> 농업·농촌 경제·사회 전망

	1996	2006	2016 (추정)	전망			'26/'16
				2017	2021	2026	
농업생산액(십억 원)	28,643	35,232	42,937	43,277	44,475	48,886	1.3
재배업(십억 원)	21,709	23,556	24,673	24,342	24,496	25,060	0.2
축산업(십억 원)	6,934	11,676	18,264	18,935	19,978	23,826	2.7
농가인구(만 명)	469	330	252	247	226	203	-2.2
농가호수(만 호)	148	125	107	106	101	96	-1.1
농가소득(천 원)	23,298	32,303	38,113	38,311	40,300	41,948	1.0
농업소득(천 원)	10,837	12,092	10,959	11,156	11,301	11,908	0.8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18.2	30.8	39.3	40.2	44.1	49.3	1.0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10.3	6.8	4.9	4.8	4.3	3.8	-0.1

자료: 농업전망 2017, 자료 재정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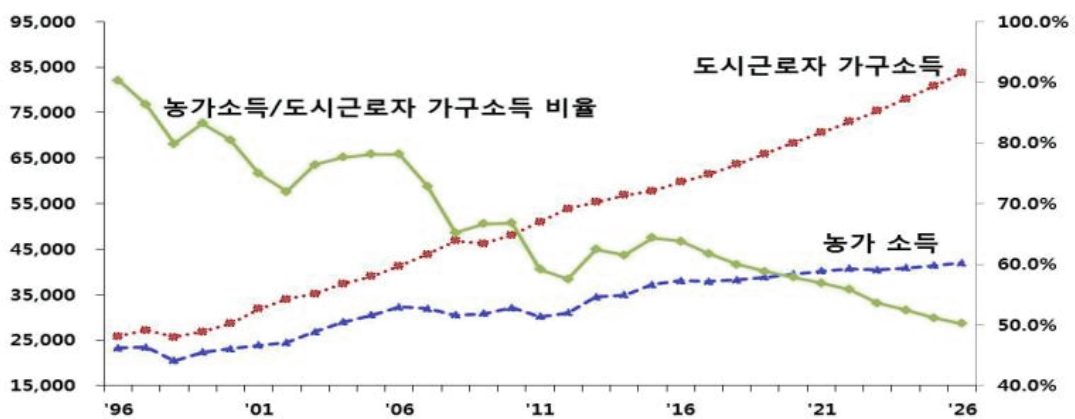
(2) 공동화·고령화 심화로 농촌 경제 활력 저하와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 추세 전망

농업·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력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농가인구는 2016년 252만 명에서 2026년 203만 명으로 감소(연간 -2.2%), 농가 호수는 107만 호에서 2026년 96만 호로 감소(연간 -1.1%)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면’ 지역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 경 농촌 인구는 909만 명 선으로 감소할 것이고 인구 공동화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은 농촌에 대한 인식, 저성장 기조 및 농촌 정책, 농촌 정주체계, 귀농·귀촌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및 6차산업, 기술 발전 등에 의해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31.8%였던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016년 39.3%로 증가해 빠른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후 농촌 고령자 비율은 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심화는 농업기술과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그룹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충과 맞춤형 농정 추진이 요구된다. 반면, 고령 친화적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시대로 인한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안전과 편의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성장 효과는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귀농·귀촌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귀농귀촌 가구는 가구주가 단독 이주하는 경향이 높다. 평균 동반 가구원 수는 2015년 기준 귀촌가구는 0.47명이고, 귀농가구는 0.64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살펴보면, 1인 귀농 가구 비율은 2013에 59.5%이던 것이 2015년에는 61.0%로 상승했으며, 1인 귀촌 가구 비율은 2013년 69.3%에서 2015년 68.0로 약간 하락했다.



<그림 2-16>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율

자료: 농업전망 2017. p31 인용.

(3) 도농 소득 격차 심화 전망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보다 느리게 성장하여 2016년 60%대 수준에서 2026년 50.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농촌 인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 또한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정과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의 심화는 농업의 생산성을 낮추어 인류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식량원을 확보하는데 장애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잦은 기상이변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등에 따라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가 빠르게 변모함과 동시에 국민소득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친환경 웰빙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곡물 생산량 감소 및 채소류 품질 저하 등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 생물다양성 변화, 수자원 변화 등 농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산물 주산지 이동 또는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남부지방에서는 아열대 작물(구아바, 아보카도, 아페모야, 망고, 용과, 파파야 등) 등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 등이 부상할 것이다. 지구 환경 악화에 따라 미래농업은 자연 순환 기능, 환경보전, 지역자원관리 역할 등이 중요시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과 동식물 질병 등 각종 위협요인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물공장 육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이며 관련 전후방산업 성장 및 농업고도화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농업·농촌에 대해 국민들은 가치는 인정하나 지원에 대한 의지는 중간 정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의식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등에 관련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세부담에 찬성하는 의향이 2016년 국민의식 조사에서 54.6%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농업·농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연령층은 16%대로 낮은 수준이며 농업·농촌이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다. 도시 출신의 사람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인식 수준이 농촌 출신에 비해 낮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우호적인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표 2-6> 미래 농촌수요와 농식품부의 역할

수요	농식품부의 역할	현 농업기능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고급소비시장; 중국, 일본 등) •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의 수입증가 • FTA, DDA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생산구조 변화 • 음식 관련 시장 규모 확대, 한식관심 • 대형 식품 기업은 글로벌 상품 등의 판매 강화 • 농수산 해외의존도 심화 • 온실 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억제 • 식량안보의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의 확대 • 폐기물 농업 자재의 재활용 • 실질적인 온실 가스의 배출 삭감 기술 개발 • 식품 관련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축 • 식품 로스 삭감 및 식품 재활용 • 식량 안보의 확립 • 식량 안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전예방책 미흡 •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 등의 수출 촉진의 저해 요인 제거 •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 계획 필요 	국제농업 통상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다수확 고품질 작물생산 • 중노동, 고위험 작업에서 해방 • 일하기 쉬운 농업 • 소비자와 실수요자에게 안심과 신뢰 제공 • 맞춤형 농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우주 농업,원격탐사 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생산의 실현: 기계의 자동주행으로 규모한계 타파 •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극 도입하여 누구나 농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 • 신기술의 농기계분야에 적용하여 농기계 분야 육성 및 경쟁력 제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생산성 제고 	농림연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제 근무 확대 등은 귀농수요 증가와 도농 간 물리적 거리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구조 조정 	농림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 생산의 윤리성 확보 •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고급소비시장; 중국, 일본 등) • 농수산 소비의 양극화 •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 생산 비용 절감, 안정적 농산물 생산, 고품질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품종 개발 • 가공·업무용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국내 농업 생산이 대응력 미흡 •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에 대응 한 생산·공급 체제 구축 	농산물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자재의 안전 확보 • 식품의 안전성 향상, 농업의 체질 강화, 환경 대책 등의 기술적 지원 	농산물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 농업의 결합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력 양성 •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생산비용 적용 • 식량 자급률 확대 	농업·농촌 정보화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과학농업·농촌 기술지원농업경영· 기술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곡물가와 비료가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 • 세계 식량이나 사료, 에너지, 비료 자원 등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농업) 등 확산 • 농수산 해외의존도 심화 • 호우 증가에 따른 토사 재해 등 발생 증가 • 농업부문 각종 정부지원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집적·집약화 등에 의한 농업의 구조 개혁 •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통한 국내외 수요 • 농업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은 그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 • 보조금 지원 	농업정책

수요	농식품부의 역할	현 농업기능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생산기반 붕괴: 농민 고령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농지 황폐화 등 • 농가소득의 양극화 문제: 기업법인과 소규모 농가 갈등, 겸업농과 고령농과의 역할 분담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 외국 농어촌 노동자 유입 확대 • 청장년 전업농 주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귀촌의 적극 지원 • 농촌경제 활성화 • 농가소득 증대 • 인공지능, 로봇의 적극 도입 • 농촌 다문화 정책 추진 • 과학기술과 결합된 농업인 육성 	<p>농촌개발·복지증진 농업인력양성 지역농업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 붕괴, 농업 기술 및 자원 전승의 어려움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농촌관광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 농어촌 여가활동에 따른 연관산업과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진흥·활성화 • 농촌에서 지역 자원의 보존·계승 • 농지·농업용수 등 보전 활동 •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 수요의 개척 • 젊은 후계자의 확보 • 매력 있는 농촌 만들기 •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기술개발 • 경제·사회적 가치 높이는 정책 필요 	<p>농촌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및 곡물 가격 지속 성장 •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수입의 안정적 확보 • 개인 농업의 육성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해예측 서비스 제공 	<p>식량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질병의 창궐로 AI등 방역대책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질병에 대응한 방역기능의 확대 • 진염성 질병과 식물 병해충의 각종 물가 대책 • 검역과 함께 방역기능 확대 • 동식물 검역 수협 방법·체제 구축 	<p>농림축산검역 식물검역축산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식품시장 감소: 1인당 식량 소비량 감소 • 1인 식품과 관련 음식 시장 증가 • 소비자 요구와 음식의 다양화-가공식품, 음식의 질,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와 고도화 진행 • 전통 음식문화 쇠퇴 • 식품 시장 확대 •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생산물의 질 제고 • 맞춤형 소비자 식품 개발 • 농업의 산업화 • 식품산업 수출 진흥정책 제고 	<p>식품산업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해 증가 • 다수확 고품질 작물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종자 보급 •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 농촌 재해 보험 확대 	<p>종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기술 개발 • 농업 분야의 행정 데이터의 오픈화 • 농지 정보의 전자지도 및 기준 제정 • 표준화를 통한 개별 시스템의 통합·발전·데이터 교환 표준 통신 규격 등의 표준화 	<p>농업기술연구·개발</p>

수요	농식품부의 역할	현 농업기능 분류체계
	<p>농사 자재, 사료, 농산물 등의 공통 코딩을 위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데이터와 노하우의 취급 규칙화에 의한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규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기술·노하우의 수출, ICT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사업, 로봇 기술을 활용한 사업 등) • 농업 생산의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 계열 연구 기관과 ICT 기업과의 연계 체제 구축, 로봇 기술의 안전 확보 • 로봇 기술의 위험 평가 방법의 확립 • 모델 검증 등을 통한 안전 지침의 순차적 개발 • 기술 개량 후의 잔존 위험에 관한 보험 등의 도입 	

제3절 농업·농촌 분야 SWOT 분석³⁹⁾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제의 무한경쟁시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과소화,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의 경제로 인한 성장 둔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준비, 융복합기술시대를 맞은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기대, 시대에 맞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지향 등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 변화는 농업·농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 강점 요인

1) 농업부문

농업부문의 강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직불제 등의 정부 지원 정책도 뒷받침되고 있다. 셋째, 또한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이며, ICT와 BT의 융복합 등 기술 혁신과 4차 산업 혁명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농촌부문

농촌의 강점은 식량 공급, 생태계 보전,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3) 식품부문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높은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별 고유 특산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9) 이용선 외(2016) 연구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내용은 추가 보완하였다.

2. 약점 요인

1) 농업부문

영세소농구조, 경지면적 협소, 높은 생산비용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기계화에 제약되어 있으며, 식량자급률도 낮은 편이다. 중간조직의 역할 또한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다.

2) 농촌부문

농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농가소득 침체, 농촌인구 감소, 정보 미흡 등이 약점이다.

3) 식품부문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낮은 안전관리 수준, 식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 원료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식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은 약점으로 존재한다.

3. 기회 요인

1) 농업부문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략작목을 육성한다면,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규모화·조직화·전문화된 경영체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촌부문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서비스 등의 복지 증진을 통해 생활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6차 산업화, 관광·체험·휴양시설 등을 확대하여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촌 자원 및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의 주체적 의식과 가치관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작용한다.

3) 식품부문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건강을 고려한 소비 패턴 변화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통 식품·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4. 위협 요인

1) 농업부문

고령화, 보조·지원 정책과 성과 간의 괴리, 기후변화, 식량자급률 저하, 가격경쟁력 약화, 농업비중 및 인력 감소, 연구개발사업의 민간참여 부족 등은 농업부문의 발전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농촌부문

고령화, 다문화 시대 도래,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계층 간 소득격차, 지역 간 불균형 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식품부문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식품 수입 증가, 외국 대형 외식업체의 국내 진출, 식생활 패턴 서구화, 국제곡물 가격 급등, 경기부진, 생산비 증가 등은 업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7> 농업·농촌·식품 분야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조건 - 지속적인 기술혁신 - 높은 농업기술 수준 - 친환경농업 육성과 다원적 가치 증대 - 직불제 등 정부지원 정책 확대 - ICT·BT 융복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 낮음 - 영세소농구조 - 경지면적 협소 - 높은 생산비용 - 기계화 제약 - 낮은 식량자급률 - 중간조직의 역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 품질경쟁력 및 수출진략작목 확보 - 첨단기술 개발 - 규모화·조직화·전문화된 경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 보조·지원 vs 성과 간의 괴리 - 기후변화 - 식량안보 - 시장개방, 가격경쟁력 약화 - 농업 비중 및 인력 감소 - 연구개발사업 간 중복 및 민간참여 부족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보전 -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국민 여가공간 -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 식량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복지수준(의료·보육·교통 등) - 부채, 연금, 세금 문제 - 정보 미흡 - 농가소득 침체 - 농촌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화, 농촌관광 활성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관광·체험·휴양시설 확대 - 주거환경 개선 - 테마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고령화 - 다문화시대 도래 -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 계층 간 소득격차 - 지역 간 불균형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일자리 창출 - 주체적 의식·가치관 변화 - 지역발전 역량 강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세 - 높은 잠재가능성 -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고용창출 효과 - 지역별 고유 특산물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 부족 -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양극화 - 식품행정체계, 안전관리 수준 낮음 - 식품산업 인프라 미비(R&D, 통계, 제도 등) - 높은 식재료 해외 의존도 - 원료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시장 확대 - 전통식품·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 식품안전성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와 수요 증대 - 건강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도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식품 수입 증가 - 외국 대형외식업체 국내 진출 (외국계 브랜드 시장 잠식 심화) - 식생활 패턴 서구화 -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경쟁심화 - 국제곡물가격 급등 및 GMO 증가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 경기부진, 생산비 증가 등 업계부담 가중

자료: 이용선 외(2016)에서 인용.

제4절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과 목표 재정립

1.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Vision)과 시대정신

1) 시대정신

1995년 삼성의 이진희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정부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각종 위기의 상시화에서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공급 능력과 행정업무의 질적 발전 속도는 양적 증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문명사적 전환으로 기존의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래 환경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정부 ‘모델’을 요구한다. 이미 산업사회에 최적화된 정부와 관료제 모델은 정보화 시대에 폐기했어야 했다.

이러한 위기를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는 이제 우리 국가의 명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국민과 국가가 협력하여 산업시대의 정부모델을 폐기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정운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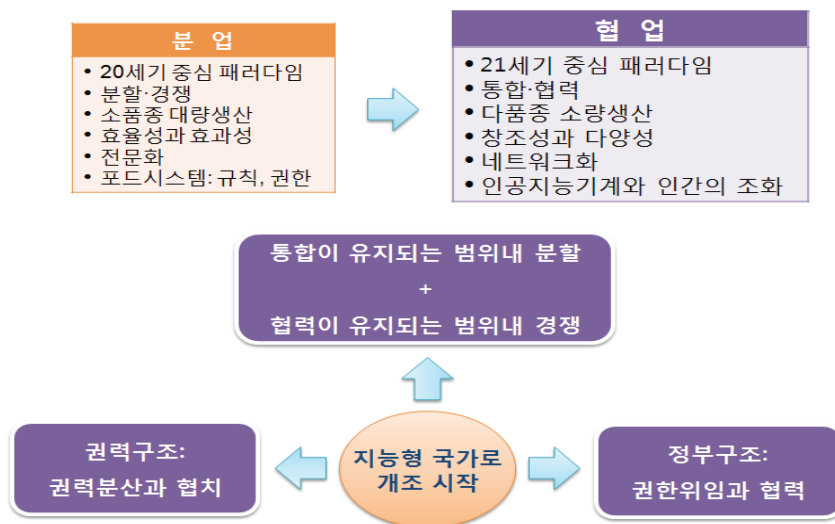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의 핵심은 분업에서 협업으로 국가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업으로의 전환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할·경쟁이 통합·협력으로 바뀌는 등 인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인공지능의 개발로 상상 이상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분업화되기 전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중앙이나 지방으로 구분한 것은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기술의 혁신으로 미래정부에서는 원래의 정부인 하나의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직이 융합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측면에서 하나의 정부라면 시민 측면에서는 나만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중의 한 시민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미래의 정부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완성인 나만의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개별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미래정부는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 인력과 최신 기술과의 융합을 이끌어 내고 모든 것을 종합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지능(Intelligence)정부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는 전통적

성공요인과 사고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지능형 국가로의 개조 및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구조는 권한의 집중, 부처 이기심 등에서 권한위임과 협력의 형태로, 권력구조는 권력분산과 협치로 개조를 해야 할 것이다. 즉, 통합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분할을 진행하고, 협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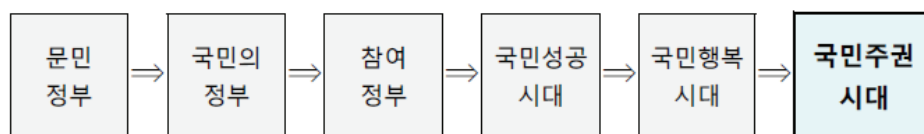
<그림 2-17> 국가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2) 새로운 정부 출범의 의의

문재인정부는 정부출범 이후 인수위원회를 대신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새 정부의 새로운 시대 규정으로 ‘국민의 시대’ 개막을 선언하였다.

① 국민의 시대 개막

동 계획에서는 우선,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하였으며,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의미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그림 2-18>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

*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쪽.

② 새로운 국민의 등장 :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

다음으로, 동 계획에서는 ‘국민의 시대’에서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적 국민은 집합적 의미의 국민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하였으나, 주권자 국민은 대표되는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의 국민주권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고 설명하고 있다.

③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한편, 동 계획에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권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고 설명하고 있다.

<표 2-8> 국가 중심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 민주주의의 특성 구분

구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8쪽.

(3) 문재인정부의 과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중요 과제로 정의(justice)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하는 것,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①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justice)로서,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

는 국정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며, 이러한 국가 개혁의 양대 과제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구는 것(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특권 정치를 철폐하여, 국민의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와 합의의 정치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③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

그리고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사회불평등의 증대, 불공정 경제 구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것(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 역시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추진을 통해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비전(Vision)과 전략목표

(1)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면한 최근의 상황변화와 대응과제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력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농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대내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영향도 감소, 농촌의 공동화·농촌인구의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정 및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 증가 등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외적 환경변화로는 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성장의 가속화,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증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新)농업시대 도래,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성 중시 경향 등에 직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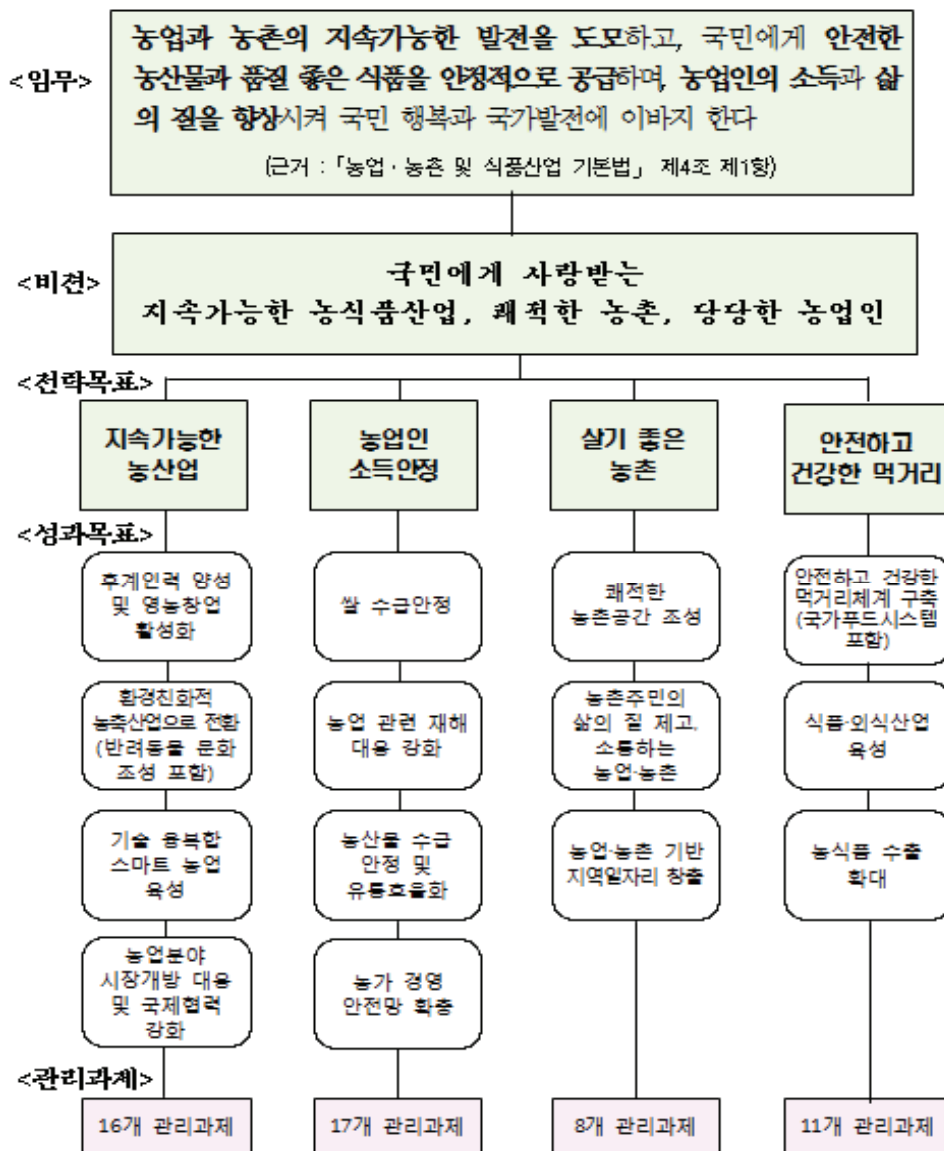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및 행정적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즉,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 차원의 정책 및 행정적 대응역량의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농업환경보전·식품안전·식량자원 확보·농촌지역 개발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ICT·BT·ET·NT와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ICT 및 과학기술 활용한 농업의 첨단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창출해야 한다. 즉, 스마트팜 확산, 유통혁신, 바이오 식의약

품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 기술의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 여가와 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 경쟁과 속도 보다는 감성·가치·여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하여 부(GDP) 이외의 다른 경제·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산림 자원화와 환경보존,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정부 역할의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새 정부의 분권화 추진 기조에 발맞추어 부처,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기반의 미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7월 부 차원에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19>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a(2017). 성과관리 계획 자료(내부자료).

우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조직의 미션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쾌적한 농촌, 당당한 농업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2-19>와 같이 i) 지속가능한 농산업, ii) 농업인 소득안정, iii) 살기 좋은 농촌,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1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⁴⁰⁾

2.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재설계를 위한 세부목표⁴¹⁾

1)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간 연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부 차원에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롭게 설정한 조직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 및 전략목표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과제의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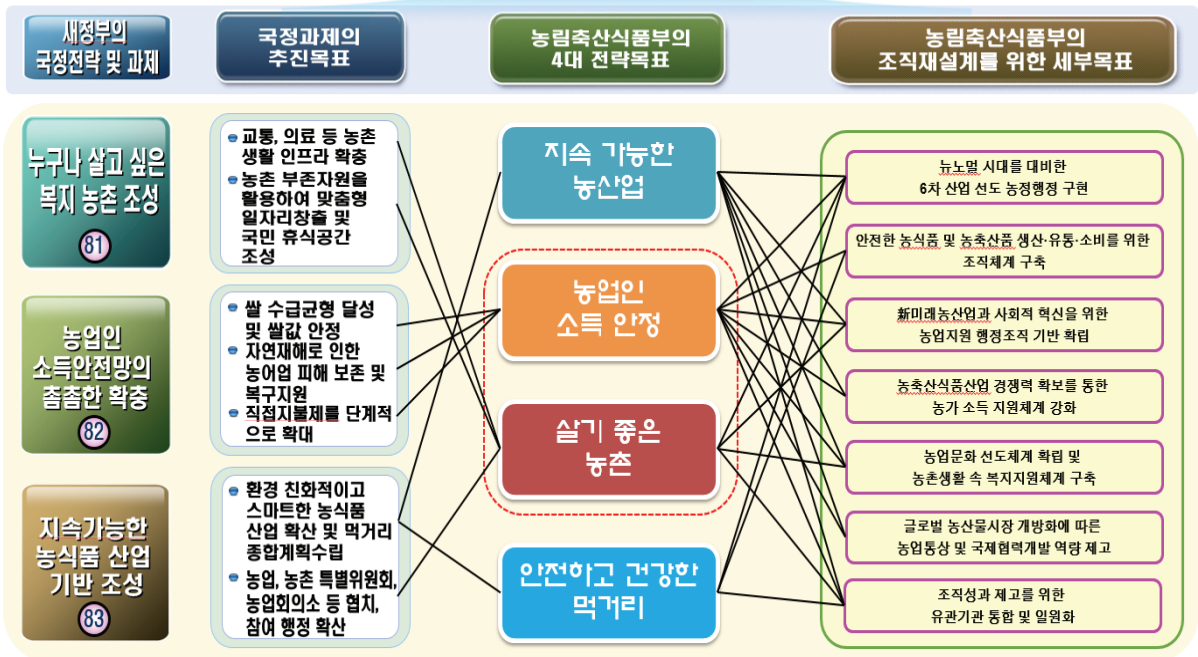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개 과제(81번, 82번, 83번 과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성을 가진 과제였으며, 이들 3개 과제의 추진목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4대 정책목표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4대 정책목표 중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iii) 살기 좋은 농촌과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4대 정책목표 중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0)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i) 소득증대로 농가경제 안정화, ii) 활력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 iii)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iv) 안정적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v) 식량안보 기반 구축이라는 5대 전략 목표와 13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다.

41)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제5장 조직 재설계 방향에 기술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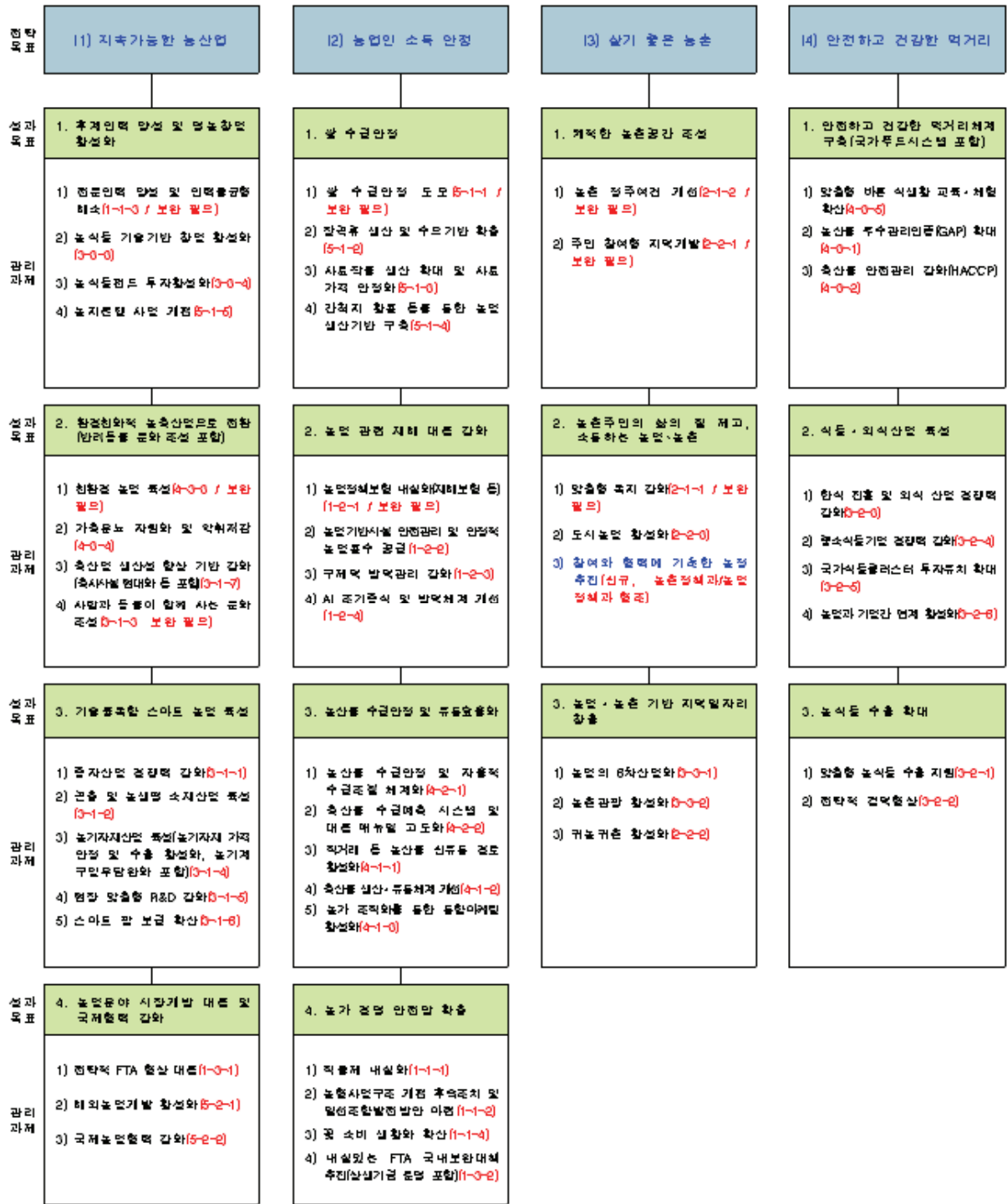
새로운 비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쾌적한 농촌, 당당한 농업인



<그림 2-20>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간 연계성

또한, 4대 정책목표와 함께 14개의 성과목표와 세부 관리과제 내용들을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관련된 목표의 경우 ①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반려동물 문화 조성 포함), ③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은 상호 연계성이 있으나, ④ 농업분야 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관련된 목표의 경우 ① 쌀 수급안정, ② 농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 ④ 농가 경영안정확충에 관한 내용들은 상호 연계성이 있으나, ③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iii) 살기 좋은 농촌과 관련된 목표의 경우 ①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②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소통하는 농업·농촌, ③ 농업·농촌 기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목표의 경우 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국가푸드시스템 포함)에 관한 내용은 상호 연계성이 있으나, ②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③ 농식품 수출확대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1>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7). 성과관리 계획 자료(내부자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관련된 목표 중 ④ 농업분야 시장 개방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관련된 목표 중 ③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목표 중 ②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③ 농식품 수출 확대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앞으로 부 차원에서 농식품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수출 확대, 관련

외식 산업의 육성, 그리고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설정한 조직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도는 현재 중심의 정책은 잘 반영되어 있으나, 미래지향성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중심의 정책기능(농업인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은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능(지속가능한 농산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을 확대해 나가는 조직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조직재설계를 위한 세부 방향 도출

앞서 이야기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조직 운영 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팀은 조직의 재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1) 농업의 지능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약자인 ICBM의 기술들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로봇처럼 인간 노동력에 더하여 지능과 지혜까지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농업분야에도 영향력을 끼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하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 구글의 무인자동차, 딥마인드의 알파고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의 기능화를 이끌고 앞으로 현실화 있을 정도로 발달해 왔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인공지능 기술은 농업처럼 기술적 난제가 오랫동안 쌓여있는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적 접근방안과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으로 AI발달을 통해 많은 직업 등이 사라지거나 전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이주량⁴², 2017: 1-3).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AI)관련 새로운 조직 및 기능이 필요하고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업의 효율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반적 농업 과정의 자동화보다는 농부의 작업이나 판단을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기술의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해내는 혁신과정의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농업의 디지털화와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이 빠르게 진보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업의 변화는 데이터기반 농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데이터 기반 농업에서는 농부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의해 판단했던 과정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언제 얼마만큼의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한 예측

42) 이주량. (2017).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제200호. 2017.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을 데이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반적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장필성, 2017⁴³): 4-5).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한 농업 효율화 증진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기술 등 기술과 농업 융합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3) 농업의 과학화

네덜란드 국토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9%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농업수출은 한국의 25배이며,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농업과 ICT가 접목하여 질 좋은 젓소를 생산해내고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화학이 결합하여 농산물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원자력과 결합하여 유전공학으로 발전되었다. 지질학은 우수한 씨앗 개발에 기여했으며 기후학은 농업생산물 보관 및 재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농업과 과학은 만남은 미래의 이야기기가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윤종록, 2017⁴⁴): 18).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기술은 작물이나 동물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토양, 작물, 환경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농장의 정보를 축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농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로봇, 드론 기술은 무인 트랙터 등 운영이 가능해진다(장필성, 2017: 7). 이러한 농업의 과학화로 인해 과학기술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농업의 안전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에 많은 예산과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련 백신 접종의 효능과 정부 방역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백신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며 차단방역과 철저한 방역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백신 접종 실시 초기에 비해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면서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항체 형성율도 더 낮아지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가축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적 투자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육체적 수고까지 폭 넓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축산업은 농업 분야 중에서 가장 기업화·기계화되고 그 변화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고, 가축전염병의 발생도 더 복잡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방역 시스템 단계별 개선점 발굴과 보완책 수립은 쉽 없이 항상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질병 관련 각종 정보와 대책은 즉각적으로 축산업 현장으로 전파되어야하며 빈틈없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한다(우병준, 2015⁴⁵). 따라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신속하며, 적절한 적용과 실

43) 장필성. (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200호. 2017.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4) 윤종록. (2017).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The 포럼 융합 미래산업 발전전략(4차 산업혁명). 2017. 3.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5) 우병준. (2015). '가축전염병 발생과 축산업의 과제'. KREI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L: https://www.krei.re.kr/web/www/3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

천이 가능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5) 사회변화(1인 생활로의 변화, 1인가구 증가, 혼술·혼밥 등)에 선제적 대응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1911만 가구 중 520만 가구로 전체의 1/4을 넘어선 것이다. 1990년에 9.0% 밖에 되지 않았던 1인가구가 2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가구의 표준이었던 4인 가족은 18.8%로 1990년 29.5%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2020년에는 초혼연령 증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으로 1인 가구 비중이 2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 증가로 식품시장에서는 소용량 제품과 가정식대체식품인 HMR(Home Meal Replacement) 등 간편 조리식품의 소비가 크게 늘고, 유통부문에서는 편의점 수요와 인터넷 슈퍼마켓 확대, 대형마트 판매대 구성 변화 등을 이끌고 있다. 농진청이 구축한 소비자 패널 장바구니 데이터를 이용해 6년간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1인가구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 시장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1인가구의 1인당 농식품 지출액(345만 원)은 일반가구보다 2배 이상 높고, 비타민 등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과일(45.7%↑)과 채소(33.1%↑) 구입액이 특히 많다. 최근의 농업 성공 사례를 보면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크기를 줄이면서 더 달고, 외관이 우수하고, 혼자서 1회에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한 것들이 많다. 정리하면 농식품 소비 흐름이 ‘미니’, ‘믹스’, ‘프레시(신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니’는 잘게 썰어 날로 먹을 수 있는 미니오이, 방울양배추, 미니파프리카 등 중소형 채소와 과일의 인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믹스’의 예로는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했던 쌀은 유통 경로가 온라인 등으로 확대됐고, 백미 위주였던 주곡의 비율은 조, 수수, 메밀, 기장, 울무 등 잡곡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프레시’의 예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받는 ‘로켓배송’이 출현하고, 농산물을 당일 생산해 당일 판매하는 ‘로컬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김현옥, 2016⁴⁶); 신정규, 2016⁴⁷).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품종 고품질로의 식품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404564 (접속일: 2017. 4. 30.)

46) 김현옥. (2016). ‘1인 가구 증가로 농식품 소비트렌드’ ‘미니·믹스·프레시’. 농식품 주간동향. 옥답(Okdab) 홈페이지. URL:

<http://www.okdab.com/news/issueTrend/trendView.do?listType=press&issueSeq=2966&searchYear=&searchMonth=&searchKey=&searchValue=¤tPage=1> (접속일: 2017. 4. 30.).

47) 신정규. (2016). ‘1인 가구에 맞는 농업 생산기술과 마케팅 필요’. 식품외식경제. URL: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09> (접속일: 2017. 4. 30.)

제3장 기능진단 및 재설계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기능 분석, 미시기능 분석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거시기능은 앞에서 분석한 외부환경 및 농촌내부 환경 분석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에 설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거시기능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를 키워드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시기능 분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내부 조직기능을 분석하고 기능조정관련 이슈를 도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여 변화된 기조와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기능을 재구성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후,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한 시사점을 함께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미션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개편, 조정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사회는 예측하기 쉽지 않고 그에 맞게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미래 연구들을 종합하고 농업, 농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크게 농업과 농촌에 영향을 줄 외부환경요인으로는 ① 저출산·고령화 사회(인구과소화, 장수시대), ② 저성장 시대의 경제, 사회적 가치 재정립, ③ 불확실성과 뉴노멀 시대, ④ 과학기술 발전(융복합기술시대), ⑤ 글로벌 경제(무한경쟁시대), ⑥ 새로운 가치지향(문화창조시대)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요인이 어떻게 농업과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인구는 장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업과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력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고 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령친화 실버농업이 각광받게 될 것이며 더불어 농업 등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저성장 시대의 경제와 사회적 가치 재정립과 관련해서 소득의 양극화, 세대·지역간 갈등, 지역간 불균형 발전,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는 점점 감성적으로 변화하고 여가생활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융복합기술시대에는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가 확대되고 기계화 및 자동화 등으로 정밀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우주농업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마트 팜, 농업용 로봇 사용화가 진행 될 것이다. 농산물 상품화와 유통체계에도 큰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복지서비스도 기술발전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의 농촌과 농업은 시장질서의 국제규범이 재편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의 증가, 수출시장이 확대되어 보다 무한경쟁시대이자 글로벌 시대에서 농업과 농촌이 생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도래하면 식품안전, 맛, 영양 등 질적인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의 질이 제고되어 농촌에서의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부터 증가해온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러한 농업, 농촌에서의 외부환경 변화와 영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농업·농촌 분야 외부환경 변화와 영향

외부환경 변화	농업·농촌 영향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과소화·장수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력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저성장 시대의 경제, 사회적 가치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양극화 - 세대간 갈등 - 지역간 불균형 -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
불확실성과 뉴노멀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사회 - 여가생활 확대 - 농촌관광 활성화
과학기술 발전 (융복합기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 스마트 팜, 농업용 로봇 상용화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농촌 관광 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자료: 이용선 외(2016), 김정호 외(2010), 충청남도(2014)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제1절 미시기능 분석

1.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방향 및 핵심기능

먼저 거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은 법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다.¹⁾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당시 새로운 정부의 농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20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발전계획에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새로운 농정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정목적은 과거에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으며 농정의 대상에 있어서는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설정했다. 정책내용에 있어서도 개별 분산적 접근이 아니라 생산과 융복합한 6차 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언급하였다. 접근방법역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된 방법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방·주민참여 및 책임제의 방법을 언급하였다.²⁾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 정리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목적	효율성·경쟁력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 동시 추구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심
정책내용	농업·식품의 개별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복합한 6차 산업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방·주민참여 및 책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devplan/>

이러한 큰 방향을 설정을 토대로 새로운 농정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크게 기본 방향은 기술개발 및 ICT·BT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경쟁력·소득·복지 등 3대 핵심 축을 기초로 통합적 배려농정을 추진하고자 방향을 설정했다.

1) 법제처.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http://korea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C%99%80%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undefined>(2017. 6. 15)

2)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devplan/>

<표 3-3> 새로운 농정의 기본방향

구 분		과거 농정	새로운 농정의 방향
농정	농업정책	생산성·편의성 향상	ICT·BT융합 창조농업 및 6차산업화
	소득정책	규모화·전업농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복지정책	일률적 지원	주민체감형 지원
	소비·유통	직접적 개입	자율·합의 중심
스마트농정	결정방식	계층별 획일적 정책	쌍방향 맞춤형 정책
	농정수준	중앙정부 중심	지방·공동체 중심
내부관리시스템		효율 농정	행복 농정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devplan/>

새로운 패러다임과 농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분권화되고 생산, 능률 중심이 아닌 맞춤형, 행복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을 토대로 획일적인 농정이 아닌 종사자 중심, 자율적인 농정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시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4>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목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기반 확충 -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경영여건 개선 -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 에너지 플러스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맞춤형 농정 강화 - 지방농정 강화 - 농정 거버넌스 구축 - 글로벌 협력 강화 -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수립된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거시기능 차원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성과관리 계획 자료와 연도별 업무계획 자료의 세부목표와 대칭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사업이 많이 부과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적게 부과된 목표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할 것이다.

<표 3-5> 전략방향(목표)별 관련 년도별 업무계획 목표(또는 사업)

발전계획 목표	구분	연도별 세부 목표(성과관리 & 업무계획)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 식량안보 기반 구축 ●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식품산업 선진화 및 유통구조개선
	업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안전·편의 농식품 선호 등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식품 공급·유통체계 구축<2014년> △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2017년>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업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개방화 대응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2014년> △ 1차형 산업구조를 6차형 구조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확대<2015년> △ ICT기반 첨단화 및 주산지중심 생산·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2015년> △ FTA 활용 및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 77억불 달성<2015년> △ ICT 융복합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시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2016년> △ 농산물 제조·가공을 활성화 하고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2016년> △ 新유통경로를 확대하고 전략품목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2016년>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증대로 농가경제 안정화
	업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및 고령화 심화 대비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및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2014년> △ 농고·농대 현장인력 육성 강화 및 농업분야 인력 20만명 증개<2015년> △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마련<2017년> △ 청탁금지법 피해최소화 소비촉진 방안,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2017년> △ 스마트 온실 4천ha, 축사 730호 보급<2017년>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력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
	업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2015년>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2016년>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성과 관리	
	업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2016년> △ 연관산업 포함,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2017년> △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 유치<2017년> △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2017년> △ 농촌공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맑은물 푸른농촌’ 사업 80개소 추진<2017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a.(2014).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b.(2014).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2015).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년도 정부성과계획 평가; 농림축산식품부b.(2017). “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보도자료. 자료 재구성

2. 발전계획 목표별 기능진단

앞에서 살펴본 전략방향과 핵심기능을 분석하여 각 추진체계 목표에 대한 기능진단을 하겠다. 이 5가지는 2013년 발전계획의 목표들이며 거시기능으로 설정된 항목들이다.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013년 발전계획 보고서에서 추진과제로 제시한 5가지 과제중 그 기능이 누락된 것을 먼저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친환경 축산, 그리고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에 대한 사업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환경부와 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협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농식품 공급체계에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식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한’이라는 단어에는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다른 5개 발전계획 목표보다 많은 업무계획이 수행되었듯이 최근 몇 년간 중점 기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 등 6차산업화에 대한 대응이 중점을 이뤘다. 부족했던 기능으로는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과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기능은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분명히 진행되어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전체적으로 관련 기능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에 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복지적인 측면과 함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는 크게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I 등 재해에 대응하는데 많은 역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기능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험에 있어 사전적 대응,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농업 기능은 거시적 차원에서 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에너지 부분은 산업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요구되는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이 기능역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기능에 비해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2015년 2016년에 진행되었던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이 전부였으며 기타 다른 거시적 기능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거시적 기능은 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이 기능은 거시적 차원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6년, 2017년에 진행되었

던 업무계획의 내용도 애초에 수립했던 목표와 약간 빗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립했던 추진과제로는 쌍방향 맞춤형농정 강화, 지방농정 강화, 농정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이었지만 진행된 사업은 관광객 유치,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그리고 농촌공간 디자인관련 사업이었다. 진행된 사업은 거시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사업 수준이었으며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이라는 기능과도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진행해야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 인재양성처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⑥ 시사점

전체적으로 2013년에 수립된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세부목표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각 거시기능이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기능이 한쪽에 많이 쏠린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적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농촌은 자연환경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 대응이 시급하고 그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농촌분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융합되고 섞이고 있어 협동 및 협업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이 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는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다른 중앙부처, 보건, 경제, 환경 등의 분야와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협업은 향후에 분명히 필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거시적 기능을 수립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상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 기능진단과 시사점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표 3-6> 발전계획(목표) 별 기능 진단

발전계획(목표)	기능 진단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세부기능 중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친환경 축산, 그리고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에 대한 사업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농식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한’이라는 키워드는 그 무게를 많이 싣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5개 발전계획(목표)보다 많은 업무계획이 수행된 것으로 보아 최근 몇 년간 중점 기능이었음 ☞ 특히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 등 6차산업화에 대한 대응 중심 √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신규 후계인력 양성, 농업경영체 육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이 기능들은 미래대비를 위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관련 기능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 보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에 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복지적인 측면과 함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는 크게 진행된 것은 없음 ☞ AI 등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는데 많은 역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기능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영위험에 있어 사전적 대응,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직불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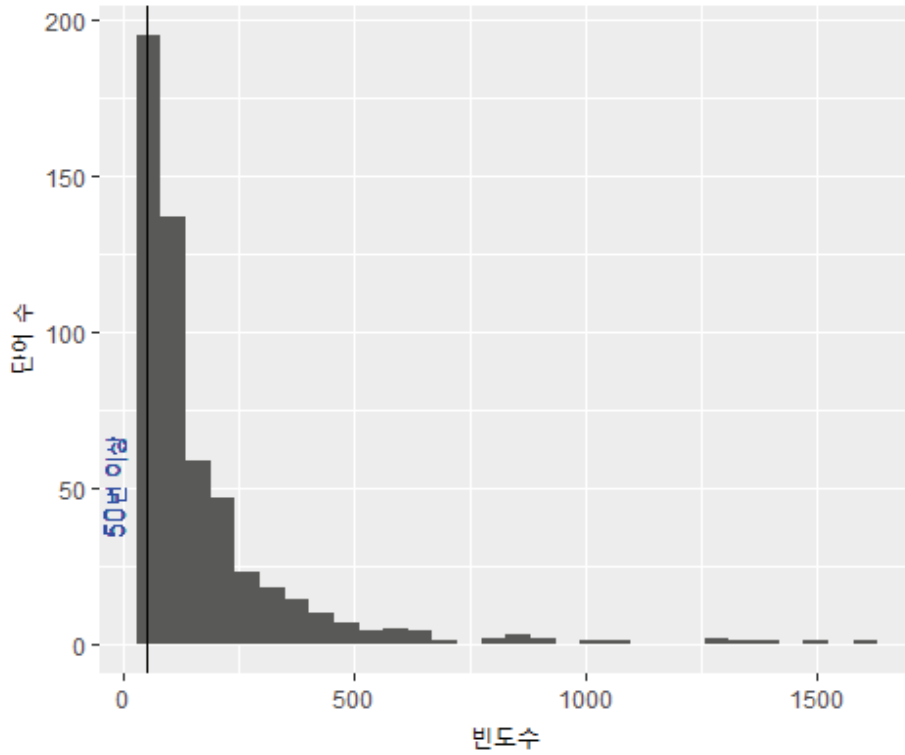
발전계획(목표)	기능 진단
	및 기능 보완,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농업 기능은 거시적 차원에서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른 기능에 비해서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 ☞ 2015년 2016년에 진행되었던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이 전부였으며 기타 다른 거시적 기능은 찾을 수가 없었음 ✓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거시적 기능은 잘 수행되지 않았음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 차원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 2016년 2017년에 진행되었던 세부기능도 애초에 수립했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존에 수립했던 추진과제로는 쌍방향 맞춤형농정 강화, 지방농정 강화, 농정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이었지만 진행된 사업은 관광객 유치,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그리고 농촌공간 디자인관련 사업이었음 ✓ 그리고 최근 몇 년동안 진행된 사업은 거시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사업 수준이었으며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이라는 기능과도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인재양성처럼 미래 대응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능 수립은 균형있게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된 사업등을 고려했을 때 기능이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를 볼 수 있음 ② 거시적 차원에서 기능은 다르지만 협업이 필요한 타부처와의 융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역대 농식품부 거시기능 분석(업무보고서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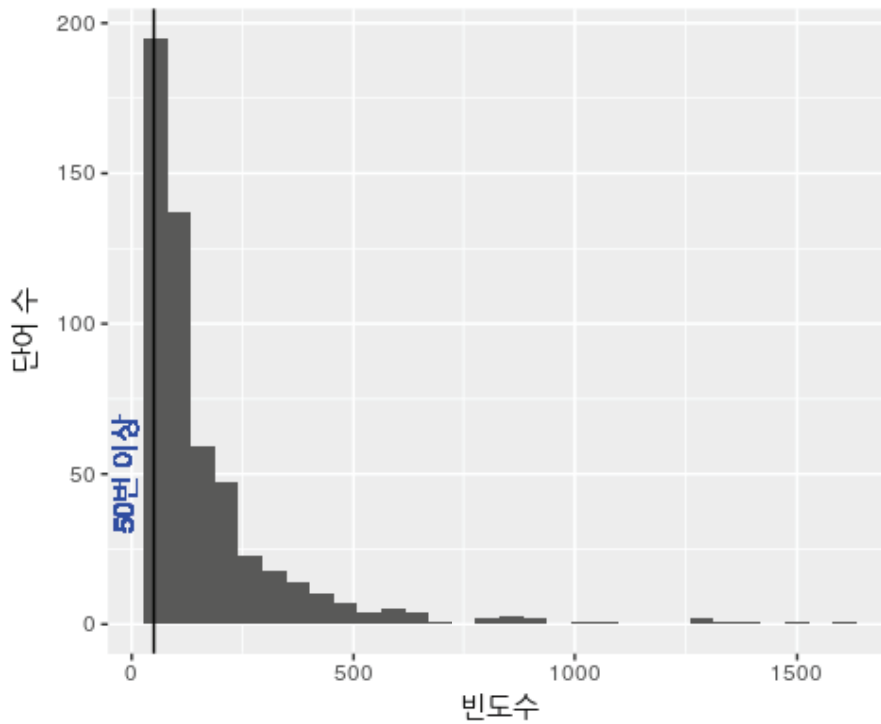
1) 전체연도 분석(2006~2016)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주요 업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년에 한번씩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006년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였는데, 문서파일 형태의 보고서를 분석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아래에서 일단 이 기간의 업무보고서를 모두 합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한 후 각 연도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아래 <그림 3-1>은 수집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나타내 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빈도에 많은 단어가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업무보고라는 문서의 특성상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도 보고서의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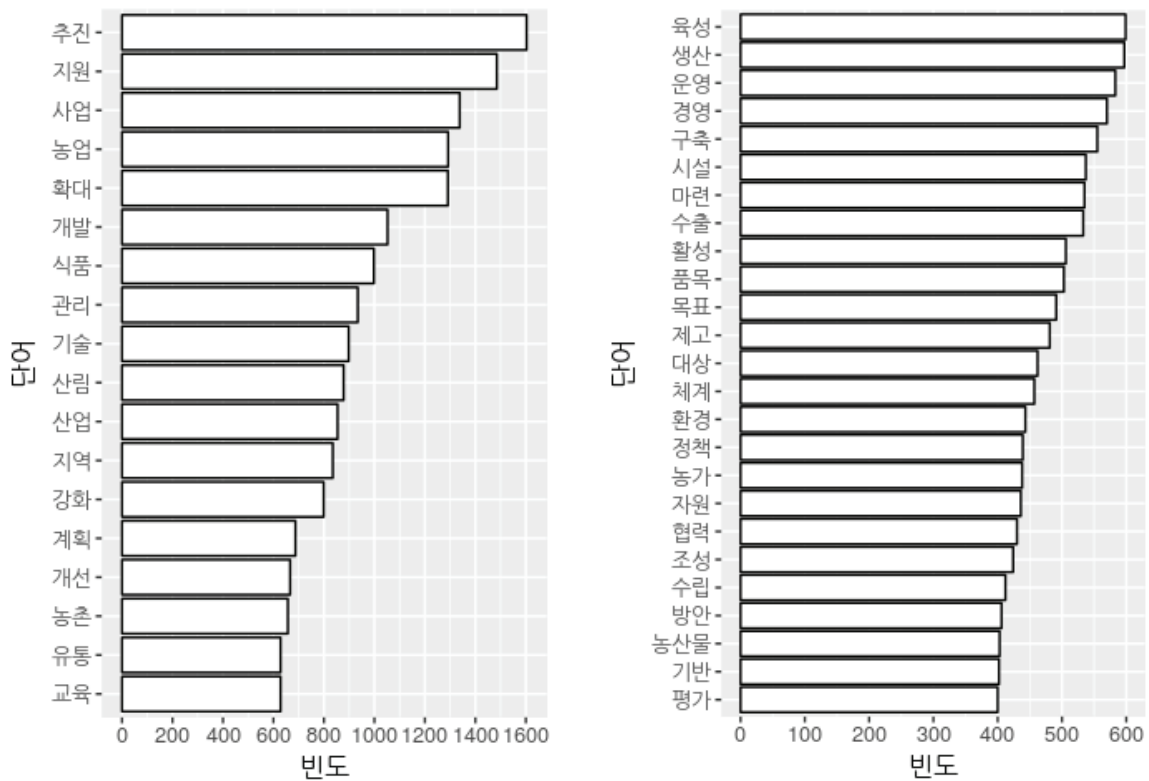
<그림 3-1> 전체연도 빈도 높은 단어들



<그림 3-2> 전체연도 단어들 빈도분포

위의 그래프는 사실상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래 그림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과 반대로 빈도가 별로 높지 않은 단어들을 모두를 나타낸 것이다. 빈도가 높은 단어는 전체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가 되기때문에 나타낸 것이고,

반대로 빈도가 별로 높지 않은 단어들은 어떤 새로운 경향을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었다. 일단 왼쪽의 높은 빈도 그림을 보면 한해의 업무를 보고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추진', '지원'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새로운 이름에 속하는 여러 단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어떤 독특한 패턴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활성', '제고', '정책'과 같이 역시 보고서에 자주 나타날 법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는 이 단어들을 빈도 순서대로 표현한 것인데, 상위 다섯개 단어의 빈도가 확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업', '확대', '지원'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그림 3-3>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표 3-7> 단어별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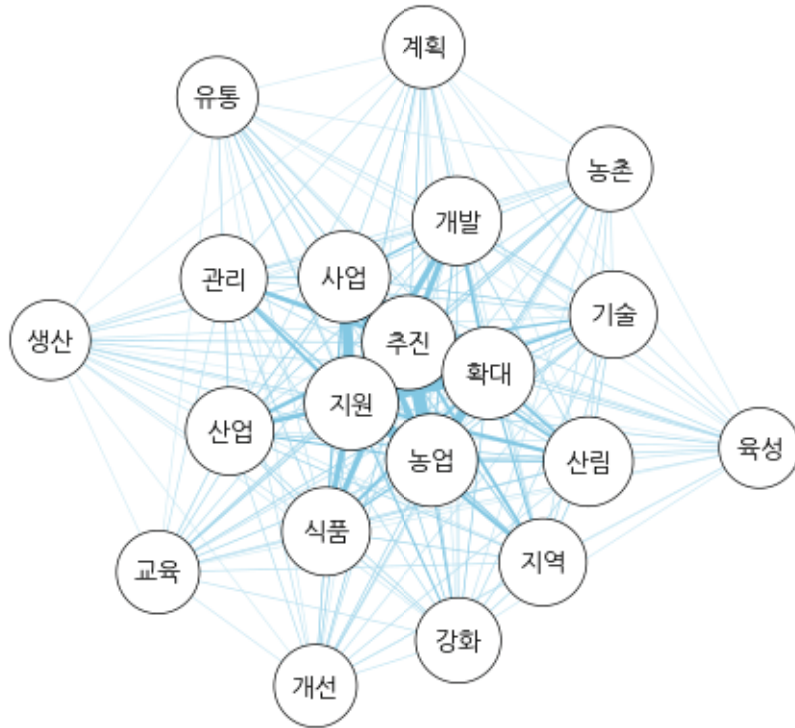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지원	1,485	지역	835	개소	578	대상	462
사업	1,338	강화	799	경영	570	체계	457
농업	1,292	계획	687	구축	555	환경	443
확대	1,291	개선	666	시설	537	정책	439
개발	1,052	농촌	657	마련	535	농가	438
식품	998	교육	628	수출	533	자원	436
관리	934	유통	628	활성	506	협력	430
기술	898	육성	599	품목	503	조성	424
산림	878	생산	597	목표	491	수립	412
산업	854	운영	583	제고	481	방안	406

다음 그림은 위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나타낸 wordcloud인데, 앞에서 나타난 단어들보다 훨씬 많은 단어들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긴 문서들에서 추출한 정보를 요약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된다.



<그림 3-4> 전체연도 wordcloud

앞에서 보여진 내용들이 모두 단어의 등장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면,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단어들의 연결과 관련된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연결은 단어연결망 분석(word network analysis)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음 그림은 2006년, 2009~2016년까지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로부터 나온 주요 단어들간의 연결을 나타낸 것이다. 화면의 중앙에 나타날수록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연결이 강할수록 연결선이 두꺼워지도록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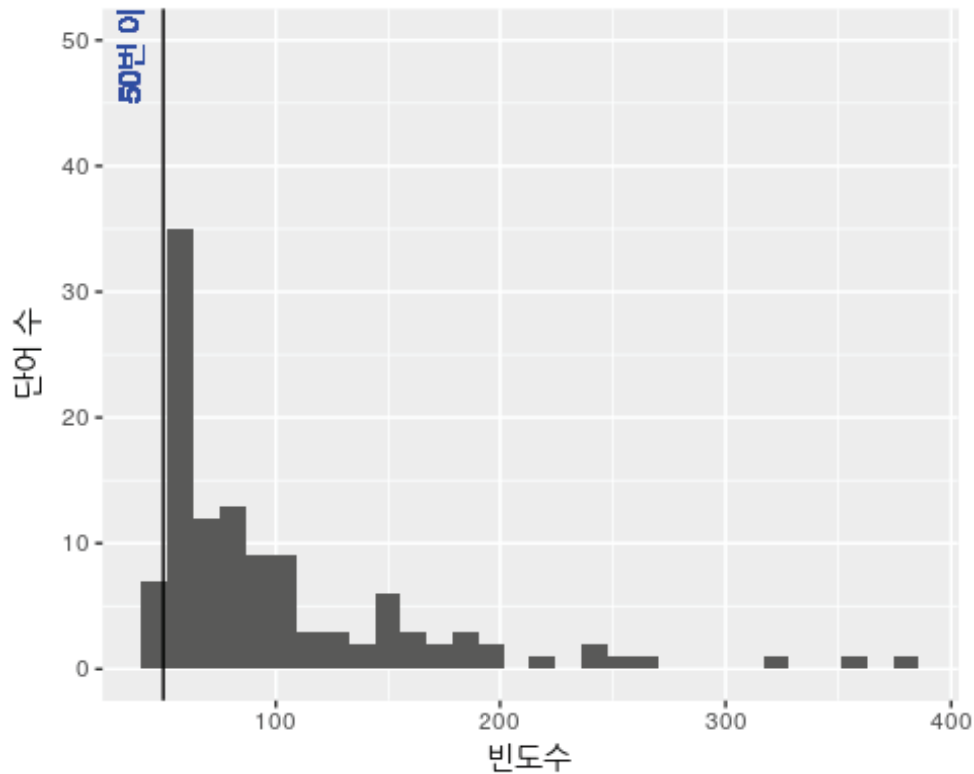


<그림 3-5> 전체연도 단어연결망

자료가 수집된 기간동안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 '식품'보다는 '농업'이 더 중요하게 '사업', '지원', '확대' 등의 단어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식품'은 '강화'라는 단어와 더 가까운 연결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아서 점점 더 중요성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의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언급도 많기는 하지만 농업이나 식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이 독특하며, '기술'이나 '개발'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단어도 비교적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분야가 상당히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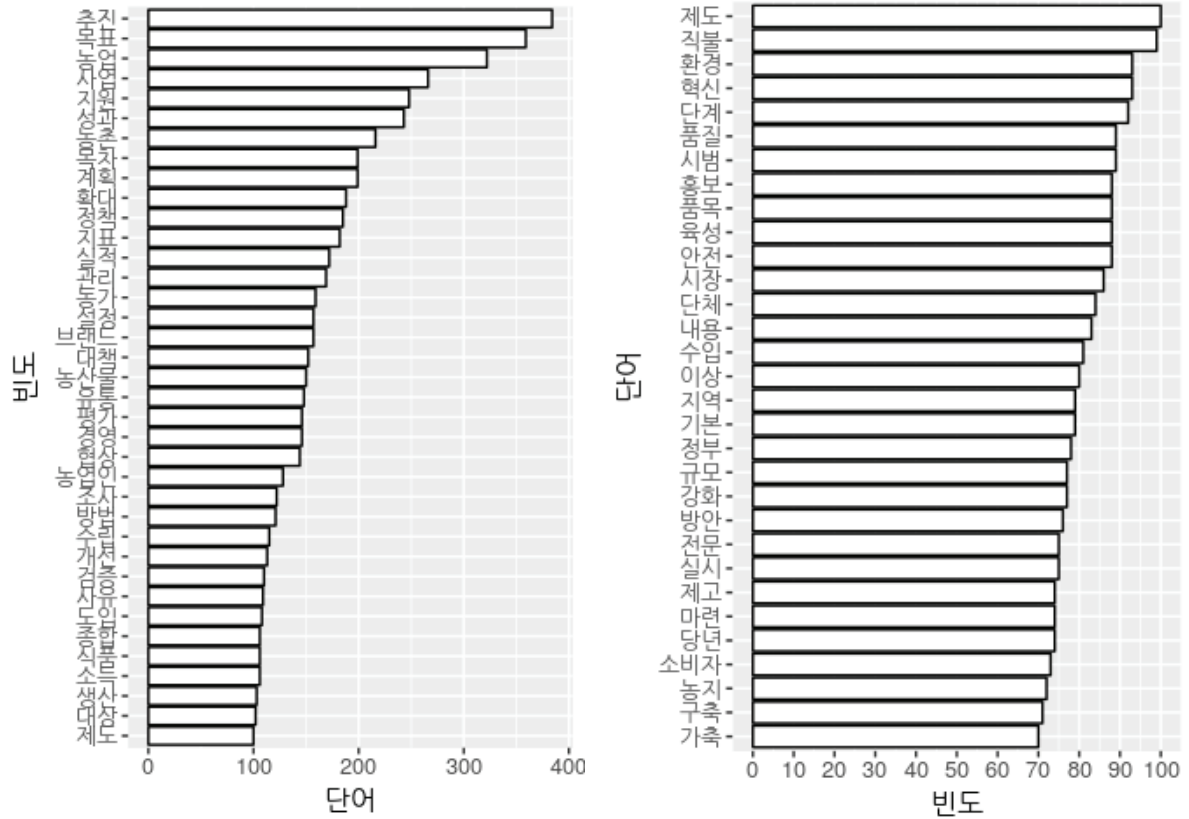
2) 연도별 분석

(1) 2006년 업무보고 분석



<그림 3-6> 2006년 전체 단어 빈도 분포

2006년의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위의 그림과 같은데, 역시 앞에서 본 전체적인 단어들의 빈도와 비슷하게 단어들은 대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는데 반해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빈도로 나타나는 몇몇 단어들이 있었다. 이러한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가 높은 단어와 중간정도 빈도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그림 3-7> 2006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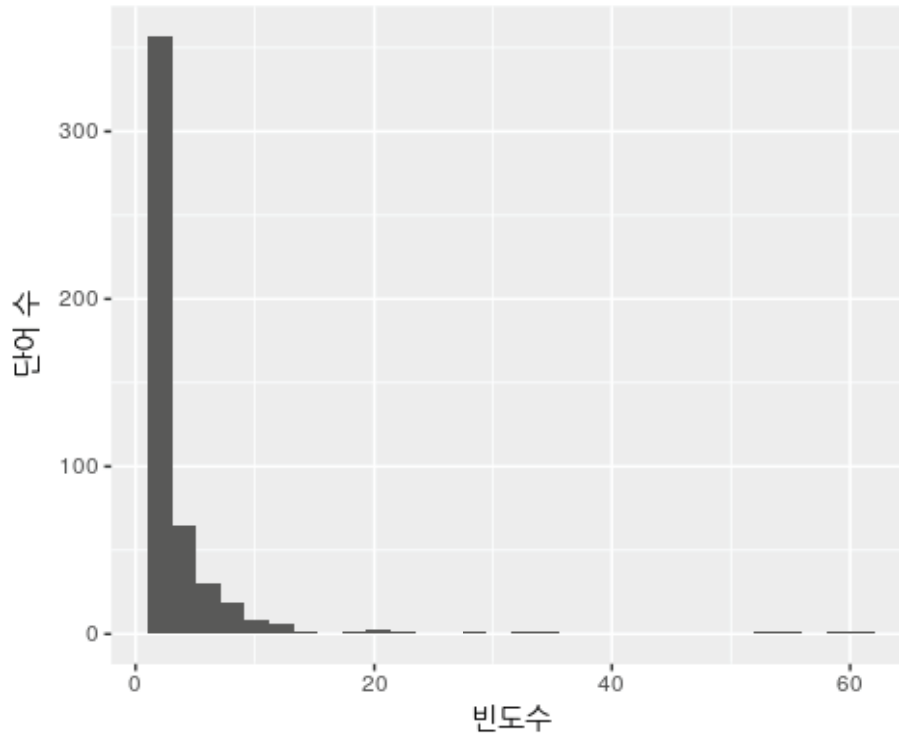
왼쪽의 그림을 보면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단어들은 '추진', '목표', '농업', '사업',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단어들도 대체로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었다. 다만 '브랜드'라든가 '유통', '경영'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상위권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해의 주요한 과제가 농축산식품들의 브랜드화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빈도가 낮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혁신', '육성', '품목', '홍보', '시장'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시장 중심의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조가 기저에 깔려 있었던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전반적인 단어들의 분포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한 wordcloud는 다음과 같다.



<그림 3-8> 2006년 word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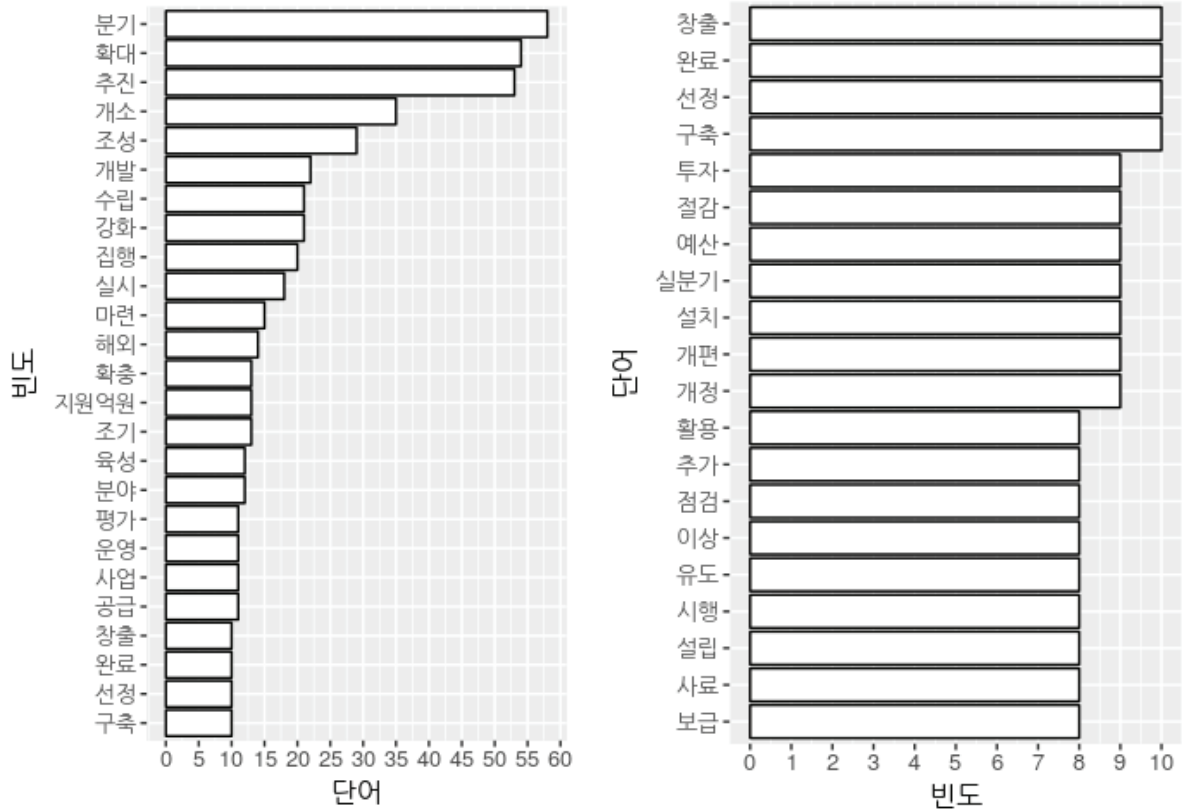
(2) 2009년 업무보고 분석

2009년의 업무보고서는 그 분량이 다른 해에 비해 적은 편이라 전반적인 단어의 분포도 그 숫자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인 단어들의 분포를 나타낸 아래 그림을 보면 확실히 전반적인 빈도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빈도가 낮은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2009년 전체 단어 빈도 분포

위의 그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단어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이 아래의 그림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로 드러나고 있지만 '개발', '확대', '조성' 등의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해에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진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빈도가 작은 단어들을 살펴보자면 '설립', '설치', '투자', '구축', '창출' 등의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들의 진행과 집중적인 육성이 주요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0> 2009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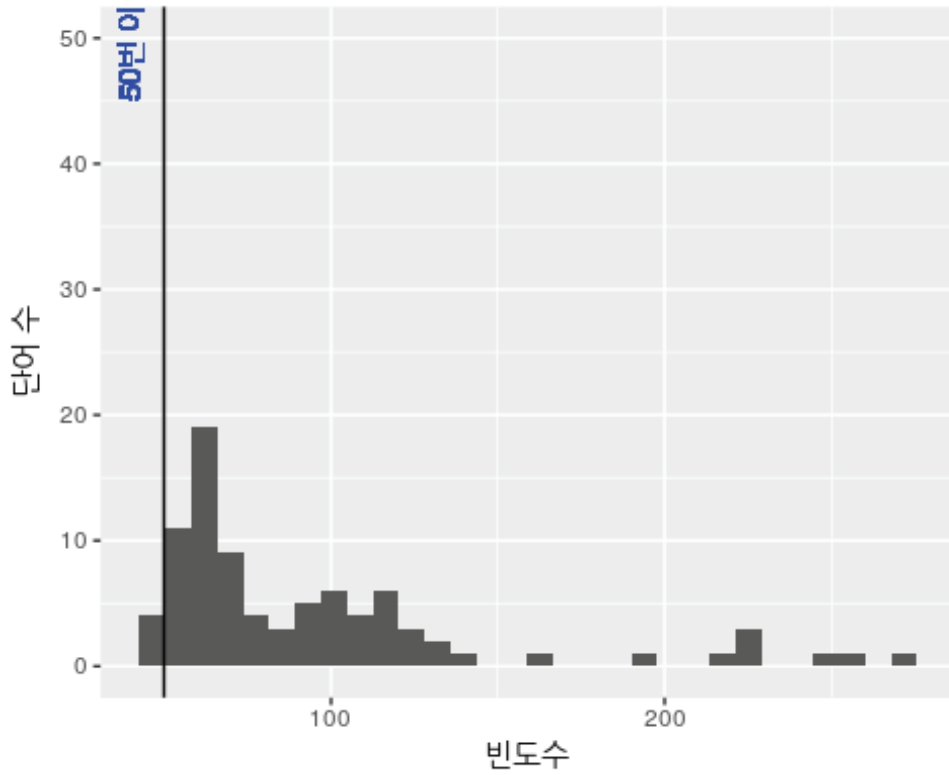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2009년의 업무보고서를 wordcloud로 나타낸 것으로 앞의 그림에서 등장한 단어들 외에 '농업기반시설정비', '일자리 창출', '양식 어업', '산림휴양시설', '탄소흡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당히 다양한 정책분야를 언급하는 단어들이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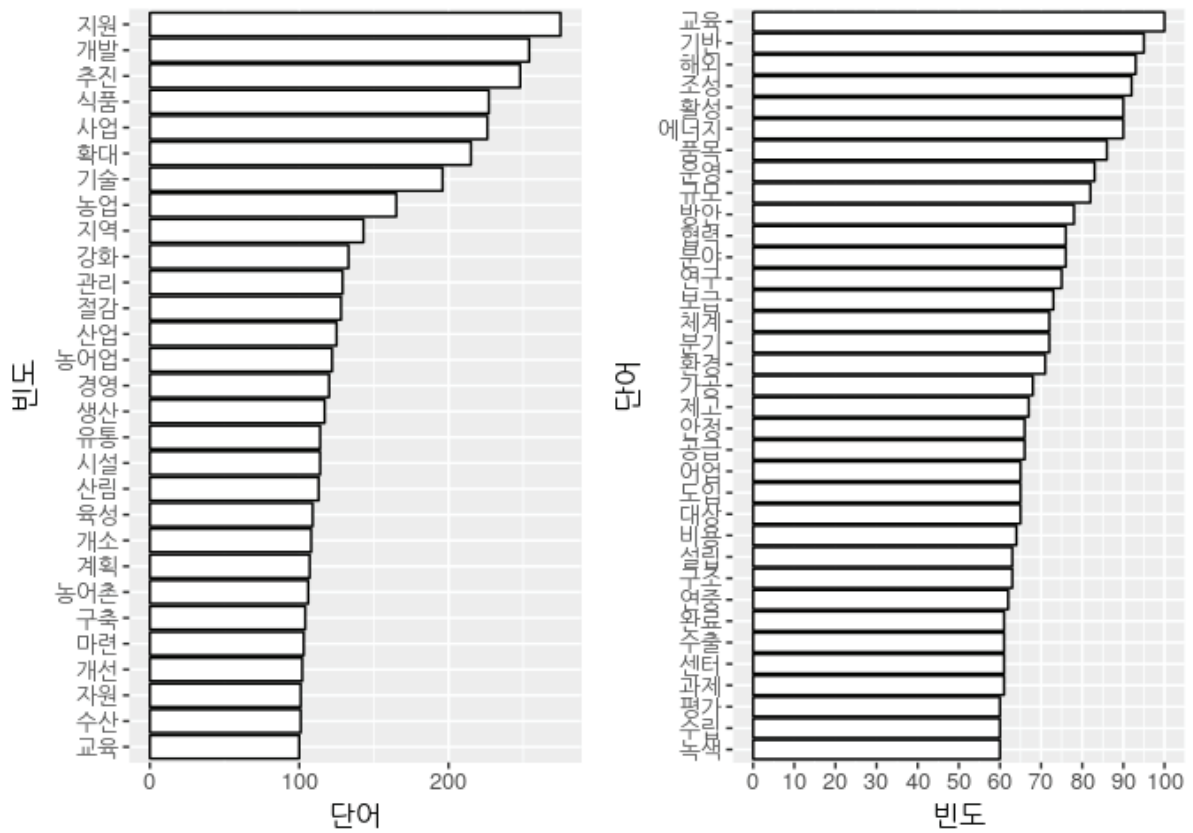
<그림 3-11> 2009년 wordcloud

(3) 2010년 업무보고 분석

2010년 업무보고 보고서의 전체적인 단어를 나타낸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200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도 이전에 비해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들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12> 2010년 전체단어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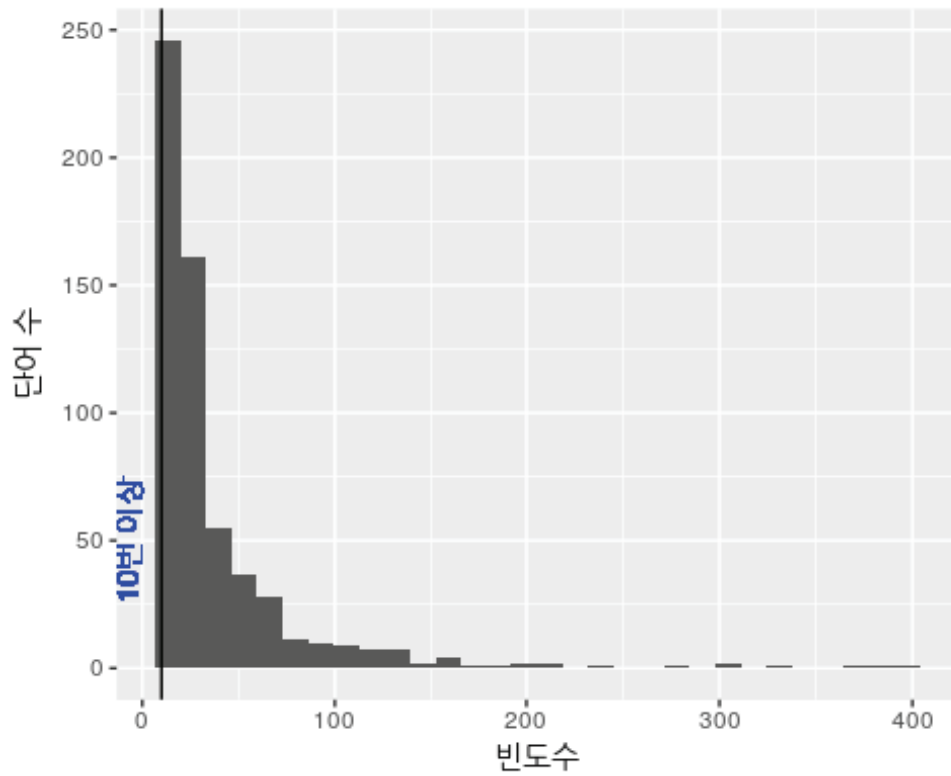
<그림 3-13> 2010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위의 그림을 보면 200번 이상의 빈도를 보인 단어들은 '지원', '개발', '추진', '식품', '사업', '확대' 등으로 '농어업', '산업', '산림', '농어촌' 등의 단어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난 단어가 '식품'이라는 점은 독특한 발견이다. 한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단어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녹색', '환경'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환경에 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 '연구', '협력' 등의 단어들도 이러한 변화의 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단어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기 위하여 wordcloud로 나타낸 것이다. '유통', '경영', '관리' 등의 단어가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역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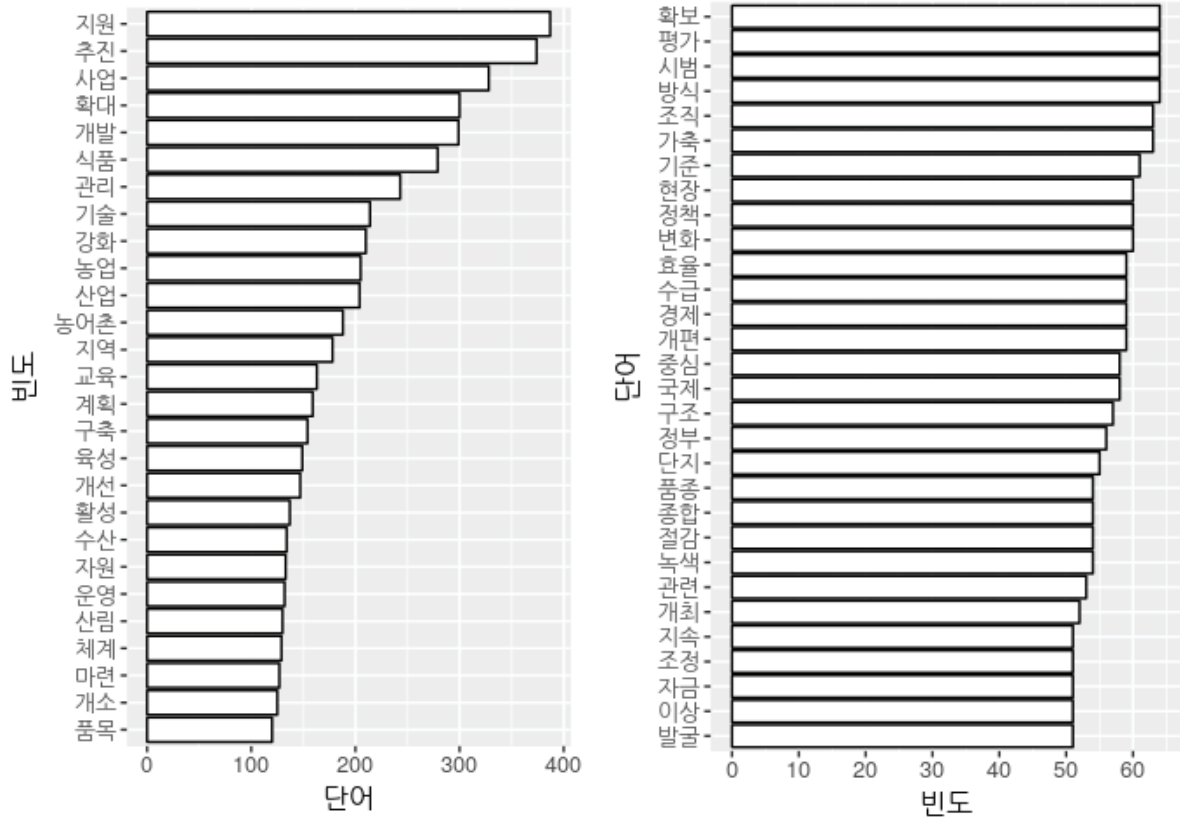
<그림 3-14> 2010년 wordcloud

(4) 2011년 업무보고 분석



<그림 3-15> 2011년 전체 단어 빈도 분포

이전 해와는 달리 극단적으로 편중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사안들과 함께 매우 중점적인 몇개의 사안이 존재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어들과 낮은 단어들을 각각 나타낸 아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16> 2011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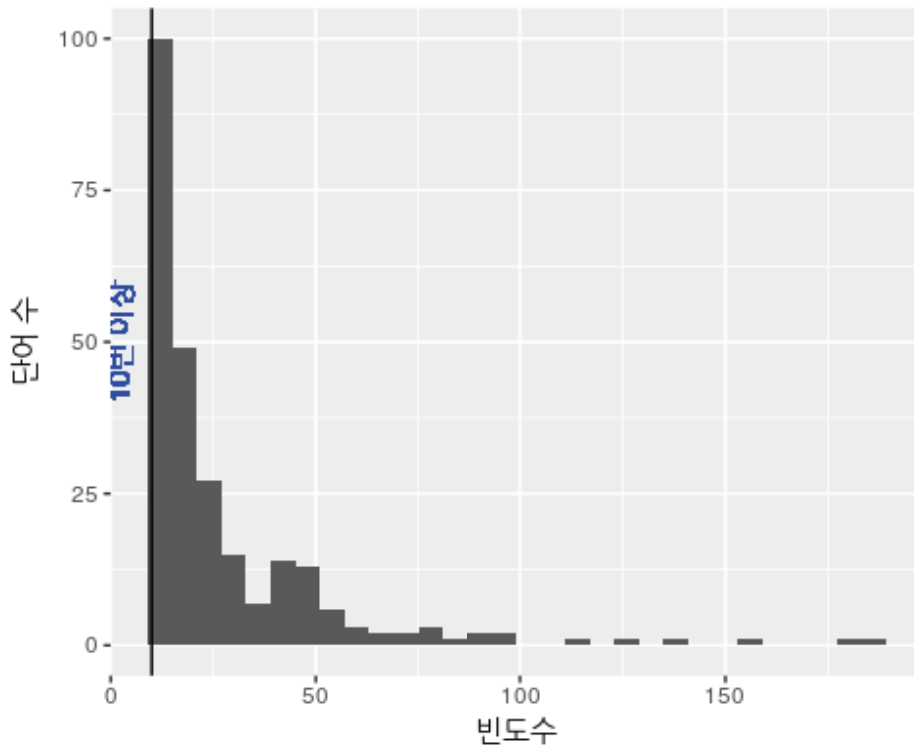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나타낸 왼쪽의 그림을 보면 '사업', '확대', '식품', '관리', '강화' 등의 단어가 상위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 이전해와 마찬가지로 '식품'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전해에는 '농어업'으로 같이 나타났던 두 산업이 '농어촌'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해에 와서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한 발견이었다. 한편으로 빈도가 적게 나타나는 단어들의 경우 '환경', '품종', '품목', '재배', '기후', '작물', '식량' 등 농축산업의 주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단어들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점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 이러한 자료들을 wordcloud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7> 2011년 word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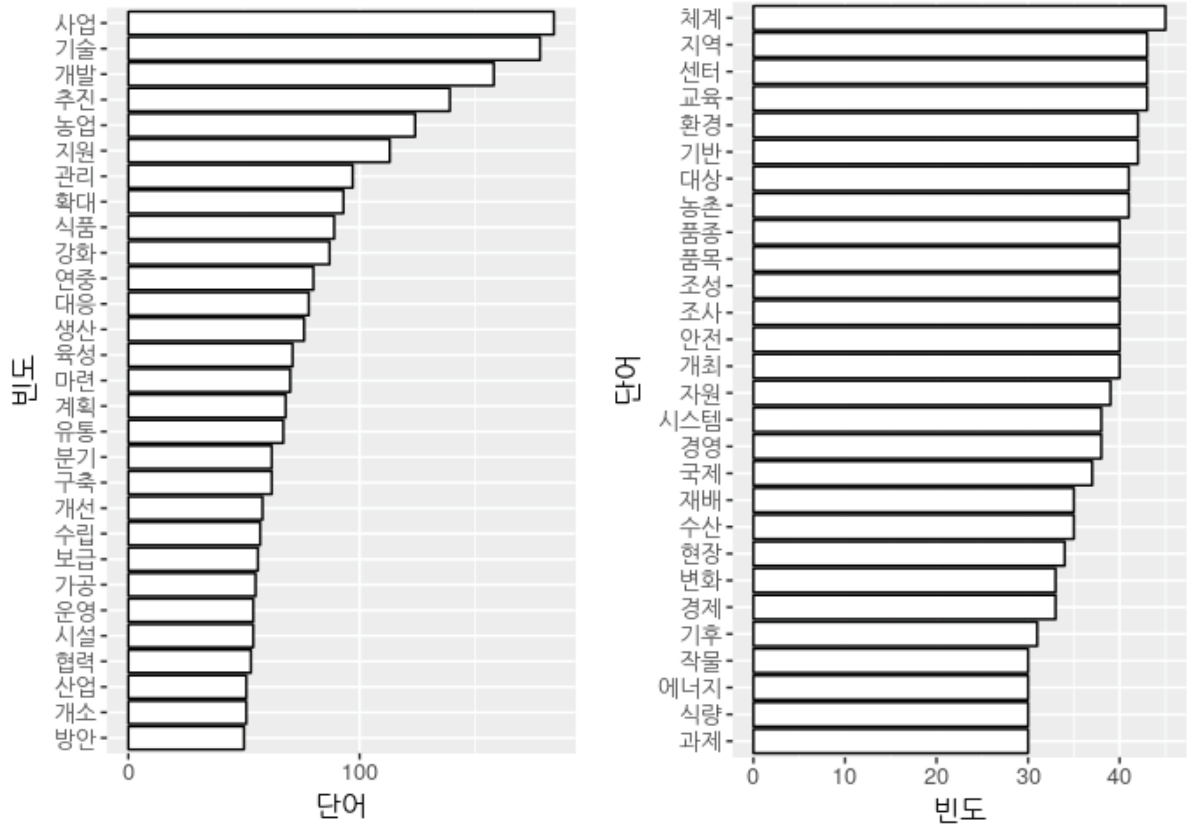
(5) 2012년 업무보고 분석

아래 그림에 나타난 2012년의 보고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단어들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 좁은 구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높은 빈도수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그림 3-18> 2012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 그림의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개발', '농업', '관리'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식품'도 여전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이전 해와 비교하면 '농업'보다는 덜 나타났다는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 빈도가 낮은 단어들의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후', '작물', '식량' 등의 단어와 함께 '에너지', '환경' 등의 단어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19> 2012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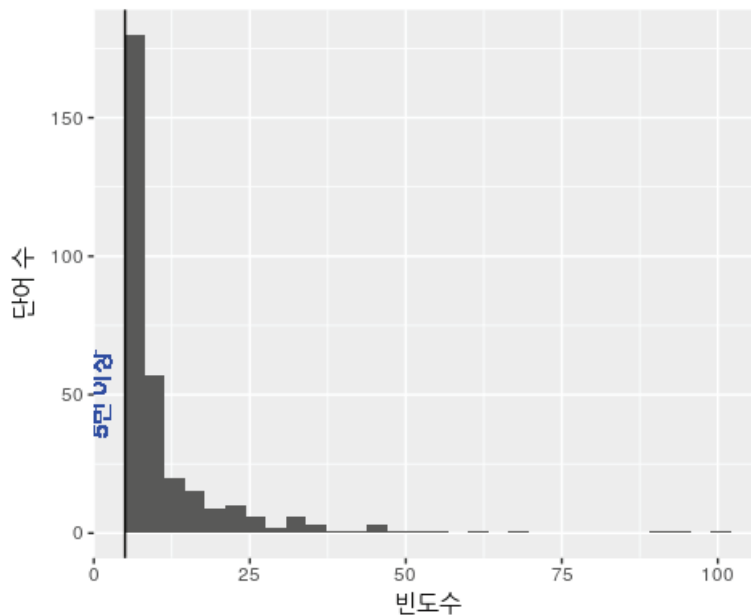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wordcloud를 나타낸 것인데, 독특한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전해에 비하면 '사업', '추진'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보다 자주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림 3-20> 2012년 wordcloud

(6) 2013년 업무보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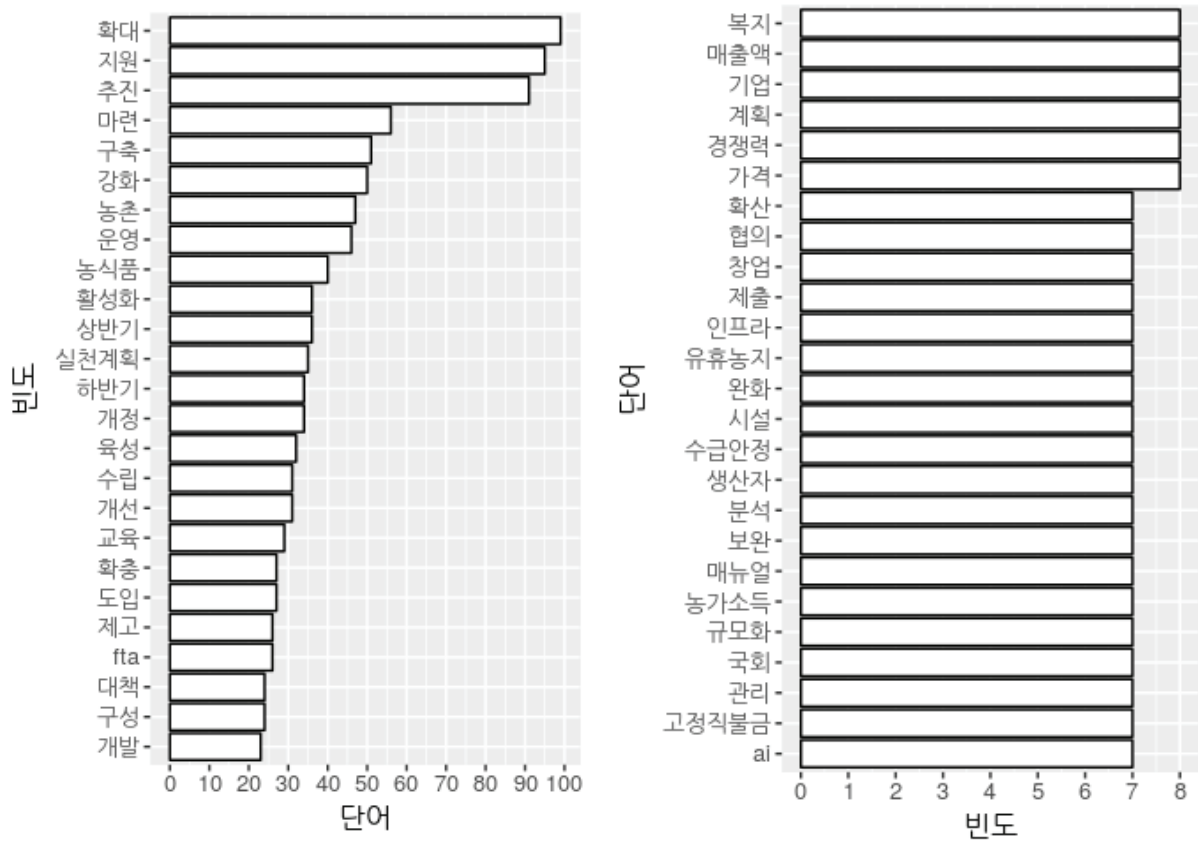
2013년의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의 분포를 우선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이는데, 몇개의 단어가 상당히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한편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5번 정도 등장하고 있었다.³⁾



<그림 3-21> 2013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3) 2013년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상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업무계획서를 분석에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는 업무보고서를 직접 분석한 경우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빈도가 높거나 낮은 단어들을 모두 나타낸 아래의 그림을 보면, 위의 그림에서 다른 단어들과 구분되어 상당한 빈도로 나타난 단어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확대'나 '지원' 혹은 '추진'과 같은 단어였으나 이전과는 다르게 '농식품', '실천계획' 등의 단어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FTA'가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만 했다. 반면에 빈도가 낮은 단어의 경우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단어 외에 나타난 단어를 찾아보면 '복지'라는 단어와 '매출액', '경쟁력' 같은 기업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눈에 띄며 이외에 '인프라', '유휴농지', '수급안정', '농가소득' 등의 단어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AI'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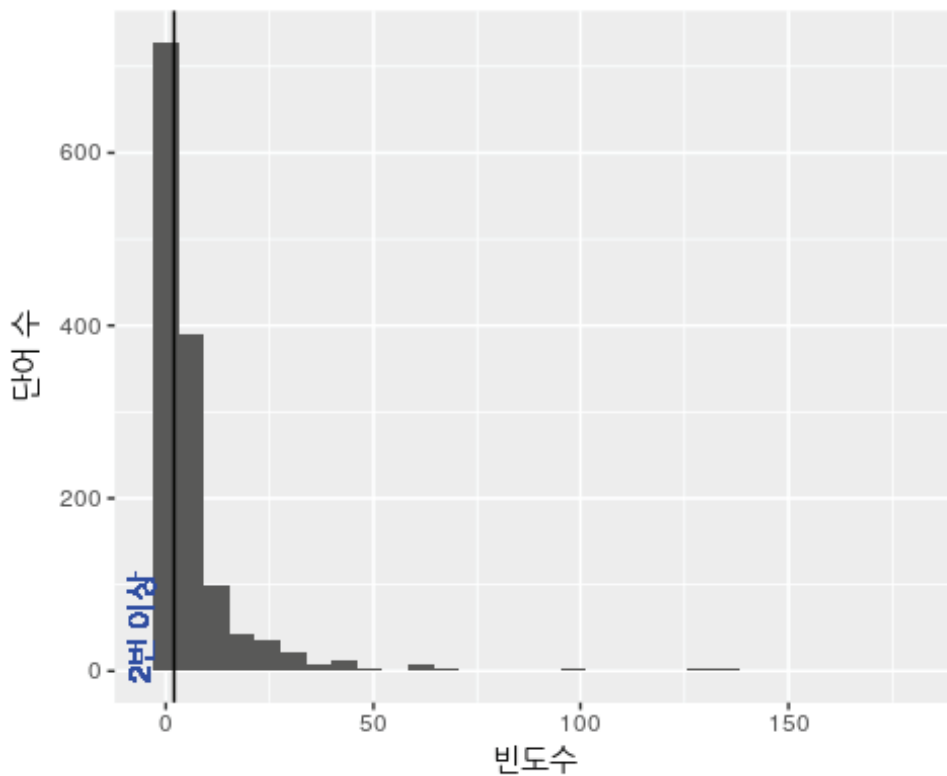
<그림 3-22> 2013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아래 그림은 2013년의 업무보고서 분석자료로부터 추출한 wordcloud인데, '추진', '확대', '지원'과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이 중심에 나타나고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심에서 약간 주변부를 살펴보면 '맞춤형', 'FTA', '구제역', '농식품'과 같이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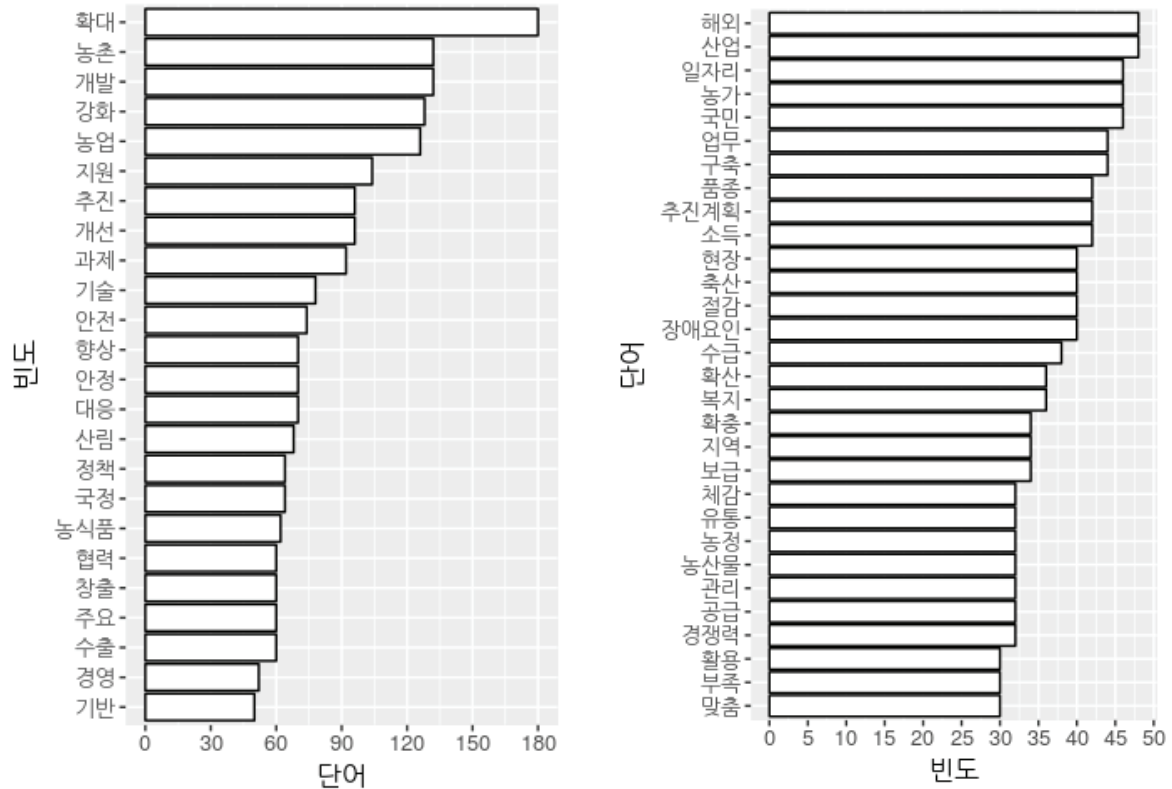
<그림 3-23> 2013년 wordcloud

(7) 2014년 업무보고 분석



<그림 3-24> 2014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2014년의 업무보고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단어는 매우 적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단어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주로 나타난 단어를 살펴본 아래 그림을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확대'였고, 그 다음으로 '농촌', '농업', '산림' 등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빈도가 적게 나타난 단어들을 살펴보면, '일자리', '농가', '품종', '축산', '장애요인', '농산물', '경쟁력' 등의 단어들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2014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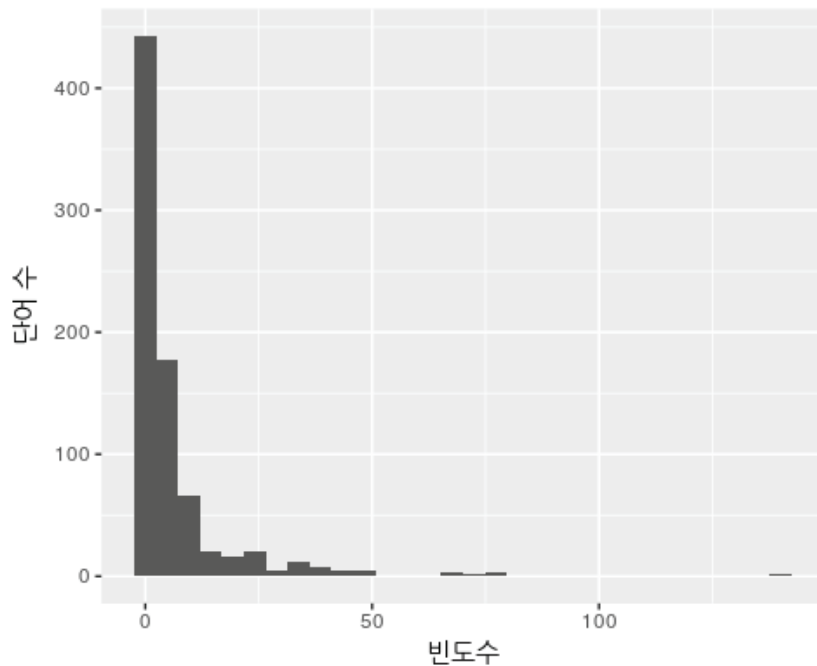
2014년 업무보고서로부터 추출한 단어들로 구성된 아래의 wordcloud를 보면,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는 점과 '농촌'이나 '농업'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6> 2014년 word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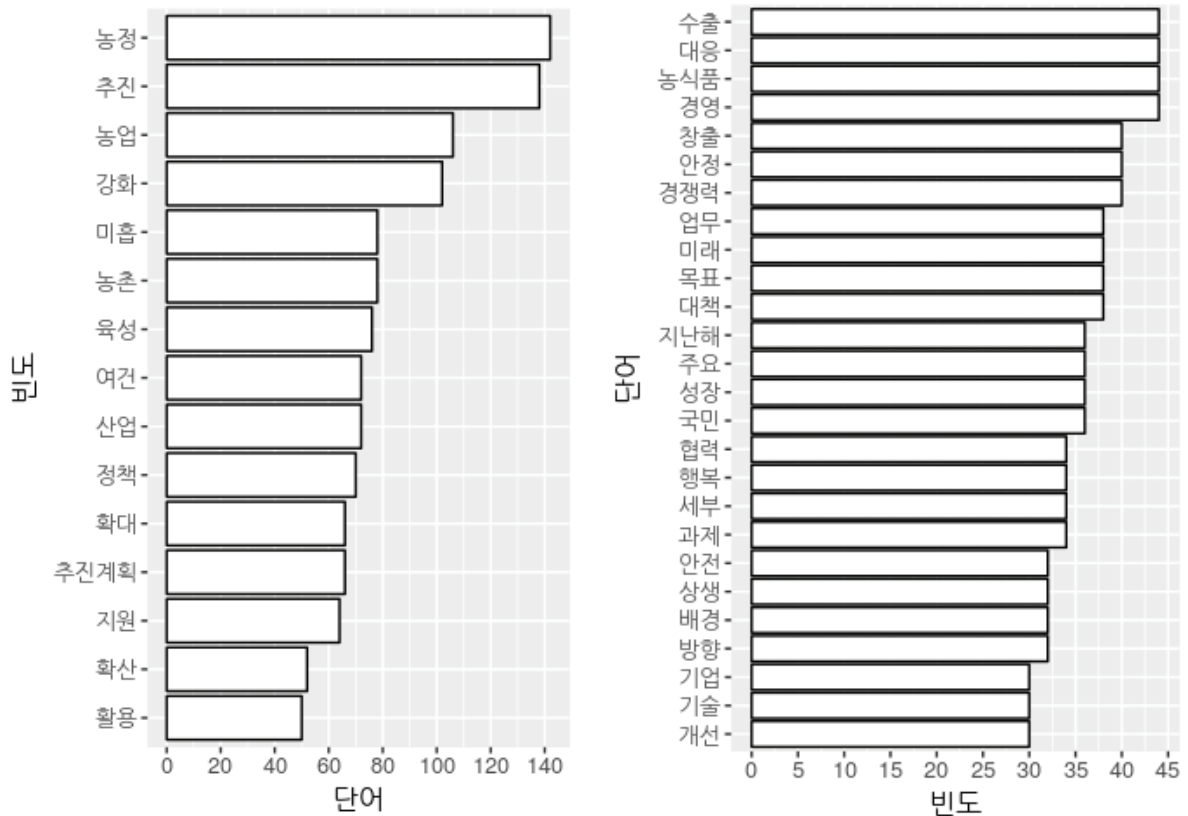
(8) 2015년 업무보고 분석

2014년과 비슷하게 2015년의 업무보고서 자료도 비슷한 단어들 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고, 몇몇 단어만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보고서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한글 처리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분석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는 분석상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로 여기서 언급한 분포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림 3-27> 2015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위의 그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단어들을 분리하여 그린 아래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면 '농정', '농업', '농촌'과 같이 농업과 관련된 단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비슷한 정도로 언급되었던 어업과 임업 등과 관련된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하게 드러났다. 한편 빈도가 낮았던 단어들의 경우에는 '상생', '행복', '성장', '경쟁력'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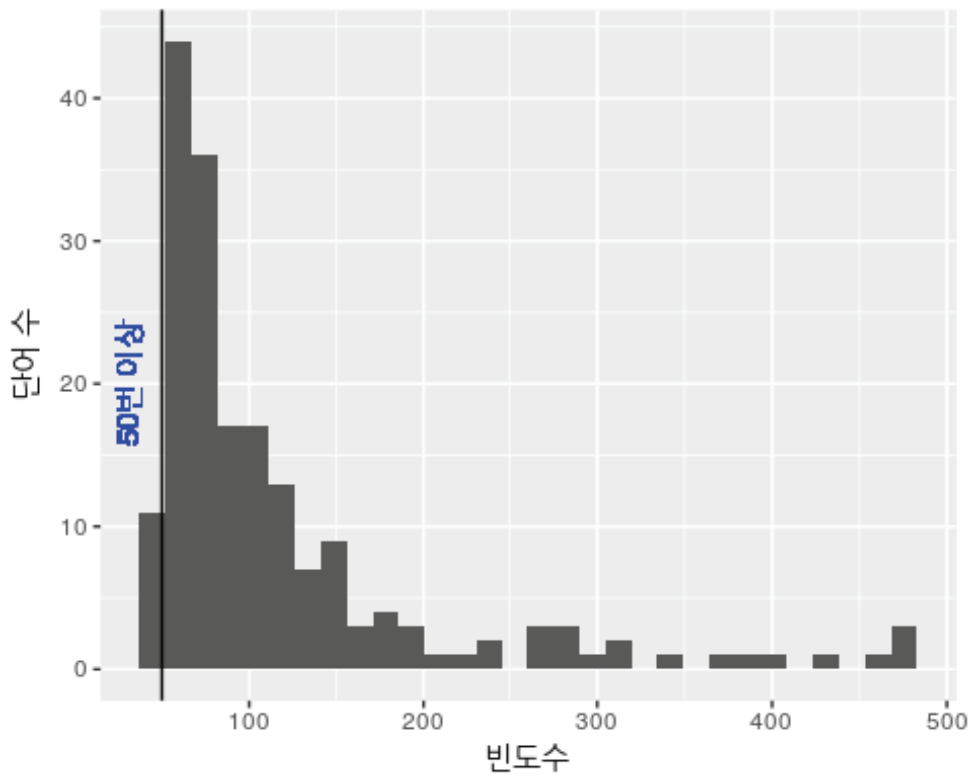
<그림 3-28> 2015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앞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에는 wordcloud를 나타내었다. '농정'이나 '농업'이 크게 등장한다는 점과 함께 '추진계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진'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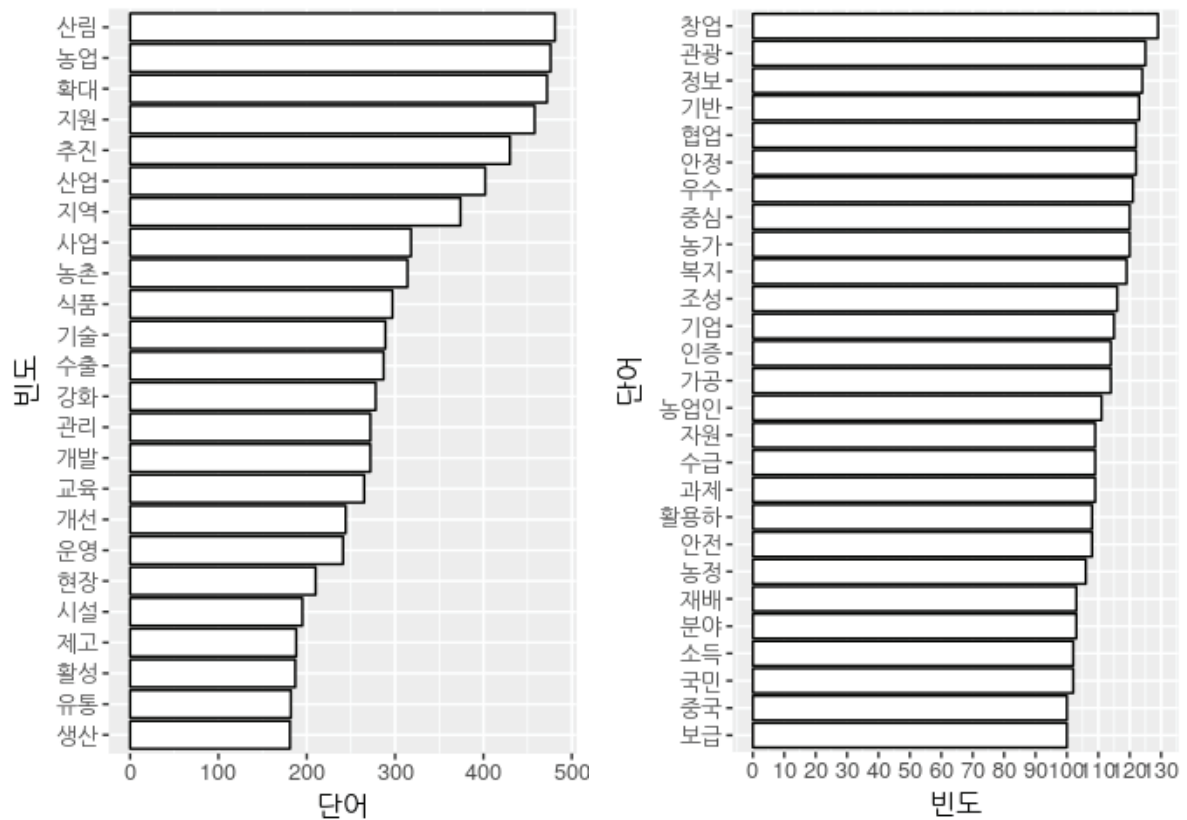
<그림 3-29> 2015년 wordcloud

(9) 2016 업무보고 분석



<그림 3-30> 2016년 전체 단어빈도 분포

2016년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단 이전의 보고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전의 보고서들에 비하면 편중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분석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그림 3-31> 2016년 단어별 빈도 분포 (左 - 높은 빈도 / 右 - 낮은 빈도)

높은 빈도를 나타낸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전에 비해 '산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주목할만 하며, '식품'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새로운 발견이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에 있어서는 '관광', '협업', '인증' 등이 이전에 비해 새롭게 나타난 단어였다.

2016년의 데이터를 wordcloud로 나타낸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전에 비해 '교육'이나 '관리' 등의 단어가 보다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발견할 수 있으며, '산업', '수출' 등의 단어도 이전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2> 2016년 wordcloud

자료가 수집된 기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 '식품'보다는 '농업'이 더 중요하게 '사업', '지원', '확대' 등의 단어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식품'은 '강화'라는 단어와 더 가까운 연결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아서 점점 더 중요성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의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언급도 많기는 하지만 농업이나 식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이 독특하며, '기술'이나 '개발'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단어도 비교적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분야가 상당히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업무계획 보고서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시적 기능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먼저 빈도가 높은 단어(추진, 지원, 사업 등)가 몇 가지 안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 관련 업무 기능과 사업은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빈도가 낮은 단어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 단어들을 추가하여 새롭게 시도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자료로 토대로 분석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융합 협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거시기능의 확장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분야의 부처들과의 협업도 요구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내외부적인 일하는 방식의 개혁 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공문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이번 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이 아닌 미시적 측면에서 내부기능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중복여부 및 내부 부서간 네트워크 정도를 파악하는 업무 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내부기능 분석을 위해 2017년 5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8>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		주요기능	
-	정책보좌관	장관지시 연구·검토, 정책과제와 관련된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 수립/관계부처 정책보좌 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장관 소셜미디어 메시지 기획 및 운영	
	대변인 홍보담당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조정 및 협의 지원/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점검 및 평가/언론관련 업무/농업인 단체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보안, 관인, 소속 공무원 연금 및 급여, 기록 및 문서관련, 물품, 국유재산, 인사업무, 민원 업무 등	
-	감사관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 사정업무/소속공무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기획 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업무계획 종합 및 조정, 국회업무,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업무 등	
	정책 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일하는 방식 혁신, 제안제도 운영, 정부3.0, 조직진단 및 평가, 위원회 운영,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등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업무 등	
	정보통계정책 담당관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활성화 업무 등	
	비상안전기획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안전관리, 재난상황 관련 업무 등	
-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농촌개발 활성화 등 농촌정책 총괄,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농촌 활력장출 운동 등 농촌관련 업무
		지역개발과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 뉴타운, 주택개량,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농촌복지여성과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
		농촌산업과	농촌 산업정책, 기업유치, 기업활성화, 농촌 지역 특화·향토산업,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추 진팀(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에 관한 업무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중장기 농업정책, 농업구조정책, 통입농업정책, 농정 및 식품산업,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관련 업무 등

부서		주요기능	
	농지과	농지관련 기본정책, 농지법 운영,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 관련 업무 등	
	경영인력과	농업인력육성,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영체의 육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한국농수산대학 관련 업무 등	
	농업금융정책과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농업종합자금 등 제도 및 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업무 등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 관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업정책보험 정책 수립, 가축 재배보험 제도,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운영 업무 등	
	농협경제지원팀(한)	농협경제지원관련 업무 진행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 수립,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쌀 수출입관련, 양곡유통기본계획 업무 등
		식량산업과	쌀산업육성계획, 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 농작물 병충해 예방, 쌀 소비촉진 업무 등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인 소득안정시책,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 등
		농업기반과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방조제, 받기반정비사업 업무 등
		간척지농업과	간척종합개발사업,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 간척지 활용 및 운영배수개선사업 업무 등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 국제 농업관련 단체 및 해외주재 공무원 업무, 농업통상기획,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 업무, 해외농업개발사업 업무 등
		농업통상과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업무,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업무,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검역정책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정책, 수출입 동식물, 축산물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업무 등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업무 진행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발전기본계획, 한국마사회, 전통 소싸움, 말산업 육성, 축산물 관련 업무 등
		축산경영과	축종별 산업발전대책,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 대북축산협력 지원, 가축개량종합계획 업무 등
		방역총괄과	대·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관한 사항, 동물약품제도, 구제역,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세계동물보건기구 관련 업무 등
		방역관리과	소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동물 보호·관리 업무,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 축산분야 재해대책, 가축 매몰지 지표수 관리 업무 등
		친환경축산팀	친환경축산 육성, 친환경 축산농장, 축산 기자재, 사료산업, 초지의 조성 업무 등
	식품산업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관련 업무 진행
식품산업		식품산업 육성·진행, 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식품산업통계,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 판매촉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지	

부서		주요기능
정책과		역전략식품산업 업무 등
	식품산업진흥과	진통발효식품산업, 김치산업,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식품업체, 농업인의 식품가공, 식품명인, 전통주, 식품산업 컨설팅 관련 업무 등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산업 육성·지원,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 한식 세계화,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 업무 등
	수출진흥과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해외 홍보,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개척, 수출물류제도 운영, 통계 및 분석 업무 등
유통 소비 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 산지유통시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식품 가격 안정, 원예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농산물 전자거래 업무 등
	식생활소비정책과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농산물 인증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 원산지 표시, 식생활교육지원,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업무 등
	원예산업과	채소류·특용작물 생산 및 수급안정, 채소류·특용작물 관련, 특작용기자재, 인삼산업 업무 등
	원예경영과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업무, 시설원예산업 및 관련 에너지 업무 등
창조 농식품 정책과	창조농식품정책과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기획 및 정책관리, 기후변화대응관련, 온실가스 감축업무,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ICT융복합 관련, 녹색성장, 산림청 관련 업무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 연구개발 사업,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농촌진흥청업무,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 업무 등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계획, 유기농업육성계획, 자연순환농업, 친환경유기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업무 등
	종자생명산업과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정책,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도시농업 육성정책, 종자 및 농식품 생명산업, 곤충산업, 국립종자원 업무 등
	농기자재정책팀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안전관리, 이용 촉진, 비료관리, 토양 지력증진, 농약관리 업무 등

출처: 법제처(2017).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자료 재구성.

부서의 내부 기능의 내용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 부서간 네트워크(업무연락)을 분석하기 위해 공문 발송, 수신 자료(협조 공문 포함)를 토대로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부서간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전체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부서간 협력관계(cooperation network)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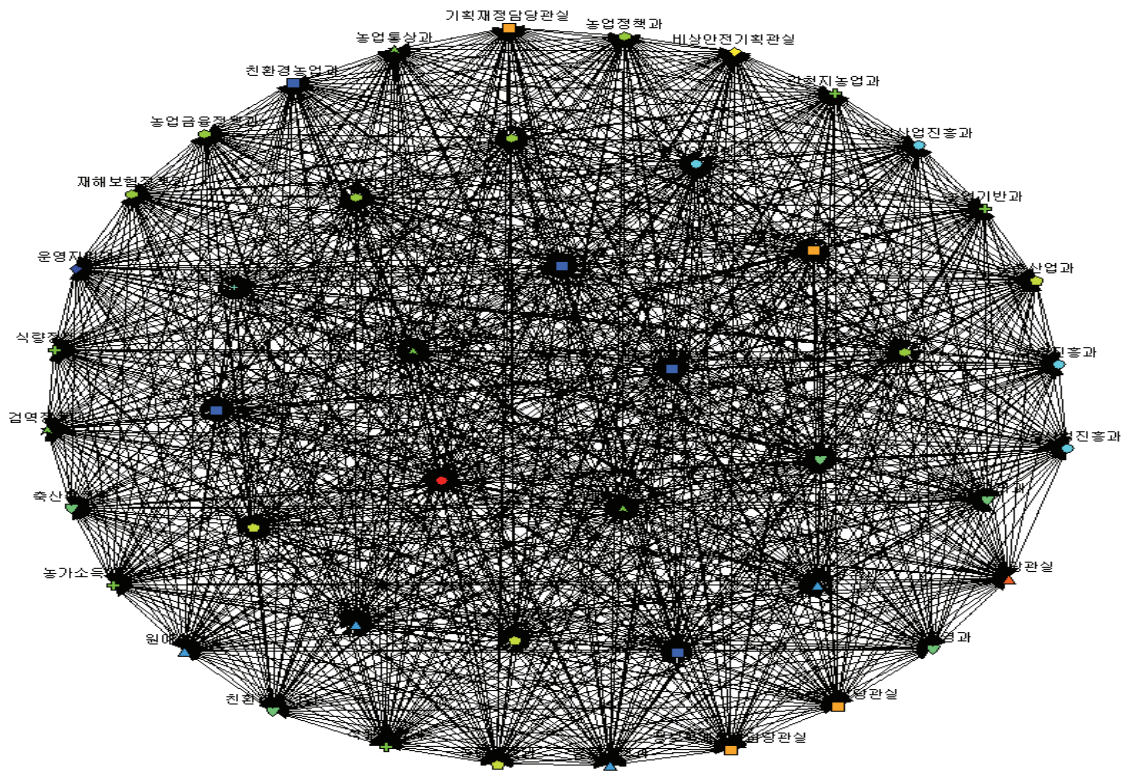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네트워크 구조를 인접도(adjacency matrix) 네트워크를 토대로 분석한다. 이는 각 부서가 어느 조직원과 부서와 연락·접촉하고 협력하는지 밝히고자 함이며, 동시에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위한 부서 배치 및 업무 개선 방향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업무 네트워크 구조란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닌 부서의 입장과 행위에 의해 변화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네트워크에 근거한 업무구조 분석은 이해관계자의 협업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이해당사자의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개별적 속성만으로 구조를 규정하는 경제학적 분석이나 모든 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고전적인 구조주의적 접근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부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해당사자들간 관계에 근거한 협업의 구조적 모습을 밝히며, 동시에 각 쟁점들간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부서)와 그들간의 유관성을 분석한다.

1. 부서 간 협업 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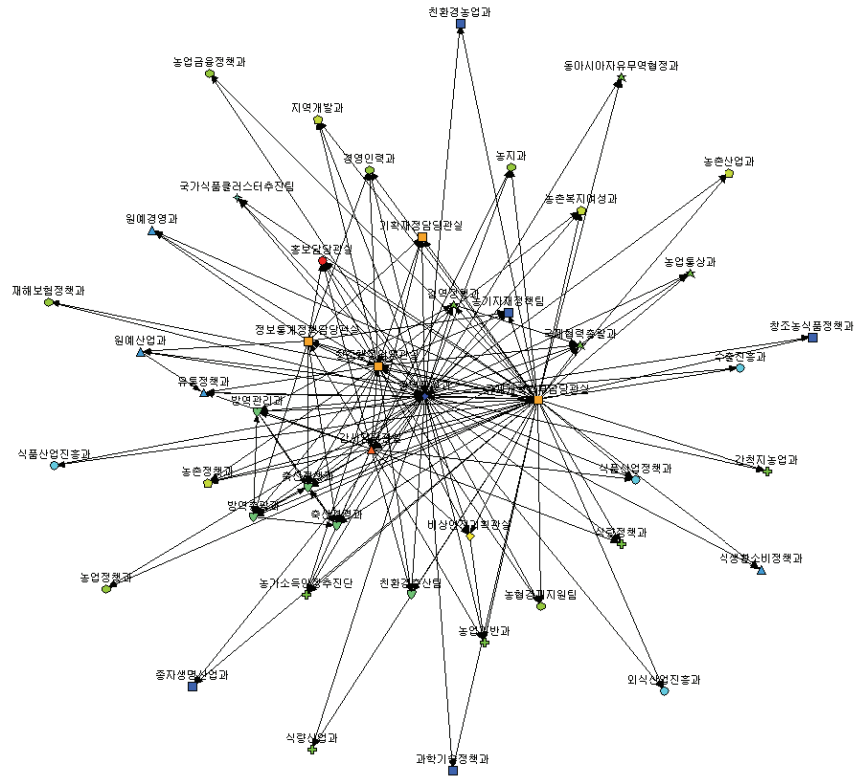
여기서는 각 이해당사자간 인접망(adjacency network)을 통하여 경기도의 부서간 협업 혹은 갈등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결망은 46(농림부내 전체 부서(과) 수)*46⁴의 매트릭스(adjacency matrix)로 구성되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네트워크의 선(링크)의 성격은 각 부서(과)간에 오간 업무협조 공문을 의미하며, 주고 받은 공문 수(數)의 강도(Weight) 정보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농림부 주요 부서의 협업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33> 농림축산식품부 부서(과)간 협업 네트워크(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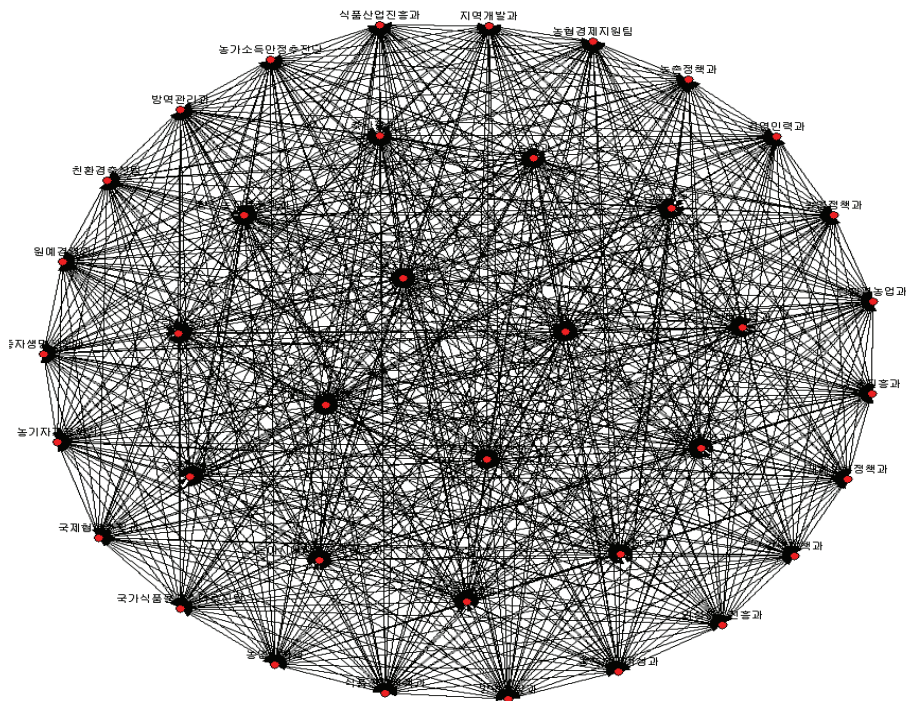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4만여 건(2016년 기준 43,270건)의 부서간 업무 협조 공문 네트워크를 통해 직관적인 업무 협조 관계 파악이 곤란하므로, 부서간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매트릭스 값을 이분화(dichotomization)하여 네트워크 고찰하였다. 아래그림은 100건의 협조 공문값을 절삭값(cut-off value)으로 치환한 매트릭스의 네트워크 지도를 나타낸다.

4) 조직도 상의 부서(과) 수와 별개로 실제 업무협조 공문이 전달된 부서(과)를 기준으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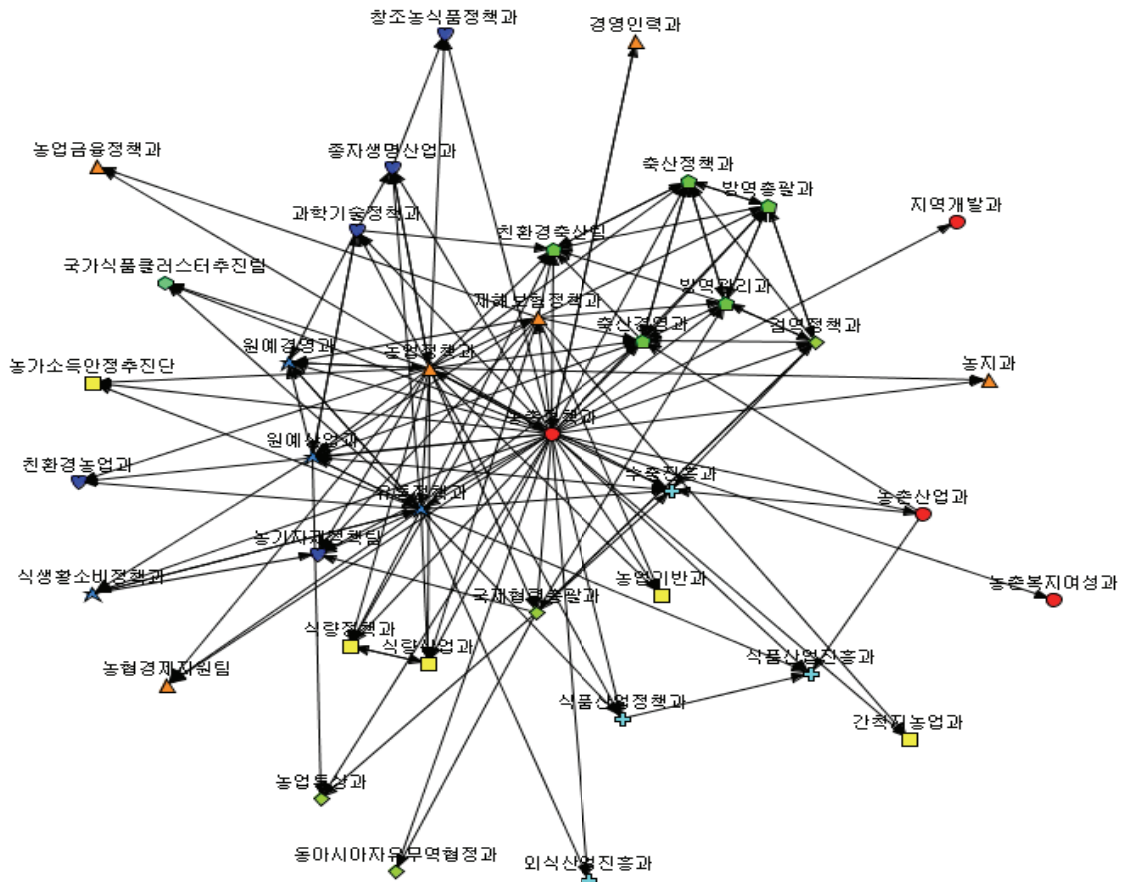
<그림 3-34> 이분화(GT>100) 결과 업무 협조(공무) 네트워크

아래의 그림은 일상적인 업무 협조 공문의 발신처라 파악되는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운영지원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등 8개 부서를 제외한 업무 협조 공문 네트워크 결과이다.



<그림 3-35> 농림축산식품부 부서(과)간 협업 네트워크(8개과 제외)

아래 그림은 8개 부서를 제외한 부서간 업무 협조 네트워크에서 45건의 협조 공문값을 절삭값(cut-off value)으로 치환한 매트릭스의 네트워크 지도를 나타낸다.



<그림 3-36> 이분화(GT>45) 결과 업무 협조(공무) 네트워크(8개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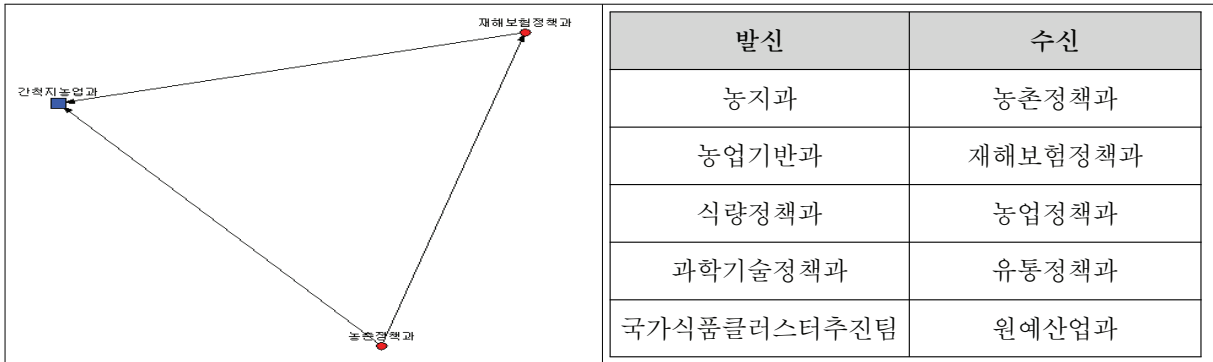
2. 부서별 협업 네트워크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빈도 건수를 45건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은 최소 2016년 동안 45건 협업 네트워킹이 이뤄진 부서로서 업무의 협업 빈도정도를 알 수 있다. 옆의 표는 공문서 발신과 수신이 가장 높은 부서 5개씩을 정리한 것이다.

1) 간척지농업과

간척지농업과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빈도가 낮은 부서이며 문서 수신횟수가 문서 발신횟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빈도가 높은 부서는 농촌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정책과와 협업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농촌정책과와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재해보험정책과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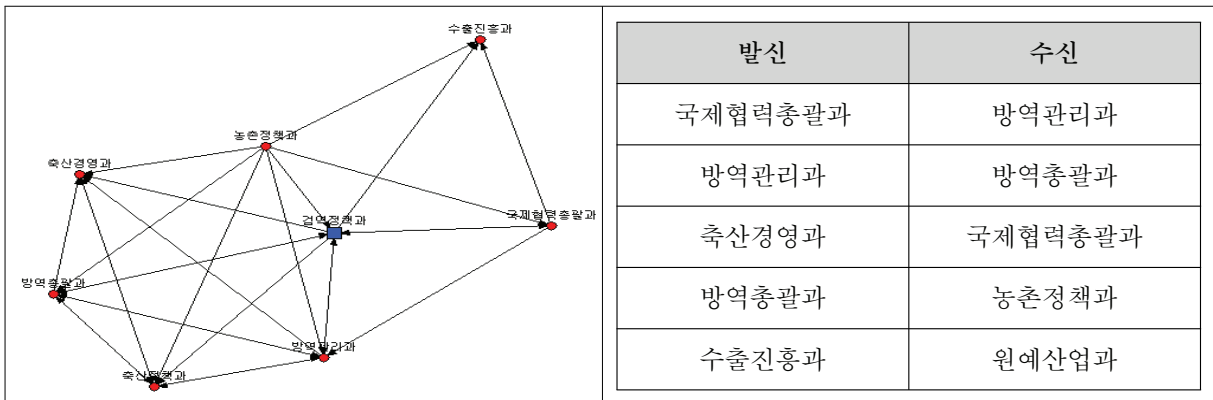
<표 3-9> 간척지농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 검역정책과

검역정책과는 앞에서 분석한 간척지농업과보다는 많은 부서와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정책과, 방역관리과, 축산정책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와의 빈도가 수출진흥과와 국제협력총괄과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역관리과와 가장 많이 협업을 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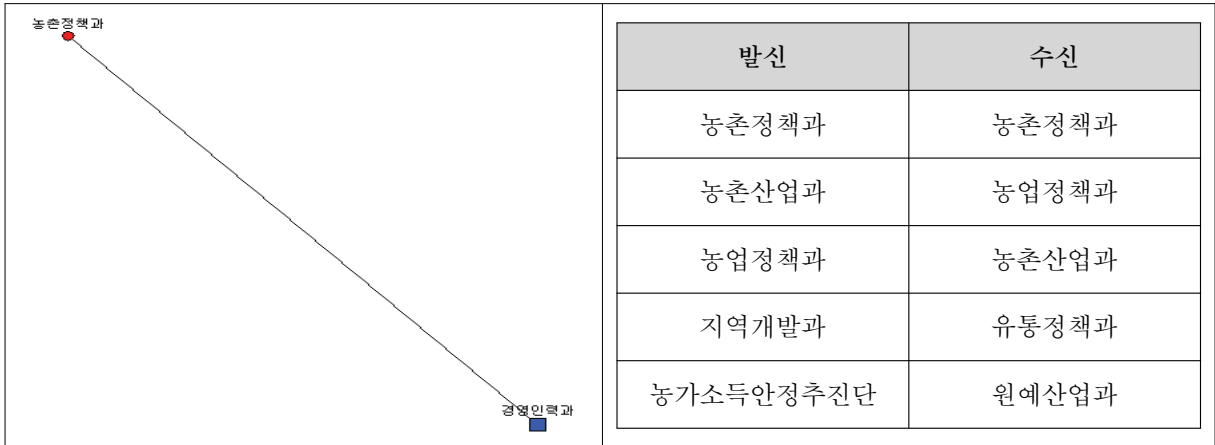
<표 3-10> 검역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 경영인력과

경영인력과는 중간수준의 빈도를 나타내는 부서로서 빈도횟수가 45회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서는 농촌정책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서와 균등한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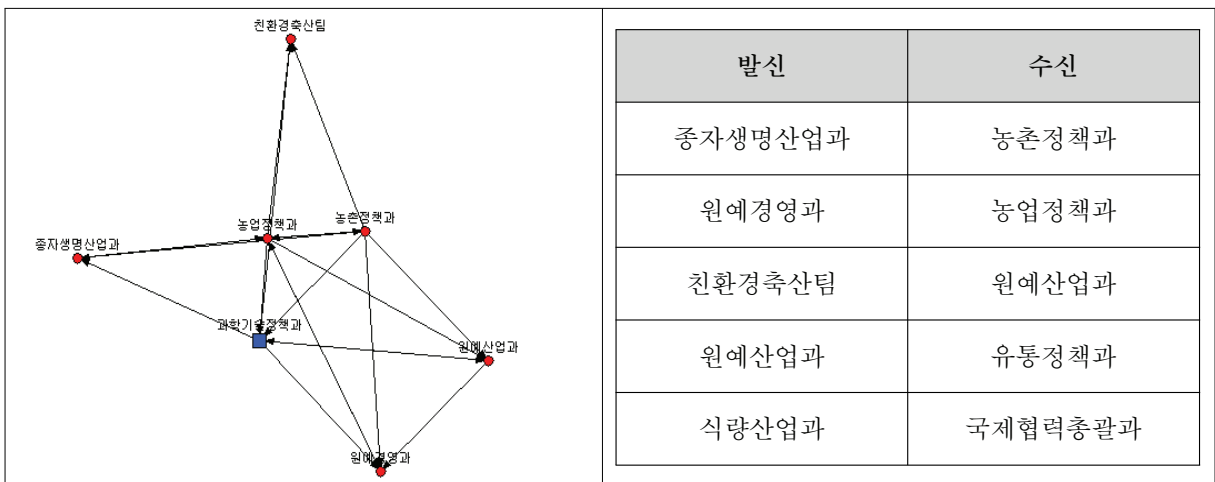
<표 3-11> 경영인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4)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부서와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와 협업 네트워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높은 곳은 농촌정책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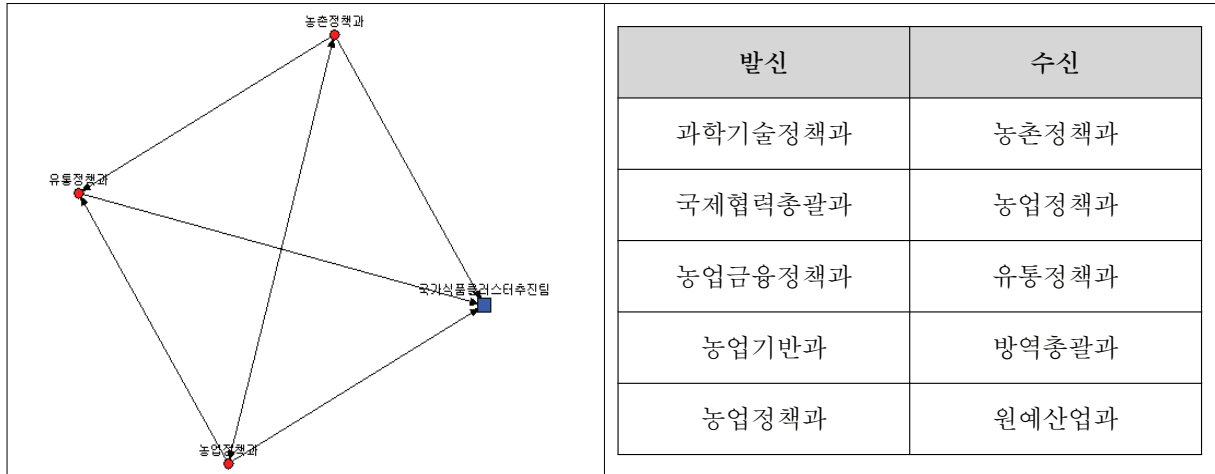
<표 3-12> 과학기술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5)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전체부서 중 네트워크 빈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서 발신했수보다는 수신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요청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와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농촌정책과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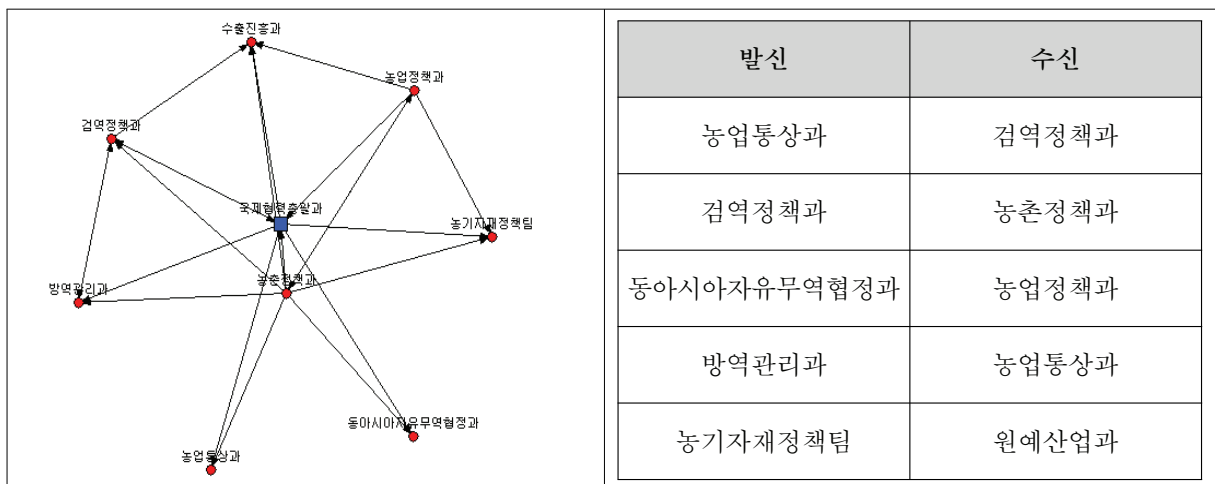
<표 3-1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네트워크 분석결과



6) 국제협력총괄과

국제협력총괄과는 전체적으로 많은 네트워크 빈도가 형성되는 부서이다. 특히 검역정책과, 농업통상과,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등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검역정책과, 농업통상과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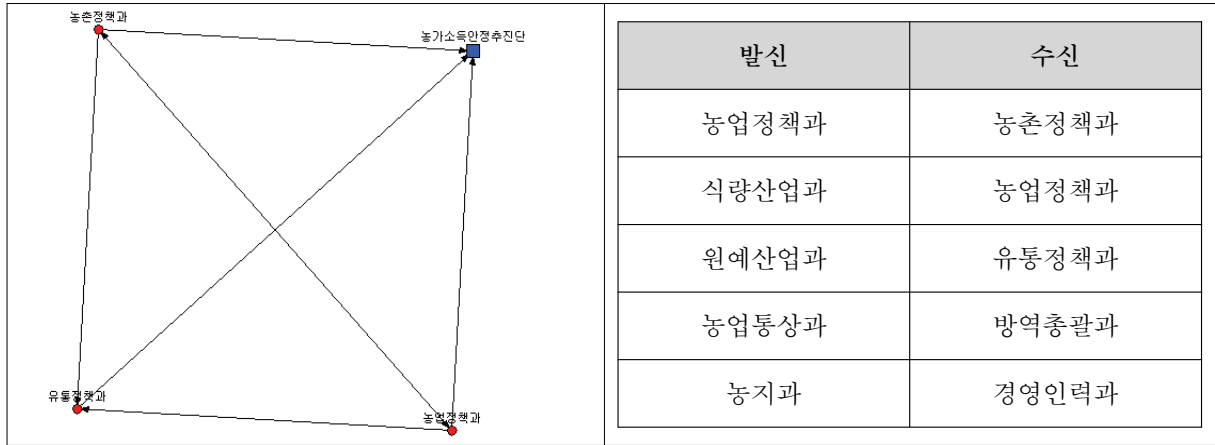
<표 3-14> 국제협력총괄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7)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빈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문을 발송한 것보다 수신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업무협조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로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와의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정책과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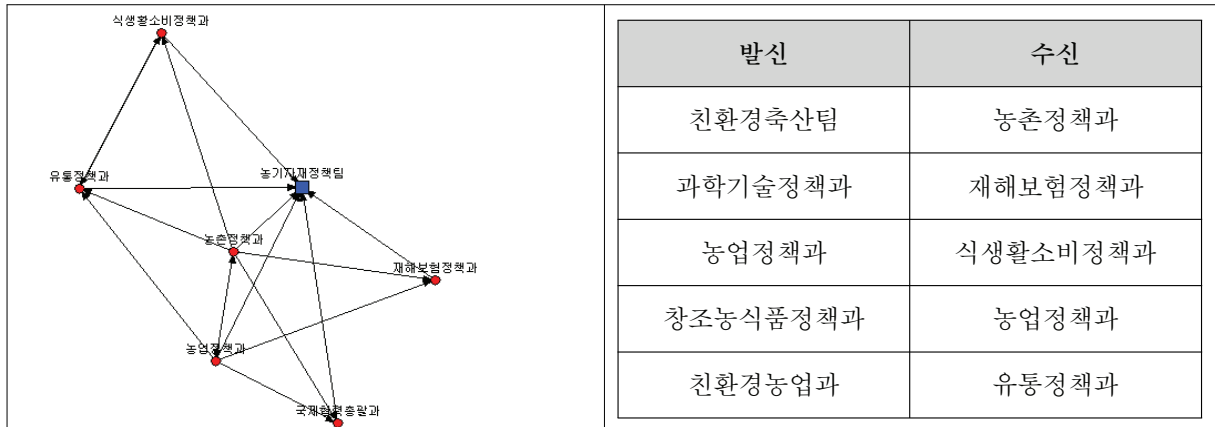
<표 3-15>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네트워크 분석결과



8) 농기자재정책팀

농기자재정책팀은 수신 및 발신 횟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요청과 요구에 대한 협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중 네트워크 빈도가 높았던 부서로는 식생활소비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정책과, 국제협력총괄과가 있으며 그중 농촌정책과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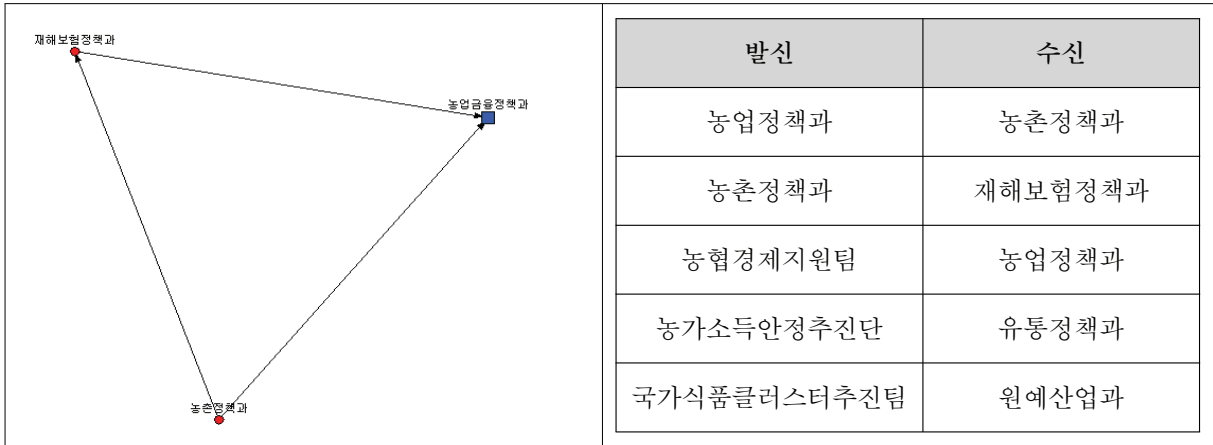
<표 3-16> 농기자재정책팀 네트워크 분석결과



9)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는 수신과 발신 횟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신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 업무협조 요청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중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촌정책과의 네트워크 빈도가 높았으며 농촌정책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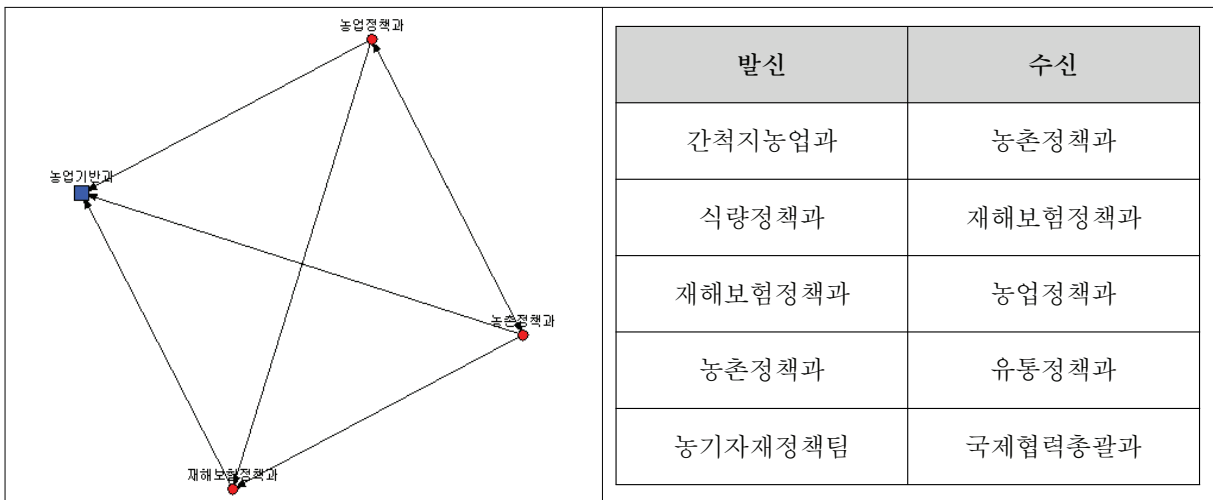
<표 3-17> 농업금융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0) 농업기반과

농업기반과는 전체 부서 중 두 번째로 네트워크 빈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서 주로 문서를 수신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가 나타났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곳으로는 농촌정책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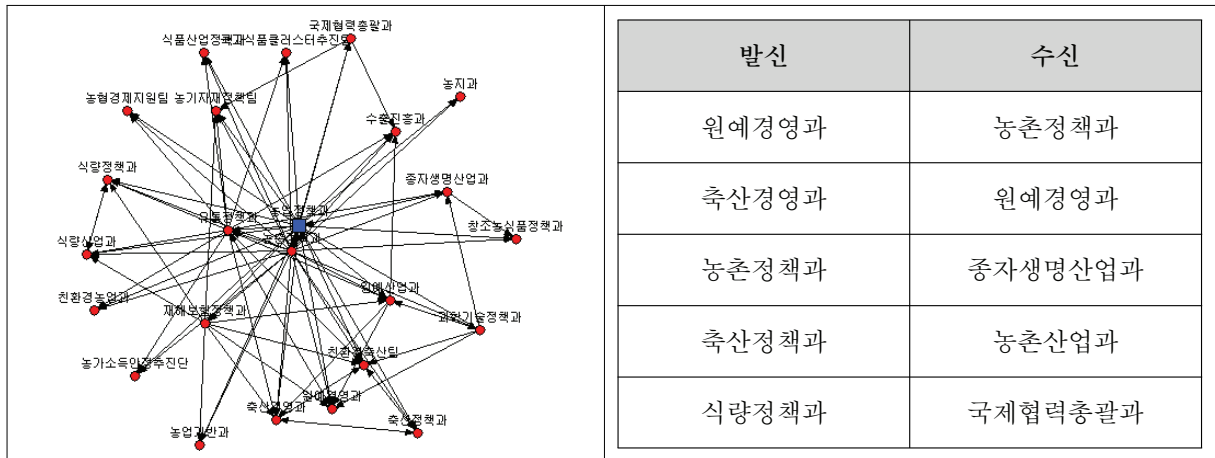
<표 3-18> 농업기반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1) 농업정책과

전체 부서 중(농업, 농촌과 관련 없는 8개 부서를 제외한 자료) 네 번째로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이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다양한 부서와 45회 이상 네트워크 횟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 원예산업과, 재해보험정책과, 수출진흥과, 원예경영과, 축산경영과, 재해보험정책과 등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원예경영과와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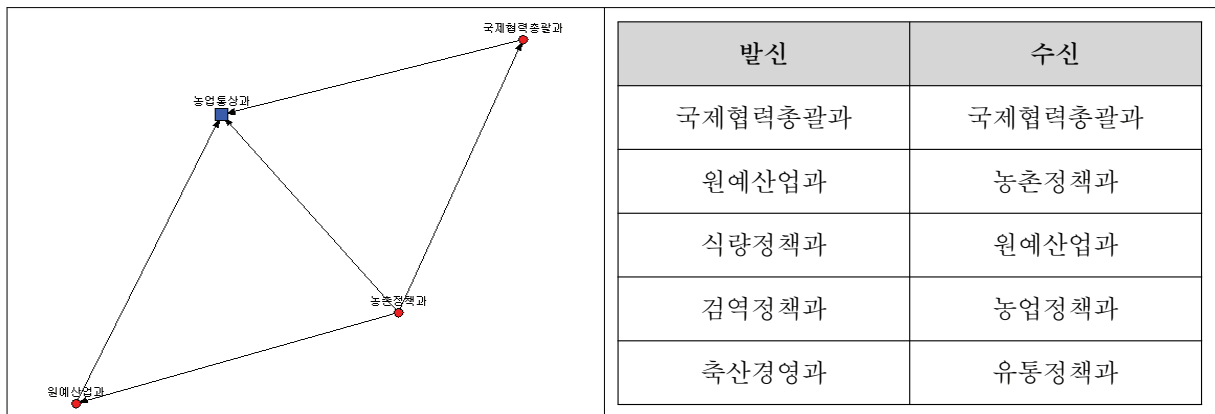
<표 3-19> 농업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2) 농업통상과

농업통상과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주로 문서를 발신하는 부서로 나타났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국제협력총괄과로부터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업무와 농업통상의 특성상 그러한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협력총괄과, 농촌정책과, 원예산업과의 업무빈도가 높았으며 그중에서 국제협력총괄과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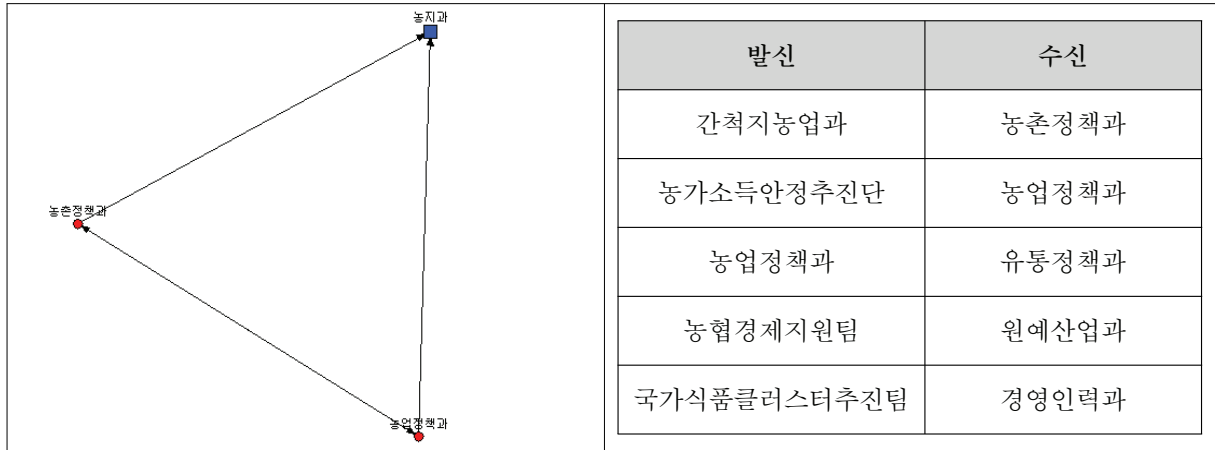
<표 3-20> 농업통상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3) 농지과

농지과 미묘한 차이로 주로 문서를 수신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묘하여 수신과 발신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 농업정책과와 농촌정책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농촌정책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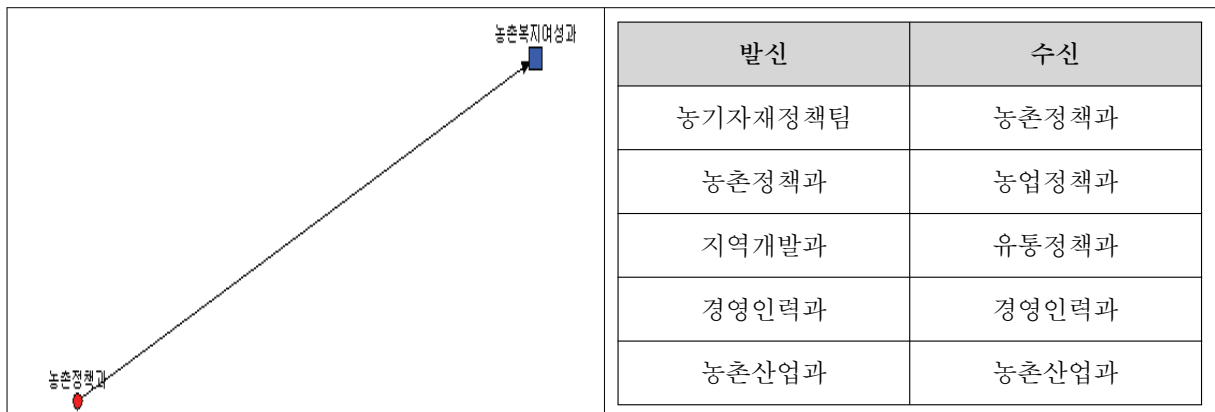
<표 3-21> 농지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4) 농촌복지여성과

농촌복지여성과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빈도가 낮으며 주로 문서를 수신하는 부서로 나타났다. 경영인력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농촌정책과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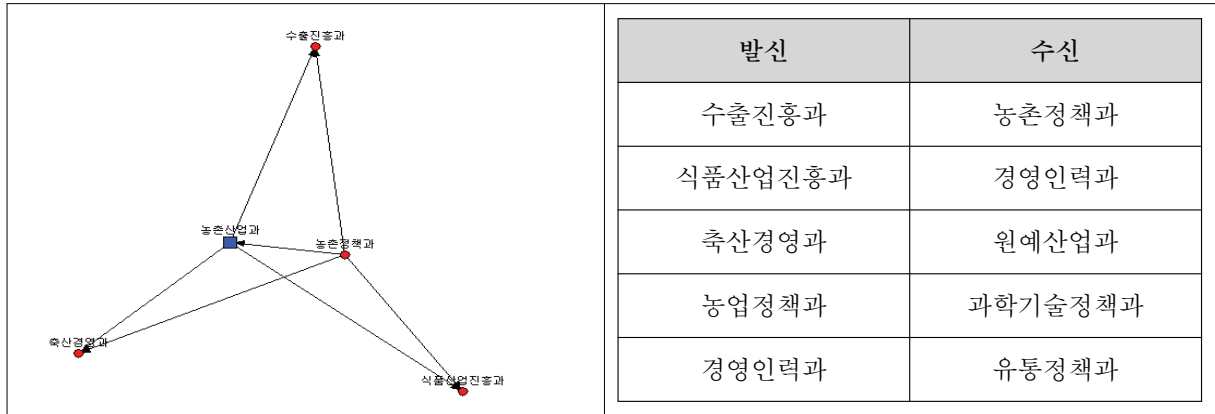
<표 3-22> 농지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5) 농촌산업과

농촌산업과는 주로 공문을 발신하는 부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서와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농촌정책과, 수출진흥과, 식품산업진흥과, 축산경영과 등과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난 부서는 농촌정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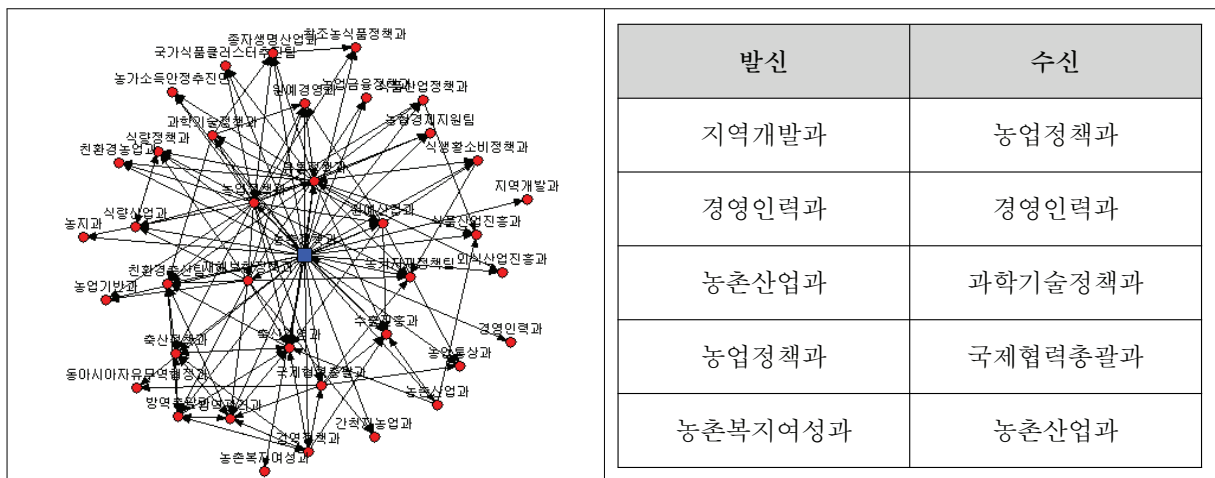
<표 3-23> 농촌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6) 농촌정책과

농촌정책과는 전체부서 중 네트워크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이다. 거의 대부분의 부서와 높은 빈도로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주로 공문을 발송하는 부서로서 수신하는 빈도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경영인력과,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 과학기술정책과 등과 높은 빈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정책과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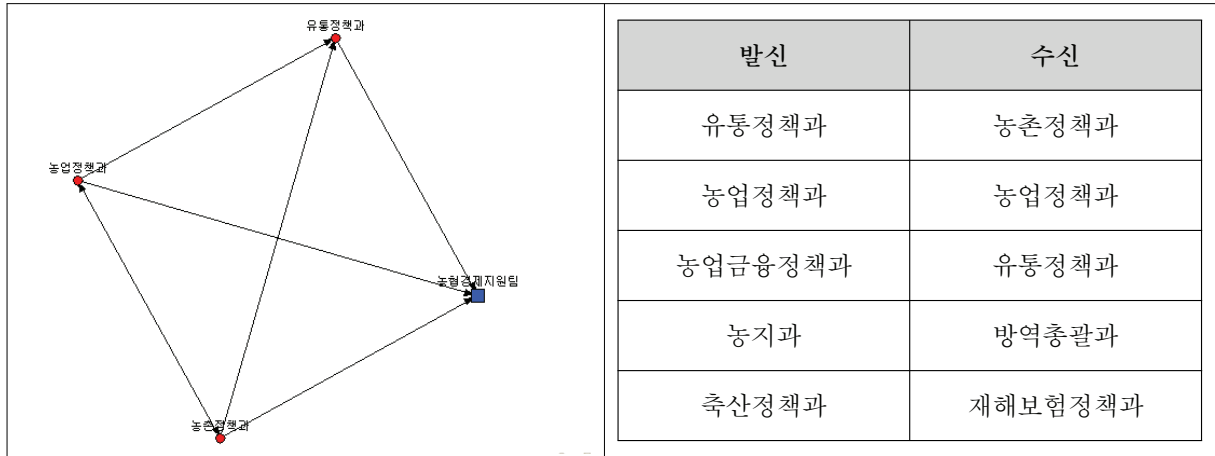
<표 3-24> 농촌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7) 농협경제지원팀

농협경제지원팀은 네트워크 빈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부서이다. 주로 문서를 발신하기 보다는 수신하는 부서로서 유통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와 높은 네트워크 빈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 농촌정책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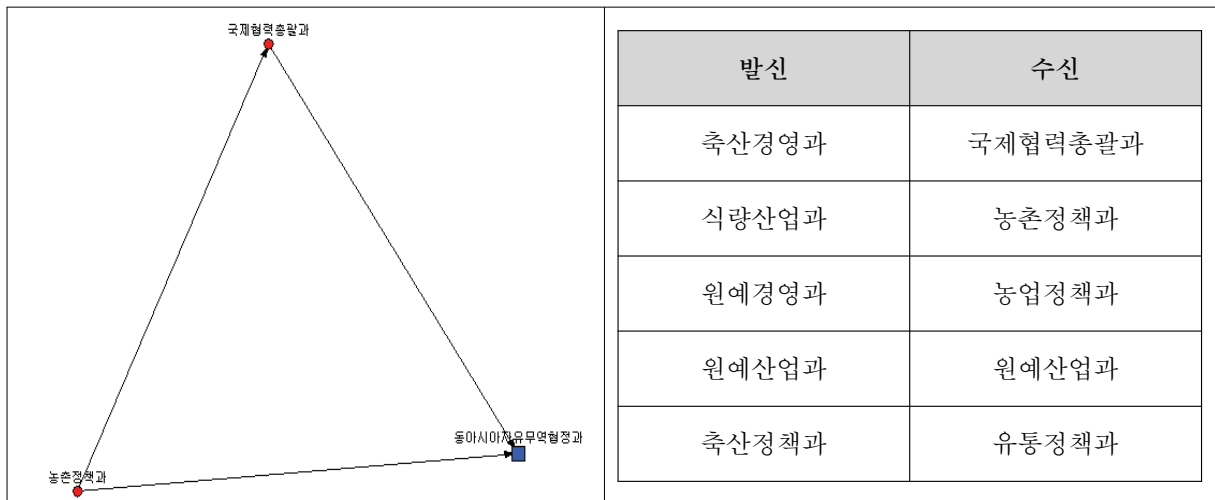
<표 3-25> 농협경제지원팀 네트워크 분석결과



18)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역시네트워크 빈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부서이다. 문서수신 횟수가 발신횟수보다 높았으며 국제협력총괄과, 농촌정책과와 높은 네트워크 빈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 국제협력총과와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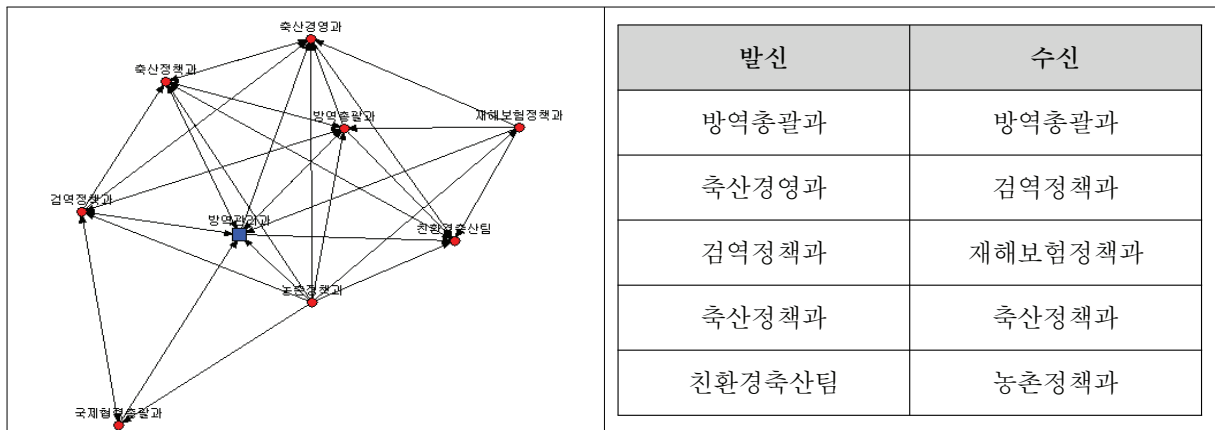
<표 3-26>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19) 방역관리과

방역관리는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빈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정 부서와의 많은 네트워크 활동 때문에 전체부서 중 두 번째로 네트워크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부서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주요부소로는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촌정책과, 검역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친환경축산팀, 국제협력총괄과가 있다. 특히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와의 빈도가 눈에 띄게 높다. 그중 방역총괄과와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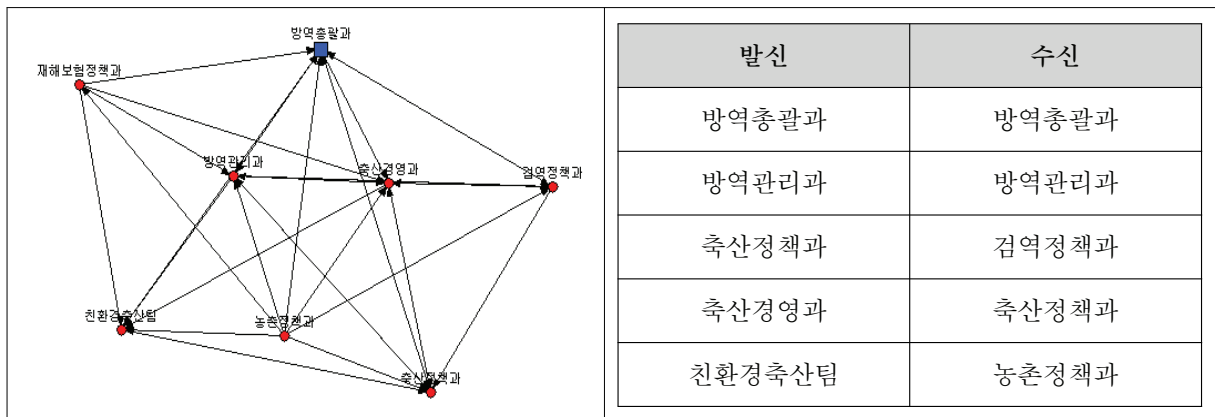
<표 3-27> 방역관리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0) 방역총괄과

방역총괄과는 위에서 언급한 방역관리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부서와는 많은 횟수의 빈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몇몇 특정 부서와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은 부서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전체에서 3번째로 높은 부서이다. 그리고 방역총괄과 문서를 발송하는 부서이다. 검역정책과, 방역관리과, 농촌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등과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그 중에서 방역관리과와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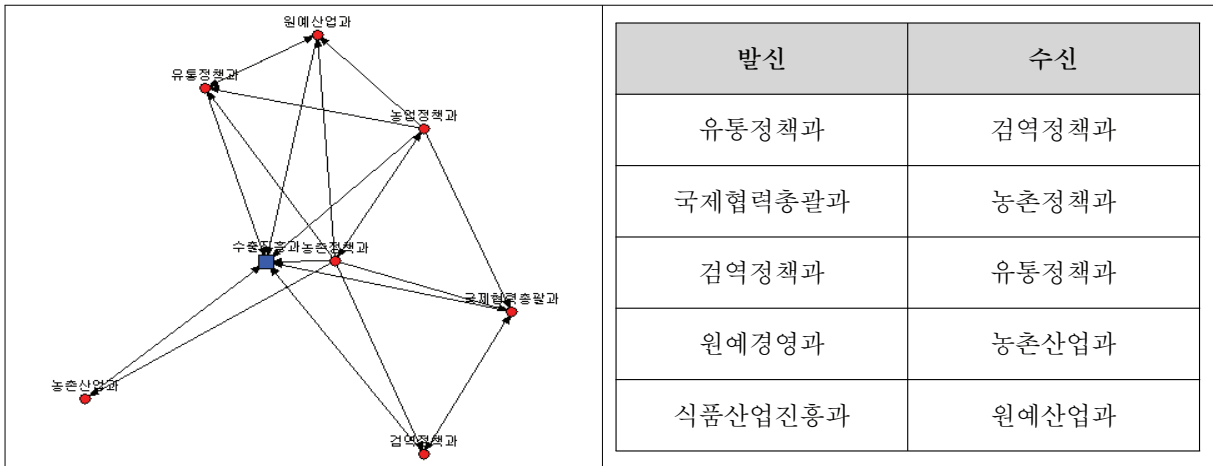
<표 3-28> 방역총괄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1) 수출진흥과

수출진흥과는 빈도가 세 번째로 낮은 부서로서 주로 문서를 수신하는 부서이다. 문서 수신과 발신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이 눈여겨 볼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출진흥과에 문서를 보내는 부서로는 검역정책과,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정책과, 농촌산업과, 농촌정책과, 원예경영과, 유통정책과 등이 있다. 가장 높은 부서로는 검역정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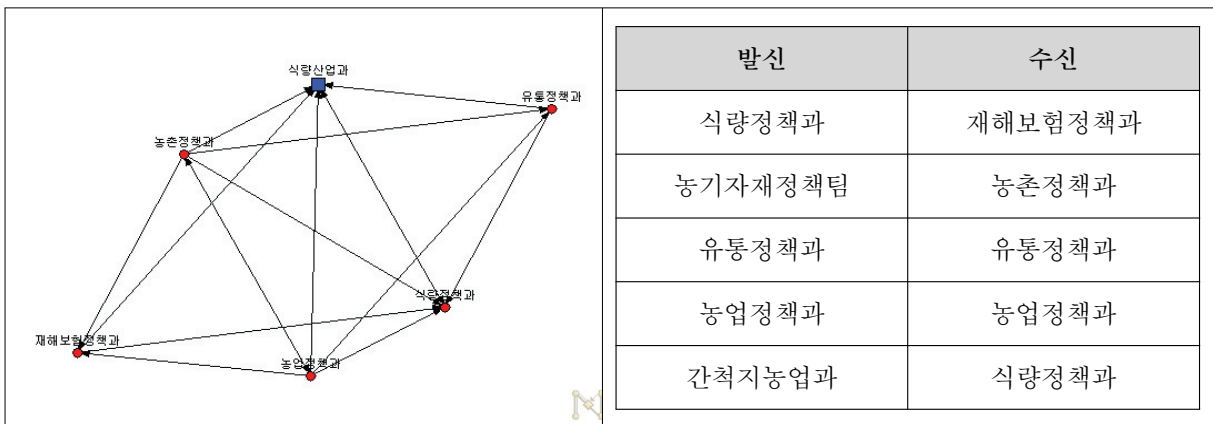
<표 3-29> 수출진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2) 식량산업과

식량산업과는 중간수준의 네트워크 빈도를 나타내는 부서로서 문서 수신과 발신 차이도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서를 보내는 만큼 받는다는 것이다. 주로 네트워킹을 하는 부서로는 유통정책과, 농촌정책과, 식량정책과, 농업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가 있다. 그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는 식량정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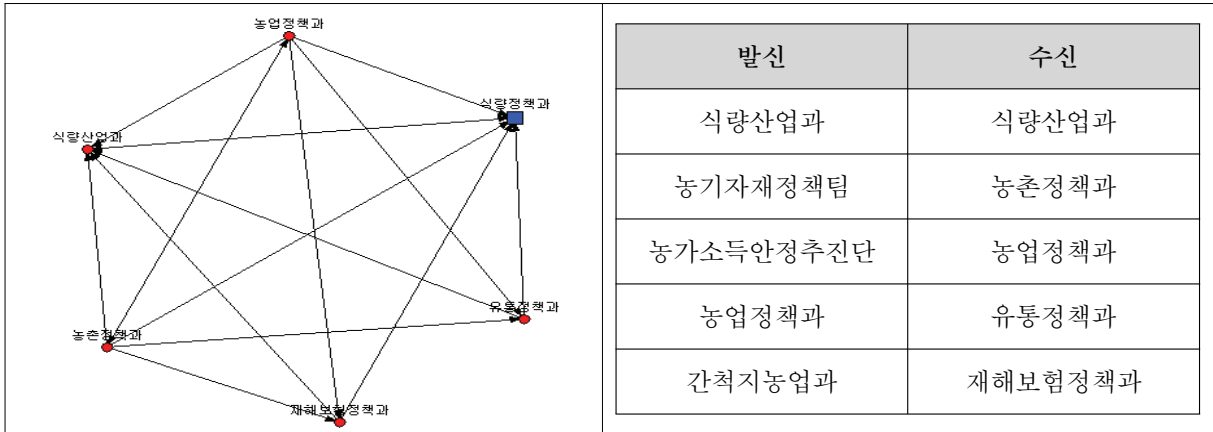
<표 3-30> 식량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3) 식량정책과

식량정책과는 위에서 언급한 식량산업과와 모든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다. 중간수준의 네트워크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서 수신과 발신 차이도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네트워킹을 하는 부서로는 유통정책과, 농촌정책과, 식량산업과, 농업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가 있다. 그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는 식량산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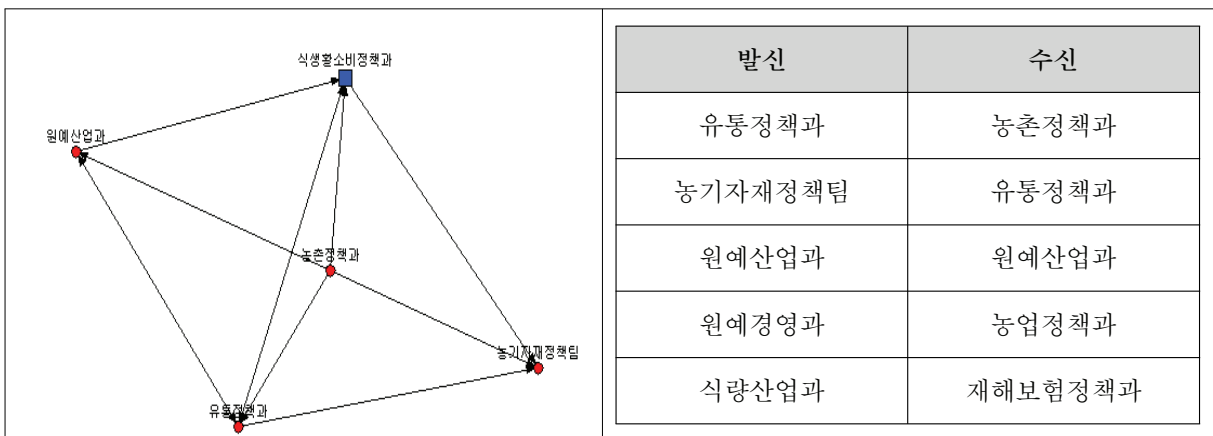
<표 3-31> 식량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4) 식생활소비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부서들과 중간 수준의 네트워크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주로 문서를 발신하는 부서로 나타난다. 주로 네트워킹 하는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 원예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이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은 유통정책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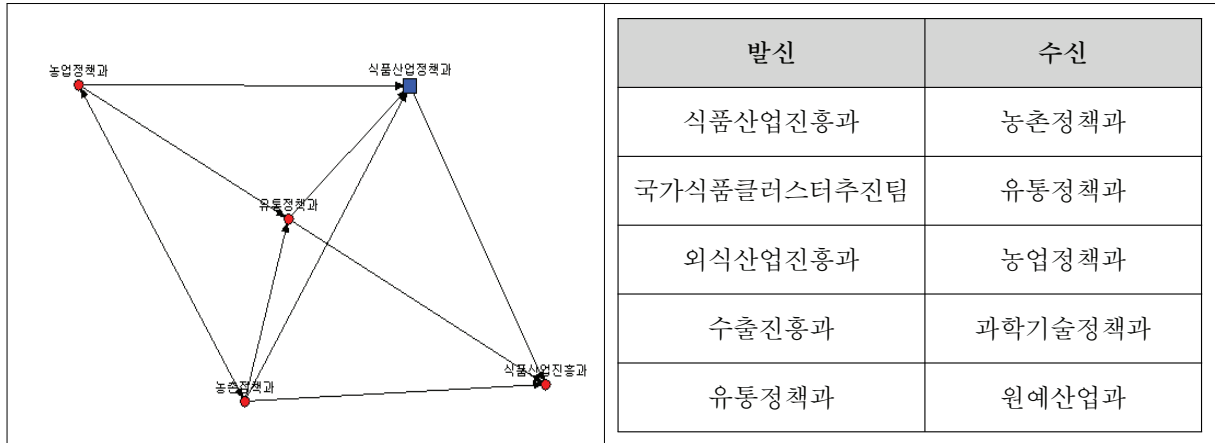
<표 3-32> 식생활소비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5)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부서들과 중간수준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문서 수신과 발신 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식품산업진흥과, 유통정책과,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가 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은 농촌정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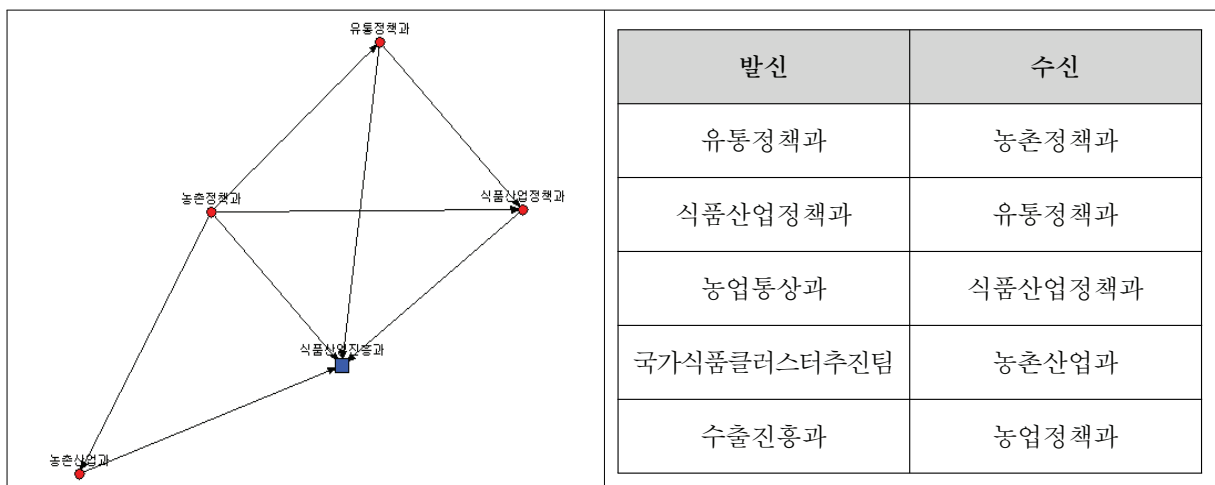
<표 3-33> 식량산업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6)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산업진흥과는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는 부서이다. 그리고 주로 문서를 받는 곳이다.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산업과, 농촌정책과, 식품산업정책과, 유통정책과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부서는 농촌정책과이지만 식품산업정책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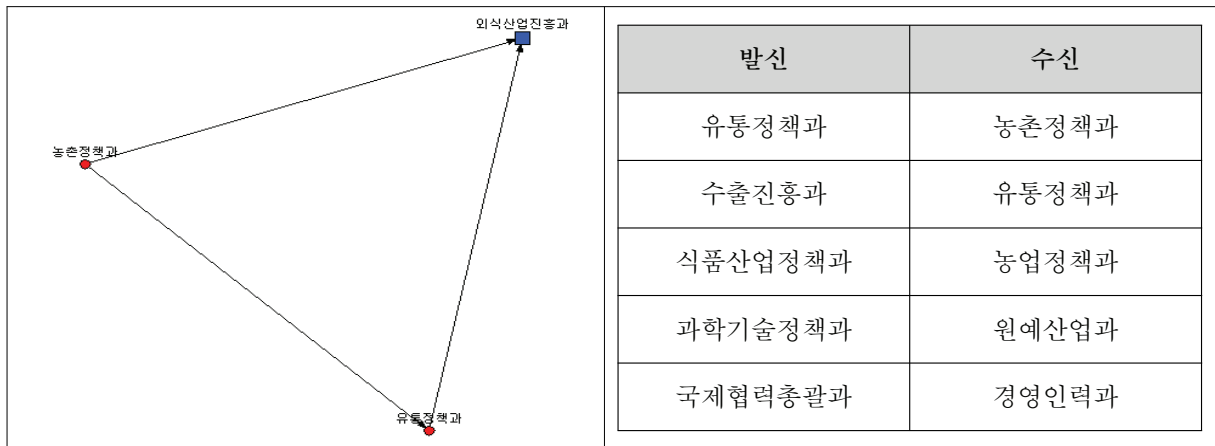
<표 3-34> 식량산업진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7)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빈도가 낮은 곳이며 문서를 수신한 빈도가 높은 곳이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가 있으며, 가장 높은 부서는 농촌정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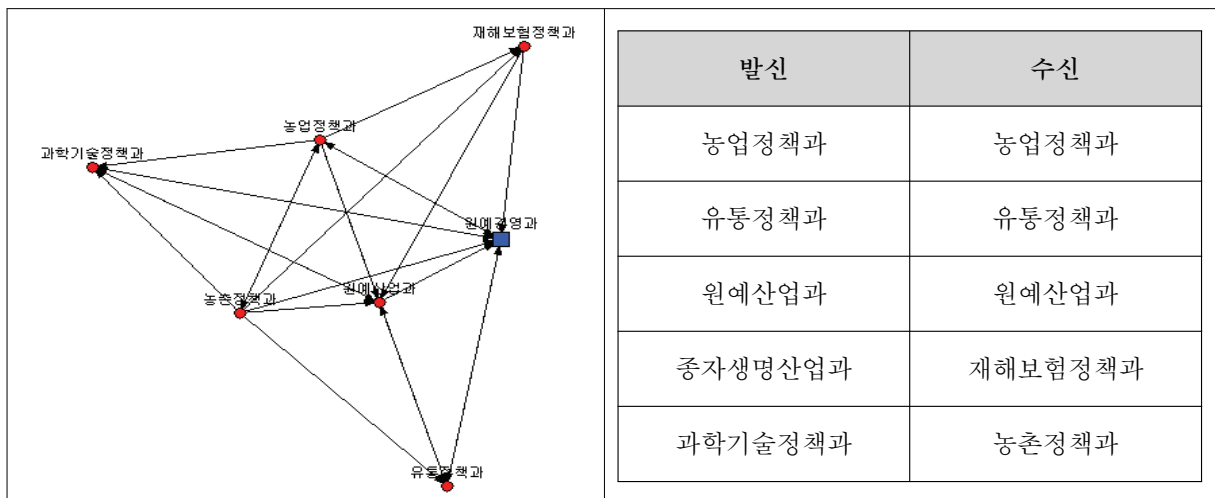
<표 3-35> 외식산업진흥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8)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는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의 빈도를 보이는 부서이며 문서를 수신하는 빈도가 발송하는 빈도보다 높은 부서이다. 주로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부서로는 원예산업과,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유통정책과 등이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부서는 농업정책과이다. 하지만 유통정책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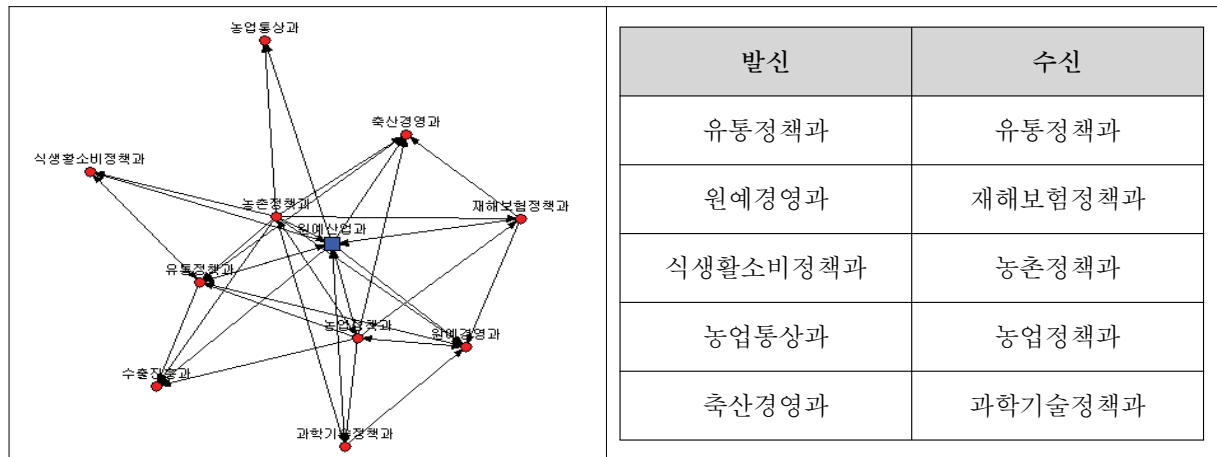
<표 3-36> 원예경영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29) 원예산업과

원예산업과는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주로 문서를 보내는 부서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축산경영과, 수충진흥과, 농업통상과 등이 있다. 그중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유통정책과장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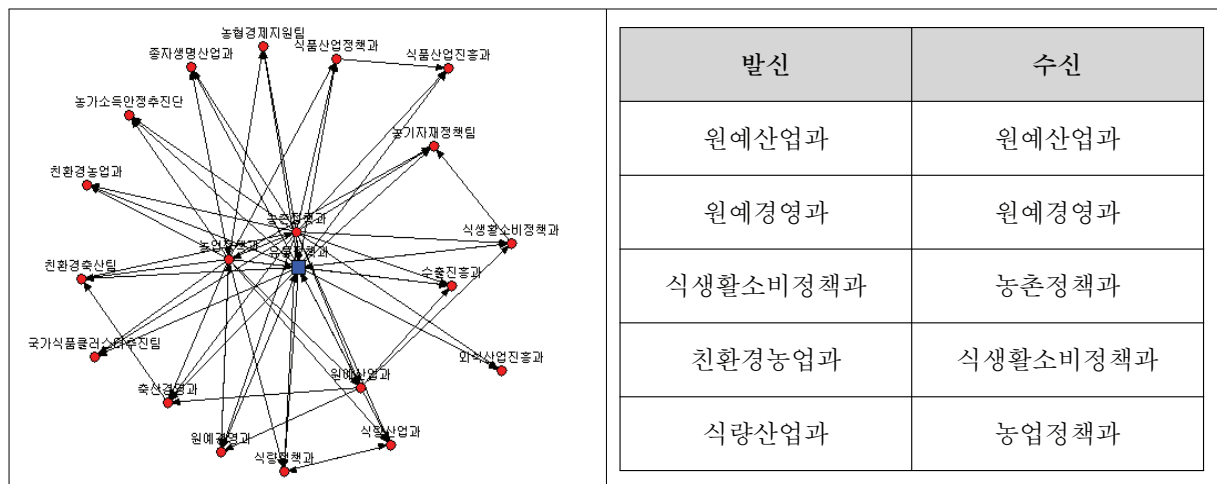
<표 3-37> 원예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0) 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는 전체 부서 중 4번째로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이다. 전 부서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문서를 발송하는 수치가 더 높은 곳이다. 빈도가 높은 곳으로는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등이 있다. 그중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로는 원예산업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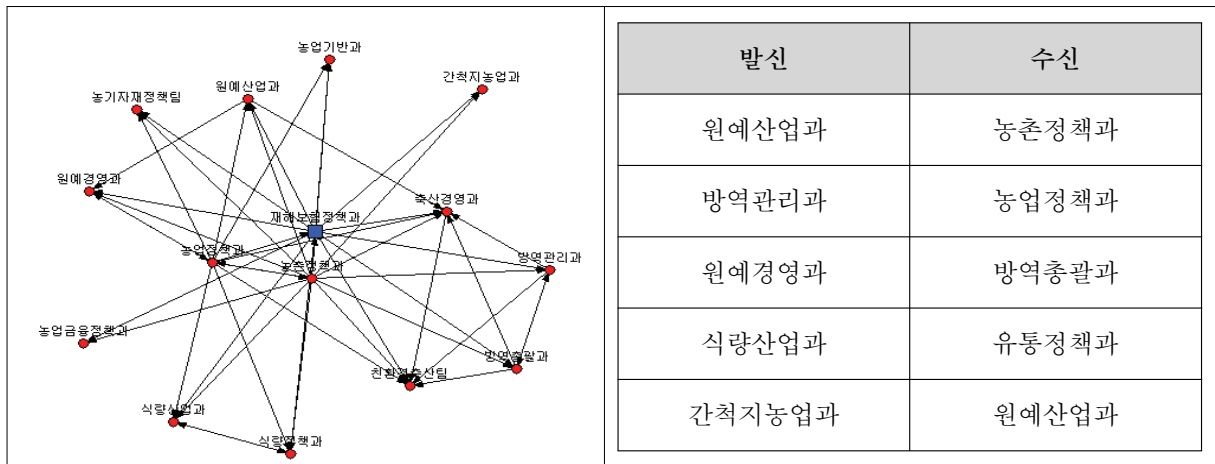
<표 3-38> 유통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1) 재해보험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문서를 발송하는 횟수가 수신하는 횟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방역관리과, 간척지농업과 등이 있다.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로는 원예산업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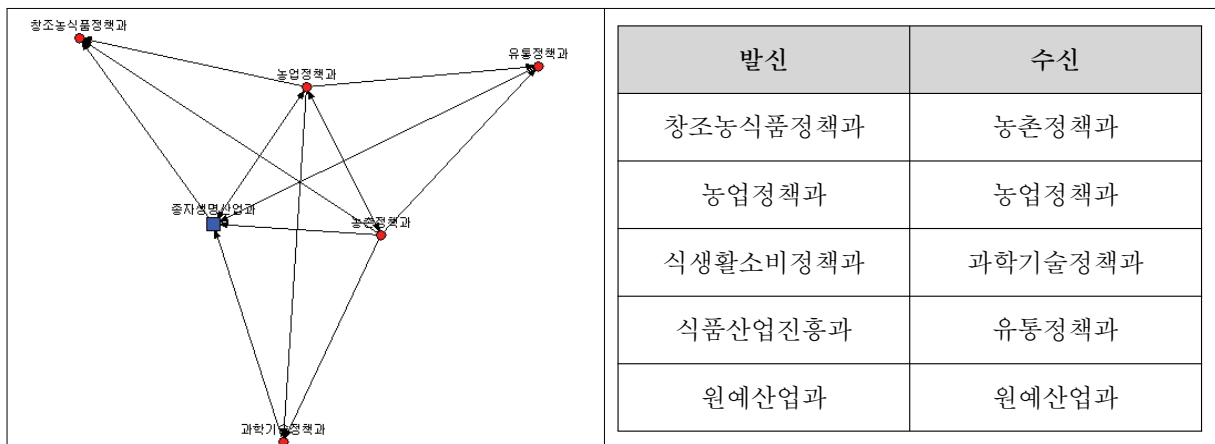
<표 3-39> 재해보험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2)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생명산업과는 전체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서이며 문서를 발송하는 횟수가 수신하는 횟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횟수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등이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정책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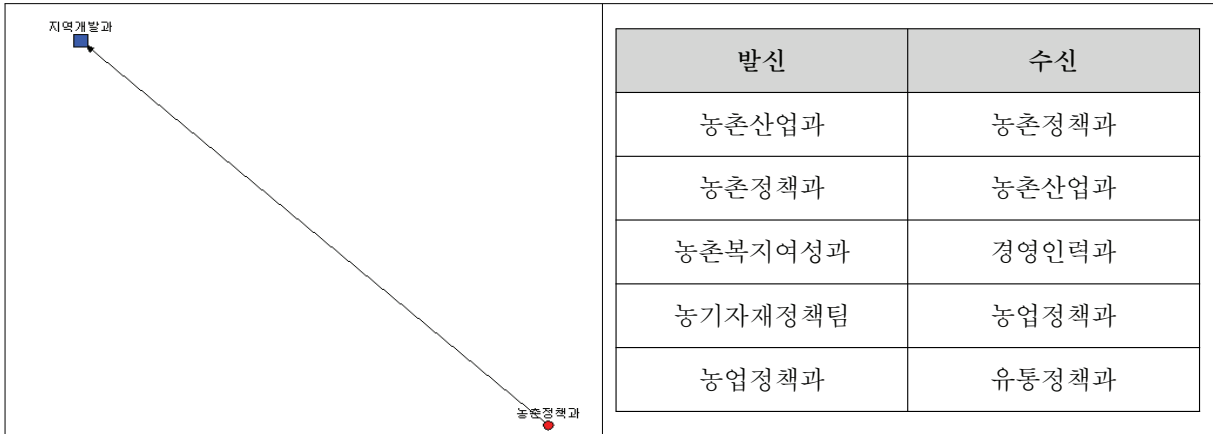
<표 3-40> 종자생명산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3)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빈도가 낮은 부서로 나타났으며 문서 수신이 더 높은 곳으로 확인되었다.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경영인력과, 농업정책과, 농촌산업과,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는 농촌정책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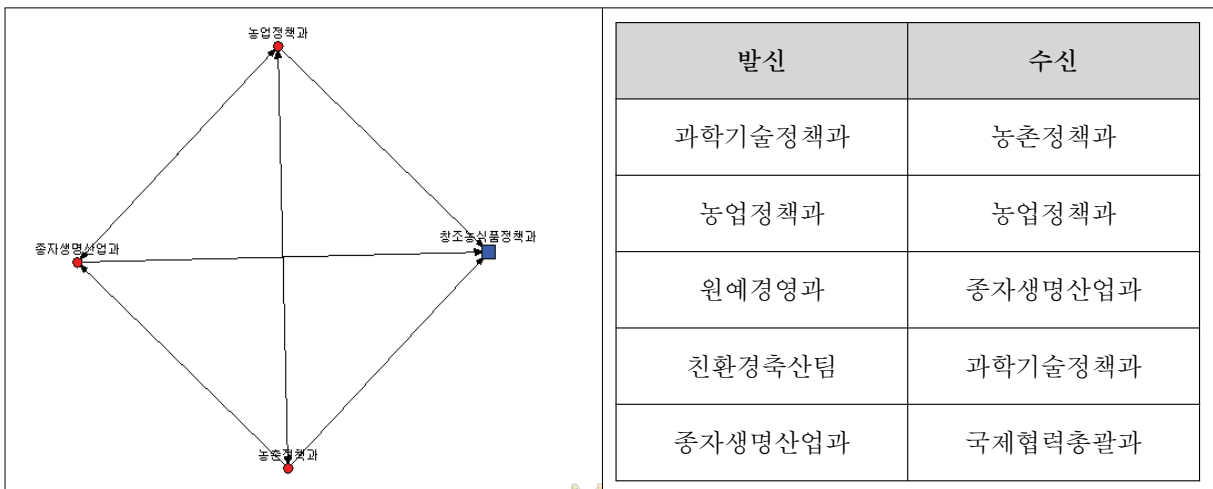
<표 3-41> 지역개발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4) 창조농식품정책과

창조농식품정책과의 전체 빈도는 중산수준이며 수신과 발신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는 농업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촌정책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서는 농촌정책과이지만 농업정책과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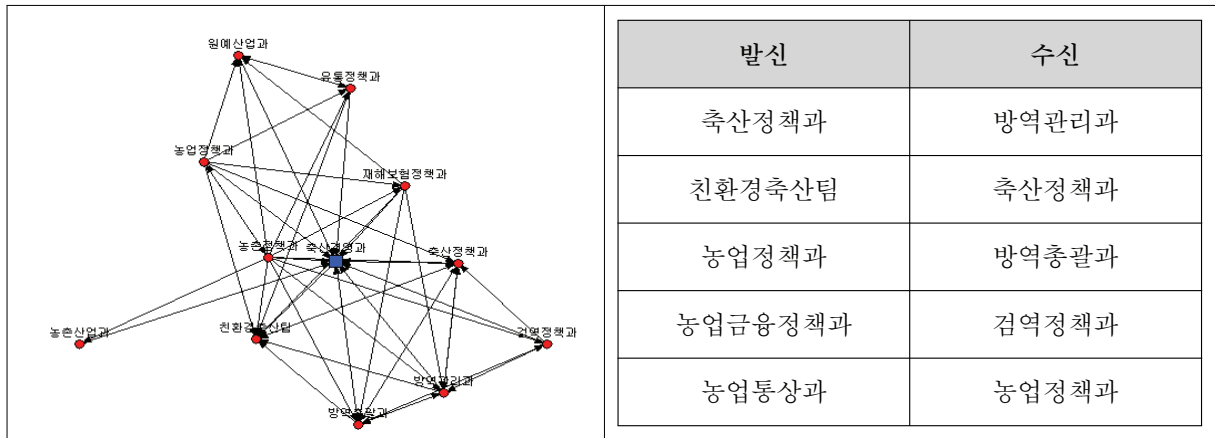
<표 3-42> 창조농식품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5)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는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한 부서이다. 다른 높은 부서와는 달리 문서 수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검역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정책과 등이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부서는 방역관리과이다. 이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이 발견되는데 수신 횟수대비 방역관리과로부터 아주 많은 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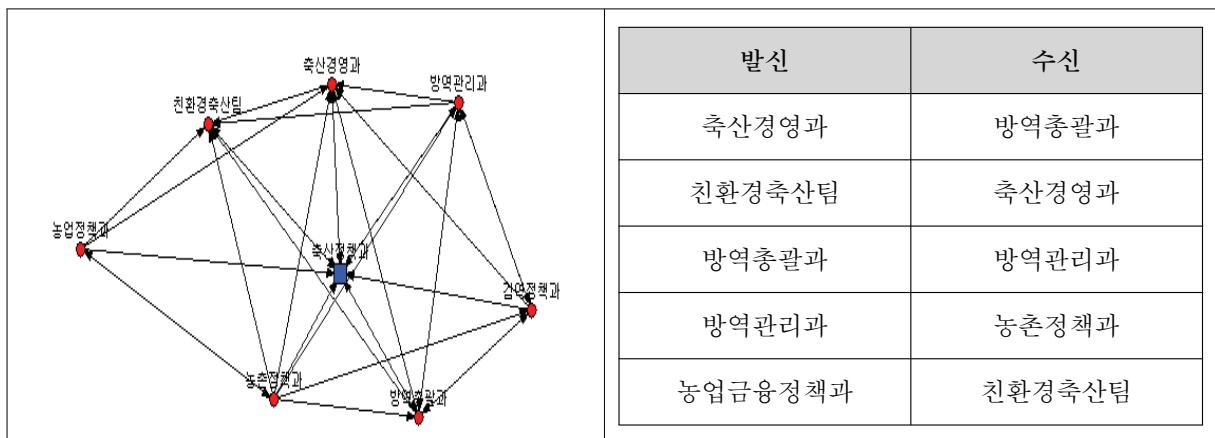
<표 3-43> 축산경영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6)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는 축산경영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빈도의 부서이며 수신과 발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는 축산경영과, 친환경축산팀,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등과 높은 빈도가 나타난다. 가장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축산경영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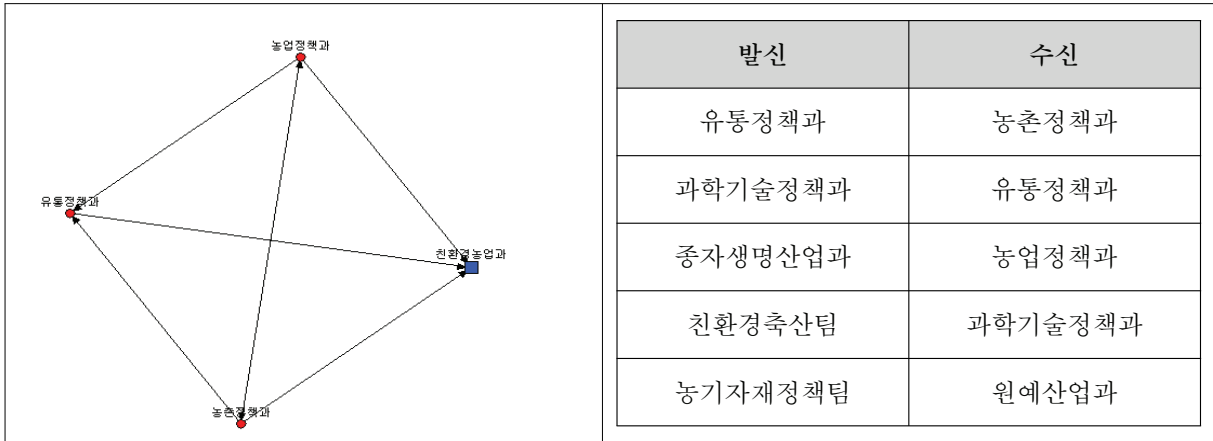
<표 3-44> 축산정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7)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빈도가 낮은부서로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문서 수신 횟수가 조금 더 많은 부서로 나타났다. 빈도가 높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유통정책과가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유통정책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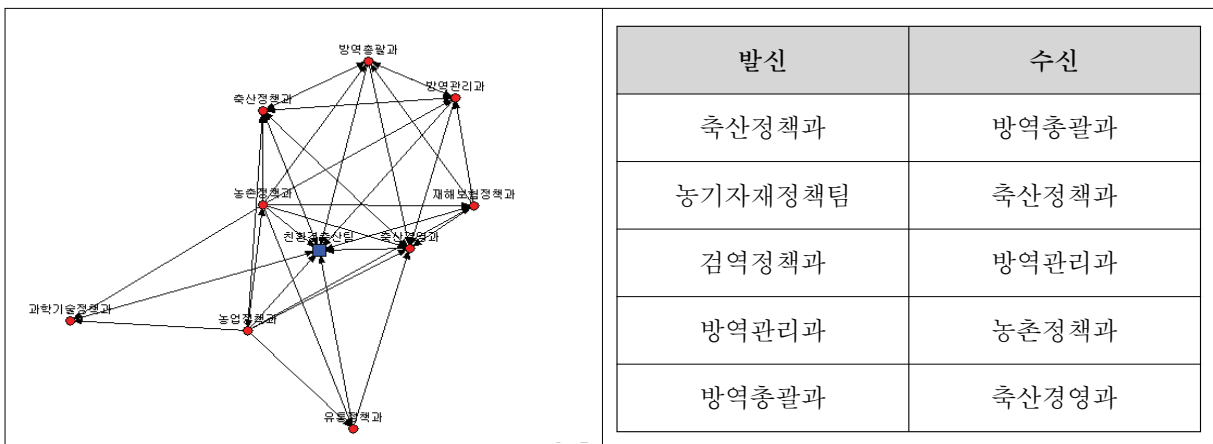
<표 3-45> 친환경농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8) 친환경축산팀

친환경축산팀은 빈도가 높은 편의 부서로서 문서를 수신하는 횟수와 발신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한 부서이다. 그중 빈도가 높은 부서로는 농촌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농업정책과 등이 있다.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는 축산정책과이다.

<표 3-46> 친환경농업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3. 시사점

내부기능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빈도를 분석해봤을 때 세가지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먼저 기능의 독립성과 중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찰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등은 거의 모든 부서와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 독립적이며 타부서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검역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등은 기능에 있어 중복되는, 한번 고민해 볼 여지를 주었다. 두 번째로 기능에 있어 계획부서와 집행부서로 구분이 가능해진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부서는 주로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의 발신과 수신만으로 업무역량, 기능을 전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발신이 현저히 높은 부서는 그 기능에 있어 주로 계획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지만 전체 빈도가 높은 상위 부서들은 문서를 수신하기보다는 발신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로 문서를 수신하는 부서는 기능에 있어 정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표에서 전체 빈도가 낮은 부서들은 문서 수신 빈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발신↑	수신↓
기능 분류	계획 부서	집행 및 시행부서
빈도 횟수	전체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전체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세번째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성 정도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신폭수가 높은 부서가 전체 네트워크 빈도횟수로 비교했을 때 빈도가 높은 부서에 배치되었다. 즉 상위 50%(총 38개 중 19개) 중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검역정책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발신폭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위 50%는 전부 수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빈도가 높은 것이 기능진단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규범적으로 부서 기능에 대한 적극성 등에 대해서는 한번 고찰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 현황은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47> 문서 발신 및 수신 현황 정리(경영, 운영, 기획 등 8개 부서는 제외)

부서	발신	수신	합계 (발신+수신)	빈도가 높은 순위
농촌정책과	2,503	1,017	3,520	1
방역관리과	1,972	1,282	3,254	2
방역총괄과	1,821	1,414	3,235	3
농업정책과	1,841	1,221	3,062	4
유통정책과	1,763	1,299	3,062	4
원예산업과	1,658	1,194	2,852	6
축산정책과	1,337	1,472	2,809	7
국제협력총괄과	1,627	1,159	2,786	8
친환경축산팀	1,336	1,334	2,670	9
재해보험정책과	1,621	1,014	2,635	10
축산경영과	1,013	1,622	2,635	10

부서	발신	수신	합계 (발신 + 수신)	빈도가 높은 순위
과학기술정책과	1,458	1,061	2,519	12
종자생명산업과	1,444	1,064	2,508	13
경영인력과	1,467	1,009	2,476	14
농촌산업과	1,433	1,029	2,462	15
식생활소비정책과	1,344	1,066	2,410	16
검역정책과	1,069	1,312	2,381	17
농업통상과	1,167	1,114	2,281	18
식량산업과	1,123	1,142	2,265	19
식량정책과	1,101	1,128	2,229	20
농기자재정책팀	1,016	1,135	2,151	21
식품산업정책과	998	1,098	2,096	22
창조농식품정책과	1,008	1,047	2,055	23
농지과	981	1,023	2,004	24
원예경영과	748	1,243	1,991	25
친환경농업과	947	1,043	1,990	26
농업금융정책과	944	1,033	1,977	27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한)	821	1,035	1,856	28
농협경제지원팀(한)	731	1,072	1,803	29
외식산업진흥과	757	1,021	1,778	30
농촌복지여성과	765	1,005	1,770	3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671	1,080	1,751	32
지역개발과	716	1,029	1,745	33
식품산업진흥과	597	1,075	1,672	34
간척지농업과	538	1,068	1,606	35
수출진흥과	332	1,159	1,491	36
농업기반과	397	1,056	1,453	37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한)	205	1,095	1,300	38

다음으로 문서 발신·수신 횟수가 현저히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전체 부서간 문서 이동 횟수를 분석했을 때 1년 동안 100회 이상인 건수 총 13건이었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검역정책과 → 국제협력총괄과장:	121건
검역정책과 → 방역관리과:	109건
국제협력총괄과 → 농업통상과장:	142건
방역관리과 → 검역정책과장:	219건
방역관리과 → 방역총괄과:	320건
방역관리과 → 축산경영과:	286건
방역관리과 → 축산정책과:	121건
방역총괄과 → 방역관리과:	149건
방역총괄과 → 축산경영과:	103건
방역총괄과 → 축산정책과:	141건
원예산업과 → 유통정책과:	122건
축산경영과 → 축산정책과:	139건
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124건

위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네 번째 시사점은 기능의 이관관련이다. 위 표를 분석해서 보면 일방향 문서 이동은 앞에서 언급한 계획부서, 집행부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며 그 빈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집행부서의 기능을 계획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역관리과에서 축산경영과로 문서 발송한 건수는 286건으로 두 번째가 가장 높았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방역관리 기능과 축산경영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방향 문서 이동을 살펴보면 그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서들은 검역정책과-방역관리과, 방역관리과-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축산정책과이다. 이 부서들은 상호 100건 이상 공문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문서를 많이 주고 받았다고 반드시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기능의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기능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개선사항 도출

기능진단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외부환경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농업은 높은 농업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기계화와 연구개발 사업 간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은 국민 여가공간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갖고 있으나 낮은 농가소득과 농촌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었다. 식품은 높은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식생활 서구화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새로운 정책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그중 4대 정책목표 중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iii) 살기 좋은 농촌과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 정책목표 중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목표의 경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당면한 정책과제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미래과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시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전계획과 부처업무보고, 공문서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거시기능은 균형 있게 잘 수립되어 있었다. 실제로 진행된 목표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능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촌, 농업, 축산 이외의 기능과는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부처에 몰입되어 타 부처와의 융합적 정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 간 네트워크의 경우 검역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등은 기능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향후 기능이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개편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능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실행에 균형감이 요구되었다. 특히 협업과 융합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적극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 혁명은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여 진다. 한국 농촌과 농업의 한계였던 규모의 경제를 지

능형 농업으로 바꿀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미래에 적합한 농업과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재설계의 방향은 현재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48> 기능 진단 및 조직개편 개선사항 도출

대분류	중분류	기능 진단 주요 내용
거시 기능 분석	외부환경	✓ (농업): 높은 농업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기계화와 연구개발 사업 간 중복 ✓ (농촌): 국민 여가공간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갖고 있으나, 낮은 농가 소득과 고령화로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 (식품): 높은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식생활 서구화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국정과제 연계	✓ 농식품부 4대 정책목표 중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iii) 살기 좋은 농촌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매우 높음 ✓ 농식품부 4대 정책목표 중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낮음 ✓ 조직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는 현재 중심의 정책은 잘 반영되어 있으나, 미래지향성 부족
미시 기능 분석	발전계획 목표별 분석	✓ 전체적으로 거시기능은 균형 있게 잘 수립되어 있음 ✓ 기능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않음 ✓ 농촌, 농업, 축산 이외의 기능과는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능은 저조(인재양성 포함)
	업무보고 분석	✓ 다른 기능과의 융합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융합에 소극적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
	공문서 분석	✓ 검역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등은 기능에 있어 중복 → 기능이관 ✓ 계획부서(문서발신↑)와 집행부서(문서수신↑)로 구분 가능



<개선사항 도출>

- 기능 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실행에 균형감
- 거시, 미시(내부)기능 모두 협업, 융합에 대한 적극적 자세
- 미래농촌, 농업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기능 수행
- 대내외 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 지속가능한 내부 기능 조정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

<조직설계 방향>

- 조직 설계의 핵심 단어: 지능, 융합, 안전, 다양
 - 지능: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기능 강화
 - 융합: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협력 강화
 - 안전: 소비자 주도와 연계된 식품안전과 방역기능 강화
 - 다양: 혼술·혼밥 등에 선제적 대응
- 조직 설계 실천 전략: 현재와 미래의 유기적 결합
 - 현재 중심의 정책기능(농업인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은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능(지속가능한 농산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을 확대

제4장 주요 국가의 농업정책 변화와 조직의 기능 변화

제1절 일본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조직의 기능변화¹⁾

1. 일본 농정의 흐름

1) 1970년대 이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1970년대 이후 일본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오일 쇼크 등으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종말을 고하였다. 경제가 대국화된 일본은 미일 무역 마찰과 플라자 합의에 의한 대폭적인 엔고와 WTO의 성립 등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받게 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본법 하에서 성장분야로 분류되었던 축산과 과일 분야의 수입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쌀 농가는 감산정책과 쌀값 결정 등 정치적 정책에 의해 시장에서 차단되어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에 반발하여 일본 국내적으로는 농축산물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졌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일본의 보호적인 농업이 표적이 되어 쌀 관세화 및 최소시장 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무역 자유화의 흐름과 쌀 과잉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식량관리법 폐지 및 쌀의 WTO체제 편입 등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의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2)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후 오랫동안 농업 정책의 기본이 되어 온 농업기본법은 WTO체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일본 농정의 구조가 무역을 포함한 시장주의 형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본법에 따라 2000년 식량·농업·농촌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정농업인(認定農業人)²⁾을 중심으로 한 농업후계자에게 농지를 집적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실현하려는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정책은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낮은 식량수급을 개선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버블 경제 붕괴 후 1990년대의 긴 불황은 농가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소득 이외에 겸업 소득도 감소세로 돌아서 농가 전체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와 함께

1) 제1절은 강원도청 서재완 박사에게 발주한 원고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2) 인정농업인(認定農業人)제도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1993)'에 의해 농업인이 작성하는 농업경영 규모 확대, 생산방식, 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작업의 개선 등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농업경영개선계획)을 지자체(시정촌)가 인정하는 제도임. 인정농업인은 저금리 정책자금, 농지유동화대책, 후계자 지원을 위한 각종기반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kobetu_ninaite/n_seido/nintei_gaiyou_tx.html)

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 소득은 증가하여 농업소득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가 경제의 악화는 농업 위기를 심화시켜 식량수급을 하락을 막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식량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으며 동시에 농촌지역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

3) 아베 정권의 농업·농촌 정책

(1) 아베 정권의 농업·농촌개혁 추진 과정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재정지출, 신(新)성장동력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을 신성장동력의 중심축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의 농업은 지금까지 전후의 농지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와 정치·관료·재계라고 하는 트라이앵글에 의한 강력한 기득권에 묶여 왔다. 이러한 전후의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을 성장 산업화하는 것은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개혁이다.

아베 정권의 농업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6월의 '일본재흥전략'에서 일본 농업개혁의 큰 틀을 제시한 후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13.12)³⁾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아베 정부는 2014년 5월에 개최된 산업 경쟁력 회의 및 규제개혁 회의를 거쳐 7월에 '공격적인 농림수산업(攻めの農林水産業)'라고 하는 농정개혁의 큰 비전하에서 ①생산 현장 강화, ②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③수요 확대를 주요정책 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주요 정책 목표를 토대로 제4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15~'19)⁴⁾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의 기본적인 시각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정책」과 다면적 기능의 유지·발휘를 촉진하는 「지역정책」을 양대 축으로 하여 식료·농업·농촌 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농업의 중장기적 정세 변화로 ①고령화 및 인구감소 심화, ②세계 식량수급 환경변화 및 글로벌화 진전, ③사회구조 등 변화와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 ④농지집적 등 농업·농촌의 구조변화, ⑤다양한 가능성(국내외의 새로운 시장, 로봇 기술 등), ⑥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식량자급률 목표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45%(칼로리 기준)로 현실화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의 강화와 6차산업화 촉진, 경영소득안정대책 및 농지중간관리기구, 미곡 정책개혁, 다면적기능지불제도와 집적과 네트워크화를 통한 집락(集落)기능 유지 등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정책들이 제시되었다.

3)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에서는 4개 부문(수요확대, 생산현장 강화, 수요·공급을 연계한 가치사슬 구축, 다원적 기능 유지·발휘)의 개혁전략이 제시되었고, 이후 개정플랜에서 3개 부문(농협, 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이 추가되었음.

4)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19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며 10년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본 농정의 중장기적 계획임. 제1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2000년에 수립되었으며 그 후 약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최근 제4차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되었음.

<표 4-1> 일본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기준년도)	2027년(목표년도)
제4차 기본계획	칼로리 기준	39%	45%
	생산액 기준	65%	73%
	사료자급률	26%	40%

자료: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개요(식료·농업·농촌 앞으로의 10년), 농림수산성, 2015

4) 아베정부 농업·농촌 구조개혁 핵심사항

(1) 감산정책 폐지 및 논농업 경쟁력 강화

쌀 생산 조정(감산정책)은 생산량을 조정하여 쌀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쌀의 시장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일본 쌀 생산자의 소득을 높은 쌀값을 유지함으로써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유지해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높은 생산비용의 영세 규모 쌀 겸업농가가 높은 쌀값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이는 전업농가에 농지 집적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TPP) 참여를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에서 농업 분야의 관세는 최대의 난제중 하나이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약한 가운데 관세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감산정책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 11월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는 5년 후인 2018년에 감산정책을 폐지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농업개혁과 성장 산업화 정책을 선언하게 되었다.

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를 통해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하였고, 농협개혁에 따른 농자재·유통 면에서의 비용 삭감 등을 통해 주식용 쌀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하여 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후계농업인의 쌀 생산비를 2023년까지 전국 평균 생산비(2011년 기준 16,001엔/60kg) 대비 40% 감축된 수준(9,600엔/60kg)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업자본 활용을 위한 농업규제 완화

아베 정권의 농업개혁과 성장산업화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책 중 하나는 농업생산법인의 요건 완화와 농업위원회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농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농업생산법인의 경우 기업은 지금까지 25%까지만 출자 할 수 있었지만 그 상한을 50% 미만까지 완화하였다. 법인 임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임원의 1/4이 농작업에 종사하여야 하였으나 완화된 조건에 의하면 임원 또는 중요한 사용인(농장장 등) 중 1인 이상이 농작업에 종사하면 인정하게 하였다.

농업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을 현지 농가의 선거에 의해 결정하였지만 선거 제도를 폐지하

는 대신 기초지자체장이 임명하고 각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제도'를 신설하여 다양한 인재를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폐쇄적 풍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농지정책 개혁과 농협 개혁

농지정책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이다.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40만 ha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휴경지의 활용과 분산되어 있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집락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령화로 인해 생산의욕이 낮은 농가 소유 농지를 의욕이 높은 농가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성패 여부가 향후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농협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대해진 농협중앙회 조직은 농촌 현장의 지역농협에 대해 독점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자재나 서비스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농협 개혁은 지역농협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회의」에서는 3가지 개혁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째, 농협의 정치 활동 중심인 「전국농업조합중앙회」(이하, JA전중)에 대한 규정을 「농협법」에서 삭제하여 지역농협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자립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JA전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각종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업과 농민이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요타 같은 대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의 IT기술, 드론, 인공지능 등을 통한 농산업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2003년 도입한 「농업특구」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특구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급속히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전국협동조합연합회」(이하, JA전농)의 주식회사화에 의해 협동조합으로서 받아 왔던 독점 금지법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으로 받아들인 다양한 특권도 상실된다. 저렴한 법인세, 조합원에 대한 배당 비과세, 재산세 면제 등으로 JA전농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농가에 싼 자재를 제공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식량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이와 함께 신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농협을 「농림중앙금고」나 「공제연합회」의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은 신용사업을 농림중앙금고 등에 양도·매각하여 대리점으로서 수수료만을 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감소시켜 농업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2003년 시작한 농업특구는 기업이 농민들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2015년 말 현재 30개로 확대되어 전국에서 345개 기업이 농사를 짓고 있음.

<표 4-2> 일본 주요 기업들의 농업 진출

회사	사업 내용
도요타 자동차	클라우드 기반 농업IT관리 솔루션인 ‘풍작계획’을 개발해 일선 농가와 제휴
NTT도코모	클라우드형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원격 스마트 농업 지원하고, 센서기반의 물 관리 자원 시스템인 ‘페디워치’ 개발
로손	농업생산법인 ‘로손농장 니가타’를 설립해 쌀을 재배하고, 자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봉지쌀 등으로 판매
소프트뱅크 PS솔루션	농업 빅데이터 분석으로 IoT 스마트 재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좋은 허수아비(e-kashi)’를 개발
미쓰이물산	효고현 야부시에서 드론 활용 사업 추진

(4) 수요확대 및 논농업 구조개혁

아베 정권은 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의 새로운 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내 전담조직(식문화·시장개척과, 수출촉진과)⁶⁾을 신설하는 등의 수출 진흥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수요 확대를 통해 소비가 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가공·업무용 채소의 국내출하량을 늘리기 위해 수확과 관련된 기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 4,497억 엔 규모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 엔 수준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일본 농업의 주요 품목인 논농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논농업의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하고 유희지의 발생을 억제·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대신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를 2014년에 신설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 관련 2013년 예산이 12억 엔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대한 2014년 예산은 705억 엔(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주로 토지의 매입·매매를 통해서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했던 반면 농지중간관리기구는 주로 임대차를 통해서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인⁷⁾의 경작면적이 전체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의 48.7% 수준에서 2023년까지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용 쌀 생산에 집중된 논농업 구조 개편을 위해 쌀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사료용 쌀·가루용 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여 증산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다. 쌀 변동직불은 2014년산부터 폐지하였고 쌀 고정직불은 2014년산 쌀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해 2018년산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쌀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감소영향완화 직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농지유지직불’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농가단위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을 강화하였다.

6) 2015년 10월 일본 농림수산물성 조직 개편 시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시장확대를 위해 식료생산국안에 식문화·시장개척과와 수출촉진과를 신설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

(자료: <http://www.maff.go.jp/j/org/quota/2015/pdf/150915-01.pdf>)

7) 후계농업인이란 일본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달성했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영체로서 구체적으로는 ‘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농자’, ‘집락영농 경영체’ 등을 말한다.

한편, 사료용 쌀과 가루용 쌀에 대한 직불금을 8만 엔/10a에서 최대10.5만 엔/10a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사료용 쌀과 가루용 쌀의 생산량을 2025년까지 2013년 생산량의 각각 10배(110만 톤)와 5배(1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농림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정부 및 민간기업의 출자에 의해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A-FIVE)’를 설립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림어업인이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6차산업화 사업체’에 A-FIVE가 직간접으로 출자하여 농림어업인이 기업의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출자에 의한 지원은 보조금과 달리 기업의 운전자금, 인건비 등 경영에 필요한 용도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인 등이 기업과 공동출자 시 농림어업인의 출자 비율이 최소한 파트너 기업보다 높아야 하는 조건을 지원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농업인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FIVE를 통한 지원 등으로 6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10년 1조 엔에서 2020년까지 10조 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일본의 농식품 조직 현황 및 시사점

1) 농림수산 관련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준정부기관) 현황

(1) 중앙정부 현황

일본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성과 식품의 안전·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의약생활국, 식품표시 및 소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3>일본 농림수산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주요 기능·인력 현황

조직명	주요기능	인력 (2016년 말 현재)
농림수산성(M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의 안정공급의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의 증진,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의 진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발휘, 삼림의 보존육성 및 삼림생산력의 증진,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전 및 관리 ○ 외청으로 임야청 및 수산청이 있음 	총계 21,667명 본성 15,977명 임야청 4,807명 수산청 883명 (중앙 및 지방기관 합)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식품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행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한 식품의 안전 확보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함. - 식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품, 식품 첨가물, 잔류농약 등의 규격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검역소를 통해서 식품제조시설 위생관리 및 수입식품을 포함한 유통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지도 실시 - 기타 이미용 업소 등의 생활위생 및 수돗물 업무 등 담당 	200여명(추정치)

조직명	주요기능	인력 (2016년 말 현재)
소비자청 (C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기본법 제2조의 소비자의 권리의 존중 및 그 자립의 지원,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 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및 합리적인 선택의 확보 및 소비생활에 밀접한 물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 업무 등을 담당. 2009년 내각부의 외청으로 발족 ○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의 책정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식품표시와 관련하여 식품표시법, 건강증진법, 쌀이력 추적법, 식품위생법, JAS법 등의 입안, 집행 	320명

2) 농림수산성 조직체계

농림수산성은 현재 대신관방(우리나라 기초실 역할)을 비롯하여 소비·안전국, 식료산업국, 생산국, 경영국, 농촌진흥국, 정책총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과 임야청과 수산청을 두고 있다.

이밖에 도도부현에는 각 중앙부처의 산하조직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지방농정국, 산림관리국, 어업조정사무소, 식물방역소, 동물검역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농림수산연수소 등이 있다.

<표 4-4>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구성 및 주요기능·역할

구분	주요기능 및 역할	인력(명)
대신 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성 전체의 종합 조정, 정책평가, 재정 회계, 정보공개, 인사, 복지후생, 국제, 검사 및 감사, 통계업무 담당 - (국제부) 국제업무 종합조정, 국제전략 기획, 시장개방 협상 및 기타 국제협상, WTO 업무, 국제기구그룹 업무, 각 국 및 지역과의 관계, 해외투자 및 개발협력 업무 - (검사감찰부) 검사 및 감사업무 담당 - (통계부) 농림수산통계업무 담당 	1,092명 국제부 169 검사감찰부 282 통계부 248명
소비·안전국	○ 소비자행정, 식생활교육, 식품안전정책 및 관리, 식물방역, 동물 위생 및 방역 등을 담당	333명
식료 산업국	○ 일본 식문화 전파, 수출촉진, 6차산업, 지적재산권, 농산물 유통 및 식품제조 등을 담당	358명
생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부) 원예작물, 화훼 및 시설원예, 기술보급, 농업환경대책, 축산진흥 등을 담당 ○ (축산부) 축산진흥, 사료, 유제품, 식육, 경마감독 등을 담당 	588명 농산부 333 축산부 200
경영국	○ 경영안정대책, 농지정책, 취농 및 여성정책, 협동조합, 농업금융, 보험 등을 담당	329명
농촌 진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책부) 농촌정책, 지역진흥(일본형직접지불, 중산간지역 지불 등), 도농교류, 도시농업, 농촌환경대책 등 ○ (정비부) 농촌정비, 토지개량, 방재 업무 등 	437명 농촌정책부 136 정비부 257
정책 총괄관	○ 쌀 등 곡류 관련 정책, 쌀 경영안정대책, 쌀농업대책, 곡류 유통가공대책, 곡류 무역업무	78명

구분	주요기능 및 역할	인력(명)
농림수산기술 회의 사무국	○ 시험연구정책의 총괄 조정	181명
임야청 (본청)	○ 임업경영, 임산물 및 목재산업, 삼림계획, 삼림경영, 조림, 치산, 임도, 보안림, 삼림보호, 국토녹화, 산촌진흥, 국유림사업 등	551명 - 임정부 19 삼림정비부 202 국유림야부 153
수산청 (본청)	○ 수산의 경영개선, 가공유통, 보험 및 공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어업 지도감독, 국제협력, 수산시험연구, 어장보전, 어항 및 어장 정비, 재해복구 등	714명 어정부 376 자원관리부 160 증식추진부 90 어항어장정비부 88

<표 4-5> 일본 중앙부처 산하 지역조직 현황 및 주요기능

조직명	주요기능	인력 (2016.9 현재)
지방농정국	○ 지방농정국은 생산과 소비의 현장에 가까운 국가기관으로서, (1)식량 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의 보급·지역의 실태 파악, (2)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지도와 소비자 행정, (3) 주요 식량 업무의 실시, (4)식품 산업 행정의 추진, (5)생산 및 경영을 통한 농업 시책의 일체적 추진, (6)농촌 및 중산간 지역의 진흥, (7)농업 농촌 정비 사업의 실시·지도·조정, (8) 통계 작성 및 제공 등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제반의 시책을 실시, 7개 지방농정국 및 북해도농정사무소가 있음	10,558명
삼림관리국	○ 임야청의 지방 조직으로, 1999년 (구)영림국을 개편한 조직. 업무내용은 (1)관리 경영계획의 수립, 기타의 국유 임야의 관리 경영, (2)사유 임야의 조림 및 산림 경영의 지도 및 산림 치수 사업실시, (3)임야의 보전과 관련된 사태 방지에 관한 사업실시.	4222명
어업조정 사무소	○ 수산청 지방 조직으로, 어업 질서 유지와 원활한 조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어업 수역에서 외국 어선 및 일본 어선의 지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산 동식물의 변식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기타 어업 분쟁의 조정, 특정 장관 허가어업의 허가 사무의 등을 실시.	169명
식물방역소	○ 식물에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침입, 만연을 방지하고, 국내 농업 생산의 안전 및 조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수출입 식물에 대한 검역 실시 및 국내의 일부에 발생한 병해충의 만연 방지를 위한 식물류의 이동 제한 등의 업무를 실시	1,005명
동물검역소	○ 동물의 병원의 침입방지를 위한 검역업무를 담당. 관련법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광견병예방법 및 감염증법이 있음	469명

조직명	주요기능	인력 (2016.9 현재)
동물의약품 검사소	○ 약사법에 근거한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기획 입안·조정 및 검사 업무를 실시. 최근에는 약제 내성균의 조사, 환경 독성 평가, 해외 악성 전염병 백신 평가 등의 위기관리 업무 실시	77명
농림수산정책 연구소	○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는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2001년에 농업종합연구소를 개편하여 설립	71명
농림수산 연수소 임업기술종합 연수소	○ 농림수산연수소(농수성 직원 및 농수성업무 관련 지방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원 등에 대한 연수) ○ 임업기술종합연수소(임야청 직원,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단체 직원 등 연수)	68명 - 농림수산연수소 34 - 임업기술종합연수소 34

<표 4-6> 일본 중앙부처 산하 지역조직 현황 및 주요기능

실 국	부	과
대신관방		비서과, 문서과, 예산과, 정책과, 홍보평가과, 지방과
	국제부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기구그룹, 국제지역과
	검사·감찰부	조정·감찰과, 검사과
	통계부	관리과, 경영·구조통계과, 생산유통소비통계과, 통계기획관리관
소비·안전국		총무과, 소비자행정·식육(食育)과, 식품안전정책과, 농산안전관리과, 축수산안전관리과, 식물방역과, 동물위생과
식료산업국		총무과, 기획과, 식문화·시장개척과, 수출촉진과, 산업연계과, 지적재산과, 바이오메스순환자원과, 재생가능에너지그룹, 식품유통과, 식품제조과
생산국		총무과, 원예작물과, 지역대책과, 기술보급과, 농업환경대책과
	축산부	축산기획과, 축산진흥과, 사료과, 생유유제품과, 식육(食肉)계란과, 경마감독과
경영국		총무과, 경영정책과, 농지정책과, 취농·여성과, 협동조직과, 금융조정과, 보험과, 보험감리관
농촌진흥국		총무과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지역진흥과, 도시농촌교류과, 농촌환경과
	정비부	설계과, 토지개량기획과, 수자원과, 농지자원과, 지역정비과, 방재과
정책총괄관	농산부	총무·경영안정대책참사관, 농산기획과, 곡물과, 무역업무과, 지역작물과

3) 2015년도 농림수산성 조직 개편의 방향 및 특징

(1) 조직개편 주요내용

① 논 및 밭작물 정책 추진체제의 정비(정책총괄관)

일본 농업 정책의 중요과제인 논 및 밭작물 정책 사령탑이 되는 정책총괄관을 신설, 생산국 농산부(부장 및 농산기획과, 곡물과, 무역업무과 및 지역작물과 일부) 및 경영국(경영정책과 경영안정대책실)을 묶어 논 및 밭작물 농업정책을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② 재해대책 및 위기관리 체제의 정비(위기관리·정책평가심의관)

재해대책 및 위기관리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령탑 기능을 대신관방으로 집약하기 위해 위기관리·정책평가심의관을 배치하였다.

③ 기술행정 체제의 정비(기술총괄심의관 및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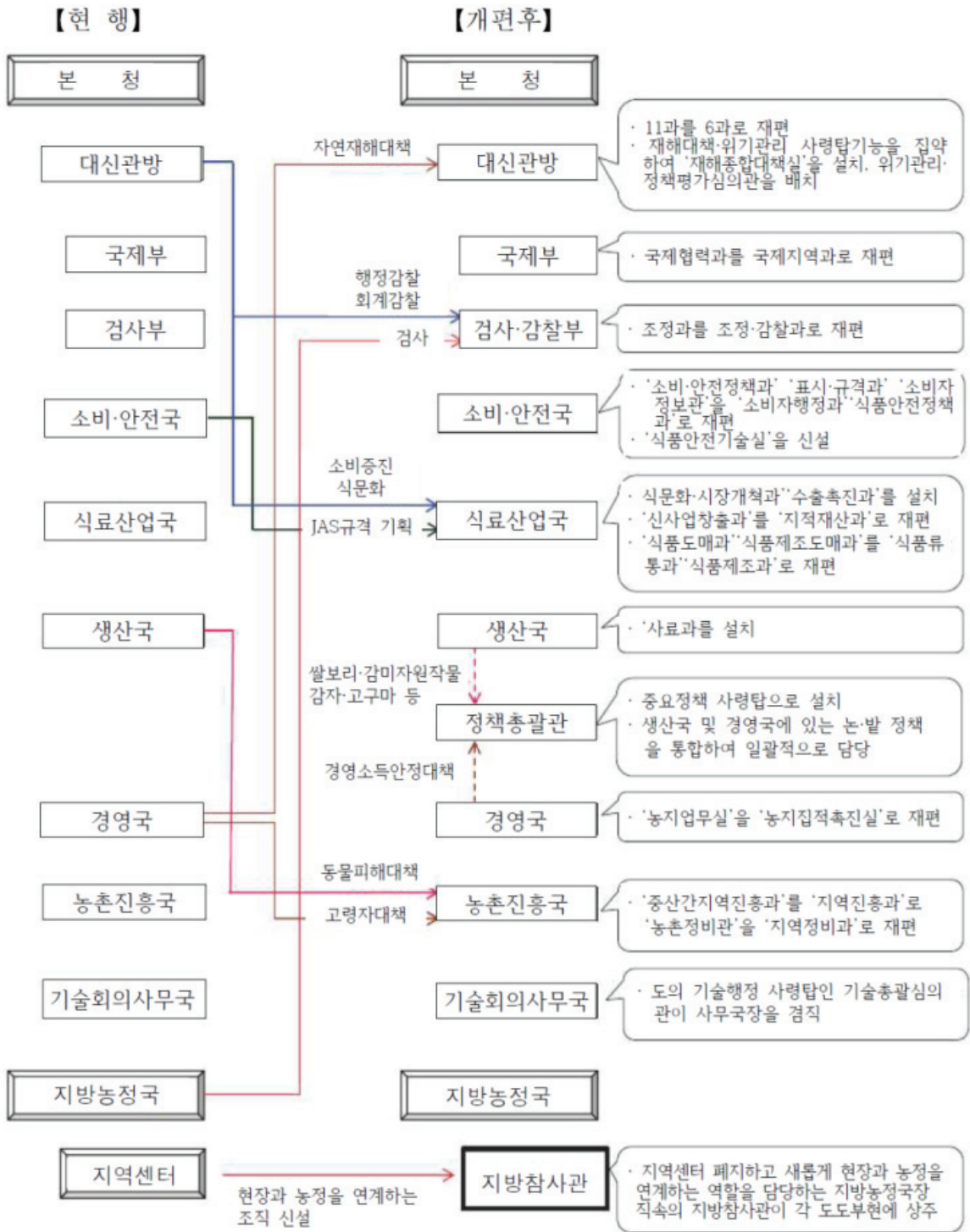
시험연구, 개발부터 실용화, 보급까지의 전문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성장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기술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사령탑이 되는 대신관방 기술총괄심의관이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④ 농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체제의 정비(식료산업국, 생산국 등)

일본의 농림수산식품의 시장확대를 위하여 식료산업국에 식문화·시장개척과 및 수출촉진과를 설치, 국산사료의 생산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국에 사료과를 신설하는 등 농업 성장산업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하였다.

⑤ 지방농정국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센터를 폐지하고, 현장과 농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농정국장 직속의 지방참사관을 각 도도부현에 배치하였다.



<그림 4-1> 일본 농림수산물성 조직개편 개요

자료: 10월 이후 농림수산물성 체제에 대하여, 일본농림수산물성, 2015. 9.

4) 동식물 방역시스템

(1) 일본 중앙행정기관 방역조직 체계

일본은 광우병(BSE) 발생(2001년)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인력과 조직체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는데 농림수산성은 2004년에 축산업 진흥업무(축산부)와 방역위생업무(소비·안전국)를 분리하였다. 그 중 소비·안전국은 방역위생업무의 정책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물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에 관한 기초부터 개발, 응용 연구와 질병 발생시 병성감정 등의 전문적인 업무는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등이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총무과, 소비자행정·식육(食育)과, 식품안전정책과, 농산안전관리과, 축수산안전관리과, 식물방역과, 동물위생과로 등 7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은 동물위생과에 속해 있는 가축방역대책실과 국제위생대책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가축방역대책실은 주로 가축위생에 관한 기획·조사, 전염병 방역·예방, 가축병원체·위생기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위생대책실은 가축위생협정,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에 관한 사항, 수출입, 동물검역소 조직 및 운영,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4-7>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 조직 및 주요업무

(2016년 10월 현재)

과	반(실)	계	주요업무	
동물위생과	총무반	총괄계	· 총괄 및 기획	
		법령계	· 법령에 관한 업무	
		서무계	· 서무일반	
	보건위생반	보건위생소계	· 가축보건위생소 일반 업무	
		사양위생계	· HACCP 활용 등 가축사양 위생관리 고도화	
	가축방역대책실	방역기획반	방역기획계	· 가축 위생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조정 · 사양위생관리기준, 전염성 병원 방역지침
			예찰감시계	· 사망소의 BSE검사 업무
		방역업무반	방역계	· 가축전염성병원의 방역 및 병원감정 업무
			방역관리계	· 보조금 집행, 기타 업무
			수당금심사계	· 가축전염병 예방비 부담금 업무 · 가축처리수당교부금 업무
		조사분석		· 역학조사 정보수집, 분석 매뉴얼 작성
	병원체관리반	병원체관리계	· 병원체 소지 규제 기획, 감찰 등	
	가축위생전문관(5)			· 가축위생 전문사항, 기획 지도 등
	국제위생대책실	국제위생기획반	기획계	· 가축위생 협정 및 국외 연락 등
		국제수역반	국제수역계 (國際獸疫係)	· 국제수역사무국 운영, 국제회의 업무
		리스크분석반	기획계	· 동물 및 축산물수출입 리스크 분석
		수출검역환경정비반	수출동물검역계	· 수출 동물 위생조건 체결 및 개폐 등
		수입검역기획반	수입동물검역계	· 수입에 관한 동물·축산물 위생조건 체결 등
			수입축산물검역계	
		사찰조정반	해외사찰기획계	· 대일본 수출 시설 사찰 및 기획
		검역업무반	검역조정계	· 동물검역소 조직 및 운영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
업무관리계				
국제위생전문관(4)			· 수출입 검역, 축산물 검역 해외 조사 등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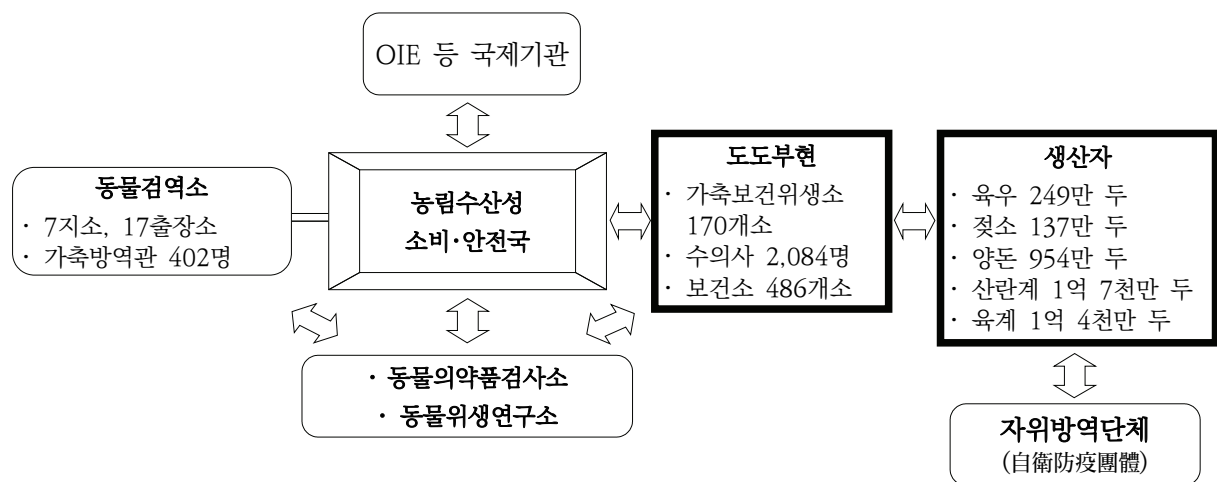
(2) 지방행정 방역조직 체계

일선 축산농가 지도 및 점검과 AI발생시 방역조치(살처분, 이동 제한 시)등 방역집행업무는 47개 도도부현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縣)청 내 축산부서에서 축산업진흥 및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縣) 가축보건위생소에서는 일선 농가 지도·점검, AI발생대비 자재비축, 검사, 발생시 살처분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I관련 일본방역체계의 첫 번째 목표는 농장에서의 신속한 발생신고이다. 축산농가는 가축보건위생소에서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상증상 발견 시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농장 단위 AI 간이키트 검사의 경우 농가와 일반수의사가 간이키트를 구매할 수 있고 직접 간이 검사를 실시해 조기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가축방역체제는 중앙정부, 도도부현(都道府縣) 동물위생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국내 가축방역에 관한 기획, 조정,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검역소를 설치하여 국제기관과 연계한 수출입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가축방역의 최전방의 기관으로서 가축보건위생소를 설치하고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축보건위생소의 정비지원, 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과 지방의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 등 자위방역단체가 조직되어 예방접종 등 생산자의 주도적인 조직 등도 구축되어 있다.



〈그림 4-2〉 일본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 체계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 2016.3.

3. 일본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움직임

1) 일본의 다면적 가치 및 일본형 직접지불제

일본의 농업·농촌은 국토보전, 수자원 보호, 자연환경보전, 경관형성 등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국가 전체가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심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역의 공동체 활동 등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발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⁸⁾에 근거하여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 지역활동 및 영농 유지 등에 대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다면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2017년도 일본형 직접지불제 총 예산액은 769.6억 엔이다.

(1) 다면적기능 지불교부금(482.5억 엔)

첫 번째, 농지유지지불로서 다면적 기능을 지원하는 공동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후계자 지원 및 농도 관리 비용, 농지집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지법면의 제초, 수로정비, 농도 노면유지 등 기초적 보전활동, 농촌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체제 확충, 강화, 보전관리구상의 작성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자원향상지불로서 지역자원(농지, 수로, 농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동활동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수로, 농로 등의 보수, 식재에 의한 경관형성,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 있다.

(2)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 교부금(263억 엔)

중산간지역 등의 농업생산 조건 불리를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대상지역으로는 ‘지역진흥 8법’⁹⁾ 지정지역 및 광역지자체장이 인정한 특별인정지역이다.

<표 4-8> 중산간지역 교부단가표

	구분	교부단가(엔/10a)
논	급경사(1/20~)	21,000
	완경사(1/100~)	8,000
밭	급경사(15도~)	11,500
	완경사(8도~)	3,500

자료: 일본형 직접지불의 개요, 일본 농림수산성, 2017.

8) 2014년 6월에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플랜(2013년 12월10일 농림수산성·지역활력창조본부결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의 유지, 발휘를 위해 일본형직접지불(다면적기능지불 등) 제도를 마련하였다.

9) 특정농산촌법(特定農山村法), 산촌진흥법(山村振興法), 과소법(過疎法), 반도진흥법(半島振興法), 이도진흥법(離島振興法), 오키나와·아미미군도·오가사와라제도 진흥개발특별조치법을 가리켜 8법이라 한다.

(3)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24.1억 엔)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농업생산 활동의 실시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지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 등을 지원한다.

<표 4-9> 환경보전형 직접지불 단가표

대상	교부단가	○ 지역특인제도(地域特認) - 교부단가:3,000~8,000엔/10a (내용 및 교부단가는 도도부현에 따라 상이)
녹비작물 재배 (논피 사용의 경우)	8,000엔/10a (7,000엔/10a)	
퇴비사용	4,400엔/10a	
유기농업 (메밀 등 잡곡, 사료작물)	8,000엔/10a (3,000엔/10a)	

자료: 일본형 직접지불의 개요, 일본 농림수산성, 2017.

2)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등 최근 농업 동향

(1) 스마트 농업

스마트농업이란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관리나 품질·생산 효율 등의 향상을 실현하는 농업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로봇 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저에너지 소비·고품질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 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2013년 11월 '스마트 농업의 실현을 위한 연구회'를 출범하였다.

연구회를 통해 일본 스마트 농업의 추진으로 인한 새로운 농업의 모습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저에너지 소비·고효율화 농업의 실현 (노동력 부족의 해소, 생산 비용 절감), 둘째, 힘든 작업 위험한 작업으로부터의 해방, 셋째, 모두가 참여 가능한 농업 실현, 넷째, 전문 농업인의 "장인 기술"을 데이터 형태로 승계, 다섯째, 생산의 안정화·고품질화이다.

2015년도 관련 예산으로는 '차세대 시설 원예 도입 가속화 지원 사업'에 20억 엔, '첨단 로봇 등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에 약 50억 엔 등을 편성하였다. 일본의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는 '야노경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2013년 133억 엔 정도이며 2020년에 약 3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본은 다양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고효율 재배로 유명한 네덜란드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따르고 있다.

(2) 도시농업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①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신속한 공급, ② 가까운 농업체험, 교류 활동장소 제공, ③재해시의 방재공간 확보, ④ 편안과 안정감을 가져오는 녹지공간 제공, ⑤ 국토환경 보전, ⑥도시주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등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적극 홍보하며 도시 주민 및 근교 주민의 농업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도에는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도시농업의 진흥에 관련한 기본

이념과 실현을 위한 기본 사항 등을 확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4. 일본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1) 농정변화와 시사점

일본 농업농촌 정책의 변화 요인을 일본 국내 농업환경으로부터 살펴보면 첫째, 농업생산액 및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와 둘째, 농업자의 고령화, 셋째, 경작방치면적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일본은 농업농촌 정책의 커다란 전략을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2013년 12월 결정, 2014년 6월 24일 개정)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본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첫째, 식문화·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통한 국내외 수요를 확대하였다. 둘째,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산물 생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도시농업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농업위원회 및 농협개혁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약화 하는 생산현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변화와 함께 일본 농림수산성의 업무 및 조직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농림수산성의 현안 업무가 되고 있다. 둘째,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등에 기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셋째, 행정의 ICT화 및 과학적 분석수법¹⁰⁾ 발전에 따른 업무의 실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넷째, ‘정원합리화계획’¹¹⁾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타 부처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정원의 14.34%를 감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조직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섯째, 직원의 고령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직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농림수산성 조직 및 정원 변화 및 시사점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의 인력은 ‘정원합리화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공무원 수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전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7.6%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10) 예를 들어 법안 등 작성업무의 정확성과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여 법안 등 관련자료의 작성, 체크 등을 지원하는 ‘법제집무(法制執務)업무지원 시스템(e-LAWS)도입, 국회 대응업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효율화, 회의자료 비종이문서화, 전자결제 도입, Telework환경 정비에 따른 업무환경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11)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의 ‘정원합리화계획’에 따라 자위대를 제외한 약 30만 명의 국가공무원중 약 10%를 배치전환 하거나 감원하는 합리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예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림수산성의 조직은 2015년도의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근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체제 강화이다. 농식품 수출액 1조 엔의 목표 조기달성을 위하여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수출촉진심의관,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총괄하는 수출전략조사관, 쌀 수출촉진을 담당하는 미곡무역기획실장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방문 여행객의 증가 및 수출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증명서 발생사무 및 동식물검역 체제를 강화하였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 강화이다. 생산자재의 비용절감, GAP의 도입, 축산 및 낙농의 수익성 향상에 관한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전략적 연구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농지의 대구획화 및 유지보전을 하는 국영토지개량사업의 체제강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관한 재해대책 체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임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체제 강화이다. 수요에 대응하는 소재 생산의 증가, 삼림소유자 정보의 정비에 관한 추진체제 강화, 합법목재의 보급 및 위법 벌채 대책, 삼림조수 피해대책 체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삼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고용 및 소득의 창출에 연결되는 국산자재의 안정공급 및 이용촉진 강화, 화산재 등 재해에 대응하는 치산(治山)사업의 추진체제를 강화하였다. 넷째, 수산일본 부활을 위한 체제의 강화이다.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가공시설의 HACCP 도입, 해외 수입규제 대책, 어항의 위생관리대책에 관한 추진체제의 강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등 체제의 강화와 함께 포경대책의 체제 강화를 위하여 수산청에 포경대책실을 설치하였다. 다섯째, 기타변화로 내각부 식육추진사무의 농림수산성 이관에 대응하여 소비·안전국의 소비자행정과를 소비자행정·식육(食育)과로 개조하였으며 사이버보안대책에 관한 강화를 위하여 대신관방에 정보시큐리티·정보화추진심의관을 설치하였다.

3) 2017년도 일본 농림수산부문 예산 현황 및 시사점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 12월 19일 총액 2조 3,071억 엔 규모의 2017년도의 농림수산 관련 부문 예산안을 여당인 자민당의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통과되었으며 12월 22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0억 엔 줄어든 규모이지만 인건비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간 늘어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토지개량(농업·농촌 정비) 관련 사업비 등 농업부문의 체질 강화 시책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으며 논 활용 직접지불보조금도 2016년도보다 늘어났다. 농림수산 관련 예산 편성은 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난 '16년 11월 말에 수립한 「농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반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농업농촌 정비(토지 개량)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200억 엔 늘어난 4,020억 엔으로 계상했다.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합해 총 5,772억 엔을 확보하였다. 이는 농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개량하여 온 농지를 보다 대규모화하는 작업이며 이와 함께 무인 농기계,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대구획화와 범용화, 수로의 파이프 라인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창설되는 「중산간지 농업 르네상스 사업」에는 400억 엔을 계상하였다.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농지·농업 시설의 개량과 마을 영농의 조직

화·법인화, 6차 산업화·브랜드화, 조수 피해 방지책, 다면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동활동 지원 등 종합적으로 중산간지 농업발전을 이끌게 된다.

사료용 쌀 재배를 확대하는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으로 3,150억 엔(전년 대비 72억엔 증가)을 확보하였다. 농림수산물·식품의 1조 엔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단체의 육성 등에 12억 엔(전년 대비 1억 엔 감소), 수출 지원기관의 창설 등에 16억 엔(전년 대비 1억 엔 증가)을 각각 편성하였다. 기타로는 수입 보험제도의 도입 준비에 5억 엔을 계상하였다.

전체적으로 근년 일본의 농림수산업 조직 및 예산의 변화로부터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도의 대규모 조직·인력개편 이후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아베 정부의 농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에 따른 ‘강한 농림수산업 기반 만들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 중에서도 농업농촌정비사업(대구획 토지개량)에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기반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최근의 규모화·단지화를 통한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기업의 자본과 기술·노하우를 접목한 스마트농업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정비 사업을 통해 일본 농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또한 농식품 수출액 1조 엔 달성을 위한 식품의 수출촉진 체제 강화와 함께 6차 산업화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등에도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와 함께 최근에는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및 마을소멸을 막기 위한 직접지불 및 다면적 기능지불교부금 등 농산어촌 활성화 및 지속성에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제2절 중국 농업정책과 조직의 기능변화

1. WTO 가입 후 중국 농업정책의 변화

1)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시기(2003~2012년)

2001년 WTO 가입 직후 출범한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정부는 삼농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대체하여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적 발전관¹²⁾을 집정이데올로기로 제시하였다. 삼농문제를 조화사회 건설의 최대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삼농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양1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 등 농정의 4대 축과 관련된 농정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골고루 제시되었다. 다만, 도농간 소득 및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소득·복지 향상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표 4-10> 2004~2012년 중양1호문건

발표 날짜	문건 제목
2004. 2. 8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정책적 의견
2005. 1.31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정책적 의견
2006. 2.21	사회주의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2007. 1.29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의견
2008. 1.20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
2009. 2. 1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
2010. 1.31	도농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 의견
2011. 1.29	수리 개혁·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
2012. 2. 1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강화와 농산물공급 보장능력 지속 강화에 관한 의견

또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도 삼농문제 해결을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였다.

12) 과학적 발전관은 ①빈부격차·지역격차 완화, ②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③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 4-11>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농업분야 중점 추진과제

구분	농업분야 중점 추진 과제
'10.5'계획 (제10차 5개년 계획) 2001~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편 26장, 2편(경제구조) 3장에 배치 ○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민소득 증대 및 소득원 창출, ▲농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농촌지역 산업구조 조정, ▲농업농촌 인프라 확충, ▲각종 농업제도 개선, ▲농촌지역 빈곤문제 해결
'11.5'규획 (제11차 5개년 규획) 2006~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편 48장, 2편(사회주의신농촌 건설) 4~9장에 배치 ○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현대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 업그레이드, ▲농림어업 서비스산업 체계 구축 및 강화,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농민소득 증대: ▲소득원 창출, ▲농업외 소득 증대, ▲소득 보조 실시 - 농촌복지 향상: ▲인프라 확충, ▲환경보호 강화, ▲위생 개선, ▲사회보장 강화 - 신규 후계인력 양성: ▲농촌지역 의무교육 실시, ▲기능 교육훈련 강화, ▲농촌지역 문화사업 발전 촉진 -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확대 - 농업 경영·금융 등 관련 제도 개선
'12.5'규획 (제12차 5개년 규획) 2011~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편 62장, 2편(사회주의신농촌 건설 가속화) 5~8장에 배치 ○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현대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 업그레이드, ▲농업 과학기술 혁신 강화, ▲농림어업 서비스산업 체계 개선 - 소득원 창출: ▲농업소득 증대, ▲임금소득 증대, ▲이전소득 증대 - 농촌복지 향상: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강화, ▲농업·농촌 환경 정비 -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업경영제도 공고화, ▲도농 통합발전 체계 구축, ▲현(縣) 지역 경제 활력 증진

2) 시진핑(習近平) 정부 시기(2013~현재)

중국의 부흥(中國夢)과 2020년 중등소득국가(小康社會) 실현 목표를 제시하며 등장한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정부도 삼농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총 13년) 삼농문제를 주제로 '중앙1호문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13차 5개년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기간 동안 중국 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농업 현대화이다. '13.5 규획' 문서에서 농업현대화를 농업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한데 이어 '전국농업현대화규획(2016~2020년)'을 별도 제정하여 시행을 촉구하였다.

<표 4-12> 2013~2017년 중앙1호 문건

발표 날짜	문건 제목
2013. 1.31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대에 관한 의견 (關於加快發展現代農業進一步增舉農村發展活力的若干意見)
2014. 1.19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關於全面深化農村改革加快推進農業現代化的若干意見)
2015. 2. 2	개혁·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大改革創新力度加快農業現代化建設的若干意見)
2016. 1.28	신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에 관한 의견 (關於落實發展新理念加快農業現代化實現全面小康目標的若干意見)
2017. 2. 5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심화, 농업·농촌 발전新动能 육성 가속화에 관한 의견 (關於深入推進農業供給側結構性改革加快培育農業農村發展新動能的若干意見)

2. 중국의 농업현대화 계획

중국의 현대화 계획은 경쟁력 제고, 소득 증대, 복지 향상, 수급유통 안정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

<표 4-13> 중국의 농업현대화 계획 개요

전략 목표	추진 과제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측 구조 조정 ■ 농업경영체 육성과 후계인력 양성 ■ 적정규모의 영농규모화 촉진 ■ 농업 과학기술 R&D 및 보급 강화 ■ ICT 융복합과 첨단농업 육성 ■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지역 특화 농산업 육성 ■ 대외 농업협력 및 농식품 무역 촉진 <p>※ 중점사업: △중자산업 현대화,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업기계화, △스마트농업 육성, △농업의 6차 산업화,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대외농업협력 지원, △비교우위농산물 수출촉진</p>
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농업경영 위험 관리 강화 ■ 직불제 정비 ■ 농민재산권 행사 강화 <p>※ 중점사업: △지역 농특산업 육성 및 빈곤구제, △농민소득 두배 증대, △수리시설 건설, △동식물전염병 및 농업재해 대응체계 구축, △수자원절약형 관개, △농민공 귀향창업 지원, △농촌지역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p>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향상 <p>※ 중점사업: △음용수 안전, △전력망 업그레이드, △청결 재생에너지 보급, △도로 건설, △위험주택 개조, △생활 쓰레기·오수 처리, △인터넷 보급</p>
수급·유통 안정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보전·관리 강화 ■ 농산물시장 조절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p>※ 중점사업: △농지보전 및 비옥도 제고, △우량농지 조성, △순환농업 추진, △농업자원·생태환경 보호, △농업폐기물 자원화·무해화처리, △안전생산 보장, △농산물 품질안전, △가축·가금 사육 표준화,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제로성장, △퇴경환립환초, △천연림·초지·습지 보호, △사막화 및 수토유실 방지, △생태보호, △하천 정비</p>

1) 산업경쟁력 제고

(1) 공급측(supply-side) 구조 조정

공급측 구조 조정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의 해소가 구조 조정의 핵심이다.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재배업 생산구조 확립 및 생산지역 배치를 설정하였다.

농업부는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계획(2016~2020년)’을 2016년 4월에 제정하였고,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조사료 공급 부족 현상 해소가 초점이다. 2020년까지 옥수수는 467만 ha 축소하고, 대두는 280만 ha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돼지와 초식가축 위주의 축산업을 구조 조정하고, 규모화·집약화를 추진하였다. 돼지 사육 안정화 및 돼지고기 자급을 유지하고, 남부지역 돼지 사육지역 분포를 조정하였다. 또한 우량 종 육우·육양 사육 및 유류(奶類) 생산기지를 조성·확대하였다. 안전·고효율·환경보호 사료제품 개발을 통해 사료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농업경영체 육성과 신규 후계인력 양성

가.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중점 추진과제 선정

영농규모화와 농업현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가정농장(家庭農場) 인증제를 실시하고, 대규모 전업농, 농민전업협작사(협동조합), 농식품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한다.

농업부는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2014년 2월에 제정하였다. 가정농장 인증의 조건은 첫째, 경영주는 농촌호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가족구성원이 주요 노동력이어야 한다. 셋째,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업기술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외자본의 재배업·축산업, 농산물 가공업·유통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참여를 촉진한다. 신형 농업경영체 우대정책(재정투융자, 금융, 조세, 농지사용 등)을 실시하고 및 농가와와의 연계를 강화하려 한다.

나. 신규 후계인력 양성

청년 농장주 등 후계인력과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성 및 농업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 대상 교육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후계인력육성계획을 국가교육훈련발전 계획에 포함하고, 교육훈련·관리·정책지원이 결합된 후계인력 교육훈련 제도를 확립하였다. 농업방송통신학교를 통한 후계인력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청년계층, 농민공, 대학생, 기술인력 등의 신형 농업경영체 경영 참여를 유도하였다.

농업부는 ‘13.5 전국 신형직업농민 교육훈련 발전 계획’을 2017년 1월에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고학력농민(신형직업농민) 2,000만 명, 청년 농장주 6만 3천 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3) 적정규모의 영농규모화 촉진

농지경영권의 유동성 활성화 및 다양한 형식(교환, 위탁, 지분출자 등)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농업현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재배업 영농규모화 비율 40%, 축산업 사육규모화 비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어업 서비스업의 규모화·전업화 촉진 및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모델을 보급하였다. 연구기관, 협회, 농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신형 서비스 경영체를 지원한다. 또한 생산 전과정 서비스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및 공소합작사(供銷合作社) 개혁을 추진한다.

(4) 농업 과학기술 R&D 및 보급 강화

농생명산업기술, 농기계장비, 스마트농업, 수자원절약형농업, 친환경농업 등의 영역에서 핵심기술 개발 R&D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농기계장비 개발을 강화하였다.

둘째,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중 농업 과학기술 혁신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기술진보의 농업성장 기여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중점실험실 200개, 국가농업과학모니터링센터 200개, 현대화 과학실험기지 200개를 건설하고, 농업분야 첨단기술 보유 민간 기업 1만여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농업 과학기술 개발 성과의 전환, 보급 및 응용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층 농업기술 보급체계 개혁 심화 및 기술보급 인력 실적 평가·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농업지식재산권 보호·응용 강화 및 농업 과학기술 개발 성과 전환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다.

넷째, 현대화된 종자·종축산업 육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잡종강세 이용, 분자유종, 고효율 번식·육종 등 핵심기술 개발 R&D를 강화하였고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 번식·육종기지 건설 강화 및 품종 갱신을 추진하였다. 우량 종축 번식·육종체계 구축 및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종자유전자원의 조사·수집·보호·이용체계 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하였다.

다섯째, 농업기계화 수준을 제고하였다. 주요 농작물의 생산 전과정 또는 이앙·파종·수확 단계의 기계화 및 축산업 분야 기계화를 촉진하였으며 시설농업 및 병충해 방제 장비 수준 제고 및 농업용 항공기(드론)산업 발전을 촉진하였다. 2020년까지 전과정 기계화 시범 현(縣) 500개 조성, 주요 농작물의 기경·파종·수확 기계화율 70% 달성과 식량 주산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심경정지(深耕整地) 면적 비율 30% 이상 달성이 목표이다.

(5) ICT 융복합과 첨단농업 육성

첫째, 농업(생산·유통·소비 등)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스마트 시설 및 장비 보급 프로젝트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경우 농업사물인터넷(IoT) 응용 시범구역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20년까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기계작업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농기계작업 자동제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20년까지 ICT가 접목된 스마트 농기계 제품 15개 이상 개발, 전국적으로 20,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에서는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0)성장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토양검정·시비처방사업을 연계해 토양검정·시비처방 모바일정보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조건을 갖춘 현(縣)에서 옥수수, 벼, 밀,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토양검정·시비처방 전문가 자문시스템 개발, 시비처방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세계농업데이터조사분석시스템 구축(약 40개 국가), 국가농업정보 공개플랫폼 구축, 대외협력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실시, 위성원격탐사·무인항공기·농장모니터링이 일체화된 농업원격탐사 응용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신선 농산물, 농업투입재, 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까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농촌정보화를 촉진하여 도농 간 정보격차를 축소하였다. 농촌마을·농가 인터넷 보급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시장·농촌생활 관련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하였다. 2018년까지 10만 개 이상 행정 촌(村)에 보급 완료하고,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행정 촌(村)에 익농정보사(益農信息社) 설립하여 농업행정업무 정보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6)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가.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복합을 촉진

주체는 가정농장, 농민전업합작사, 농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체가 선도하고 농외자본 참여를 유도하였다. 형식은 농업과 관광, 교육, 문화, 건강, 복지 등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농산업분야 신업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익분배는 농민의 이익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계약농업과 지분참여 방식을 장려하고, 농외자본의 책임 강화 및 리스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지원은 정보, 금융, 인력, 기술 측면의 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빈곤 농촌지역에서 현지의 자원 비교우위와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국무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현(縣)급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까지 100개 현(縣) 1,000개 향(鄉) 10,000개 촌(村)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촌일품(一村一品) 시범 촌(村)·진(鎮)을 1,500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 선도 기업 및 선도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 농산물 가공산업 및 농촌관광산업 육성

우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지 단순 가공업과 주산지·물류중심지 고부가가치가공업 육성(재정·조세·금융·투자·무역·토지이용 등 지원) 및 가공업분야 신업태(가공업과 관광·문화·교육 등 융합, 전자상거래, 가공체험 등) 발전을 도모한다. 2020년까지 농산물 가공율 68%(2025년 75%),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산물가공업총생산액 2.4배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한다. 농촌관광의 다양화, 인프라 확충, 농업문화유산 보호 강화, 전통마을 및 주택 보호 강화,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농촌관광객 33억 명, 관광농업 경영체의 매출액 7,000억 위안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지역 특화 농산업 육성

가. 농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발전 추진

비교우위 발전지역, 적정 발전지역, 보호 발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교우위 발전지역(토지 및 수자원 조건 양호)인 동북, 화북, 장강중하류, 화남지역은 농산물의 생산능력 제고, 지역 특색 농산업 발전, 농업현대화를 신속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정 발전지역(농업 자원환경 문제 심각)인 서북, 서남, 북부지역은 농업구조 조정 가속화, 자원소모형 농산업 규모 제한, 농업현대화 안정적 추진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

보호 발전지역(생태 취약 지역)인 청장고원 지역은 생태보호 마지노선 획정, 금지 농산업 확정, 생태 복원 강화,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제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지역 농특산물 발굴 및 산업화 촉진

지역 농특산물 발굴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 농특산물 생산 표준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둘째,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 전문 촌(村)·향(鄉)·진(鎭)을 육성한다. 셋째, 목본 식량·식용유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넷째, 특색 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 식품산업 육성 및 현대화

식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첫째, 비교우위산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식품 기업의 연구조직 설립을 장려한다. 둘째, 전통주식(主食)의 공업화·규모화 및 편의식품·냉동식품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셋째, 신식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의 개발하고, 응용하는 것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식품, 영유아용조제분유의 성분 등록제도를 완비하고자 한다.

(9) 대외 농업협력 및 농식품 무역 촉진

가. 대외 농업협력 확대

대외 농업협력 확대를 위해 우선, 전세계 농업자원 부족 상황, 농산물 수급 상황 및 투자정책 환경 등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국가·산업·상품별로 대외 농업협력 방안을 확정하였다.

둘째, 국제경쟁력과 브랜드지명도를 갖춘 생산·유통 기업과 대규모 글로벌 농업기업집단 육성 및 농업 과학기술 분야 대외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항구·물류 등 단계에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체인 참여를 확대한다. 또 농업투입재(농기계, 농약, 종자, 화학비료 등) 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농업관련 국제규칙·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농업표준 및 농산물 인증의 상호인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외국자본의 대 중국 농업투자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의 농기계·장비 제조업, 지역 특화 농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폐기물 자원화 분야의 투자를 장려한다.

[참고] 농업부문별 대외 농업협력 중점 분야

- 식량산업: 시범 생산기지 조성, 식량 보관 및 가공, 물류
- 특용작물산업: 대두·식용당작물·종려유·면화·마·실크제품의 생산 및 가공, 물류
- 축산업: 가축·가금 사육 및 가공, 물류
- 농산물 창고보관 및 물류: 농산물 수출입 항구 부두 시설, 창고 보관 및 물류
- 농기계 장비산업: 농기계 설비 생산·보수, 대형 농기계 장비 연구개발
- 농업투입재산업: 종자, 농약, 화학비료, 사료, 수의약
- 임업: 삼림자원 개발·이용, 목재 가공

나. 농산물 무역 촉진

수출은 과일, 채소, 차, 수산물 등 전통적인 수출 품목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대외무역’(해외 인터넷 직구) 모델을 활용해 비교우위 농산물 수출을 촉진한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이 큰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국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수입측면에서는 농산물 수입 조절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요 농산물 수입조절 체계 구축 및 국내 공급부족 농산물의 수입 확대, 그리고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

2) 농가소득 증대

(1) 일자리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가. 농업인, 농민공 등의 창업·취업 촉진

농업, 농민공 등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취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정보제공·기능훈련·창업지도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의 귀향창업 지원(정부의 창업투자 인도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 교육훈련 5년 행동계획’을 실시하며, 농촌청년, 귀향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의 가정농장·농민전업합작사·농기

업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취업 및 소득 증대 촉진

농촌 빈곤지역(농가)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지역 농특산업 및 농촌관광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농업을 통해 중국 빈곤인구의 10%인 약 1,000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하였다. 또 2020년까지 약 1,200만 명을 추가로 구제할 계획이다.

(2)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첫째, 소규모·중대규모 수리관개시설 건설 확대 및 ‘전국가 품극복규획’을 실시한다. 둘째, 수자원절약형 관개시설 개조·건설 확대 및 빗물 보관·이용 시설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절약형 관개 기술·제품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식량주산지, 생태환경 낙후지역, 수자원 과도개발지역 등지에서 절수(節水)관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넷째, 관개용수 총량 관리제도 실시 및 농업용수 절수 인센티브·보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기상 인공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운수자원(云水資源, cloud water resources)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식량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축산업분야 보험 대상 축종 및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농특산물·시설농업 재해보험 실시 및 농특산물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주요 식량작물 채종(seed production)보험을 중앙정부의 보험료 보조대상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신형 농업경영체 대상 부가보험상품 개발 및 농업수입보험, 농기계보험, 농업날씨지수보험, 대외합작보험 등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농업보조, 농업신용대출, 농산물 선물거래(futures trading) 및 농업보험간 연동체계도 구축하고, ‘보험+선물거래’ 시범사업 확대 및 농업재배보험 리스크 분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질병 대응체계(방역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식물 보호능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전국 동식물 검역·방역 연합관리를 실시하려 한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및 법정 동물전염병 미발생지역·생물안전격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동물전염병 강제 백신 접종 및 살처분 보조정책을 실시코자 하고 있다.

(4) 직불제 정비

가. 직불제 실시 현황

허용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는 식량소득보전직불제이며,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번식용 모돈사육보조이다. 그리고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자재종합보조와 농기구구입보조이다.

나. 직불제 정비: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점진 축소 또는 허용보조(Green Box)로 전환
식량소득보전직불제, 농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등 3대 직불제를 농업지원보호보조(農業支持保護補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지 지력보호를 위해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지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산업 영농규모화를 위해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점 대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를 허용보조인 목표가격제도(소득보전 고정직불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5)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

가. 농지재산권 행사 강화

농지에 대한 대표적인 재산권을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3권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권리 주체의 경우 소유권은 농민단체(집단)가 가지고, 도급권은 농민, 경영권은 실제 농지 경작자가 갖는다.

농지도급권 보호를 위해 농민단체(집단) 소유의 농지는 구성원인 농민만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어떠한 조직·개인도 농민의 농지 도급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대체할 수 없고, 해당 권리의 박탈·제한도 절대 불가하다.

농지경영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농업경영주체가 농지유동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농지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농지 수용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수용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 절차 규범화 및 보상체계를 개선하였다.

나. 농민단체(집단) 소유 건설용 토지 및 농가주택지 재산권 행사 강화

건설용 토지 사용권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 건설용 토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농가주택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과 양도도 허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

3) 농촌복지 향상

(1)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

가. 농촌지역 기초시설 건설 확대

첫째,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빈곤지역에 음용수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둘째, 전력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도농간 전력공급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 신에너지 행동계획인데 태양열 발전을 보급하고,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메탄가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도로 건설 확대 및 위험 주택 개조 가속화, 하천 정비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섯째, 광케이블 보급 및 4G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농촌건설계획 수립하고, 농촌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청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오수를 집중 처리하고, 홍수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구축 및 중요 농업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첫째, 도농 통합 의무교육 경비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교사를 확충한다. 둘째,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 구축과 농촌지역 위생분야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선정 방법을 완성하고, 보장 기준을 확정하여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정책의 연계를 추진한다. 넷째, 도농 주민 연금보험제도를 완성하고, 농촌지역 부녀자·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3) 농민공의 도시민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해 첫째, 거주증제도 전면 실시 등을 통해 호적제도를 개혁한다. 둘째, 농민공의 취업·사회보험·주택·자녀교육에 관련하여 개혁을 추진한다. 셋째, 도시호적 취득을 촉진(재정 지원 등)하고, 도시주민과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넷째, 도시의 건설용 토지 신규 증가 규모와 도시호적 취득 농민공의 수를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2020년까지 약 1억 명의 도시로 이전한 농촌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들이 도시호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4) 수급·유통 안정(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

(1) 농지 보전·관리 강화

가. 농지 보전 마지노선 설정(2020년)

국토자원부는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2006~2020년)'와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 조정방안(2006~2020년)'을 통해 경지면적 12,433만 ha 중 절대농지면적을 12,120만 ha(경지면적의 80% 이상)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 농지 보전·관리 조치 강화

농지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농지전용 허가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 토지로의 전용을 억제한다. 둘째, 절대농지 확정 및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량생산기능구역과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 내 농지를 우선적으로 절대농지로 확정 및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일반 국가건설사업 과정에서 절대농지 점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단, 중점 국가건설사업 과정에서 절대농지의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이 농지전용 및 토지수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농지수급균형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을 강화한다. 농지를 건설용토지로 전용하는 경우 상응하는 면적과 비옥도의 대체 농지를 추가로 조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 소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현(縣) 단위 균형, 성(省) 단위 조정, 국가 단위 통합' 원칙하에 대체 농지 추가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우량 농지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각급 지방정부에서 토지정리, 개간, 재개발 등의 방법으로 우량 농지 및 신규 농지를 조성하고, 비옥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민관협력(PPP)을 통한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성된 우량 농지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자원원격탐사원맵(one map)과 종합관리감독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량 농지 조성사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관리와 평가를 한다.

다섯째, 경지 비옥도 보호 및 업그레이드 행동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전국의 경지 비옥도 등급을 0.5 등급 이상 업그레이드하고, 성(省)급 정부의 농지보호 책임 의무 수행 평가제도를 확립한다. 농지보호 책임 의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간부의 실적 평가 시 반영하여 책임감을 부여한다.

(2) 농산물시장 조절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시장 조절을 위해 첫째, 벼·밀 최저수매가격제도 유지 및 개선과 옥수수 수매비축제도 개혁 및 생산자 보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면화·대두 목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돼지 등 목표가격보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리스트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대상 품목 및 관리 수단 검토)하고 있다. 넷째, 주요 농산물 수매비축 관리체계 개혁을 완비함으로써 정책 기능과 경영 기능의 분리를 시도한다. 다섯째, 농산물 시장 주체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선물거래를 추진한다.

농산물시장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품목별로

주산지에 산지도매시장 건설을 확대한다. 둘째, 농산물 산지 운송로 및 콜드체인 물류배송시설을 건설한다. 셋째,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도시지역 주민거주지에 신선 농산물 직거래점 개설을 지원한다. 넷째, 기존 물류네트워크와 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가. 농업환경 보호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첫째, 비료·농약 사용량 제로의 시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적정 시비기술을 보급하고, 농약 사용량 감소 및 효율 증대기술을 응용하고, 병충해방제 서비스조직을 발전시킴으로써 달성코자 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 주요 농작물에 대한 토양검정·시비처방 기술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하고, 친환경 방제율을 3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확대다. 가축·가금 분뇨 이용을 확대하고, 오수(汚水)감소·무산소 발효·분뇨퇴비 등 생태화 관리 모델을 적극 보급한다. 이를 위해 병사한 가축·가금 무해화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사육·도축·경영·운송 일체형 무해화처리 체계를 구축하며, 농작물 줄기의 비료·사료·에너지·원료 이용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업용 폐비닐 회수 및 재이용 장려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환경오염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저오염·저소모 재배·사육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비점원 오염(agriculture non-point source pollution)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화북(華北)지역 등 지하수 누두(漏斗)지역의 용수총량을 통제하고, 농작물 생산구조 조정 및 절수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경지 중금속 오염 종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금속 오염지역, 지하수 누두지역 및 생태 퇴화지역에서 경지 운작·휴경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임지 및 습지를 보호한다. 엄격한 임지·습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삼림피복률을 23.04%까지 올리고, 임목축적도 165억 m³까지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습지 보호와 복원을 추진하고, 습지 자연보호지역 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퇴경환림(退耕還林)·퇴경환습(退耕還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막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섯째, 초원 생태 복원이다. 절대농지에 준하는 절대초지(초원) 획정 및 초지도급 권리 확정 업무 추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방목금지(禁牧)·휴목(休牧) 제도를 실시하고, 초원 면적과 방목가축 마리 수 균형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또한 초원 생태보호 보조·인센티브 정책 실시를 강화하고, 퇴목환초(退牧還草), 퇴경환초(退耕還草), 초원 재해예방 등 중요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생물다양성 보호·유지다. 야생 식물자원 및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 자원 모니터링·보존 체계를 완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사업을 전개하여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를 억제할 계획이다.

나.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첫째, 농업투입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약·수의약·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재의 전자이력추적 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맹독성 농약 지정 판매 및 실명 구매 제도를 실시하며, 고효율·저독성 수의약의 보급과 사료 품질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추진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호와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약·수의약 잔류 허용량 표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농업표준 재정·개정 5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표준화 시범구역 지정 및 원예농산물 생산 표준화, 가축·가금 사육 표준화, 도축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브랜드 가치 제고이다. 농업 브랜드 제도를 확립하고, 무공해·녹색·유기농산물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지리적표시 보호를 통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명도가 높은 공공브랜드, 기업브랜드, 합작사브랜드 및 농가브랜드를 형성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넷째,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모니터링 경보·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이력추적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위한 이력추적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업화 용두기업, ‘삼품일표(三品一標; 무공해·녹색·유기농산물 및 지리적표시 농산물)’ 증서 획득 기업 및 농업시범기지가 출선해서 이력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가농산물 품질안전 현(縣) 지정, 농산물 생산자 신용체계 구축 및 농산물 생산기업 신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농업부의 기능 변화

1)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행정비용 감소와 행정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모두 7차례(1982년, 1988년, 1994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에 걸쳐 정부조직이 개편되었다.

농업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보면 1988년 개편 시 기존 수리전력부를 폐지하고 수리부를 신설했으며, 기존 농목어업부(農牧漁業部)를 농업부로 개편(업무 확대 및 국내외의 관례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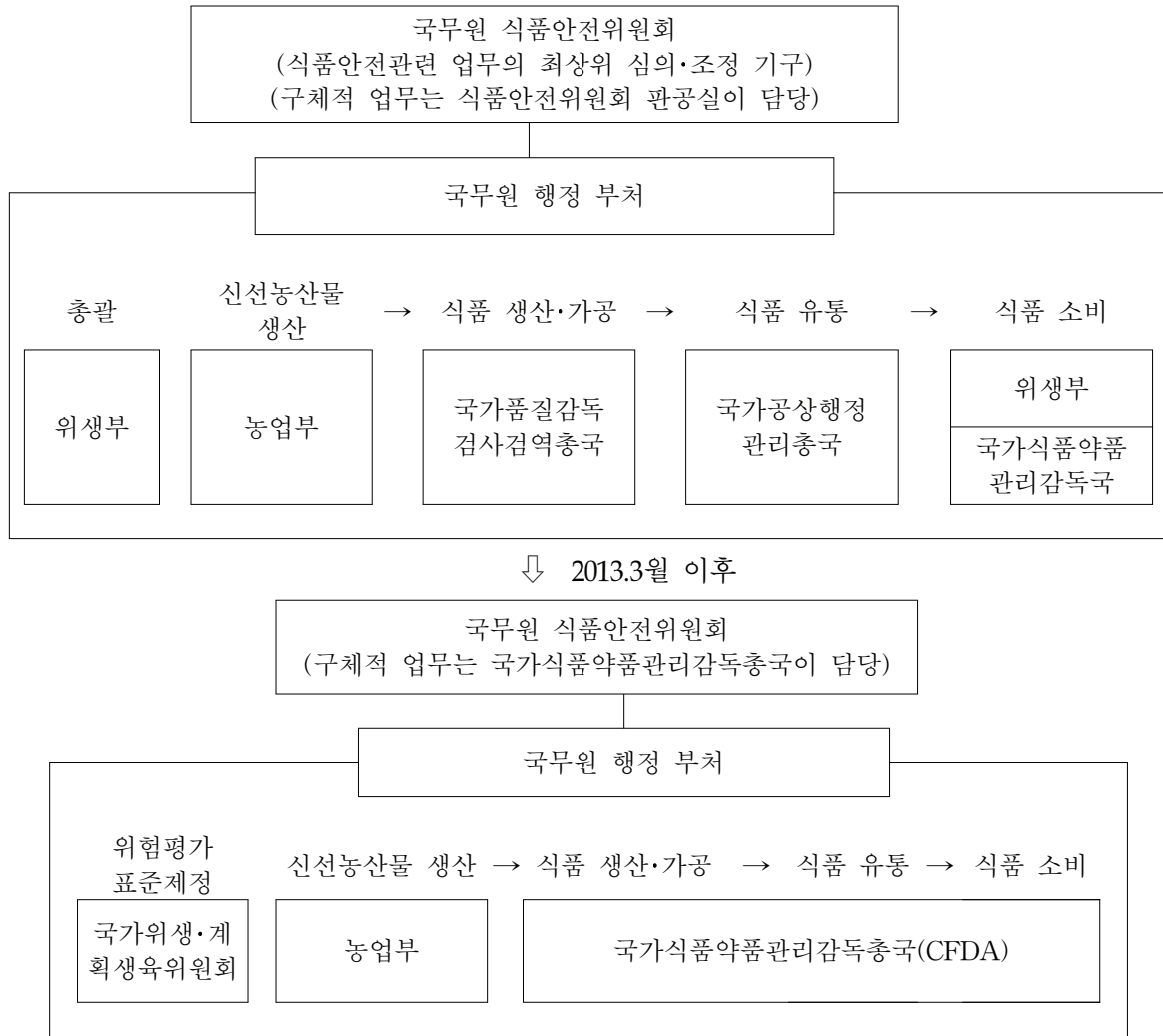
수리부는 전국의 수자원 통일관리 및 수자원 보호, 수자원 개발 이용 촉진, 강과 하천 관리 및 홍수예방, 관개, 용수공급 위주의 수력발전과 농촌소규모 수력발전에 대한 건설과 관리, 수토보호 업무를 총괄하였다.

1994년 정부조직 개편 시 중앙행정부처인 국내무역부 산하 행정부처로 국가식량수매비축국을 신설하였다. 1998년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現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정부조직 개편 시 국가식량국으로 개편되었다.

<표 4-14>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시 농업관련 조직 개편 내용

연도	국무원 중앙행정 부처	국무원 중앙행정 부처 산하 행정부처	국무원 직속 행정부처
1978	◦ 농림부 ◦ 수리전력부 ◦ 전국공소합작총사	×	◦ 국가임업총국 ◦ 국가수산총국 ◦ 국가농간(農墾)총국
1982	◦ 농목어업부 ◦ 임업부 ◦ 수리부	×	×
1988	◦ 농업부 ◦ 수리부 ◦ 임업부	×	◦ 국가토지관리국
1994	◦ 농업부 ◦ 수리부 ◦ 임업부	◦ 국가식량수매비축국 (국내무역부 직속)	◦ 국가토지관리국
1998	◦ 농업부 ◦ 수리부	◦ 국가식량수매비축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속)	◦ 국가임업국
2003	◦ 농업부 ◦ 수리부	◦ 국가식량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속)	◦ 국가임업국 ◦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2008	◦ 농업부 ◦ 수리부	◦ 국가식량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속) ◦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위생부 직속)	◦ 국가임업국
2013	◦ 농업부 ◦ 수리부	◦ 국가식량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속)	◦ 국가임업국 ◦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1998년 정부조직 개편 시 임업부를 폐지하고 국무원 직속 행정부처인 국가임업국으로 개편되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정책 기조가 식품위생으로부터 식품안전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200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식품 소비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무원 직속의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위생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림 4-3>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정부조직 변화

주: 전형진 편저(2012), p.17 <그림 2>에 기초하여 작성

현 정부조직체계를 갖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기존 위생부 산하의 국가식품약품관리 감독국을 국무원 직속의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으로 개편하고 업무 범위도 크게 확대하였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은 舊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업무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국 업무 그리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담당하던 식품생산·가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던 식품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 한다.¹³⁾

13)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①식품(식품 첨가제·보건식품 포함, 이하 동일)안전, 약품(한약·민족약품 포함, 이하 동일), 의료기기, 화장품의 관리감독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초안 작성, ②식품 행정허가 실시방법 제정 및 감독 실시, ③국가약전(藥典) 등 약품·의료기기의 표준과 분류관리제도 제정 및 공포와 감독 실시, ④식품·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리감독의 검사제도 제정 및 검사실시, 중·대 위법 행위 조사 및 처리, ⑤식품·약품 안전사고 응급대응체계 구축, ⑥식품·약품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규획 제정, 식품약품 검사모니터링체계 및 전자이력추적체계와 정보화체계 구축, ⑦식품·약품 안전 관련 홍보, 교육 훈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전개, ⑧지방정부의 식품·약품 관리감독 업무 지도, ⑨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 업무 담당, ⑩국무원 및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지

이외에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위생부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식품안전 위험평가 및 표준제정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식품관련 제품(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등)의 생산과 식품 수출입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담당한다. 보건식품 광고활동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감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 신설은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던 다원화체계에서 단일 기관이 통일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화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의 생산·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별로 관리감독 기관이 달라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였다.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권한을 집중시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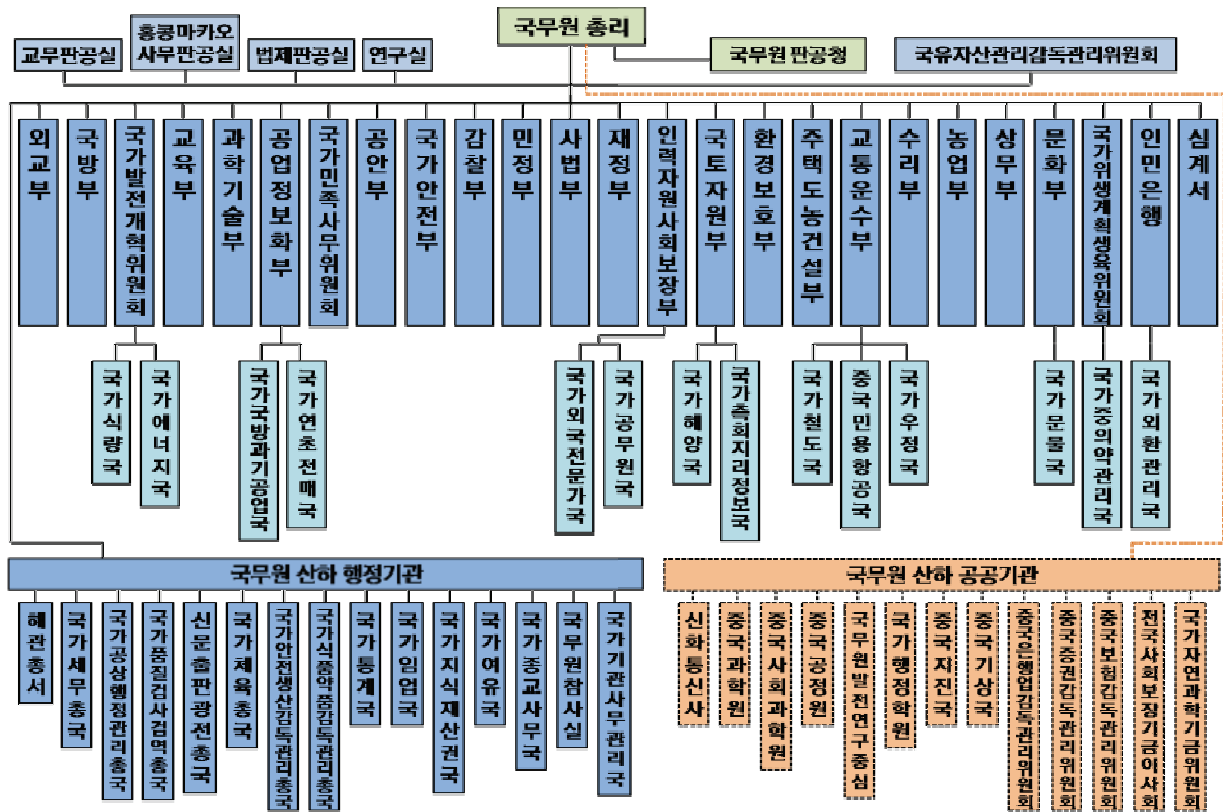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양식업 생산물)의 품질안전관리감독은 농업부가 담당하였다. 다만 식용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도소매단계(또는 가공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까지만 관리·감독한다. 식용농산물의 가공 또는 유통, 소비 단계에서는 CFDA가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한다. 가축·가금의 도축단계와 신선 원유 수매단계의 품질안전 관리감독도 농업부가 담당한다. 이외에도 수의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그리고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품질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담당한다.

시진핑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업무 연관성이 강한 부처(기관) 간 통합을 통해 기존의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일원화(통일적 관리, 효율성 제고)하는 조직개편 추진이 예상된다. 국무원 중앙행정 부처(부·위원회) 수는 25개에서 18개로 축소가 예상된다. 농업 관련 조직은 기존 농업부와 수리부를 통합하여 농업부로 개편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행정부처였던 국가식량국과 국무원 직속 행정부처였던 국가임업국을 농업부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업무 처리 등이다.

<표 4-15> 중국의 향후 정부조직 개편 전망

현행(25개)	개편(18개)
외교부	외교부
국방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발전개혁규획위원회
교육부	교육과학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기술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평화통일위원회
공안부	공안부
감찰부	감찰심계
심계서(감사원)	
민정부	사회공작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법부	사법부
재정부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국토주택도농건설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환경보호부
국가안전부	국가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교통운수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부
농업부	
상무부	상무부
문화부	문화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인민은행	인민은행 *독립기구화



<그림 4-3> 중국의 정부조직도(2017년 4월 현재)

(1) 국무원 내 농업·식품관련 부처

<표 4-16> 국무원 농업·식품관련 부처와 기능

조직	주요 기능
농업부 (農業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 농어업과학기술, 농어업인 소득, 농수산물 품질 및 환경보전 등 농수축산업 주관 부처 ▪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관공실, 재배업관리사*, 수의국 등 20개 실·국 ◦ (소속기관) 농업과학원, 농촌경제연구센터 등 25개 기관 <p>※ 농업부 상세 실·국 및 소속기관 현황은 후술(後述)</p>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사(農村經濟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경제발전 중장기 및 연도별 전략·정책 수립·집행 ◦ 농업·농촌 경제 발전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관리 감독 ◦ 농업·농촌 인프라 투자 계획 제정·심사·감독·검사 ◦ 농업·농촌 관련 각종 개혁 방안 연구·제안
과학기술부 (科學技術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과학기술사(農村科技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학기술 발전 관련 수요 예측 및 연구 ◦ 농업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및 연도별 전략·정책 수립·집행, 성과 평가 ◦ 농업과학기술 단지 조성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재정부 (財政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사(農業司) 兼, 국무원농촌종합개혁관공실(國務院農村綜合改革辦公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발전 및 개혁 관련 재정 지원 정책 수립·집행 ◦ 농업보조금 관리방법 제정 및 보조금 조정·관리감독 ▪ 국가농업종합개발관공실(國家農業綜合開發辦公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종합개발정책 수립, 프로젝트·자금·재무관리 제도제정 ◦ 농업종합개발과 관련된 자금 관리(배정, 집행 상황 검사)
국토자원부 (國土資源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보호사(耕地保護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농지 보호, 농지 이용, 토지 수용 및 토지 정리 관련 정책 수립·집행
주택도시농촌건설부 (住房和城鄉建設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진건설사(村鎮建設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鎮)·향(鄉)·촌(村) 건설 정책 수립·집행 ◦ 시범 촌·진, 건설농촌거주 환경 개선, 농촌주택 건설·개조
수리부 (水利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수리사(農村水利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농업용수 및 음용수 관련 정책 수립·집행 ◦ 시설 건설 및 기술 보급 ▪ 농촌수력발전전기화발전국(農村水電及電氣化發展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수력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 관련 정책 수립·집행 ◦ 시설 건설 및 기술 보급, 농촌 전기화 계획수립 및 감독

* 중국 중앙 직제 단위상 00사(司)와 00국(局)은 우리의 국(局)에 해당

(2) 공무원 직속 행정기관

<표 4-17> 공무원 직속 행정기관과 주요 기능

조직	주요 기능
상무부 (商務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사(對外貿易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무역 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집행 ▪ 대외원조사(對外援助司), 대외투자경제합작사(對外投資和經濟合作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 해외농업개발협력 및 해외농업투자 관련 정책 수립·집행 ▪ 국제경무관계사(國際經貿關係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및 다자간 농업협상 전략 및 정책 수립·집행 ▪ 시장체계건설사(市場體系建設司), 시장질서사(市場秩序司), 유통업발전사(流通業發展司), 시장운영소비촉진사(市場運行和消費促進司), 전자상거래정보화사(電子商務和信息化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시장, 가격 및 유통(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집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공업무사(農民工工作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공 관련 정책 수립·집행 ▪ 농촌사회보험사(農村社會保險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연금 및 사회보장 관련 정책 수립·집행
심계서 (審計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감사사(農業審計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관련 부처 및 성급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업무 감사 ◦ 지방정부 감사기관의 농업관련 감사 업무 지도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國家質量監督檢驗 檢疫總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動植物檢疫監管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동식물 검역, 수출입 사료 및 첨가제 안전관리, GMO농산물 관리감독 ▪ 수출입식품안전국(進出口食品安全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농식품의 검사검역, 관리감독, 위험분석 및 긴급예방조치 관련 정책 수립·집행, 수출입 식품안전사고 처리 ▪ 통관업무사(通關業務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검사검역 품목 목록 제정, 세관 검사검역 업무 관리 및 수출입 상품 검사검역 관련 대외협상 참여 ◦ 수출입 검사검역 표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리 ▪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국내 TBT 및 SPS 조치 WTO 통보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 (國家食品藥品監督 管理總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관리감독 1사(食品安全監管一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생산·가공 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수립·집행 ▪ 식품안전관리감독 2사(食品安全監管二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소비 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수립·집행 ▪ 식품안전관리감독 3사(食品安全監管三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동향분석 및 보고서·통계 작성, 식품안전관련 연구 ◦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관련 정책 수립·집행
국가통계국 (國家統計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사회경제조사사(農村社會經濟調查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업센서스, 농업·농촌 현황 통계 조사, 농촌가구 조사의 실시, 분석 및 관련 통계데이터 제공 ◦ 퇴경환림(退耕還林) 추진 현황 및 가축·가금 생산·소비 동향 모니터링
국가임업국 (國家林業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조림녹화관리사(造林綠化管理司), 야생동식물보호자연보호구역관리사(野生動植物保護與自然保護區管理司), 농촌임업개혁발전사(農村林業改革發展司), 삼림공안국(森林公安局), 발전규획자원관리사(發展規劃與資金管理司), 과학기술사(科學技術司),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발전 및 산림생태 보호와 관련된 전략·정책 수립·집행 ◦ 산림·녹화, 삼림자원 보호, 습지 보호, 사막화 방지, 야생·희귀 동식물 자원 보호·이용·수출입, 임지 이용 등 관리감독

* 심계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원 업무 역할 수행

(3) 국무원 산하 정책연구 공공기관

<표 4-18> 국무원 산하 정책연구 공공기관과 기능

조직	주요 기능
중국사회과학원 (中國社會科學院) *중국 인문경제분야 최고권위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農村發展研究所), '78년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농민 관련 제반정책 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수행 - 우리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위상과 기능 측면에서 유사하나 타 연구기관에 비해 국가경제 사회발전 전략과 연계된 정책수립 연구 시 주도적 역할 수행 - 사회과학원 대학원 내 석사 및 박사 과정운영 ○ (조직 구성) 농촌거버넌스연구실, 농촌경제조직·제도연구실, 도농관계·발전계획연구실, 농촌산업경제연구실, 빈곤·복지연구실, 농촌환경·생태경제연구실, 농산물시장·무역연구실, 농촌금융연구실, 토지경제·인력자원연구실 등 9개 연구실 ※ 「중국농촌경제」, 「중국농촌관찰」 등 2종의 학술지 발행
중국과학원 (中國科學院) * 중국 자연과학분야 최고 권위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학원 소속 유전발육생물학연구소(遺傳與發育生物學研究所) 농업자원연구중심(農業資源研究中心), '02년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량안보 및 수자원안보 보장을 위한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핵심 - 수자원 효율적 이용, 생태시스템 관리, 종자유전자원 개발과 신품종 육종 등 3대 연구 영역 ○ (연구조직) 농업수자원중점실험실, 하북성 절수농업중점실험실, 수자원절수농업연구실, 생태환경연구실, 식물유전육종연구실, 지역농업정책연구실 등 9개 연구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國務院發展研究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연구부(農村經濟研究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정책 건의와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중국국무원 산하의 정책연구 및 자문기구(1980년 설립) ○ 농촌경제연구부는 도농 통합발전, 농업제도개혁, 농업·농촌 경제구조 조정, 농촌경제사회 관리 등과 같은 농촌 개혁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정책 건의 및 자문 실시

(4) 국무원 부처 산하 행정기관

<표 4-19> 국무원 부처 산하 행정기관과 기능

조직	주요 기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식량국 (國家糧食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실(辦公室), 조절관리사(調控司),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기획재무사(規劃財務司), 창고비축과기국(倉儲與科技司), 감독검사사(監督檢查司), 외사사(外事司), 인사사(人事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범위의 식량유통 거시 조정, 식량유통업계 지도 및 중앙정부의 식량 수매비축 관련 행정 업무 담당 ※ 국가식량국 산하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식량공급서비스중심(軍糧供應服務中心), 표준품질중심(標準質量中心), 국가식량연구교육훈련중심(中國糧食研究培訓中心), 국가식량정보중심(國家糧油信息中心), 식량교역협조중심(糧食交易協調中心), 과학연구원(科學研究院), 중국식량경제잡지사(中國糧食經濟雜誌上) 등

2) 중국 농업부 및 소속기관

(1) 중국 농업부 본부 조직

<표 4-20> 중국 농업부 본부 조직

사·국	과
관공청	
인사노동사	종합과, 기구편제과, 간부과, 간부감독과, 인재공작과 교육훈련과, 노동임금과
산업정책·법규사	종합과, 산업정책과, 체제개혁과, 조사연구관리과 입법협조과, 법률집행감독과, 시범구관리과
농촌경제체제·경영관리사	종합과, 경영체제과, 도급계약관리과, 농민부담관리과 집단지산관리과
(兼 농촌합작경제경영관리총참)	관공실, 정책법규과, 전업합작과, 농업산업화과, 중재지도과 농민부담조사과, 농촌재무회계과, 체계·정보과
시장·경제정보사	종합과, 시장연구과, 유통촉진과, 관측통계과, 운행조절과 정보화추진과
발전계획사	종합과(綜合處), 발전계획과(發展規劃處), 투자과(投資處), 사업발전 1과(行業發展一處), 사업발전2과(行業發展二處), 자원구획과(資源 區划与開發處), 건설사업감독관리과(建設項目監督管理處)
재무사	종합과(綜合處), 예산과(預算處), 부문사업과(部門項目處), 농업보조 및 금융과(農業補貼与金融處), 재무회계과(財務會計處), 자산관리 과(資產管理處), 회계감사과(審計處)
국제합작사	종합과, 조법과(條法處), 국제과, 무역과, 아시아·아프리카과 유럽과, 미대륙과
과기교육사	종합과, 정책체제과, 기술도입·조건건설과, 하이테크기술과 산업기술과, 기술보급과, GMO생물안전·지식재산권과, 교육과 자원환경과, 에너지생태과
재배업관리사	종합과, 농정(農情)정보과, 재배업개발전과, 식량·식용유과 식보식검과(植保植檢處, 兼 국제식물보호공약이행관공실) 경제작물과, 농약관리과, 경지·비료관리과
종자국	종합과, 종자산업발전과, 품종관리과, 시장관리감독과
농업기계화관리사	종합과, 산업발전과, 생산관리과, 과기교육과, 안전감독과
축목업사 (兼 전국사료공작관공실)	종합과, 축목업개발전·과기과, 관측분석과, 축목과, 사료과 초원과, 낙농업과(兼 농업부 낙농업관리관공실)
수의국	종합과, 의정과(醫政處, 兼 농업부 수의관리관공실), 방역과 법률집행관리감독과, 과기·국제협력과 약정약계과(藥政藥械處), 도축산업관리과
농간국(農墾局)	종합과, 정책체제과(政策體改處), 발전계획과, 재무과 과기경무과(科技經貿處), 농업과, 열대작물과
농산물가공국 (兼 향진기업국)	종합과, 산업발전과, 계획통계과, 과기과, 관광농업
어업국	종합과, 정책법규과, 계획재무과, 어정(漁情)관측·시장가공과 과기·품질관리감독과, 양식과, 어선어구관리과, 원양어업과 자원환경보호과(兼 수생야생동식물보호과), 국제협력과 어정과(漁政處), 안전관리감독·응급과(兼 어항관리감독)
농산물품질안전관리감독국	종합과, 표준과, 관측과, 관리감독과, 응급과

사·국	과
노간부국	<p>종합과, 정책지도과, 조직선전과, 재무과, 생화보건과 전임부장비서과, 교육문체과(教育文体處) *북경시내 사무소: 단결호공작과(團結湖工作處), 동대교공작과(東大橋工作處), 만수로공작과(万壽路工作處), 화평리공작과(和平里工作處), 서단공작과(西單工作處), 서사공작과(西四工作處), 북경역공작과(北京站工作處), 중관촌공작과(中關村工作處)</p>
기관 당위원회	관공실, 조직과, 선전과, 기관 기율위원회관공실

(2) 농업부 실·국 기능

<표 4-21> 농업부 실·국과 기능

조직명	주요 기능
관공청 (辦公廳)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기밀, 당적, 정보, 안전, 비밀정보, 언론발표, 정무공개를 담당 ◦ 대만 관련 농업사무 및 긴급사항에 대한 종합관리·행정심사도 담당
인사노동사 (人事勞動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관리, 기구편제, 농촌인재교육, 농촌노동력취업훈련 및 농촌 노동력 전업기술·업종종사자격을 관리
산업정책법규사 (產業政策與法規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정책 수립, 농업 관련 법률법규 수립·집행 및 감독, 농업행정심의 및 기관 관련 규범에 대한 합법심사를 비준
농촌경제체제경영관리사 (農村經濟體制與經營管理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기본경영제도 및 정책수립, 농촌토지도급제·농경지사용권 이전·도급제분쟁중재 관리, 농촌집체경제조직(협동농장)건설, 재무자산관리와 회계감사 담당
시장경제정보사 (市場與經濟信息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책과 시장건설계획 수립·집행, 농업통계·정보서비스 관리, 농산물 브랜드 육성·보호, ‘채소바구니공정(菜籃子工程)’ 조직·지원
발전계획사 (發展計劃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발전전략 수립, 농업자원 관련 계획·조사, 농업생산재 수출입 및 관세정책, 농업구조조정 및 농업고정자산투자 관련 사업 담당
재무사 (財務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정책, 농업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정책 수립 및 시행사업 지도(재정부 협동), 농업예산 편제·집행·보고
국제합작사 (國際合作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간 농업사무 및 무역협상 진행, 농업무역규칙 제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손해 조사, 기술교류·협력사업 진행, 농업대외원조, 국제농업기구협력 및 교류
과학기술교육사 (科技教育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학기술 연구혁신, 산업기술시스템 구축, 기술도입 및 보급, 신품종보호, GMO 감독, 농지·종자 관리, 농촌 신재생에너지·생태순환농업 개발
재배업관리사 (種植業管理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지품질·표준화생산·절수농업 지도, 농업동향 정보조사, 병충해·재해방지, 비료·농약 관리감독, 농작물 유전자원 보호, 식물검역 담당
농업기계화관리사 (農業機械化管理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계화·시설농업정책 수립 및 집행, 농가 및 기계화 생산지도, 농기계 작업규범·기술표준 입안, 농기계 안전 감독관리와 실험검정 진행
축목업사 (畜牧業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사료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 축산업 구조조정·표준화생산 및 규모화 관리, 동물유전자원·사료자원·초원자원 보호 및 수출입 심사비준
수의국 (獸醫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방역·검역·수의의료정책·동물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비준, 동물약품 잔류국제표준 및 출입국 동물검역 관리, 국제 수의협력 담당
농간국 (農墾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개간구역의 건설계획·경제정책·체제개혁 수립 및 감독, 직속 농업개간구역의 국유자산 재무관리, 열대·아열대지역 농업자원 개발

조직명	주요 기능
향진기업국 (鄉鎮企業局)	▪ 향진(鄉鎮)기업정책 수립 및 집행, 향진기업 구조조정 추진, 향진기업 재무회계 관리, 농산물가공업발전정책 수립 및 구조조정, 기술혁신·서비스 발전 추진
어업국 (漁業局)	▪ 어업발전정책 수립 및 집행, 어업자원 보호 및 개발, 표준화생산·친환경양식 개발, 수산물 병해충 방지, 원양어업·국제어업분쟁 관리 및 어업권의 보호
농산물품질안전관리국 (農產品質量安全監管局)	▪ 농산물 품질안전·위험평가, 농산물·농업 생산재 국가표준 입안, 농산물 품질안전 관측 및 정보발표, 농업검사시스템 구축, 농산물품질관리 인증 및 감독
기관당위원회 (機關黨委)	▪ 농업부 및 베이징 주재 직속 기관의 공산당 관련 사업 담당
이퇴직간부국 (離退休干部局)	▪ 농업부 기관의 이·퇴직 간부 관리 및 관련 사업 진행
종자관리국 (種子管理局)	▪ 종자산업 발전전략·법령법규 수립 및 집행, 종자생산경영·품질감독 관리, 종자자원수출입 승인, 농작물품종 심사, 신품종 육성 및 등록, 종자 산업정보 분석

* 2011년에 종자관리국 신규 설치, 기존 재배관리사의 종자관련 업무를 이관

(2) 농업부 산하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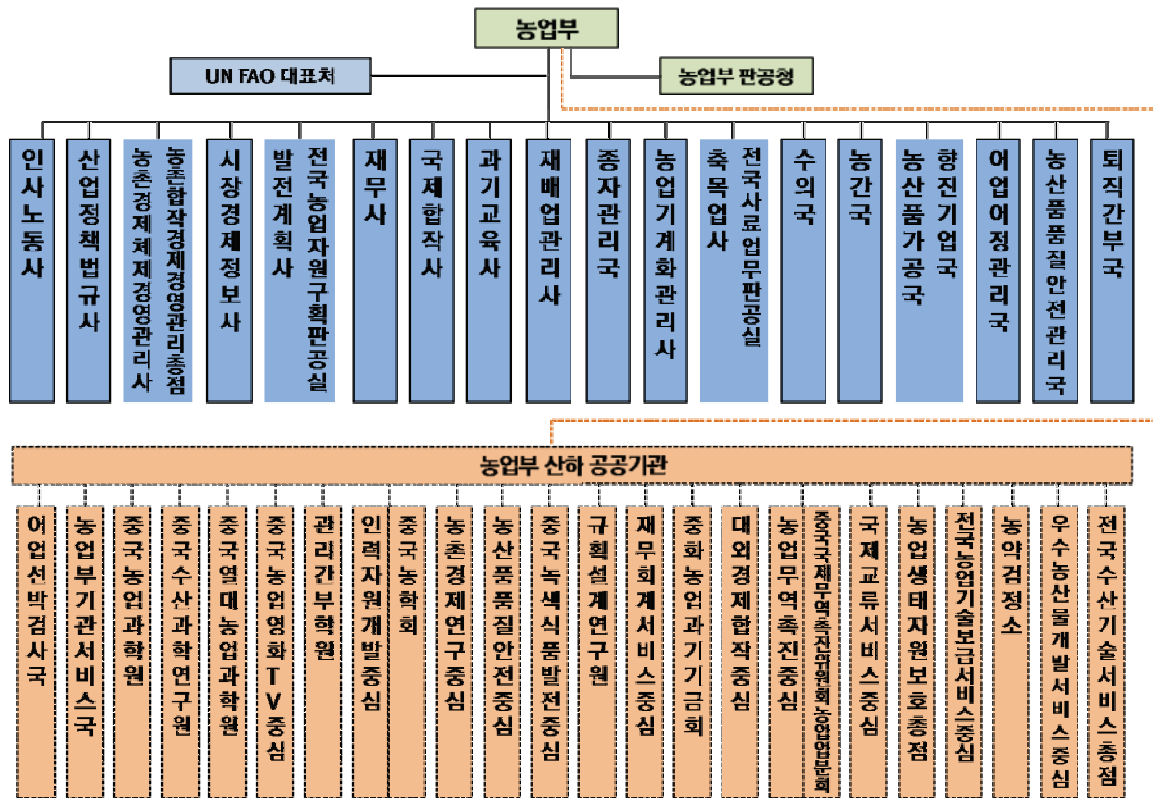
총 24개 공공기관 중 농정 직접 관련 기관만 포함한다.

<표 4-22> 농업부 산하 공공기관

조직명	주요기능
중국농업과학원 (中國農業科學院)	▪ 중국 농업기술 및 과학연구 총괄 기관 - 농업 기술문제 해결,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관련 전문기술 확산, 국내외 농업관련 기구와의 협력 등 ※ 직원수: 약 7,200명, 42개 소속연구소(작물 17, 축산 11, 경제 및 환경자원 8, 농공 및 첨단기술 6개소)
중국열대농업과학원 (中國熱帶農業科學院)	▪ 카사바, 고무, 바나나 등 열대 농산품 연구 담당 ※ 직원수: 4035명(고급전문인력 625명, 박사 411명 등)
농업부인력자원개발센터 (農業部人力資源開發中心)	▪ 농학회 병설 기관
농업부관리간부학원 (農業部管理干部學院)	▪ 전국 농업부 관련 기관 당원간부, 전문가 등 인재 육성 및 당 방침정책 홍보, 농촌 당 구성, 농촌법률과 현재 농업개혁 발전 등 중대 문제 연구
중국농학회 (中國農學會)	▪ 농업농촌 인력자원 개발, 농업과학기술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관련정책건의 제출 및 관련 문의와 서비스 업무를 추진, 농민에 대한 교육 관련 등 업무 담당
농업부농촌경제연구센터 (農業部農村經濟研究中心)	▪ 농업부 직속 전문연구문의기관이며, 주요임무는 국가를 위한 농촌경제정책 제정, 농촌경제발전전략과 농촌경제체제개혁 심화를 위해 의사결정 문의와 대책 의견 제공.
농업부농업품질안전센터 (農業部農業質量安全中心)	▪ 농업부 사장급 직속기관: 농산품 품질안전관리 허가 등 업무에 대한 법률 법규 규정 집행, 무공해 농산품, 농산품 지리표시 등 업무 처리 기관

조직명	주요기능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 위탁을 받고 녹색식품발전 방침, 정책 및 계획을 제정, 또한 녹색식품 각종 기준 제정 시행, 기준에 따른 녹색식품표지 허가 심사, 녹색식품품질 감독 및 표지상표관리 실시
농업부계획설계연구원 (農業部企業設計研究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 직속기관, 계획 및 투자 문의, 농업정책연구, 정부를 위한 농업공정기술 및 농업과학기술 정보 수집 제공, 직업 기능 교육
농업부재무회계 서비스센터 (農業部財務會計服務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재정관리 연구를 통한 재정관리 강화 및 개혁 건설 추진 제기, 부급 부서 자금 예산 및 당 경비 등 회계 정산 임무 담당, 또한 기관내 재무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 및 자금 예산 관리
중화농업과학교육기금회 (中華農業科技教育基金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및 사회 각층에 대한 자금 흡수를 통해 중국농업과학교육사업을 지지 및 농업과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보충, 과학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킴
농업부대외경제합작센터 (農業部對外經濟合作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분야에서 외자도입 및 국외투자 제도 실시, 국제금융조직 대출과 무상 원조 프로젝트 실시
농업부농업무역촉진센터 (農業部農業貿易促進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새로운 농업협상, WTO 농업관련 전문 협상, FTA 및 기타 관련 무역 협상 기술 지원 및 협상 참여, 농업무역 정책 연구 및 농업무역 추진 사업 진행, 농업 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농업부국제교류서비스센터 (農業部國際交流服務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 국제협력을 위한 통역 등 업무 협조
농업부농업생태와 자연보호총참 (農業部農業生態與自然保護總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자원환경보호, 농촌에너지건설, 농촌농업에너지절약 배출 감소 등 관련 정책 법률법규 연구, 기술 시범 보급 및 업무 지도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 (全國農業技術推廣服務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시스템 관리
농업부농약검정소 (農業部農藥檢定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등기 관리, 농약품질검사, 농약생물측정, 농약잔류 감독 검사, 농약시장 감독, 농약 정보교류 및 대외협력과 서비스 등 업무 담당
농업부우수농산물개발서비스센터 (農業部優質農產品開發服務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농산물 개발 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지방우수농산물 개발과 기술 지도, 우수 농산물 생산, 가공, 저장운반 등 기술 보급, 무공해 재배 농산물 인정 업무 담당

* 기타 어업관련 기관(어업선박검사국, 중국수산과학연구원, 전국수산기술서비스총참) 및 농업부기관 서비스국. 중국농업영화TV중심이 있음



<그림 4-4> 중국 농업부 및 산하 기관 구성(2017년 4월 현재)

3) 중국 농업부의 예산 및 인력

2016년 농업부 예산은 60.8억 달러 수준으로 정부 예산의 1.5% 수준이다. 농업부 예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62.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하였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등락이 있지만 1.4~1.8% 수준을 유지한다.

농업부의 농림수산 지출 항목별 예산 지출을 보면 국영농장시스템 운영 비용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⁴⁾ 다음으로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사업, 보조금사업, 토지정리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산물 품질안전관리감독사업, 병충해방제사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농업부(산하 공공기관 포함) 인력은 2012년에 10.3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 기준 8.8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행정부 전체 인력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표 4-23> 중국 농업부의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농업부지출	비중	전체지출	회계연도	농업부지출	비중	전체지출
2008	2,772	1.44	192,280	2013	6,015	1.82	330,724
2009	3,101	1.39	223,365	2014	6,268	1.71	366,993
2010	3,817	1.58	241,541	2015	6,148	1.50	410,096
2011	4,059	1.59	256,033	2016	6,087	1.48	411,973
2012	4,835	1.62	297,851	2017	-	-	-

주 1. 각 연도 평균환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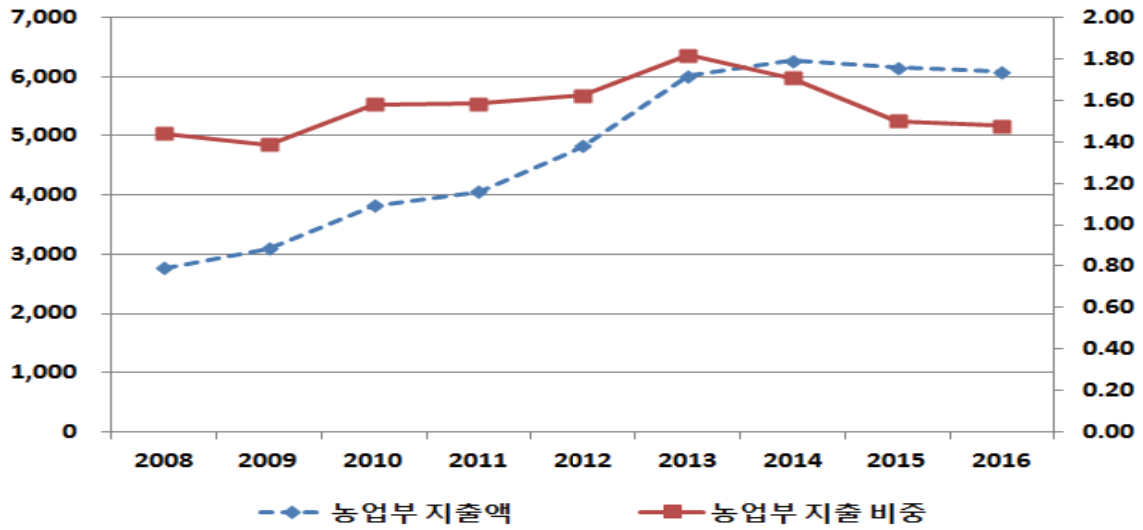
2. 농업부 지출은 농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지출은 모두 포함함.

자료: 농업부. 각년도 農業部部門預算

14) 국영농장시스템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해방군 제대 군인과 도시의 청년지식인 등이 참여하여 황무지를 개간해 얻은 국영농장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다. 중국에서 국영농장시스템은 농간계통(農墾系統; Agricultural Reclamation System)으로 지칭되며 농업부 내 농간국(農墾局; 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서장자치구를 제외한 30개 성·자치구·직할시에 국영농장구역(墾區)이 분포하며 구역 내에는 국영농장 외에도 공업기업, 건축기업, 운송기업, 상업기업 등의 비농업 국유기업이 존재
- 국영농장은 농업 생산·경영 위주의 국유기업을 의미하지만 그 경영 방식은 지역별 또는 국영농장별로 커다란 차이 존재
-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국영농장구역(墾區) 내 국유기업 수는 5,107개로 이 중 국영농장이 1,789개이며 다음으로 상업기업 1,443개, 공업기업 1,192개, 건축기업 439개, 운송기업 244개 순

단위: 백만 달러, %



<그림 4-5> 중국 농업부의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주: 각 연도 평균환율 적용

자료: 농업부, 각년도 農業部部門預算

<표 4-24> 중국 농업부의 항목별 예산지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공공서비스	-	-	-	-	60	0
국제기구 및 대외교류협력	26,305	0.7	33,635	0.9	36,779	0.9
교육	23,683	0.6	21,519	0.6	20,851	0.5
과학기술	822,759	21.3	928,999	24.3	963,909	23.8
문화체육 및 언론	51,150	1.3	51,523	1.3	49,775	1.2
사회보장 및 취업	291,623	7.6	259,223	6.8	277,221	6.9
의료보건	24,348	0.6	20,390	0.5	36,956	0.9
환경보호	15,381	0.4	16,882	0.4	27,085	0.7
농림수산	2,527,398	65.6	2,422,397	63.3	2,544,189	62.9
주택보장	71,832	1.9	75,249	2	84,970	2.1
합계	3,854,478	100	3,829,816	100	4,041,795	100

주: 각 연도 평균환율 적용

자료: 농업부, 각년도 農業部部門預算

<표 4-25> 중국 농업부의 농림수산 지출항목의 지출액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2,325,517	92.0	2,192,139	90.5	2,214,300	87.0
사업운영	178,847	7.1	173,282	7.2	190,601	7.5
국영농장운영	858,877	34.0	971,675	40.1	1,082,167	42.5
기술보급	106,700	4.2	105,563	4.4	106,070	4.2
병충해방제	66,152	2.6	63,369	2.6	63,449	2.5
농산물 품질안전	80,727	3.2	91,812	3.8	96,184	3.8
법률집행 및 관리감독	215,986	8.5	40,285	1.7	33,109	1.3
관측 및 정보서비스	39,167	1.5	43,812	1.8	45,515	1.8
대외교류협력	15,689	0.6	17,306	0.7	17,554	0.7
재해 예방 및 구제	9,800	0.4	9,800	0.4	11,041	0.4
농업투입재 보조	115,030	4.6	121,606	5.0	120,245	4.7
농업생산보험보조	134,800	5.3	109,000	4.5		
농업조직화 및 산업화경영	2,848	0.1	2,868	0.1	2,884	0.1
농산물 가공 및 판매촉진	3,675	0.1	4,046	0.2	3,497	0.1
농촌공익사업	225,829	8.9	216,617	8.9	225,963	8.9
농업자원보호 및 이용	39,682	1.6	55,982	2.3	60,206	2.4
기타	231,708	9.2	165,117	6.8	155,814	6.1
수리시설	20,360	0.8	24,300	1.0	26,800	1.1
빈곤구제	14,306	0.6	14,450	0.6	14,471	0.6
농촌기초시설 건설	9,700	0.4	9,805	0.4	9,854	0.4
생산발전	4,190	0.2	4,210	0.2	4,190	0.2
기타	416	0.0	435	0.0	427	0.0
농업종합개발	121,215	4.8	139,432	5.8	124,000	4.9
토지정리	67,824	2.7	101,856	4.2	106,400	4.2
산업화경영	16,391	0.6	17,576	0.7	8,000	0.3
기타	37,000	1.5	20,000	0.8	9,600	0.4
농촌종합개혁	38,000	1.5	40,271	1.7	40,118	1.6
농업보험비보조	-	-	-	-	113,200	4.4
기타	8,000	0.3	11,805	0.5	11,300	0.4
합 계	2,527,398	100.0	2,422,397	100.0	2,544,189	100.0

주: 각 연도 평균환율 적용

자료: 농업부, 각년도 農業部部門預算

4. 시사점

중국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농업현대화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4화동보(四化同步)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서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것이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중앙1호 문건의 키워드로 등장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13.5 계획'이 마감되는 2020년에 샤오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대내외에 천명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의 현대화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둘째, 농업현대화 계획은 농정의 4대(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유통) 축과 관련된 추진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망라한다. 다만, 세계 경제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농업분야 적용을 위한 추진과제들도 포함하고 있어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농정 트렌드를 반영한 점이 주목된다. 인터넷 대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진화한 중국이 인터넷과 농업의 결합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부가가치 제고와 소득 증대, 농촌지역 빈곤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중시). 중국이 뉴노멀시대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내수 확대 전략의 성과를 좌우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민공들의 도시호적 취득이 중요한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농민재산권제도 개혁도 중시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설정한 농업현대화의 각종 목표들이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농업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농업과의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산업(기업)이 모방과 추격의 단계를 넘어 혁신을 주도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농업의 성장에 따른 농식품시장(농자재시장)의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요인(무역, 투자)을 제공한다.

넷째, 중국의 정부조직은 2013년 개편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관련 업무 추진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조직 개편에서는 농업관련 업무 담당 중앙 행정부처를 농업부로 일원화하는 조직체계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미국의 농정변화와 농정조직의 변화

1. 미국의 농업법을 통해 본 농정의 변화

미국 농업법은 1933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및 농업 여건을 반영하여 대략 5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미국의 농업법은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농업·농정·협상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김태곤, 2002). 미국 농업법은 향후 5년간 실시될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임정빈, 2014).

이에 미국 농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의 농정 방향의 흐름을 분석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의 농업법의 변화를 통해서 미국 농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주요내용¹⁵⁾

‘2002년 농업법안’의 명칭은 ‘2002년 농장안전 및 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이며, 실시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6년간이다.

(1) 2002년 농업법의 특징

6년간(2002-2008) 미국 농정의 방향과 예산액을 결정한 ‘2002년 농업법’은 선거를 앞두고 둔 정치권이 보호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법률로 만들었고, 이에 행정부도 찬성하였다는 점이 강하다.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득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융자단가(loan rate)를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고정직접지불단가의 인상, 그리고 과거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목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보전 직접지불제도(counter-cyclical payment)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환경보전에 대해 강화한 측면이 있다. 환경보전 예산을 향후 10년간 171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였다. 환경농업정책 강화를 위해 토양보전유보사업(CRP) 확충, 환경개선장려사업(EQIP) 확충, 친환경농법 도입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농촌지역단위의 개발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오지지역 케이블 설치, 광케이블 설치 등에 대한 정부보조, 생산자의 농산물가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투자 및 농촌공업계획 등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10개 장(title), 530개 조(se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420페이지(A4)에 달한다. 장 구성은 품목계획, 보전, 무역, 영양계획, 금융, 농촌개발, 연구관련, 삼림, 에너지, 기타 등 10개 장으로 되어있다.

15) 이 내용은 김태곤(2002)과 최상기(2002)의 연구 내용을 요약 후 수정·인용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품목별 3대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수립

2002년 농업법은 품목별 소득안정 제도로서 1996년 농업법상의 제도인 고정형 직접지불제(fixed decoupled payment)와 마케팅론제(marketing loan)를 유지하는 한편 목표가격제를 내용으로 한 반순환 직접지불제(counter-cyclical payment)를 새로 도입하였다.

마케팅론의 경우 기존 마케팅론제도를 유지하고 대두를 제외한 모든 작물의 용자단가를 상향조정하였다. 1996년 농업법은 대두가 고정형 직접지불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용자단가를 5.26달러/부셸로 비교적 높게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 농업법에서는 대두도 3대 농가소득안전망정책에 포함시키는 대신 용자단가는 다른 작목과의 형평을 위해 5달러/부셸로 하향 조정하였다. 수수는 옥수수와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료작물이지만 상대적으로 용자단가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수수의 재배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2년 농업법은 수수에 대한 용자단가를 옥수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고정형 직접지불금액은 보조금 단가, 대상면적, 기준단수에 의해 정해진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의 50%까지 수확 전년 12월 1일부터, 잔액은 수확한 이후 10월 중에 지급된다.

가격보전 직접지불은 대상품목의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낮은 경우 지급된다. 실효가격은 대상품목의 유통연도 12개월 동안 전국 평균 시장가격과 전국 평균 용자단가 중 높은 가격과 고정형 보조금 지급단가의 합계가 된다.

나. 환경보전정책 강화

2002년 농업법은 연방농업정책의 예측가능성 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제도를 대폭 개선토록 하였다. 환경보전제도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납세자에게도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미국의 토양, 공기, 수자원, 야생생물 보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2002년 농업법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율적 환경보전제도를 규정하여 농가에게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토양과 수자원보전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은 현행 수준보다 80%이상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인 환경보전계약을 실천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환경보전 활동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게 하였다. 2002년 농업법은 CRP와 EQIP 제도를 개선하여 전국의 모든 생산자가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새농업법은 환경보전감시제도(Conservation Security Program)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 농촌개발과 고부가가치 농업

2002년 농업법은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산업기반 조성고 고용 확대를 통해 농촌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농촌지역 광역통신망 확충은 농촌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새농업법은 농촌지역 주민이 고속, 고품질 광역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1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난수신지역 해소를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원토록 하였다.

고부가가치 시장개발보조제도(Value Added Market Development Grants)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부가가치용 가공시설을 보유한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충하였다. 생산자의 농산물 가치 향상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간 지원수준을 1,5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표 4-26> 환경보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예산액
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 지급대상면적 한도를 3,640만 에이커에서 3,920만 에이커로 확대하고 각주의 습지보전시범사업 면적을 백만 에이커로 확대	15억 1700만 달러
WRP(Wetland Reserve Program)	• 대상면적 한도 227만 5천 에이커	15억 달러
GRP(Grasslands Reserve Program)	• 신규 및 양호한 목초지 2백만 에이커 확대	2억 5,400만 달러
FPP(Farmland Protection Program)	• 1996년 농업법 이후 108,000 에이커에 대해 5,340만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이를 약 20배 확대	9억 8,500만 달러
WHIP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 1996년 농업법 이후 160만 에이커에 약 6,250만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이를 10배 이상 늘림	7억 달러
EQI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 연간 지원수준을 현행 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우선 지역제도는 폐지하고 가축과 작물생산자에 대해 60대 40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	90억 달러
Water Conservation Program	• 수자원 보전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클라머스(Klamath)지역 생산자에 대해 별도 지원	6억 달러
CSP(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 환경보전 감시활동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규 도입	20억 달러
Small 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 50년 이상 오래된 작은 저수지의 복원을 위한 자금 지원	2억 7,500만 달러
Underserved States	•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 의한 프로그램 지속	5천만 달러
Desert Terminal Lakes	• 사막 접경지 호수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	2억 달러
합 계		171억 달러

라. 해외무역 및 수출촉진

2002년 농업법에는 미국의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 미국 농산물의 40%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생산자의 소득 유지를 위해 수출시장 확대는 중요하다. 이번 농업법은 미국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확대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확대와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미국의 과잉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 국민 영양

영양관련 지원규모는 총 64억 달러이다. 푸드스탬프제도는 농업분야의 풍부한 생산물을 영세가구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적정 식량 소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농업법은 이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여 각 주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 한편 농업과 영양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푸드스

템프제도 체계를 개선하였다.

<표 4-27> 2002년 미국 농업법 개요

구분		개요
법률 명칭		○ 2002년 농장안전 및 농촌투자법 (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실시 기간		○ 6년간(2002-07년)
추가적 예산조치※		○ 451억 달러
소득 안전망	융자단가 (loan rate)	○ 인상(단지, 대두 인하, 쌀 동결) ○ 마케팅론제도, 융자부족불제도 존속
	고정직접지불 (fixed decoupled payment)	○ 단가 인상 ○ 대상품목, 기준면적 확대
	가격보전 직접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	○ 신규 도입 - 1998년이후의 시장손실지불을 제도화 -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보전 ○ 대상품목·기준면적은 직접지불과 동일
농촌지역정책		○ 확충 - 오지지역 케이블설치 보조 - 생산자의 농산물가공사업 등 지원 - 농촌지역투자·농촌공업계획 등 확충
환경보전제도		○ 확충(171억 달러) - 토양보전유보사업(CRP) 확충 - 환경개선장려사업(EQIP) 확충 - 친환경농법 도입
원산지표시제도		○ 신설 - 채소, 낙화생, 과일, 식육(가금육, 가공품은 제외), 어패류 등 대상 - 미국 국내에서 생산, 재배, 가공된 것에 한하여 '미국산' 표시
정부지불상한		○ 1농가당 36만 달러 - 직접지불 상한 40,000 달러 - 가격보전 직접지불 상한 65,000 달러 - 가격지지 상한 75,000 달러

자료: 김태곤(2002) p6 인용.

2) 2008년 농업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¹⁶⁾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2008년 농업법은 개혁부족이라는 행정부의 반대, 시장지향적 교역질서 증진에 역행한다는 WTO 회원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2008년 농업법에서도 2002년 농업법에서 강조됐던 기존 3개 프로그램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①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② 지지수준을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를 신설하여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하였다.

16) 이 내용은 이정환 외(2002)의 연구 내용의 일부를 요약 후 수정·인용한 것이다.

재해와 가격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을 보호하는 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농가피해를 바로 지원하는 자동긴급지원제도(SADA)와 각종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실제 총수입이 목표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수입보전제도(SURE)가 도입되었다.

1인당 지급한도를 축소하고, 농업소득이 많은 부농과 농외소득이 많은 겸업농가 그리고 소규모 취미농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원 자격제한을 강화하였다.

(2)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가. 유통지원용자 프로그램

유통지원용자제도(Marketing Loan Program)는 시장가격이 농업법이 설정한 용자단가(loan rate)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생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농산물가격 하락시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3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제도이다.

2008 농업법은 시장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낮을 때 농민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고 해당 품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6개 품목의 보장가격이 2010년부터 상향조정하여 정부의 가격지지 수준이 높아졌으나, 최근 3년 평균 비농업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대상자를 제한하였다.

나. 고정직접지불제도

고정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는 정책대상품목의 기준 생산량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로써, 지불금액은 농업법에 규정된 직접지불단가, 생산자의 기준연도(1998~2001) 재배면적 그리고 기준단수의 곱으로 정해진다.

고정직접지불제의 실질적 수혜한도는 농민 1인당 8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또한 지급대상 농가에 대한 제한이 대폭 강화되어 최근 3년 평균 소득이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의 비농업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와 경작면적이 10 에이커(약 4ha) 이하인 취미농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가격보전직불제도(CCP)

가격보전직불제도(Counter-Cyclical Payments)는 정책대상 품목의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앞의 고정직불금을 가산한 농가수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당년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그 차액을 보전하여 목표가격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책대상품목에 건조완두, 렌즈콩, 병아리콩(소형, 대형)등 4개 품목이 추가되어 15개 품목이 되었다. 밀, 수수, 보리, 귀리, 대두, 기타 유지작물 등 6개 품목에 대한 목표가격을 2010년부터 상향조정하였고 육지면화(upland cotton)의 목표가격만 2009년부터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CCP 1인당 지급한도는 6만 5,000 달러로 2002년 농업법과 동일하나 “세 경영체 규칙”이 폐지됨으로써 CCP 보조상한이 실질적으로 13만 달러에서 6만 5,000 달러로 축소되었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비농업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와 경작면적이 10 에이커(약 4ha) 이하인 취미농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불제도(CCP)는 단수 수준에 관계없이 목표가격과 유효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로 단수가 크게 떨어질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도 가격이 올라 보전액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보전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revenue)기준 지급정책인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를 신설하였다.

수입보전직불(ACRE)은 주단위로 단위면적당 목표수입을 정하고 실제수입이 이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되, 해당 농가의 실제수입이 목표수입보다 낮을 때에만 지급되도록 하여 실제로 수입이 감소한 농가에만 지급된다.

1인당 지급한도는 7만 3,000 달러로 제한되고, 비농업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와 경작면적이 10 에이커(약 4ha) 이하인 취미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재해지원 프로그램 강화

과거에는 재해를 입더라도 실제 정부지원이 있기까지 의회 승인 절차 등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으므로, 홍수, 가뭄, 가축질병 등 긴급 재해 발생시 자동적으로 농가를 지원해 주는 5가지의 농업재해 긴급자동지원제도(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를 도입하였다.

농산물 판매대금과 앞에서 설명한 모든 품목별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농장 전체의 수입이 평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는 수입보전제도(SURE)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농장목표수입과 농장실제수입간 차액의 60%를 지불하되 지급상한은 10만 달러이며, 최근 3년 평균 비농업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09년 이후).

(3) 2008년 농업법 예산과 지출

2007년 3월 시점에서 평가한 예산을 보면 2008년 농업법을 5년간 시행할 경우 2002년 농업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보다 약 6,600만 달러의 지출 감소가 예상되어 2008년 농업법이 2002년 농업법에 비해 예산 절감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제4항목 영양(Title IV: Nutrition)이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제1항목 품목(Title I: Commodities) 정책에 약 15%를 할당하여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농업정책이 푸드스텝프, 학교급식 등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국 농산물 접근을 확대해서 미국 농민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동시에 품목 정책을 통해 농민 소득을 지지해 주는 것을 보여준다.

항목별 지출비중은 농업법 2002와 대체로 유사하나 제1항목 품목(Title I: Commodities)의 비중이 21.3%에서 1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책의 중요도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이 상승하여 보전금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2014년 농업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¹⁷⁾

(1) 특징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골격을 상당 부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품목별지지, 환경보전, 농산물무역, 국민영양, 농업신용, 농촌개발, 농업연구, 에너지 등 주요 항목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절감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거의 과거 농업재정지출 수준 유지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농업법이 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4년 농업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농정개혁은 하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는 지속적으로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년 농업법을 살펴볼 때, 향후 미국의 농업정책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품목별 가격 및 수입보장지원, 작물보험지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촉진 목적의 국민영양지원, 그리고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목적의 보전지원이라는 큰 틀의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개발 정책 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의 정책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주요 정책 부문별 재정지출 변화

2014년 농업법의 농업부문 재정지출 감축 폭은 2008년 농업법에 의한 재정지출의 약 1.7% 감축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도 향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4년 농업법에서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부문은 품목별농가지원(Commodities), 환경보전(Conservation)과 국민영양(Nutrition) 등 세 부문에 국한되고, 작물보험(Crop Insurance)을 포함하여 농촌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부문 등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이 오히려 증액되었다.

2014년 농업법은 총 12개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 지출 소요가 예상되는 부문은 국민영양(Nutrition, 7,564억 달러), 작물보험(Crop Insurance, 898억 달러), 환경보전(Conservation, 576억 달러), 그리고 품목별농가지원(Commodities, 445억 달러)의 순이며, 이들 4개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금액이 미국 전체 농업부문 재정지출의 99.2%를 차지한다.

주요 항목별로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4년 농업법은 품목별 농가지원에서 143억 달러, 국민영양지원프로그램에서 80억 달러, 환경보전에서 40억 달러 가량의 재정지출을 축소한 반면에 작물보험에서 57억 달러, 연구개발에 11억 달러,

17) 임정빈(2014)의 내용을 요약 후 수정·인용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 9억 달러, 원예 분야에 7억 달러, 농촌개발 분야에 2억 달러 가량 재정지출액을 증액하였다.

미국 농업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부문은 2008년 농업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영양(Nutrition)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다. 국민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전체농업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1%이다. 이는 국민영양지원 정책의 개혁을 통한 재정지출 삭감의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복지지원정책인 식품보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2014년 농업법은 향후 10년간 국민영양지원 부문에 80억 달러의 예산 감축을 결정하였지만 이것은 당초 하원의 390억 달러, 상원의 39억 달러 가량의 삭감제안에 비추어 볼 때, 상원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28> 2014 농업법 재정지출 소요 예상치 비교(향후 10년간 합계, 2014-23년)

단위: 백만 달러

주요 부문		2008년 농업법 유지 기준치(1)	2014년 농업법 추정치(2)	기준치와의 차이 (1)-(2)	2014년 농업법 항목별 차지 비중(%)
I	Commodities	58,765	44,458	-14,307	4.65%
II	Conservation	61,567	57,600	-3,967	6.02%
III	Trade	3,435	3,574	+139	0.37%
IV	Nutrition	764,432	756,432	-8,000	79.1%
V	Credit	-2,240	-2,240	0	-0.23%
VI	Rural Development	13	241	+228	0.03%
VII	Research	111	1,256	+1,145	0.13%
VIII	Forestry	3	13	+10	0.001%
IX	Energy	243	1,122	+879	0.11%
X	Horticulture	1,061	1,755	+694	0.18%
XI	Crop Insurance	84,105	89,827	+5,722	9.39%
XII	Miscellaneous	1,410	2,363	+953	0.25%
Total		972,905	956,401	-16,504	100%

자료: Chite R.M,(2014), The 2014 Farm Bill(P.L. 113-79): Summary and Side-by-Side.

국민영양지원 프로그램의 뒤를 이어 많은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작물보험(Crop Insurance), 환경보전(Conservation), 품목별 농가지원(Commodities)의 순이다. 특히 작물보험의 경우 미국의 전통적인 주요 4대 농업지원 정책(국민영양, 작물보험, 환경보전, 품목별농가지원) 부문 중 유일하게 절대금액 측면에서 2008년 농업법에 비해 향후 10년간 57억 달러 정도 큰 폭으로 재정지출이 증액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농업재정지출에서 작물보험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농업법의 8.6%에 비해 9.4%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4-27 참조>.

<표 4-29> 주요 정책 부문별 향후 10년간 예산소요 추정액 비교(2014-2013)>

단위: 억 달러, %

구분	국민영양	작물보험	환경보전	품목별 농가지원	합계
2008년농업법지출액 (baseline A)	7,644 (78.6%)	841 (8.6%)	616 (6.3%)	588 (6.0%)	9,729 (100%)
2014년농업법지출액(B)	7,564 (79.0%)	898 (9.4%)	576 (6.0%)	445 (4.6%)	9,564 (100%)
증감액(B-A)	-80	57	-40	-143	-165

자료: Chite R.M.(2014), The 2014 Farm Bill(P.L. 113-79): Summary and Side-by-Side.

2. 미국 농무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1) 미국 농무부의 조직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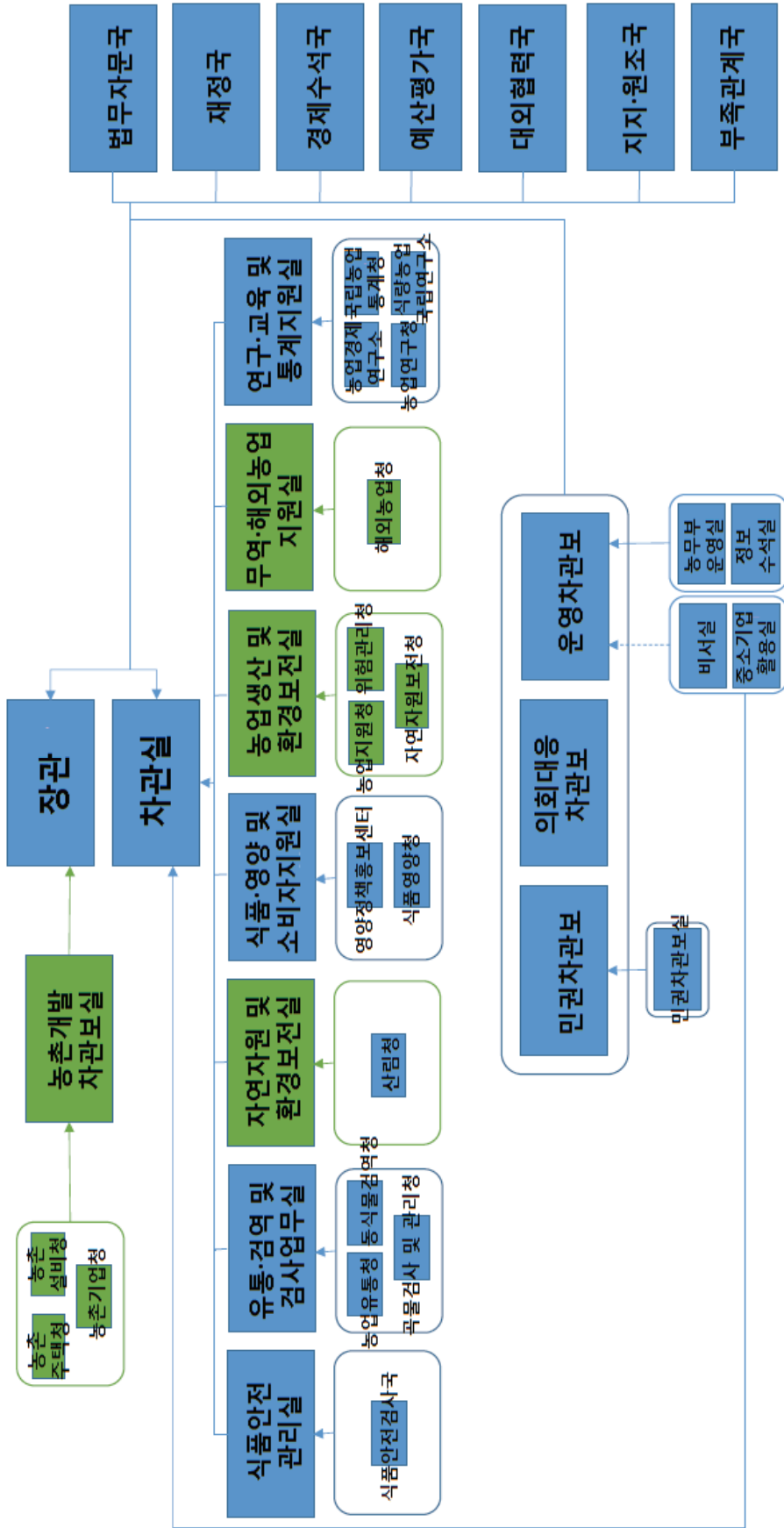
USDA는 장관, 차관 산하에 의정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ongressional Relations), 행정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시민권익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 등 3명의 차관보가 있다.

USDA 본부에는 정책 성격 및 사업업무영역에 따라 크게 7개 실로 분류된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의 실장(Under Secretary)이 관장한다. 정책시행의 성격에 따라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농촌개발,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식품안전, 연구·지도 및 경제, 유통·검사 및 검역분야로 나누어 각 부서별로 실장이 업무를 관장한다.

USDA 본부의 7개 실 산하에 각각 1~4개 기관(Agency)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총 19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또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주(State)와 세계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Farm Service Agency는 각 군(County)에 지방 사무소를 두고 정책금융과 각종 직불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 지역개발사무소(OCD)를 두어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한다.

18) 이 부분은 이정환 외(2012)의 연구 pp. 153-169를 기초로 재구성 하였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음.

USDA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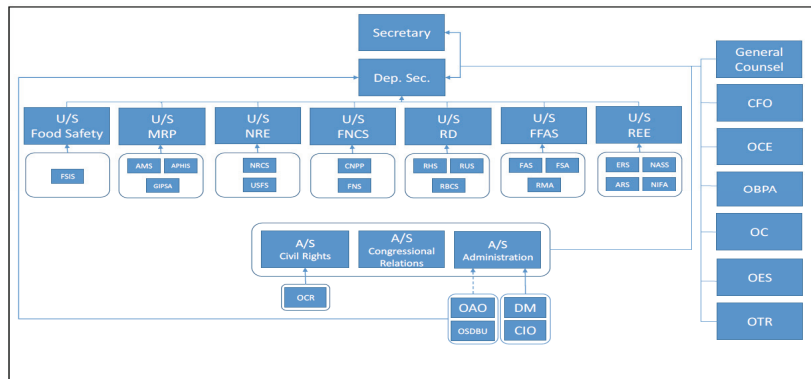
자료: USDA(2017). Report on the Proposed 2017 Reorga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Establish an Under Secretary for 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p.6.

<그림 4-6> USDA 조직도(2017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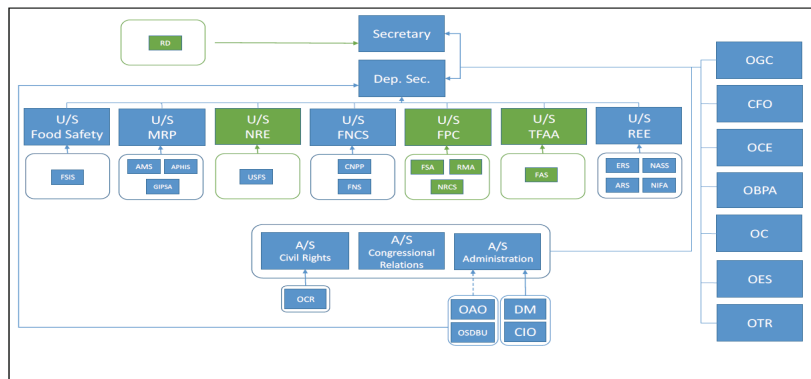
※ 2017년 USDA 조직개편안

- 2017년 5월 11일 USDA는 각종 비관세장벽과 무역협정에 대응하는 무역전담부서인 무역·해외농업 지원실(Under Secretary for 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TFAA)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 개편안은 TFAA 신설의 목적이 미국 농업부문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등 각종 비관세 장벽, 특별대우를 요구하는(preferential) 타국의 무역협정에 대한 USDA의 대응력 강화임을 밝히고 있다.
 - 이로써 기존에 FFAS에 소속되어있던 FAS, FSA, RMA는 해외무역관련 기능을 가진 FAS와 국내 농산물 생산자 대응기능을 가진 FSA, RMA가 분리되었다.
 - 이 밖에 TFAA는 SPS문제, 비관세장벽, 기타 통산관련 사안 등의 총괄 조정자(Multiagency coordinator)로 지정(designate)되어 무역 조정관련 업무를 한 부서의 기능으로 집중되었다.
 - 이 조직개편안은 2017년 3월 행정명령 13781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개편안은 농촌개발실(Rural Development)을 장관(Secretary) 직속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 개편안은 향후 의회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Current USDA Organization



Proposed Reorganization of USDA Trade Functions (TFAA) and the Creation of an Under Secretary for 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TFAA) and Elevation of Rural Development



<그림 4-7> USDA 조직개편안 모식도

주: 이 부분은 USDA(2017)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자료: USDA. 2017. Report to Congress: Report on the Proposed 2017 Reorga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Establish an Under Secretary for 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표 4-30> 2016 US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부서	예산항목	2016 예산 ¹⁾	2016 인력 ²⁾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해외농업지원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FFAS)	23,613 (15.36)	5,684 (5.8)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			
농촌개발실(Rural Development: RD)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6,451 (4.20)	5,026 (5.1)
영양정책홍보센터(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106,896 (69.52)	1,704 (1.7)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	11,378 (7.40)	43,851 (44.6)
삼림청(Forest Service: FS)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식품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1,025 (0.67)	9,036 (9.2)
농업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유통·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2,845 (1.85)	11,551 (11.7)
곡물검사 및 관리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3,444 (2.24)	8,389 (8.5)
식량농업국립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식량농업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부서운영비(Departmental Activities)	680 (0.44)	4,814 (4.9)
	소계 ²⁾	156,332	90,055
	총계 ³⁾	153,773	98,386

USDA 인력 현황(2013): 95,223 명, (전체 인력의 3.49%)

주 1) 예산 항목은 지출액(Outlay)의 추정치를 사용함.

2) 소계 값은 예산에서 윗 값을 모두 합한 값, 인력에서 연방정부 소속 인력임.

3) TOTAL 값은 subtotal에서 이자수익 등을 차감한 값, USDA에서 일하는 총 인력임.

자료: USDA(2017), FY 2017 Budget Summary. p.112.,

OPM.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1)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실(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은 미국 내 사유지 및 공유지의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1억 9,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전국 산림 및 초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NRE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를 통해 농지의 보전과 쾌적한 자원 및 환경 보전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 업무는 산림청(Forest Service: FS)과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이 담당하고 있다.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NRE)업무를 위한 예산은 2017 회계연도기준으로 미 농업부 예산지출액의 7.57%인 114억 6,700만 달러이나, 인원은 농업부 소속 직원의 44.8%인 4만 3,838명으로 7개 업무분야 중에서 가장 많다.

가. 산림청(Forest Service: FS)

1905년 설립하였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과 초지의 건강 상태,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연자원의 건전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다음 5대 활동을 실시한다. 첫째, 국립 산림 시스템과 토지 및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둘째, 임업, 방목장 관리 및 산림 자원 활용의 모든 측면에 대해 연구,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 산업, 농촌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및 관련 유역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지주와의 협력, 넷째, 미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인력을 지원, 다섯째, 세계 산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다.

산림청 업무에 관한 법률은 1897년 최초로 Organic Administration Act가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산림관리에 관한 법률은 1976년의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이다. 산림연구에 관해서는 1978년의 the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Act이다.

나.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지속가능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량공급과 더불어 삶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성숙한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유지 소유권자가 자원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며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발적이면서 과학기반적인 보전, 기술적 지원, 파트너십, 동기유발적인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2)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FFAS)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실(FFAS)은 대부분의 미국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업무를 책임지면서 농장을 경영하는 농가들을 시장변동과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경영을 안정시키고 농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담당한다.

FFAS은 품목별 지원, 소득지지, 수출진흥, 농가신용, 위험관리 등 각종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이 경제 및 무역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된 사업은 농업법(Farm Bill)에 의

한 품목별 가격안정, 농가소득지원, 자금융자, 재해지원, 농업보험, 수출시장 확대 등이며, 이러한 농업정책 및 계획들을 통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소득 안전망(income safety net)을 제공한다.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FFAS는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농업법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부서이다.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실(FFAS)에는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해외농업지원청(Foreign Agriculture Service: FAS) 및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산하기관으로 소속되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FAS)을 위한 예산은 2017 회계연도기준으로 미 농업부 예산지출액의 15.98%를 점유하며, 인원은 5.8%를 점유하고 있다. USDA 7개 부서 중 예산지출액은 식량·영양 및 소비자지원(FNCS) 분야 다음으로 많으나, 소속 인원은 7개 부서 중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가.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보존/상품/재난/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 가격 및 농가 소득안정, 환경보전, 재해지원, 국제 식량 지원 등에 관한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밀, 옥수수, 콩, 쌀 등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지원융자사업(Marketing Assistance Loan Programs), 해외원조를 위한 곡물과 가격안정을 위한 낙농품 등을 구매, 저장 및 판매 사업 (Commodity Purchase Programs), 자연재해농가에 대한 비보험작물지원, 긴급보전, 긴급융자, 가축사료공급 등 지원사업, 농장 구입자금, 경영자금 등의 직접융자 및 신용보증 사업, 보전휴경사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농업안전 및 보전청(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 연방농업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 농가지원청(Farmers Home Administration)의 신용부문 등 3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다만 1996년에 연방농업보험공사의 업무는 위험관리청(RMA)을 신설하여 분리되었다.

나. 해외농업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시장에서 미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국산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농업청은 162개국에 걸쳐 98개 사무소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수급, 무역, 가격 동향, 시장접근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한다. 그리고 해외식량원조와 시장개척과 관련된 기술지원 프로그램 시행과 외국 대사관과 농업무역사무소 등에 요원을 주재시켜 무역협정체결 및 농업협상 등에서 미국 농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다.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

농업생산자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험관리수단인 농업보험을 진흥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농업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농업보험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연방농업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operation, FCIC)는 1938년 농업조정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위험관리청은 연방농업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operation, FCIC)를 관리 및 감

독하며,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업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승인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며 재보험제도를 운영하며, 농업위험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2015년 작물연도 기준, 연방 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3)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농촌개발실(Rural Development: RD)은 미국 내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기회의 증진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나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농민 개개인, 지역사회,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금융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농업경영체 및 공동시설 구축, 현대식 수리 시설 개발, 전기 및 통신서비스 설치 등 각종 정책 활동을 지원한다.

농촌개발실(RD)은 미국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래와 같은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구입·건축·개축 및 임대 지원, 농촌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지역 기업과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교육, 의료, 소방 등 공공시설 건설과 상수도, 전력, 통신설비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각 정부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개발 계획수립과 집행을 총괄적으로 지도 및 관리한다. 지원방법은 자금융자, 신용보증,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농촌개발실 산하에 농촌기업청(Rural Business Cooperative Service: RBS), 농촌설비청(Rural Utilities Service: RUS) 및 농촌주택청(Rural Housing Service: RHS) 3개 기관이 있다. 농촌개발과 관련된 2017 회계연도 지출예산은 24억 5,800만 달러이고, 인력투입은 전체 인력의 5.3%이다.

가. 농촌기업청(RBS)

농촌기업청의 역할은 새로운 농촌기업과 협동조합의 창설, 그리고 기존 농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기업청은 농촌지역 소재 공공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농촌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협동조합 문제를 포함한 농촌지역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자료 제공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지역 상공업에 대한 직접융자, 신용보증 및 보조사업, 농촌지역 협동조합 설립 보조사업, 농업인과 농업인 소유 협동조합에 대한 농산물 판매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농업혁신센터(Agricultural Innovation Center) 프로그램 운영과 농업유통정보센터(Agricultural Marketing Resource Center)를 보조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법에 관한 기술 이전,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지원한다.

나. 농촌설비청(RUS)

농촌설비청은 농촌지역 내 농가 및 기업에 현대적인 통신, 전력 및 상하수도 시설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역에 고속통신망 설치, 1936년의 농촌전력법

(Rural Electrification Act)에 의한 전력시설, 인구 1만 명 이하 농촌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자금을 용자 및 신용 보증한다. 이와 함께 통신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격 교육 및 진료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용자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농촌주택청(RHS)

농촌주택청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사업으로는 중간소득층 이하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주택 구입·개량·임대자금을 용자하거나 보조(62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개량자금 보조)하며,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영세민 임대주택 사업을 보조한다.

이와 함께 농업노동자주택(Farm Labor Housing)사업에 의해 공공 또는 비영리단체 및 농가에 농업노동자용 주택건설 자금을 용자 지원한다. 또한, 인구 2만 명 이하 농촌지역에 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 육아시설, 의료시설, 소방시설과 장비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용자, 신용보증 또는 보조한다.

라. 지역개발사무소(OCD)

가난, 실업 등으로 낙후되고 침체된 농촌지역에 대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들과 민간 및 비영리 단체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농촌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활성화 프로그램(Rural Empowerment Zone & Enterprise Community Program)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가 심사한 후 대상지역을 결정하여 관광사업, 교통·통신,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경제협력사업(Rural Economic Area Partnership)은 지역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부진한 낙후지역에 제조업유치, 직업교육,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hampion Communities (CC), Rural Community Advancement Program(RCAP) 등 각종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실(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은 국민의 영양과 건강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과 영양정책홍보센터(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를 두고 있다.

FNCS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확대하고, 적절한 영양제공과 운동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인의 영양과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FNCS)을 위한 예산은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농업부 지출예산의 70.6%인 1,069억 4,400만 달러로 농업부의 7개 업무분야 중 가장 많지만 인력 투입의 비중은 1.7%로 가장 낮다.

가.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

식품 및 영양청은 기본적으로 식량과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영양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어린이들과 저소득계층이 식량과 건강한 식단, 영양교육을 제공 받아 기아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주 정부와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주 정부는 식량지원대상자 관리, 식품분배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FNS는 행정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동 및 성인급식사업, 건전식생활 캠페인(Eat Smart. Play Hard. Campaign), 긴급식량지원, 푸드스탬프제(food stamp), 학교급식사업, 여성·임산·부·아동에 대한 특별영양공급사업 등이 있다.

나. 영양정책홍보센터(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

영양정책홍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 및 건강상태를 연구하여 적절한 식이요법 가이드를 개발, 홍보함으로써 미국인의 건강과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직원들은 주로 영양사, 영양학자, 경제학자, 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어 영양교육 정책을 정의하고 상호 협력하여 연구 및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식생활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작성 및 홍보, 표준식단(Food Plan) 작성 및 홍보, 식품수급표 작성, 아동 양육비용 작성 및 가족과 영양문제 관한 발간사업 등을 수행한다.

(5)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식품안전관리실(Food Safety: FS)은 USDA 전략목표 4인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균형잡힌 식단 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관리(FS)에 관련된 업무는 소속기관인 식품검사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관리(FS)를 위한 2017 회계연도 예산은 미국 농업부 지출예산의 0.69%인 10억 4,100만 달러로 농업부의 7개 업무분야 중 가장 작지만 인력 투입의 비중은 9.3%로 지출대비 높은 편이다.

식품검사청(FSIS)은 육류, 가금육 및 달걀의 안전과 건전성 그리고 적절한 포장과 표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신선 및 가공품 대한 안전기준과 검사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업무의 근거법은 연방육류검사법(the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검사법(the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난제품검사법(the Egg Products Inspection Act)이다.

식품검사청(FSIS)의 주요사업은 첫째, 가금류와 가축 및 관련제품의 검사, 둘째, 모든 신선, 냉동 및 건조된 난류 검사, 셋째, 제조시설, 제조성분, 가공절차, 포장 및 표지, 미생물 및 화학물질 허용치 등에 대한 식품안전기준 설정, 넷째, 제품에 대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 분석, 다섯째, 육류소비와 관련한 위험평가, 정보전파 및 관리, 여섯째,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6)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실(REE)은 농업관련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담당 부서로서 농산물 및 식품 연구, 경제 및 통계분석을 통한 연방정부의 지도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 지도, 훈련 및 교육사업과 농업관련 생명공학, 물리과학, 사회과학 연구를 통한 기술과 정보를 개발, 응용,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연구·교육 및 통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REE는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영농기법을 보급하고, 소비자나 농촌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 한다. REE는 USDA가 설정한 4가지 모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분석, 정보지원 등을 제공한다.

연구·교육 및 통계실(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산하에는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식량농업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농업경제연구원(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등 5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연구·지도 및 통계(REE) 업무를 위한 예산은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농업부 예산의 2.3%인 34억 8,100만 달러이지만, 인력투입은 농무부 전체 인력의 8.7%로 낮지 않다.

가.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USDA의 중요한 자연과학 연구부서로서 농업관련 기술적 연구를 통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고품질의 생산성 높은 미국 농업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전역을 지대별로 나누어 관장하는 8개 지역사무소(Area Office)와 90여 개의 시험장·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200명의 과학자와 6,2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연구과제는 국책과제 18개를 포함하여 800여 과제이며 연구비는 연간 11억 달러 수준이다.

연구방향은 고품질 농산물과 안전 식품 보장, 친환경적인 농업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다. 미국인이 고품질 식품과 기타 농산물을 믿을 수 있고 적절하게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를 위해 작물, 가축의 생산과 방역, 인간 영양, 농업과 환경과의 교감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나. 식량농업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식량농업국립연구소는 1994년부터 있었던 농업기술보급협력청(CSREES)을 대신하여 2008년 에너지법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 연구소는 연구, 교육, 경제를 담당하는 곳으로 농업 연구, 경제 분석, 통계, 고등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학 및 기타 제휴기관에 연구,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대한 지식, 환경, 인간의 건강 그리고 지역 사회연구가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다. 농업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사회과학 연구부서인 농업경제연구소(ERS)은 USDA의 조사 및 연구담당기관으로서 농업, 식품, 자연자원과 농촌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연구결과와 사회경제학적 지표를 발표하고, 농업, 식량, 자연자원, 농촌과 관련된 경제학적, 정책적 사건들에 관한 공적/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학적 연구와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농업인, 농관련산업체, 소비자, 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관한 전문적이고 경제학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라.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1862년 미 농업부의 일부로 함께 설립된 국립농업도서관은 미국 최고의 농업정보 제공기관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농업정보 제공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국립농업도서관은 총 400만 점, 50개 국어로 된 도서, 잡지, 논문,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농업도서관으로 도서관의 관리는 AR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215여 명이다. 농업 연구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과학자, 교육자, 농업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NAL은 과학 기반 정보의 안정적인 소스로서, 8가지 정보센터에 대해 자체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웹사이트는 대안 농업 시스템 정보 센터 (AFSIC) (<http://afsic.nal.usda.gov>), 동물 복지 정보 센터 (AWIC) (<http://awic.nal.usda.gov>), 식품 영양 정보 센터 (FNIC) (<http://fnic.nal.usda.gov>), 식품 안전 정보 센터 (FSIC) (<http://foodsafety.nal.usda.gov>), 국립 침윤성 종의 정보 센터 (NISIC) (<http://www.invasivespeciesinfo.gov>), 농촌 정보 센터 (RIC) (<http://ric.nal.usda.gov>), 기술 이전 정보 센터 (TTIC) (<http://ttic.nal.usda.gov>), 수질 정보 센터 (WQIC) (<http://www.nal.usda.gov/wqic/>)이다.

마.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국립농업통계청(NASS)은 USDA의 공식적인 농업통계생산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농업인 농관련산업체, 학자, 공무원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통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농업통계는 50개 주를 관할하는 45개 주(State) 통계사무소 조사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 통계사무소는 주의 농업담당부서 또는 대학과 협력협정을 통해 운영되었다. 통계자료는 주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면접, 전화, 우편설문서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각 주의 통계사무소에서 취합된 자료는 국립농업통계청의 통계위원회(Agricultural Statistics Board)에서 심의 확정되어 주 및 국가 공식통계로 발간된다.

(7) 유통·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유통·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은 미국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을 원활히 확대하고, 동식물의 건강과 후생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의 유통 및 식품안전경쟁력을 증진하는 하부기반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한다.

유통·검역 및 검사(MRP)에는 농업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동식물 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곡물검사 및 관리청 (Grain Inspection, Packer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등 3개 산하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유통·검역 및 검사(MRP) 업무를 위한 예산은 2017년 회계연도기준으로 미 농업부 지출예산의 1.97%인 29억 7,800만 달러이지만, 인력투입 비중은 11.6%로 인력투입이 지출대비 매우 많다.

가. 농업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업유통청(AMS)은 미국 농산물 유통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농업유통청(AMS)이 수행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농산물 규격과 품질 등급 설정 및 관리, HACCP 및 ISO 등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둘째, 원활한 유통을 위한 농산물 가격, 유통량 등 유통정보 수집·분산 사업, 셋째, 학교급식 등 국가식량지원사업용 식품 구매를 통한 수급 안정, 넷째,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신선 및 가공식품에 대한 농약잔류조사 사업(the Pesticide Data Program), 다섯째,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 광고 지원, 여섯째, 유통협약 및 명령제(Marketing Agreement and Order)운영, 일곱째, 공정거래를 위한 부패성농산물법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연방종자법(Federal Seed Act), 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등 관리, 여덟째, 유기농산물 표지 등 유기농산물 보증 업무 (Organic Certification), 아홉째, 유통기술, 시장개척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의 유통진흥사업(Market Development), 열 번째, 효율적인 농산물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금지원 등이다.

나.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국내 동식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유해동식물(Invasive Species)의 유입 및 정착(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으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외래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통한 동식물의 건강과 관리감독과 국제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우려되는 해충 또는 질병이 감지되는 경우, APHIS는 비상협약을 실시하고,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각 주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다. 곡물검사 및 관리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가축, 가금류, 육류, 곡류, 유지작물, 기타 농산물의 마케팅을 촉진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와 미국농업의 전반적인 편익을 위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무역관행(practices)을 증진시킨다. 산업 무역 실태를 조사하여 가축, 가금류, 육류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방곡물검사사업(Federal Grain Inspection Programs), 가축, 육류 및 가금류에 관한 도축장 및 집하장관리사업(Packers and Stockyard Program)이 있다.

연방곡물검사사업은 연방곡물검사소에서 담당하며, 미국 곡물규격법(U.S Grain Standard Act)과 1946년의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에 따라 곡물류의 표준규격과 검사방법을 설정하고, 중량과 규격을 검정하고, 유통을 감독하는 사업이다.

도축장 및 집하장관리사업은 1921년의 도축장 및 집하장관리법(Packers and Stockyards Act)에 따라 공정하고 경쟁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불보장, 경쟁촉진, 계량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미국 농무부의 예산과 인력투입 변화

(1) 미국 농무부의 예산과 인력 변화

가. 미국 농무부의 총 예산 변화

USDA의 예산은 2002년, 2008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식품 영양 부문 예산 지출이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400억 달러이상 증가했고, 2008년 식품 영양 부문 예산지출을 확대하며 농무부 예산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이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농무부 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실(FFAS)에서 새로 수입보전직접지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과는 대조되게 2010년부터 농무부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인력감축을 보면 알 수 있다.

농업법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실(FFAS)의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를 주관하는 위험관리청(RMA)에 예산이 집중되었으나,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농촌과 환경관련 부서의 예산이 늘어났다.

<표 4-31> USDA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농무부 지출	비중	전체지출	회계연도	농무부 지출 ¹⁾	비중	전체지출 ²⁾
2001	68,599	3.68	1,862,846	2010	129,460	3.74	3,457,079
2002	68,735	3.42	2,010,894	2011	139,396	3.87	3,603,059
2003	72,390	3.35	2,159,899	2012	143,642	4.06	3,537,127
2004	71,769	3.13	2,292,841	2013	155,872	4.23	3,684,947
2005	85,284	3.45	2,471,957	2014	141,808	3.75	3,777,807
2006	93,533	3.52	2,655,050	2015	139,115	3.56	3,908,157
2007	84,435	3.09	2,728,686	2016	153,773	3.76	4,089,836
2008	90,796	3.04	2,982,544	2017	151,484	3.57	4,247,448
2009	114,440	3.25	3,51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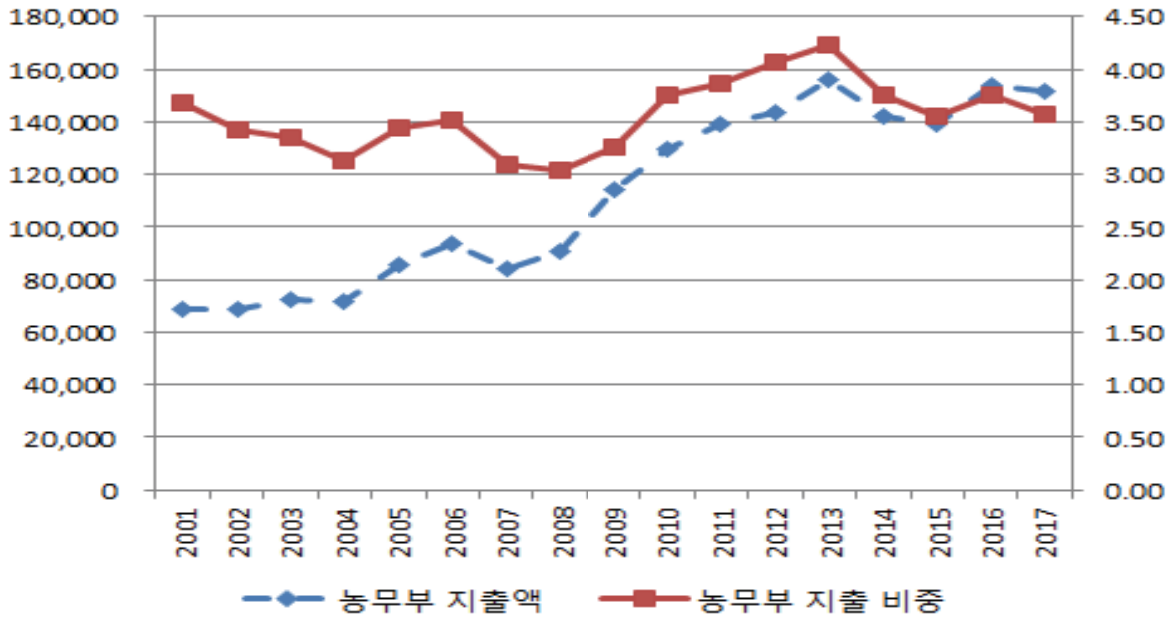
주: 1) 농무부 2016 예산은 추정치, 2017 예산은 예산안 기준.

2) 전체지출의 2015, 2016, 2017 지출액은 추계된 추정치임.

자료: USDA budget summary, 각 년도. 검색일: 2017. 2. 15.

2014 농업법은 농업에 성장의 잠재력이 많다는 점, 전체 고용의 1/11이 농업과 관련 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지속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85%가 시골(rural area)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촌개발과 환경사업을 통한 양질의 농촌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였다. 2016년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농촌개발(RD),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실(NRE)과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REE) 부문의 예산이 확충되었다.

단위: 백만 달러, %



<그림 4-8> USDA 예산지출과 전체지출에서의 비중

주: 1) 농무부 2016 예산은 추정치, 2017 예산은 예산안 기준.
 2) 전체지출의 2015, 2016, 2017 지출액은 추계된 추정치임.
 자료: USDA budget summary, 각 년도. 검색일: 2017. 2. 15.

나. 미국 농무부의 인력 변화

USDA의 인력은 거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농무부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표 4-30>의 고용인원의 감소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2017년의 고용인력은 농촌개발과 환경사업에 중점을 둔 2014 농업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늘어났다<표 4-31>.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고용인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자연 자원 및 환경보전실(NRE)의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4-32> USDA 인원과 인원 비중의 추이

단위: 명, %

회계연도	USDA 인원	인원 비중	전체 정부인원	회계연도	USDA 인원	인원 비중	전체 정부인원
1990	122,594	3.92	3,128,267	2007	99,629	3.70	2,694,929
1995	113,321	3.88	2,920,277	2008	98,720	3.62	2,730,040
2000	104,466	3.86	2,708,101	2009	97,803	3.49	2,803,909
2003	107,204	3.91	2,743,063	2010	106,867	3.76	2,841,143
2004	106,186	3.91	2,714,140	2011	103,881	3.68	2,820,460
2005	104,989	3.88	2,708,753	2012	99,503	3.60	2,760,569
2006	101,887	3.77	2,700,007	2013	95,223	3.49	2,730,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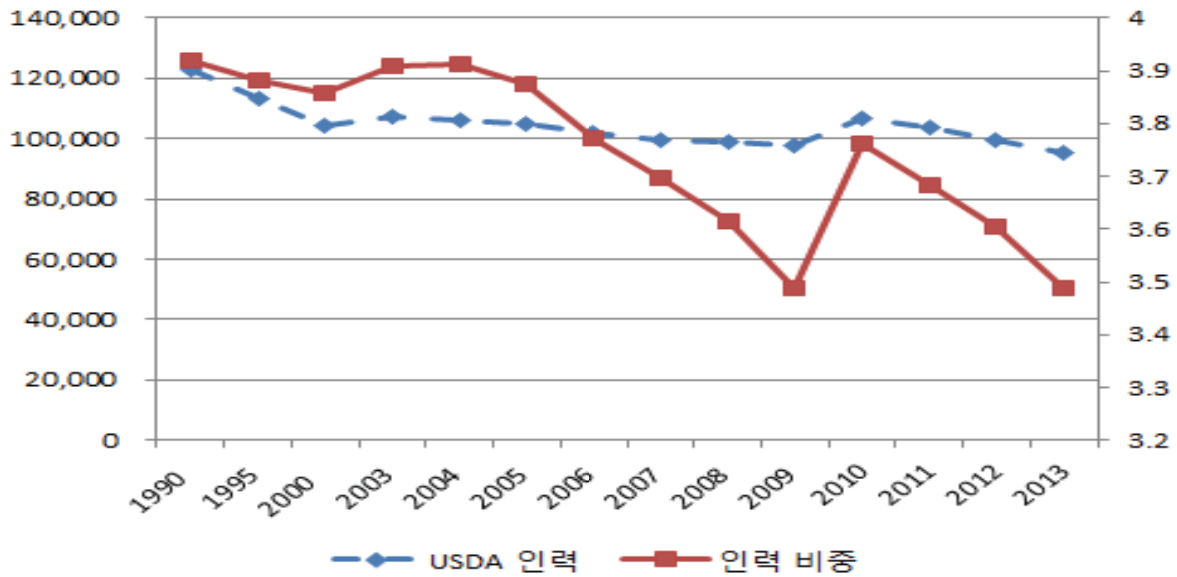
자료: OPM.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주 1) 인원이란 고용 노동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를 일한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인력(staff year)의 개념과 다르다.

주 2) 이 표에 언급된 수치는 9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4-9> USDA 인력과 인력 비중의 추이

단위: 명, %



자료: OPM.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다. 농무부 부문별 예산과 인력 변화

□ 2010년

USDA는 2009년까지 인력을 감축해 왔으나 2010년 눈에 띄는 인력의 증가가 있었다<그림 4-9>. 이 시기에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그 중에서도 산림청(Forest Service)의 산불관리 인력이 확충되었다.¹⁹⁾

□ 2013년²⁰⁾

USDA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비(operating budget)를 12% 줄이는 등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꾸준히 실행해 왔다. 2013년 운영비는 전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었다. 2013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인력투입을 줄이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 프로그램 예산을 우선배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2012년부터 USDA는 운영비와 인력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부서별로 개선안이 나오는 시기가 달라 인력감소와 운영비 절감은 각자 다르게 나타났다. 예산절감을 위해 260개의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를 통폐합하여 5,800만 달러를 절감하였다.²¹⁾ 이와 같은 내용은 <표 4-3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USDA 전체 인력사용이 2011년 104,924에서 2012년 99,668, 2013년 95,720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9) Forest Service. 2011. Fiscal Year 2011 President's Budget Budget Justification <https://www.fs.fed.us/sites/default/files/legacy_files/fy2011-forest-service-budget-justification.pdf>:2017. 6. 2.

20) USDA, 2013년 budget summary를 참고함.

21) USDA. "Cuts, Consolidations, and Savings".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uts-consolidations-savings.pdf>>: 2017. 5. 23.

하지만 FAS 지출이 전년도 대비 두배 가까이(2012년 169억 달러에서 2013년 295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 53억 달러 정도의 지출증가분이 위험관리청(RMA)에서 발생했는데, 새로 도입된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지출(1,559억 달러)은 2012년 총 지출(1,436억 달러)에 비해 늘어났다.

□ 2015년²²⁾

2015년의 USDA 지출은 2014년의 1,418억 달러에서 1,391억 달러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상품신용공사 기금(Commodity Credit Corporation Fund: CCC Fund)의 지출 감소 때문인데, 2014년에는 상품신용공사 기금(CCC Fund)으로 122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2015년에는 67억 달러를 지출하여 지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지출감소는 직접지불제의 폐지, 농가 수입과 연계되는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와 가격보전직불(Counter Cyclical Payment: CCP)의 2015년 지출액 감소가 원인이다.

□ 2016년²³⁾

2014년 농업법은 농촌의 활성화와 산림의 복원력, 식품안전(food safety)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권한을 USDA에 부여했는데, 2016년 예산은 이런 2014년 농업법의 기초가 반영되었다.

성장의 잠재력이 많다는 점, 전체 고용의 1/11이 농업과 관련 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지속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85%가 시골(rural area)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이와 같은 기초가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실(RD)에서 주관하는 각종 용자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영안정, 가축질병관리, 자연보전 프로그램, 영양지원(SNAP),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activities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에서는 지역개발(RD)분과와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실(NRE),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실(REE)의 할당예산이 늘어났고, 인력 사용도 2015년의 94,265에서 2016년 98,386으로 늘어났다.

22) USDA, 2005년 budget summary를 참고함.

23) USDA FY2016 Budget highlight를 참고함.

〈표 4-33〉 USDA 부문별 인력 추이

예산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¹⁾	2017 ²⁾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7,342 (6.8)	7,422 (6.5)	7,428 (6.7)	7,067 (6.4)	6,670 (6.3)	6,585 (6.3)	6,537 (6.3)	6,474 (6.2)	6,482 (6.1)	6,475 (6.2)	5,975 (6.0)	5,656 (5.9)	5,342 (5.7)	5,273 (5.6)	5,684 (5.8)	5,717 (5.8)
RURAL DEVELOPMENT	6,812 (6.3)	6,788 (6.0)	6,666 (6.0)	6,580 (6.0)	6,475 (6.1)	6,281 (6.0)	5,906 (5.7)	5,873 (5.7)	6,057 (5.7)	5,849 (5.6)	5,193 (5.2)	4,726 (4.9)	4,606 (4.9)	4,759 (5.0)	5,026 (5.1)	5,168 (5.3)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1,509 (1.4)	1,528 (1.3)	1,496 (1.3)	1,451 (1.3)	1,421 (1.3)	1,317 (1.3)	1,271 (1.2)	1,269 (1.2)	1,333 (1.3)	1,370 (1.3)	1,314 (1.3)	1,359 (1.4)	1,325 (1.4)	1,457 (1.5)	1,704 (1.7)	1,708 (1.7)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48,246 (44.5)	50,154 (44.1)	49,994 (44.8)	48,963 (44.6)	47,088 (44.1)	45,691 (43.8)	44,960 (43.5)	45,581 (44.0)	47,085 (44.6)	46,801 (44.6)	45,198 (45.3)	43,476 (45.4)	42,736 (45.7)	42,384 (45.0)	43,851 (44.6)	43,838 (44.8)
FOOD SAFETY	9,579 (8.8)	9,479 (8.3)	9,503 (8.5)	9,464 (8.6)	9,424 (8.8)	9,276 (8.9)	9,474 (9.2)	9,460 (9.1)	9,513 (9.0)	9,573 (9.1)	9,460 (9.5)	9,262 (9.7)	9,036 (9.7)	9,036 (9.6)	9,036 (9.2)	9,049 (9.3)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9,397 (8.7)	11,530 (10.1)	10,774 (9.7)	11,034 (10.0)	11,142 (10.4)	11,142 (10.7)	11,431 (11.0)	11,432 (11.0)	11,545 (10.9)	11,488 (10.9)	10,880 (10.9)	10,556 (11.0)	10,293 (11.0)	10,446 (11.1)	11,551 (11.7)	11,362 (11.6)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10,124 (9.3)	10,495 (9.2)	10,721 (9.6)	10,780 (9.8)	10,624 (10.0)	10,409 (10.0)	10,277 (9.9)	10,126 (9.8)	10,181 (9.6)	10,043 (9.6)	9,428 (9.5)	8,879 (9.3)	8,613 (9.2)	8,331 (8.8)	8,389 (8.5)	8,467 (8.7)
DEPARTMENTAL ACTIVITIES	3,514 (3.2)	3,569 (3.1)	3,499 (3.1)	4,019 (3.7)	4,137 (3.9)	4,117 (3.9)	4,013 (3.9)	3,985 (3.8)	4,067 (3.9)	4,322 (4.1)	4,212 (4.2)	4,113 (4.3)	4,151 (4.4)	4,185 (4.4)	4,814 (4.9)	5,014 (5.1)
Total, USDA Federal Staffing	97,048	101,390	100,484	99,642	97,048	94,818	93,869	94,201	96,263	95,921	91,660	88,027	86,102	85,871	90,055	90,323
TOTAL, USDA	108,349	113,758	111,501	109,901	106,717	104,305	103,474	103,619	105,617	104,924	99,668	95,720	93,594	94,265	98,386	97,804
농림인력의 비중		(3.91)	(3.91)	(3.88)	(3.77)	(3.70)	(3.62)	(3.49)	(3.76)	(3.68)	(3.60)	(3.49)				

주 1) 인력(Staff year)의 값을 사용함. 2016 인력은 추정치, 2017 예산은 예산안 기준.

자료: USDA. 각 연도 Budget Summary. OPM.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표 4-34> USDA 부문별 예산 추이

예산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¹⁾	2017 ²⁾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26,456 (38.57)	21,362 (31.08)	22,516 (31.1)	16,059 (22.38)	25,379 (29.76)	26,052 (27.85)	18,274 (21.64)	18,110 (19.95)	23,217 (20.29)	21,081 (16.28)	20,323 (14.58)	16,895 (11.76)	29,499 (18.93)	23,440 (16.53)	17,372 (12.49)	23,613 (15.36)	24,210 (15.98)
RURAL DEVELOPMENT	736 (1.07)	-456 (-0.66)	-1,432 (-1.98)	-590 (-0.82)	-56 (-0.07)	2,635 (2.82)	-346 (-0.41)	145 (0.16)	1,735 (1.52)	592 (0.46)	1,972 (1.41)	2,531 (1.76)	4,013 (2.57)	3,117 (2.2)	4,353 (3.13)	6,451 (4.2)	2,458 (1.62)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33,922 (49.45)	37,096 (53.97)	41,095 (56.77)	44,990 (62.69)	49,828 (58.43)	52,452 (56.08)	53,569 (63.44)	59,779 (65.84)	77,848 (68.03)	93,829 (72.48)	102,164 (73.29)	105,944 (73.76)	108,844 (69.83)	102,340 (72.17)	103,958 (74.73)	106,896 (69.52)	106,944 (70.6)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5,373 (7.83)	6,715 (9.77)	7,023 (9.7)	8,017 (11.17)	6,131 (7.19)	8,295 (8.87)	8,561 (10.14)	8,697 (9.58)	8,670 (7.58)	9,162 (7.08)	10,168 (7.29)	9,861 (6.86)	9,856 (6.32)	9,518 (6.71)	9,422 (6.77)	11,378 (7.4)	11,467 (7.57)
FOOD SAFETY	698 (1.02)	717 (1.04)	735 (1.02)	763 (1.06)	811 (0.95)	838 (0.9)	826 (0.98)	921 (1.01)	963 (0.84)	1,028 (0.79)	1,043 (0.75)	996 (0.69)	1,007 (0.65)	980 (0.69)	991 (0.71)	1,025 (0.67)	1,041 (0.69)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1,279 (1.86)	1,890 (2.75)	2,551 (3.52)	2,123 (2.96)	2,237 (2.62)	2,741 (2.93)	2,141 (2.54)	2,252 (2.48)	2,431 (2.12)	2,597 (2.01)	2,471 (1.77)	2,310 (1.61)	2,143 (1.37)	1,867 (1.32)	2,806 (2.02)	2,845 (1.85)	2,978 (1.97)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2,176 (3.17)	2,231 (3.25)	2,382 (3.29)	2,467 (3.44)	2,582 (3.03)	2,632 (2.81)	2,652 (3.14)	2,675 (2.95)	2,607 (2.28)	2,639 (2.04)	2,734 (1.96)	2,796 (1.95)	2,559 (1.64)	2,623 (1.85)	2,686 (1.93)	3,444 (2.24)	3,481 (2.3)
DEPARTMENTAL ACTIVITIES	458 (0.67)	454 (0.66)	576 (0.8)	577 (0.8)	587 (0.69)	568 (0.61)	519 (0.61)	545 (0.6)	546 (0.48)	617 (0.48)	601 (0.43)	418 (0.29)	575 (0.37)	454 (0.32)	361 (0.26)	680 (0.44)	477 (0.31)
Total, USDA Federal Staffing	71,098	70,009	75,446	74,406	87,499	96,213	86,196	93,124	118,017	131,545	141,476	141,751	158,496	144,339	141,949	156,332	153,056
TOTAL, USDA	68,599 (3.68)	68,735 (3.42)	72,390 (3.35)	71,769 (3.13)	85,284 (3.45)	93,533 (3.52)	84,435 (3.09)	90,796 (3.04)	114,440 (3.25)	129,460 (3.74)	139,396 (3.87)	143,642 (4.06)	155,872 (4.23)	141,808 (3.75)	139,115 (3.56)	153,773 (3.76)	151,484 (3.57)
농림인력의 비중																	

주 1) 예산 항목은 지출액(Outlay)의 추정치를 사용함. 2016 예산은 추정치, 2017 예산은 예산안 기준.

2) TOTAL 값은 subtotal에서 이자수의 등을 차감한 값임.

자료: USDA(2017), FY 2017 Budget Summary. p.112, OPM.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라. USDA의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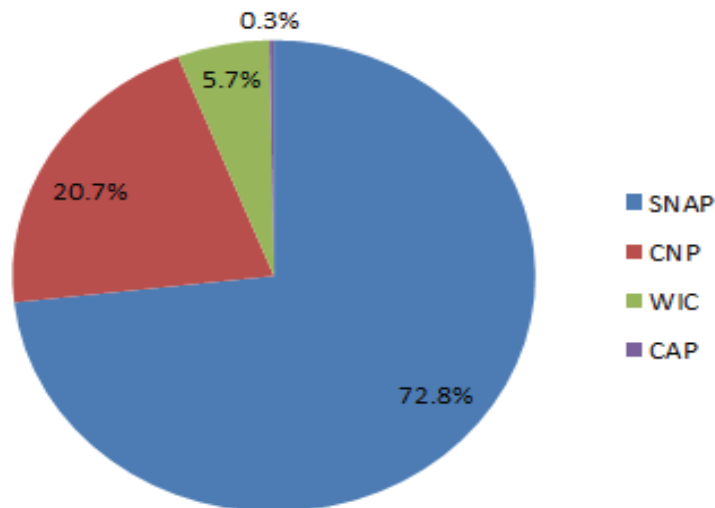
USDA의 지출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실(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이다. 식품·영양 부문은 복지성격의 예산으로, 1)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2)건강한 식단과 신체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4-33>은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이 USDA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줌. 2010년 이후 식품·영양 부문의 예산은 USDA 예산의 70%를 웃돌았고, 그만큼 큰 비중과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보조영양제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로, 전체 식품·영양 부문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 CNP)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급식, 방학 중 식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영양 증진 프로그램이다.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 지출의 5.7%를 차지하는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식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긴급식량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를 포함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Commodity Assistance Program: CAP)이 있다.



<그림 4-10> 2017년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부문 예산 구성비

- 주 1)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2) CNP: Child Nutrition Program
- 3) WIC: Women, Infants and Children
- 4) CAP: Commodity Assistance Program

자료: USDA budget summary 2017. 검색일: 2017. 2. 15.

<표 4-35> USDA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예산지출과 농무부 지출에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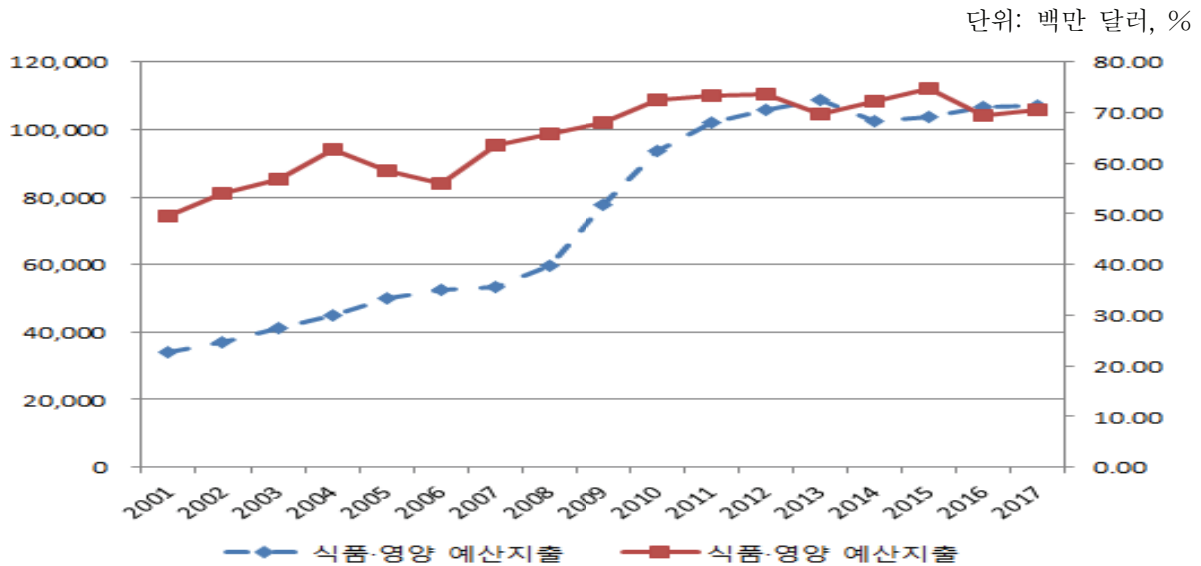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예산	비중	농무부지출	회계연도	예산	비중	농무부지출 ¹⁾
2001	33,922	49.45	68,599	2010	93,829	72.48	129,460
2002	37,096	53.97	68,735	2011	102,164	73.29	139,396
2003	41,095	56.77	72,390	2012	105,944	73.76	143,642
2004	44,990	62.69	71,769	2013	108,844	69.83	155,872
2005	49,828	58.43	85,284	2014	102,340	72.17	141,808
2006	52,452	56.08	93,533	2015	103,958	74.73	139,115
2007	53,569	63.44	84,435	2016	106,896	69.52	153,773
2008	59,779	65.84	90,796	2017	106,944	70.60	151,484
2009	77,848	68.03	114,440				

주 1) 농무부 2016 예산은 추정치, 2017 예산은 예산안 기준임.

2)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항목의 예산임.

자료: USDA budget summary, 각 년도. 검색일: 2017. 2. 15.



<그림 4-11> USDA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예산지출과 농무부 지출에서의 비중

주 1) 농무부 2016 예산은 추정치, 2017 예산은 예산안 기준.

2) 전체지출의 2015, 2016, 2017 지출액은 추계된 추정치임.

자료: USDA budget summary, 각 년도. 검색일: 2017. 2. 15.

<표 4-36> 보조영양지원제도(SNAP)의 대상자와 예산지출 추이

단위: 천 명, 달러, 백만 달러

회계연도	대상자 수	평균 수혜액 ¹⁾	총 수혜액 ²⁾	회계연도	대상자 수	평균 수혜액 ¹⁾	총 수혜액 ²⁾
2001	17,318	74.81	15,547.39	2009 ³⁾	33,490	125.31	50,359.92
2002	19,096	79.67	18,256.20	2010	40,302	133.79	64,702.16
2003	21,250	83.94	21,404.28	2011	44,709	133.85	71,810.92
2004	23,811	86.16	24,618.89	2012	46,609	133.41	74,619.34
2005	25,628	92.89	28,567.88	2013	47,636	133.07	76,066.32
2006	26,549	94.75	30,187.35	2014	46,664	125.01	69,998.84
2007	26,316	96.18	30,373.27	2015	45,767	126.81	69,645.14
2008	28,223	102.19	34,608.40	2016	44,219	125.50	66,596.77

주 1) 한달 평균 수령액임.

2) 일년 총 지출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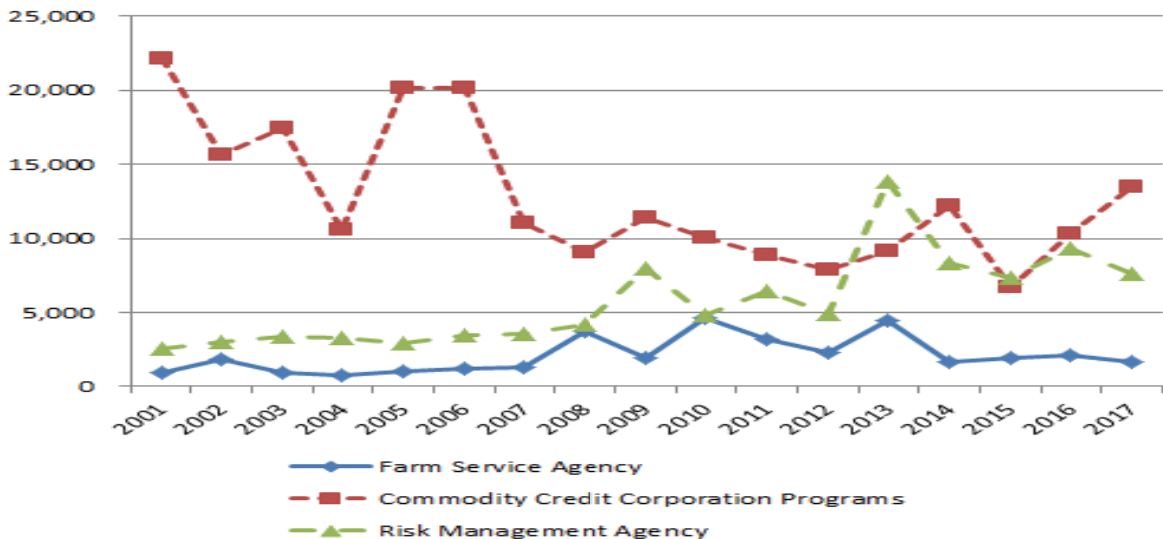
3) 2009회계연도부터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보조영양지원제도(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로 명칭이 바뀜.

자료: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검색일: 2017. 3. 21.

마.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부문의 변화²⁴⁾

<그림 4-12>는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 부문의 세부 항목의 변동을 보여준다.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 부문은 2008년 농업법으로 인해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지출규모가 줄어들고, 위험관리청(RMA)의 규모가 증가해 왔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림 4-12>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CCC의 예산은 지급수준의 변동폭이 줄고 지출수준도 낮아진다. 이는 CCC program에서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Countercyclical Payments와 Loan Deficiency Payments의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매우 작아졌기 때문이다.

단위: 백만 달러



<그림 4-12>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 부문 예산 변동 추이

24) USDA, Budget Summary 각 년도.

반면,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의 예산은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의 도입이 결정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이다. 2013년 위험관리청(RMA)의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운영비용과 농민들의 수입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적게 건넸기 때문이며, 실제 프로그램 수행 내용(Program Level)에는 큰 변화가 없다.

USDA의 농업보장기조는 고정직불(Direct Payment), 경기변동대응직불(Countercyclical Payment), 용자차액지불(Loan Deficiency Payment) 중심의 품목별 정책과 직접지불제도에서 수입보험(ACRE) 제도로 변화하였다.

바.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

조직을 살펴 보면,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업무는 자연자원보전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과 산림청(Forest Service) 두 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인력 구성 측면에서 보면,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실의 산하기관 인력 추이는 <그림 4-13>와 같다. 산림청의 인력은 3만 이상²⁵⁾으로 자연자원보전청의 인력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산림청과 자원보전청의 인력투입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다만 자원보전청은 자연자원보전을 강조하는 2014년 농업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2016년부터 약간 늘어났다. 2010년 USDA가 운영비 감축을 위해 시도한 구조조정으로 2014년까지 인력 고용이 줄어들었다.

한편 예산의 경우, 산림청의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림청은 별도의 자료²⁶⁾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위험지역의 증가로 예산확충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고유업무에서 산불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6%에서 2015년 52%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산불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와 자원 관리 등의 기타업무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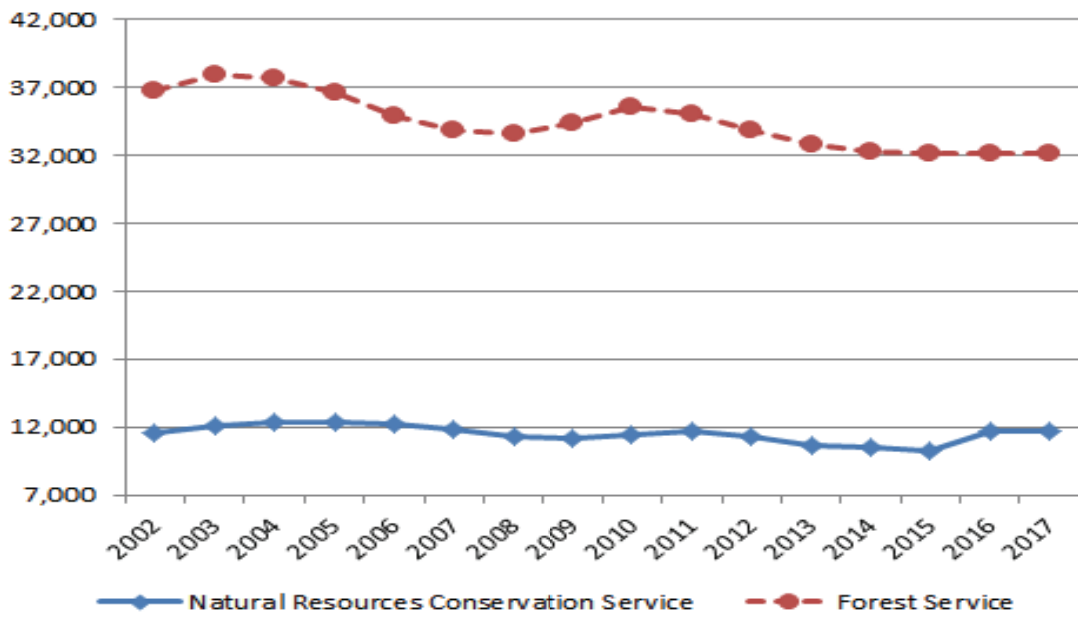
자연자원보전청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관리면적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그림 4-15>, 사업 또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5) 인력의 단위는 staff year인데, 이는 시간제 근로자를 1로 세는 직원수 통계와 달리, 투입된 인력의 양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통계임.

26) The Rising Cost of Wildfire Operations: Effects on the Forest Service's Non-Fire Work. 2015. USDA Forest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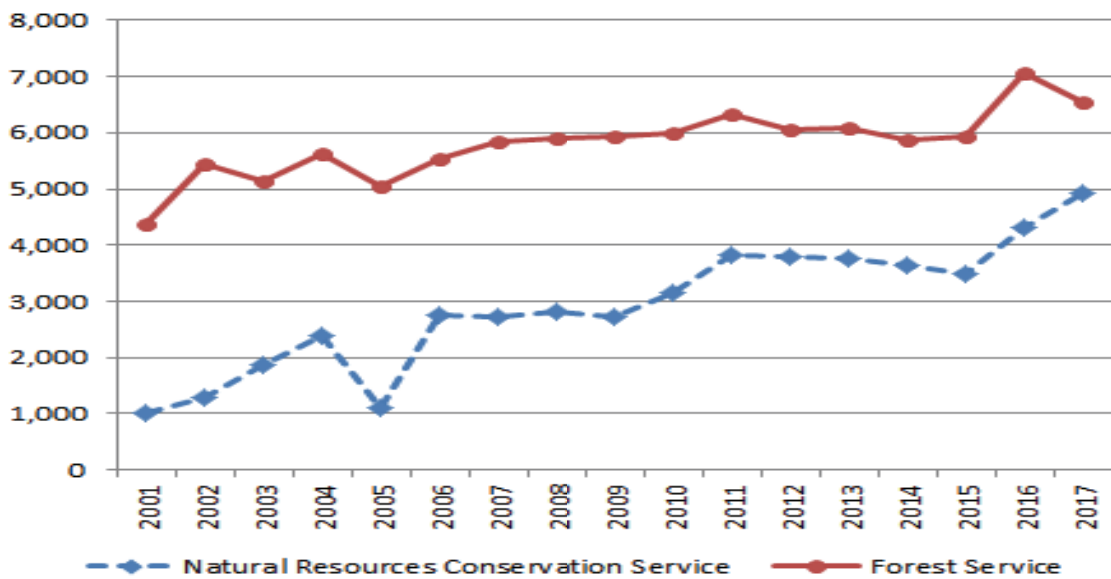
<<https://www.fs.fed.us/sites/default/files/2015-Rising-Cost-Wildfire-Operations.pdf>>: 2017.5.23.

단위: staff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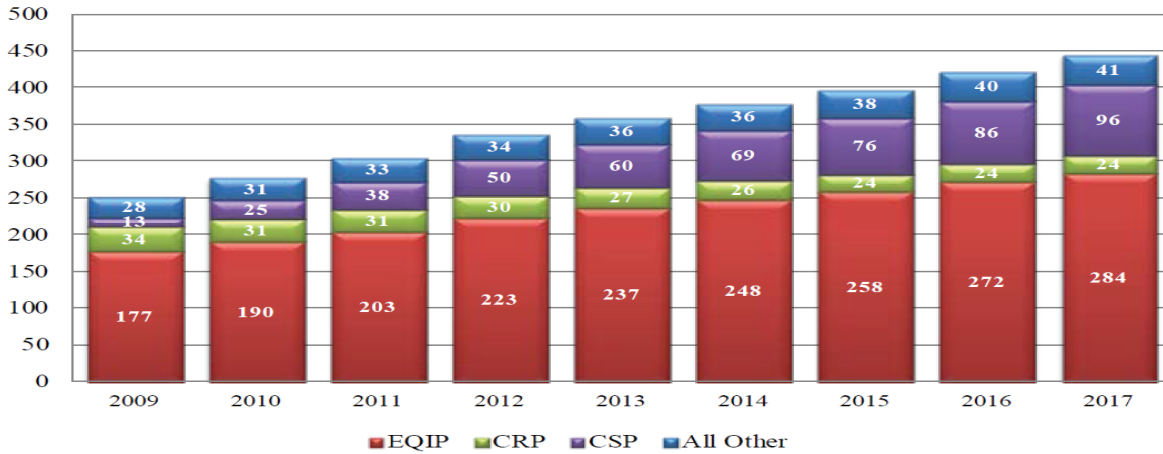
<그림 4-13>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인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그림 4-14>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에이커



<그림 4-15> 보전프로그램 등록 면적 추이

출처: USDA budget summary FY2017. p. 62.

3. 시사점

1) 농업법에서 나타난 시사점

(1) 2002년 농업법

가. 농업보호 논리의 강화

2002년 농업법에 대해서 미국 농정의 후퇴성을 지적하는 분석이 많았다. 국내의 시황이 미국 농업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 소득보장과 환경정책 등에 미국 농정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이 많다. 소득안전망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지하면서(융자단가, 마케팅론, 융자부족불), 고정부분(고정직접지불)과 변동부분(가격보전 직접지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접지불을 추가하는 구조로서 가격변동에 대한 신축성을 갖춘 장점이 있다.

나. 허용대상 보조정책의 확대가능성

신규로 도입하는 가격보전 직접지불은 생산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의 가격에 직접 연계된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축대상 국내보조에 해당된다. 미국은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감축 등을 종전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을 했었다. 농업보호를 강조해 온 농산물 수입국에게는 협상여건이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입지강화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미국의 예산 증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그룹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2002년 농업법의 핵심인 소득안전망과 환경농업정책은 향후 우리나라도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2008년 농업법

가. 농가소득지지 지속

농가소득지지는 80여년을 이어온 미국농정의 근간이며 정부의 지원제도와 시장가격과의 연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시도는 1996년 농업법의 운명에서 보듯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농정도 농가경제를 가격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 제도의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농정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보호하려는 목표와 수급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소득지지와 수급균형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제가 현재 거의 유일한 선택 가능한 대안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가보조금 중심의 농정은 농가보조금의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역기능 등 여러 가지 모순을 낳아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 국민 영양개선 강화

미국정부는 급식과 영양개선 활동에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등 농산물 구매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영양과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산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다. 환경보전 강화 지속

미국은 환경보전이 농정의 중요 목표인데 1990년대 이후 환경보전정책은 더욱 다양화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농림성 직원의 40%가 이 분야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을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2014년 농업법

가. 농가소득 안전망 장치 강화 지속

2014년 농업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농정개혁은 하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는 지속적으로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가에 대한 직접 소득 및 가격 지원보다는 수입 및 경영을 안정화 시키는 위험 관리로서의 정책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품목별 지원정책을 개혁하는 대신에 생산위험과 가격위험 등의 문제점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에 기반을 둔 제도(revenue based program)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예컨대 2014년 농업법은 높은 농산물 가격과 상대적으로 호전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고정직불제는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유통융자지원제도(ML)는 존치시켰고, 기존의 가격보전직불제도(CCP)와 수입보전직불제도(ACRE)를 폐지하는 대신 유사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과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정책을 새로이 도입

하였다.

또한 2014년 농업법은 품목별 지원정책(Title I)중에서 고정직불제와 CCP의 폐지 등으로 인한 농업계의 불만을 줄이면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보완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어졌다.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4년 농업법에서 주요 농업정책 분야 중 유일하게 가장 큰 폭의 재정지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작물보험 관련 부문으로 57억 달러 정도 증액되었다.

2014년 농업법의 또 다른 특징은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다. 경손보상정책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보다 작물보험의 보상범위가 일반적으로 70~85% 수준으로 만일 농가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15~30%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자기부담금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농업법은 경손보상정책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2014년 농업법은 농업부문 재정지출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미국 농업정책 결정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자국 내 농업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국민영양 지원, 환경보전 지속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촉진 목적의 국민영양지원, 그리고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목적의 보전지원이라는 큰 틀의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개발 정책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의 정책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2) 농무부를 통해서 본 시사점

미국의 농무부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USDA의 부서들은 할당예산과 인력이 비례하지 않는데, 지급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는 예산이 많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되어 있고, 서비스 업무를 하는 부서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있지만 사용예산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16 회계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분야는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분야(69.52%), 그 다음으로는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15.36%) 분야이다.

지급업무 위주인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분야의 인력 비중은 1.7%이고,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분야의 인력 비중은 5.8%로 나타나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자원은 많이 필요한 반면 인력 수요는 적은 편이다. 반면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인력의 비중이 높다. 자연자원보전의 경우, 예산은 7.4%, 인력은 44.6%, 검역과 검사 분야는 예산의 1.85%, 인력의 11.7%, 식품안전관리는 예산의 0.67%, 인력의 9.2%, 연구 분야는 예산의 2.24%, 인력의 8.5%를 차지하여 할당 예산 비중은 작으나 인력비중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둘째, USDA는 추세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농업법이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부분의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서비스 업무의 비중이 커 앞으로 USDA의 고용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USDA의 사업 중에서는 사실상 복지기능을 하는 것이 많다. 사실상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 농업법과 정책목표에 농업의 일자리 창출이 언급되고, 빈곤지역의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점을 들어 빈곤개선을 위한 농촌개발도 언급하고 있다. USDA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어 식품구입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하고 식품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체이다.

USDA는 또한 지역개발을 하며 주택자금과 농촌에 통신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빈곤지역의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주체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DA는 농업과 농산물의 유통 관리 뿐 아니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의 식품소비까지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제4절 독일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조직의 기능변화

1. 독일 농업정책의 기본틀과 정책 중점의 변화과정

독일의 농업정책은 그 기본틀을 1955년의 「농업법(Landwirtschaftsgesetz)」에 두고 있는데, 이 「농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정의 목표는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농업법」 제1조 상의 농정목표는 ① 농업의 국민경제에 참여, ②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식료 조달, ③ 농업의 자연적, 경제적 불리점 보정, ④ 생산성 향상, ⑤ 농업종사자의 사회적 상황을 비교가능한 직업군 종사자 수준에 매칭 하는 것에 둔다.

독일이 1957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에 독일의 농업정책은 EU의 농업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1962년 EU의 공동농업정책이 수립된 이후 독일의 농업정책은 기본방향에 있어서 EU의 정책과 같이 하고, 실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만 회원국으로서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농업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농산물 가격 지지와 수출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 지지에 기반한 농업보호정책이 농업생산의 과잉 문제를 유발하자 198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EU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3) 개시로 보호무역주의를 대신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의 농업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EU 차원에서 기존의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을 대신하는 직접지불제를 채택함에 따라 나타난 정책적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로 인해 나타난 자유무역체제의 등장이었다. EU의 단일직불제는 1992년에 도입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체결은 1993년에 이루어졌다. 크게 봐서 1990년대 초반에 국제적 차원의 농산물 자유무역체제가 구축되고, 이에 부응하는 형태로 EU 차원의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는데, 이 모두가 독일의 농업정책 형태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유럽의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독일농정의 전환(Agrarwende)이 이루어졌다. 이는 농정의 목표와 관련된 사항으로 1950년대부터 변함없이 추진되어온 경쟁력 강화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대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의 새 목표로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설정되고, 2002년에 독일 연방식품농업부의 명칭 변경 및 조직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 녹색당 출신의 연방식품농업부 장관 하에 이루어진 농정 전환(Agrarwende)의 성과와 후속 농정의 방향에 대해 독일의 농업계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수립된 의견은 독일 농정의 방향을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균형 유지에 두는 것으로 모아졌다.

독일의 농정 중 농촌정책은 EU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축인 ‘농촌발전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공동농업정책이 농촌정책에 큰 중점을 둠에 따라 독일도 농촌정책의 콘셉트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의 농촌정책은 ‘유럽농촌발전기금’에 재정적 기반을 두고 있다. EU 정책과 별도로 독일 자체 프로그램인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 공동임무(GAK)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2010년대 독일의 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체화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의 초기 단계 농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성 조사에 역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 또한 바이오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원료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2.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

1) 조직의 역사 및 변천과정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는 1949년 서독정부의 건국과 함께 연방식품농림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BML)로 창설되었다. 1989년 동서독의 통일로 독일 전체의 연방농업부서로서 BML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 틀 내에서 국내 농업·농촌정책을 담당했다.

2000년대 초반 광우병 파동으로 BML의 업무에 소비자보호가 추가되어 2002년부터 BML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VEL)로 바뀌고, 2006년에는 주어진 업무의 우선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부처명이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로 개명되었다. 2002년도의 주된 개편은 소비자보호와 식품안전이 새로운 업무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표 4-35>.

2002년부터 2013년 초까지 이어진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의 조직체계 내에서 업무 영역의 변화는 2012년에 이루어진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구성한 것이다.<표 4-36>. 여기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과 신재생원료작물’을 담당하는 국을 별도의 국으로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2013년 후반 연방정부의 직제 개편으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BMELV는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다시 개명되었다. 하지만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는 연방식품농업부(BMEL)이 계속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은 없어지게 되었고, 농식품의 안전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과 식품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4-37>.

2017년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농촌정책 업무와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제7실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37>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조직 변화 I (2000~2005)

2000년(BML)		2002년(BMVEL)	
실	국	실	국
1실: 중앙관리	기획·행정국	1실: 중앙관리	행정1국
	세계·행정국		행정2국
2실: 연구개발 및 식품소비자정책	연구 및 바이오·신재생 원료산업국	2실: 소비자보호, 식생활 및 연구개발	소비자보호·소통국
	식품소비자정책국		식생활국

2000년(BML)		2002년(BMVEL)	
실	국	실	국
3실: 농업생산 및 수의위생	작물생산 및 친환경농업국	3실: 식품안전 및 수의위생	식품안전국
	수의축산국		동물보건국
4실: 시장정책	시장정책 및 농산물시장국	4실: 농산물시장 및 기획	시장정책 일반 및 농작물시장국
	시장구조 및 축산물시장국		시장구조 및 축산물시장국
5실: 농촌 및 산림정책	농촌사회정책국	5실: 농촌, 농작물생산 및 산림목재업	농촌사회정책 및 농업생산·친환경농업국
	구조정책국		구조정책국
	산림목재국		산림 및 신재생원료국
6실: 국제농업 및 수산업	EU 및 국제농업국	6실: 국제농업 및 수산업	EU 및 국제농업국
	수산업 및 비경제교류국		수산업 및 비경제교류국

자료: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Ministerium/Organisationsplan.html>

<표 4-38>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조직 변화 II (2006~2012)

2006년(BMELV)		2012년(BMELV)	
실	국	실	국
1실: 중앙관리	행정1국	1실: 중앙관리	행정국
	행정2국		기획·사회정책·세계국
L실: 통솔 및 기본방향 수립	동독지역 특보		
	기획 및 신재생원료 담당국		
2실: 소비자보호, 식생활, 바이오기술	소비자보호국	2실: 소비자정책	법·경영 관련 소비자정책국
	식생활 및 바이오기술국		사회·보건 관련 소비자정책 및 연구개발국
3실: 식품안전 및 수의위생	식품안전국	3실: 식생활, 식품안전 및 동물보건	식생활정책국
	동물보건 및 식품위생국		식품안전국
4실: 농산물시장, 기획기반, 사회질서	농산물시장 일반 및 농작물시장국	4실: 농촌발전, 농산물시장	동물보호국
	시장구조 및 축산물시장국		농촌발전국
5실: 농촌, 농작물생산, 산림목재업	농촌사회 및 작물생산국	5실: 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농림업	농산물시장국
	구조정책 및 농촌개발전국		농업국
	산림목재경제국		지속가능성 및 신재생원료 담당국
6실: 국제농업, 수산업	EU 및 국제농업국	제6실: EU 및 국제협력, 수산업	임업국
	수산업 및 대외경제교류국		EU 및 수산업국
			국제협력국

자료: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Ministerium/Organisationsplan.html>

<표 4-39>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조직 변화 II (2013~2017)

2014년(BMEL)		2017년(BMEL)	
실	국	실	국
1실: 중앙관리	행정국	1실: 중앙관리, 농업정책 조정	행정국
	기획·사회정책·세계국		정책기획·세계국
2실: 식생활정책, 생산물 안전, 혁신	식생활정책국	2실: 식생활정책, 생산물 안전, 혁신	식생활정책국
	생산물안전 및 혁신국		생산물안전 및 혁신국
3실: 식품안전 및 동물보건	식품안전국	3실: 식생활 안전, 동물보건	식생활안전국
	동물보건 및 보호국		동물보건 및 보호국
4실: 농촌 및 농산물시장	농촌국	4실: 농산물시장, 수출 및 판매 지원	농산물시장국
	식생활경제 및 판매지원국		식생활경제 및 판매지원국
	농산물시장국		
5실: 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농림업	농업국	5실: 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농림업	농업국
	지속가능성 및 신재생원료 담당국		지속가능성 및 신재생원료 담당국
	임업국		임업국
6실: EU 및 국제협력, 수산업	EU 및 수산업국	제6실: EU 및 국제협력, 수산업	EU 공동농업정책 및 수산업국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
		제7실: 농촌, 전략적 콘셉트	농촌국 전략수립국

자료: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Ministerium/Organisationsplan.html>

2) 조직의 구성

연방식품농업부(BMEL)의 조직은 본부 이외에 4개의 외청과 4개의 연방연구소로 구성되었다<표 4-38>. 연방식품농업부의 본부는 7개 실 15개 국 79개 과로 구성되며, 832명의 인력이 정규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7개 실은 ① 농업정책 총괄조정, ② 식량정책, ③ 식품안전 및 동물보호, ④ 농산물시장, ⑤ 지속가능한 농림업, ⑥ EU 정책 및 국제협력, ⑦ 농촌정책으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다.

1995년에 창설된 연방농업식품청(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 BLE)은 EU의 규정 준수 차원에서 농수축산물 및 농자재의 검사와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한다.²⁷⁾ 또한 BLE는 통계적 목적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차원에서 농업과 식품 관련 데이터와 가격 정보를 조사한다. 이밖에 BLE는 BMEL의 행정집행기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BLE는 본(Bonn-Mehlem)에 본청을 두고, 전국에 3개의 지역청과 4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인원과 예산 면에서 BMEL을 넘어서고 있다.

27) 우리나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중 검사 및 품질인증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함.

<표 4-40> 2015년도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및 산하 기구 구성

단위: 명, 백만 유로

구분	인원 (2015. 6. 1)	2015년도 결산		
		세입	세출	
본부(BMEL)	832	3.2	85.6	
연방농업식품청(BLE)	880	7.2	97.1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347	10.8	38.3	
연방위험평가원(BfR)	247	5.6	81.5	
연방종자원(BSA)	289	11.4	22.3	
연방 연구소	Julius Kühn 연구소	761	3.2	85.6
	Friedrich Löffler 연구소	624	9.0	102.1
	Max Rubner 연구소	449	1.8	49.8
	Johann Heinrich von Thünen 연구소	590	9.3	84.7
계	5,019	61.5	647.0	

자료: BMEL(2016), Einzelplan 10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은 2000년의 광우병 파동 이후 기존의 연방보건청 관련 후속조직들을 재구성하여 2002년 설립되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을 포함한 생필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더하여 사료 첨가물과 농약, 가축약품의 허가를 관장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와 가공에 대한 허가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포함해 6개의 부서로 구성된 BVL은 약 35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연방위험평가원(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BfR)은 BVL 등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식품과 화학적 생활용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BfR의 업무는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과 화학적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9개의 부서로 구성된 BfR에는 약 25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연방종자원(Bundessortenamt, BSA)은 육성된 종자에 대하여 신품종 여부를 심사하여 품종 보호권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BSA 조직은 3개 국 19개 과 7개 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약 290명이다.

BMEL 산하 연방연구소는 4개 있는데, 이들 연구소들은 2008년 기존 연구소들의 재구성 과정에서 설립된 연구소이다. 이 중 율리우스 쿤(Julius Kühn) 연구소(JKI)는 연방재배작물연구소로서 건강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농작물 개발을 목표로 한다. JKI는 3개의 산하 연구소(작물재배기술연구소, 작물육종연구소, 식물보호제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약 760명이다.

프리드리히 뢰플러(Friedrich Löffler) 연구소(FLI)는 연방동물보건연구소로서 가축의 보건과 복지를 지향하고 동물과 사람 간에 전염이 가능한 전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한다. FLI는 5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11개의 세부 연구소로 구성되고, 종사인원은 약 620명이다.

막스 루브너(Max Rubner) 연구소(MRI)는 연방식품연구소로서 식품섭취 영역에서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연구한다. MRI의 조직적 구성은 함부르크에 있는 수산물안전연구소까지 포함해서 5개 지역 9개 세부 연구소로 구성되고, 종사자 수는 약 200명의 연구자를 포함해 총 450명에 달한다.

튀넨(Johann Heinrich von Thünen) 연구소(TI)는 기상변화 연구 등 응용농업 연구와 임업 연구, 수산업 연구, 농업경제 및 농촌발전 연구 등 14개의 세부 연구소로 구성된다. TI의 본부 및 다수의 세부연구소는 브라운슈바이크에 있지만, 임업과 수산업 관련 연구소는 함부르크와 로스톡 등에 산재해 있다. 독일의 농업·농촌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TI는 약 590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3) 예산 구성

독일에서 농식품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은 크게 EU의 재원과 독일의 국가예산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국가예산은 다시 연방정부의 예산과 주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세분화 된다.

독일의 농식품정책에 투입되는 EU 예산은 2015년도에 63억 유로로 독일연방정부의 농식품 예산 52.5억 유로보다 많다. EU의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2015년 독일의 몫으로 지출되는 예산(63억 유로) 중 51억 유로는 농산물의 시장질서 및 (단일)직불금으로 지급되고(첫 번째 기둥), 나머지 12억 유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과 해안보호 및 홍수 방지 등 지역 및 농촌개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두 번째 기둥).

<표 4-41>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사업)예산 구성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예산
세입	88.8	67.8
세출	5,245.5 (100.0)	5,595.2 (100.0)
- 농업사회정책	3,693.5 (70.4)	3,814.0 (68.2)
- 농업구조개선 공동임무(GAK)	558.4 (10.6)	650.0 (11.6)
- 지속가능성, 연구 및 혁신(연방연구소 포함)	474.8 (9.1)	566.3 (10.1)
- BMEL 경상비	90.1 (1.7)	98.0 (1.8)
- 기타	428.7 (8.2)	466.9 (8.3)

자료: BMEL(2016), Einzelplan 10

연방정부에 속하는 BMEL의 2015년도 세출결산은 52억4,550만 유로이고, 2016년 세출예산은 55억9,520만 유로이다<표 4-39>. 2015년도 BMEL 세출결산은 전체 연방정부 세출의 1.7%를 차지한다.

독일연방정부의 농식품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사회정책 사업인데, 2015년도에 이 부분이 70.4%(약 37억 유로)를 차지한다. 농업사회정책사업은 농업인노령보험, 농업의료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농업인노령보험에 사업비의 약 60%(2015년 22억 유로)가 지원되고, 농업의료보험에 약 37%(2015년 14억 유로)가 지원된다.

그 다음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구조개선 공동임무(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 GAK)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중점을 두는 사업은 2010년대부터 농정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등장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2015년이 이 부분의 예산의 전체 예산의 약 9%를 차지한다.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 공동임무(GAK)>

- GAK은 독일헌법 제91a조 1항 3호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1988년에 제정된 GAK법으로 구체화
- GAK법에 나타난 공동임무의 목표
 - 농림업의 생산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농지소유 및 농촌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
 - 수자원경영 방안 및 재배기술 개선방안 마련
 - 농림수산업의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북해와 동해(Ostsee) 해안 및 만조지역의 하천에 대한 안전 제고
- 이러한 공동임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과업의 목표설정과 결부된 개별 예산연도의 사업방안에 대한 연방과 주의 공동계획서 작성
 - 계획서 작성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를 위한 기획위원회(PLANAK)’ 발족(연방농식품부장관이 위원장)
 - 연방정부의 의결권 표수는 모든 주정부의 표수(16)와 동일
 - 연방은 각 주에게 계획서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해안보호사업에는 비용의 70% 부담
- GAK의 사업내용은 크게 개별경영체 지원사업,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정비 지원사업, 해안보호 같은 기타사업으로 구분
 - 개별경영체 지원사업에는 개별경영체 투자지원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이 있는데, 이 두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전체 GAK 예산의 절반 차지

4) 연방식품농업부(BMEL) 본부 조직

현재 BMEL 본부는 7실 15국 79과로 구성되며, 약 83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7실은 ① 농업정책 총괄조정실, ② 식량정책실, ③ 식품안전 및 동물보호정책실, ④ 농산물시장정책실, ⑤ 지속가능 농림업정책실, ⑥ EU 정책 및 국제협력실, ⑦ 농촌 및 전략적 콘셉트실로 구성되어 있다. 15국 및 79과의 내역은 <표 4-40>과 같다.

<표 4-42>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본부 조직

실	국	과
농업정책총괄조정실 (제1실)	행정현대화국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제1실법무과, 행정과, 내사과
	정책기획·조정 및 세계국	기획과, 정보기술과, 경제분석과, 사회질서과, 조세 및 심사과

실	국	과
식생활정책 및 생산물안전실 (제2실)	식생활정책국	제2실법무과, 식생활정보과, 영양연구과, 특작과, 식품정보표시과, 지속적 식생활과
	생산물안전 및 혁신국	제2실전략과, 신기술과, 생산안전과, 연구혁신과
식품안전 및 동물보호정책실 (제3실)	식품안전국	제3실전략과, 식품위기관리과, 식품위해물처리과, 식품위생과, 식품법무과
	동물보건국	동물보호과, 동물보건과, 동물검역과, 수의법무과, 동물의약품안전과
	-	국제수의협력과, 수출수의검역과
농산물시장정책실 (제4실)	농산물시장국	축산물과, 우유과, 경종작물과, 와인맥주음료과
	식생활경제 및 수출판매지원국	농지시장과, 제4실전략과, 공동시장조직과, 판매지원·품질정책과, 등급측정과
지속가능 농림업정책실 (제5실)	농업국	경종농업과, 작물보호과, 수출작물안전과, 축산과, 원예과,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 및 신재생원료국	지속가능성·기후보전과,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보존과, 바이오에너지과, 바이오매스과
	임업국	제5실전략과, 제5실법무과, 국유림정책과, 국제산림정책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국제협력 및 수산업실(제6실)	EU 공동농업정책 및 수산업국	EU업무과, 제6실전략·법무과, 수산시장정책과, 해양어업과, EU농업재정과, 공동시장정책과, 직접지불과
	국제협력국	국제교역과, 세계식량과, 제3세계과, 국제협력사업과, 중동유럽·동아시아과
농촌 및 전략적 컨셉트실(제7실)	농촌국	농촌정책조정과, 농촌개발과, EU농촌발전프로그램과, 개별농가지원과, GAK과
	전략적 컨셉트국	제7실전략·법무과, 인구·기술변동측정과, 소통·네트워크과, 언론·정책자료과

자료: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Ministerium/Organisationsplan.html> (2017. 3. 22)

3. 시사점

1) 업무 영역

현행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2000년대 초반 광우병 파동으로 기존의 농림수산 업무에다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가되어 2013년 초반까지 이 체계가 지속된다. 2013년 이후에도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는 BMEL이 계속 담당한다.

2002~2013년 기간 중에도 지속가능한 농림업이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도입된다. 즉, 지속가능성이 농정의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담당하는 실·국(제5실)이 설치되게 된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는 농정 추진에서 전략적 컨셉트를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 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BMEL은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농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결합하여 새로운 집행단위(제7실)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분야의 업무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key word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림업 생산에서 기존의 기본원리인 경쟁력 강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본원리로 지속가능성이

대두되고 점차 농림업 생산을 포함하는 농정 전반의 가장 주된 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예산 영역

독일에서 농림식품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은 크게 봐서 약 절반 정도는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이 독일 연방 및 주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개별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원은 주로 EU의 CAP에서 이루어지는데, EU 예산의 약 2/3가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직불금이다.²⁸⁾

독일 연방정부의 농림식품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정책이며, 그 다음이 주정부와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는 농업구조개선 공동임무(GAK)가 된다. 연방식품농업부(BMEL)의 예산 구성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투자와 신재생원료작물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28) 부분적으로 GAK에 의한 지원(조건불리지역 직불 등)이 있다.

제5절 프랑스 농업농촌정책과 조직의 기능 변화²⁹⁾

1. 프랑스 농업·농촌정책의 변화

1) 1970년대 이후 프랑스 농정의 변화

1960년대 프랑스 농업은 1961/62년의 농업기본법 제정과 EU(당시에는 EEC)의 공동농업정책 시행으로 시장확대와 가격지지라는 양호한 환경 속에서 도농간 소득균형을 목표로 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과 생산성향상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불황국면이 장기화되고 1980년을 전후에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Renaissance rurale) 농업의 고용유지기능이 강조되면서, 농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영농후계자정책(DJA)은 이와 같은 농업정책의 목표와 수단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이후 프랑스 농업정책은 프랑스 사회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들을 현대화시켜 왔다. 이와 함께 프랑스 주요 농업정책들이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범주 속에서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프랑스는 EU 농정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현실과 유럽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을 펴왔다.

1980년과 1999년 농업기본법 개정은 이와 같은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에 따라 1980년대 우유쿼터제의 도입, 1992년 이후의 농업지원방식의 변화(시장지지에서 직접소득보상으로)와 환경농업규정(Mesures agro-environnementaux)의 강화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는 1960-70년대 공동농업정책이 ‘생산성주의(productivisme)’에 기초한 결과 농산물과잉생산, 농업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지역에 따라 농업소득 규모가 최고 20배 차이가 나는 현실), 일부 농촌지역에서의 농촌공동화의 진행과 사회적 관계망의 파괴, 과도한 집약적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한 식품안전성문제를 초래하였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EU의 어젠다 2000을 앞두고 마련된 1999년 새 농업기본법은 농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농업의 세 가지 사회적 역할(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농업정책이라는 공공개입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정책수행 메커니즘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본격화 했다. 새 기본법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경영국토계약 (CTE/Contrat territorial d’exploitation, 이후 CAD로 개칭되었으며,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됨)’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공공지원을 계약방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상체계를 새롭게 설계한 것이다.

1999년 농업기본법의 농정목표는 농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의 조화로운 발전을 포괄적 목표로 두고 그 아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부목표는 첫째, 영농정착의 활성화, 농업경영체의 영속성 유지, 농업부문의 고용활성화, 둘째, 농업생산조건과 농업소득의 개선,

29) 이 내용은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에게 발주한 원고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균등한 사회적 기여에 기초한 여타 사회직업군과의 사회보장 형평성의 유지, 셋째, 국내 및 유럽, 국제시장에서의 농산물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식량 및 산업용 농업생산의 활성화, 소비자와 식품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생안전조건의 충족, 넷째, 농업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간 균등한 농업부가가치의 분배, 다섯째, 토지의 생산잠재력을 고려한 농업생산시스템의 적용과 토지이용, 여섯째, 자연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 농촌경관의 유지, 일곱째, 농촌공간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의 활성화, 여덟째,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의 농산물 판매활동 강화이다.

2002년 등장한 사르코지 우파정부는 2003년 정부개혁전략(SMR/Stratégie ministérielle de réforme)의 연장선 상에서 농정 근대화를 위한 전략과제(FRM/Feuille de route de modernisation)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농림수산부’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프랑스 농정의 전통적 임무는 농업개발과 농업(연구)교육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식품안전성, 환경, 농촌지역개발, 동물후생,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정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로 인해 농정개혁의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어 농정이 공공정책의 전체 전략에 부합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2) 2006년 농업기본법의 주요 전략과제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는 FRM에서 프랑스 농업의 미래비전을 ‘경쟁력있고, 생존가능한(viable) 농업발전’으로 내세우고, 2006년 1월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네 가지의 전략과제들을 명시하고 있다. 네 가지의 전략과제는 첫째,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위상 유지, 둘째, 식품안전성, 동물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 셋째, 연구·교육·개발활동의 시너지 극대화, 넷째, 농촌 및 산림공간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이용이다.

(1)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위상 유지

프랑스 농업은 국민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확대,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기업적 논리의 수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두 개의 새로운 규정(단일직불제와 이행조건준수)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과 식품산업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량생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농가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장려하는 한편, 비식량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림업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에너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은 경제활동의 개발, 전후방 연관산업 부문에서의 고용의 유지와 창출, 근거리 사회적 활동망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자연자원 보호는 농업개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농민들로 하여금 오염을 감소시키는 농법의 채택, 생물다양성의 유지, 농촌경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농업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2) 식품안전성, 동물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제기된 식품안전성 문제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랑스는 식품위생안전청(AFSSA, Agence Francaise de Sécurité Sanitaire des Aliments)을 설립하고,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위생 위험의 인지와 예방 및 감독체계의 개발, 도출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응력 강화, 위험관리 활동역량 개선 등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식품위생 및 식물병충해방제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위험평가 및 인지, 감독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프랑스의 이와 같은 정책은 국제 및 EU차원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축산부문에 동물후생에 대한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행조건과 결부된 보조금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연구, 교육, 개발활동의 시너지 극대화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농업교육 분야는 그동안 농업교육에 필요한 특수한 교수법을 발전시켜 왔으며, 농직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결합해 인력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인들의 교육수준은 최근 수십년간 대폭 향상되고 있으며, 1970년대 말 청년영농정착보조금(DJA)을 지원받은 25%만이 전문학사(niveau 5, CAP/BEP)학위를 보유했으나, 2004년도에는 85% 이상이 대학입학자격학위(niveau IV)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전국 7개 지역에 농업생명 및 환경분야 거점 연구교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고등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파트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2006년 농업기본법은 이들 기관들로 하여금 공동연구 및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연구개발국(DGER)에 농업 및 농촌개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4) 농촌 및 산림공간에서의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이용

전체 국토면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농촌공간은 여전히 농업활동 비중이 높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을 정책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농촌공간에서의 경제, 사회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거주인구가 회복국면에 놓여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인구나 경제활동이 후퇴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에서의 경제개발 및 고용창출, 농촌어메니티의 개선, 환경 및 자연공간의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제정된 농촌지역개발에관한법(LDTR/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lux) 이후 추진하고 있는 '농촌특성거점지역개발(l'initiative des poles d'excellence rurale)' 정책은 농촌개발정책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프랑스 전체국토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국토이용의 측면에서 농촌지역 경제개발의 원동력, 환경보호 및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한다. 산림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재생가능자원이며, 임업부문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건축분야에서 생태적인 재생가능 소재로써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3) 주요 추진과제

2003년 정부개혁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는 앞서의 비전과 전략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들을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크게는 정부개혁 기본방향에 부합(국가정책 목표별 공공재정의 합리적 이용 및 최적화, 분권화된 서비스의 개혁, 공공서비스 중 근접서비스를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실현(interministrialité)하면서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1)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기관 및 농민들을 위한 농업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Simplifions!(단순화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약 50여 가지의 농업행정 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농업행정의 전자화 조치들이다(저리용자관리, 보조금 취득, 감독 등 분야). 이밖에도 공동농업정책을 취급하는 TéléPAC이라는 온라인 수단은 43만 명이 이용하는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지등록과 농지면적 신고 등을 간소화시켰으며, 농업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신청 등 관련 시책들을 대폭 간소화시켰다.

(2) 농업식품산림부 예산의 재구성

농업식품산림부 예산구조를 농학연구 및 농업계 대학교육, 농업기술교육, 산림, 농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농촌개발, 식품안전성 및 품질, 농업정책의 수행과 관리, 농산품의 가치화 및 생산방향설정, 시장조절 등 7개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3) 농림행정분야의 인적자원관리

2006년에 인적자원관리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고용예측, 자격제 심사를 통한 경력관리 개선, 기능 및 지리적 차원의 이동배치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정보시스템의 현대화

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행정 간소화를 위한 행정전자화 추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조직 개선, 정보화비용 절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농업행정구조의 재조직화

농업식품산림부 본청의 중앙행정 조직을 3개 분야로 구성해 농업행정의 선도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sécrétariat général)은 예산, 인적자원, 근대화, 법률, 커뮤니케이션, 통계 등 지원기능을 담당하며, 정책국은 농업식품산림부의 주요 임무들을 정책개념과 평가기능을 통해 수행하고, 농식품 및 농촌공간위원회(CGAAER)는 농정감독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단위 농정(DRAF, Région)은 국가정책의 코디네이션 및 에니메이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과단위(Service) 기능의 부서를 신설(통계 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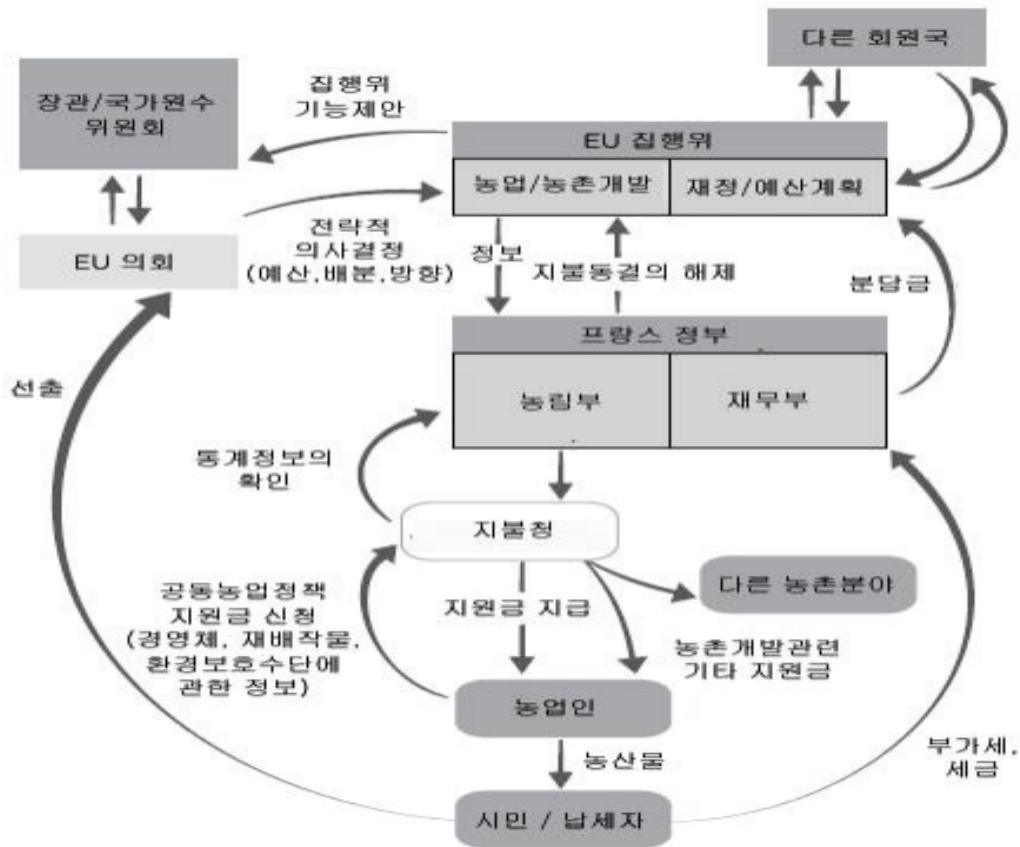
도단위 농정(DDAF, Département)은 정책 수혜지역 및 대상자와 최단거리에서 공공정책의 수행하고, 국가정책의 홍보, 에니메이션, 감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산하기관들의 경우 EU 공동농업정책의 단일직불제 확대에 따라 지불청(ASP) 신설 등 관련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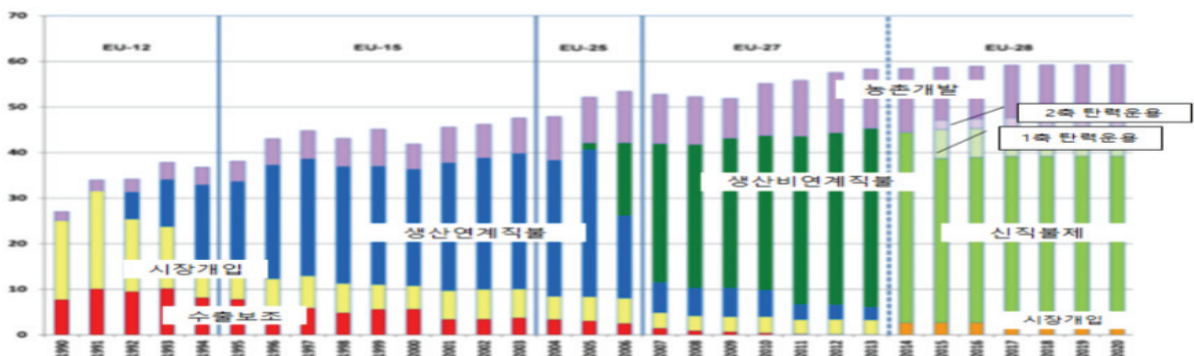
1957년 로마조약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설계자 역할을 담당했던 프랑스는 EU 공동농업정책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국의 농업정책을 EU 공동농업정책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출현에 앞서 프랑스는 농정의 기본틀 역할을 하는 농업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공동농업정책 개혁 때마다 한발 앞서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공동농업정책 변화에 앞서 국내 농정을 정비해 왔다. 1962년 공동농업정책 시행을 앞두고 제정된 1960/62년의 농업기본법을 비롯해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개혁 시기, 즉 1992년의 맥서리개혁, 1999년의 Agenda 2000 등을 앞두고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자국 농업정책과 공동농업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였다.

프랑스는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내와 EU 차원에서 가격지지 방식의 농업부문 지원을 계속해서 선호했으나 1993년 UR 협상타결을 앞두고 이뤄진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계기로 직접소득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EU의 직접 소득지원 방식이 1999년 개혁과 2003년 개혁을 거치면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디커플링 방식으로 전환해갔으나, 프랑스는 회원국에 부여된 자율성을 활용해 생산연계지불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6>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연계

자료: Bernard BACHELIER, Pour une nouvelle politique agricole commune, fondapol, 2010.11



<그림 4-17> EU 공동농업정책 지출구조의 변화

자료: DG 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EU의 공동농업정책은 1992년의 직불제 도입, 2007년의 생산비연계직불로의 전환, 2014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녹색화로 지출구조에 큰 변화가 있어왔다. 199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지출액의 90%를 시장개입분야가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5%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시장개입 활동도 과거에는 수출보조와 비축수매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식량위기에 대비한 비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직불예산은 199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공동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었으며, 직불지출액의 94%가 생산과의 연계 없이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농업정책은 농업활동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경관, 생물다양성, 기후안정성).

<표 4-43>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변화

년도	EU 공동농업정책	프랑스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조약 체결 - 조약 제39조에 공동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를 정의: 식량자급 보장, 생산성 증대, 농산물시장 안정 및 농업인 생활수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톨릭계 청년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농업정책에 대응한 미래 프랑스 농업 정책구상 -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구상 - 직업간 균형발전(소득, 사회보장) - 부부노동력 중심, 소득균형 실현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sa 회의 - 6개 회원국이 공동농업정책의 대원칙에 합의: 단일가격, 공동채우선, 재정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부문 최저임금제 개념과 유사한 최소정착면적 개념을 구조정책에 도입 - 조기은퇴, 직업전환 프로그램 가동
1962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농업정책 시행 • 6개 회원국 간 관세동맹 시행 - 6개국 간 관세폐지, 공동관세율 적용, 설탕, 쇠고기, 유제품에 대해 단일시장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62 농업기본법 제정 - 농지이용, 인력육성, 구조정책에 관한 정책 및 기구 설립 - 정부와 농업계간 농정공동관리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생산 위기 - 우유에 대해 쿼터제 도입, 가격지지 정책 후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 조건불리정책 도입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셔리개혁(Mac Sharry) -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 의무휴경제 시행, 품목별 공동농업정책 예산지출 상한 - EU 농업환경시책(MAE)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농업기본법 개정 - EU의 농업환경시책(MAE)에 대응해 Opérations groupées d'aménagement foncier (OGAF) et Opérations locales agro-environnementales (OLAE) 도입 - 농업의 다면적 기능 촉진을 위한 최초의 정책 수단, 1999년 CTE로 전환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2000 - 베를린 합의에서 유럽농업모델의 현대화 추진, 공동농업정책 이원화(제1지주: 소득보전직불과 시장개입정책, 제2지주: 농촌개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농업기본법 개정 • 프랑스 농촌개발프로그램 2000-2006 - CAP 제2축 농업환경시책에 대해 CTE(1999-2002, Contrat Territorial d'exploitation) 도입, 2003년 이후 CAD(Contrat d'agriculture durable)로 전환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룩셈부르크 합의 - 단일직불 도입, 직불금에 대해 상호준수(cross compliance) 의무화(decoup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E, Agenda 2000에 따라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반영한 농업경영 지원 프로그램(공간관리, 고용창출과 유지, 환경보호, 경제활동 개발) - CAD, CTE 뒤를 이어 2003년 도입, 2006년까지 시행, EU의 MAE 농업환경 분야별 활동 촉진(토지침식 방지, 토양 및 수자원의 질 보전, 생물다양성, 농촌경관의 보전 등), 농업경영체와 국가(지방정부)간에 5년 단위 계약, 농업환경 측면에서의 의무활동에 대한 비용 및 생산 감소분 보상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농업정책 건강진단 - 공동농업정책의 현대화 및 합리화 - 회원국 확대와 국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기능 개선 - 디커플링 강화, 일부 취약생산분야 생산연계 지원 수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농촌개발프로그램 2017-2013 - 2007년, CAD를 MAET로 전환 - 대상지역 특정화, Natura 2000 구역(생물다양성)과 취수보호구역 - 해당구역에서 요구되는 특정 활동 의무 수행 • 2009년 직불관련 행정기관 통합 - ASP(지불청) 설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농업정책의 녹색화 (greening) - 조방적 축산과 고용촉진, 직불금의 30%를 친환경농업과 연계, 청년영농 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농촌개발프로그램 2014-2000

년도	EU 공동농업정책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 2015-2020 - 1축: 기초작물, 녹색작물 도입(30%), 청년작물(2%) or 소농(10%) 등 - 2축: EU 농촌개발 6개 우선 순위 중 최소 4개분야 시행 - 지식의 이전과 혁신 - 농림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 개선 - 식품체인의 조직화 촉진, 동물후생과 리스크 관리 - 에코시스템의 복원과 보전 - 기후변화 대응 - 사회적 통합과 빈곤의 퇴치 	

자료: Ministère de l'agriculture, Chronologie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2012

2014년 현재 프랑스 농업정책예산(농업에 대한 공공기여액)의 61.3%가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공동농업정책 제1축에 해당하는 '시장 및 농업소득'분야의 EU 재정의존도는 89.8%에 달하는 한편, 공동농업정책 제2축에 해당하는 '농촌개발' 분야는 64.9%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국내 농정이 EU의 공동농업정책 재원에 연계된다 하더라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자율적 편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허용범위 내에서 국내 농정에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지원정책 중 예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국내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다음 표에 나타난 것처럼 '생산위험관리', '영농은퇴지원', '마필산업', '연구교육'분야의 정책들이다. 연구교육분야는 프랑스 농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농업연구 및 교육'관련 정책은 농업식품산림부 연구교육국의 지휘하에 농업식품산림부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생산위험관리' 등 EU 재정이 미비하거나 연계되지 않은 정책들은 프랑스 국내 정책이 '공동농업정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시책들이다.

<표 4-44>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기여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단위: 백만 유로

년도	2005	2010	2014		
			계	프랑스	EU
□ 농업 및 농촌지역	12,672.5	12,216.7	10,745.3	1,662.0	9,083.4
• 시장 및 농업소득(CAP 1축)	10,068.7	10,349.4	8,828.2	899.3	7,928.8
직불	7,712.6	8,220.5	7,510.0	138.6	7,371.4
- 단일작물 등	0.0	7,178.6	6,794.9	0	6,794.9
- 생산연계지원	7,712.6	1,041.9	715.1	138.6	576.5
시장지원	2,167.3	881.1	729.6	184.7	544.9
- 시장조절	1,364.3	346.7	258.2	76.9	181.3
- 품목조직 현대화	136.2	314.5	349.8	40.3	309.5
- 공급조절	586.7	95.7	8.3	8.3	0.0
- 품질 및 시장촉진	80.0	124.3	113.3	59.2	54.1
생산위험관리 및 비용경감	98.9	1,146.9	569.0	568.9	0.0

년도	2005	2010	2014		
			계	프랑스	EU
식량원조	89.9	100.9	19.6	7.1	12.5
• 농촌개발(CAP 2축)	2,229.3	1,492.3	1,743.3	611.2	1,132.0
영농정착, 환경오염관리	459.3	327.5	381.3	181.6	199.7
영농은퇴	89.1	54.5	37.0	36.3	0.6
조건불리지역 보상	527.5	555.4	644.4	164.0	480.5
농업-환경시책	552.2	354.5	412.7	129.3	283.4
농촌공간정비 및 보호	365.9	123.7	182.8	54.0	128.8
농산물가공 및 상품화	49.5	25.7	44.9	5.9	39.0
마필산업	185.8	51.0	40.1	40.1	0.0
• 동식물 위생안전	374.5	375.0	173.9	151.4	22.5
<input type="checkbox"/> 산림	353.5	484.2	337.7	307.6	30.1
<input type="checkbox"/> 연구교육	2,125.8	2,350.9	2,467.6	2,449.5	18.1
기술교육(농업학교)	1,205.7	1,256.2	1,314.6	1,314.6	0.0
실습, 평생교육	14.4	27.3	30.0	11.9	18.1
농업계대학교육	193.3	261.6	281.3	281.3	0.0
농학연구 및 기술보급	712.4	805.7	841.6	841.6	0.0
<input type="checkbox"/> 일반행정	1,319.7	1,352.5	1,341.9	1,332.9	9.0
인건비	1,054.6	1,096.1	1,105.2	1,102.7	2.5
운영비	265.1	256.5	236.7	230.2	6.5
총계	16,471.5	16,404.3	14,892.5	5,752.1	9,140.5
이중 EU 예산	10,414.7	9,570.3	9,140.5		
이중 프랑스 예산	6,056.9	6,834.1	5,752.1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2005, 2010, 2014

2013년 이후 EU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강한 공동농업정책(une Pac forte)’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0년 2월 4일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대해 ‘강한 공동농업정책’을 표방하면서, 프랑스-독일 공동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강한 공동농업정책’의 취지에는 오스트리아 등이 합류하고 있다. ‘강한 공동농업정책’은 2008년 EU 농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공동농업정책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차대조표(le bilan de santé de la PAC)’에서 내린 진단과 처방의 주요 내용(공동농업정책의 시장접근 강화, Europe 2020 전체 전략 속에서의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개선)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대해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원칙은 첫째, EU내 예산비중 유지, 강화, 둘째, 공동농업정책의 두 개의 축 유지, 셋째, 직불금에 대한 EU와 회원국의 공동재정부담 방식을 통한 공동농업정책의 재국가화(renationalisation) 반대, 넷째, 공동농업정책의 단순화, 다섯째, 유럽 농업모델의 유지이다.

3. 프랑스의 2014-2020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

2014-2020 공동농업정책에서 프랑스는 조건불리지역 및 친환경 농업시스템 강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 직불단가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7년간 640억 유로(한화기준 83조 2천억), 매년 91억 유로(약 11조 8천억)가 투입되는 2014-2020 기간 동안 프랑스는 조건불리지역 지원예산을 15% 증액하는 한편, 농업환경시책 관련 예산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청년영농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축의 정착지원금 외에 1축 예산의 1%를 청년영농인 직불금으로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2축의 청년영농정착 지원금도 25% 증액하였다.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연계지불을 최대한 확보해 1축의 생산연계지원액을 10-15% 증액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이전 보다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연간 2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표 4-45> 프랑스의 2014-2020 공동농업정책 주요 추진 내용

분야	주요내용
예산	- 2014-2020 기간동안 연간 91억 유로(2013년 93억 유로) 7년간 640억 유로
조건불리지역 농업 활성화	- 2014년 이후 조건불리지역(ICHN) 지원액 15% 증액 - 2015년부터 초지유지장려금(PHAE)을 조건불리지원에 통합해 단순화함 - 모든 조건불리지역의 낙농가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청년영농정착 촉진	- 1축 예산의 1%를 청년영농인 직불금으로 추가 지원 - 신규 정착자 1만 명에게 75백만 유로 직불 지원 - 2축의 영농정착지원금에 추가로 25백만 유로 지원
축산분야 생산연계 지원	- 축산분야를 위해 1축의 생산연계지원 10~15% 증액 - 축산지원 예산 현재 수준 유지 - 젖소장려금 시행 - 식물성 단백질생산을 통한 축산사료 자급을 위해 150 백만 유로 증액
친환경농업시스템 이행 촉진	- 농업환경시책 관련 예산 두 배 증액 - 유기농예산 두 배 증액
직불단가 격차 해소	- 점진적으로 2019년까지 직불단가 70% 수렴
경쟁력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개선	- 연간 최소 200백만 유로(EU, 중앙정부, 지자체 예산) -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증액
농업경영체의 고용활동 지원	- 52ha까지 지원금 집중 2- 015-2018 사이 1축 지원예산의 20%까지 점진적 이행
리스크예방 및 위기관리수단 개선	- 1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Le Ministère en Actions, 2016.02

4.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조직과 기능변화

1) 정부조직 내 농업식품산림부의 위상

프랑스는 국가의 임무를 31개 분야별로 구분해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7년 프랑스 국가예산 규모는 4,273억 유로에 달한다. 농업, 수산, 식품, 산림, 농촌분야의 국가의 임무에 대한 일반예산 규모는 3,346 백만 유로로 전체의 0.78%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농림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정은 일반 예산 외에도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 타부처의 농림관련 예산, 지방정부 예산, 기타 기금 등의 예산에서도 투입되고 있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기여액(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으로 파악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액 규모는 2014년에 14,893 백만 유로에 달한다. 프랑스의 EU 재정분담금은 2017년에 190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중 91억 유로 정도가 농업식품산림부 예산과는 별도로 EU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프랑스 농업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표 4-46> 국가의 31개 분야별 임무와 일반예산(2017)

단위: 백만 유로

국가의 임무 분야	국가의 임무(불어)	예산
해외활동	Actions extérieures de l'État	3,006
국가 일반행정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État	3,106
농업, 수산, 식품, 산림, 농촌관련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s et affaires rurales	3,346
개발을 위한 공공지원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605
국가보훈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537
국가 위원회와 감독	Conseil et contrôle de l'État	649
미분배예산	Crédits non répartis	24
문화	Culture	2,912
국방	Défense	40,591
정부활동 지휘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465
생태, 개발, 지속가능한 유동성	É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s durables	9,620
경제	Économie	1,880
국토의 균형, 주거	Égalité des territoires, logement	18,345
국가의 재정적 의무	Engagements financiers de l'État	42,098
학교교육	Enseignement scolaire	70,012
공공재정과 인적자원의 관리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10,861
이민, 난민보호, 통합	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098
사법	Justice	8,543
미디어, 서적, 문화산업	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569
해외영토	Outre-mer	2,067
국토정책	Politique des territoires	706
공공권력	Pouvoirs publics	991
연구와 대학교육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6,949
사회보장체제와 은퇴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08

국가의 임무 분야	국가의 임무(불어)	예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436
상환과 감세	Remboursements et dégrèvements	108,834
건강	Santé	1,266
안전	Sécurités	19,515
연대, 사회적편입, 기회의 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7,845
스포츠, 청소년, 협력적 생활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729
노동과 고용	Travail et emploi	15,458
일반예산 총계		427,371

자료: www.performance-publique.gouv.fr

프랑스 정부조직은 2012년에 등장한 프랑수와 올랑드 사회당 정부 하에서 총리실을 포함해 18개 부처로 구성된다. 이전 정부에 비해 수산분야와 농촌성 분야가 농업식품산림부로부터 분리돼, 수산 분야는 환경에너지해양부로 이관되고, 농촌성 분야는 국토정비부로 이관된다.

2017년 현재 농업식품산림부는 일반예산 기준 국가예산의 0.78%, 직원수 기준으로는 1.58%에 달하며, 농업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비중과 직원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규모와 직원수는 소폭상승 또는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농업식품산림부의 인력규모는 3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농업계 대학과 연구기관, 농업계 고등학교를 농업식품산림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어, 전체의 57%가 교육과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표 4-47> 중앙부처별 및 직원수 (2017)

부처명	부처명(불어명)	직원수
총리실	Premier ministre	11,617
외교, 국제개발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13,834
사회복지, 보건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10,225
농업, 식품, 산림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30,533*
국토정비, 농촌성, 지방자치단체	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de la Ruralité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83
문화, 커뮤니케이션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1,189
국방	Ministère de la Défense	273,294
경제, 재정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141,307
교육, 대학교육, 연구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1,015,603
환경, 에너지, 해양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de l'Énergie et de la Mer	29,825
내무	Ministère de l'Intérieur	285,435**
사법	Ministère de la Justice	83,226
주택, 지속가능주거	Ministère du Logement et de l'Habitat durable	12,306
해외영토	Ministère des Outre-mer	5,505
노동, 고용, 직업훈련, 사회적대화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	9,523

부처명	부처명(불어명)	직원수
일반예산 연계 직원수		1,933,705

* 이 중 농업교육 종사자수 18,062명, ** 이 중 경찰인력 249,271명

자료: www.performance-publique.gouv.fr

프랑스 재경부,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CHIFFRES CLÉS DU PLF 2017

<표 4-48> 정부조직 내 농업식품산림부 비중 (일반예산, 인력)

단위: 백만유로, ETPT

년도	일반예산 (A)	농업식품산림부 예산 (B)	비중 (B/A)	정부인력 (C)	농업식품산림부 인력 (D)	비중 (D/C)
2009	392,688	3,557	0.91%	2,108,123	34,597	1.64%
2010	412,158	4,044	0.98%	2,007,291	33,476	1.67%
2011	368,543	3,669	1.00%	1,962,343	32,420	1.65%
2012	376,152	3,771	1.00%	1,922,505	31,789	1.65%
2013	395,484	3,358	0.85%	1,903,061	31,007	1.63%
2014	407,368	3,195	0.78%	1,894,670	31,000	1.64%
2015	395,570	2,923	0.74%	1,889,490	31,035	1.64%
2016	409,900	2,717	0.66%	1,908,233	30,497	1.60%
2017	427,369	3,346	0.78%	1,932,883	30,530	1.58%

자료: 재경부, LE BUDGET DE L'ÉTAT en quelques chiffres, 2009-2017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ressources-documentaires/documentation-budgetaire/chiffres-cles-budget-etat#.WPiTpIVOL_x

<표 4-49>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분야별 인력운영

단위: ETPT(Equivalent Temps Plein Travaillé)

년도	대학교육 및 연구	농업기술교육	식품안전 및 위생	농업정책 시행	기타*	인력운용 상한
2005	2,756	19,164	5,223	5,203	8,047	40,393
2006	2,696	18,960	5,218	5,103	7,942	39,919
2007	2,670	18,047	5,136	4,821	7,579	38,253
2008	2,691	16,241	5,012	12,137	-	36,081
2009	2,679	15,628	5,279	11,011	-	34,597
2010	2,676	15,090	5,336	10,374	-	33,476
2011	2,676	14,876	4,742	9,985	-	32,279
2012	2,676	14,706	4,676	9,595	-	31,653
2013	2,676	14,597	4,579	9,155	-	31,007
2014	2,696	14,819	4,547	8,938	-	31,000
2015	2,719	14,987	4,567	8,762	-	31,035

* 2008년부터 농업정책시행인력에 포함

자료: Ministère de l'agriculture, Bilan social 2015

2) 농업식품산림부의 기능변화

프랑스의 중앙정부가 농업부문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샤를 10세인 1829년이며, 1831년에는 상업부(ministere du commerce)가 농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1836년에는 부처명에 처음으로 ‘농업’이 등장하는데 공공공사, 농업, 상업, 상업을 담당하는 부처명이 등장한다. 1881년에는 농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처음으로 탄생하였으며, 이후 농업부문은 현재까지 독립부처를 유지하고 있다. 단, 1956-1957년 2년 동안은 경제부처 내에 농업담당 국무위원이 배치돼 경제부에서 농업부문을 담당한 적이 있다.

<표 4-50>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명칭변화

년도	키워드	부서명
1836	공사, 농업, 상업	ministère des Travaux publics, de l’Agriculture et du Commerce
1839	농업, 상업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u Commerce
1881	농업	ministère de l’Agriculture
2007	농업, 수산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2009	식료, 농업, 수산	ministèr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2010	농업, 식료, 수산, 농촌성, 정비, 국토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de la Pêche, de la Ruralité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2012	농업, 농식품, 산림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표 4-51>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기능변화

구분	농업식품산림부의 주요기능 변화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설이후 주요국(Direction): 농업(농업교육), 산림, 농업수리, 마필 - 농업사회보장 담당(1936) - 농업수리국 폐지(1966), 농촌국, 산림국으로 통합 - 농업교육담당 국으로 승격(1946) - 농식품산업국(DIAA) 창설(1968) - 가축위생과신설(1965) - 수의식품연구센터(CNEVA) 창설(1988) - 이후 AFSSA(식품위생안전청)으로 통합(1999) - 이후 AFSSET, ANSES(식품, 환경, 노동위생안전청)으로 전환됨(2010) - 국립농업과학원(INRA) 설립(1946), 이후 농업식품산림부와 과학기술부 공동의 산하기구로 기능(1984) - 프랑스 공공정책과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수산 및 수산양식분야가 생태, 지속가능, 에너지 담당부처로 이관됨(2013)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2년 도농업서비스(SAD) - 1966년 도농업국(DDA) - 1966년 22개 광역권(레지옹, Region) 설립으로 광역정부에 과단위(Service)의 수리정비, 산림정비, 농업통계 담당과 신설

3) 농업식품산림부의 예산 구조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2017년 총예산은 51.2억 유로다. 교육 및 연구분야가 전체의 3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농업정책 지원 12.7%, 식품위생안전 9.9%, 지속가능발전과 경제 37.5%, 산림 5.5%의 순이다.

<표 4-5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예산구조(2017)

단위: 10억 유로, %

총예산	농업기술 교육 (농고)	농학연구 및 대학교육	농업정책 지원	식품위생 안전	농업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 과 경제	산림
5.12 Mds	27.7%	6.7%	12.7%	9.9%	37.5%	5.5%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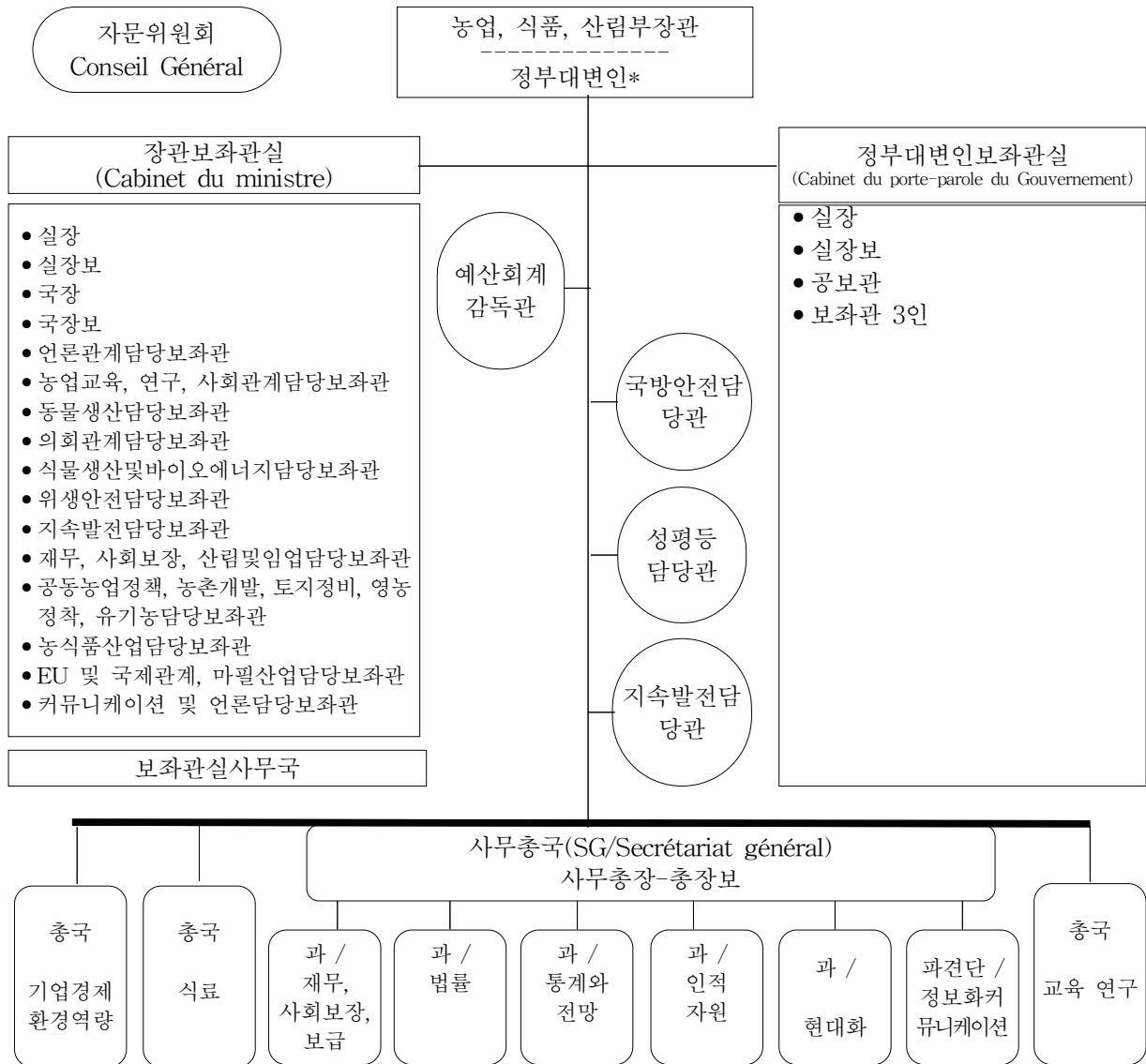
농업식품산림부 예산과는 별도로 EU 공동농업정책(1축과 2축)으로부터 지불청(ASP)을 통해 지원되는 연간 약 90억 유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농업정책 1축 예산은 100% EU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불관련 예산이며, 2축 예산은 EU와 회원국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다.

프랑스는 매년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정부, EU, 지방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기여액을 파악하고 있는데, 2015년의 공공기여액 규모는 123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액만을 집계한 것이며, 2015년부터는 처음으로 세제 및 사회보장 감면분이 포함된다. 이중 104억 유로가 농업소득지지 및 시장지지를 위해 사용됐으며, 17억 유로는 농촌개발을 위해, 1억 유로는 동식물의 위생안전 등을 위해 사용된다.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기여액'은 농업식품산림부 예산 중 수산 및 양식부문을 제외한 나머지와 농업식품산림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 농업식품산림부 예산과 연계돼 같은 목적으로 투입되는 다른 부처의 관련예산 및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 등이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예산은 농업식품산림부의 일반예산(Budget général)이 주가 되며, 이외에도 다른 중앙부처(내무부, 교육연구부, 노동부 등)의 농업관련예산이 포함된다.

지방정부의 농업관련예산은 3-4년 단위로 파악되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편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지방정부간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어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그 규모는 중앙정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농업식품산림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산림기금(Fonds forestier national), 용수개발기금(Fonds de développement des adductions d'eau) 및 종마 및 양마(養馬)기금(Fonds national des haras et des activités hippiques)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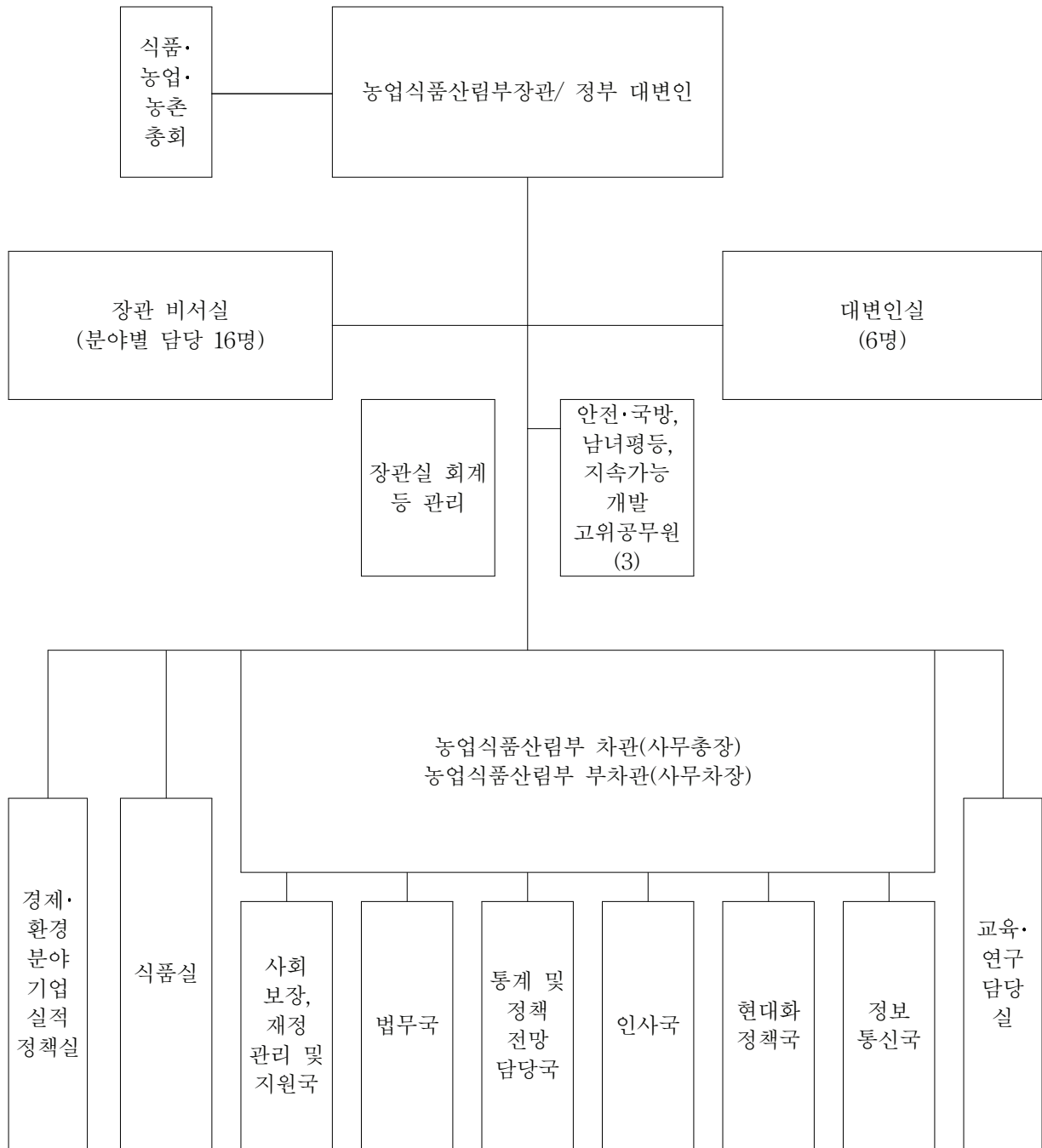
4) 농업식품산림부의 조직



<그림 4-18>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조직의 흐름도(파리본청)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본청은 세 개의 총국(DG/direction générale, 식료, 교육과 연구, 기업경제환경역량)을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재정, 서비스조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통계전망, 법률 및 부처의 현대화 정책을 이끄는 사무총국(SG/Secrétariat général)을 중심으로 다른 3개 총국(식료, 기업경제환경역량, 교육연구)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프랑스 농림행정조직은 2008년에 여러 기능들을 대단위로 통합을 거쳐 2015년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농업 행정조직은 국(Direction)-과(Service)-계(Bureau)의 위계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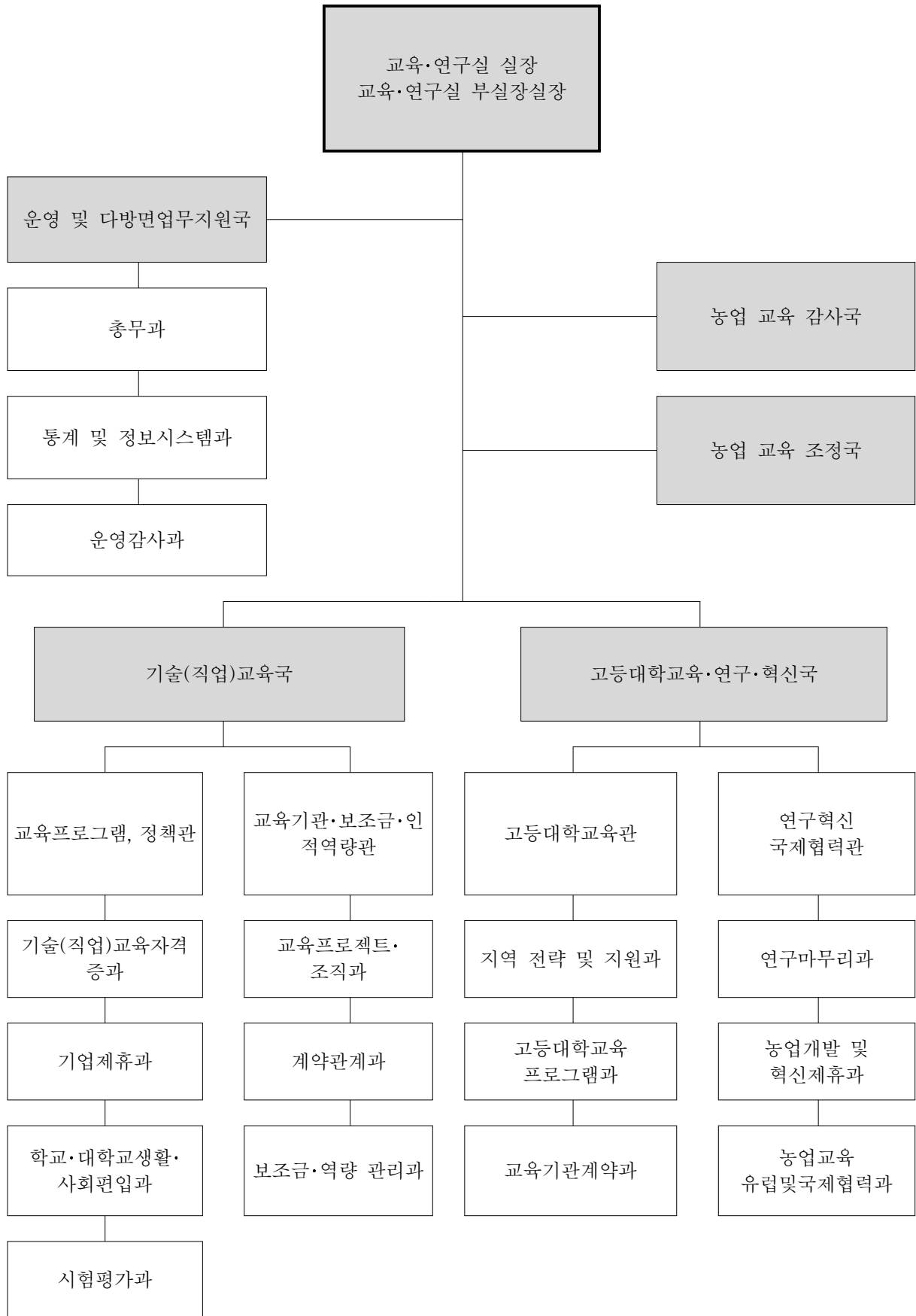
<그림 4-19>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조직도 개요(파리본청)



<그림 4-20>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기업경제환경성과실 조직도



<그림 4-21>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식품실 조직도



<그림 4-2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교육연구실 조직도


5) 농업식품산림부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는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산하기관들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계 학교 및 농학연구기관들은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의 교육연구총국(DGER)의 관할 하에 운영되는 기관들이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국립원산지품질원(INAO), 산림청(ONF) 등 농업식품산림부가 주도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들이 있는 반면, 국립농학원(INRA)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거나 2차적 지위를 갖는 공공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표 4-53> 프랑스 농업관련 산하기관(Etablissement)과 정책수행조직(Opérateur)

산하기구	산하기구명	한글 명칭
☐ 농업식품산림부가 주도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		
	Agence Bio Agence Française pour le Développement et la Promotion de l'Agriculture Biologique	유기농업발전 및 촉진기구
	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국립원산지품질원
	ODEADOM Office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agricole d'outre-mer	해외영토농업경제발전청
	FranceAgriMer FranceAgriMer- Établissement national des produits de l'agriculture et de la mer	농수산물시장관리통합기관 (공동농업정책1축관련)
	ONF Office national des forêts	산림청
	ASP Agence de services et de paiement	지불청 (공동농업정책1축관련)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국립식품, 환경, 노동위생안전기구
	INFOMA Institut national de formation des personnels du Ministère de l'agriculture	국립농업식품산림부직원교육 연수원
	CNPf Centre nat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	국립산림소유권센터
	IFCE L'institut français du cheval et de l'équitation	프랑스 마사회

산하기구	산하기구명	한글 명칭
<input type="checkbox"/> 농업식품산림부 직속 농학교육 및 연구기관 (DGER 산하)		
	Montpellier SupAgro	국립몽펠리에농과대학
	ENGEES Ecole nationale du génie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de Strasbourg	국립스트라스부르크 농공환경대학
	Ecole Nationale Vétérinaire de Toulouse	국립 툴루즈 수의과대학
	ENSP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paysage	국립조경대학
	AgroSup Dijon Institut national supérieur des sciences agronomiques de l'alimentation et de l'environnement	국립 디종 농업식품환경대학
	ACTA Le réseau des instituts des filières animales et végétales	동식물분야연구원네트워크
	AgroParisTech Institut des sciences et industries du vivant et de l'environnement	파리아그로테크 생명환경산업과학원
	Oniris Ecole Nationale Vétérinaire, Agroalimentaire et de l'Alimentation Nantes Atlantique	국립 대서양 낭트 농식품수의과대학
	EnvA Ecole nationale vétérinaire d'Alfort	국립 알포르 수의과대학
	Bordeaux Sciences Agro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Sciences Agronomiques de Bordeaux-Aquitaine	국립 보르도-아키텐 농과대학
	Actia Le réseau français des instituts techniques de l'agro-alimentaire	프랑스 농식품기술원 네트워크
	AGROCAMPUS OUEST Institut supérieur des sciences agronomiques, agroalimentaires, horticoles et du paysage	프랑스 서부지역 농학식품원예조경대학
	VetAgro Sup	프랑스 남부지역 농학식품환경수의대학
	ENFA Ecole Nationale de Formation Agronomique	국립농학교육대학 (농학계학교 교육양성)
<input type="checkbox"/> 농업식품산림부가 2차적 또는 이사회 멤버로 있는 산하기구		

산하기구	산하기구명	한글 명칭
	IGN Institut national de l'information géographique et forestière	국립 지리산림정보원
	ONEMA 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ieux aquatiques	국립 수리환경청
	Oncfs Office National de la Chasse et de la Faune Sauvage	국립 수렵야생동물청
	GEVES Groupe d'Etude et de contrôle des Variétés Et des Semences	종자다양성연구감독그룹
	INRA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국립농학연구원
	IRSTEA Institut de recherche en sciences et technologies pour l'environnement et l'agriculture	환경과 농업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원

자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www.agriculture.gouv.fr)

5. 요약 및 시사점

프랑스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와 농정기능의 변화과정을 통해 농정의 주요트렌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농업은 EU의 확대,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기업적 논리의 수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에너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활동이 새로운 가치 창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의 유지와 창출, 근거리 사회적 활동망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이밖에도 농업활동의 바탕이 되는 자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친환경 농법의 확대, 생물다양성의 유지, 농촌경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농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위생 위험의 인지와 예방 및 감독체계의 개발, 도출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응력 강화, 위험관리 활동역량 개선을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으로 농업식품산림부가 농업교육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농업 R&D 분야와 농직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이 농업정책과 원활한 소통체계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EU 공동농업정책의 제2축으로 등장한 농촌개발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에서의 경제개발 및 고용창출, 농촌어메니티의 개선, 환경 및 자연공간의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농정은 다른 영역의 공공정책과 함께 국가정책 목표에 보다 합리적으로 부합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분권화된 서비스의 개혁, 근접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의 확대를 통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농업식품

산림부 예산의 재편성,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농업행정의 재조직화, 산하기관의 통폐합 및 재편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본부 조직은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산림, R&D, 수산 등을 포함하여 농림수산업, 식품 및 농촌발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농업·식품·산림·농촌분야 업무를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 식품 안전 및 품질, 연구 및 교육 지원 등 3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분야별 소속 및 산하기관을 두면서 본부에서 소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성·보건·검역 업무를 포함하여 식품사슬(food chain)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부처 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부 식품실 부실장(고위직)이 동물질병 및 보건 분야 최고직인 수석수의관(CVO)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동 분야의 전문성 및 정책총괄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를 주요 3개 정책 기능 중 하나로 구분·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 식품제조·유통기술 발전,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분야별 역량(skills)을 갖춘 인재의 육성, 기술혁신 및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분야별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환경을 대립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 및 조화시키려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COP21(파리 기후협력) 등에서 강조되는 것과 같이 농식품 분야가 경제적 기여와 함께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그 동안 농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불만에 더해 환경적인 부담(온실가스,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조직을 갖고 있으며 주요 정책을 지방청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코뮌(기초)-데파르트망(상위)의 지역 구분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프랑스 영토를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관리, 산림 등 전문성을 요하는 별도의 다수 소속·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나라 농정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프랑스와 유사한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유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와 자연자원의 보호, 식품의 위생안전을 위한 인지와 예방, 감독체계의 확충, 농업후계 인력 육성 등이 농정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960년대 농업근대화 시기에 설계된 농정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분권적이며, 현장에 근접한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정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예산구조도 직불제 확대를 위해 5년 단위의 예산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요 농정분야별로 예산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육부 관할 하의 농업교육 분야를 농업식품산림부로 이관해 농업정책, 인력육성, 농직업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영국 농림수산 관련 중앙부처의 변화 검토³⁰⁾

1. DEFRA 창설 개요

영국의 농업담당 부서의 명칭은 1955년부터 농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1년 6월에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 관련된 조직구조와 기능을 정비했다.

부서의 명칭변경은 2001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노동당은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즉, Department for Rural Affairs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 MAFF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1년 6월 18일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를 창설하였다. 우선, 기존 MAFF의 업무는 모두 그대로 DEFRA로 이관되었고, 다음으로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로부터 환경보호그룹(Environment Protection Group)과 야생전원국(Wildlife and Countryside Directorate)을 통합하였다. 또한 내무부(Home Office)로부터 동물복지와 사냥레저 담당 업무를 이관받았다.

DEFRA는 단순히 명칭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의 변화를 수용하여 정부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정비를 단행하였다.

1) DEFRA의 목적(Aim)

2001년 출범 당시에 설정한 목적과 과제를 살펴보면, DEFRA에서 설정한 목적은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부서의 비전 성격을 갖고 있다. DEFRA가 설정한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는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다 나은 환경의 조성, 둘째, 농어업, 식품, 물 및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 셋째, 농촌지역 경제와 사회의 번영 및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전원 조성이다.

<표 4-54> MAFF의 목적과 목표

목적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높은 안전기준, 환경보호 및 동물 복지 및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생산 사이클 구축, 경쟁력 있는 식품 생산, 농업 및 해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 기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1: 농산물 및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동물 질병과 관련된 국민들의 건강 보전 - 목적 2: 농촌과 해양환경 및 어메니티의 유지 및 강화 그리고 임업 장려 - 목적 3: 소비자와 납세자를 고려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CAP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 - 목적 4: 국제 경쟁력 있는 농수산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

30) 이 내용은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에게 발주한 원고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5: 국민들이 어메니티를 즐길 수 있도록 농촌과 해안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발전을 강화하는 것 - 목적 6: EU 규정에 따라서 CAP 보조금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 목적 7: 미래세대를 위한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 목적 8: 가축과 어류의 복지수준을 보장하는 것 - 목적 9: 홍수와 해안침식에 의한 자연환경 및 인간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 - 목적 10: 건전하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식품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

2) DEFRA의 우선 과제(Objectives)

DEFRA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할 과제(또는 목표)로서 7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과제 1(Objective 1)은 농촌, 도시, 바다 및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에 관한 다른 정책들을 통합하도록 주도하는 것이다.

둘째, 과제 2(Objective 2)는 농촌지역이 역동적이며 참여적인 경제, 강한 농촌 커뮤니티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기회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과제 3(Objective 3)은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식품 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과제 4(Objective 4)는 매력적이고 잘 관리된 전원지역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과제 5(Objective 5)는 CAP의 좀 더 과감한 개혁과 국내외적 정책을 통해서 지속가능하며, 다양하고, 현대적이며, 적응력있는 농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섯째, 과제 6(Objective 6)은 국내외에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려 깊은 사용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곱째, 과제 7(Objective 7)은 식품, 물 및 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포함해서 환경 영향과 건강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과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기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3) DEFRA의 중요 활동(Principal Activities)

DEFRA가 추진해야 할 주요 활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 둘째, 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 셋째,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을 위해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넷째, 강한 농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다섯째,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원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2. DEFRA의 기능과 역할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

2002년 의회에서는 DEFRA가 자신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2년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하여 이를 토대로 DEFRA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를 점검하였다.

1) 새로운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

DEFRA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와 논의들이 있었다. 우선 DEFRA의 업무범위는 농업보조금, 교토의정서, 농촌개발, 수산업, 쓰레기 처리, 물관리 및 홍수 대책, 자원보존, 동물복지, 오염방지, 식품안전성 관련 업무 일부로 하였다. 따라서 여러 기관들은 환경이나 농업에 대한 업무가 경시될 것에 대한 우려, 농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DEFRA에서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였다.

이들 분야에 관한 정책을 DEFRA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학교, 대중교통, 우체국 및 기타 농촌관련 정책들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DEFRA가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교통지역부(DETR)가 포괄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교통과 지역계획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에 대한 이슈를 DEFRA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는 여기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DEFRA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이에 대한 DEFRA 차원의 의견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추 부서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

논의의 핵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설정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DEFRA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001년 11월 DEFRA 장관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부 내에서 중요한 이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서를 창설하고 운영해야만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DEFRA는 2002년 6월 18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보고서(Foundations for our future)를 발간하였고, 여기서 DEFRA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천명하고 “정부와 영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산, 장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영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적 측면이다. 영국 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으로 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목표(Objectives)를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사람의 필요에 충족하는 사회적 진보(Social Progress), 둘째,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Effectiv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셋째, 자연자원의 신중한 사용(Prudent use of natural resources), 넷째, 경제성장과 고용의 향상 및 안정적인 수준

을 유지(Maintenance of high and stable levels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환경을 고려하고 경제와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ornmtnal sustainability)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지방정부연합회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DEFRA는 우선 교통, 도시계획 및 지방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교통산업부(DTI)와 자원 생산성의 향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협력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되도록 재무성(Treasury)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서 녹색관련 장관 협의체의 의장을 맡아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주도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DEFRA는 환경관련 업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환경단체에서는 DEFRA가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 내에서 환경관련 이슈들이 주변부적인 이슈로 전락될 것이 우려된다(RSPB). 둘째, 환경담당 부서 직원들이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 우려된다(Friend of the Earth). 셋째, 2001년 선거에서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후퇴되었다(IPPR).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관련 단체에서 환경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DEFRA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에 대해 DEFRA는 의견을 제시한다. DEFRA의 차관은 의회에서 “환경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은 전체 DEFRA 예산에서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고 전체 환경 관련 분야의 예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DEFRA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DEFRA가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와 함께 DEFRA가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3) 농촌문제의 전담 부서로서의 DEFRA의 역할

DEFRA가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에 직접적인 업무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MAFF 시절에도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예산이나 부서도 없었다. 또한 농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령이나 보조금도 없었다. 농업담당 부서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국제적인 환경정책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었다(National Trust).

DEFRA의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 분야는 ‘농촌문제의 전담자’가 되는 것이었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촌의 관점에서 다른 부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했다. 결국, DEFRA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업무는 (i)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ii)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DEFRA의 기본적인 역할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천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영국 내 도시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명칭에서 ‘농업’이 제외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DEFRA로 개정된 것에 대해 농

업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판의 목소리는 첫째, 다양한 농민단체에서 농업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하였다. 둘째, DEFRA 명칭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NFU). 셋째, DEFRA는 좀 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통해 공공재 공급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CPRE). 넷째, DEFRA가 제시한 목적과 목표는 농업생산의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낙농협회)라는 것이다.

한편 DEFRA는 정부가 농민의 요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함을 천명하였다. DEFRA 차관은 “우리 부는 농민부가 아니고 농촌문제와 환경을 다루는 부서다, 농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해이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MAFF는 정부 내에서 단일 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부처이며 이것은 마치 소련방식의 느낌을 갖고 있다. 농업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FRA는 농업부문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DEFRA는 여전히 농업과 관련해서 정부 및 EU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DEFRA는 여전히 농업분야를 대표하는 부서이고 협상자이며 중재자로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해서 농업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이 변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DEFRA는 농업분야가 농촌공동체, 전원보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3. 영국 농림수산 관련 부서의 조직 구조 변화

1) 개요

영국 중앙정부의 농림수산 관련 부서는 1889년 처음으로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몇 가지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DEFRA(환경식품농촌부)에 이르고 있다. 1889년 설립당시에는 농업이사회(Board of Agriculture)로 명명되었다. 1903년 명칭을 농수산이사회(Board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로 개칭하였으며 수산업이 부서명칭에 표현되었다. 1919년에 장관급 부서로 격상되어 농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로 개칭되었다.

1955년에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면서 부서명칭이 농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로 변경되었다. 2001년에 MAFF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되어 현재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변경되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부처 운영구조가 변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2001년 DEFRA 형성이전과 이후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고 최근까지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DEFRA 정책 수행 관련 기구 현황

먼저, 현재 영국 DEFRA의 정책집행은 국, 과로 이루어진 내부 부서 이외에 별도의 부처

내부 실행기관(Executive Agencies)과 부처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DEFRA의 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비부처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DEFRA 내부 기관으로 간주되는 정책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은 현재 6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DEFRA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운영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DEFRA 외부 기관인 비부처 공공법인(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y)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정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르는 용어이며 집행 NDPB, 자문 NDPB, 심판 NDPB, 감시단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기타 DEFRA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들과 9개 지역의 국립공원관리소가 있다.

(2) DEFRA 내부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DEFRA 조직구성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장관관(Ministers), 운영진(Management Board), 실무진(Directors)으로 구성된다.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부서의 장관과 차관 및 차관보는 모두 집권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되는 자리이다.

운영이사회는 1명의 총괄비서(Permanent Secretary)와 실국장급(Director General) 관료와 3-4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 총괄비서(Permanent Secretary)는 반드시 DEFRA 출신 공무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부처에서 가장 경험 많은 관료들 중에 한 명을 DEFRA 총괄비서로 임명하고 실제적인 정책과 업무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당과는 상관없는 전문관료들로서 전반적인 정책의 운영과 재정 및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운영이사회 산하에 감사 및 위험관리 위원회를 두고 정책 및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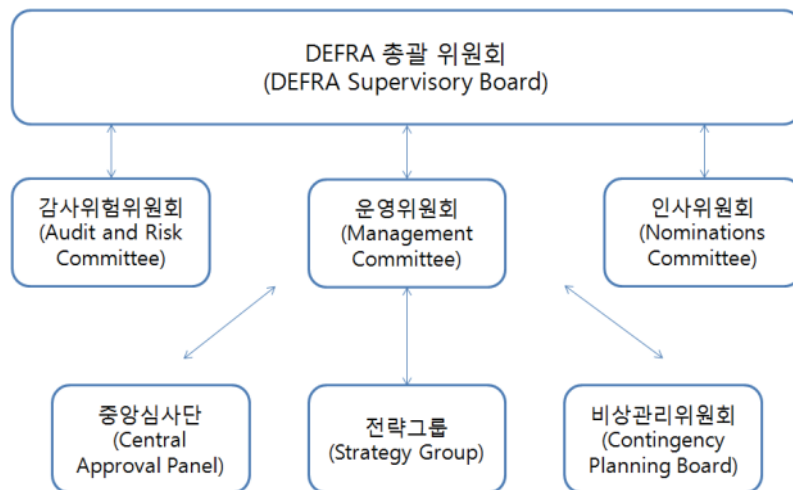


<그림 4-23> DEFRA의 조직 구조(2015년)



<그림 4-24> DEFRA의 조직 구조(2010년까지)

DEFRA의 조직구성은 2011년부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다시 변화된다.



<그림 4-25> DEFRA의 조직 구조(2011년부터)

DEFRA 총괄위원회(Supervisory Board)는 2010년 DEFRA 내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기구로서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DEFRA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장관(Ministerial Team), 총괄비서(Permanent Secretary), 운영국장(Chief Operating Officer)과 재정국장(Chief Finance Officer), 4명의 하위 위원회 위원장과 2명의 외부 집행기관장(환경청장, 자연청장)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3월, 6월, 9월, 12월)되며, 총괄위원회는 산하에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인사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 감사위험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 등을 두고 있다.

감사위험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는 총괄위원회나 재정담당부서에 자문을 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DEFRA의 다양한 업무와 민원제기 사항을 다룬다. DEFRA 내부 집행기구나 외부 공공기관의 장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는 각종 인센티브나 보상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주요

비부처 공공법인기관의 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총괄비서와 인적자원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는 총괄비서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DEFRA의 전략이행, 재정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위원회다.

4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2015년 현재 참여위원은 총괄비서(Permanent Secretary), 운영국장(DG Chief Operating Officer), 전략/국제/식품/농업 국장(DG Strategy, International, Food and Farming), 환경 및 농촌국장(DG Environment and Rural), 수의국장(DG Chief Veterinary Officer), 과학자문관(DG Chief Scientific Adviser), 그룹전략실장(Group Strategy Director), 재정담당관(Chief Finance Officer), 농촌지불청장(CEO Rural Payment Agency), 동식물건강청장(CEO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환경청장(CEO Environment Agency), 자연청장(CEO Natural England)이다.

이와 같은 DEFRA의 조직구조는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 농림수산식품 관련 부서가 급격한 변화 겪은 시기를 중심으로 조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크게는 현재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창설된 2001년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2008년 이후 그리고 최근의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장차관 구성(Ministerial Team)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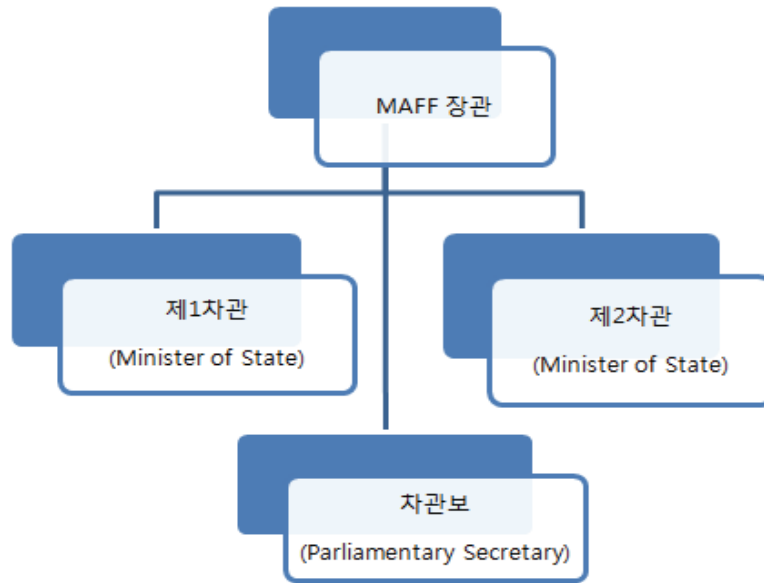
영국 농림수산 관련부서는 2001년까지 행정체계상 특정분야를 담당한다는 의미를 가진 'Ministry'로 불리다가 2001년부터는 여러 분야를 총괄하는 의미를 가진 'Department'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장차관의 명칭도 기존의 '장관(Minister)'에서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으로 변동되었다. 따라서 MAFF 시기와 DEFRA 시기로 구분하여 장차관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1) MAFF의 장차관 구성

MAFF에서는 1명의 장관과 2명의 차관 그리고 차관보으로 구성되었다. MAFF 장관(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은 EU의 농업각료회의에서 영국을 대표하여 참석하며 부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영국 국회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이기 때문에 분야별 세부 차관을 구성하면서 양원에서 각각 MAFF 정책을 대변하는 차관보를 임명한다. 차관들의 세부적인 담당 업무 영역은 신축적으로 변동된다. 제1차관(Minister of State)은 영국의 농업정책 전반을 관리하며 MAFF의 지역조직과 정책, EU 농업정책과 관련된 업무, 대외무역정책 및 수출, 경쟁문제 등을 담당한다.

제2차관(Minister of State)은 상원에서 MAFF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식품안전, 식품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 동물건강(BSE 포함), 농약 안전, 수의약품 및 식물 건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차관보(Parliamentary Secretary)는 하원에서 MAFF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산업, 동물복지, 영국 농촌개발정책을 포함하는 농촌지역 문제, 홍수방지 및 임업을 담당하며 녹색정책담당관(Green Minister)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4-26> MAFF의 장차관 구조 (2000년)

(2) DEFRA의 장차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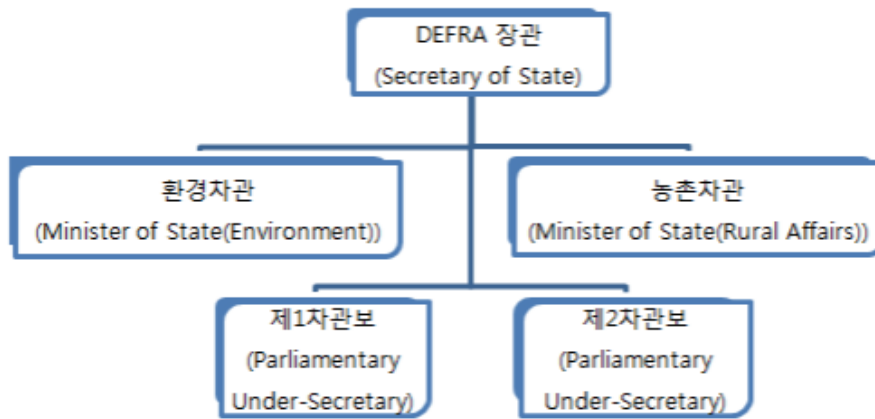
DEFRA로 확대 개편된 이후 DEFRA의 장차관은 장관 1명과 2명의 세부 분야별 차관 및 의회 대변인격의 차관보로 구성된다. 차관 및 차관보의 수와 업무 영역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2001년 DEFRA 출범시의 장차관 구성과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장관(Secretary of State)은 DEFRA의 모든 정책과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이며 EU 농업각료회의에 영국 대표자로 참석한다. 환경차관(Minister of State(Environment))은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환경 보호, 물 문제, 야생 동식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며, 특별과학연구농지관리(SSSIs) 정책과 우수경관보전지역(AONB) 정책을 담당하고 EU 환경각료회의에 영국 대표자로 참석한다.

한편 농촌차관(Minister of State(Rural Affairs))은 농촌문제, 전원관련 이슈, 농촌지역 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 농촌백서의 실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세부적으로 사냥관련 이슈, 기타 지역적 문제와 농촌개발정책의 실행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별히 DEFRA에서 e-비즈니스 관련 업무도 총괄하고 있다.

제1차관보(Parliamentary Under-Secretary)는 하원에서 MAFF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가축의 건강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동물 복지, 수산업(EU 수산각료회의 대표), 포경 활동, 산림 및 농업환경정책, 홍수 및 해안침식 대책 그리고 DEFRA의 행정체계 상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제2차관보(Parliamentary Under-Secretary)는 상원에서 MAFF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며, 식품, 농업, 원예 및 식품건강에 관한 업무 및 RPA와 내륙운하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림 4-27> DEFRA의 장차관 구조(2001-02년)

(3) DEFRA의 차관 구성 및 명칭의 변화

DEFRA의 장차관 구성은 위의 그림과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도 시기에 따라서 또는 정권 교체에 따라서 차관 및 차관보의 수와 담당업무가 변동된다.

2001년 이후 차관구성의 주요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3년의 변화

DEFRA 체계가 정착되어 가면서 차관과 차관보의 업무영역이 보다 구체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차관의 명칭이 ‘환경 및 농업환경차관(Environment and Agri-Environment)’으로 변동되면서 업무영역에서도 GMO, 식물종자, 농업환경, 유기농업,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녹색관련 장차관 위원회(Green Ministers)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농촌차관의 명칭도 ‘농촌문제와 도시지역 삶의 질차관(Rural Affairs and Urban Quality of Life)’로 변경되었고 농촌 및 지역계획 그리고 지방정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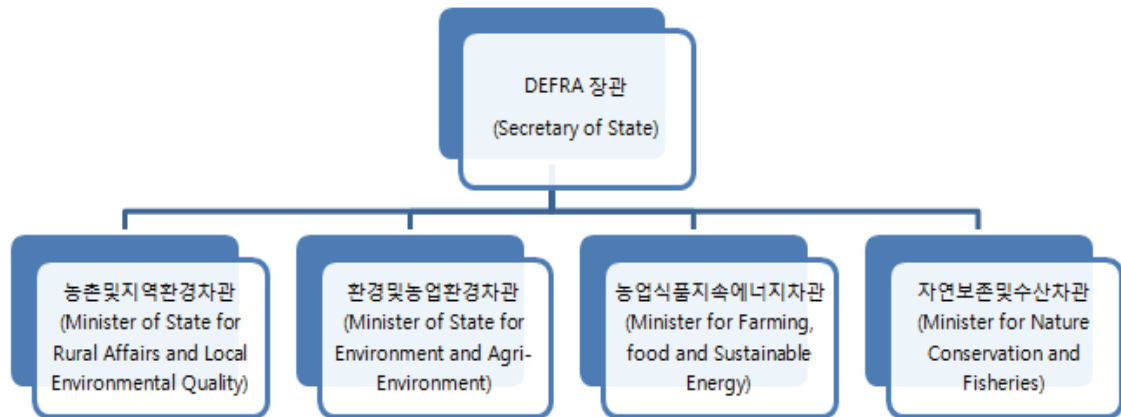
나. 2004년의 변화

차관보를 없애고 모두 차관으로 교체하는 조직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존의 제 1,2차관보를 모두 차관으로 격상시켜서 총 4명의 차관을 임명하고 이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분할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존의 ‘환경 및 농업환경차관(Environment and Agri-Environment)’의 명칭만 그대로 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경되었다. 농촌차관의 명칭이 ‘농촌문제 및 지역환경차관(Rural Affairs and Local Environmental Quality)’으로 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촌정책을 전담하도록 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농촌지역 환경자원 보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농업식품 및 지속에너지차관(Minister for Farming, Food and Sustainable Energy)’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연보전 및 수산차관(Minister for Nature Conservation and Fisheries)’를 신설하여 생물다양성, 유기농산물과

기타 검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림 4-28> DEFRA의 장차관 구조(2004년)

다. 2006년의 변화

2005년에는 장차관 구성의 변화가 없었으나 2006년에는 차관의 명칭과 담당업무의 변화가 나타나고 2006년 5월에 장관이 교체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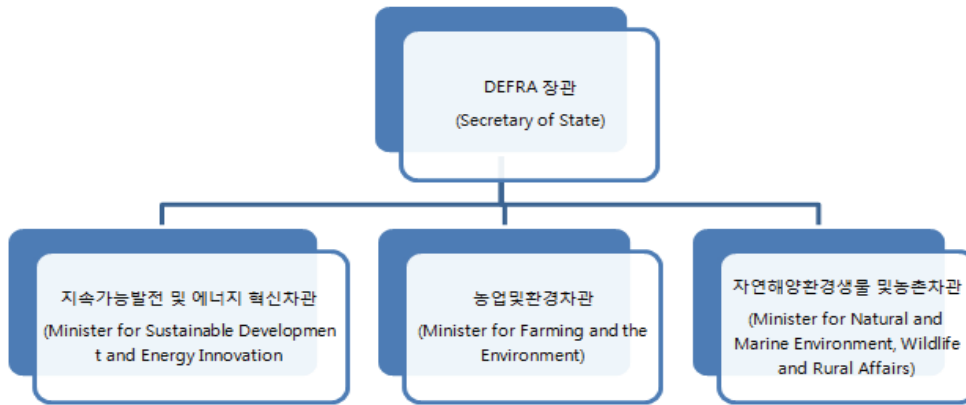
차관의 명칭변화를 살펴보면, ‘환경 및 농업환경차관(Environment and Agri-Environment)’은 ‘기후변화와 환경차관(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으로 변경되었다. ‘농촌문제및 지역환경차관(Rural Affairs and Local Environmental Quality)’은 ‘농촌문제, 경관 및 생물다양성차관(Rural Affairs, Landscape and Biodiversity)’을 변경되었으며, ‘농업식품 및 지속에너지차관(Minister for Farming, Food and Sustainable Energy)’은 ‘지속가능농업 및 식품차관(Minister for Sustainable Farming and Food)’으로, ‘자연보전 및 수산차관(Minister for Nature Conservation and Fisheries)’은 ‘지역환경, 수산 및 동물복지차관(Minister for Local Environment, Marine and Animal Welfare)’으로 변경되었다.

라. 2007-08년의 변화

2007년에는 2006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노동당 정권에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권으로 변경되면서 DEFRA의 장차관도 변화되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권에 따른 본격적인 정부구성은 2009년에 이루어진다.

마. 2009년의 변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권하에서 DEFRA 조직은 1명의 장관과 3명의 차관 체계로 변화되었으며 차관의 명칭은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 혁신차관(Minis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Innovation)’, ‘농업 및 환경차관(Minister for Farming and the Environment)’, ‘자연해양환경, 생물 및 농촌문제차관(Minister for Natural and Marine Environment, Wildlife and Rural Affairs)’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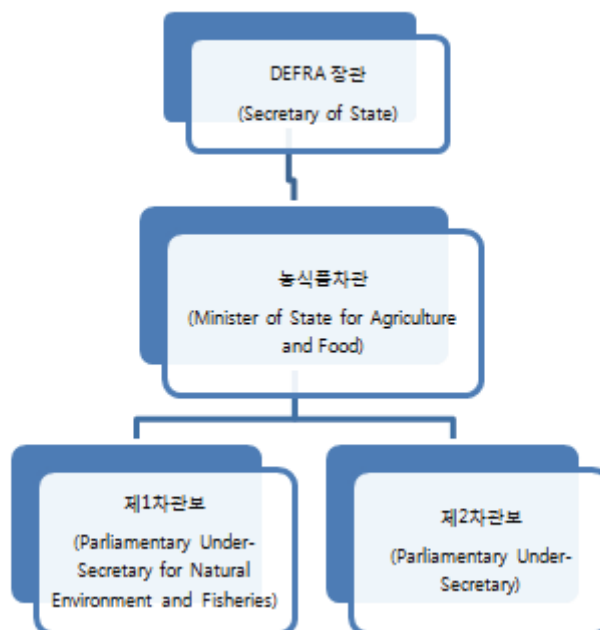
<그림 4-29> DEFRA의 장차관 구조(2009년)

바. 2010년의 변화

DEFRA의 장차관 체계를 장관 1명, 차관 1명, 차관보 2명의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이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차관(Minister of State for Agriculture and Food)은 농림업과 식품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며 단일보조금 제도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EU의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제1차관보(Parliamentary Under-Secretary for Natural Environment and Fisheries)는 하원에서 DEFRA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과 수산부문 정책을 담당하고 농촌사회발전에 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제2차관보(Parliamentary Under-Secretary): 상원에서 DEFRA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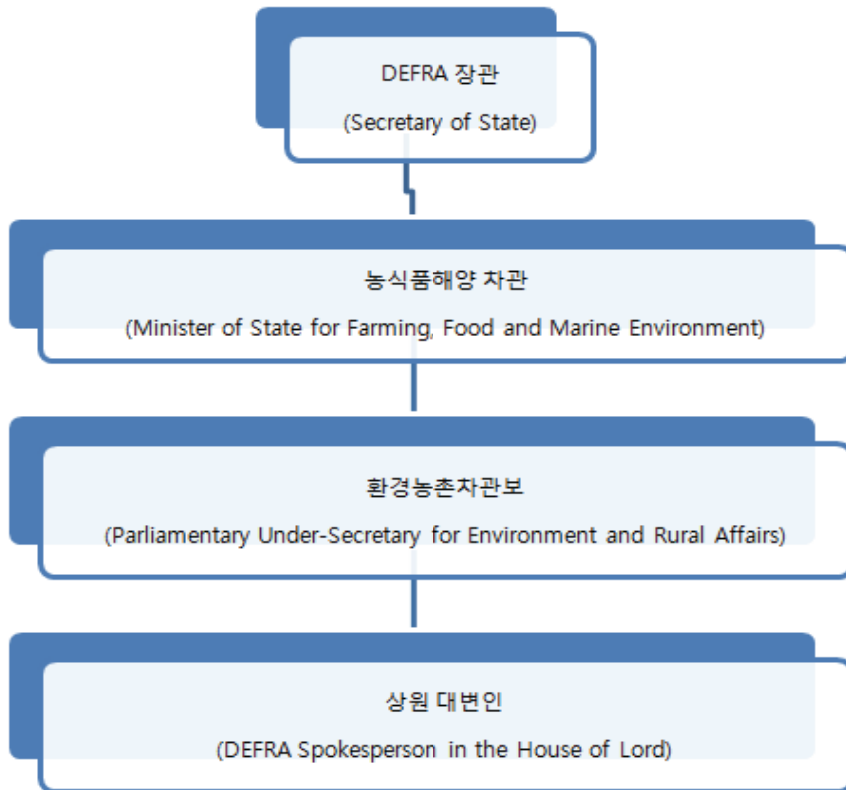
2010년에 변화된 장차관 구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차관과 차관보의 세부 명칭은 약간씩 변화가 있다. 2012년에 제1차관보의 명칭에 ‘물과 농촌문제(Water and Rural Affairs)’가 추가되었으며, 제2차관보의 명칭에도 ‘자원관리, 지역환경 및 환경과학(Resource Management, the Local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Science)’이 추가되었다.



<그림 4-30> DEFRA의 장차관 구조(2010년)

사. 2015년의 변화

2015년 5월부터는 차관 및 차관보의 명칭이 더욱 단순화되었고, 차관을 1명으로 줄였으며 대신 상원 대변인을 별도로 임명하였다. 농식품해양 차관(Minister of State for Farming, Food and Marine Environment), 환경농촌차관보(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로 변경되었다. 상원 DEFRA 대변인(DEFRA Spokesperson in the House of Lord)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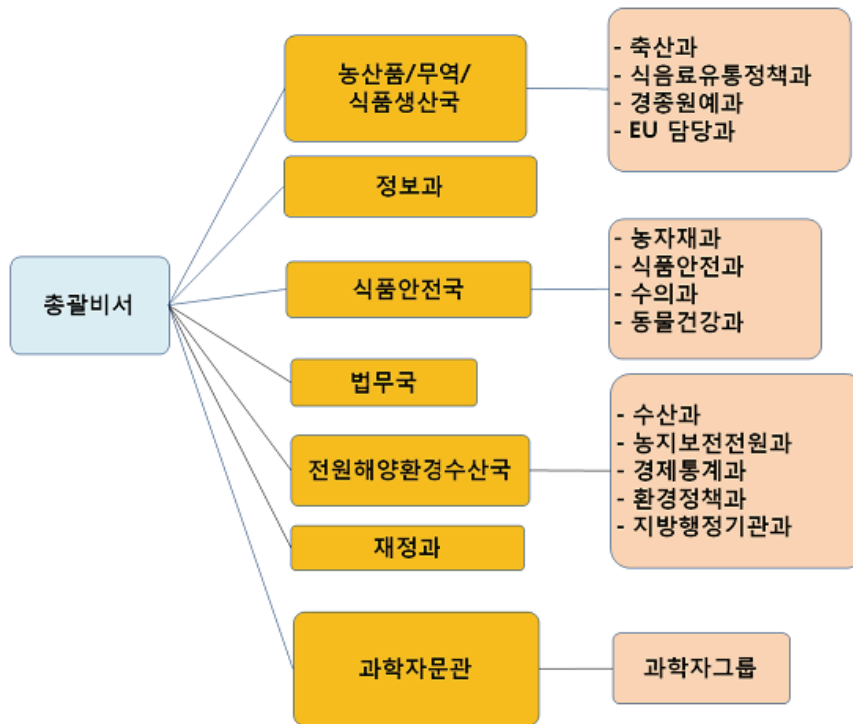


<그림 4-31> DEFRA의 장차관 구조(2015년)

3) 실무부서의 변화

(1) MAFF의 조직 구성(1994-1996년)

1996년 MAFF의 조직구조는 6개 국(Director General)과 총 17개 과로 구성된 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림 4-32> MAFF의 조직구조(1996년)

(2) MAFF의 조직 구성(2000년)

2000년은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바뀐 MAFF의 조직구조다. 6개 실국과 4개의 과 및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농업식품산업국(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Directorate)

농업식품산업국은 농업그룹(Agriculture Group), EU 및 국제정책그룹(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Policy Group), 지역서비스그룹(Regional Services Group), 식품산업/경쟁/홍수방지그룹(Food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Flood Defence Group), 경제통계그룹(Economics and Statistics Group)으로 구성되었다.

나. 동물건강환경국(Animal Health and Environment Directorate)

동물건강환경국은 환경그룹(Environmental Group), 동물건강그룹(Animal Health Group), 수의사실(Chief Veterinary Office), 집행기관청(Agency Chief Executives)으로 구성되었다.

다. 그 외 실과 그룹

위 두 국외에 수산비서실(Fisheries Secretary), 재정담당실(Principal Finance Officer), 형성그룹(Establishment Group), 과학자실(Chief Scientist), e-비즈니스과(e-Business Director), 정책기관전략팀(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Unit), 소통과(Director of Communication), 법무자문국(Legal Advisor and Solicitor)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보수당 정권하에서의 MAFF 조직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3) DEFRA의 조직 구성(2002년)

2002년 DEFRA의 운영이사회 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총괄비서(Permanent Secretary), 환경보호국장(Director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식품농수산물국장(Director General: Food, Farming & Fisheries), 토지이용농촌국장(Director General: Land Use & Rural Affairs), 과학국장(Chief Scientist and Head of Science Directorate), 동물건강복지국장(Chief Veterinary Office and Director General Animal Health & Welfare), 재정국장(Finance Director: Finance, Planning & Resources), 법무국장(Solicitor and Director General: Legal Service), 운영서비스국장(Director General: Operations & Service Delivery), 정책 및 전략과장(Director: Policy & Corporate Strategy Unit), 소통과장(Director: Communications), 3인의 비부처 공공법인대표들이다.

2001년 6월 DEFRA가 형성된 이후의 조직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환경보호국(Director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은 환경질과 폐기물과(Environment Quality and Waste), 기후/에너지/환경위험과(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al Risk), 환경보호전략과(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물토지과(Water and Land)로 구성되었다.

식품농수산물국(Director General: Food, Farming & Fisheries)은 EU 및 국제정책과(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Policy), 경제통계과(Economics and Statistics), 식품산업작물과(Food Industry and Crops), 지속가능농업축산물과(Sustainable Agriculture and Livestock Products), 수산과(Fisheries)로 구성되었다.

토지이용농촌국(Director General: Land Use & Rural Affairs)은 토지관리농촌개발과(Land Management and Rural Development), 야생생물전원홍수관리과(Wildlife, Countryside and Flood Management), 농촌경제사회과(Rural Economies and Communities)로 구성되었다.

동물건강복지국(Chief Veterinary Officer and Director General Animal Health & Welfare)은 수의실부국장(Deputy Chief Veterinary Officer), TSE국 (TSE Directorate), 동물건강(Animal Health), 동물건강복지계획과(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ning)로 구성되었다.

정책 및 전략과(Director: Policy & Corporate Strategy Unit)는 DEFRA 프로그램관리과(Developing DEFRA Programme Manager)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서비스국장(Director General: Operations & Service Delivery)은 중앙정부지역사무소농촌국장(Government Offices Rural Directors: 8곳), 정책추진체계개선과(Service Delivery Development Programme), 구지역조사연락팀(FMD Inquiry Liaison Unit), 과학연구기관관리청(Review of Science-based agencies), 국가수의관리과(Direct, State Veterinary Service), e-비즈니스과(e-business), 소통과 (Director of Communication), 전략서비스과(Corporate Service), 농촌개발서비스(Rural Development Service)로 구성되었다.

이밖에도 재정국(Finance Director: Finance, Planning & Resources), 과학자문관(Chief Scientist and Head of Science Directorate)이 있으며, 법무국(Solicitor and Director General: Legal Service)은 법무서비스A(Legal Service A), 법무서비스B(Legal Service B), 법무서비스C(Legal Service C)로 구성되었다.

DEFRA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행부서(Executive Agencies)로 6개 부서가 있다. 6개 부서는 환경수산양식센터(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제초제 안전국(Pesticides Safety Directorate), 농촌지불청(Rural Payments Agency: RPA), 중앙과학

실험실(Central Science Laboratory), 수의방역청(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수의의약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VMD))이다.

(4) DEFRA의 조직 구성(2010년)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연합정권을 구성하면서 DEFRA의 체계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정부조직의 개편이 정권이양과 동시에 바로 시행되지 못하여 완비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렸다. 2010년의 DEFRA 조직을 살펴보면, DEFRA의 운영위원회(Management Board)는 총괄비서 이외에 6명의 국장(Directors General)과 3명의 외부 기관장(Non-Executive Directors)로 구성되었다. 이는 총괄비서(Permanent Secretary), 녹색경제법인지원국(Director General: Green Economy and Corporate Services), 식품농업국(Director General: Food and Farming), 환경농촌국(Director General: Environment and Rural), 과학기술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 3명의 비부처 공공법인대표다.

DEFRA의 정책 및 행정의 집행은 6개 국(Group, Director General)과 총 23개 과로 구성된 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각 국별로 소수의 선임과장(Senior Responsible Owners: SROs)을 임명하여 각 국의 전체적인 정책사업의 구성을 책임지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각 국별 정책 실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국장들(Directors General)은 정책 수행과 재원 및 전반적인 실시체계에 대해 집중하도록 하고, 정책의 운영, 집행, 재정관리 등은 선임과장들(SROs)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6개 국과 23개 과는 녹색경제와 법인체지원국(Director General Green Economy and Corporate Services), 녹색경제프로그램과(Director of Green Economy Programme), 홍보과(Director of communications), 경제동향 및 성과분석과(Director of Performance: SRO), 전략적 재정지출 분석과(Director of Strategic Expenditure Review), 지원협력조정과(Shared Services Ongoing Activity), 재정과(Director of Finance), 법인체지원과(Director of Corporate Services), 정보통신과(Chief Information Officer), 공공기관협력조정과(Director of Arms Length Bodies and Estates)이다.

법무국(Director General Legal Group)은 법무과(Direct of Legal), 과학기술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은 과학기술자문과(Deputy Chief Scientific Adviser), 정보확산프로그램과(Director Data Sharing Programme), 식품농업국(Director General Food and Farming Group)은 식품체인 및 가축질병과(Director of Food Chain, bovine TB and endemic diseases), EU, 국제협력 및 동향분석과(Director of EU, International and Evidence Base), 기후변화, 외래질병 및 기관협력조정과(Director of Climate Change, Exotic Disease and Agency Relationship Portfolio), 미래농업, 동물복지 및 기타 협력과(Director of Farming for the future, Animal Welfare and Responsibility and Cost Sharing), 가축방역과(Chief Veterinary Officer)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농촌국(Director General Environment and Rural Group)은 수자원, 수해, 환경위험 및 법률과(Director of Water, Floods, Environmental Risk and Regulation),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 경관 및 여가, 농촌과(Director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Mitigation, Landscapes and Recreation, and Rural Affairs: SRO), 야생동물 및 전원과(Director of Wildlife and Countryside: SRO), 자원재활용프로그램 및 정책시행절차 개선과(Director of

Waste and Resources Programme & Delivery Transformation Programme), 해양수산물과 (Director of Marine and fisheries)로 구성되었다.

정책 및 인력개발지원국(Director General Policy and Support Career Home)은 정책인력개발지원과(Director of Human Resource)가 있다.

(5) DEFRA의 조직 구성(2015년)

2015년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여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DEFRA의 조직 체계도 이전과 변화 없이 그대로 구성되었다.

실무진의 구성을 살펴보면, DEFRA의 전반적인 전략과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는 DEFRA 이사회(DEFRA Board)는 DEFRA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분기별로 개최되며 기존의 운영 이사회(Management Board)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DEFRA 이사회는 장관, 차관, 차관보와 함께 총괄국장(Permanent Secretary) 이외에 3명의 국장(Directors General), 2명의 주요 담당관 및 4명의 외부 기관장(Non-Executive Directors)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총괄국장(Permanent Secretary), 운영기획국장(Director General: Chief Operating Officer), 국제생태안전국장(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and Biosecurity), 성과확산국장(Director General: Policy Delivery), 과학기술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er), 재정담당관(Director: Finance and Performance), 4명의 비부처 공공법인대표다.

DEFRA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4주에 한 번 씩 개최되며 정책의 이행 상황, 재정 및 성과, 그리고 각종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총괄국장(Permanent Secretary), 5명의 국장(Directors General)과 2명의 주요 담당관 그리고 4명의 외부 기관장(Non-Executive CEO)로 구성된다.

<표 4-55> DEFRA(환경식품농촌부) 본부의 조직도

총괄국장 (Permanent Secretary)	운영기획국장 (DG Chief Operating Offi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통상본부 (Head of Procurement and Commercial) - 재정과(Group Finance Director) - 인적자원과(Group HR Director) - 변화대응과(Transformational Change Director) - 통상자원 및 지식과(Director, Commercial Estates and Knowledge) - 기술지원과(Director, Chief Technology Officer) - CAP 정책감독과(Deputy Director, Assurance Director, CAP Delivery Programme)
	환경농촌국장 (DG Environment and R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질담당과(Director, Environmental Quality) - 자연환경정책과(Director, Natural Environment Policy) - 홍수 및 물 관리과(Director, Flood & Water) - 임시 ALB 추진과(Interim Director of ALB Transformation)
	전략국제식품 농업국장 (DG Strategy, International, Food and Far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건강과(Director, Animal and Plant Health) - 식품농업과(Director, Food & Farming) - 동향분석과(Director of Analysis) - 커뮤니케이션과(Director, Communication) - EU, 해양 및 국제협력과(Director, EU, Marine & International) - 전략기획단(Group Director, Strategy)
	과학기술자문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자문과(Deputy Chief Scientific Adviser) - 환경질관리과(Director, Environment Quality) : 공식중임

	(DG Chief Scientific Adviser);	
	수의국장 (DG Chief Veterinary Officer);	하위 부서 없음

4. DEFRA 예산과 인원 변화

1) 연간예산 변화

영국 DEFRA의 예산은 행정운영 및 정책사업을 위한 예산(Resource)과 부서의 각종 시설이나 자본투자 보조를 위한 예산(Capital)과 감가상각액(Depreciation)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예산은 각각 DEFRA 내부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는 부서지출예산(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과 연초에 국회를 통해서 확정된 액수가 배정되는 연간운영비(Annually Managed Expenditure)로 구분된다. 부서지출예산(DEL)은 영국 DEFRA가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며 이에 대해서 영국 재무부(Treasury)와 협의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 향후 3년 간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연간운영예산(AME)은 부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금이나 복지부담 비용으로서 DEFRA 예산에서 연간운영예산(AME)의 비중은 매우 작다.

사업 및 정책사업 중 부서지출예산(DEL)은 DEFRA의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 각종 사업비, CAP 정책 사업비, 그리고 각종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예산에는 DEFRA 산하의 각종 외청이나 비부처공공법인(NDPB)에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자본투자지출예산(Capital)은 DEFRA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고정자산비용(Fixed Assets)과 각종 자본투자보조금(Capital Grants)을 포함하는 예산이다. 이 예산도 역시 부서지출예산(DEL)과 연간운영예산(AME)로 구분된다. 예산 변화의 특징은 DEFRA 예산이 2001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산변화의 세부 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56> DEFRA 연간 예산 변화

단위: 천 £

구분	사업 및 운영예산			자본투자지출예산			감가 상각비 (C)	총지출예산 (A+B+C)
	부서지출 예산 (DEL)	연간운영 예산 (AME)*	소 계 (A)	부서지출 예산 (DEL)	연간운 영예산 (AME)*	소 계 (B)		
01~02	2,264,318	1,265,783	3,530,101	454,327	1,338	455,665	125,166	3,860,600
02~03	2,291,976	51,369	2,343,345	417,095	1,317	418,412	152,377	2,609,380
03~04	2,367,728	72,845	2,440,573	561,938	1,317	563,255	139,057	2,864,771
04~05	2,456,122	61,615	2,517,737	316,081	1,396	317,477	183,308	2,651,906
05~06	2,281,999	322,889	2,604,888	639,620	0	639,620	137,083	3,107,425
06~07	2,415,316	247,056	2,662,372	583,043	383	583,426	156,175	3,089,623
07~08	2,566,928	-16,654	2,550,274	556,923	232	557,155	211,893	2,895,536
08~09	2,411,651	-55,757	2,355,894	609,711	724	610,435	198,972	2,767,357
09~10	2,461,265	-72,856	2,388,409	692,953	657	693,610	244,539	2,837,480
10~11	2,375,824	-437,454	1,938,370	568,237	861	569,098	226,132	2,281,336
11~12	2,198,216	-53,380	2,144,836	385,228	35	385,263	213,136	2,316,963
12~13	2,054,683	-29,117	2,025,566	414,225	-1,274	412,951	209,573	2,228,944
13~14	1,951,279	-94,479	1,856,800	482,330	-743	481,587	217,604	2,120,783
14~15	1,906,615	77,998	1,984,613	638,011	1,637	639,648	278,809	2,345,452
15~16	1,776,674	390,741	2,167,415	529,472	242	529,714	180,362	2,516,767

주*) 연간운영예산은 이전 사업 예산의 이월 사용이나 환율에 따른 이익 등으로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Limits

자료: DEFRA, Annual Report and Accounts 각년도.

2) DEFRA 근무인원

DEFRA 인력은 본부인력과 DEFRA 내의 정책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 그리고 비부처공공법인(NDPB) 등으로 구분된다. DEFRA의 근무인원 통계는 본부와 정책집행기관의 인력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부와 정책집행기관의 지속적인 통합과 분리 등이 발생하면서 매년 많은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DEFRA 근무인원을 본부와 정책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면 그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57> DEFRA 근무 인력 변화

단위: 명

연도	구분	DEFRA 본부	정책집행기관	총 계
2000/01	정규직	6,855	3,014	9,869
	임시직	464	235	699
	총계	7,319	3,249	10,568
2001/02	정규직	7,970	2,373	10,343
	임시직	1,887	206	2,093
	총계	9,857	2,579	12,436

연도	구분	DEFRA 본부	정책집행기관	총 계
2002/03	정규직	10,034	2,516	12,550
	임시직	1,170	140	1,310
	총계	11,204	2,473	13,677
2003/04	정규직	10,132	2,594	12,726
	임시직	816	126	942
	총계	10,948	2,720	13,668
2004/05	정규직	9,732	2,710	12,442
	임시직	919	123	1,042
	총계	10,651	2,833	13,484
2005/06	정규직	9,326	2,668	11,994
	임시직	1,213	134	1,347
	총계	10,539	2,802	13,341
2006/07	정규직	8,604	2,704	11,308
	임시직	864	139	1,003
	총계	9,468	2,843	12,311
2007/08	정규직	8,572	2,664	11,236
	임시직	447	112	559
	총계	9,019	2,776	11,795
2008/09*	정규직	7,734	2,434	10,168
	임시직	225	86	311
	총계	7,959	2,520	10,479
2009/10	정규직	2,506	6,105	8,611
	임시직	44	79	123
	총계	2,550	6,184	8,734
2010/11	정규직	2,516	7,277	9,793
	임시직	362	489	851
	총계	2,878	7,766	10,644
2011/12	정규직	2,457	6,653	9,110
	임시직	119	112	231
	총계	2,576	6,765	9,341
2012/13	정규직	2,085	6,238	8,323
	임시직	73	176	249
	총계	2,158	6,414	8,572
2013/14	정규직	2,091	5,822	7,913
	임시직	73	278	351
	총계	2,164	6,100	8,264
2014/15	정규직	1,989	5,382	7,371
	임시직	91	318	409
	총계	2,080	5,700	7,780
2015/16	정규직	2,006	5,424	7,430
	임시직	98	236	334
	총계	2,104	5,660	7,764

주*) 우선 2009년까지의 통계는 연간 1,700 시간 근무를 1인당 정규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계산한 것이며, 2010년부터는 실제 근무 인원을 계산한 통계다.

자료: DEFRA, Annual Report and Accounts 각년도.

DEFRA 근무인력 변화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1995년 4월에 축산물위생부(Meat Hygiene Service)³¹⁾에서 약 900명의 새로운 인력이 고용되었으며 이 인력은 2000년 4월 식품표준청이 설립되면서 모두 이동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DEFRA 인력에서의 감소가 나타났다.

2001년에 임시직 고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 것이다. 또한 2001년 6월에 DEFRA가 새롭게 창설되면서 기존의 환경교통지역부(DETR)에서 약 650명의 인원이 DEFRA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외에 본부와 정책집행기관 간의 인력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인원의 변동이 매년 나타나게 된다.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총선거 이후 정권이 바뀌면 정책운영 방식이 모두 바뀌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DEFRA 근무인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운영방안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정부부처 근무인원에 대해서 정책사업별로 신축적인 고용 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는데, 정책사업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고용도 함께 종료되고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추어 다시 고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전체적인 근무인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에너지환경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가 새로운 정부부처로 신설되면서 약 320명의 DEFRA 인력이 이동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44명의 DEFRA 본부 검역관이 정책집행기관으로 이동하고, 100명의 법규관련 직원이 재무성으로 이동하였으며, 99명의 지역발전청 근무인원이 새롭게 DEFRA 본부로 들어왔다. 이외에도 DEFRA 본부와 산하 기관 간의 인력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5. DEFRA 창설 과정을 통해서 본 시사점

DEFRA의 창설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2001년 2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노동당 공약에서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 MAFF의 명칭 및 기능변경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째, 환경규제를 농촌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중반 농촌지주연합회(CLA)가 당시 환경부가 갖고 있는 농촌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MAFF로 이관해서 지역적, 통합적 관점의 농촌부(Department of Rural Affairs)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환경보전, 농촌계획, 지방의 자율성 등의 문제를 농업적 관점이 아닌 영역적(Territorial)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개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비농업적 경제활동 지원 및 농민들에게 대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 등의 조치들이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부처 중 특정 산업부문(농업)을 부처 이름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부’가 유일하며 이는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31) 축산물위생부(Meat Hygiene Service)는 2000년도에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가 창설되면서 통합되었다.

셋째,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농업비중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했다. 1990년대 중반 귀촌인구의 증가(역도시화)에 따른 농촌 내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농촌지주 연합회(CLA)에서 다시 한 번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다룰 수 있는 정부 부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1995년). 1999년 농촌에서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농촌인구 중 5%에 불과하였다.

넷째,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지역적 통합적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초반 농업 이외의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도시재생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 통합적(Territorial and Integrated) 관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부처 지역사무소 개설(Government Office For Region)도 현실화 되었고, 농림수산부의 지역적 관점 채용에 대한 압박 증가되었다.

다섯째, 광우병 이후 식품분야에서도 통합적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광우병(BSE)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식품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의 창설로 현실화 되었다. 또한 농업부문과 농업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MAFF 정책 결정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여섯째, EU 차원의 공동농촌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0년 CAP 개혁과정에 제기된 CAP의 CRP(Common Rural Policy)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7년 EU의 농업경제학자 20여명이 제안한 소위 ‘버크웰 보고서’에서 농업보호적인 CAP를 개혁해서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포괄하는 ‘공동농촌정책’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자제하는 측면에서 ‘공동농업농촌정책(Common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다.

일곱째, 구제역의 확산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이 제안되었다. 2001년 영국 전역으로 확산된 구제역의 영향에 대한 전국적인 의견수렴결과가 ‘커리 보고서(Curry Report)’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의 형성을 위해 농업관련 기관들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면서 현재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로 변경되었다.

제7절 주요 국가의 농정변화 요약

1. 주요 국가의 농정변화 요약

1)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지향하는 일본

일본은 농업농촌 정책의 커다란 전략을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본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첫째, 식문화·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통한 국내외 수요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산물 생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도시농업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농업위원회 및 농협개혁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약화 하는 생산현장의 강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농림수산업 조직과 인력은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예산은 새로운 기반정비 사업과 농산어촌 활성화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2015년도의 대규모 조직·인력개편 이후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아베 정부의 농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에 따른 ‘강한 농림수산업 기반 만들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업농촌정비사업(대구획 토지개량)에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기업의 자본과 기술·노하우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기반정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및 마을소멸을 막기 위한 직접지불 및 다면적 기능지불교부금 등 농산어촌 활성화 및 지속성에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 농업의 현대화가 최대 목표인 중국

농업현대화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4화동보(四化同步)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서 최우선 국정 과제이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중앙1호문건의 키워드로 등장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다.

농업현대화 계획은 농정의 4대(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유통) 축과 관련된 추진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농업분야 적용을 위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인터넷과 농업의 결합, 농업의 6차 산업화, 뉴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내수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농민재산권제도 개혁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직은 2013년 개편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관련 업무 추진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조직 개편에서는 농업관련 업무 담당 중앙 행정부처를 농업부로 일원화하는 조직체계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미국 농업법의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재정적자 압박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환경보전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셋째,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산 지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SDA의 부서들은 할당예산과 인력이 비례하지 않는데, 지급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는 예산이 많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되어있고, 서비스 업무를 하는 부서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있지만 사용예산이 크지 않다. 2016 회계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분야는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 분야(69.52%), 그 다음으로는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15.36%) 분야다.

지급업무 위주인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분야의 인력 비중은 1.7%이고,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분야의 인력 비중은 5.8%로 나타나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자원은 많이 필요한 반면 인력 수요는 적은 편이다.

반면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인력의 비중이 높다. 자연자원보전의 경우, 예산은 7.4%, 인력은 44.6%, 검역과 검사 분야는 예산의 1.85%, 인력의 11.7%, 식품안전관리는 예산의 0.67%, 인력의 9.2%, 연구 분야는 예산의 2.24%, 인력의 8.5%를 차지하여 할당 예산 비중은 작으나 인력비중은 높은 모습을 보인다.

USDA는 추세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농업법이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부분의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서비스 업무의 비중이 커 앞으로 USDA의 고용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USDA의 사업 중에서는 사실상 복지기능을 하는 것이 많다. 사실상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 농업법과 정책목표에 농업의 일자리 창출이 언급되고, 빈곤지역의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점을 들어 빈곤개선을 위한 농촌개발도 언급하고 있다.

USDA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어 식품구입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하고 식품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체다. USDA는 또한 지역개발을 하며 주택자금과 농촌에 통신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회사에 용자를 하기 때문에 빈곤지역의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주체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DA는 농업과 농산물의 유통 관리 뿐 아니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의 식품소비까지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4)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독일

2010년대 독일의 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체화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의 초기 단계 농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성 조사에 역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 또한 바이오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원료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현행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2000년대 초반 광우병 파동으로 기존의 농림수산 업무에다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가되어 2013년 초반까지 이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2013

년 이후에도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는 BMEL이 계속 담당하고 있다.

농업·농촌분야의 업무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림업 생산에서 기존의 기본원리인 경쟁력 강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본원리로 지속가능성이 대두되고 점차 농림업 생산을 포함하는 농정 전반의 가장 주된 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연방정부의 농림식품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정책이며, 그 다음이 주정부와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는 농업구조개선 공동임무(GAK)다.

5) 농가 소득안정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쓰는 프랑스

프랑스 농업은 EU의 확대,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기업적 논리의 수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에너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활동이 새로운 가치 창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의 유지와 창출, 근거리 사회적 활동망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농정은 다른 영역의 공공정책과 함께 국가정책 목표에 보다 합리적으로 부합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분권화된 서비스의 개혁, 근접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프랑스와 유사한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유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와 자연자원의 보호, 식품의 위생안전을 위한 인지와 예방, 감독체계의 확충, 농업후계 인력 육성 등이 농정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6) 농촌공간을 중시하면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영국

DEFRA의 창설은 환경규제를 농촌관점에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즉, 환경보전, 농촌계획, 지방의 자율성 등의 문제를 농업적 관점이 아닌 영역적(Territorial)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제시되었다.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비농업적 경제활동 지원 및 농민들에게 대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 등의 조치들이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광우병에 따른 식품분야에서도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광우병(BSE)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식품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농식품 관련 기능 조정에 주는 시사점

1) 농업·농촌 정책방향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 본 국내외 환경변화와 외국의 농업·농촌정책의 변화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농촌 내·외부의 환경변화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 농업·농촌에서 잘 활용하여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외부의 환경변화는 첫째,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둘째, 저성장 시대의 경제, 사회적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며, 셋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넷째, 신농업(New Agriculture)의 도래와 농업·농촌 부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될 것이며, 여섯째,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치 증대도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식품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농촌 내부의 환경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공동화·고령화 심화로 농촌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가 전망되고 있다. 셋째, 도농 소득 격차 심화도 전망되며, 넷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정과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에 대해 국민들은 가치는 인정하나 지원에 대한 의지는 크게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정책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농촌의 정책에서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을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

둘째, 농업·농촌과 함께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농정 고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하에서 안전한 농식품, 환경유지, 농촌다움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농정 고객을 국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격, 수급, 경쟁력 등 기존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 농산물 공급 또는 소비량, 농산품 품질 등 농산물 자체와 그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농가는 자본재 등이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대체해야 하는 투입재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생산주체 또는 농촌을 유지시키는 국민으로서보다는 농산물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 소비주체로 간주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동안 많은 전문가 또는 정책담당자는 구조조정 농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영세소농, 고령농 등은 농업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농업에서 퇴출하고 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복지정책을 통해 보상해주면 되는 정책대상으로 간주했다. 농업인과 농가를 농촌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

는 사회적 주체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체들이 농업·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소득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다수의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은 소득 수준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두어 다른 요인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경향이 있다. 삶에 대한 만족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취업 여부, 사회의 불평등, 정치참여, 자율적 의사결정, 공동체 활동, 가족 및 주변 관계, 절차적 효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삶의 질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업·농촌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은 ‘농촌’이라 부르기 어려우며,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그 가족이 극소수라면 농촌이라는 공동체사회 역시 유지되기가 어렵다. 또한 농업 외에 농촌 지역의 경제·환경·사회 유지 없이 농업이라는 경제활동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환경 개선, 농촌공동체 유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보상 차원에서의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 요청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민지지 차원의 정당한 대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국민들에게 농업이 어려우니 지원해달라는 일종의 호소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농업·농촌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한 농산물,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따뜻한 삶의 공동체 등 다양한 가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관련종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2) 예산과 조직에 주는 시사점

(1) 농업·농촌 부문 정부 예산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나라와 감소하는 나라로 양분되는 반면 예산 비중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농가소득 안정, 다원적 가치 증진, 식품안전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나라는 프랑스 뿐이고, 대부분 나라에서 농업·농촌의 예산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예산이 증가하는 분야들이 있다. 농가소득 안정은 가장 중요시 하는 분야이며, 다원적 가치와 식품안전에 대한 분야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영양 분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수출과 6차 산업화, 독일과 프랑스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분야별 중요도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 영국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및 식품안전에, 중국과 일본은 수출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농업주체에 지급되는 보조금³²⁾에 대체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 미국도 복지성격인 SNAP 예산을 제외하면 농가지원에 가장 많은 예

산을 할당하고 있다.

농가지원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는 것은 국제농산물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있고, 농업시장이 개방되며 농가의 정상이윤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지불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4-58> 나라별 농업·농촌 관련 중앙부처 예산

(단위: 백만 달러, 억엔, 백만 유로, 천£, 억 원, %)

인력	미국		일본		독일 ¹⁾		영국 ²⁾		프랑스		중국		한국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인원	비중
2002	68,735	3.42	31,905	3.8	-	-	-	-	-	-	-	-	-	-
2003	72,390	3.35	31,114	3.8	-	-	-	-	-	-	-	-	-	-
2004	71,769	3.13	30,522	3.5	-	-	-	-	-	-	-	-	-	-
2005	85,284	3.45	29,672	3.4	-	-	3,158,754	-	-	-	-	-	-	-
2006	93,533	3.52	27,783	3.3	-	-	3,245,798	-	-	-	-	-	-	-
2007	84,435	3.09	26,927	3.2	-	-	3,107,429	-	-	-	-	-	148,277	5.77
2008	90,796	3.04	26,370	3.0	-	-	2,966,329	-	-	-	2,772.3	1.44	131,899	4.37
2009	114,440	3.25	25,605	2.5	-	-	3,082,019	-	3,557	0.91	3,101.0	1.39	151,918	5.18
2010	129,460	3.74	24,517	2.5	-	-	2,690,399	-	4,044	0.98	3,817.2	1.58	159,856	5.17
2011	139,396	3.87	22,712	2.1	-	-	2,778,556	-	3,669	1.00	4,058.9	1.59	160,250	4.93
2012	143,642	4.06	21,727	2.2	-	-	2,660,075	-	3,771	1.00	4,834.9	1.62	174,797	5.11
2013	155,872	4.23	22,976	2.4	-	-	2,508,021	-	3,358	0.85	6,014.5	1.82	157,282	4.42
2014	141,808	3.75	23,267	2.4	-	-	2,347,799	-	3,195	0.78	6,268.3	1.71	160,198	4.27
2015	139,115	3.56	23,090	2.4	5,245.5	-	-	-	2,923	0.74	6,147.7	1.50	185,389	4.80
2016	153,773	3.76	23,091	2.4	5,595.2	-	-	-	2,717	0.66	6,087.3	1.48	-	-
2017	151,484	3.57	23,071	2.4	-	-	-	-	3,346	0.78	-	-	-	-

주 1) 2015년 수치는 결산 기준, 2016년 수치는 예산기준임.

2) 2007-08 회계연도의 예산을 2007년으로 기록함.

3) 예산액은 DEFRA 지출예산, EU 보상금액,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포함함.

4)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종사자 중 농업교육 종사자수 18,062명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개산결정 개요, 각년도

자료: DEFRA, Annual Report and Accounts 각년도.

자료: USDA budget summary, 각 년도. 검색일: 2017. 2. 15.

자료: BMEL(2017) Einzelplan 10

자료: 프랑스 재정부,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CHIFFRES CLÉS DU PLF 2017 www.performance-publique.gouv.fr

자료: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17. 6. 2.

32) 독일과 프랑스의 직접지불 및 시장지원 예산, 중국의 국영농장 및 기술보급, 병충해방제 예산이 이에 해당된다. 영국, 일본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영국도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비슷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또한 최근의 정부정책방향이 농가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농가지원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농업·농촌 부문 정부 조직과 인력부문

가. 조직

농정관련 중앙부처의 조직은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정조직은 식품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환경문제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들이 중요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독일과 일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는 2002년부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곳은 생산물 안전 및 현신국, 식생활안전국, 동물보건 및 보호국이다.

일본은 2015년 농림수산성 조직을 개편하면서 소비안전국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소비안전정책과, 표시규격과, 소비자정보관, 소비자행정과에서 담당하던 식품안전정책을 식품안전정책과로 일원화하였으며, 식품안전기술실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총괄토록 하였다.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서들도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 영국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지속가능성이 농정의 핵심 키워드다. 2002년부터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속가능 농림업정책실인데 이 실에 속해 있는 지속가능 및 신재생원료국에서 지속가능성, 기후보전, 생물다양성, 환경자원보존, 바이오에너지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2001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환경식품농촌부로 개명하면서 농촌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농촌국을 신설해서 환경의 질, 자연환경정책, 물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나. 인력

농정관련 중앙부처의 인력은 규모와 비중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교육, 식품 안전성, 복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분야는 인력투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조직과 인력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미국은 추세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농업법이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의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03년을 정점으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9년에 1만 명 이내로 감소하면서 현재 7천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인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농업·농촌 인력 중 농업기술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대상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농촌개발(농업 기술교육 등), 검역(식품안전, 위생, 동식물질병관리), 산림관리 등이었다. 위 분야는 대체적으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통신기술과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제한된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력이 많은 분야일수록 재정절감을 위한 인원감축 압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2001년 구체역 발생 이후 현장대처활동을 위해 임시직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미국의 산림청도 기후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

다. 또한 농촌개발 분야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결국 농업 관련 공무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현장서비스 제공분야는 늘어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방향과 특정 분야에 대한 인력 배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령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특정 과단위의 인력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력운영은 비슷하지만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관리와 집행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스며들게 하고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표 4-59> 나라별 농업·농촌 관련 중앙부처 인력

(단위: 명, %)

인력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02	-	-	-	-	-	-	13,677	-	-	-	-	-	3,689	
2003	107,204	3.91	-	-	-	-	13,668	-	-	-	-	-	3,725	
2004	106,186	3.91	-	-	-	-	13,484	-	-	-	-	-	3,745	
2005	104,989	3.88	-	-	-	-	13,341	-	-	-	-	-	3,810	
2006	101,887	3.77	29,433	4.8	-	-	12,311	-	-	-	-	-	3,993	
2007	99,629	3.70	-	-	-	-	11,795	-	-	-	-	-	3,999	
2008	98,720	3.62	26,954	7.6	-	-	10,479	-	-	-	-	-	5,094	
2009	97,803	3.49	25,751	7.5	-	-	8,734	-	34,597	1.64	-	-	4,901	
2010	106,867	3.76	24,634	7.3	-	-	10,644	-	33,476	1.67	98,633	-	4,863	
2011	103,881	3.68	-	-	-	-	9,341	-	32,420	1.65	93,041	-	4,928	
2012	99,503	3.60	-	-	-	-	8,572	-	31,789	1.65	103,105	-	4,942	
2013	95,223	3.49	22,733	6.8	-	-	8,264	-	31,007	1.63	101,939	-	3,209	
2014	-	-	22,379	6.6	-	-	7,780	-	31,000	1.64	93,531	-	3,235	
2015	-	-	22,000	6.4	5,019	-	7,764	-	31,035	1.64	86,846	-	3,239	
2016	-	-	21,667	6.3	-	-	-	-	30,497	1.60	88,375	-	3,236	
2017	-	-	21,341	-	-	-	-	-	30,530	1.58	-	-	3,339	

주) * 2009년 4월에 DEFRA 인원 170명 소속 변경

주2) 일본의 인력은 농림수산성과 임야청, 수산청 인원을 포함한 숫자임.(비중은 전체 일반직국가공무원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주3)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소속기관 인원만 포함된 숫자임(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인원은 제외)

자료: DEFRA, Annual Report and Accounts, 각년도,

자료: OPM.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자료: BMEL(2017) Einzelplan 10

자료: www.performance-publique.gouv.fr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조직·정원 각년도 자료, 검색일(2017.3.31.)

3. 국외 사례 시사점

위의 국외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조직은 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통합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일본은 수출기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농업 수출을 위해 비관세장벽과 무역협정에 대응 조직 신설 및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독일이나 일본은 농식품 관련부처의 소

비안전국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많았다.

과거와 달리 지속가능성, 기후보전, 생물다양성, 환경자원보존, 바이오에너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독일은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담당하는 실·국(제5실) 설치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정 추진에서 전략적 콘셉트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이 주목할 점이다. 영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환경보호국과 반려견 관련 동물건강복지국을 설치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예산측면에서 농가소득 안정, 다원적 가치 증진, 식품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유럽국가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및 식품안전에 예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은 수출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예산비중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농업주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체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다.

인력개발에 있어서 재정절감에 따른 인력감축과 함께 기술을 통한 인력감축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또, 식품안전성, 복지 인력에 대한 투입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농촌개발, 검역과 방역 등 안전부분의 인력도 증가하고 있었다.

국외사례 분석 결과 조직 재설계에 주는 개선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감축관리, 기술 환용이 요구된다. 본부보다는 현장중심의 인력이 확대로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기능을 강화하고, 통상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농촌과 타분야의 협업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0> 국외사례의 조직재설계 개선안 도출

분야	국외사례 주요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통합 정책으로 전환 ✓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능 확대(일본) - 비관세장벽과 무역협정에 대응 조직 신설 및 통합(미국) - 소비안전국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일본),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 연방식품농업부 담당(독일) -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체계 구축(중국) ✓ 지속가능성, 기후보전, 생물다양성, 환경자원보존, 바이오에너지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담당하는 실·국(제5실) 설치(독일) - 농정 추진에서 전략적 콘셉트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독일) - 환경보호국과 동물건강복지국(영국)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 안정, 다원적 가치 증진, 식품안전의 중요도 ↑ ✓ 독일, 프랑스, 영국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및 식품안전 ✓ 중국과 일본은 수출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 ✓ 농업주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체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 ✓ 농업시장이 개방 →농가의 정상이윤↓ → 보조금지원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식품 안전성, 복지 인력투입 증가 ✓ 농촌개발(농업 기술교육 등), 검역(식품안전, 위생, 동식물질병관리), 산림관리 ✓ 재정절감에 따른 인력감축을 위해 기술 적용의 확대 ✓ 현장서비스 제공분야 업무 증가

분야	국외사례 주요내용
<개선사항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확대 ●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농정 고객을 확대 ●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방향으로 가야 함 ● 소득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 ● 농업·농촌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 ● 보상 차원의 지원 요청이 아닌 경제·사회·환경 책임 완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 요청 	
<조직설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설계의 핵심 단어: 지속가능성, 감축관리, 기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의 인력확대와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 - 통상 및 수출촉진 기능 강화 - 농촌과 타 분야와의 협업 기능 강화(사회혁신 등 국정과제와 연계) 	

<표 4-61> 국가별 분석결과(요약)

국가	항목	국외사례 주요내용
일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액 및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 ✓ 농업자의 고령화 ✓ 경작방치면적의 증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체제 강화 ✓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농지의 대구획화 및 유지보전을 하는 국영토지개량사업의 체제강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관한 재해대책 체제의 강화를 추진 ✓ 규모화·단지화를 통한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기업의 자본과 기술·노하우를 접목한 스마트농업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정비 사업을 통해 일본 농업을 새롭게 발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능 확대: 수출촉진심의관,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총괄하는 수출전략조사관, 쌀 수출촉진을 담당하는 미곡무역기획실장을 설치 ✓ 내각부 식육추진사무의 농림수산성 이관: 소비·안전국의 소비자행정과를 소비자행정·식육(食育)과로 개조 ✓ 사이버보안대책에 관한 강화: 대신관방에 정보시규리디·정보화추진심의관설치 ✓ 소비안전국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2015년): 소비안전정책과, 표시규격과, 소비자정보관, 소비자행정과에서 담당하던 식품안전정책을 식품안전정책과로 일원화 ✓ 식품안전기술실을 신설: 식품안전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총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개량(농업·농촌 정비) 관련 사업비 등 농업부문의 체질 강화 시책에 중점적으로 배분 ✓ 농업농촌정비사업(대구획 토지개량)에 예산 확대 ✓ 6차산업화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에 예산 편성 ✓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및 마을소멸을 막기 위한 직접 지불 및 다면적 기능지불 교부금 편성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부문의 인력 증가
중국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농문제 ✓ 농업현대화 ✓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

국가	항목	국외사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조사료 공급 부족 - 돼지와 초식가축 위주의 축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현대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 업그레이드, ▲농업 과학기술 혁신 강화, ▲농림어업 서비스산업 체계 개선 ✓ 소득원 창출: ▲농업소득 증대, ▲임금소득 증대, ▲이전소득 증대 ✓ 농촌복지 향상: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강화, ▲농업·농촌 환경 정비 ✓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업경영제도 공고화, ▲도농 통합발전 체계 구축, ▲현(縣)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부 산하의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을 국무원 직속의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으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식품안전 위험평가 및 표준제정 업무 담당 ✓ 농업부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양식업 생산물)의 품질안전관리감독은 농업부가 담당 - 가축·가금의 도축단계와 신선 원유 수매단계의 품질안전 관리감독 - 수의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그리고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제의 품질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62.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정부 예산 비중: 1.4~1.8% 수준) ✓ 국영농장시스템 운영 비용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사업, 보조금사업, 토지정리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산물 품질안전관리감독사업, 병충해방제사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만 명 수준(2016년 기준)
미국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보호 ✓ 국가 재정 절감 ✓ 생산 과잉 ✓ 국민 영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내 농업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강화 ✓ 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촉진 목적의 국민영양지원, 그리고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목적 ✓ 농촌개발, 바이오에너지, 원예 및 특수작물, 연구개발 정책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의 정책강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세장벽과 무역협정에 대응하는 무역전담부서인 통상 전담 차관(Under Secretary for 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TFAA)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FAS에 소속되어있던 FAS, FSA, RMA는 해외무역관련 기능을 가진 FAS와 국내 농산물 생산자 대응기능을 가진 FSA, RMA가 분리 ✓ 농촌개발부(Rural Development)를 장관(Secretary) 직속으로 개편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62.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정부 예산 비중: 1.4~1.8% 수준) ✓ 국영농장시스템 운영 비용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사업, 보조금사업, 토지정리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산물 품질안전관리감독사업, 병충해방제사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는 예산이 많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 서비스 업무를 하는 부서는 인력을 많이 배치 ✓ 환경보전, 산림관리, 농촌개발 부문의 인력 증가
독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차원에서 기존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직접지불제를 채택 ✓ 자유무역체제의 등장 ✓ 유럽의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독일농정의 전환(Agrarwende)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체화·확산

국가	항목	국외사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성 조사에 역점→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지원 - 바이오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원료작물의 재배 장려 √ 농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국민경제에 참여 -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식료 조달 - 농업의 자연적, 경제적 불이익 보정 - 생산성 향상 - 농업종사자의 사회적 상황을 비교가능한 직업군 종사자 수준에 매칭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는 연방식품농업부(BMEL)이 담당 √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담당하는 실·국(제5실) 설치 √ 농정 추진에서 전략적 콘셉트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수립 업무와 농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결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식품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정책과 농업구조개선 √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투자와 신재생원료작물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인력	
프랑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농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세 가지 사회적 역할(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농업정책이라는 공공개입수단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정책수행 메커니즘 √ 새로운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기업적 논리의 수용 -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술혁신 -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 에너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활동이 새로운 가치 창출 -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의 유지와 창출 - 근거리 사회적 활동망의 유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농림수산부 √ 미래비전: '경쟁력 있고, 생존 가능한(viable) 농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위상 유지 - 식품안전성, 동물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 - 연구·교육·개발활동의 시너지 극대화 - 농촌 및 산림공간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랭드 정부(2012년)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성 분야가 농업식품산림부로부터 분리되어 국토정비부로 이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연구분야(34.4%), 농업정책 지원(12.7%), 식품위생안전(9.9%), 지속가능발전과 경제(37.5%), 산림(5.5%)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 √ 농업·농촌 인력 중 농업기술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
영국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분야와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 농촌계획, 지방의 자율성 등의 문제를 농업적 관점이 아닌 영역적(Territorial)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 -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개발 -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도시재생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 통합적(Territorial and Integrated) 관점 정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창출 √ 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보장

국가	항목	국외사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을 위해 적합한 기준 설정 √ 강한 농촌 커뮤니티를 형성 √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원지역 조성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국과 동물건강복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국(Director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은 환경질과 폐기물과 (Environment Quality and Waste), 기후/에너지/환경위험과(Climatic, Energy and Environmental Risk), 환경보호전략과(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물토지과(Water and Land) - 동물건강복지국(Chief Veterinary Officer and Director General Animal Health & Welfare)은 수의실부국장(Deputy Chief Veterinary Officer), TSE국 (TSE Directorate), 동물건강(Animal Health), 동물건강복지계획과(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ning)로 구성 √ 2000년 4월 식품표준청 설립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관련된 예산 증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고용도 함께 종료되고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추어 다시 고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 √ 본부와 정책집행기관의 지속적인 통합과 분리 등이 발생하면서 매년 많은 변동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환경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가 신설되면서 약 320명의 DEFRA 인력이 이동 - 2011년에는 44명의 DEFRA 본부 검역관이 정책집행기관으로 이동하고, 100명의 법규관련 직원이 재무성으로 이동, 99명의 지역발전청 근무인원이 새롭게 DEFRA 본부로 이동

제5장 직무 분석

제1절 직무 분석 개요

1. 분석의 개요

1) 직무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 직무 값과 업무의 비율을 기준으로 단위 업무당 직무량을 도출하고, 적정 직무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1manpower란 1명분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단위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예. A 직무의 manpower가 0.3일 경우 0.3명분의 업무량을 요구하는 직무로 해석)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과장급 이하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업무량은 응답자의 총 업무량(100%) 중 단위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다.

중요도는 단위 업무별 결재 책임자의 직급으로 측정하였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무의 중요도는 증가한다고 보았다(1점 “담당 이하”, 2점 “과장급 결재”, 3점 “실/국장급 결재”, 4점 “차관급 결재”, 5점 “장관급 결재”). 또한 전문성 요구정도는 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1점 “6개월 미만”, 2점 “6개월-1년” 3점 “1년-3년”, 4점 “3년-5년”, 5점 “5년 이상”). 그리고 업무특성은 조직 내부고객 대상, 외부고객 대상 여부로 측정하였다(1 “내부고객”, 2 “외부고객”, 3 “내외부고객”, 4 “해당 없음”).

3) 직무량 산출

기준근로시간을 1,968시간(52주×5일×8시간)으로 잡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2016년도 기준 공휴일 14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제외한 뒤 1 manpower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응답자 개인의 초과근로시간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016년도 기준 각 부서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기준근로시간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 때 응답자의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과 부서의 초과근로시간 평균 값의 합이다. 또한 1 manpower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직무가치 기준 직무량 비교

부서별 업무의 중요도 및 전문성 요구 정도, 업무 특성 수준에 따른 manpower(직무량)의 분포와 관련하여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manpower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부서 전체의 직무량 분포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가 높은 직무에 manpower가 집중되어 있을수록 부서 전체의 직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부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평균적인 중요도 및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와 업무량에 대해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 간에 정비례 관계이고 각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비례하는 경우 기관 핵심 직무에 부서 인력을 집중하여 운용 한다고 본다. 또한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 간에 정비례 관계이나 각 담당직원의 업무량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 집행 업무 중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담당 직원의 업무량도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핵심 직무와 일상적 업무가 병존하는 경우이다.

증원 및 감원대상 직무에 대한 판단은 정량적 판단과 정성적 판단을 병행한다. 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을 담당하는 직무는 증원소요 manpower가 다소 낮더라도 미래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증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정부의 직접 개입 영역이 아니거나, 혹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의 경우 증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감원하는 방향으로 평가한다. 또한 중요도나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부서 핵심 직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증원 대상에 포함한다. 감원 대상 직무의 경우 전문성 요구 수준이 낮고 중요도도 낮은 경우 우선적인 감원 대상 직무로 검토한다. 이때 각 부서 담당자가 수행하는 단위 업무 중 타 부서로의 이관이 필요하거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직무 혹은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외부위탁을 통해 수행 가능한 직무일 경우에도 감원 대상 직무에 포함한다.

5) 부서별 직무조사 응답 현황

<표 5-1> 부서별 직무조사 응답 현황

국/실(응답자)			실/과(응답자)		정원	정원대비 응답비율 (정원 내 공무원 기준)		
1	지원부서	118	대변인실 *기간제 4명 포함	13 (4)	16	81.3%		
			감사담당관실	13			14	92.9%
			운영지원과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4명 포함	22 (4)			30	73.3%
			정책기획관실	58			67	86.6%
			비상안전기획관실	4			6	66.7%
2	농촌정책국	45	농촌정책과 * 파견자 5명 포함	9 (5)	13	69.2%		
			지역개발과 * 전문임기제 1명 포함	12			12	100.0%
			농촌복지여성과	8			9	88.9%
			농촌산업과	11			12	91.7%
3	농업정책국	54	농업정책과	13	15	86.7%		
			농지과	11			13	84.6%
			경영인력과	8			9	88.9%
			농업금융정책과	10			12	83.3%
			재해보험정책과	7			8	87.5%

국/실(응답자)		실/과(응답자)		정원	정원대비 응답비율 (정원 내 공무원 기준)	
			*파견자 1명 포함 (1)			
			농협경제지원팀	4	6	66.7%
4	식량정책관	46	식량정책과	13	15	86.7%
			식량산업과	11	11	100.0%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파견자 1명 포함	6 (1)	7	85.7%
			농업기반과	6	11	54.5%
			간척지농업과	9	11	81.8%
			국제협력국	43	국제협력총괄과	14
농업통상과	9	9	100.0%			
검역정책과	10	11	90.9%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0	11	90.9%			
6	축산정책국	52	축산정책과	14	17	82.4%
			축산경영과	12	13	92.3%
			방역총괄과	9	10	90.0%
			방역관리과	10	11	90.9%
			친환경축산팀	7	8	87.5%
7	식품산업정책관	43	식품산업정책과	12	15	80.0%
			식품산업진흥과	7	8	87.5%
			외식산업진흥과	6	7	85.7%
			수출진흥과 *지원근무 1명 포함	9 (1)	10	90.0%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파견자 4명 포함	4 (4)	5	80.0%
8	유통소비정책관	47	유통정책과	16	17	94.1%
			식생활소비정책과	10	12	83.3%
			원예산업과	11	12	91.7%
			원예경영과	10	11	90.9%
9	창조농식품정책관	49	창조농식품정책과	14	16	87.5%
			과학기술정책과	9	10	90.0%
			친환경농업과	10	11	90.9%
			종자생명산업과	10	11	90.9%
			농기자재정책팀	6	7	85.7%
총합계		497	총합계	477 (20)	556	85.8%

주: 괄호 안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파견자, 지원근무 등임

제2절 현재 투입 manpower 분석

1. 지원부서

대변인실 업무는 과장 및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투입되는 업무량이 가장 많고, 숙련 기간이 대부분 1-3년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실·국장급 결재 및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각각 5.63, 3.81이고, 1-3년 이상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가장 많은 인력 투입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업무는 과장 및 담당자 전결로 종결되는 업무와 차관급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 분산되어 있고, 1-3년 이하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한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기관 핵심직무와 밀접하게 연계, 운영지원과 업무는 일상적 업무와 핵심 직무가 병존한다.

1) 중요도

업무중요도 기준 지원부서의 manpower 투입량은 대변인실의 경우 과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량이 7.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량이 5.665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5.632로 가장 많았으며, 차관급 결재 3.814, 장관급 결재 2.713의 manpower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영지원과 직무량 중 과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량은 18.141로 대부분의 업무가 운영지원과 과장 전결로 종결되고 있었으며, 담당 이하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량은 6.126이었다.

대변인실 업무 중 중요도가 차관급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각종 홍보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영상광고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및 부서 간 조정이 요구되는 업무였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감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 해석, 감사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국무조정실 등 외부 요청에 대한 조사,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 업무, 정부합동 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업무 등이었다. 또한 운영지원과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 평가, 교육, 상훈, 징계 총괄 업무, 국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다면평가, 보안 업무, 인사업무 등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 등이었다.

<표 5-2> 지원부서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대변인실	2.337	7.484	5.665	1.267	2.821
감사담당관	0.643	2.151	5.632	3.814	2.173
운영지원과	6.126	18.141	0.471	2.415	3.452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숙련 필요기간으로 조사하였다. 대변인실 업무는 숙련기간 3년 미만의 업무 비중이 높은 가운데 3-5년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1.359 manpower, 5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manpower는 2.211로 나타났다. 대변인실 업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직무는 콘텐츠 제작 관련 업무, 대변인실 회의 조정 업무, 온라인 홍보 평가 대응 및 협업 업무,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업무, 캠페인, 영상광고, 킬러 콘텐츠 제작 업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숙련기간 3년 미만의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1-3년 기간의 숙련을 요구하는 업무의 manpower가 9.258이었다.

운영지원과 업무의 숙련 요구수준은 평균 3년 미만이었으며, 6개월 미만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manpower가 9.648, 6개월에서 1년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9.177, 1-3년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9.483이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경우 5년 이상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1.826으로 나타났다. 운영지원과 업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각종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기록물 평가 심사 및 폐기, 공개 여부, 접근권한 재분류에 대한 평가 업무, 자료실 업무, 전화 외국어 및 직장 교육 관리 운영, 행정간행물 발간 및 등록 업무 등 기록물 관리 업무와 자료 관련 업무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5-3> 지원부서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대변인실	3.466	5.066	7.473	1.359	2.211
감사담당관	1.852	3.304	9.258	0.000	0.000
운영지원과	9.648	9.177	9.483	0.471	1.826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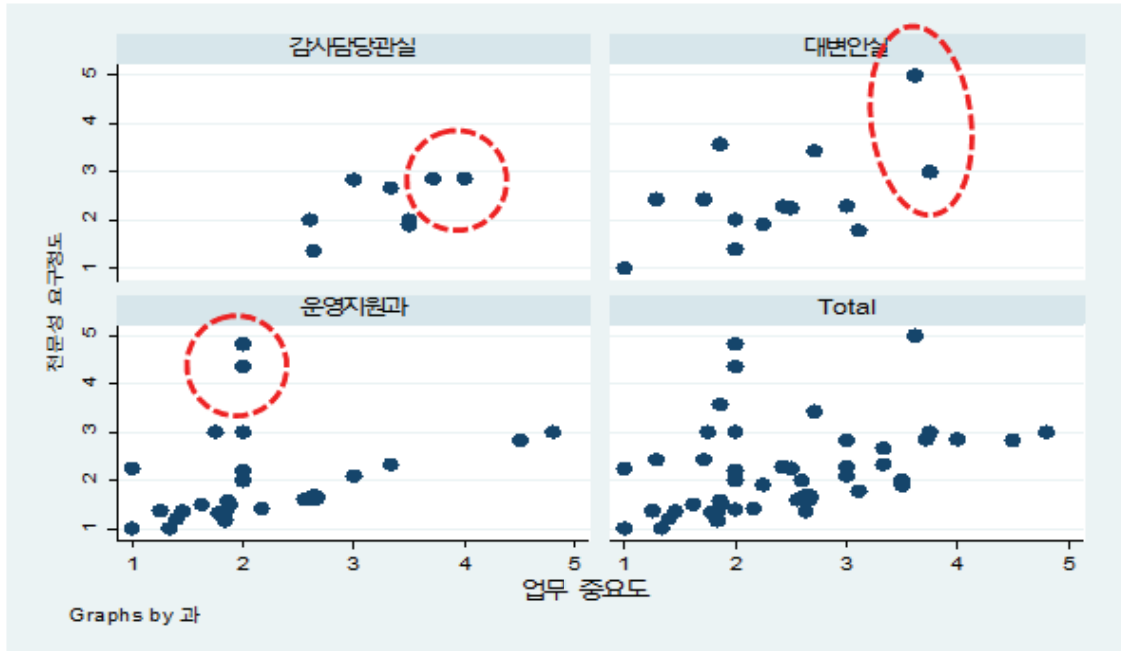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의 업무 유형별 manpower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변인실의 경우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각각 4.168, 5.101이었으며,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9.9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내외부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0.378로 가장 많았으며, 농식품부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847이었다. 운영지원과 업무의 경우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7.034로 가장 많았으며,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1.474이었다.

<표 5-4> 지원부서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대변인실	4.168	5.101	9.960	0.345
감사담당관	3.847	0.188	10.378	0.000
운영지원과	17.034	0.671	11.474	1.425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아래의 그림은 지원부서의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를 개별 응답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변인실의 경우 평균적으로 차관급 결재 이하의 중요도를 지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숙련 요구기간 3-5년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한 응답자는 3-4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경우 평균적으로 과장급 결재와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 요구 수준은 대체로 1-3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지원과는 업무중요도와 난이도의 분포가 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2명의 직원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전문성 요구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명의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전문성 요구 수준은 평균 3년 미만이지만, 업무중요도는 장차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지원부서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업무는 과장급 결재 직무와 장관급 직위가 비슷한 규모이다. 반면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은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인력 투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규제개혁담당관실과 비상안전기획관실은 과장급 결재 직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성 필요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상안전기획관실을 제외하면 정책기획관 4개 실은 1-3년 이내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비중이 가장 크다. 단,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은 타 부처 업무에 비해 숙련 요구기간이 긴 업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중요도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경우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7.8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과장급 전결 직위의 manpower는 7.455, 실·국장급 전결에 해당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910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 중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국회 및 정당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괄 업무, 결산 및 재정집행 총괄 업무, 재정기획 및 편성 업무,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업무 등이다.

창조행정담당관실 직무 중 실·국장급 전결 직위의 manpower가 6.637이었고,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221,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는 manpower가 2.867로 나타났다. 창조행정담당관실 업무 중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공무원 통합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총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성과급 개인별 계획수립 및 지급등급 확정, 소요정원 관련 업무, 재정지원관리제도 운영 업무, 신규과제 발굴 업무 등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업무중요도 기준 업무 분포는 과장급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의 manpower가 5.11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관급 결재(1.976), 실·국장급 전결에 해당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395로 나타났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무 중 차관급 결재 이상의 중요도를 지닌 직무는 국회 입법 추진 업무 총괄, 정부 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국정과제, 중점법안 등 법제업무 추진 업무 등이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의 중요도별 직무 분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무는 실·국장급 전결을 요구하는 직무로 manpower는 11.157이었으며, 차관급 전결 직무 manpower는 2.832로 나타났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업무 중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발전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업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상안전기획관실 직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 전결 직무의 manpower는 1.447이었다. 비상안전기획관실 직무 중 업무중요도가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업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재난관리평가 및 훈련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표 5-5>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 /국장	차관	장관
기획재정담당관실	1.212	7.455	4.910	0.364	7.880
창조행정담당관실	0.561	1.574	6.637	4.221	2.867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91	5.114	1.395	0.465	1.976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579	3.712	11.157	2.832	2.103
비상안전기획관실	0.386	1.477	0.783	0.827	0.937

2) 전문성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 1-3년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5.4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0.788이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 중 전문성 요구수준이 높은 직무는 당면 농정현안 보고서 관련 사항,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업무 등이었다.

한편 창조행정담당관실 직무 중 1-3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100이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행정담당관실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는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농식품 정책자료집 발간 업무,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업무 등이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무 중 3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0.18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직무는 3년 미만의 직무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무 중 전문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숙련기간 3-5년 이상) 직무는 국회 입법 추진 관련 법무 총괄, 행정규칙 법제 심사지원 업무, 법령정비협의회 운영 관리 및 안전 심사 업무 등이었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직무는 정책기획관 내 부서 중 3년 이상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851이었으며, 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3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이 3년 이상인 직무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농림축산식품통계발전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업무, 스마트 팜 맵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상분석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비상안전기획관실 직무는 6개월 미만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720이었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1.036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3년 사이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요구기간이 3년 이상인 직무는 비상대비 업무 총괄,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와 관련한 사항 등이었다.

<표 5-6>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기획재정담당관실	1.091	4.485	15.456	0.788	0.000
창조행정담당관실	4.416	5.185	5.100	1.159	0.00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220	4.068	3.138	0.000	0.814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290	4.731	8.186	3.851	3.326
비상안전기획관실	1.720	1.036	1.047	0.000	0.606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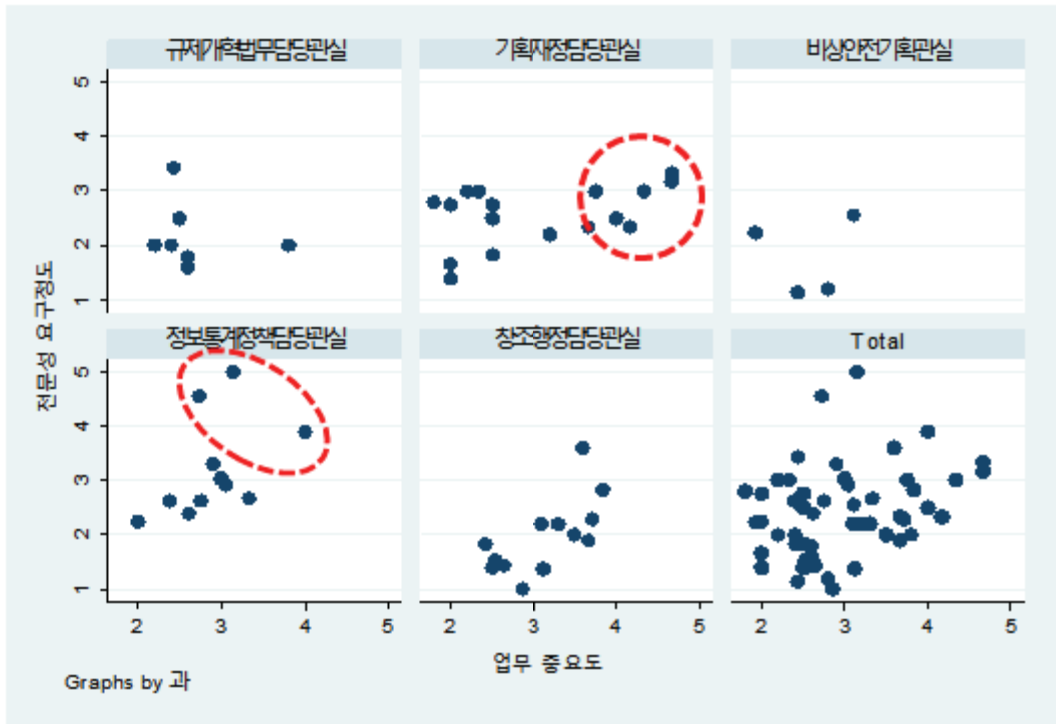
기획재정담당관실 업무 중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는 18.244였고, 내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는 3.334였다. 창조행정담당관실 업무 중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는 7.430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편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업무 중 내외부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업무의 manpower는 5.986이었으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직무 중 내외부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4.8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안전기획관실 직무 중 2.370 manpower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7>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기획재정담당관실	3.334	0.242	18.244	0.000
창조행정담당관실	5.295	0.939	7.430	2.19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254	0.000	5.986	0.000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3.412	1.159	14.848	0.966
비상안전기획관실	1.929	0.110	2.370	0.000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를 기준으로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평균값 간의 상관관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는 전반적으로 직무 중요도는 높으나 전문성 요구 수준은 3년 안팎에 분포하는 인력이 6-7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창조행정담당관실은 평균 이상의 전문성 요구 수준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중요도는 높으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 중요도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었다. 한편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으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2명, 전문성과 직무 중요도가 모두 높은 직원이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은 직원의 평균적인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보통 미만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5-2> 정책기획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3.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국 소속 부서의 업무는 주로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로 구성된다. 농촌정책과와 지역개발과는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각각 2명 이상이다. 지역개발과는 숙련 요구기간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1-3년 이하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촌정책과 업무는 3-5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5.1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직원을 기준으로 농촌정책과는 전문성 요구정도가 높은 직원과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농촌산업과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책임지는 직원으로 구분된다.

1) 중요도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를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정책과의 직무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438,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977이었고, 과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0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정책과 직무 중 다수의 직무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관급 결재 이상을 요구하는 직무 중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 농업분야 지역발전사업 체계화 업무, 전시·체험 및 유물수집에 관한 업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지역개발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6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장급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의 manpower는 3.144,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301, 그리고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과 직무 중 농촌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험에 관한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복지여성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237로 가장 높았고, 실·국장급 전결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복지여성과 직무 중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로 나타났다.

농촌산업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793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차관급과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 그리고 담당 이하 전결 및 과장급 전결을 요구하는 직무가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산업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농촌관광 해외설명회,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 업무, 농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업 업무,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상품, 통역 서비스 지원 업무 등이었다.

<표 5-8>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농촌정책과	0.583	3.079	6.438	3.977	2.251
지역개발과	0.023	3.144	6.673	1.301	2.432
농촌복지여성과	0.390	4.237	3.568	0.725	0.000
농촌산업과	1.320	1.980	6.793	1.236	1.872

2) 전문성

농촌정책과 직무는 농촌정책국 내 타 부서에 비해 숙련 요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년 기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1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0.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직무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 업무, 농어업체험관 유물수집 및 콘텐츠 구성, 농촌정책국 소관 사업의 자금운용, 성과관리, 예산편성 관련 사항, 전시 관련 업무,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토목부문 용역 관련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개발과 업무 중 숙련 요구기간 1-3년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8.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숙련 요구기간 6개월에서 1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846이었다. 지역개발과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리 업무와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업무가 해당된다.

농촌복지여성과의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없었으며, 숙련 요구기간 1-3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345인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2.119이었다. 농촌복지여성과 직무 중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산업과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 1-3년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5.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4.5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련 요구기간 3-5년 및 5년 이상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각각 0.828, 0.144였다. 농촌관광 평가제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5-9> 농촌정책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농촌정책과	1.714	5.750	3.394	5.108	0.362
지역개발과	0.622	3.846	8.200	0.679	0.226
농촌복지여성과	3.457	2.119	3.345	0.000	0.000
농촌산업과	2.340	4.561	5.209	0.828	0.144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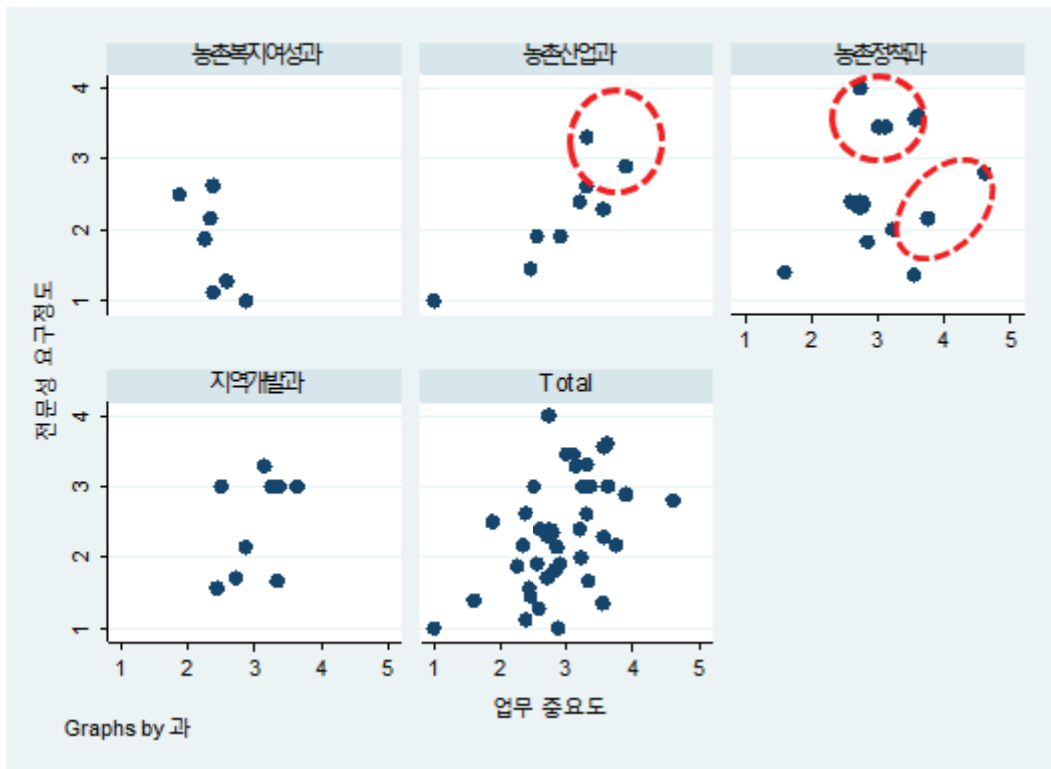
농촌정책국 업무유형별 manpower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로 농촌산업과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등은 내외부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정책과는 10.706 manpower가 내외부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역개발과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298이었고, 농촌산업과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601, 내외부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5.221로 나타났다.

<표 5-10> 농촌정책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농촌정책과	2.216	0.781	10.706	2.624
지역개발과	0.362	4.298	7.918	0.995
농촌복지여성과	0.446	3.011	4.349	0.000
농촌산업과	1.380	6.601	5.221	0.000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를 기준으로 농촌정책국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농촌정책과의 경우 직무 중요도가 실·국장급 결재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3년에서 5년 사이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와, 숙련 요구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차관급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2명-3명 정도 분포되어 있었다. 지역개발과의 경우 직무수행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인력이 수행하는 직무의 전문성 요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촌복지여성과의 경우 난이도는 업무중요도는 평균적으로 실·국장급 결재와 과장급 결재 사이의 영역에 분포되고 있었으며, 전문성 요구수준은 전반적으로 3년 미만에 분포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 요구 수준과 업무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농촌정책과와 농촌산업과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산업과의 경우 직무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비례하여 분포되고 있었다.



<그림 5-3>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4. 농업정책국

공통적으로 각 부서 내에서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인력 투입 비중이 높다. 농업정책과와 농지과, 재해보험정책과는 과장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업무중요도에 따라 인력이 분포되어 있다. 전문성 기준으로 현재 투입 인력은 1-3년 단위의 업무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정책과는 5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업무량이 1명 이상이다. 농업정책과와 재해보험정책과는 6개월 미만의 단순숙련 직무도 각 3명 및 2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중요도

농업정책국의 업무중요도에 따른 manpower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6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중요도가 높은 직무의 manpower도 4.157이었다. 농업정책과 직무 중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FTA 국내 보완대책 총괄 업무, FTA 지원 제도 개선 관련 사항,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 FTA 대책 투융자 보고서, OECD 농업정책국과 국내 정책 방향에 관련한 사항, 신규 FTA 보완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었고, 북한농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의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지과의 경우 과장급, 실·국장급, 차관급,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타 부서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480,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0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과의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공공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관련 업무, 농지연금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제도 관련 법령의 협의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영인력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2.963이었으며, 과장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2.571이었고,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중요도가 높은 직무의 manpower는 2.292로 나타났다. 경영인력과 직무 중 차관급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계획 마련, 농식품·농촌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농업법인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인력 육성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해보험정책과의 경우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55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각각 1.2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해보험정책과 업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업무,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업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 등이 해당된다. 농협경제지원팀의 업무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9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경우 1.018로 나타났다.

<표 5-11> 농업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농업정책과	0.583	2.846	6.062	0.919	4.157
농지과	0.271	3.998	3.763	3.060	2.480
경영인력과	0.559	2.571	2.963	0.559	2.292
농업금융정책과	0.112	0.168	3.137	3.845	0.168
재해보험정책과	0.524	2.529	3.554	1.253	1.253
농협경제지원팀	0.000	0.359	1.977	0.240	1.018

2) 전문성

농업정책국의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manpower 분석 결과, 농업정책과의 경우 숙련기간 1-3년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605이었으며, 6개월에서 1년 기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826이었다.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는 숙련 기간이 3년 미만인 직무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5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manpower가 1.120이었다. 농업정책국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FTA 국내보완대책 총괄 업무, 농업지원제도 개편 관련 사항, 중장기 농업정책 기획 및 조정 총괄 업무 등이다.

농지과 직무는 타 부서에 비해 숙련 요구기간이 높은 직무의 manpower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manpower가 6.120이었으며, 3-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2.388, 5년 이상의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고숙련 직무는 0.895 manpower를 나타내고 있다.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농업진흥지역 운영 관련 사항, 농지가격 및 거래통계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사업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특정지역개발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영인력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1.5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4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인력과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는 농업법인 육성에 관한 사항,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농업회계장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농업금융정책과 직무는 전문성 요구수준 1-3년에 해당하는 직무의 manpower가 7.218이었고, 3-5년에 해당하는 직무 manpower 2.388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원팀 직무는 전문성 요구수준 1-3년과 3-5년에 해당하는 직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련 업무, 농업·축산 경제부문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농협중앙회 및 조합 경제사업 관련 업무, 투자관리 전문기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해보험정책과 직무는 숙련 요구기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직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년에 해당하는 직무의 manpower가 0.228, 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0.513이었다. 재해보험정책과 직무 중 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농어업인안전보험관련 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농업재해

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 업무 등이다.

<표 5-12> 농업정책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농업정책과	3.014	5.826	4.605	0.000	1.120
농지과	0.864	3.307	6.120	2.388	0.895
경영인력과	2.348	3.578	1.565	1.453	0.000
농업금융정책과	0.033	0.820	7.218	2.586	0.281
재해보험정책과	2.347	2.586	3.440	0.228	0.513
농협경제지원팀	0.000	0.599	1.701	1.294	0.000

3) 업무 유형

업무 유형별로 농업정책국의 manpower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 비중이 높은 가운데, 농업정책과의 경우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2.868이었고, 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는 2.599로 나타났다. 경영인력과의 경우 외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261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금융정책과는 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가 5.183, 내외부 고객 지원 대상이 4.90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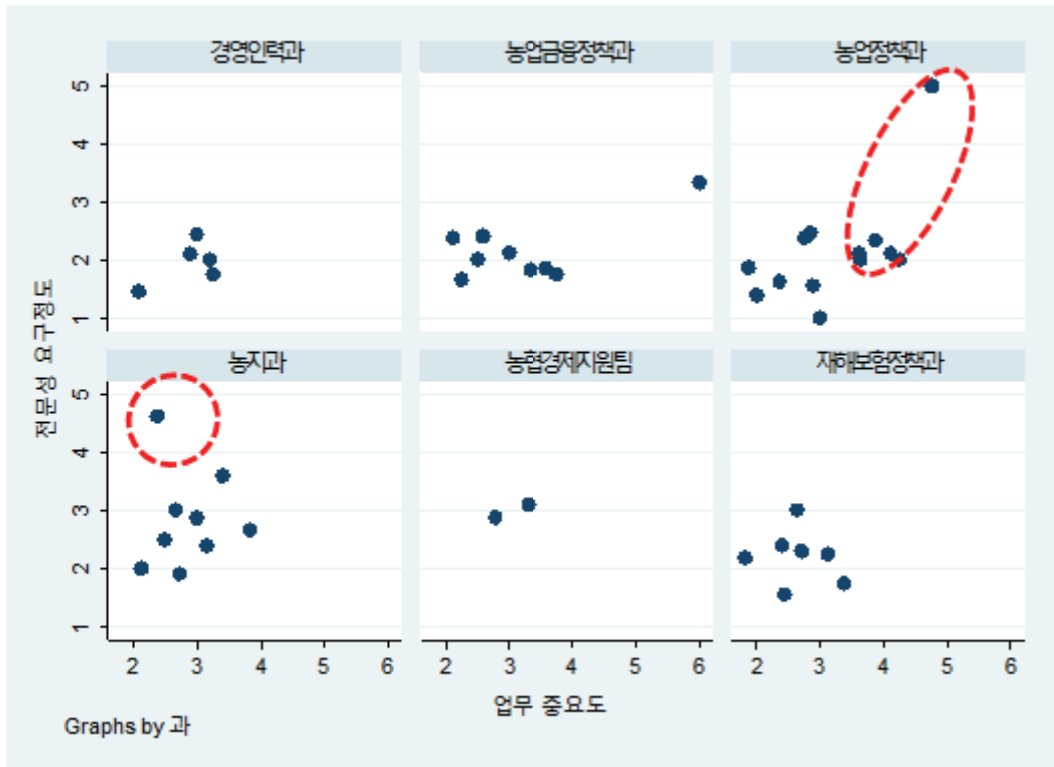
<표 5-13> 농업정책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농업정책과	2.868	2.599	9.098	0.000
농지과	0.469	4.849	7.046	1.209
경영인력과	0.447	6.261	2.236	0.000
농업금융정책과	1.158	5.183	4.902	0.000
재해보험정책과	0.399	0.911	6.664	1.139
농협경제지원팀	0.000	0.443	3.031	0.120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농업정책과가 전문성 요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응답자의 평균적인 업무중요도에 있어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고, 평균적인 직무 중요도가 차관급에서 장관급 사이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과의 경우 농업정책과에 비해 업무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응답자의 평균적인 전문성 요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고 있었다. 경영인력과는 직무중요도는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보통(3점) 안팎의

범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정책과는 타 부서에 비해 응답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평균적인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인의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실·국장급 결재와 차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4> 농업정책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농협경제지원팀은 4인에 해당하는 산점도로 중첩되어 있음

5.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는 업무중요도는 높으나 전문성은 다소 낮은 업무, 그리고 업무중요도가 높으면서 3-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식량산업과는 업무중요도에 따른 직무는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숙련 요구기간은 1-3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업기반과와 간척지농업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중요도에 3-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분포가 높다.

1) 중요도

식량정책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5.967로 과 내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차관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도 각각 4.033, 4.493으로 나타났다. 식량정책과 업무 중 차관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공비축제도 시행 관련 업무, 식량정책 및 양곡수급계획 운용에 관한 업무 등이 해당된다.

식량산업과 직무 중 실·국장급 결재 필요 직무의 manpower는 5.8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의 manpower도 3.263으로 타 부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식량산업과 직무 중 차관급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쌀 및 식량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업무,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 총괄 업무, 식량산업 R&D 업무, 쌀 소비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등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5.0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793인 반면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기반과의 경우 실·국장급 결재 필요 직무의 manpower는 3.1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차관급 결재 필요 직무 manpower 0.788,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의 manpower는 1.002이었다. 농업기반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가뭄대비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사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방조제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간척지농업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866이었고, 과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675로 식량정책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농업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간척지 활용·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배수개선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 5-14> 식량정책관실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식량정책과	0.000	1.078	5.967	4.038	4.493
식량산업과	0.111	2.528	5.847	0.501	3.263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349	2.793	5.004	0.000	0.000
농업기반과	0.079	1.734	3.153	0.788	1.002
간척지농업과	0.000	4.675	3.866	0.000	2.332

2) 전문성

식량정책관실 직무는 1-3년 미만의 숙련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많은 편이며 식량정책과의 경우 기본사업비 편성 및 결산 관련 업무 등의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식량산업과 직무 중 RPC 운영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쌀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숙련 요구기간 1년에서 3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5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년과 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각각 0.931, 0.8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직무 중 숙련기간 3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고숙련 직무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결산, 관리운용 업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계획 수립 업무 등이다.

한편 농업기반과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운영, 농촌용수개발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등이 해당되었다.

식량정책과는 고숙련 직무의 manpower가 3-5년의 경우 1.138, 5년 이상인 경우가 2.001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과의 경우 5년 이상의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295였다. 간척지농업과의 경우 5년 이상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027이었고, 간척지농업과 직무 중 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사무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업무,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관한 업무,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 및 운용 관련 업무 등이다.

<표 5-15> 식량정책관실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식량정책과	1.797	5.152	5.488	1.138	2.001
식량산업과	1.136	4.488	4.956	1.670	0.000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722	2.095	3.561	0.931	0.838
농업기반과	0.619	0.957	3.491	0.394	1.295
간척지농업과	1.691	1.897	6.016	0.242	1.027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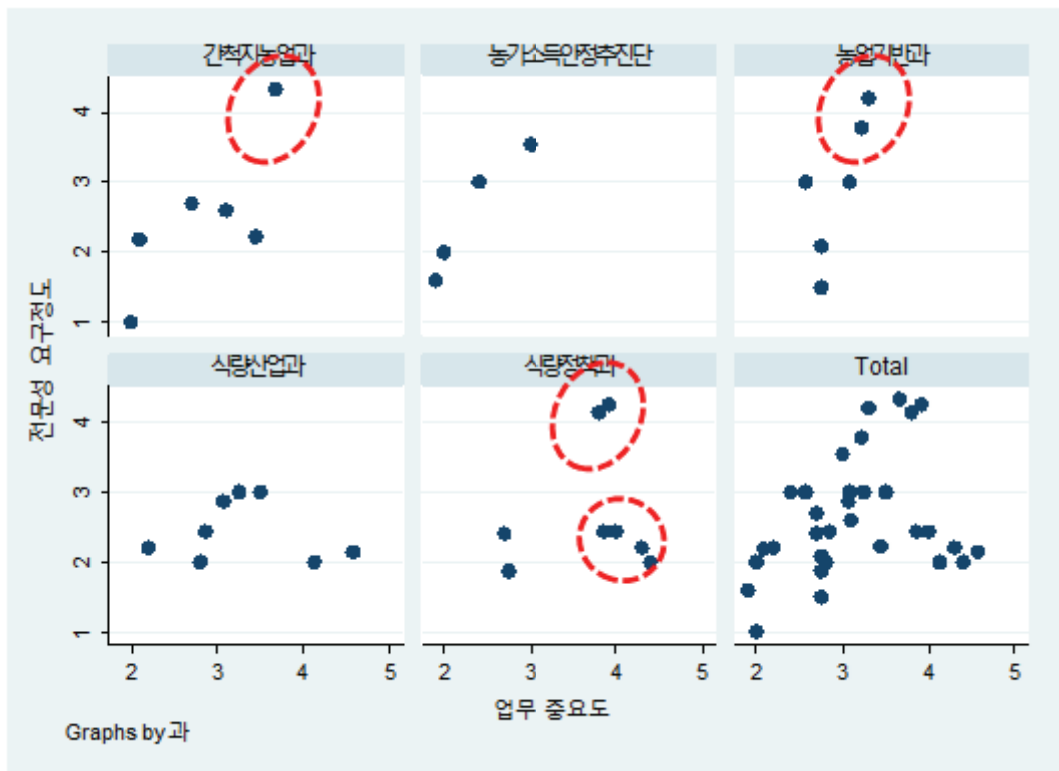
업무 유형별로 식량정책과는 내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가 5.332였으나, 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도 6.470이었다. 농업기반과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무가 6.756 manpower로 가장 높았다. 식량산업과, 간척지농업과의 경우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식량정책관실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식량정책과	3.774	6.470	5.332	0.000
식량산업과	0.111	3.063	3.953	5.123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33	1.629	5.469	0.815
농업기반과	0.000	6.756	0.000	0.000
간척지농업과	1.329	2.863	3.056	1.208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량정책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대부분이며, 그 중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와 상대적으로 높은 3년에서 5년 사이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2명 분포되어 있었다. 농업기반과 응답자의 평균적인 업무중요도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전문성 요구수준이 평균 이하인 반면에, 2인은 전문성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척지농업과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적인 전문성 요구 수준은 대체로 3년 미만인 반면, 1명의 응답자는 전문성 요구 수준이 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5> 식량정책관실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6.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는 과장, 실·국장급과 장관급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가 분포되어 있으며, 국제협력국 내 대부분의 업무는 1-3년 미만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무로 구성되어 있다. 검역정책과는 과장 및 실·국장급,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고르게 인력이 분포되어 있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차관 및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가 대부분이며, 검역정책과를 제외하면 타 부서에 비해 전반적인 숙련 요구기간도 긴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중요도

국제협력총괄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7.451로 집중되어 있으며, 과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508이었고,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4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총괄과 업무 중 중요도가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국제협력위원회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대외경제장관회의 관련 사항, 농축산물 통상 및 협상관련 업무,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농업통상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524로 가장 높았고, 차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344,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6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통상과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OECD 농정 관련 회의, OECD 업무 계획 수립 및 조정, WTO 농업협정 이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 수입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검역정책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827이었고, 과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정책과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FTA/SPS 위원회 관련 사항,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 운용, 수입검역통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306이었고, 차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0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업무 중 차관급 결재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요도를 지닌 업무는 FTA 서비스, 투자, 지적권 관련 업무, RCEP, TPP 업무에 관한 사항, FTA 이행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업무 등이 해당된다.

<표 5-17>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국제협력총괄과	1.379	3.508	7.451	0.478	3.476
농업통상과	0.000	1.308	4.524	2.344	1.635
검역정책과	0.235	3.944	3.827	3.297	0.471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0.000	0.109	1.306	6.062	1.230

2) 전문성

국제협력총괄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8.103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총괄과 업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농림축산분야 ODA 및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업무, 미국 등 해외 통상 환경 동향 등 조사에 관한 업무, 해외농업개발사업 기획 관련 직무 등이 해당된다.

농업통상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6.431로 가장 높았고, 3-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농업통상과 직무는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식량안보에 관한 업무 등이다.

검역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3.603이었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정책과 업무 중 숙련 요구기간 3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가축위생방역지원, 국제기구 및 국제검역협력 관련 업무, 수입검역 통상 관련 업무, 수출입식물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업무, 식물검역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6.367로 가장 높았고, 3-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0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업무 중 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지닌 업무는 FTA/SPS 관련 사항,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총괄, 한·중동 FTA 관련 업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국제협력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국제협력총괄과	2.781	3.107	8.103	0.326	1.977
농업통상과	0.436	1.090	6.431	1.308	0.545
검역정책과	1.119	4.109	3.603	0.706	2.237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0.109	0.327	6.367	1.034	0.871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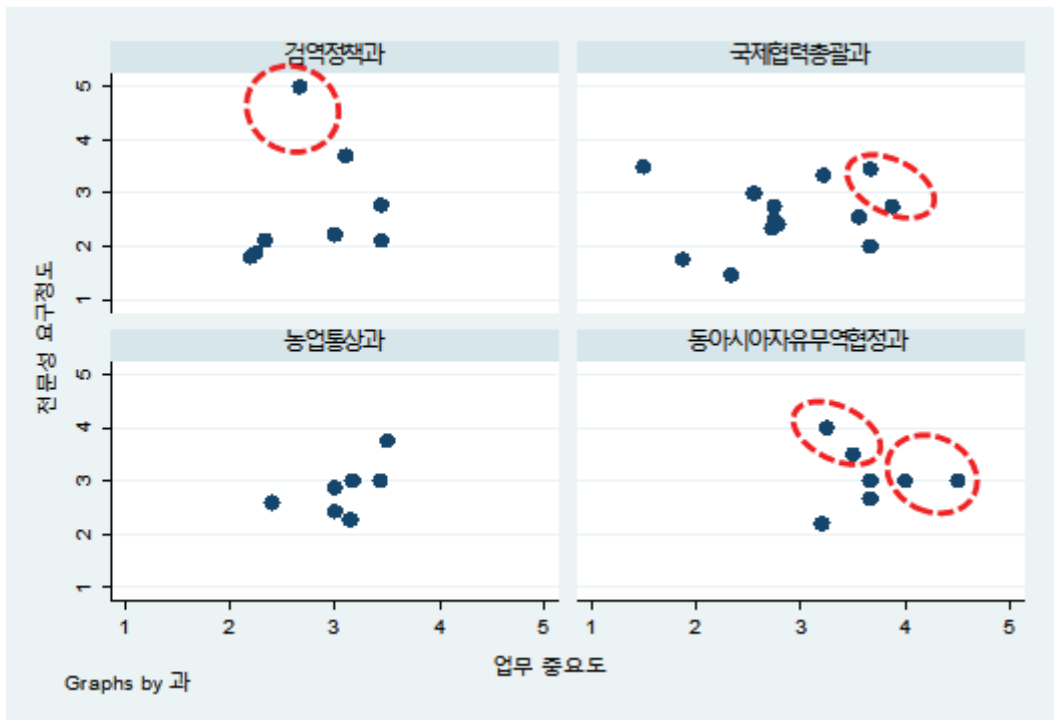
업무 유형별로 국제협력국의 manpower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역정책과의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9.007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는 내부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국제협력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국제협력총괄과	3.965	1.130	6.354	4.671
농업통상과	1.472	0.436	2.616	5.287
검역정책과	2.296	0.471	9.007	0.000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0.000	0.000	2.177	6.530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국제협력총괄과는 평균적으로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중요도를 가진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역정책과는 평균적으로 업무중요도가 과장급에서 차관급 사이의 결재를 필요로 하나, 1인은 응답자의 평균적인 전문성 요구수준과 달리 5년 이상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과는 타 부서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업무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업무중요도는 유사하나 전문성 요구수준이 상이한 직무와 전문성 요구수준은 동일하나 업무중요도가 상이한 직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7.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국은 전반적으로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축산정책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등 중요도가 높은 업무 중에서도 5년 이상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1) 중요도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를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축산정책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7.4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관급 결재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5.108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정책과 업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축산물 등급제도에 관한 사항, 중·단기 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축산물 발전기금 재산관리, 축산분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총괄, 한국 마사회법령 및 말산업 육성법령에 관한 업무 등이다.

축산경영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587로 가장 높았고, 과장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5.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경영과 직무 중 중요도가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금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돼지고기 수급 가격안정대책, 쇠고기 수급 관련 업무, 종축개발 목표설정 및 발전 계획 수립 업무, 한우 가격 안정에 관한 업무, 한우 산업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등이다.

방역총괄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257이었고, 장관급 결재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4.296으로 나타났다. 방역총괄과 직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구제역 백신 관련 업무,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업무,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에 관한 업무,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운용 업무 등이다.

방역관리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7.1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관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2.803이었고, 차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중요도가 높은 직무의 manpower는 2.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관리과 중요도가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가축방역사업 평가 및 포상제 운영,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약품 관련 법령 운용, 소가축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축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법령 및 관련 연구개발 업무 등이다.

친환경축산팀은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689로 가장 높았고, 과장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2.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축산팀 직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사료관리법 운용 및 제도개선 업무,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및 이용대책 수립 업무, 친환경 축산업무, 초지법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 5-20>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축산정책과	0.124	3.657	7.476	0.992	5.108
축산경영과	0.496	5.035	6.587	0.305	1.564
방역총괄과	0.362	2.342	4.257	0.388	4.296
방역관리과	0.000	0.847	7.170	2.216	2.803
친환경축산팀	0.000	2.079	4.689	1.329	0.363

2) 전문성

축산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7.538이었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951이었으며 모두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정책과 직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도축산업 육성 지원,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축산물 등급제도에 관한 사항,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제개정, 축산분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총괄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축산경영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2.111이었고, 6개월 미만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239로 가장 높았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0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경영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송아지생 산안정사업,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양돈·양봉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업무 총괄 등으로 나타났다.

방역총괄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2.536이었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076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역총괄과 직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업무, 가축전염예방방법 운용 업무, 수의사법 운용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방역관리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6.388로 가장 높았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9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역관리과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이 3년 이상인 직무는 동물약품 관련 법령 운용, 인수공통감염병 협력체계 운영, 축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및 여건조성 연구,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추진 등이다.

친환경축산팀은 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없었고,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2.780이었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719이었으며, 3-5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2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축산팀 직무 중 직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가축분뇨 관련 법령 운용,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기후변화 협약 대응 업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지원 업무, 양분총량제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업무,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대책에 관한 업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표 5-21> 축산정책국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축산정책과	0.372	5.951	7.538	0.620	2.876
축산경영과	5.239	4.095	2.111	1.157	1.386
방역총괄과	1.333	4.076	2.536	3.701	0.000
방역관리과	1.564	2.933	6.388	1.173	0.978
친환경축산팀	0.665	2.719	2.780	2.296	0.000

3) 업무 유형

축산정책과는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075이고,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571로 높았다.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의 경우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축산팀의 경우 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가 3.287이었고 내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가 3.1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2> 축산정책국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축산정책과	6.075	6.571	3.471	0.000
축산경영과	0.254	3.713	10.020	0.000
방역총괄과	0.388	0.259	3.882	7.117
방역관리과	0.391	0.000	10.038	2.607
친환경축산팀	0.616	3.287	3.130	1.426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축산정책과의 경우 전문성 요구정도와 업무중요도는 비례하여 분포되어 있었으며, 2인의 응답자는 전문성 요구정도와 업무중요도가 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역관리과의 경우 평균적으로 1-3년의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전문성 요구수준은 전반적으로 1-3년에 분포되어 있었다. 친환경축산팀은 평균적으로 1-3년의 업무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나, 1명의 응답자는 전문성 요구 수준이 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7>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8.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업무는 대부분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관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식품산업정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등이다.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정책관의 업무는 3-5년 이상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산업정책과 및 수출진흥과 업무 중 일부는 1년 이하의 숙련 기간으로도 충분히 이행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1) 중요도

식품산업정책관의 업무중요도에 따른 manpower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산업정책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7.186으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았고, 과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057이었고, 담당이하의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232로 이 또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정책과 직무 중 차관급 결재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국산 농산물 사용확대 방안 검토 업무, 농식품 소비홍보 사업 추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진흥과는 담당이하의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없고,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145였고, 과장급과 차관급의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각각 1.380, 1.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진흥과 직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는 김치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외식산업진흥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928로 높았고, 과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771이었고, 차관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진흥과 직무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진흥과는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182로 높았고, 과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203이었다. 수출진흥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업무,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수출지원사업,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manpower가 3.855이었고, 과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807, 차관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식품산업정책과	2.232	3.057	7.186	1.015	1.406
식품산업진흥과	0.000	1.380	3.145	1.159	0.552
외식산업진흥과	0.863	1.771	3.928	0.000	0.250
수출진흥과	0.281	3.203	6.182	0.506	1.068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팀	0.164	2.807	3.855	1.212	0.699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manpower 분석 결과, 식품산업정책관은 5년 이상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4.229였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7.197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업무가 3년 미만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산업진흥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2.395이었고, 3-5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2.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진흥과 직무 중 숙련 요구기간이 3년 이상인 직무는 김치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 식품기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외식산업진흥과는 3년 미만의 숙련 요구기간이 필요한 직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3.179이었고, 6개월-1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8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진흥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4.0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미만,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각각 3.203, 3.6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진흥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총괄 업무로 나타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4.4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7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4> 식품산업정책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식품산업정책과	3.470	7.197	4.229	0.000	0.000
식품산업진흥과	0.221	1.479	2.395	2.141	0.000
외식산업진흥과	1.794	1.839	3.179	0.000	0.000
수출진흥과	3.203	3.653	4.046	0.337	0.000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팀	1.311	1.737	4.402	1.289	0.000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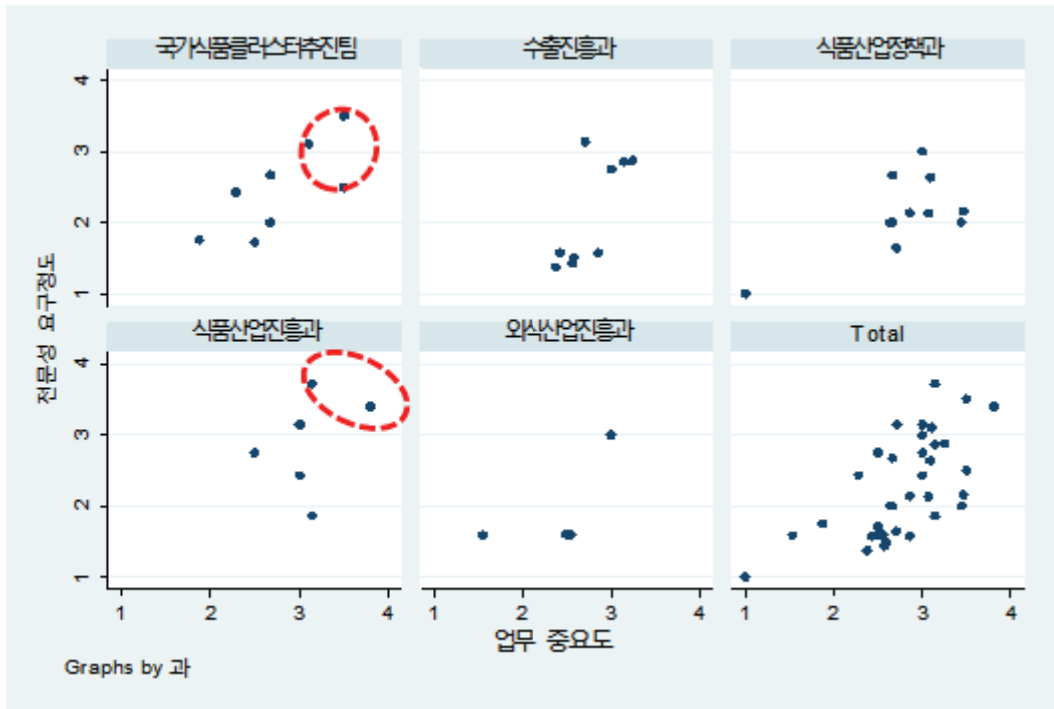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유형별 manpower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 비중이 높으며 특히 식품산업정책과의 경우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3.94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25>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식품산업정책과	0.569	0.379	13.948	0.000
식품산업진흥과	0.441	1.269	4.525	0.000
외식산업진흥과	1.851	2.237	2.725	0.000
수출진흥과	1.068	1.574	8.598	0.000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팀 (한시조직)	1.485	2.851	2.774	1.627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식품산업진흥과의 경우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대부분이나 전문성 요구정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업무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8>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9.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중 업무중요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실·국장급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량이 분포되어 있다. 원예산업과의 경우 과장 전결로 종결되는 업무도 있으며, 유통소비정책관 내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는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가 상대적으로 높다. 전문성 요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는 1-3년 이하, 원예경영과는 주로 6개월-1년 정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로 구성된다.

1) 중요도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를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통정책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0.093으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과장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3.8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정책과 직

무 중 차관급 결재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대책 업무, 농산물 직거래법 운용 업무,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운용에 관한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소비정책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004이었고, 장관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3.4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소비정책과 직무 중 차관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도, 농산물품질표시 확대 추진 업무, 소비자단체 육성 및 관리 업무, 소비자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외국의 식품안전제도 대응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운용 등에 관한 업무이다.

원예산업과의 경우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674이고, 과장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5.97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장관급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493으로 나타났다. 차관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인삼산업법 운용, 엽채류, 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업무, 특용작물 산업 관련 직무 등으로 나타났다.

원예경영과는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684로 높았고, 과장급 전결 직무에 해당하는 manpower는 3.234이었고, 담당이하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1.9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유통정책과	1.006	3.864	10.093	0.949	2.378
식생활소비정책과	0.377	2.768	4.004	0.801	3.489
원예산업과	0.149	5.971	4.674	0.345	1.493
원예경영과	1.941	3.234	4.684	0.045	1.249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manpower 분석 결과, 유통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7.978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087, 6개월 미만의 숙련기간이 요구되는 직무의 manpower는 4.3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정책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관련 제도 운용 업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생활소비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5.834로 높았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4.04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소비정책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 수준이 3년 이상인 직무는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 및 영양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예산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4.421이었고,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8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예산업과 직무 중 3년 이상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조미채소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조미채소류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원예경영과는 대부분 3년 미만의 숙련기간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5.844로 가장 높았고, 6개월 미만은 2.721, 1-3년은 2.5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7> 유통소비정책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유통정책과	4.309	5.087	7.978	0.457	0.457
식생활소비정책과	0.812	4.049	5.834	0.744	0.000
원예산업과	1.906	5.845	4.421	0.000	0.459
원예경영과	2.721	5.844	2.587	0.000	0.000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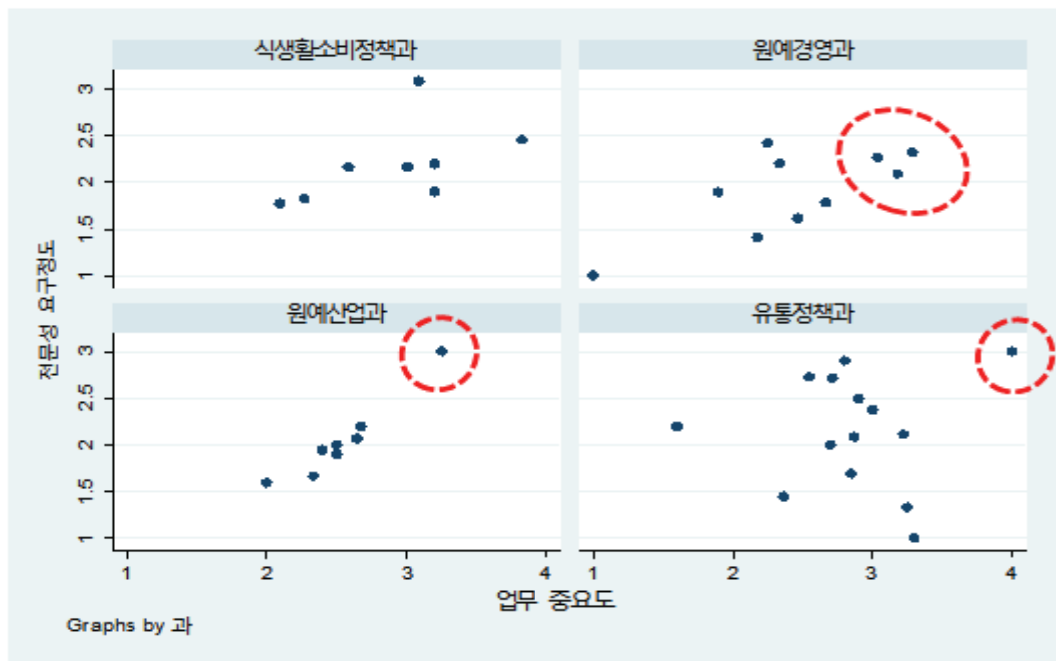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유형별 manpower 분포를 분석한 결과, 유통정책과는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1.499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각각 6.886, 6.063로 높게 나타났다. 원예경영과는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149, 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가 3.881로 나타났다.

<표 5-28>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유통정책과	2.618	4.172	11.499	0.000
식생활소비정책과	0.229	6.886	4.324	0.000
원예산업과	0.884	6.063	3.388	2.297
원예경영과	1.952	3.881	4.149	1.171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원예산업과의 경우 전문성 요구수준과 직무 중요도가 비례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1명의 응답자는 전문성 요구수준과 업무중요도가 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예경영과의 경우에도 전문성 요구수준과 직무 중요도가 비례하여 분포되며 직무 중요도가 과장급 결재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와, 숙련 요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3명 정도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5-9>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10. 창조농식품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순으로, 종자생명산업과는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업무의 비중이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숙련 요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며, 대부분 1-3년 혹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중요도

창조농식품정책관의 업무중요도 기준 업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조농식품정책과는 실·국장급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의 manpower가 10.010으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과장급 결재가 필요한 직무의 manpower가 2.805, 장관급은 1.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농식품 정책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농식품 ICT 융복합 업무 기획 및 조정 업무,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 업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직무 등이다.

과학기술정책과의 경우 실·국장급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의 manpower가 4.30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과장급 결재가 2.194이었고, 장관급 전결에 해당하는 직무의 manpower가 1.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과 직무 중 차관급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국내외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의 지도 및 감독 업무,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관련 업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등이 해당된다.

친환경농업과의 경우 실·국장급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의 manpower가 5.885이었고, 과장급 결재가 3.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업무,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 지원 업무, 친환경농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종자생명산업과는 담당이하 및 차관급 전결이 필요한 직무가 없으며, 실·국장급 전결로 종결되는 직무의 manpower가 4.423, 장관급 전결에 해당하는 직무의 manpower가 4.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생명산업과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가 해당된다.

농기자재정책팀 직무 중 실·국장급 전결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226이었으며, 과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2.762 manpower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자재정책팀 직무 중 중요도가 높은 직무는 농기계 장·단기 계획 수립,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영 및 제도 개선 업무, 비료 장·단기 계획 수립, 비료관리법 운영 및 제도개선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표 5-29>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창조농식품정책과	0.495	2.805	10.010	0.550	1.540
과학기술정책과	0.642	2.194	4.303	0.803	1.691
친환경농업과	0.275	3.025	5.885	0.880	0.935
종자생명산업과	0.000	2.815	4.423	0.000	4.250
농기자재정책팀	0.269	2.762	3.226	0.269	0.806

2) 전문성

창조농식품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5.170이었고, 6개월-1년 정도의 전문성 수준이 요구되는 직무의 manpower는 7.315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농식품정책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는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이었다.

과학기술정책과는 숙련 요구기간 1-3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2.2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1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918이었고, 6개월 미만의 숙련 요구기간이 필요한 직무의 manpower는 3.0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기술정책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은 직무는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 R&D 성과관리 및 확산에 관한 업무,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친환경농업과는 숙련 요구기간 6개월-1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6.710으로 높았고, 6개월 미만의 전문성 수준이 요구되는 직무의 manpower는 2.970, 1-3년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manpower는 1.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생명산업과는 숙련 요구기간 6개월-1년 정도의 전문성 요구수준을 지니고 있는 직무의 manpower가 4.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미만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manpower는 3.102이었고, 1-3년 정도의 숙련 요구기간이 필요한 직무의 manpower는 2.8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자생명산업과 직무 중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은 직무는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농기자재정책팀의 경우 농기계 장·단기 계획 수립,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영 및 제도개선 업무, 비료 장·단기 계획 수립, 비료관리법 운영 및 제도개선 업무가 해당된다.

<표 5-30> 창조농식품정책관 전문성 요구수준(업무 숙련 요구기간) 기준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창조농식품정책과	2.695	7.315	5.170	0.220	0.000
과학기술정책과	3.019	3.918	2.216	0.482	0.000
친환경농업과	2.970	6.710	1.320	0.000	0.000
종자생명산업과	3.102	4.767	2.815	0.804	0.000
농기자재정책팀	0.953	2.786	2.651	0.549	0.391

3) 업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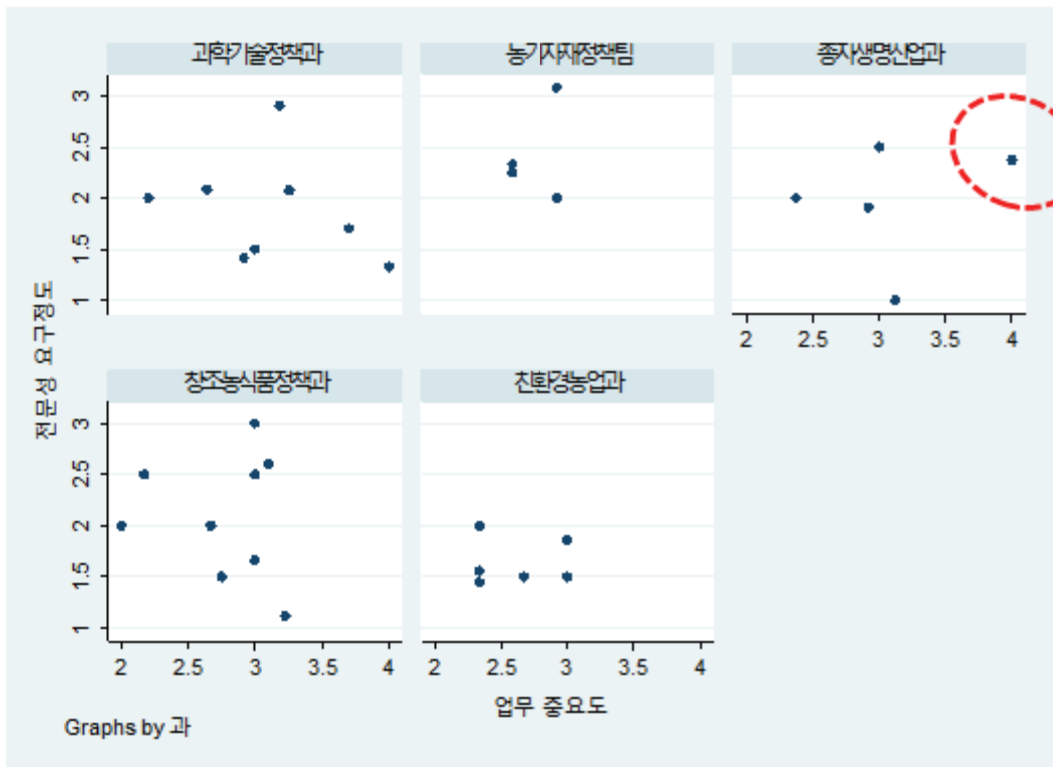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유형별 manpower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부 및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는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manpower가 6.2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친환경농업과의 경우 외부 고객 대상 직무의 manpower가 5.665로 타 부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유형 기준 manpower

부서	내부	외부	내외부	해당없음
창조농식품정책과	2.915	4.785	4.400	3.300
과학기술정책과	0.107	2.751	6.219	0.557
친환경농업과	1.265	5.665	4.070	0.000
종자생명산업과	0.000	2.412	2.183	6.893
농기자재정책팀	1.026	1.491	4.570	0.000

4)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과의 직무는 전문성 요구수준은 평균인 3점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은 담당자는 2명 내외였다. 1명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자생명산업과는 응답자의 평균적인 업무중요도는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인 반면, 1명의 응답자는 업무중요도가 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10>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간의 상관관계

주: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제3절 추가 투입 manpower 도출

1. 지원부서

1) 중요도

대변인실 직무의 경우 차관 및 장관급 직무에 투입될 필요가 있는 중요도가 있는 직무는 각각 0.472, 0.656이었다. 감사담당관실의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중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1.399,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0.798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에 각각 0.547, 0.421의 manpower 투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인을 소수점 단위로 나눌 수 없으므로 중요도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감사담당관실은 2명, 대변인실 1명, 운영지원과 1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소요된다.

<표 5-32> 지원부서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대변인실	0.155	0.631	1.406	0.472	0.656
감사담당관	0.125	0.377	1.490	1.399	0.798
운영지원과	0.383	2.256	0.000	0.547	0.421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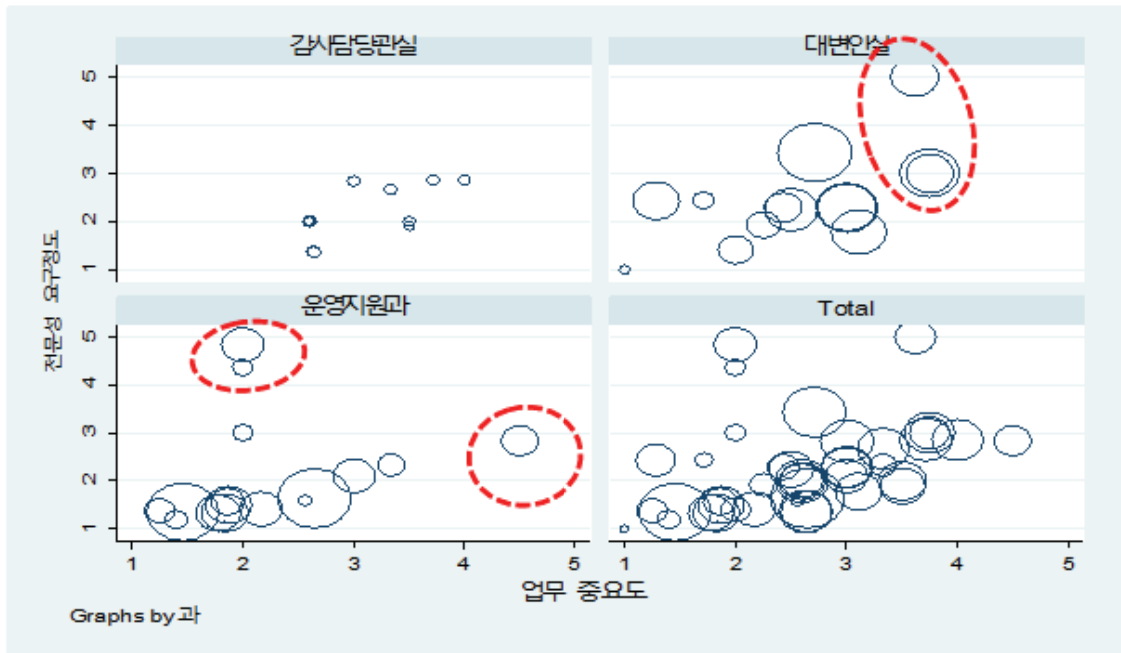
전문성 요구수준을 기준으로 대변인실에서 3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추가 투입 필요 manpower는 0.438이었으며, 5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0.210 manpower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지원과 직무 중 3년-5년 직무 manpower의 추가투입 필요 소요는 0.071, 5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0.221로 나타났다.

<표 5-33> 지원부서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대변인실	0.213	0.593	1.868	0.438	0.210
감사담당관	0.247	0.676	3.266	0.000	0.000
운영지원과	0.270	1.754	1.290	0.071	0.221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그림 5-11> 지원부서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대변인실의 경우 중요도 기준 실·국장급 결재 필요 직무에 1.4명 정도의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숙련 기간 기준 약 2명의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중요도를 기준으로 실·국장,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각각 1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성 기준 1-3년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현재보다 3명 이상 투입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관실 직원 간 추가투입 필요 인력 편차는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운영지원과의 경우 중요도 기준 과장급 결재 요구 직무에 2.2명 추가 투입이 필요하고, 전문성 기준 6개월-1년 숙련도가 필요하며, 직무에 1.7명 정도의 인력 투입이 요구된다. 다만 운영지원과 직무 중 운전직무 등은 과거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의전 및 긴급 지원 수요를 제외하면 현 재직자 퇴직 시점에 맞추어 감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1) 중요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 중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가 4.067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조행정담당관실은 차관 및 장관급 결재 직무에 대한 추가투입 필요 manpower가 1.066, 1.183로 조사되었으며, 최근의 성과평가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무 중 차관급 결재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소요되는 추가 투입 manpower는 0.070, 0.633이

었다. 특히 국회대응 업무, 경제정책 방향 수립, 의원 요구자료 답변 및 작업, 예산 심의 업무 등에서 증원 소요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직무 중 차관급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0.514, 0.979로 중요도만을 고려하면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은 중요도가 높은 직무의 manpower가 차관급 결재 직무 0.314, 장관급 결재 직무 0.204로 나타났으나 증원이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변화관리와 관련한 교육·학습 운영 및 정책실명제 관련 직무 등은 0.4명 정도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정책기획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기획재정담당관실	0.182	2.988	1.279	0.109	4.067
창조행정담당관실	0.076	0.069	1.333	1.066	1.18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46	0.581	0.169	0.070	0.633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071	0.757	2.774	0.514	0.979
비상안전기획관실	0.004	0.189	0.116	0.314	0.204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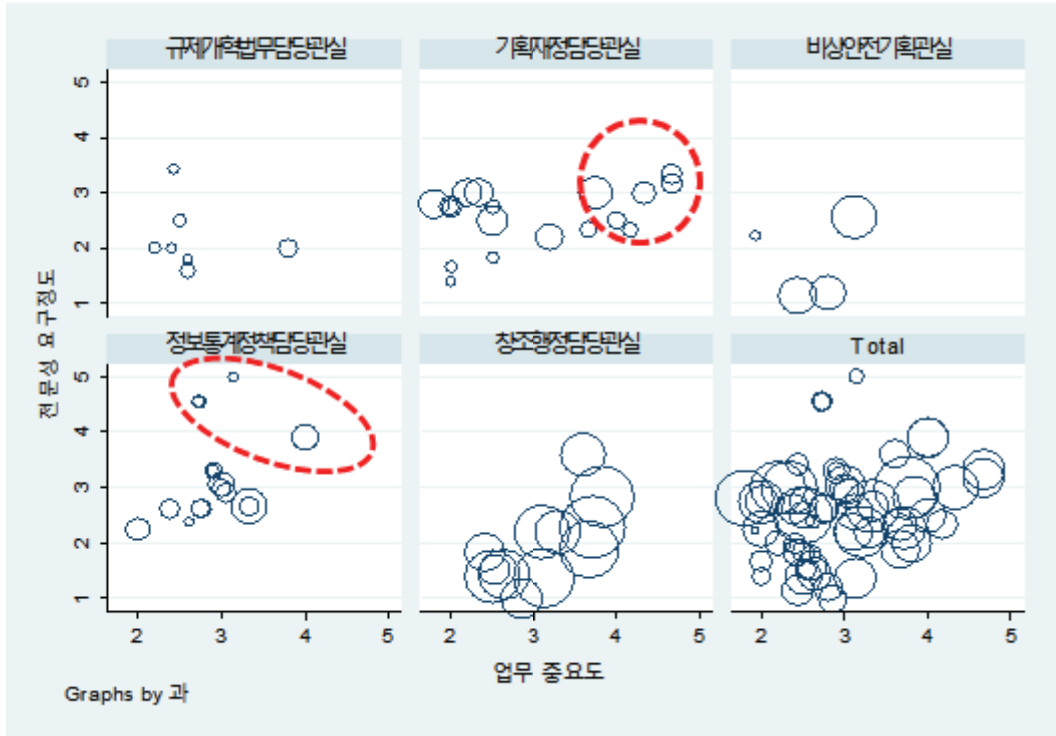
정책기획관실의 전문성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한 추가투입 manpower 소요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1.279, 5년 이상 요구되는 직무의 추가투입 manpower가 0.414로 나타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추가투입 인력 수요가 1~2명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5> 정책기획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기획재정담당관실	0.048	0.636	7.546	0.394	0.000
창조행정담당관실	0.493	1.217	1.798	0.220	0.00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12	0.796	0.575	0.000	0.116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000	0.919	2.484	1.279	0.414
비상안전기획관실	0.125	0.342	0.348	0.000	0.012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그림 5-12> 정책기획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정책기획관실 내에서 인력증원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실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이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과장급 결재 필요 직무, 장관급 결재 직무의 추가소요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직무의 전반적 숙련 요구 수준은 1-3년이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추가투입 필요 인력이 분포하고 있다. 창조행정담당관실은 인력 수요는 있으나, 전반적인 중요도와 숙련 요구기간(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농촌정책국

1) 중요도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직무 중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는 1.173이었고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는 0.5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토목, 건축 등과 관련한 직무에서 추가투입 소요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농업교육훈련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1명 정도의 추가투입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산업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 추가투입 소요 manpower가 0.536, 장관급

결재 직무 0.720으로 나타나 1명 정도의 추가투입 소요가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농촌관광 및 농업 6차산업화 지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다.

<표 5-36>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농촌정책과	0.117	0.501	1.339	1.173	0.571
지역개발과	0.000	0.077	0.707	0.181	0.232
농촌복지여성과	0.011	0.931	0.948	0.362	0.000
농촌산업과	0.000	0.588	3.254	0.536	0.720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농촌정책과에서 3년-5년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가 1.303으로 나타나 중요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산업과는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및 농촌관광 관련 직무에서 약 0.5 manpower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나 최대 1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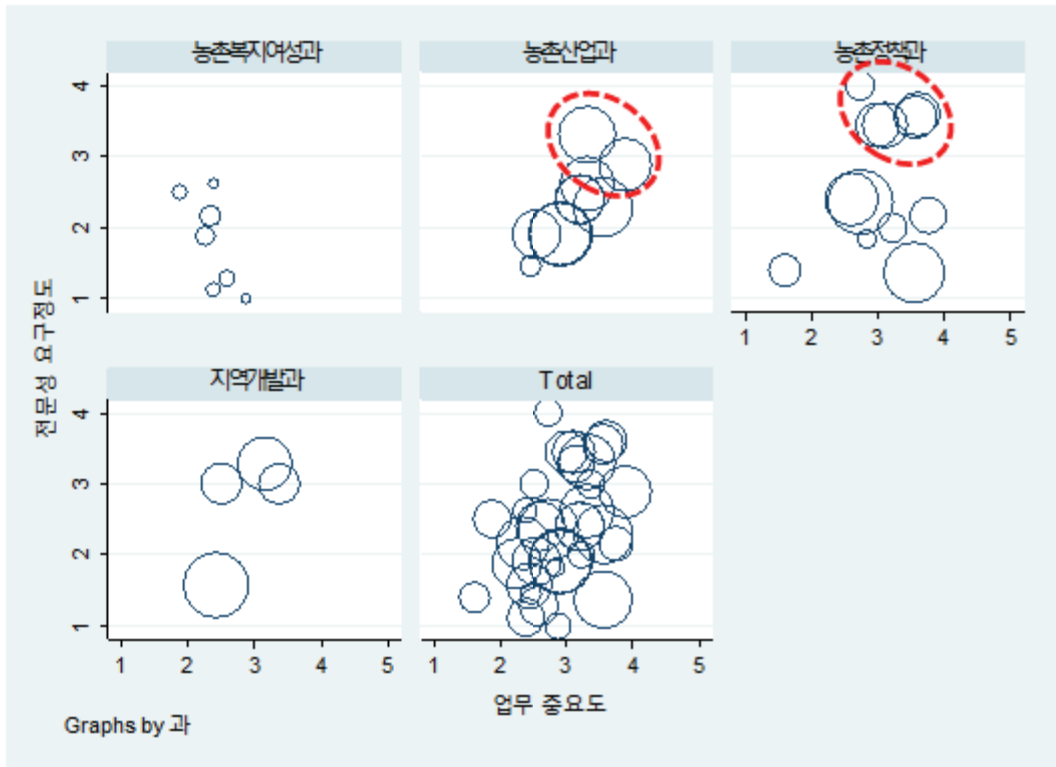
<표 5-37> 농촌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농촌정책과	0.257	1.082	0.916	1.303	0.145
지역개발과	0.032	0.113	0.780	0.204	0.068
농촌복지여성과	0.368	0.491	1.394	0.000	0.000
농촌산업과	0.252	1.893	2.313	0.544	0.072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중요도를 기준으로 농촌정책과와 농촌산업과는 실·국장급 결재 필요 직무에 대한 인력 투입 수요가 제기된다. 전문성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농촌정책과와 농촌산업과는 1-3년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추가 투입 수요가 있다. 농촌정책과는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라 인력 수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개발과와 농촌복지여성과는 부분적인 증원 수요는 있으나, 타 부처에 비해 중요도나 전문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13>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4. 농업정책국

1) 중요도

전통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중장기 플랜 마련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국의 경우 농업정책과에서 장관급 결재를 필요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가 1.407 manpower로 나타났으며 농지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 직무 manpower 2.462,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 0.527 manpower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지과는 농지보전제도, 지역개발관련 협의, 농업진흥지역 운영 업무와 관련한 추가투입 인력 소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인력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manpower는 0.212였으며, 장관급 결재 직무의 경우 1.174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정책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운용과 관련하여 차관급 결재 추가소요 manpower 0.251, 장관급 결재 직무의 경우 0.422로 나타나 1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협경제지원팀은 농업축산부문 신규투자 적정성 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1명 정도의 추가투입 소요(장관급 결재 추가투입 소요 manpower 0.91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농촌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농업정책과	0.084	0.269	1.801	0.123	1.407
농지과	0.002	0.452	0.487	2.462	0.527
경영인력과	0.000	0.548	0.805	0.212	1.174
농업금융정책과	0.000	0.000	0.376	0.174	0.033
재해보험정책과	0.000	0.103	0.906	0.251	0.422
농협경제지원팀	0.000	0.084	0.473	0.000	0.911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한 추가투입 소요 manpower를 분석한 결과 농지과의 경우 3-5년 숙련 기간이 필요한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가 1.518이었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직무의 경우 0.392의 manpower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력과는 3년 이상 직무 0.894로 1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금융정책과는 1년 미만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가 0.585로 약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정책과의 경우 3-5년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는 0.0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농업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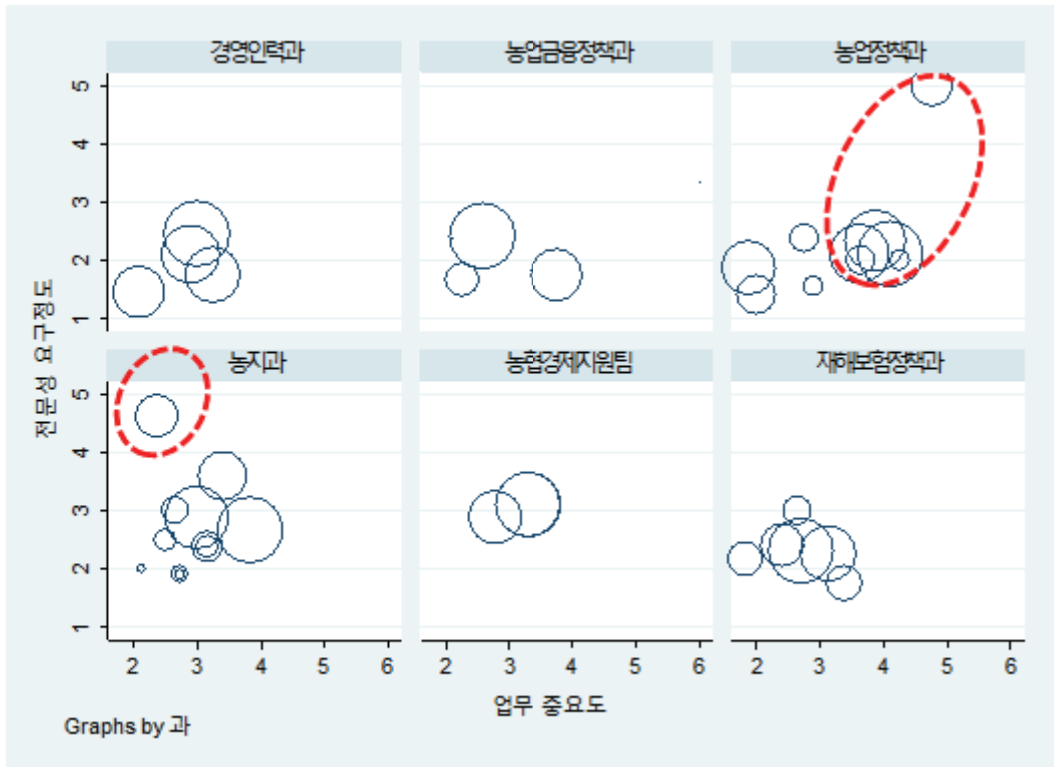
부서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1-3년	3-5년	5년 이상
농업정책과	0.067	1.463	1.851	0.000	0.303
농지과	0.002	0.210	1.809	1.518	0.392
경영인력과	0.235	0.961	0.648	0.894	0.000
농업금융정책과	0.000	0.585	0.399	0.016	0.000
재해보험정책과	0.114	0.245	1.247	0.023	0.051
농협경제지원팀	0.000	0.042	0.294	1.132	0.000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농업정책과의 경우 실·국장급,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중요도도 높고 전문성 요구 수준도 높은 5년 이상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인력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농지과의 경우 업무중요도는 높지 않으나,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은 업무 유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인력 충원 수요가 있다. 경영인력과는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인력 투입 수요가 제기되며, 농업금융정책과(현재 인력 기준) 등은 단계별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추가 투입 필요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문성 요구수준과 중요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농업정책과와 농지과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농업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5. 식량정책관

1) 중요도

식량정책국 직무 중 식량정책과는 중요도 기준 식량정책국 내에서 가장 많은 추가투입 manpower가 나타났는데, 차관급 결재 직무 2.936, 장관급 결재 직무 1.204 manpower가 추가 소요되고 있었다. 식량산업과는 차관급 0.200, 장관급 0.646 manpower 투입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농업기반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 직무 0.236, 장관급 결재 직무에서 0.421의 manpower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농업과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는 장관급 결재에 해당하는 직무에서 1.021, 실·국장급에서 0.97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식량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식량정책과	0.000	0.335	1.719	2.936	1.204
식량산업과	0.011	0.067	0.718	0.200	0.646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000	0.233	0.896	0.000	0.000
농업기반과	0.000	0.337	0.923	0.236	0.421
간척지농업과	0.000	0.571	0.975	0.000	1.021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식량정책국 직무 중 식량정책과는 3-5년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와 5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각각 0.569, 1.791의 manpower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량산업과는 3-5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0.657의 추가투입 manpower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척지농업과의 경우 3-5년 및 5년 이상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각각 0.097, 0.465의 추가투입 manpower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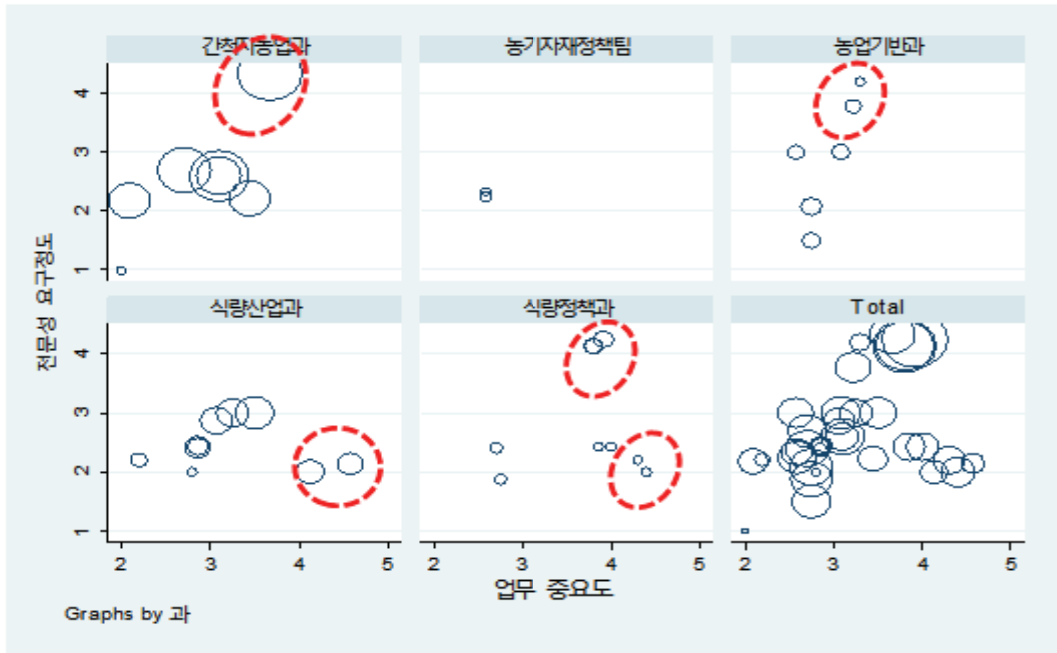
<표 5-41> 식량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식량정책과	0.204	1.258	2.372	0.569	1.791
식량산업과	0.011	0.234	0.741	0.657	0.000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000	0.233	0.756	0.047	0.093
농업기반과	0.042	0.445	1.063	0.079	0.287
간척지농업과	0.066	0.305	1.634	0.097	0.465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식량정책과는 실·국장급 이상 결재가 필요한 업무 중 전문성이 높은 업무와 전문성이 낮은 업무에서 1명 정도의 추가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량산업과는 중요도 및 난이도와는 무관하게 직원별로 유의미한 추가투입 수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단계별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추가 투입 필요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과의 업무 중 1-3년 이상의 높은 전문성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추가투입 인력 수요는 크지 않다. 간척지농업과의 경우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약 1명이 소요된다.



<그림 5-15> 식량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6. 국제협력국

1) 중요도

국제협력국의 경우 업무중요도를 기준으로 국제협력총괄과의 경우 1.434 manpower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통상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투입 소요 manpower가 0.183으로 나타났으며, 장관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0.491 manpower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역정책과는 차관급 및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각각 0.636, 0.118 manpower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은 차관급 결재 직무와 장관급 결재 직무에서 각각 1.475, 0.336 manpower의 추가 소요가 제기되었다.

<표 5-42>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국제협력총괄과	0.369	0.451	1.841	0.092	1.434
농업통상과	0.000	0.000	0.005	0.183	0.491
검역정책과	0.000	0.346	0.630	0.636	0.118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0.000	0.000	0.114	1.475	0.336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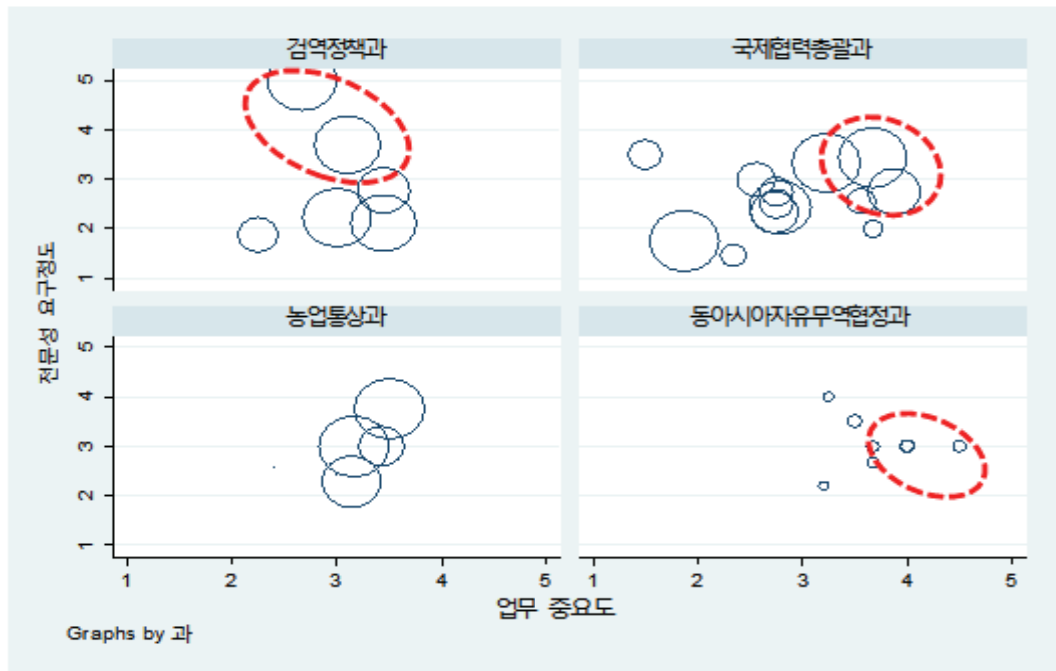
국제협력국의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를 분석한 결과 국제협력총괄과는 숙련 요구기간 5년 이상의 직무에 1.341 manpower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통상과는 3-5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0.327 manpower를 5년 이상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는 0.164의 manpower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역정책과는 3-5년 및 5년 이상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각각 0.165, 0.559의 manpower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와 경우 3-5년 소요 직무에 0.310, 5년 이상 숙련 요구 직무에 0.174 manpower를 각각 추가투입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국제협력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국제협력총괄과	0.212	0.424	2.210	0.000	1.341
농업통상과	0.000	0.000	0.188	0.327	0.164
검역정책과	0.000	0.370	0.636	0.165	0.559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0.000	0.000	1.441	0.310	0.174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그림 5-16> 국제협력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는 중요도가 높은 업무(장관급 결재) 중 1-3년 이상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거나, 5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1~2명)한다. 검역정책과는 업무중요도나 숙련 요구기간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인력 수요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명 내외의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환경변화 등의 대응을 위해 1인당 추가투입 manpower 소요가 낮더라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1-2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축산정책국

1) 중요도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 직무에서 3.087 manpower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역총괄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예.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업무 등) 직무에서 1.838 manpower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관리과의 차관급 결재 필요 직무와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에서 각각 1.617, 1.297 manpower의 추가투입 소요가 확인되었다. 친환경축산팀의 경우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 1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축산정책과	0.000	0.453	2.465	0.434	3.087
축산경영과	0.000	0.718	2.251	0.000	0.394
방역총괄과	0.000	0.132	1.960	0.000	1.838
방역관리과	0.000	0.143	1.401	1.617	1.297
친환경축산팀	0.000	0.113	1.105	0.399	0.073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축산정책국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를 분석한 결과 축산정책과는 5년 이상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2.318 manpower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경영과는 숙련 요구기간 5년 이상 필요 직무에서 1.386 manpower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방역총괄과에서 3-5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2.174 manpower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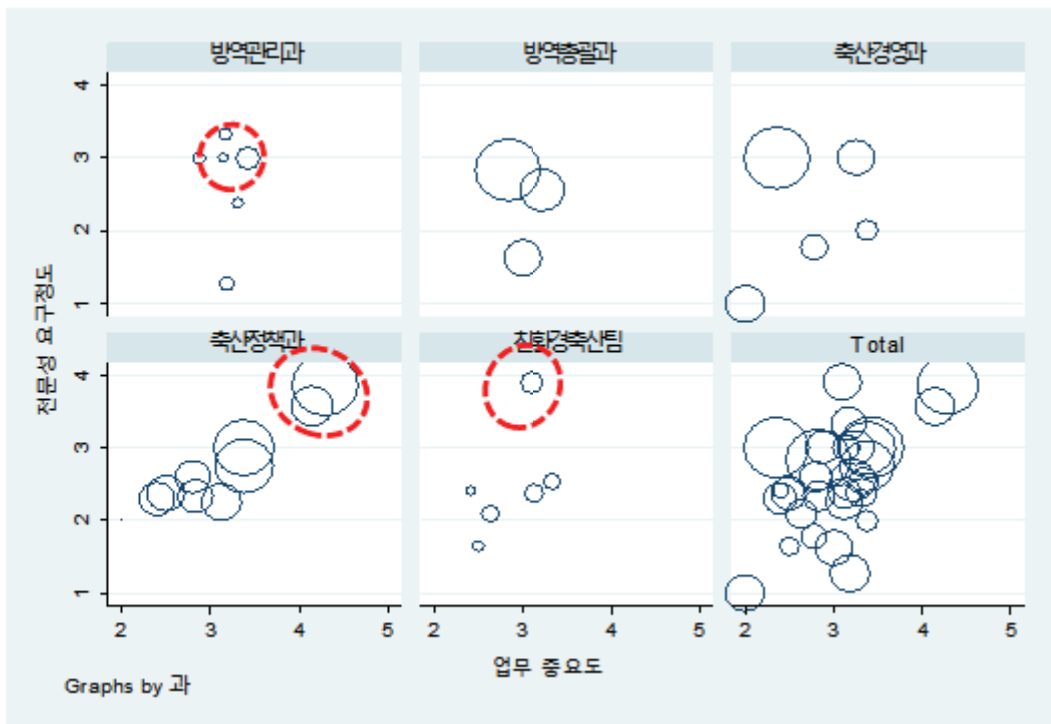
<표 5-45> 축산정책국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축산정책과	0.025	1.227	2.632	0.236	2.318
축산경영과	0.381	0.324	0.903	0.369	1.386
방역총괄과	0.078	0.798	0.880	2.174	0.000
방역관리과	0.248	0.691	2.868	0.163	0.489
친환경축산팀	0.024	0.317	0.587	0.761	0.000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축산정책과는 실·국장급, 장관급 결재 업무와 1-3년 이상 중요도를 지닌 직무에서 추가투입 인력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축산경영과의 경우 실·국장급 중요도를 지닌 직무에서 수요가 있으나,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수요는 불분명하다. 방역총괄과의 경우 장관급,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3-5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추가투입 인력 수요가 있다. 방역관리과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중요도를 지닌 직무와 1-3년 수준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추가투입 인력 소요가 발생한다.



<그림 5-17> 축산정책국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주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8. 식품산업정책관

1) 중요도

식품산업정책관의 식품산업정책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 직무의 증원 소요가 1.0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산업진흥과의 경우 차관급 결재 직무의 증원 소요는 0.717로 나타났으며, 수출진흥과 업무의 경우 장관급 결재 직무의 manpower 추가 소요가 0.660이었다.

<표 5-46>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식품산업정책과	0.000	1.605	3.991	0.394	1.010
식품산업진흥과	0.000	0.066	0.897	0.717	0.055
외식산업진흥과	0.053	0.206	0.881	0.000	0.093
수출진흥과	0.067	0.849	1.762	0.112	0.660
국가클러스터 추진팀	0.000	0.279	1.101	0.205	0.238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식품산업진흥과는 3-5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0.790 manpower 추가소요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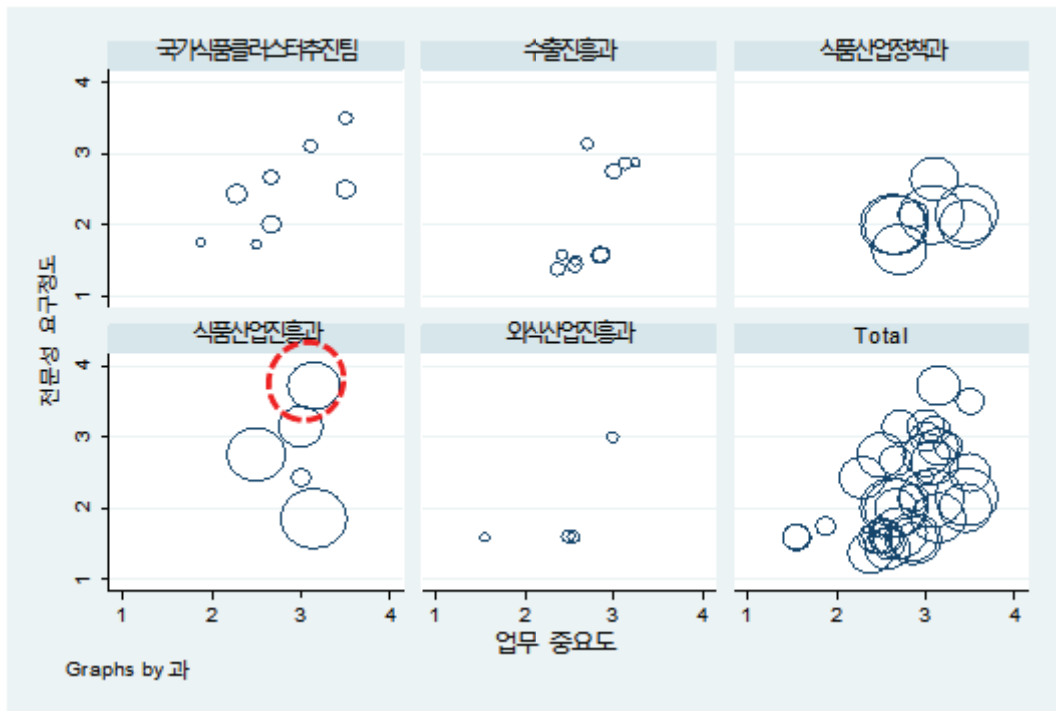
<표 5-47> 식품산업정책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식품산업정책과	0.317	4.486	2.197	0.000	0.000
식품산업진흥과	0.011	0.126	0.809	0.790	0.000
외식산업진흥과	0.185	0.404	0.644	0.000	0.000
수출진흥과	0.733	1.599	1.017	0.101	0.000
국가클러스터 추진팀	0.033	0.262	1.290	0.239	0.000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업무량 투입 필요 비율을 적용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추가 투입 필요 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서는 식품산업정책과와 식품산업진흥과이다. 수출진흥과는 1-3년 미만의 숙련 요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 중 실·국장급 결재를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추가소요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식품산업정책과 업무 중 실·국장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 중 3년 안팎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추가 투입 필요 인력이 형성된다. 다만 식품산업정책과 직무 중 외식산업 관련 직무 및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직무는 정부의 고유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외식산업진흥과의 직무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유성이 낮고 정부의 개입 영역이라고 보기에 타당성이 낮다는 점에서 해당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수출진흥과 및 식품산업진흥과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8> 식품산업정책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직제 순)

주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주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9. 유통소비정책관

1) 중요도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의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의 추가소요 manpower는 0.844이며, 식생활소비정책과의 장관급 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소요 manpower는 0.780이었다. 한편 원예산업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 직무의 추가소요 manpower가 0.586, 원예경영과의 경우 장관급 결재 필요 직무의 추가소요 manpower는 0.569로 나타났다.

<표 5-48>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유통정책과	0.209	0.646	2.583	0.073	0.844
식생활소비정책과	0.038	0.255	1.282	0.172	0.780
원예산업과	0.052	1.321	1.615	0.126	0.586
원예경영과	0.040	0.696	1.598	0.009	0.569

주: 추가투입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투입 manpower를 합산한 값임

2) 전문성

유통정책과의 3년 이상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추가소요 manpower는 0.4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부서의 경우 3-5년 이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증원 소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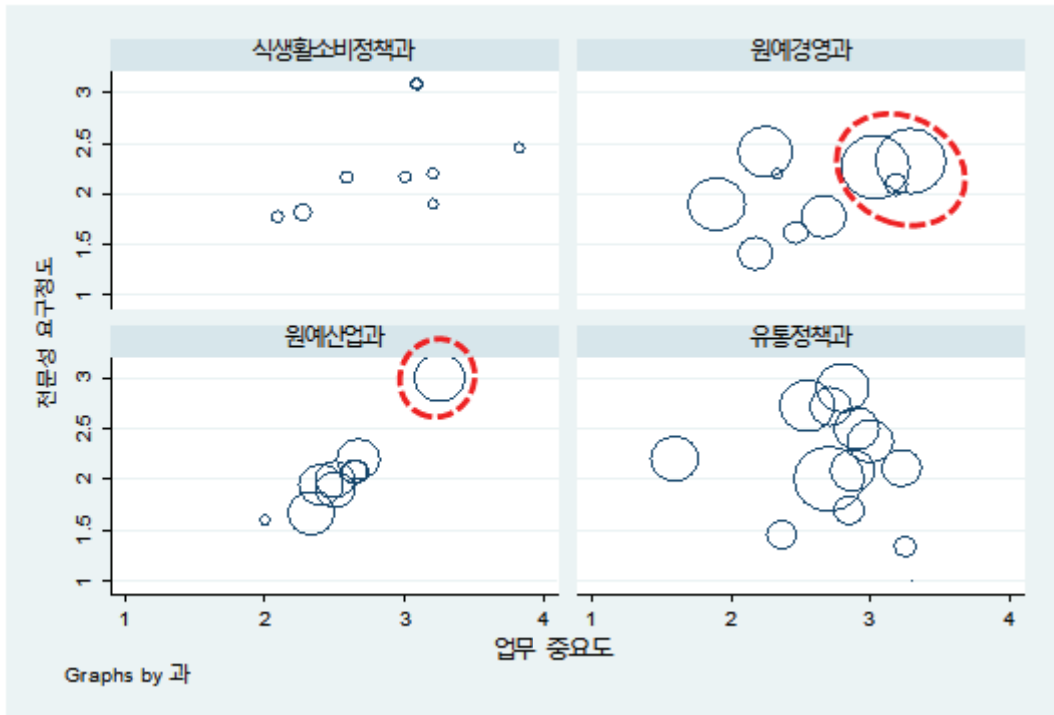
<표 5-49> 유통소비정책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유통정책과	0.329	0.988	2.581	0.457	0.000
식생활소비정책과	0.089	0.702	1.569	0.166	0.000
원예산업과	0.177	1.579	1.748	0.000	0.195
원예경영과	0.108	1.788	1.015	0.000	0.000

주: 추가투입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투입 manpower를 합산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직무 중 원예산업과의 경우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류, 근채류 관련 업무 및 인삼산업 관련 직무에서 추가소요가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경영과는 3년 이상의 직무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manpower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년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manpower 소요가 제기되었다.



<그림 5-19> 유통소비정책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10. 창조농식품정책관

1) 중요도

창조농식품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의 차관급 및 장관급 결재 직무는 각각 0.257, 0.414 manpower의 추가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종자생명산업과의 장관급 결재 직무는 1.453의 추가투입 manpower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0>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부서	담당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
창조농식품정책과	0.000	0.354	2.096	0.077	0.242
과학기술정책과	0.059	0.427	0.846	0.257	0.414
친환경농업과	0.022	0.093	0.619	0.198	0.154
종자생명산업과	0.000	0.999	2.619	0.000	1.453
농기자재정책팀	0.000	0.000	0.593	0.000	0.000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투입 manpower를 합산한 값임

2) 전문성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추가 증원 소요는 종자생명산업과가 3-5년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0.804 manpower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 창조농식품정책관 전문성 기준 추가투입 필요 man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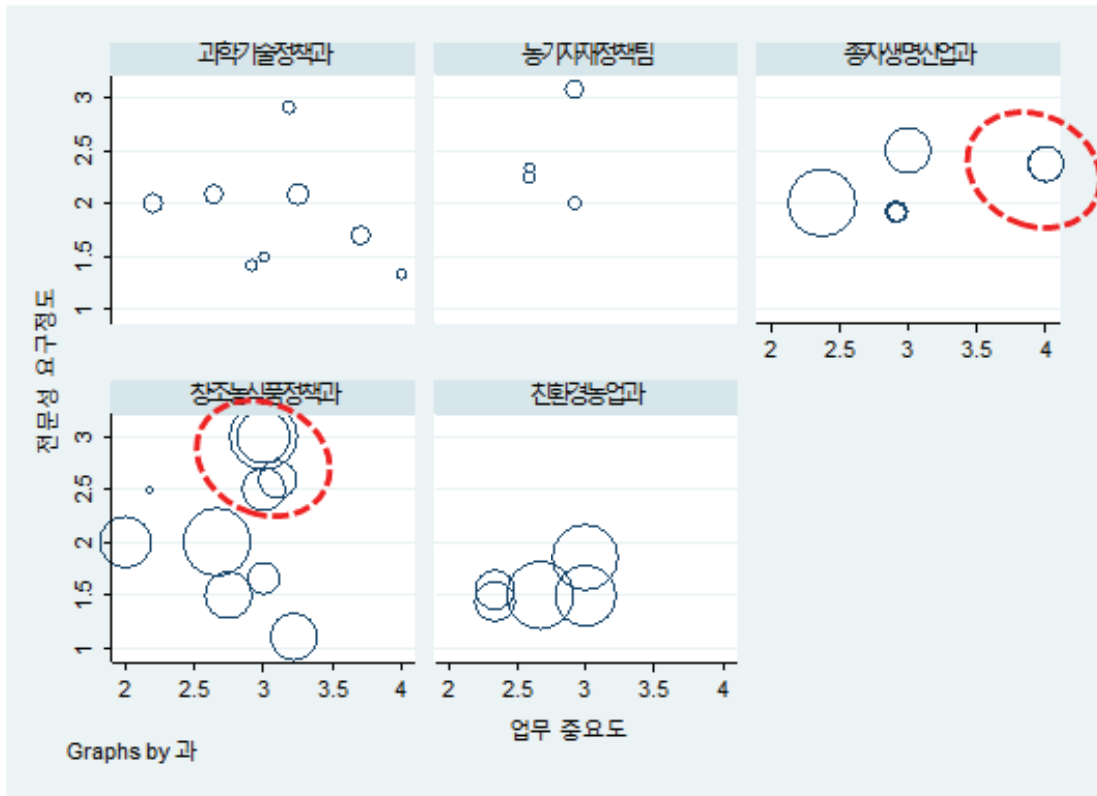
부서	6 개월 미만	6 개월 - 1 년	1-3 년	3-5 년	5 년 이상
창조농식품정책과	0.253	1.545	0.927	0.044	0.000
과학기술정책과	0.162	0.974	0.743	0.123	0.000
친환경농업과	0.066	0.690	0.330	0.000	0.000
종자생명산업과	0.029	3.119	1.120	0.804	0.000
농기자재정책팀	0.000	0.141	0.373	0.079	0.000

주: 추가투입 필요 manpower는 현재 업무량 대비 각 업무단위 기준 추가 투입 manpower를 합산한 값임

3)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창조농식품정책관의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수준에 따른 추가 투입 manpower는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FTA 발표에 따른 농가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 증대 이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드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종자주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업무 영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창조

농식품정책과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업무를 비롯해 신규 농축산 R&D 정책과 관련한 업무 수요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학기술정책과와 연계하여 1~2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또한 종자생명산업과의 경우 업무 수요와 기능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소 2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0> 창조농식품정책관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 간의 추가 투입 manpower 비교

- 주 1: 그래프의 산점도는 응답자가 수행하는 중요도와 난이도의 평균값 기준임
- 주 2: 도형의 크기는 추가투입 요구 manpower의 크기를 각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제4절 추가 및 감소 필요 직무와 인력

1. 지원부서

대변인실 직무 중 정책 이슈에 대한 홍보 및 기획 업무, 영상광고 및 콘텐츠 제작, 농업인 단체와의 홍보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부분에서 증원 소요가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보고와 관련한 직무는 0.5명 정도 감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최종적인 증원 인력은 3명 내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직무 중 산하기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항, 정부합동감사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 직무 등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은 직무에 최소 1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역신고,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직무는 0.5명 정도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영지원과는 중요도 및 전문성 요구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직무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계약직 및 임시직 등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0.5명 정도 감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2> 지원부서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대변인실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 기획 및 계획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 영상광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 언론인터뷰 및 기고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 협조	1	업무보고	0.5
감사 담당관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감사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감사 한국마사회 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	1	병역신고 일상감사 지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항	0.5
운영 지원과	승진 인원협의 및 심사인원 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합 평가 글로벌 중장기 인재양성 교육, 상훈, 징계 업무	1	공용차량 운영 관리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행사지원	0.5

2.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

정책기획관 직무 중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의 증원 소요는 2명이었으며, 특히 국회 대응 업무에 대한 추가투입 인력 소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조행정담당관실 1명(정부업무 평가 및 국정과제 총괄 업무)이나, 감소 필요 직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지원 업무 및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증원 소요 인력이 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3> 정책기획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기획재정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당면 농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국회대응 경제정책 방향 수립 재정관리 편성 총괄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답변서 제출 국회 및 정당업무 신규 농축산식품산업 예산 심의 	2	-	0
창조행정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국정과제 총괄 농식품정책자료집 발간(분장외) 사회혁신 업무 발굴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금요농정토론회(분장외)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1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 정책실명제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금요농정토론회(분장외)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0.4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입법추진 업무 총괄 농식품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농식품규제발굴 및 개선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 	-	자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계 정책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 평가 농축산식품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농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농림축산식품통계 중장기 발전 방안 통계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 통계관련 규정 운영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정보보안 계획수립 	-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회 참가(분장외) 부서개인별 정보보안지수 운영(분장외) 전자기과 공격 대응(분장외) 일일정보보안 뉴스작성 및 공유(분장외)	0.1
비상기획 안전 기획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비훈련 실시 을지연습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	충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3.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국 직무 중 농촌정책과는 토목, 건축 관련 직무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3명, 경영인력과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1명, 농촌산업과는 농촌관광 및 6차 산업 지원 기능으로 2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정책국 내에서 최대 6명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4> 농촌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농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발전 계획·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3	-	-
지역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뉴타운 주택개발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농촌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산업정책 기업유치 및 활성화 농촌 지역 특화·향토 산업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 	2	-	-

4.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에서 8명의 증원 소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농업정책과의 경우 지역농업활성화 및 농업발전 전략, 농가소득 및 안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2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과의 경우 농지보전, 지역개발 업무 등과 관련하여 2명의 인력 증원이, 경영인력과의 경우 농업교육훈련 관련 직무로 1명의 인력 증원이, 재해보험정책과에서도 손해평가관리와 농업인 안전보험등의 업무로 2명의 인력증원이, 농협경제지원팀의 경우에도 최대 1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소 8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5> 농업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한반도 농업, 농촌 발전전략 	2	-	-
농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지역개발관련 협의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농업진흥지역 운영 농지보전 제도 운영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농지종합정보화 	2	-	-
경영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지자체 교육훈련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실습교육장 운영지원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0.5
농업금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	-
재해보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손해평가관리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2	-	-
농협경제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경제사업 점검, 평가계획 수립 농업축산부문 신규투자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 및 조합경제사업 지도 감독 	1	-	-

5.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실은 총 3명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량안보 및 농가 유지를 위한 쌀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량정책과의 증원 수요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식량산업과와 간척지농업과는 각각 1명의 증원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6> 식량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1	-	-
식량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예찰, 방제계획 수립 및 총괄 • 쌀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	-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	-	-
농업기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 농어촌정비법 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	-	-
간척지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 배수개선 계획 	1	-	-

6.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총괄과 2명, 농업통상과 1명, 검역정책과 1명,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2명 등 총 6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및 FTA와 관련한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에 있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제협력국은 일부 홍보 업무 및 평가 업무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전담 부서 이관을 통해 최대 1명 정도의 manpower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7> 국제협력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국제협력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기획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 시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 간담회 개최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분장외) 	0.2
농업통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1	북한농산물 반입	0.2
검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검역관련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생검역 수입검역 및 통상업무 식품방역법령 운용 식물검역제도 수립 식물검역관련 주요정책 수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업무 식품검역제도 수립 	1	-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 투자, 지재권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2	-	-

7.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국은 가축관리, 방역, 신규 축종 개발 및 보급 업무 외에도 최근의 기후변화와 연계한 축산 질병 관련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의 창조농식품정책관실의 기후변화대응 기능과 연계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력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역관리과 2명, 대가축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방역총괄과 2명, 축산경영과 1명, 축산정책과 3명, 친환경축산팀 최대 1명을 증원하는 등 8명에서 9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8> 축산정책국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축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기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등급제도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축산분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도축산업 육성지원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3	-	-
축산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낙농진흥법 운용 	1	-	-
방역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중가축 방역대책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2	-	-
방역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약품 관련 법령 축산물안전관리 효율화 및 여건 조성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2	축산물 안전분야 예결산 축산물 안전분야 국회대응	0.1
친환경축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료 수급안정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이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1	사료관련 단체 지도감독 축산기자재업무총괄 기록물관리, 사무업무, 기타 업무 등	0.1

8.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실은 총 5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진흥과 업무 중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1명의 증원 소요가 제기되었으며, 수출진흥과의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업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업무 등에서 1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정책과의 경우 중요도와 전문성 요구수준에서 1명 정도의 증원 소요가 제기되었으나, 외식산업 업무 및 식품기술개발 업무 등은 타 직무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증원 소요는 아니며, 외식산업과 관련한 업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식산업의 높은 폐업률이 외식산업 자체의 문제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 부분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능과 직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표 5-59> 식품산업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식품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식품산업정책업무 총괄 및 기획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 국가푸드플랜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법령 운영 •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1	-	-
식품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관련 법제정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1	-	-
외식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경영 교육·컨설팅, 외식창업 지원, 식재료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외식문화 선진화 등 	1	-	-
수출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 국회대응 	1	-	-
국가클러스터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변경), • 매년도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조성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 산채개발원 건축·장비 구입, 산채생산기반조성 지원 및 세부운영방안 조정 	1	-	-

9.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의 증원 소요는 총 5명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정책과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 및 계층별 영양지원 강화 등의 공약사항과 화훼산업발전법 제정,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 등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manpower 소요가 제기되었다. 다만, 공약사항이나 핵심과제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조사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향후 업무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추가적으로 1~2명 내외의 증원 소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0> 유통소비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유통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평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공약사항)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핵심과제) 	1	-	-
식생활 소비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 등 식생활교육 및 계층별 영양지원 강화(공약사항) 	1	-	-
원예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지채소생산안정제 추진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인삼산업 종합계획 인삼산업법 운용 	1	-	-
원예 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전문점 및 화훼판매코너 설치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FTA 보완대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청탁금지법, 시장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2	-	-

10. 창조농식품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창조농식품정책과 2명, 과학기술정책과 1명, 친환경농업과 1명,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의 3명으로 총 7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나고야 의정서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자연구 및 관리 지원 기능 강화, 스마트 팜 농업 첨단 농업기술 보급 확산 등을 위해 R&D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조직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종자생명산업과는 생명산업육성과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업무 등으로 2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업무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는 하나, 공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증원하기보다 기존 업무와의 차별화된 고유 영역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61> 창조농식품정책관 증감대상 직무 및 인력

부서	증원 대상 직무	추가 투입 인력 (명)	감소 대상 직무	감소 가능 인력 (명)
창조농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2	-	-
과학기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1	-	-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불제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1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0.1
종자생명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상임위원 및 간사) 	2	-	-
농기자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자재산업육성 정책 및 기획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추진 4차산업 대응 첨단농업기계화 추진 여성친화형농기계 종합보급대책(공약) 	1	-	-

제6장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방향

1. 우리나라 농정환경의 변화와 핵심이슈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농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영향도 감소, 농촌의 공동화·농촌인구의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정 및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 증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성장의 가속화,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증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新)농업시대 도래,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성 증시 경향 등의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現)농정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 및 행정적 대응성을 제고하고, 농업환경보전·식품안전·식량자원확보·농촌지역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및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력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농촌 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친화적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수시대로 인한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안전과 편의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어 농업·농촌계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소득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했고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장주도 정책은 단기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의 분배 불균형,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 유효수요 감소, 사회·정치의 불안정성 증가, 자연자원의 수탈적 이용 등 부작용이 심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분야도 성장 중심의 규모화와 전문화만을 강조하는 대신 소득의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불균형 등을 완화하는 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농업은 기존 농산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배양육, 해수농업 등 새로운 생산영역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현대 농업은 ICT·BT·ET·NT와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 기술은 농업을 첨단화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생산비 증가, 수요 다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스마트팜 확산, 유통혁신, 바이오 식의약품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FTA 이행, 동북아경제 블록화 및 아시아연합경제권 형성 등 글로벌 농산물시장의 전

면 개방화에 따라 ICT 기술 기반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농업 창출이 필요하며,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어메니티, 식품 안전성, 맛과 영양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푸드 확산 및 다각적인 6차 산업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통문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와 접목된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이웃과 사회를 고려한 소비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동물복지, 공정무역, 저탄소 푸드마일리지, 로컬푸드, 슬로푸드 등의 운동은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한 따라서 지속적인 농촌지역개발 및 농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농정환경 변화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6-1>과 같다.

<표 6-1>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기능 요약

구 분	핵심 강화 기능
농식품·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정성 검사 및 관리 기능 ✓ 원산지 표시 인증 및 식생활 교육 지원 기능 ✓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기능 ✓ 농식품 및 농축산물 소비자 보호 기능 ✓ 맞춤형 소비자 식품 개발 기능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친환경 축산 기능 ✓ 농축산물 검역 및 방역 기능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화 대응 기능 ✓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및 식재료 가공 산업 육성 기능 ✓ 식품산업 인력 양성 및 농산물 수출 진흥 기능 ✓ 농식품 제조 및 가공 산업 육성 기능 ✓ 식품 시장 확대 기능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 활성화 기능 ✓ 농촌관광산업화 기능 ✓ 농업인 소득 안정화 기능 ✓ 농업경영인 육성 기능 ✓ 농식품 및 농축산품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 기능 ✓ 농산물 및 식품 가격 안정화 기능
농촌 복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생활권 구축 및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기능 ✓ 농업인 자녀 및 여성 농업인 정책 기능 ✓ 농촌 다문화 정책 추진 기능 ✓ 귀농, 귀촌 정책 지원 기능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통상 기능 ✓ 식량안보 및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능 ✓ FTA, DDA 등 시장개방 대응 기능 ✓ 농업 국제원조 관련 국제개발협력 기능
스마트 농정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거버넌스 구축 기능 ✓ 지방농정 강화 및 맞춤형 농정 지원 기능

2.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방향성

앞의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림축산식품의 핵심 기능을 보면 농식품·축수산품 안정성 확보,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농촌 복지 구현,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 강화, 스마트 농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강화 기능이 도출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능을 조직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거시기능에서 외부환경,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시기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전계획, 역대 농식품부 기능, 지난 1년간 수행한 공문서를 통해 부서간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직개편의 개선사항과 조직설계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개편 개선사항으로 ① 기능 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실행에 균형감, ② 거시, 미시(내부)기능 모두 협업, 융합에 대한 적극적 자세, ③ 미래농촌, 농업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기능 수행, ⑤ 대내외 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⑥ 지속가능한 내부 기능 조정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이 요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설계의 핵심 단어로 지능, 융합, 안전,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지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기능 강화이며, 융합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협력 강화, 안전: 소비자 주도와 연계된 식품안전과 방역기능 강화, 다양은 혼술·혼밥 등에 선제적 대응이다. 무엇보다도 조직설계는 현재와 미래의 유기적 결합에 중점을 두었다. 즉 현재 중심의 정책기능(농업인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은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능(지속가능한 농산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을 확대한다.

<표 6-2> 기능분석 결과와 조직개편 개선사항 도출

대분류	중분류	주요 내용
거시 기능 분석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높은 농업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기계화와 연구개발 사업 간 중복 √ (농촌): 국민 여가공간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갖고 있으나, 낮은 농가소득과 고령화로 농촌 지역공동체 해체 √ (식품): 높은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식생활 서구화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담
	국정과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4대 정책목표 중 ii) 농업인 소득안정과 iii) 살기 좋은 농촌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매우 높음 √ 농식품부 4대 정책목표 중 i)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iv)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낮음 √ 조직의 성과관리 목표체계는 현재 중심의 정책은 잘 반영되어 있으나, 미래지향성 부족
미시 기능 분석	발전계획 목표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거시기능은 균형 있게 잘 수립되어 있음 √ 실제로 진행된 목표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능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않음 √ 농촌, 농업, 축산 이외의 기능과는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능은 저조(인재양성 포함)
	업무보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능과의 융합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융합에 소극적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
	공문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정책과, 방역관리과, 방역총괄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등은 기능에 있어 중복 → 기능이관 √ 계획부서(문서발신 ↑)와 집행부서(문서수신 ↑)로 구분 가능



<조직개편 개선사항 도출>

- 기능 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실행에 균형감
- 거시, 미시(내부)기능 모두 협업, 융합에 대한 적극적 자세
- 미래농촌, 농업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기능 수행
- 대내외 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 지속가능한 내부 기능 조정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

<조직설계 방향>

- 조직 설계의 핵심 단어: 지능, 융합, 안전, 다양
 - 지능: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기능 강화
 - 융합: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협력 강화
 - 안전: 소비자 주도와 연계된 식품안전과 방역기능 강화
 - 다양: 혼술·혼밥 등에 선제적 대응
- 조직 설계 실천 전략: 현재와 미래의 유기적 결합
 - 현재 중심의 정책기능(농업인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은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기능(지속가능한 농산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을 확대

기능분석과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국외사례에서 조직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착안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농촌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확대,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농정 고객을 확대,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소득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 농업·농촌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 보상 차원의 지원 요청이 아닌 경제·사회·환경 책임 완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 요청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국외사례는 우리에게 지속가능성, 감축관리, 기술 활용이라는 중요한 조직설계에 핵심 단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농업은 아직 조직과 인력측면에서 타국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감축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융합은 타 국가에서도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농업은 단순히 하나의 품목 또는 산업이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대한 민국이 갈길의 지표로써 조직설계에 있어서도 통합적 접근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 국외사례 분석결과 및 조직설계 방향 도출

분야	국외사례 주요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통합 정책으로 전환 ✓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능 확대(일본) - 비관세장벽과 무역협정에 대응 조직 신설 및 통합(미국) - 소비안전국에서 식품안전정책을 총괄(일본),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 연방식품농업부 담당(독일) -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체계 구축(중국) ✓ 지속가능성, 기후보전, 생물다양성, 환경자원보존, 바이오에너지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립업을 담당하는 실·국(제5실) 설치(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 추진에서 전략적 콘셉트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독일) - 환경보호국과 동물건강복지국(영국)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 안정, 다원적 가치 증진, 식품안전의 중요도 ↑ ✓ 독일, 프랑스, 영국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및 식품안전 ✓ 중국과 일본은 수출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 ✓ 농업주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체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 ✓ 농업시장이 개방 → 농가의 정상이윤 ↓ → 보조금지원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식품 안전성, 복지 인력투입 증가 ✓ 농촌개발(농업 기술교육 등), 검역(식품안전, 위생, 동식물질병관리), 산림관리 ✓ 재정절감에 따른 인력감축을 위해 기술 적용의 확대 ✓ 현장서비스 제공분야 업무 증가



<개선사항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확대 ●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농정 고객 확대 ●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 소득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 ● 농업·농촌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 ● 보상 차원의 지원 요청이 아닌 경제·사회·환경 책임 완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 요청 	
<조직설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설계의 핵심 단어: 지속가능성, 감축관리, 기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의 인력확대와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 - 통상 및 수출촉진 기능 강화 - 농촌과 타 분야와의 협업 기능 강화(사회혁신 등 국정과제와 연계) 	

(現)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 진단 및 국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본 조직 개편의 7대 목표는 다음의 <그림 6-1>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7대 목표**

1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6차 산업 선도 농정행정 구현
2	안전한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3	新미래농업산업과 지역농정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지원 행정조직 기반 확립
4	농축산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지원 체계 강화
5	농업문화 선도체계 확립 및 농촌생활 속 복지지원 체계 구축
6	글로벌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 역량 제고
7	중복·분산된 기능 재편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그림 6-1>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7대 목표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現)농림축산식품부의 ①조직 기능 일관성 확보, ②중복·분산된 기능 재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③농업·농촌 신수요 대응력 및 이행역량 확보를 통한 조직 성과창출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의 <그림 6-2>와 같이 조직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였다.

개편 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부처차원의 행정수요 대응 및 핵심기능 이행을 위한 조직 신설 - (新)기능 확대에 따른 통솔 범위 조정을 위한 조직 신설
기능 조정	이관	- (現)중복·분산된 기능에 대한 재조정 - (現)조직 기능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부서 간 기능 이관
	강화	- (新)농정 실행력 강화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통폐합	- (現)중복·유사기능 간 통폐합에 따른 재조정
조직명칭 변경		- (新)미래환경변화 대응 조직개편의 당위성 및 기능적 명확성 제고

<그림 6-2>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방향

또한,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및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기능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력 증감 산출 기준은 아래의 <그림 6-3>과 같다.

산출기준(단위부서)		세부 내용
인력증감 산출 도출 기준		- 인력증감은 개별 단위부서의 직무 기준으로 분석 - 정량적으로 미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직위가 아닌 (現)직무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 - 정성적으로 미래 업무량이 증가 혹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 및 감축안 제시
인력 소요 분석	투입시간 기준	- (증가) 현재 담당 업무의 직무량이 0.5 manpower이고 추가 투입필요 수준에 대해 30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0.5의 30%인 0.15 manpower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 - (감소) 현재 담당 업무의 직무량이 0.5 manpower이고 추가투입 필요 수준에 대해 -30%로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나 중요도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투입 manpower의 30%에 해당하는 0.15 manpower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
	업무 중요도 및 전문성 기준	- (증가) 중요도 수준과 전문성 요구 수준 중 최소 1개 이상 평균 4점 이상인 직무군은 업무량 증가 소요가 높고, 전문성 혹은 중요도가 높은 직무이므로 우선적으로 증가가 필요한 직무로 판단 - (감소) 중요도 수준과 전문성 요구 수준이 모두 평균 2점 미만인 직무군은 업무량 감소 필요성이 높고, 전문성이나 중요도가 모두 낮은 직무이므로 우선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직무로 판단
	환경분석 및 초과 소요 평균 업무량 기준	- 환경 분석 및 기능 분석 결과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의 경우 직무분석 결과와는 별도로 추가투입 인력에 반영함 - 과소요 평균 업무량이 0.3 이상일 경우 1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는 교육,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지님

<그림 6-3>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기능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력 증감 산출 기준

제2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단기(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단기안과 장기안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설계시 가장 고려되는 기준은 먼저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이다(이재호, 2012).

소망성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기준에는 조정력 요구된다. 개별부서의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전체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둘째는 계속성과 안정성이다. 조직재설계 한 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는 적합성으로 개별부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인가의 기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농업, 축산, 식품 등 품목별 기능과 일반기능이 혼합되어 있어 이러한 여건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설계가 바람직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의 측면, 즉 실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행가능성의 첫째 하위기준으로는 조직편성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있다. 조직편성의 비용이란 조직 재설계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현재의 체제에 대한 개편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개편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개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면, 그 편익을 상쇄하게 된다. 즉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면 그것을 장기적인 대안이 된다. 반면 비용이 적게 소용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1안)와 중장기(2안)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농식품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방역문제다. 과거와 달리 조류인플루엔자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달걀 파동,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 방역기능이 무엇보다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와 관련된 기능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동물건강복지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물건강, 동물건강복지계획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 한국도 반려견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직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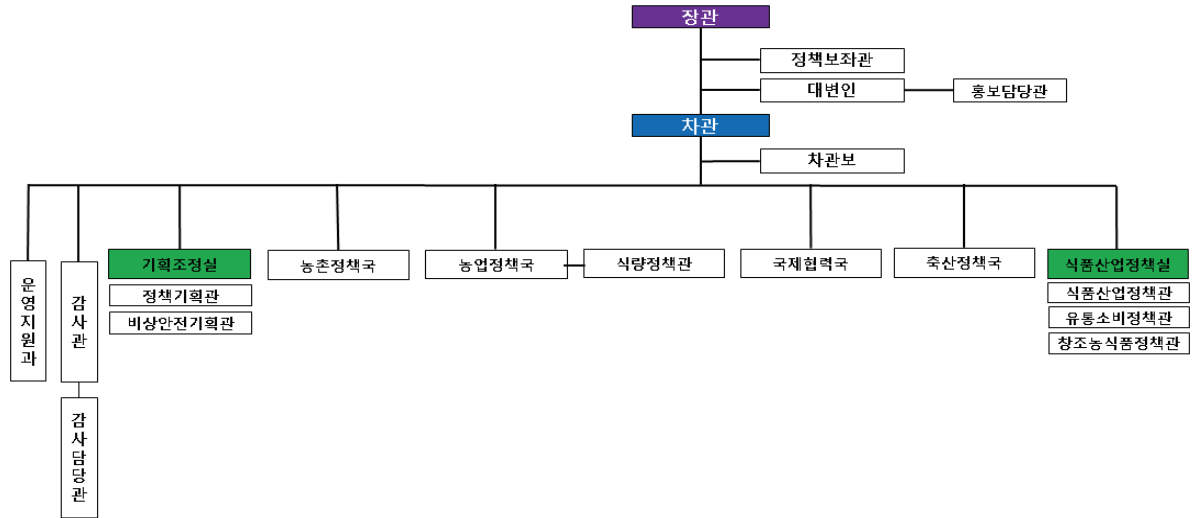
다음으로 농촌정책에 대한 재인식이다. 국외사례를 보면 환경보호,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을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타부처와의 통합적 정책을 통해 농촌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의 핵심인 사회혁신을 농촌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타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유사사업의 연계,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업발전에서의 핵심은 보조금 등 금융지원이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국외 대부분의 국가도 수출촉진과 함께 보조금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보조금의 누수와 중복 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점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정책을 일찍부터 수행하여 다양한 방지책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과 관련된 금융정책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금융과 관련된 조직을 일원화하여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경우 현재 당면한 문제는 자유무역확대와 농업통상정책이 점진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다. 통상의 경우 식품수출과 생산물 수입등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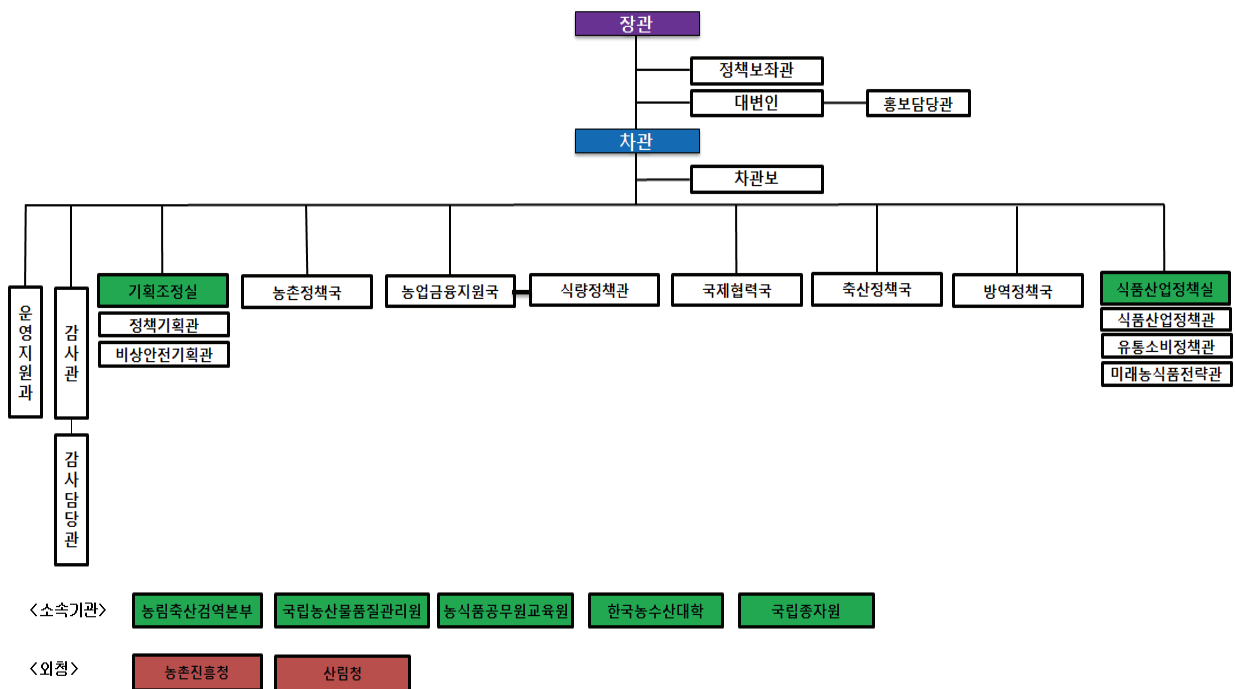
측면에서 한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방역국으로 신설하고, 농업정책국을 농업금융지원국으로, 축산정책국을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분리하는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한다. 아래의 <그림 6-4>와 <그림 6-5>는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4>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5> (新)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5국 체제

<표 6-4>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1과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 1과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비상기획안전기획관	5관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5관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4과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농업정책국에서 이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신설)	5과 1팀 (1과 1팀 증설)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농촌정책국으로 이관)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	5과1팀	농업 금융 지원국 (명칭 변경)	농업정책과 농지과 농업금융정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식량정책관에서 이관)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	4과 1단 1팀 (1과 축소, 1단 증설)
식량 정책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금융지원국으로 이관)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4과 1단	식량 정책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4과 (1단 축소)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4과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수출진흥과 (식품산업정책관에서 이관) 자유무역협정과 (농업통상과, 동아시아무역협정 통합)	3과 (1과 축소)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정책국으로 이관) 방역관리과 (방역정책국으로 이관, 분리) 친환경축산팀 (과로 확대)	4과 1팀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과 (친환경축산팀을 과로 확대, 명칭변경) 동물복지과(신설)	4과 (1팀 축소)
	-	-	방역 정책국 (신설)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방역관리과 기능 분리)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방역관리과 기능 분리)	3과 (증설)
식품	식품산업정책과	4과 1팀	식품	식품산업정책과	3과 1팀

개편 전		개편 후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국제협력국으로 이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과 축소)
유통 소비 정책관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유통 소비 정책관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4과
창조 농식품 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미래 농식품 정책관 (명칭 변경)	미래농식품정책과(명칭변경)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4과 1팀
4국 5관	2실 5관 34과 1단 4팀	5국 5관	2실 5관 35과 1단 4팀
		1국 증설	1과 증원

단기(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6-5> 단기(안)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단기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가능성, 비용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 현실대안으로서 조직 및 인사이동의 최소화하여 실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미래상황에 대처 및 대응이 미흡하거나 늦을 수 있음 - 사업별, 정책별로 조직이 묶여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 - 수직적 조직체계 상, 실-관-과, 실-국-과, 국-과 등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 편제가 혼란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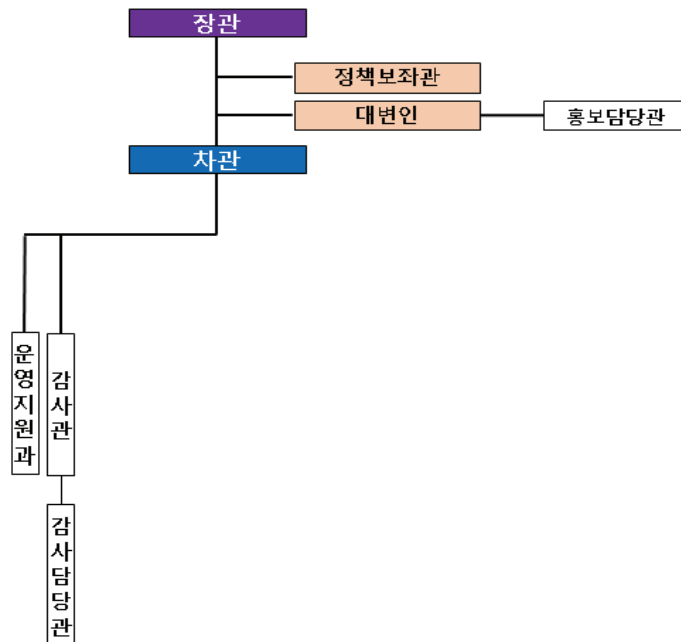
1. 지원부서 조직 재설계 방안

지원부서의 기능 분석 결과, 대변인실의 경우에는 각종 홍보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보도 계획 수립 및 조정,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영상광고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및 부서 간 조정이 요구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 해석, 감사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국무조정실 등 외부 요청에 대한 조사,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 업무,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 평가, 교육, 상훈, 징계 총괄 업무, 국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다면평가, 보안 업무, 인사업무 등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5>는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6>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 기획 및 계획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 영상광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 언론인터뷰 및 기고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농업인단체와의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 	1
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감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감사 한국마사회 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신고 일상감사 지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항 	1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 인원협의 및 심사인원 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합 평가 글로벌 중장기 인재양성 교육, 상훈, 징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운영 관리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행사지원 	1

(現)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 6-6>과 같이 현재의 소속을 유지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및 기능에 근거하여 기능강화 및 인력증감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림 6-6>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2. 정책기획관 조직 재설계 방안

정책기획관의 기능 분석 결과, 종합적인 농정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업무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조정관리, 그리고 타 부처 간의 협업 행정 기능 강화 및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농정행정 혁신 과제 발굴 기능들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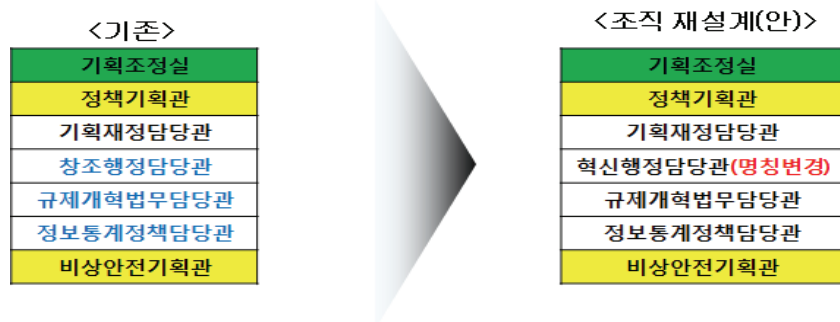
기획재정담당관실은 농정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정담당관실의 경우는 공무원 통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업무, 소요정원 관련 업무 및 재정지원관리제도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사회혁신 관련 업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국회 입법 추진 업무 총괄, 정부 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국정과제 등 법제업무 추진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의 경우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 부문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업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가보안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상안전기획 기능 수행을 위하여 (現)비상안전기획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의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재난관리평가 및 훈련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現)정책기획관 소속의 창조행정담당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7>은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이다.

<표 6-7>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당면 농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국회대응 경제정책 방향 수립 재정관리 편성 총괄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답변서 제출 국회 및 정당업무 신규 농축산식품산업 예산 심의 	-	2
혁신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국정과제 총괄 농식품정책자료집 발간(분장외) 사회혁신 업무 발굴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금요농정 타운홀미팅(분장외)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 정책실명제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입법추진 업무 총괄 농식품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농식품규제발굴 및 개선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번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계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 농축산식품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농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농림축산식품통계 중장기 발전 방안 통계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 통계관련 규정 운영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정보보안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회 참가(분장외) 부서개인별 정보보안지수 운영(분장외) 전자기파 공격 대응(분장외) 일일정보보안 뉴스작성 및 공유(분장외) 	-
비상안전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비훈련 실시 을지연습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그림 6-7>은 정책기획관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7> 정책기획관 재설계(안)

3. 농촌정책국 조직 설계 방안

농촌정책국에 대한 환경분석, 해외사례분석 및 기능 분석을 종합한 바, 농촌 지역개발과 연계된 농촌산업 육성 관련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 등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농촌정책과**는 농업·농촌 및 발전 계획·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과는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에 관한 사항,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뉴타운 주택개발,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복지여성과**에서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산업과**는 농촌 산업정책, 기업유치 및 활성화, 농촌 지역 특화·향토 산업, 농촌산업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인력과는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6-8>은 농촌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기능조정	이관	• (現)농업정책국 기능(경영인력과) → (新)농촌정책국으로 이관
	강화	• 지역개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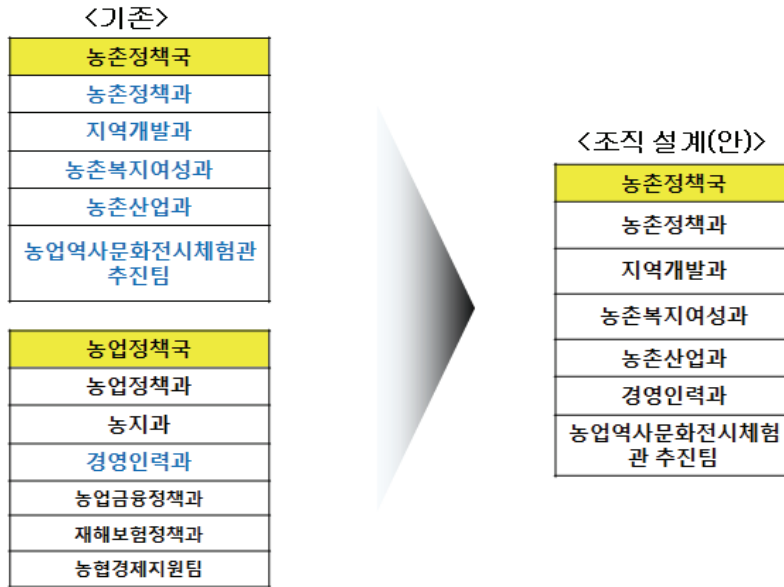
<그림 6-8> 농업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표 6-8> 농촌정책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발전 계획·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	3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촌뉴타운 주택개발 •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농촌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산업정책 • 기업유치 및 활성화 • 농촌 지역 특화·향토 산업 •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 	-	2
경영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지자체 교육훈련 •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실습교육장 운영지원 •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1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에 관한 업무 	-	-

아래의 <그림 6-9>는 농촌정책국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9> 농촌정책국 재설계(안)

4. 농업금융지원국 조직 설계 방안

농업정책국에 대한 환경분석, 기능 분석을 종합한 바, 농업정책국은 **농업금융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농업정책국의 기본 업무를 분석해 보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국의 기능을 명확하게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농업정책과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 정책,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업무를 강화하여 기존 FTA 보완 대책 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농업 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만 농업정책과의 남북협력 관련 업무는 국제협력총괄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농지과는 특정지역개발관련 협,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농업진흥지역 운영, 농지보전 제도 운영,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농지종합정보화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금융정책과는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업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소득 안정추진단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정책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손해평가관리,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관련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원팀은 농협경제사업 점검, 평가계획 수립, 농업축산부문 신규투자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 및 조합경제사업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6-9>는 농업금융지원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기능조정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 → (新)농업금융지원국으로 이관
	강화	• 금융지원, 농가소득, 경영안전, 지역농업 활성화 등 관련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 (現)농업정책국 → (新) 농업금융지원국으로 명칭변경

<그림 6-10> 농업금융지원국 조직 개편 방향

<표 6-9> 농업금융지원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 한반도 농업, 농촌 발전전략 	-	2
농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개발관련 협의 •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 농업진흥지역 운영 • 농지보전 제도 운영 •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 농지종합정보화 	-	2
농업금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
농가소득 안정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	-
재해보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 손해평가관리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	2
농협경제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경제사업 점검, 평가계획 수립 • 농업축산부문 신규투자 적정성 검토 • 농협중앙회 및 조합경제사업 지도감독 	-	1

아래의 <그림 6-11>은 농업금융지원국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11> 농업금융지원국 재설계(안)

5. 식량정책관 조직 설계 방안

식량정책관 소속의 식량정책과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기능으로 분석되었다. 식량산업과의 경우에는 밭 및 식량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업무,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 총괄 업무, 식량산업 R&D 업무, 쌀 소비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기반과는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농어촌정비법 운용,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척지농업과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배수개선 계획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10>은 식량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기능 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 → (新)농업금융지원국으로 이관

<그림 6-12> 식량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표 6-10> 식량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	1
식량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예찰, 방제계획 수립 및 총괄 • 쌀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1
농업기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 농어촌정비법 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	-
간척지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 배수개선 계획 	-	1

아래의 <그림 6-13>은 식량정책관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13> 식량정책관 재설계(안)

6. 국제협력국 조직 설계 방안

국제협력국은 환경분석, 국외 사례, 기능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농업통상과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는 자유무역협정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역협정을 전담하는 것보다는 통상이라는 측면에서 협정체결을 고민할 시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검역정책과는 신설된 방역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검역정책과의 내부 기능에 방역이 있으며, 검역과 방역은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역의 경우 해외정보와 협력이 요구될 경우 국제협력국과 유기적 협력을 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신품산업정책관의 수출진흥과 업무는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국은 통상과 수출정책을 통합하여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 농업 현안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하고 분산된 통상협력 지원수단을 통합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총괄과는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기획,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시행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간담회 개최,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 기능이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진흥과는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국회대응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과는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 투자, 지적권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6-11>은 국제협력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식품산업정책관 기능(수출진흥과) → (新)국제협력국으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농업통상과) → (新)국제협력국 자유무역협정과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검역정책과) → (新)방역정책국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 수출진흥, FTA 관련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新) 자유무역협정과로 명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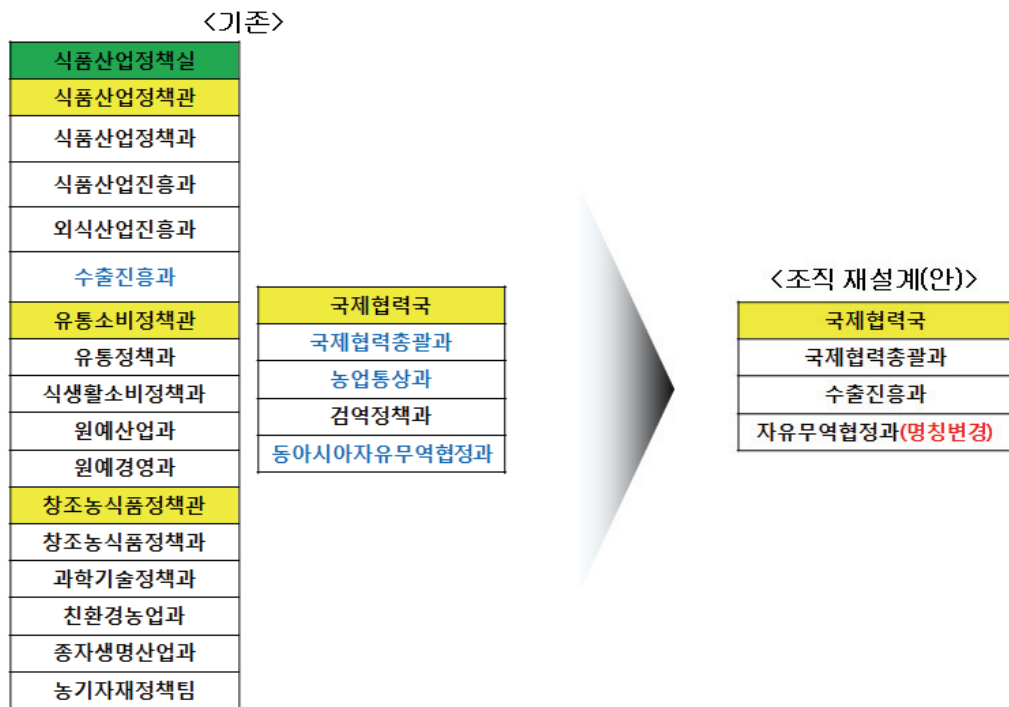
<그림 6-14> 국제협력국 조직 개편 방향

<표 6-11> 국제협력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국제협력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 해외농업개발사업기획 • 대외경제장관회의 •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 간담회 개최 •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분장외) 	2
수출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 국회대응 	-	1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자유무역협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 투자, 지재산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농산물 반입 	3

아래의 <그림 6-15>는 국제협력국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15> 국제협력국 재설계(안)

7. 축산정책국 조직 설계 방안

축산정책국은 환경분석, 국외사례, 기능분석 결과 축산정책과 방역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축산정책국은 축산업무의 친환경축산팀 업무를 강화하여 축산환경과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문제가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신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는 방역정책국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정책과 중단기 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등급제도,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축산분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도축산업 육성지원,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경영과는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낙농진흥법 운용에 관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환경과는 조사료 수급안정,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축산물안전관리 효율화 및 여건 조성,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설해야 할 동물복지과는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동물용 의약품 기준, 반려동물 문화 조성 포함,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기능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능은 농식품부 업무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래의 <표 6-12>는 국제협력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동물복지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 (新)방역정책국으로 이관
	강화	• 축산정책, 축산환경, 동물복지 기능 강화
조직명칭변경		• (現)친환경축산과 → (新) 축산환경과로 명칭변경

<그림 6-16> 축산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표 6-12> 축산정책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축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기 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등급제도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축산분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도축산업 육성지원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	3
축산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낙농진흥법 운용 	-	1
축산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료 수급안정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이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	1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 축산물안전관리 효율화 및 여건 조성 •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동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동물용 의약품 기준 • 반려동물 문화 조성 포함 •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	12

아래의 <그림 6-17>은 축산정책국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17> 축산정책국 재설계(안)

8. 방역정책국 조직 설계 방안

방역정책국은 환경분석, 국외사례, 기능분석 결과, 축산정책국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와 국제협력국의 검역정책과를 이관 받아 신설한다. 방역총괄과는 방역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방역관리과는 구제역방역과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분리한다.

방역정책과는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증가축 방역대책,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방역관리과에서 분리된 구제역방역과는 구제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구제역방역과 업무 총괄, 동물방역대책 수립 추진, 살처분 보상금, 소가축방역대책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조류, 개, 고양이, 꿀벌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6-13>은 방역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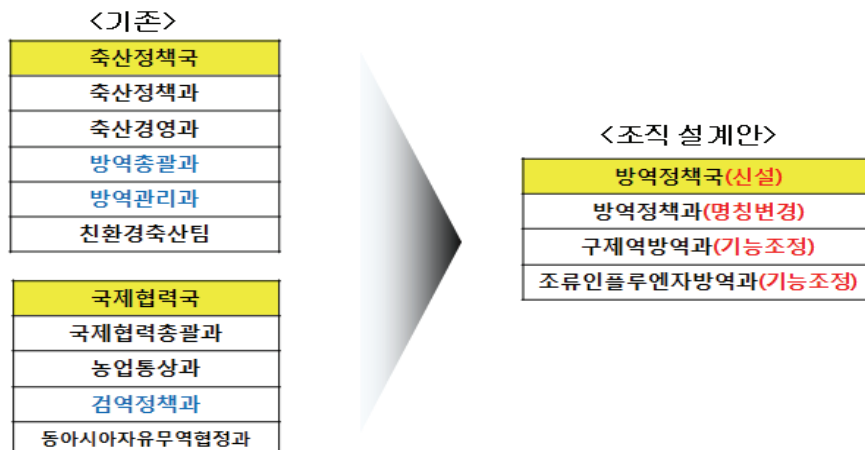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방역정책국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방역관리과) → (新)방역정책국(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으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검역정책과) → (新)방역정책국으로 이관
	강화	• 방역총괄, 검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방역기능 강화
조직명칭변경		• (現)방역총괄과 → (新)방역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18> 방역정책국 신설 방향

<표 6-13> 방역정책국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방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중가축 방역대책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	2
구제역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구제역방역과 업무 총괄 동물방역대책 수립 추진 살처분 보상금 소가축방역대책 	-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조류, 개, 고양이, 꿀벌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	1

아래의 <그림 6-19>는 방역정책국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19> 방역정책국 재설계(안)

9. 식품산업정책관 조직 설계 방안

식품산업정책관에서는 수출진흥과를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하고, 3과 1팀으로 재조정한다.

식품산업정책과에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검토 업무, 농식품 소비홍보 사업 추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품산업진흥과의 경우에는 김치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산업진흥과에서는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진흥과의 경우, 농수산물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업무,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수출 지원사업,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클러스터식품추진팀의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14>는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식품산업정책관 기능(수출진흥과) → (新)국제협력국으로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기능(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 → (新)식품산업정책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외식, 국가단위 식품클러스터 관련 기능 강화

<그림 6-20> 식품산업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표 6-14>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식품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식품산업정책업무 총괄 및 기획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 국가푸드플랜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법령 운영 •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 계획 수립 등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	1
식품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관련 법제정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	1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 농식품 기술창업(벤처) 육성(공약) 		
외식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경영 교육·컨설팅, 외식창업 지원, 식재료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외식문화 선진화 등 	-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매년도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조성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산채개발원 건축·장비 구입, 산채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세부운영방안 조정 	-	1

아래의 <그림 6-21>은 식품산업정책관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21> 식품산업정책관 재설계(안)

10. 유통소비정책관 조직 설계 방안

유통소비정책관은 변화가 없으며, 환경분석, 국외사례, 기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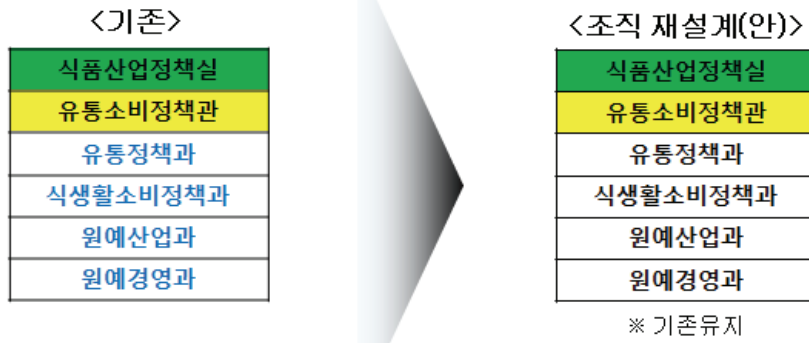
유통정책과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평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공약사항),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핵심과제)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는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 등 식생활교육 및 계층별 영양지원 강화(공약사항) 관련 기능들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예산업과에서는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추진,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인삼산업 종합계획, 인삼산업법 운용 등에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예경영과의 경우에는 유통전문점 및 화훼판매코너 설치,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FTA 보완 대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청탁금지법, 시장 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업무와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15>는 유통소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15> 유통소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평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공약사항)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핵심과제) 	-	1
식생활소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 등 식생활교육 및 계층별 영양지원 강화(공약사항) 	-	1
원예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지채소생산안정제 추진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인삼산업 종합계획 인삼산업법 운용 	-	1
원예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전문점 및 화훼판매코너 설치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FTA 보완대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청탁금지법, 시장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	2

아래의 <그림 6-22>는 유통소비정책관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22> 유통소비정책관 조직 재설계(안)

11. 미래농식품전략관 조직 설계 방안

농식품안정정책실 관련 환경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그리고 기능 분석 결과, 창조농식품정책관은 미래농식품전략관으로 명칭으로 변경하고 미래 농식품 관련 업무로 특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농식품정책과는 미래농식품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농식품 기술창업(벤처) 육성(공약)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불제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생명산업과는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농업생명자원 보존 관리 정책,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상임위원 및 간사)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6-16>은 미래농식품전략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조직명칭 변경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 (新)미래농식품정책관로 명칭변경

<그림 6-23> 미래농식품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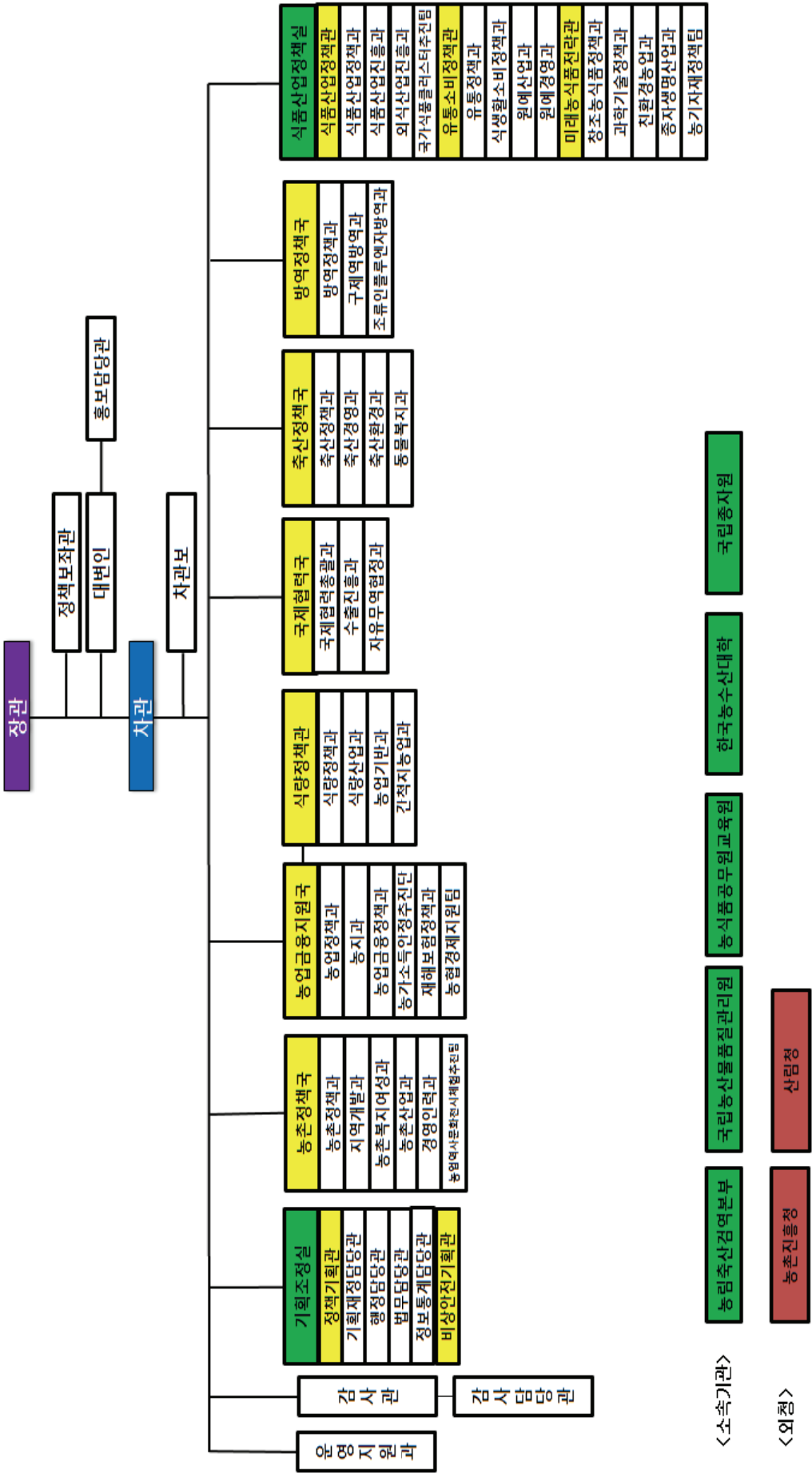
<표 6-16> 미래농식품전략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미래농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3
과학기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농식품 기술창업(벤처) 육성(공약) 	-	3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불계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	2
종자생명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상임위원 및 간사) 	-	4
농기자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자재산업육성 정책 및 기획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추진 4차산업 대응 첨단농업기계화 추진 여성친화형농기계 종합보급대책(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관련 단체 지도감독 축산기자재업무총괄 기록물관리, 서무업무, 기타 업무 등 	2

아래의 <그림 6-24>는 미래농식품전략관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24> 미래농식품전략관 재설계(안)



<그림 6-25>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1안)

제3절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안)

본 보고서에서는 단기(안)과 더불어 중장기(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안)은 특성별로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6-17> 농림축산부 조직개편 대안별 장단점(중장기 비교)

	장점	단점
중장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 혁명,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사업, 정책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생산→식품→유통]이라는 과정(프로세스)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생산’, ‘식품’, ‘유통’이라는 업무프로세스 중심으로 세부조직을 구성하여 하기 때문에 융합, 의사결정, 조직운영이 일사분란한 명령체계를 갖게되어 업무효율에 있어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실-국-과’ 형태의 기능 집중적 조직구성을 통해 기존 모호한 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개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직 개편에 따른 내부 구성원의 혼선 및 정착에 필요한 시간이 요구됨(업무인수인계 등) - 직제상 업무가 수평적 구조로 나뉘어져 조직간 연계성과 유기적인 업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효율성 증가
중장기(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책실: 소득복지, 농촌개발, 농촌환경 중심 • 진흥정책실: 농촌진흥, 식품산업개발, 유통정책 중심 • 안전정책실: 소비안전, 안정공급, 방역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과’로 기능집중화로 구성된 조직형태로서 운영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조직형태보다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의 낙후, 농작물단가 하락 등 농가소득, 농촌복지, 일자리, 4차산업, 유통, 검역, 방역, 동물복지 등에 중점을 두어 관련 이슈에 대하여 능동적 대처 가능 - 특히 방역·유통(신설 및 확대)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과거 융합 및 협업이 요구되는 부서들을 통합 및 이관을 통해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집중화에 따른 실, 관, 과별 융합 및 협업에 대하여 미흡할 수 있음. - 연계성과 실별 총괄조정 기능이 취약.
중장기(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책실: 농촌, 생산, 유통 중심 •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농식품생산안전, 식품생활소비관련, 농촌환경 중심 • 농식품산업진흥실: 식품산업, 농업진흥, 농지정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과’로 기능집중화로 구성된 조직형태로서 운영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조직형태보다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됨 - 농식품생산안전, 과학기술부각 등 농식품에 식품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연계성 미흡으로 실간 협력문제 발생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과, 농식품생산안전, 농식품산업진흥 중심으로 재편되어 미래 4차산업 및 스마트 농촌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중복되는 농축산물안전정책과, 수입식품정책과 등을 이관 및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중장기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책실: 농촌, 생산, 유통 중심 • 농식품생산안전정책국: 농식품생산안전, 방역 중심 • 농촌환경정책국: 농촌환경, 동물복지, 친환경농업 및 축산 중심 • 농식품산업진흥: 식품산업, 농업진흥, 농지정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과’ 기능중심의 조직형태에 안전방역, 환경정책 등 집행중심의 부서는 ‘국’으로 유지하여 집중과 선택 뿐만 아니라 현실적 기능을 위한 조직개편 진행 - 농식품생산안전, 과학기술부각 등 농식품에 식품생산→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임 - 방역기능에 있어서도 중대동물, 소동물로 구분하여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뿐만 아니라 방역시행에 있어 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중복되는 농축산물안전정책과, 수입식품정책과 등을 이관 및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직구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운영 및 효율성에 있어 ‘실-관-과’와 ‘국-과’가 혼재하여 애매모호성 발생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견될 수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1안)

농정수요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농정행정 구현, 농식품·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농촌 복지 구현, 국제협력 및 농업통상 협력 강화 및 스마트 농정지원 현실화 등 융·복합적 농업 및 미래성장 농촌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現)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을 확대·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를 (新)4실 체제로 재편하고, 정책기획 기능 및 국제협력 기능 수행강화를 위한 (現)기획조정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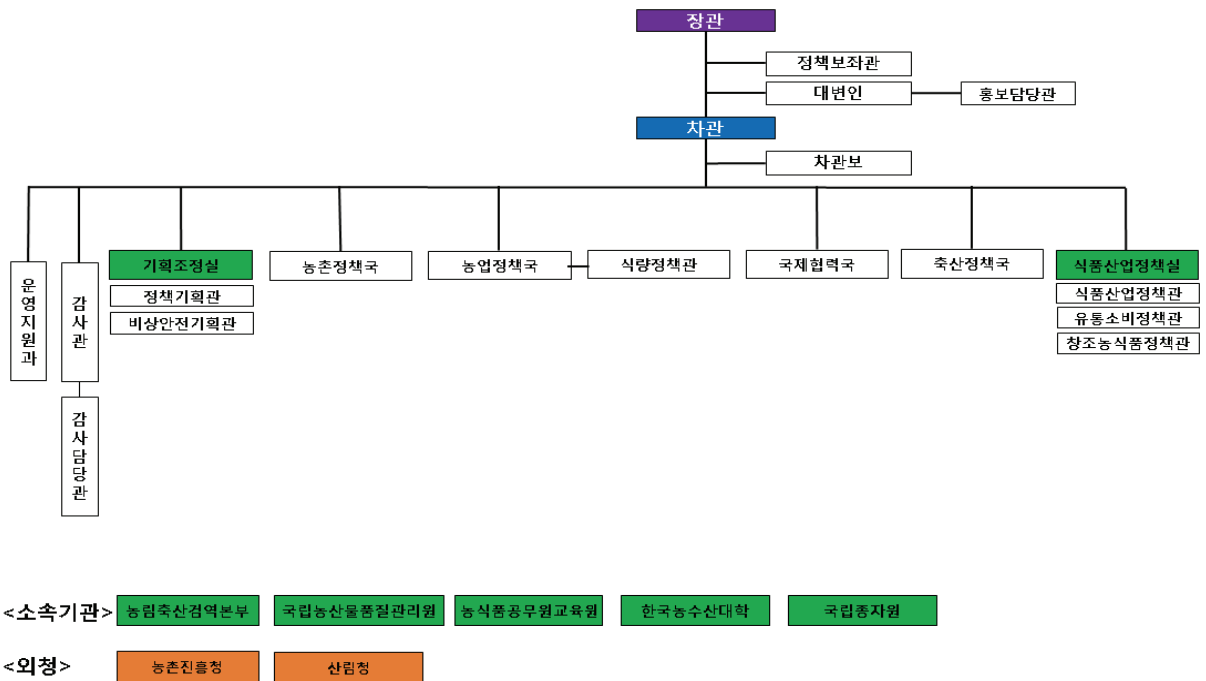
농촌 지역개발정책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품 생산 및 유통 기능 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新)농촌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농무부(USDA)의 경우, 농촌 및 농업인 관련 지원업무, 농촌개발, 농촌산업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실(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FAS)을 설치하였다. 기관 산하에 농업지원청, 농촌기업청, 농촌개발청, 농촌설비청, 농촌주택청 등을 설치하여 농촌정책, 지역개발, 농축산식품 산업의 통합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농무부(USDA)의 경우, 정책 성격 및 사업의 업무 영역에 따라 크게 7실로 분류된 부서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부서는 실장(Under Secretary)이 관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 및 영양 그리고 소비자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식품·영양 및 소비자지원실(Food, Nutrition and Customer Service: FNCS)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적절한 영양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개선에 관한 총괄적 업무수행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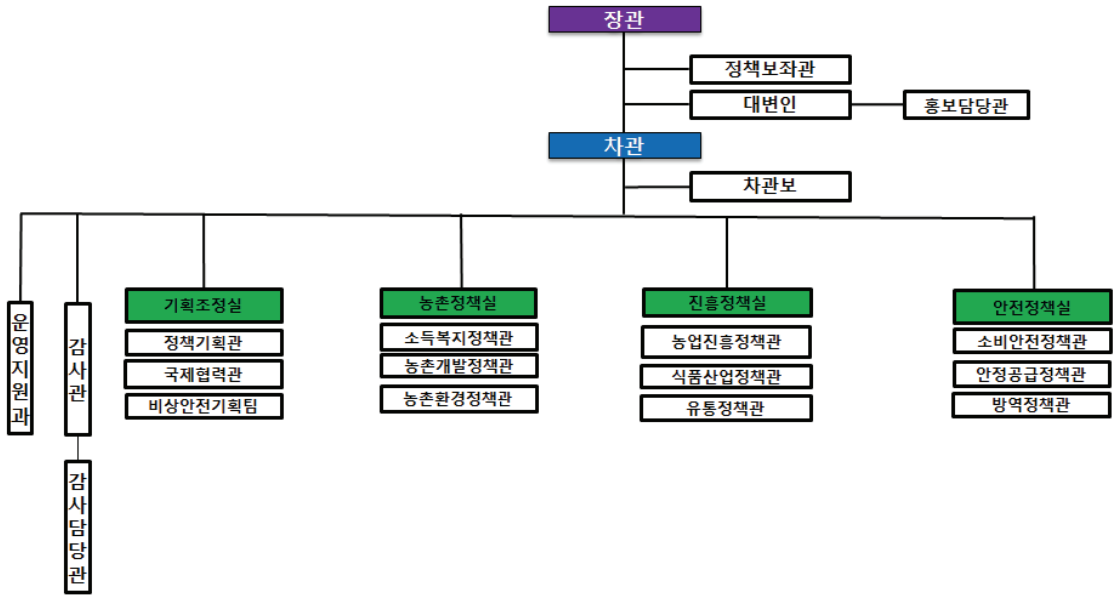
자보호 및 협력에 관한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식품·영양 및 소비자지원실(Food, Nutrition and Customer Service: FNCS)의 산하기관으로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을 별도로 설치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과 건강한 식단, 영양교육, 아동 및 성인 급식사업, 식생활 캠페인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으며, 영양정책홍보센터(Center of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 및 건강상태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기능을 전담 수행하고 있는 점이 눈여겨 볼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도 미국의 사례에서 착안하여, 식품 영양 및 소비자관련 기능을 통합·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新)안전정책실을 신설을 제안한다.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의 경우 식품 및 영양 그리고 농축산식품관련 안전기능, 친환경 농축산 식품 관련 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식생활정책 및 생산물안전실을 설치하고, 산하에 식생활정책국과 생산물안전 및 혁신국을 담당기관으로 두고 있듯이 하나의 실 내에 2개의 국 설치를 통하여, 업무협력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및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의 사례에서 착안하여 식품관련 기능과 안전관련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농무부(USDA)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실(Food Safety: FS) 산하에 식품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을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식품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①가금류와 가축 및 관련제품의 검사, ②모든 신선, 냉동 및 건조된 난류검사, ③농축산식품에 대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 분석, ④육류소비와 관련한 위험평가, 정보전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 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축산식품안전의 통합적 관리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6-26>와 <그림 6-27>은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새로운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6-26>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27> (新)농림축산식품부 4실 체제

<표 6-18>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1과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 1과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비상기획안전기획관	5관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명칭변경) 행정담당관(명칭변경) 법무담당관(명칭변경) 정보통계담당관(명칭변경) 농식품 빅데이터분석과(신설) 비상안전기획팀	4관 1과 1팀 (1과 증설)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4과	소득 복지 정책관 (명칭 변경)	농촌소득복지정책과 (명칭변경) 농촌복지여성과 농가소득안정단 (식량정책관에서 이관 및 명칭변경)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정책국에서 이관) 농촌산업과 농식품 일자리정책팀(신설)	4과 1팀 1단 (1팀 1단 증설)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5과1팀	농업 진흥 정책관 (명칭 변경)	농업정책과 4차산업 미래전략과(신설) 금융정책과(명칭변경) 경영인력과	4과 (1과 1팀 축소)

개편 전			개편 후		
	농협경제지원팀				
식량 정책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4과 1단	소비 안전 정책관 (신설)	소비안전정책과(신설) 소비자협력과(신설) 표시인증과(신설) 검역정책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 이관)	4과 (1단 축소)
			농촌 개발 정책관 (명칭 변경)	농촌지역개발과(명칭변경) 농지정책과(명칭변경)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4과 (4과 증설)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4과	국제 협력관 (명칭 변경)	국제협력총괄과 농식품통상과(명칭변경) 자유무역협정과 (농업통상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통합) 국제개발협력과(신설)	4과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4과 1팀	방역 정책관 (신설)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방역관리과 기능 분리)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방역관리과 기능 분리) 방역지원과(신설)	4과 (1팀 축소)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국제협력국으 로 이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4과 1팀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4과 1팀
			안정 공급 정책관 (신설)	생산정책과(명칭변경) 식량산업과(이관) 원예산업과(이관) 축산경영과(이관)	4과 (4과 증설)
유통 소비 정책관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4과	유통 정책관 (명칭 변경)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신설) 원예유통과(신설) 축산유통과(신설)	4과
창조 농식품 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중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4과 1팀	농촌 환경 정책관 (명칭 변경)	농촌환경정책과(신설) 동물복지관(신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과 (축산정책국에서 이관 및 명칭변경)	4과 (1팀 축소)
4국 5관		2실 5관 34과 1단 4팀	11관		2실 4관 41과 1단 2팀
			4국 축소 6국 증설		1관 2팀 축소 7과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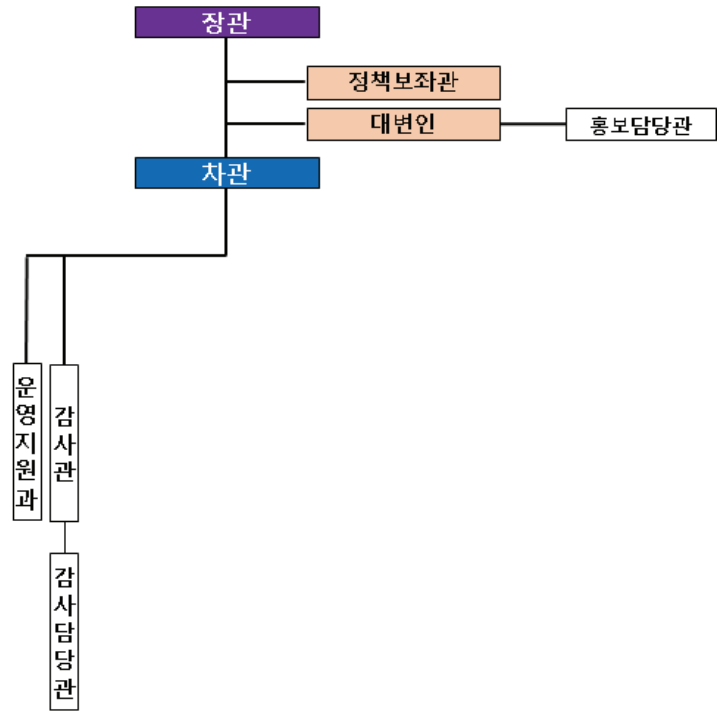
1) 지원부서 조직 재설계 방안

지원부서의 기능 분석 결과, 대변인실의 경우에는 각종 홍보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보도 계획 수립 및 조정,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영상광고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및 부서 간 조정이 요구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 해석, 감사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국무조정실 등 외부 요청에 대한 조사,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 업무,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 평가, 교육, 상훈, 징계 총괄 업무, 국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다면평가, 보안 업무, 인사업무 등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19>는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19>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 기획 및 계획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 영상광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 언론인터뷰 및 기고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농업인단체와의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 	1
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감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감사 한국마사회 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신고 일상감사 지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항 	1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 인원협의 및 심사인원 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합 평가 글로벌 중장기 인재양성 교육, 상훈, 징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운영 관리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행사지원 	1

(現)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 6-28>과 같이 현재의 소속을 유지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및 기능에 근거하여 기능강화 및 인력증감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림 6-28>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2) 기획조정실 조직 재설계 방안

기획조정실의 기능 분석 결과, 종합적인 농정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업무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조정관리, 그리고 타 부처 간의 협업 행정 기능 강화 및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농정행정 혁신 과제 발굴 기능들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농정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정담당관실의 경우는 공무원 통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업무, 소요정원 관련 업무 및 재정지원관리제도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무담당관실은 국회 입법 추진 업무 총괄, 정부 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국정과제 등 법제업무 추진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통계담당관실의 경우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업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농식품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하여 농식품관련 데이터 수집·취합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現)정책기획관 소속의 창조행정담당관은 행정담당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으로,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과 농식품 빅데이터분석과 신설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20>은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이다.

<표 6-20>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당면 농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 국회대응 • 경제정책 방향 수립 • 재정관리 편성 총괄 •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답변서 제출 • 국회 및 정당업무 • 신규 농축산식품산업 예산 심의 	-	2
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 국정과제 총괄 • 농식품정책자료집 발간(분장외) • 사회혁신 업무 발굴 •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 금요농정타운홀미팅(분장외) •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 • 정책실명제 	1
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입법추진 업무 총괄 • 농식품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식품규제발굴 및 개선 •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 • 농축산식품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농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 농림축산식품통계 중장기 발전 방안 • 통계진담기관 지정 및 관리 • 통계관련 규정 운영 •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정보보안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회 참가(분장외) • 부서개인별 정보보안지수 운영(분장외) • 전자기과 공격 대응(분장외) • 일일정보보안 뉴스작성 및 공유(분장외)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관련 데이터 수집 및 취합 •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구상 • 농업데이터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등 	-	-

(現)국제협력국 소속의 국제협력 및 농업통상 및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관련 기능을 (現)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新)국제협력관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또한, (新)국제협력관 산하에는 농식품통상과, 자유무역협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新)국제개발협력과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을 (新)국제개발협력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6-29>는 (新)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국제협력관 산하 국제개발협력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 → (現)기획조정실로 이관 •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 (現)국제개발협력과로 이관
	강화	• (新)농식품통상과 및 자유무역협정과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 (現)농업통상과 → (新)농식품통상과로 명칭변경 • (現)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新)자유무역협정과로 명칭변경

<그림 6-29>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국제협력총괄과는 국제협력위원회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대외경제장관 회의 사항 및 농축산물 통상 및 협상관련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식품통상과의 경우는 OECD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WTO 농업 협정 이행 및 농축산물 수입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과는 FTA 이행, 투자 및 지재권 관련 업무, RCEP, TPP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이 신설된 국제개발협력과의 경우는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21>은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21>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증감
국제협력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기획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 간담회 개최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분장의) 	2
농식품통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농산물 반입 	1
자유무역협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 투자, 지재권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	2
국제개발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해외농업개발사업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등 	-	2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가보안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상 안전기획 기능 수행을 위하여 (現)비상안전기획관은 유지하지만 부서 수준을 관에서 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비상안전기획팀의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재난관리평가 및 훈련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표 6-22>은 비상안전기획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22> 비상안전기획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비상안전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비훈련 실시 을지연습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그림 6-30>은 기획조정실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30>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3) 농촌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농촌정책실에 대한 환경분석, 해외사례분석 및 기능 분석을 종합한 바, 농촌 지역개발정책과 연계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들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유관 기능들을 전환배치 및 이관하여 농촌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을 제언한다.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 정책의 선진화 및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 육성 그리고, 안정적인 농식품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단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농촌지역생활권 구축 및 농촌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창조농식품정책관의 일부 기능들을 (新)농촌정책실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한다. (新)농촌정책실산하에는 (新)소득복지정책관, (新)농촌개발정책관, (新)농촌환경정책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6-28>는 (新)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농촌정책실 → (新)소득복지정책관, (新)농촌개발정책관, (新)농촌환경정책관을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창조농식품정책관의 일부 기능 → (新)농촌정책실로 이관

<그림 6-31>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및 (現)농업정책국 기능(재해보험정책과) 그리고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들을 (新)소득복지정책관실로 이관·통합하고 농식품 일자리정책팀을 신설하여 (新)소득복지정책관을 농촌소득복지정책과, 농촌복지여성과, 농가소득안정단, 재해보험정책과, 농촌산업과, 농식품 일자리정책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現)농촌정책국 기능(지역개발과), (現)농업정책국 기능(농지과), (現)식량정책관 실 기능(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들을 (新)농촌개발정책관으로 이관·통합하고, (現)지역개발과 명칭을 농촌지역개발과로, (現)농지과를 농지정책과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新)농촌개발정책관실은 농촌지역개발과, 농지정책과,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現)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의 친환경농업과 기능과 (現)축산정책국의 친환경축산팀 기능을 (新)농촌정책실 농촌환경정책관실로 이관하고, 친환경축산팀을 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업 및 동물보호 관련 기능 차원에서 농촌환경정책과, 동물복지과 신설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6-32>는 농촌정책실 소속 부서별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소득복지정책관, (新)농촌개발정책관, (新)농촌환경정책관 신설 • (新)소득복지정책관 소속의 농식품 일자리정책팀, (新)농촌환경정책관 소속의 농촌환경정책과 동물복지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 (新)소득복지정책관으로 이관 • (現)농업정책국 기능(재해보험과) → (新)소득복지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 → (新)소득복지정책관으로 이관 • (現)농촌정책국 기능(지역개발과) → (新)농촌개발정책관으로 이관 • (現)농업정책국 기능(농지과) → (新)농촌개발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실 기능(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 (新)농촌개발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기능(친환경농업과) → (新)농촌환경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친환경축산팀) → (新)농촌환경정책관으로 이관
	강화	• 농촌지역개발, 농촌복지, 경영인력, 농식품·농축산품 유통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 (現)지역개발과 → (新)농촌지역개발과로 명칭변경 • (現)농지과 → (新)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 (現)친환경축산팀 → (新)친환경축산과로 명칭변경

<그림 6-32>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소득복지정책관 소속의 **농촌소득복지정책과**의 경우,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 농업분야 지역발전사업 체계화 업무, 전시·체험 및 유물수집에 관한 업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며, **농촌복지여성과**의 경우,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과 여성업무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소득안정단**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결산, 관리운영 업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보험정책과**의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업무,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업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산업과**의 경우에는 농촌관광 해외설명회,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 업무, 농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업 업무,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상품, 통역 서비스 지원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신설되는 **농식품 일자리정책팀**은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계획 수립,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6-23>은 농촌소득복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3> 소득복지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소득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	3
농촌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 	-
농가소득안정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	-
재해보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손해평가관리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	-
농촌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산업정책 기업유치 및 활성화 	-	2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특화·향토 산업 •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 		
농식품 일자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	-

농촌개발정책관 소속의 **농촌지역개발과**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지정책과**는 특정지역개발관련 협,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농업진흥지역 운영, 농지보전 제도 운영,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농지종합정보화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과**의 경우에는 가뭄대비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사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방조제관리법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농업과**에서는 간척지 활용·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배수개선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24>는 농촌개발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4> 농촌개발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지역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촌뉴타운 주택개량 •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 <u>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개발관련 협의 •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 농업진흥지역 운영 • 농지보전 제도 운영 •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 농지종합정보화 	-	2
농업기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 농어촌정비법 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	-
간척지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 배수개선 계획 	-	-

(新)농촌환경정책관 산하에는 (新)농촌환경정책과, (新)동물복지과, (新)친환경농업과, (新)친환경축산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新)농촌환경정책과에서는 농촌환경정책의 개발 및 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농업용수 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 및 목표기준의 설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고, (新)동물복지과의 경우에는 동물의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新)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계획 및 유기농업육성 계획 업무,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업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新)친환경축산팀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 육성, 축산 기자재 및 사료 산업 등과 관련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25>는 농촌환경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5> 농촌환경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환경정책의 개발·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업용수 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10
동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동물용 의약품 기준 • 반려동물 문화 조성 포함 	-	10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	2
친환경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축산 육성 친환경 축산농장 축산 기자재 사료산업 초지의 조성 업무 등 조사료 수급안정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이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	1

아래의 <그림 6-33>은 농촌정책실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33> 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안)

4) 진흥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現)식품산업정책실을 (新)진흥정책실로 명칭변경하고 재편하고자 한다. 또한, 원예 및 축산 그리고 식량생산에 따른 유통 구조 개선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추진 중인 농산물 인증 및 농축산물 품질관리 등의 기능들을 통합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新)농업진흥정책관실 산하에는 농업정책과, 4차산업 미래전략과, 금융정책과, 경영인력과로 구성하고 (新)식품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을 (新)진흥정책실 유통정책관실로 이관·통합하고, 유통정책관실은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現)농업정책국 소속의 농업정책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를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며 농업금융정책과를 금융정책과로 명칭변경을 제안한다. 그리고 4차산업 미래전략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新)식품산업정책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에서 식품산업정책관실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외의 조직은 개편 없이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現)유통소비정책관실의 유통정책과의 기능을 (新)유통정책관실로 이관하고 식품유통과, 유통정책과, 축산유통과 신설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6-37>은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진흥정책실 소속 → (新)농업진흥정책관, (新)유통정책관 신설 • (新)유통정책관 소속 → (新)식품유통과, (新)유통정책과, (新)축산유통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정책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新)식품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실 소속 유통정책과 → (新)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기능, 농업진흥 기능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업금융정책과 → (新)금융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34>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농업진흥정책관에서는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농업구조정책, 통일농업정책 및 농업분야 서비스 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차산업 미래전략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국가푸드플랜 수립,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등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영인력과에서는 농업인력육성,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영체의 육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한국농수산대학 관련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6-26>은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 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6>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 한반도 농업, 농촌 발전전략 	-	2
4차산업 미래전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 국가푸드플랜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법령 운영 •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3
금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
경영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지자체 교육훈련 •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실습교육장 운영지원 •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1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에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검토 업무, 농식품 소비홍보 사업 추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품산업진흥과**의 경우에는 김치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산업진흥과**에서는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진흥과**의 경우, 농수산물식품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업무,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수출 지원사업,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클러스터식품추진팀**의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27>은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7>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식품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식품산업정책업무 총괄 및 기획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 국가푸드플랜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법령 운영 •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 계획 수립 등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	3
식품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관련 법제정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 농식품 기술창업(벤처) 육성(공약) 	-	3
외식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경영 교육·컨설팅, 외식창업 지원, 식재료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외식문화 선진화 등 	-	1
수출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 국회대응 	-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매년도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조성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산채개발원 건축·장비 구입, 산채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세부운영방안 조정 	-	1

유통정책과에서는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대책 업무, 농산물 직거래법 운용 업무,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운용, 농산물의 인증제도, 농축산물 품질 관리 및 원산지 표시 업무,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 업무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유통과에서는 식품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업무 관련 기능들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예유통과에서는 원예농산물 비축 및 브랜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유통과의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축산물 유통 및 등급제도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28>은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8>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평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공약사항)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핵심과제) 	-	1
식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유통 구조 개선 계획 수립 식품 가격안정 관련 계획수립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10
원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원예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	10
축산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	10

다음의 <그림 6-38>은 진흥정책실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식품산업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창조농식품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



<조직 재설계(안)>

진흥정책실
농업진흥정책관
농업정책과
4차산업 미래전략과(신설)
금융정책과(명칭변경)
경영인력과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신설)
원예유통과(신설)
축산유통과(신설)

<그림 6-35>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5) 안전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안전정책실 관련 환경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그리고 기능 분석 결과, 농식품 및 농축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수입 및 신종 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위생안전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방역인력과 조직체계, 시스템 개편을 통한 방역위생업무의 정책기능 강화 필요성이 분석되었으며, 식품에 유해한 병해충의 사전 방지를 위한 관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 및 성인급식사업, 건전식생활 활성화, 학교급식사업 및 여성·임산부·아동 등에 대한 영양공급사업 등 식생활교육지원 및 안정성 업무 등에 대한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농산물 구입 소비자에 대한 보호정책 기능 역시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농식품 및 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정책실 신설을 제안한다.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現)식품산업정책관, (現)유통소비정책관 및 (現)식량정책관, (現)국제협력국, (現)축산정책국의 일부 기능들을 (新)안전정책실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한다. (新)안전정책실산하에는 (新)소비안전정책관, (新)안정공급정책관, (新)방역정책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그림 6-31>는 (新)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안전정책실 소속 → (新)소비안전정책관, (新)안정공급정책관, (新)방역정책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기능 → (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 → (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 → (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 (新)안전정책실로 이관

<그림 6-36> 안전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新)소비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소속으로 (新)소비안전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 (新)표시인증과를 신설하고, (現)국제협력국의 검역정책과를 (新)소비안전정책관실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現)식량정책관실 기능(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現)축산정책국 기능(축산경영과) 및 (現)유통소비정책관실 기능(원예산업과)들을 (新)안정공급정책관으로 이관·통합하고, (現)식량정책과 명칭을 생산정책과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다. (新)생산정책관실은 생산정책과, 식량산업과, 원예산업과, 축산경영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新)방역정책관은 (現)축산정책국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의 기능이 이관받아 신설한다. (現)방역총괄과는 방역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現)방역관리과는 구제역방역과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변경하고 이관·분리한다. (新)방역지원과를 신설하여 지방방역 및 기초방역에 대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그림 6-37>은 소비안전정책관, 안정공급정책관, 방역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소비안전정책관 소속 → (新)소비안전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 (新)표시인증과 신설 • (新)방역정책관 소속 → (新)방역지원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국제협력국 소속의 검역정책과 → (新)소비안전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소속의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 (新)안정공급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축산경영과 → (新)안정공급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소속의 원예산업과 → (新)안정공급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 (新)방역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방역관리과 → (新)구제역방역과, (新)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이관
	강화	• 농식품·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능, 검역 및 방역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 동물복지 기능 등
조직명칭 변경		• (現)방역총괄과 → (新)방역정책과로 명칭변경 • (現)방역관리과 → (新)구제역방역과, (新)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변경

<그림 6-37> 소비안전정책관, 안정공급정책관, 방역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소비안전정책관에서는 소비안전정책과, 소비자협력과, 표시인증과, 검역정책과로 구성하여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안전정책과에서는 농산물 및 농축산물의 안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업무, 농산물 및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와 식생활교육지원 및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등의 업무 기능 관련하여 수입식품관리계획 수립 및 수입식품 위생 안전 검사 등의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소비자협력과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정책 수행 기능,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표시인증과

에서는 농산물 등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에 관련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검역정책과**에서는 FTA/SPS 위원회 관련 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운용, 수입검역통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 총괄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29>는 소비안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29> 소비안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소비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 관련 기능 등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지원,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업무 등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수입식품관리계획 수립 수입식품 안전성 업무 관련 기능 등 	-	10
소비자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정책 수행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관련 기능 	-	10
표시인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표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10
검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검역관련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생검역 수입검역 및 통상업무 식품방역법령 운용 식물검역제도 수립 식물검역관련 주요정책 수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업무 식품검역제도 수립 	-	1

안정공급정책관 소속의 **생산정책과**에서는 공공비축제도 시행 관련 업무, 법령의 제 개정 및 규제 총괄 업무, 식량정책 및 양곡수급계획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량산업과**의 경우에는 쌀 및 식량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업무,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 총괄 업무, 식량산업 R&D 업무, 쌀 소비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예산업과**에서는 인산산업법 운용, 업체류, 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업무, 특용작물 산업 관련 직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경영과**의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양돈·양봉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축산시설현대화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30>은 안정공급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30> 안정공급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생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 중단기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	1
식량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예찰, 방제계획 수립 및 총괄 • 쌀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1
원예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노지채소생산안정제 추진 • 업체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 인삼산업 종합계획 • 인삼산업법 운용 •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 청탁금지법, 시장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	1
축산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 도축산업 육성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 •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 낙농진흥법 운용 	-	1

방역정책관 **방역정책과**는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중가축 방역대책,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방역관리과에서 분리된 **구제역 방역과**는 구제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구제역방역과 업무 총괄, 동물방역대책 수립 추진, 살처분 보상금, 소가축방역대책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조류, 개, 고양이, 꿀벌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방역지원과**는 지역(시도 등)의 방역지원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 6-31>은 방역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31> 방역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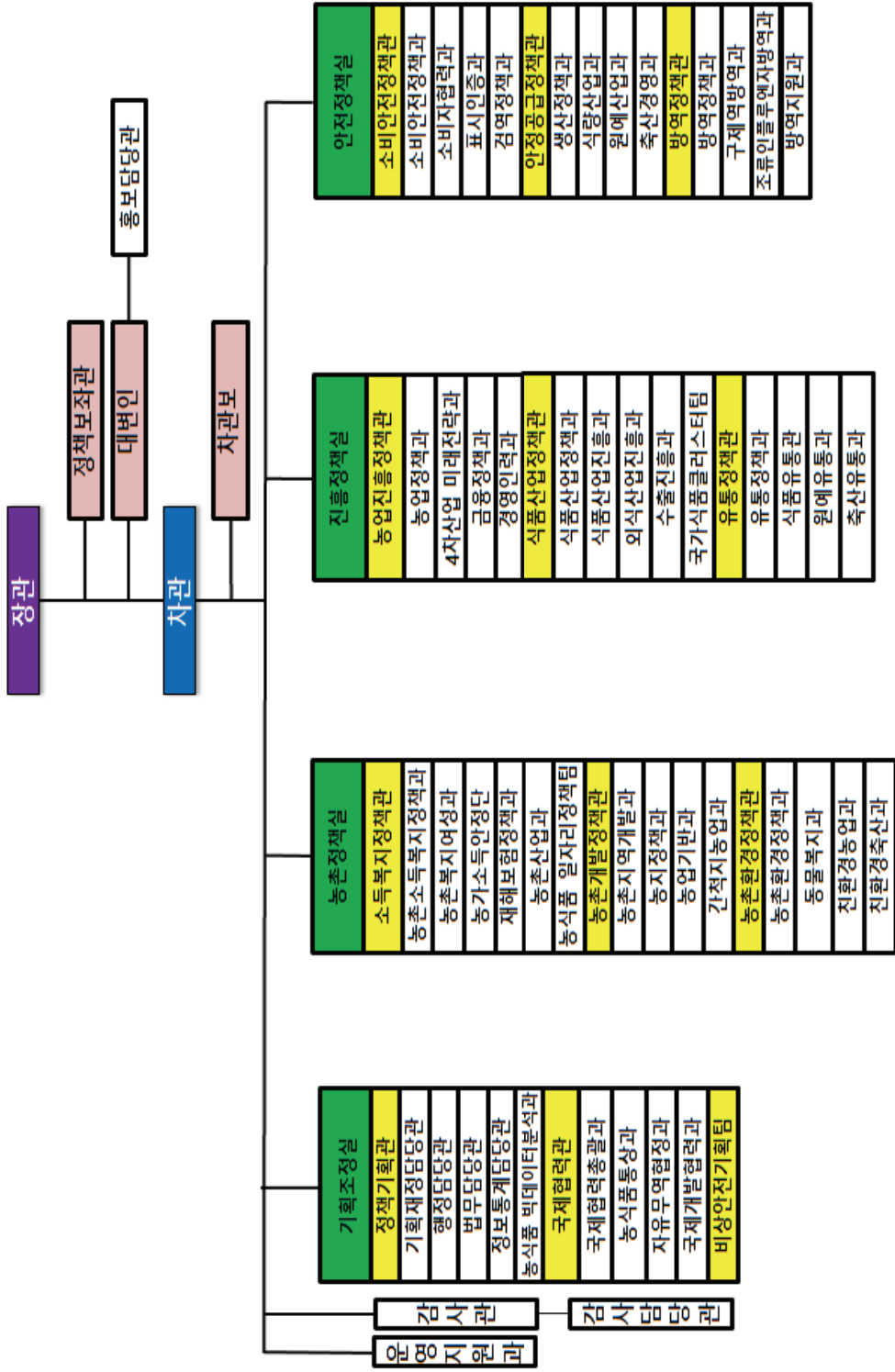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방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중가축 방역대책 	-	2
구제역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구제역방역과 업무 총괄 동물방역대책 수립 추진 살처분 보상금 소가축방역대책 	-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조류, 개, 고양이, 꿀벌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	1
방역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방역업무 지원 등 	-	-

다음의 <그림 6-38>은 안전정책실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그림 6-38> 안전정책실 재설계(안)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림청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한국농수산대학
- 국립종자원

<그림 6-39>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체계(중장기 1안)

2.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2안)

농정수요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농정행정 구현, 농식품·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농촌 복지 구현, 국제협력 및 농업통상 협력 강화 및 스마트 농정지원 현실화 등 융·복합적 농업 및 미래성장 농촌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現)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을 확대·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를 (新)4실 체제로 재편하고, 정책기획 기능 및 국제협력 기능 수행강화를 위한 (現)기획조정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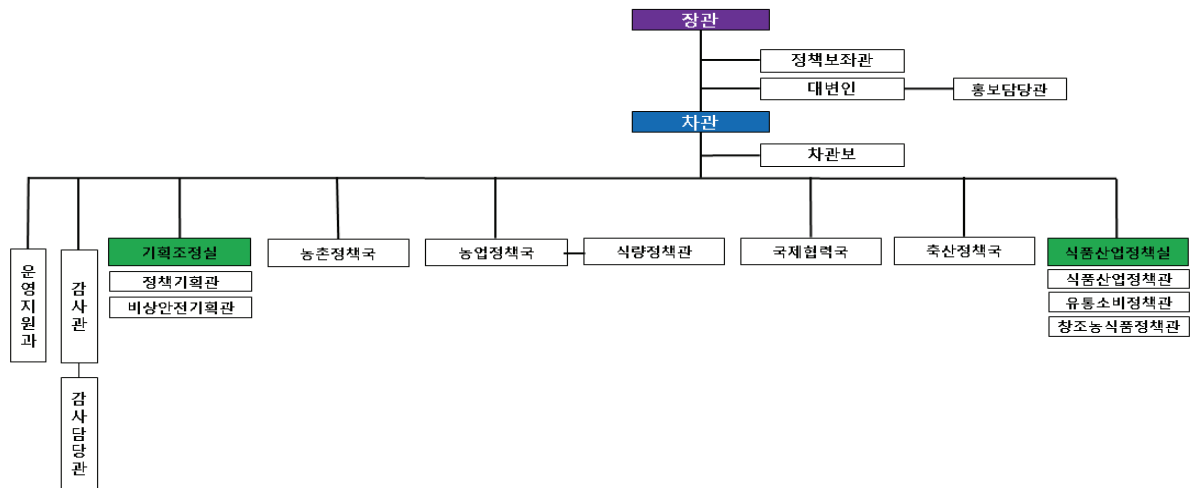
농촌 지역개발정책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품 생산 및 유통 기능 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新)농촌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농무부(USAD)의 경우, 농촌 및 농업인 관련 지원업무, 농촌개발, 농촌산업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실(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FAS)을 설치하였다. 기관 산하에 농업지원청, 농촌기업청, 농촌개발청, 농촌설비청, 농촌주택청 등을 설치하여 농촌정책, 지역개발, 농축산식품 산업의 통합화를 도모하였다.

농식품 및 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을 신설을 제안한다.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의 경우 식품 및 영양 그리고 농축산식품관련 안전기능, 친환경 농축산 식품 관련 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식생활정책 및 생산물안전실을 설치하고, 산하에 식생활정책국과 생산물안전 및 혁신국을 담당기관으로 두고 있듯이 하나의 실 내에 2개의 국 설치를 통하여, 업무협력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및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일의 사례에서 착안하여 식품관련 기능과 안전관련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농무부(USAD)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실(Food Safety: FS) 산하에 식품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을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식품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①가금류와 가축 및 관련제품의 검사, ②모든 신선, 냉동 및 건조된 난류검사, ③농축산식품에 대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 분석, ④육류소비와 관련한 위험평가, 정보전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 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축산식품안전의 통합적 관리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농무부(USAD)의 경우, 정책 성격 및 사업의 업무 영역에 따라 크게 7실로 분류된 부서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부서는 실장(Under Secretary)이 관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 및 영양 그리고 소비자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식품·영양 및 소비자지원실(Food, Nutrition and Customer Service: FNCS)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적절한 영양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개선에 관한 총괄적 업무수행과 소비자보호 및 협력에 관한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식품·영양 및 소비자지원실(Food, Nutrition and Customer Service: FNCS)의 산하기관으로 식품 및 영양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을 별도로 설치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과 건강한 식단, 영양교육, 아동 및 성인 급식사업, 식생활 캠페인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으며, 영양정책홍보센터(Center of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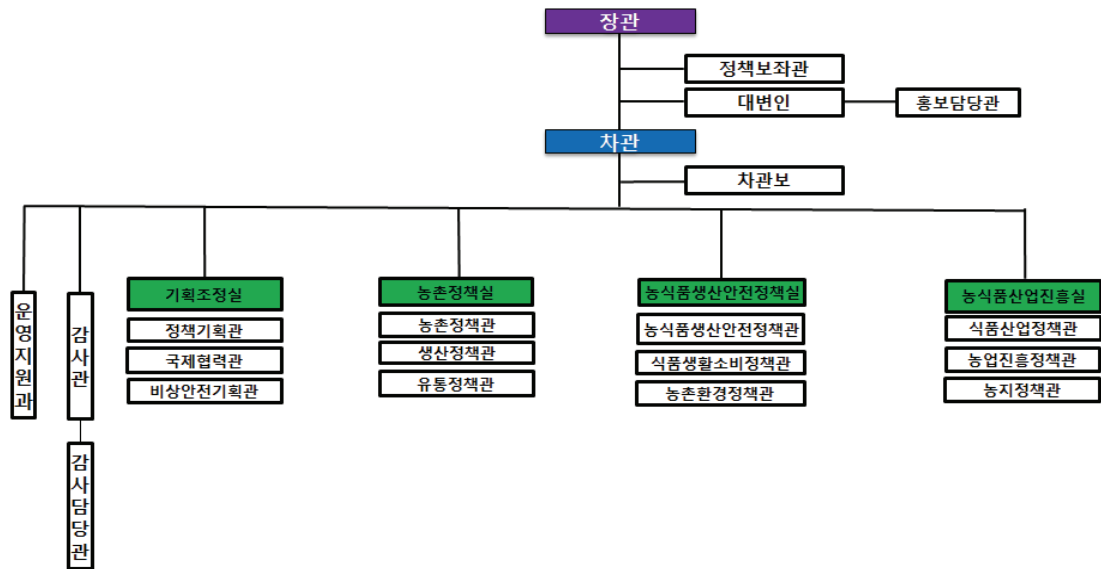
로 하는 영양 및 건강상태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기능을 전담 수행하고 있는 점이 눈여겨 볼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도 미국의 사례에서 착안하여, 식품 영양 및 소비자관련 기능을 통합·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現)식품산업정책실을 (新)농식품산업진흥실로 명칭변경하고 재편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6-40>와 <그림 6-41>은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40>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41> (新)농림축산식품부의 4실 체제

<표 6-32> 농림축산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1과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 1과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범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비상기획안전기획관	5관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명칭변경) 행정담당관(명칭변경) 법무담당관(명칭변경) 정보통계담당관(명칭변경) 비상안전기획관(명칭변경)	5관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4과	농촌 정책관 (명칭 변경)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농업정책국으로 부터 이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식량정 책관에서 이관)	5과 1단 (1과 1단 증설)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지와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	5과1팀	농업 진흥 정책관 (명칭 변경)	농업진흥정책과(명칭변경)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이관) 종자생명산업과(이관) 농기자재정책팀(이관)	5과 1팀
			농지 정책관 (신설)	농지정책과(명칭변경)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식량 정책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4과 1단	생산 정책관 (신설)	생산정책과 식량산업과 원예산업과(유통소비정책관 으로부터 이관) 축산경영과(국제협력국으로 부터 이관)	4과 (1단 축소)
			식품 생활 소비 정책관 (명칭 변경)	식생활정책과(명칭변경) 소비자정책과(신설) 소비자협력과(신설)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4과	국제 협력관 (명칭 변경)	국제협력총괄담당관(명칭변경) 농식품통상담당관(명칭변경) 자유무역협정담당관 (농업통상과, 동아시아무역협정 통합) 국제개발협력담당관(신설)	4관 (4과 축소 4관 증설)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4과 1팀	농식품 생산 안전 정책관 (신설)	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명칭변경) 검역정책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 이관)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4과 (1팀 축소)

개편 전			개편 후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국제협력국으 로 이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4과 1팀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4과 1팀
유통 소비 정책관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4과	유통 정책관 (명칭 변경)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신설) 원예유통과(신설) 축산유통과(신설)	4과
창조 농식품 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4과 1팀	농촌 환경 정책관 (명칭 변경)	농촌환경정책과(신설) 동물복지과(신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팀(축산정책국에 서 이관 및 명칭변경)	3과 1팀
4국 5관		2실 5관 34과 1단 4팀	11관		2실 9관 36과 1단 3팀
			4국 축소 6국 증설		1팀 축소 4관 2과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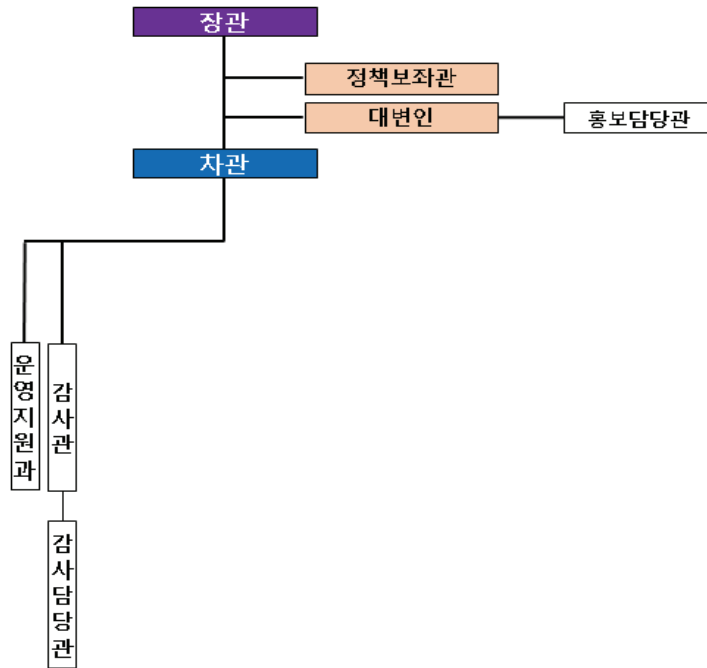
1) 지원부서 조직 재설계 방안

지원부서의 기능 분석 결과, 대변인실의 경우에는 각종 홍보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보도 계획 수립 및 조정,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영상광고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및 부서 간 조정이 요구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 해석, 감사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국무조정실 등 외부 요청에 대한 조사,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 업무,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 평가, 교육, 상훈, 징계 총괄 업무, 국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다면평가, 보안 업무, 인사업무 등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33>은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33>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 기획 및 계획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 영상광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 언론인터뷰 및 기고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농업인단체와의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 	1
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감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감사 한국마사회 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신고 일상감사 지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항 	1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 인원협의 및 심사인원 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합 평가 글로벌 중장기 인재양성 교육, 상훈, 징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운영 관리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행사지원 	1

(現)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 6-42>와 같이 현재의 소속을 유지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및 기능에 근거하여 기능강화 및 인력증감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림 6-42>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2) 기획조정실 조직 재설계 방안

기획조정실의 기능 분석 결과, 종합적인 농정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업무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조정관리, 그리고 타 부처 간의 협업 행정 기능 강화 및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농정행정 혁신 과제 발굴 기능들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농정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정담당관실의 경우는 공무원 통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업무, 소요정원 관련 업무 및 재정지원관리제도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무담당관실은 국회 입법 추진 업무 총괄, 정부 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국정과제 등 법제업무 추진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통계담당관실의 경우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업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現)정책기획관 소속의 창조행정담당관은 행정담당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으로,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34>는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이다.

<표 6-34>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당면 농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국회대응 경제정책 방향 수립 재정관리 편성 총괄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답변서 제출 국회 및 정당업무 신규 농축산식품산업 예산 심의 	-	2
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국정과제 총괄 농식품정책자료집 발간(분장외) 사회혁신 업무 발굴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금요농정타운홀미팅(분장외)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 정책실명제 	1
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입법추진 업무 총괄 농식품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농식품규제발굴 및 개선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 농축산식품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농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회 참가(분장외) 부서개인별 정보보안지수 운영(분장외) 	-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통계 증장기 발전 방안 통계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 통계관련 규정 운영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정보보안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과 공격 대응(분장외) 일일정보보안 뉴스작성 및 공유(분장외) 	

(現)국제협력국 소속의 국제협력 및 농업통상 및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관련 기능을 (現)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新)국제협력관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또한, (新)국제협력관 산하에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농식품통상담당관, 자유무역협정담당관 명칭 변경하고,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을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6-43>은 (新)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국제협력관 산하 국제개발협력담당관 신설
기능 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국제협력국 기능 → (現) 기획조정실로 이관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ODA 관련 기능 →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 농식품통상담당관 및 자유무역협정담당관 기능 강화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국제협력국 → (新)국제협력관으로 명칭변경 (現)국제협력총괄과 → (新)국제협력총괄담당관으로 명칭변경 (現)농업통상과 → (新)농식품통상담당관으로 명칭변경 (現)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新)자유무역협정담당관으로 명칭변경

<그림 6-43>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국제협력위원회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대외경제장관 회의 사항 및 농축산물 통상 및 협상관련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식품통상담당관의 경우는 OECD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WTO 농업 협정 이행 및 농축산물 수입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담당관은 FTA 이행, 투자 및 지재권 관련 업무, RCEP, TPP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이 신설된 국제개발협력담당관의 경우는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35>는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35>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국제협력총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기획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 간담회 개최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분장외) 	2
농식품통상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농산물 반입 	1
자유무역협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 투자, 지적권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	2
국제개발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해외농업개발사업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등 	-	2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가보안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상안전기획 기능 수행을 위하여 (現)비상안전기획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의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재난관리평가 및 훈련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표 6-36>은 비상안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36> 비상안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비상안전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비훈련 실시 을지연습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그림 6-44>는 기획조정실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44>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3) 농촌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농촌정책실에 대한 환경분석, 해외사례분석 및 기능 분석을 종합한 바, 농촌 지역개발정책과 연계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들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유관 기능들을 전환배치 및 이관하여 농촌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을 제언한다.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 정책의 선진화 및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 육성 그리고, 안정적인 농식품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단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농촌지역생활권 구축 및 농촌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예 및 축산 그리고 식량생산에 따른 유통 구조 개선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추진 중인 농산물 인증 및 농축산물 품질관리 등의 기능들을 통합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일부 기능들을 (新)농촌정책실로 이관하는 것을 제언한다. (新)농촌정책실 산하에는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및 (現)농업정책국 기능(경영인력과) 그리고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들을 (新)농촌정책관실로 이관·통합하여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6-45>는 (新)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농촌정책실 →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을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일부 기능 → (新)농촌정책실로 이관

<그림 6-45>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現)식량정책관실 기능(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現)축산정책국 기능(축산경영과) 및 (現)유통소비정책관실 기능(원예산업과)들을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통합하고, (現)식량정책과 명칭을 생산정책과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新)생산정책관실은 생산정책과, 식량산업과, 원예산업과, 축산경영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現)유통소비정책관 소속의 유통정책과 기능을 (新)농촌정책실 유통정책관실로 이관·통합하고, 유통정책관실은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6-46>은 농촌정책실 소속 부서별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 신설 • (新)유통정책관 소속의 식품유통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 (新)농촌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 → (新)농촌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축산경영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원예산업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유통정책과) → (新)유통정책관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 농촌복지, 경영인력, 농식품 농축산물 유통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식량정책과 → (新) 생산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46>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농촌정책관 소속의 농업정책과의 경우,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 농업분야 지역발전사업 체계화 업무, 전시·체험 및 유물수집에 관한 업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개발과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복지여성과의 경우,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산업과의 경우에는 농촌관광 해외설명회,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 업무, 농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업 업무,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상품, 통역 서비스 지원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영인력과는 농업교육훈련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결산, 관리운용 업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37>은 농촌정책실 소속의 농촌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37> 농촌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	3
지역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뉴타운 주택개발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농촌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산업정책 기업유치 및 활성화 농촌 지역 특화·향토 산업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 	-	2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경영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지자체 교육훈련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실습교육장 운영지원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	-

생산정책관 소속의 생산정책과에서는 공공비축제도 시행 관련 업무, 법령의 제개정 및 규제 총괄 업무, 식량정책 및 양곡수급계획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량산업과의 경우에는 쌀 및 식량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업무,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 총괄 업무, 식량산업 R&D 업무, 쌀 소비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예산업과에서는 인삼산업법 운용, 엽채류, 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업무, 특용작물 산업 관련 직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경영과의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양돈·양봉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축산시설현대화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38>은 생산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38> 생산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생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	1
식량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해충예찰, 방제계획 수립 및 총괄 쌀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1
원예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노지채소생산안정제 추진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인삼산업 종합계획 인삼산업법 운용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청탁금지법, 시장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	1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축산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기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 도축산업 육성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 •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 낙농진흥법 운용 	-	1

유통정책과에서는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대책 업무, 농산물 직거래법 운용 업무,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운용, 농산물의 인증제도, 농축산물 품질 관리 및 원산지 표시 업무,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 업무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유통과에서는 식품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업무 관련 기능들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예유통과에서는 원예농산물 비축 및 브랜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유통과의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축산물 유통 및 등급제도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39>는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39>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평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공약사항) • 청탁금지법 대응 총괄 관리(핵심과제) 	-	1
식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 구조 개선 계획 수립 • 식품 가격안정 관련 계획수립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10
원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 원예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 •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	10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축산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	10

아래의 <그림 6-47>은 농촌정책실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47> 농촌정책실 재설계(안)

4) 농식품 생산안전정책실 조직 설계 방안

농식품안전정책실 관련 환경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그리고 기능 분석 결과, 농식품 및 농축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수입 및 신종 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위생안전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방역인력과 조직체계, 시스템 개편을 통한 방역위생업무의 정책기능 강

화 필요성이 분석되었으며, 식품에 유해한 병해충의 사전 방지를 위한 관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 및 성인급식사업, 건전식생활 활성화, 학교급식사업 및 여성·임산부·아동 등에 대한 영양공급사업 등 식생활교육지원 및 안정성 업무 등에 대한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농산물 구입 소비자에 대한 보호정책 기능 역시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 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신설을 제안한다.

(現)축산정책국 기능(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現)국제협력국 기능(검역정책과), (現)창조농식품정책관 기능(친환경농업과)을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이관·통합하고,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新)식품생활소비정책관, (新)농촌환경정책관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6-48>은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소속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新)식품생활소비정책관, (新)농촌환경정책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기능(검역정책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로 이관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기능(친환경농업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로 이관

<그림 6-48>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또한, 농식품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 차원에서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검역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新)식생활정책과, (新)소비자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를 신설한다. 친환경 농축산업 및 동물보호 관련 기능 강화 차원에서 (新)농촌환경정책과 및 (新)동물복지과를 신설한다. 아래의 <그림 6-49>는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식품생활소비정책관, 농촌환경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소속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 신설 • (新)식품생활소비정책관 소속 → (新)식생활정책과, (新)소비자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 신설 • (新)농촌환경정책관 소속 → (新)농촌환경정책과, (新)동물복지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방역총괄과 및 방역관리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친환경축산팀 → (新)농촌환경정책관으로 이관 • (現)국제협력국 소속의 검역정책과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의 친환경농업과 → (新)농촌환경정책관으로 이관
	강화	• 농식품·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능, 검역 및 방역 기능, 소비자 보호 기능, 동물복지 기능 등

<그림 6-49>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식품생활소비정책관, 농촌환경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소속의 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는 농산물 및 농축산물의 안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업무, 농산물 및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역정책과에서는 FTA/SPS 위원회 관련 사항, 가

축전염병예방법령 운용, 수입검역통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 총괄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역총괄과의 경우, 구제역 백신 관련 업무,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가축전염예방법 및 수의사법 운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방역관리과에서는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가축방역사업 평가 및 포상제 운영,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약품 관련 법령 운용, 소·가축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축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법령 및 관련 연구개발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표 6-40>은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40> 농식품생산안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농축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	20
검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검역관련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생검역 수입검역 및 통상업무 식품방역법령 운용 식물검역제도 수립 식물검역관련 주요정책 수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업무 식품검역제도 수립 	-	1
방역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중가축 방역대책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	2
방역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약품 관련 법령 축산물안전관리 효율화 및 여건 조성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켓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안전분야 예결산 축산물 안전분야 국회대응 	2

(新)식품생활소비정책관에서는 (新)식생활정책과, (新)소비자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新)식생활정책과에서는 원산지 표시, 농산물안전성 관련 업무, 식생활교육지원 및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입식품관리계획 수립 및 수입식품 위생안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新)소비자정책과 및 (新)소비자협력과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정책 수행 기능,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식품생활소비정책관 산하에는 식생활정책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협력과 등 3개 과를 설

치할 것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41>은 식품생활소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41> 식품생활소비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식생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 식생활교육지원, 학교급식 • 농산물 안전성 업무 등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관리계획 수립 • 수입식품 안전성 업무 관련 기능 등 	-	20
소비자정책과	•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 관련 기능 등	-	10
소비자협력과	•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관련 기능	-	10

(新)농촌환경정책관 산하에는 (新)농촌환경정책과, (新)동물복지과, (新)친환경농업과, (新)친환경축산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新)농촌환경정책과에서는 농촌환경정책의 개발 및 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농업용수 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 및 목표기준의 설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고, 동물복지과의 경우에는 동물의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계획 및 유기농업육성 계획 업무,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업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친환경축산팀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 육성, 축산 기자재 및 사료 산업 등과 관련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41>은 농촌환경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42 > 농촌환경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환경정책의 개발·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업용수 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10
동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동물용 의약품 기준 • 반려동물 문화 조성 포함 •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	10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	2
친환경축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축산 육성 친환경 축산농장 축산 기자재 사료산업 초지의 조성 업무 등 조사료 수급안정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이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	1

다음의 <그림 6-50>은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6-50> 농식품생산안전정책실 조직 재설계(안)

5)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설계 방안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現)식품산업정책실을 농식품산업진흥실로 명칭변경하고 재편하고자 한다. (新)농식품산업진흥실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진흥정책관, 농지정책관 등으로 구성하고 (新)식품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現)농업정책국 소속의 농업정책과를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新)농업진흥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의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와 농기자재정책팀은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現)농업정책국의 농업금융정책과를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한다. (現)농업정책국 소속의 농지과를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現)식량정책국 소속의 농업기반과와 간척지농업과를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창조농식품정책과 기능은 (新)식품산업정책관 소속의 식품산업정책과 및 식품산업진흥과로 이관한다. 아래의 <그림 6-51>은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 농식품산업진흥실 소속 → (新)식품산업정책관, (新)농업진흥정책관, (新)농지정책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업진흥정책과로 명칭변경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금융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지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 (現)식량정책국 소속의 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창조농식품정책과 기능 → (新)식품산업정책관 소속 식품산업정책과로 이관
	강화	• 식품산업 기능, 농업진흥 기능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업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의 농업진흥정책과 명칭변경 • (現)농지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의 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51>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식품산업정책과에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검토 업무, 농식품 소비홍보 사업 추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품산업진흥과의 경우에는 김치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산업진흥과에서는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진흥과의 경우, 농수산물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업무,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수출 지원사업,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클러스터식품추진팀의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43>은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43>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식품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식품산업정책업무 총괄 및 기획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 국가푸드플랜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법령 운영 •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 계획 수립 등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	3
식품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관련 법제정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과학기술정책과와 분리 	-	3
외식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경영 교육·컨설팅, 외식창업 지원, 식재료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외식문화 선진화 등 	-	1
수출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 국회대응 	-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매년도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조성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산채개발원 건축·장비 구입, 산채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세부운영방안 조정 	-	1

농업진흥정책관에서는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농업구조정책, 통일농업정책 및 농업분야 서비스 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금융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해보험정책과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업무,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업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관련 R&D 기획, 기술창업(벤처) 육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자생명산업과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기자재정책팀의 경우에는 농기계 장·단기 계획 수립,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영 및 제도 개선 업무, 비료 장·단기 계획 수립, 비료관리법 운영 및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44>는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44>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업진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 한반도 농업, 농촌 발전전략 	-	2
농업금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
재해보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 손해평가관리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	-
과학기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 농식품 기술창업(벤처) 육성(공약) 	-	3
종자생명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 •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상임위원 및 간사) 	-	4
농기자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자재산업육성 정책 및 기획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농업기계화 추진 • 여성친화형농기계 종합보급대책(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련 단체 지도 감독 • 축산기자재업무총괄 • 기록물관리, 서무업무, 기타 업무 등 	2

농지정책관 소속의 농지정책과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관련 업무, 농지연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제도 관련 법령의 협의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기반과의 경우에는 가뭄대비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사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방조제관리법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농업과에서는 간척지 활용·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배수개선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45>는 농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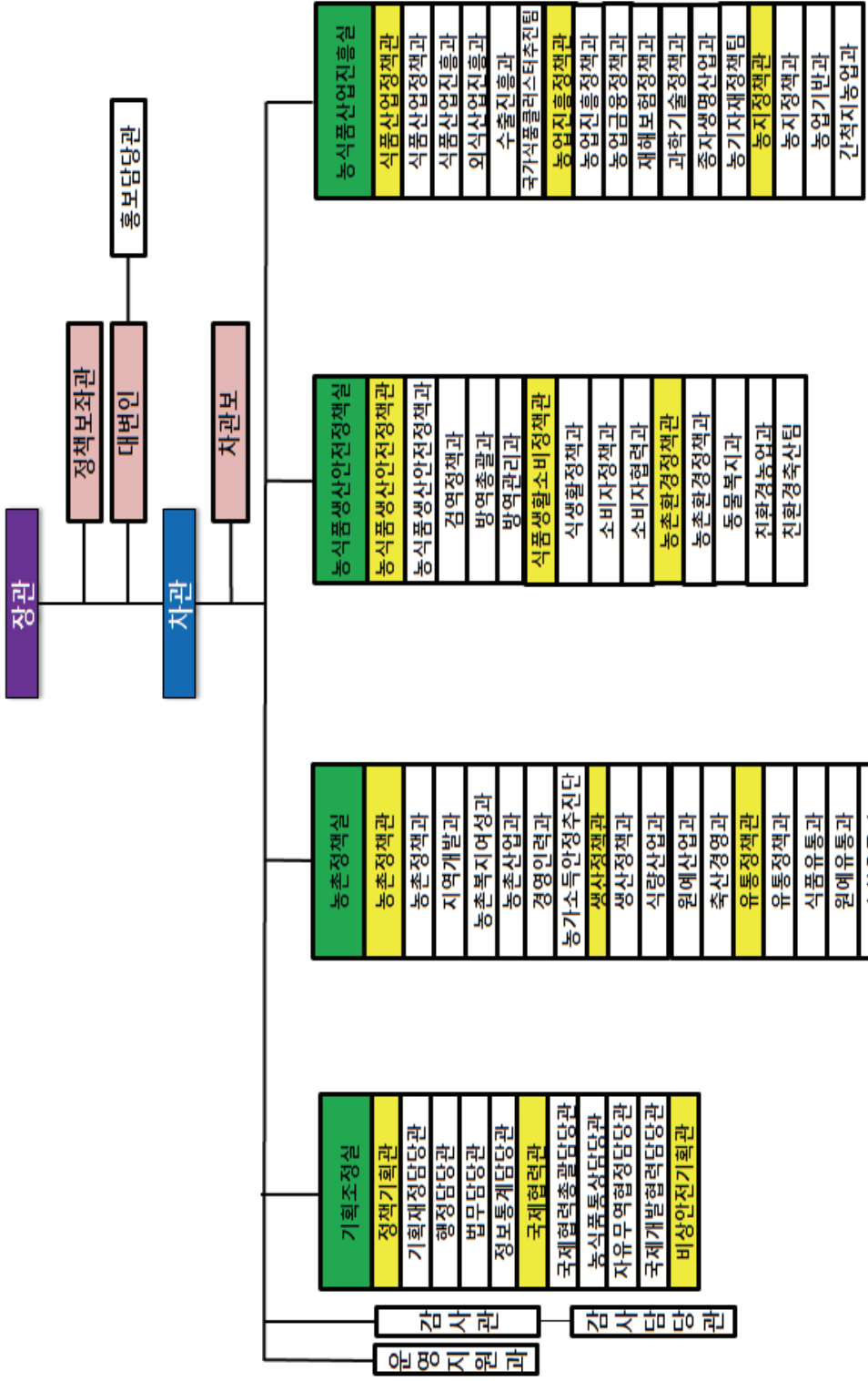
<표 6-45> 농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개발관련 협의 •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 농업진흥지역 운영 • 농지보전 제도 운영 •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 농지종합정보화 	-	2
농업기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 농어촌정비법 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	-
간척지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 배수개선 계획 	-	-

다음의 <그림 6-52>는 농식품산업진흥실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6-52>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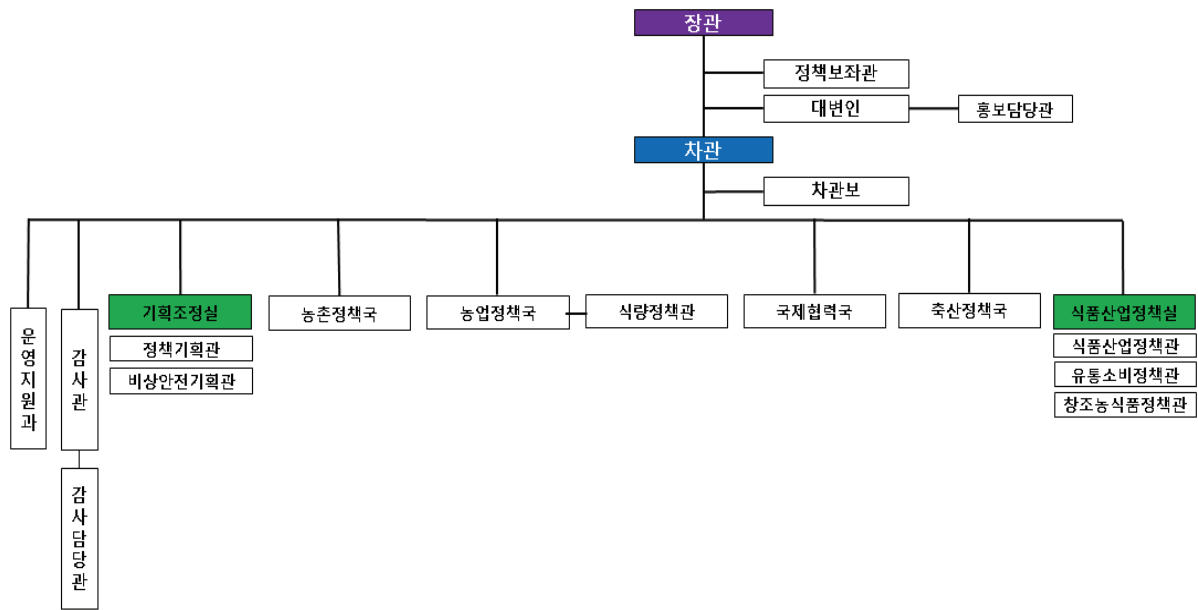
- <소속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한국농수산대학
 - 국립종자원
- <외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그림 6-53>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2안)

3.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3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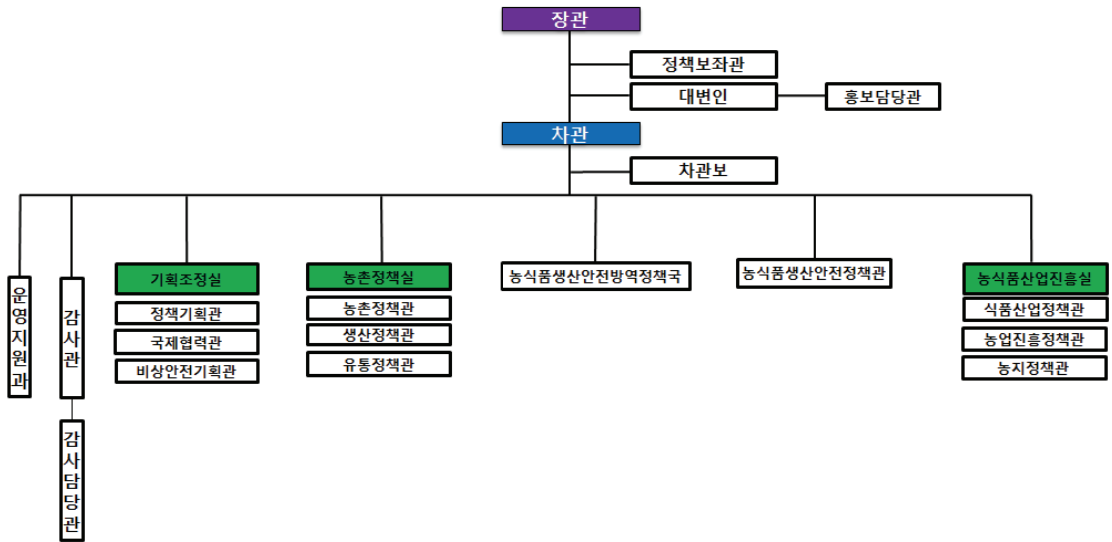
농정수요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농정행정 구현, 농식품·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농촌 복지 구현, 국제협력 및 농업통상 협력 강화 및 스마트 농정지원 현실화 등 융·복합적 농업 및 미래성장 농촌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現)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을 확대·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를 (新)3실 2국 체제로 재편하고, 정책기획 기능 및 국제협력 기능 수행강화를 위한 (現)기획조정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농촌 지역개발정책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품 생산 및 유통 기능 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新)농촌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식품 및 농축산품 안정성 확보, 식품생활 및 소비자 보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및 (新)농촌환경정책국 신설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現)식품산업정책실을 (新)농식품산업진흥실로 명칭변경하고 재편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6-54>와 <그림 6-55>는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물대학 국립종자원
-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54> (現)농림축산식품부의 2실 4국 체제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림 6-55> (新)농림축산식품부의 3실 2국 체제

<표 6-46>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1과	지원 부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실 1과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비상기획안전기획관	5관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명칭변경) 행정담당관(명칭변경) 법무담당관(명칭변경) 정보통계담당관(명칭변경) 비상안전기획관(명칭변경)	5관
농촌 정책국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4과	농촌 정책관 (명칭 변경)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농업정책국으로 부터 이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식량정책관에서 이관)	5과 1단 (1과 1단 증설)
농업 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협경제지원팀	5과1팀	농업 진흥 정책관 (명칭 변경)	농업진흥정책과(명칭변경)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이관) 종자생명산업과(이관) 농기자재정책팀(이관)	5과 1팀
			농지 정책관 (신설)	농지정책과(명칭변경)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3과 (3과 증설)

개편 전			개편 후		
식량 정책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4과 1단	생산 정책관 (신설)	생산정책과 식량산업과 원예산업과(유통소비정책관 으로부터 이관) 축산경영과(국제협력국으로 부터 이관)	4과 (1단 축소)
국제 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4과	국제 협력관 (명칭 변경)	국제협력총괄담당관(명칭변 경) 농식품통상담당관(명칭변경) 자유무역협정담당관 (농업통상과, 동아시아무역협 정 통합) 국제개발협력담당관(신설)	4관 (4과 축소 4관 증설)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	4과 1팀	농식품 생산 안전 방역 정책국 (신설)	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명칭 변경) 식생활정책과(명칭변경) 소비자정책과(신설) 소비자협력과(신설) 방역정책과 (명칭변경) 중대동물방역과(명칭변경) 소동물방역과(명칭변경)	7과 (1팀 축소)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국제협력국으 로 이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4과 1팀	식품 산업 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4과 1팀
유통 소비 정책관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4과	유통 정책관 (명칭 변경)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신설) 표시인증과(신설) 원예유통과(신설) 축산유통과(신설)	5과
창조 농식품 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중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4과 1팀	농촌 환경 정책국 (명칭 변경)	농촌환경정책과(신설) 동물복지과(신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팀(축산정책국에 서 이관 및 명칭변경)	3과 1팀
4국 5관		2실 5관 34과 1단 4팀	2국 8관		2실 9관 37과 1단 3팀
			2국 축소 3국 증설		1팀 축소 4관 3과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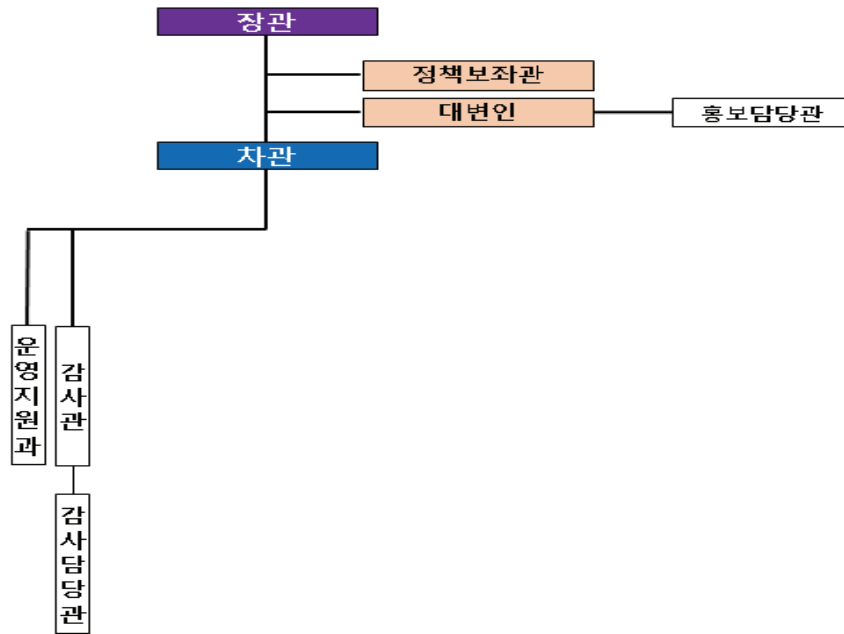
1) (現)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방향성

지원부서의 기능 분석 결과, 대변인실의 경우에는 각종 홍보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보도 계획 수립 및 조정,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영상광고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및 부서 간 조정이 요구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 해석, 감사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국무조정실 등 외부 요청에 대한 조사,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 업무,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 평가, 교육, 상훈, 징계 총괄 업무, 국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다면평가, 보안 업무, 인사업무 등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47>은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47> 지원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 기획 및 계획 주요 시책별 홍보 아이템 기획 캠페인, 영상광고 등 킬러 콘텐츠 제작 언론인터뷰 및 기고 보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농업인단체와의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보고 	1
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감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감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국제식품검역인증원 감사 한국마사회 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신고 일상감사 지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퇴직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항 	1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 인원협의 및 심사인원 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종합 평가 글로벌 중장기 인재양성 교육, 상훈, 징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운영 관리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행사지원 	1

(現)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 6-56>과 같이 현재의 소속을 유지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및 기능에 근거하여 기능강화 및 인력증감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림 6-56> 지원부서조직 재설계(안)

2) 기획조정실 조직 재설계 방안

기획조정실의 기능 분석 결과, 종합적인 농정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업무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조정관리, 그리고 타 부처 간의 협업 행정 기능 강화 및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농정행정 혁신 과제 발굴 기능들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농정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정담당관실의 경우는 공무원 통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업무, 소요정원 관련 업무 및 재정지원관리제도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무담당관실은 국회 입법 추진 업무 총괄, 정부 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국정과제 등 법제업무 추진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통계담당관실의 경우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업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現)정책기획관 소속의 창조행정담당관은 행정담당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으로,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48>은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이다.

<표 6-48> 정책기획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당면 농정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 국회대응 • 경제정책 방향 수립 • 재정관리 편성 총괄 •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답변서 제출 • 국회 및 정당업무 • 신규 농축산식품산업 예산 심의 	-	2
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 국정과제 총괄 • 농식품정책자료집 발간(분장외) • 사회혁신 업무 발굴 • 금요농정브라운백 미팅(분장외) • 금요농정타운홀미팅(분장외) • 변화관리 교육, 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 • 정책실명제 	1
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입법추진 업무 총괄 • 농식품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식품규제발굴 및 개선 •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 • 농축산식품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농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 농림축산식품통계 중장기 발전 방안 • 통계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 • 통계관련 규정 운영 •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정보보안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대응훈련 대회 참가(분장외) • 부서개인별 정보보안지수 운영(분장외) • 전자기파 공격 대응(분장외) • 일일정보보안 뉴스작성 및 공유(분장외) 	-

(現)국제협력국 소속의 국제협력 및 농업통상 및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관련 기능을 (現)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新)국제협력관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또한, (新)국제협력관 산하에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농식품통상담당관, 자유무역협정담당관 명칭 변경하고,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을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6-57>은 (新)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국제협력관 산하 국제개발협력담당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국제협력국 기능 → (現) 기획조정실로 이관 (現)국제협력총괄과 기능 중, ODA 관련 기능 → (新)국제개발협력담당관으로 이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 농식품통상담당관 및 자유무역협정담당관 기능 강화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국제협력국 → (新)국제협력관으로 명칭변경 (現)국제협력총괄과 → (新)국제협력총괄담당관으로 명칭변경 (現)농업통상과 → (新)농식품통상담당관으로 명칭변경 (現)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新)자유무역협정담당관으로 명칭변경

<그림 6-57> 국제협력관 조직 개편 방향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국제협력위원회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대외경제장관 회의 사항 및 농축산물 통상 및 협상관련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식품 통상담당관의 경우는 OECD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WTO 농업 협정 이행 및 농축산물 수입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담당관은 FTA 이행, 투자 및 지재권 관련 업무, RCEP, TPP 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이 신설된 국제개발협력담당관의 경우는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49>는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49> 국제협력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 결과

부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국제협력총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해외농업개발사업기획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통상협상, 국제기구활동 기본계획 미국 등 해외통상환경동향 조사 국정과제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 간담회 개최 주간, 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 소관 비영리 법인 점검 및 관리(분장외) 	2
농식품통상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쌀 관세화 검증 대응 ASEM 등 국제기구 관련 협의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농산물 반입 	1
자유무역협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FTA-SPS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FTA 서비스, 투자, 지재권 관련 업무 한-호주 FTA 이행 사항 한-중동 FTA 관련 업무 한-중남미 FTA 관련 업무 무역기술장벽 FTA SPS에 관한 사항 한-EU FTA 관련 업무 한-미 FTA 관련 업무 	-	2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국제개발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분야 ODA 관련 업무 해외농업개발사업 업무 유럽국가, 오세아니아 국가 등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등 	-	2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가보안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상안전기획 기능 수행을 위하여 (現)비상안전기획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의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재난관리평가 및 훈련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표 6-50>은 비상안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이다.

<표 6-50> 비상안전기획관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비상안전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비훈련 실시 을지연습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그림 6-58>은 기획조정실 재설계(안)를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58> 기획조정실 재설계(안)

3) 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 방안

농촌정책실에 대한 환경분석, 해외사례분석 및 기능 분석을 종합한 바, 농촌 지역개발정책과 연계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들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유관 기능들을 전환배치 및 이관하여 농촌정책실을 신설하는 것

을 제언한다.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 정책의 선진화 및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 육성 그리고, 안정적인 농식품 및 농축산품의 생산, 유통 단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농촌지역생활권 구축 및 농촌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예 및 축산 그리고 식량생산에 따른 유통 구조 개선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추진 중인 농산물 인증 및 농축산물 품질관리 등의 기능들을 통합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일부 기능들을 (新)농촌정책실로 이관하는 것을 제언한다. (新)농촌정책실산하에는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및 (現)농업정책국 기능(경영인력과) 그리고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들을 (新)농촌정책관실로 이관·통합하여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6-59>는 (新)농촌정책실 조직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농촌정책실 →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을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농업정책국, (現)농촌정책국, (現)식량정책관, (現)축산정책국 및 (現)식품산업정책실 소속의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일부 기능 → (新)농촌정책실로 이관

<그림 6-59> 농촌정책실 조직 개편 방향

(現)식량정책관실 기능(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現)축산정책국 기능(축산경영과) 및 (現)유통소비정책관실 기능(원예산업과)들을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통합하고, (現)식량정책과 명칭을 생산정책과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新)생산정책관실은 생산정책과, 식량산업과, 원예산업과, 축산경영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現)유통소비정책관 소속의 유통정책과 기능을 (新)농촌정책실 유통정책관실로 이관·통합하고, 유통정책관실은 유통정책과, 식품유통과, 표시인증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로 구성하는 것을 제언한다. 아래의 <그림 6-60>은 농촌정책실 소속 부서별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농촌정책관, (新)생산정책관, (新)유통정책관 신설 • (新)유통정책관 소속의 식품유통과, 표시인증과, 원예유통과, 축산유통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농촌정책국 기능(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 (新)농촌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농가소득안정추진단) → (新)농촌정책관으로 이관 • (現)식량정책관 기능(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축산정책국 기능(축산경영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원예산업과) → (新)생산정책관으로 이관 • (現)유통소비정책관 기능(유통정책과) → (新)유통정책관으로 이관
	강화	• 농촌지역개발, 농촌복지, 경영인력, 농식품·농축산품 유통 기능 강화
조직명칭 변경		• (現)식량정책과 → (新) 생산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60> 농촌정책관, 생산정책관, 유통정책관 조직 개편 방향

농촌정책관 소속의 농업정책과의 경우,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 농업분야 지역발전사업 체계화 업무, 전시·체험 및 유물수집에 관한 업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개발과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복지여성과의 경우,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산업과의 경우에는 농촌관광 해외설명회,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 업무, 농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업 업무,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상품, 통역 서비스 지원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영인력과는 농업교육훈련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결산, 관리운용 업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사업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51>은 농촌정책실 소속의 농촌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1> 농촌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획 전시부문 용역 및 공사 관리 유물수집 관련 기획, 관리감독 건축부문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토목부문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험가동 등에 관한 업무 	-	3
지역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농촌 지역개발 역량 강화 농업 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뉴타운 주택개발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업무 등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농촌복지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농촌 복지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농업인 자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 	-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산업정책 • 기업유치 및 활성화 • 농촌 지역 특화·향토 산업 •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사항 업무 등 • 농촌관광평가제도(분장외) • 농촌관광시설 등급평가 관련 제도개선(분장외)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 국제농업박람회(분장외) 	-	2
경영인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제도운영 및 개선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지자체 교육훈련 •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실습교육장 운영지원 •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	-

생산정책관 소속의 생산정책과에서는 공공비축제도 시행 관련 업무, 법령의 제 개정 및 규제 총괄 업무, 식량정책 및 양곡수급계획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량산업과의 경우에는 쌀 및 식량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업무,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 총괄 업무, 식량산업 R&D 업무, 쌀 소비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예산업과에서는 인산산업법 운용, 엽채류, 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업무, 특용작물 산업 관련 직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경영과의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양돈·양봉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축산시설현대화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52>는 생산정책관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2> 생산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생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총괄 •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홍보, 보도계획에 관한 사항 • 중단기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	1
식량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예찰, 방제계획 수립 및 총괄 • 쌀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쌀 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	1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원예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과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시설규격 운영 노지채소생산안정제 추진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인삼산업 종합계획 인삼산업법 운용 화훼산업발전법 제정(핵심과제) 청탁금지법, 시장개방 대응 화훼, 과수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핵심과제) 	-	1
축산경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대외통상 및 국내 보완대책 축산분야 주요 업무계획 수립 도축산업 육성지원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양돈, 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한우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쇠고기 수급에 관한 업무 낙농, 육우, 사슴 산업 발전 낙농진흥법 운용 	-	1

유통정책과에서는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대책 업무, 농산물 직거래법 운용 업무,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운용, 농산물의 인증제도, 농축산물 품질 관리 및 원산지 표시 업무,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 업무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유통과에서는 식품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업무 관련 기능들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시인증과에서는 농산물 등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원예유통과에서는 원예농산물 비축 및 브랜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유통과의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축산물 유통 및 등급제도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6-53>은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3> 유통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제도 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원예농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운용 채소류 최저가격제도 발작물 경쟁력 제고방안 총괄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관리 	-	1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조직 선정 지원 및 평가 		
식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 구조 개선 계획 수립 • 식품 가격안정 관련 계획수립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10
표시인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10
원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 원예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 • 엽채류, 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 엽채류, 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	10
축산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	10

아래의 <그림 6-61>은 농촌정책실 재설계(안)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6-61> 농촌정책실 재설계(안)

4)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재설계 방안

농식품안전정책국 관련 환경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그리고 기능 분석 결과, 농식품 및 농축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수입 및 신종 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위생안전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성인급식사업, 건전식생활 활성화, 학교급식사업 및 여성·임산부·아동 등에 대한 영양공급사업 등 식생활교육지원 및 안정성 업무 등에 대한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및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농산물 구입 소비자에 대한 보호정책 기능 역시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술된 환경분석 및 기능 분석을 근거로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 (新)식생활정책과, (新)소비자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를 신설한다. 그리고 방역기능으로는 (現)방역총괄과와 (現)방역관리과 기능을 이관받아 (新)방역정책과, (新)중대동물방역과, (新)소동물방역과를 신설한다.(아래의 <그림 6-62>는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 (新)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 (新)식생활정책과, (新)소비자정책과, (新)소비자협력과, (新)방역정책과, (新)중대동물방역과, (新)소동물방역과 신설
기능 조정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의 기능 →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으로 이관

<그림 6-62>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新)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소속의 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에서는 농산물 및 농축산물의 안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업무, 농산물 및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식생활정책과에서는 원산지 표시, 농산물안전성 관련 업무, 식생활교육지원 및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입식품관리계획 수립 및 수입식품 위생 안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정책과 및 소비자협력과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정책 수행 기능,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정책과는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등의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며 중대동물방역과는 소, 돼지 등 중대형 동물의 방역 특히, 구제역 및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및 방역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동물방역과 역시 닭, 개 등의 동물방역대책 수립 추진, 방역 업무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6-54>는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4>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식품생산안전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농축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	20
식생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관리계획 수립 수입식품 안전성 업무 관련 기능 등 원산지 표시 식생활교육지원,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업무 등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20
소비자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 관련 기능 등 	-	10
소비자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 관련 기능 	-	10
방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가축 방역대책 총괄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전염예방법 운용 수의사법 운용 돼지열병 등 중가축 방역대책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 및 운용 	-	2
중대동물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대책 구제역방역과 업무 총괄 동물방역대책 수립 추진 살처분 보상금 소가축방역대책 	-	2
소동물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뉴켓슬병, 가금티프스 등 방역관리 광견병 방역대책 조류, 개, 고양이, 꿀벌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	1

아래의 <그림 6-63>는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직 재설계(안)〉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농식품생산안전정책과(신설)
식생활정책과(신설)
소비자정책과(신설)
소비자협력과(신설)
방역정책과(신설)
중대동물방역과(신설)
소동물방역과(신설)

〈그림 6-63〉 농식품생산안전방역정책국 조직 재설계(안)

5) 농촌환경정책국 조직 재설계 방안

(現)축산정책국 기능(친환경축산팀) 및 (現)창조농식품정책관 기능(친환경농업과)을 (新)농촌환경정책국으로 이관·통합하고, 친환경 농축산업 및 동물보호 관련 기능 강화 차원에서 (新)농촌환경정책과 및 (新)동물복지과를 신설한다. 아래의 <그림 6-64>는 (新)농촌환경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내용
신설		▪ (新)농촌환경정책국 소속 → (新)농촌환경정책과, (新)동물복지과 신설
기능조정	이관	▪ (現)축산정책국 소속의 친환경축산팀 → (新)농촌환경정책국으로 이관 ▪ (現)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의 친환경농업과 → (新)농촌환경정책국으로 이관
	강화	▪ 친환경농업 기능 및 동물복지 기능 등

〈그림 6-64〉 농촌환경정책국 조직 개편 방향

(新)농촌환경정책국 산하에는 (新)농촌환경정책과, (新)동물복지과, (新)친환경농업과, (新)친환경축산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新)농촌환경정책과에서는 농촌환경정책의 개발 및 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농업용수 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 및 목표기준의 설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고, 동물복지과의 경우에는 동물의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계획 및 유기농업육성 계획 업무,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업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친환경축산팀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 육성, 축산 기자재 및 사료 산업 등과 관련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55>는 농촌환경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5> 농촌환경정책국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촌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환경정책의 개발·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 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10
동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동물용 의약품 기준 반려동물 문화 조성 포함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반려견 등 동물관련 사업 	-	10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관리 및 활성화 지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지원 	-	2
친환경축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축산 육성 친환경 축산농장 축산 기자재 사료산업 초지의 조성 업무 등 조사료 수급안정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 이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	1

아래의 <그림 6-65>는 농촌환경정책국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6-65> 농촌환경정책국 조직 재설계(안)

6)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설계 방안

농식품 산업 및 농업 진흥 그리고 농지 정책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하여 (現)식품산업정책실을 농식품산업진흥실로 명칭변경하고 재편하고자 한다. (新)농식품산업진흥실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진흥정책관, 농지정책관 등으로 구성하고 (新)식품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現)농업정책국 소속의 농업정책과를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新)농업진흥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의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와 농기자재정책팀은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現)농업정책국의 농업금융정책과를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한다. (現)농업정책국 소속의 농지과를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現)식량정책국 소속의 농업기반과와 간척지농업과를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창조농식품정책과 기능은 (新)식품산업정책관 소속의 식품산업정책과 및 식품산업진흥과로 이관한다. 아래의 <그림 6-66>은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편방향		세부 내용
신설		• (新) 농식품산업진흥실 소속 → (新)식품산업정책관, (新)농업진흥정책관, (新)농지정책관 신설
기능조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업진흥정책과로 명칭변경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기자재정책팀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업금융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농업정책국 소속 농지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 (現)식량정책국 소속의 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으로 이관 • (現)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 창조농식품정책과 기능 → (新)식품산업정책관 소속 식품산업정책과로 이관
	강화	• 식품산업 기능, 농업진흥 기능
조직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농업정책과 → (新)농업진흥정책관 소속의 농업진흥정책과 명칭변경 • (現)농지과 → (新)농지정책관 소속의 농지정책과로 명칭변경

<그림 6-66>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개편 방향

식품산업정책과에서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검토 업무, 농식품 소비홍보 사업 추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인력양성 증장기 계획 수립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품산업진흥과의 경우에는 김치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산업진흥과에서는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진흥과의 경우, 농수산물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업무,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수출 지원사업,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클러스터식품추진팀의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56>은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6>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식품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식품산업정책업무 총괄 및 기획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이행 • 국가푸드플랜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및 법령 운영 • 미래식품산업 핵심유망품목 육성 •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세부이행 계획 수립 등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공약) •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공약) 	-	3
식품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관련 법제정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 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과학기술정책과와 분리 	-	3
외식산업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경영 교육·컨설팅, 외식창업 지원, 식재료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외식문화 선진화 등 	-	1
수출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 • 국회대응 	-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및 기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매년도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조성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산채개발원 건축·장비 구입, 산채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세부운영방안 조정 	-	1

농업진흥정책관에서는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농업구조정책, 통일농업정책 및 농업분야 서비스 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금융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업무 등과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해보험정책과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업무,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업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관련 R&D 기획, 기술창업(벤처) 육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자생명산업과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에 관한 업

무,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기자재정책팀의 경우에는 농기계 장·단기 계획 수립,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영 및 제도 개선 업무, 비료 장·단기 계획 수립, 비료관리법 운영 및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57>은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7> 농업진흥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업진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 지역농업 활성화 및 협력 증진 • 한반도 농업, 농촌 발전전략 	-	2
농업금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
재해보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 손해평가관리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인재해대책 및 농업인 수입보장제도 	-	-
과학기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기획 • 농식품부R&D 사업 운영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관련 사업 • 농식품 기술창업(벤처) 육성(공약) 	-	3
종자생명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 •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무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상임위원 및 간사) 	-	4
농기자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자재산업육성 정책 및 기획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농업기계화 추진 • 여성친화형농기계 종합보급대책(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련 단체 지도 감독 • 축산기자재업무총괄 • 기록물관리, 서무업무, 기타 업무 등 	2

농지정책관 소속의 농지정책과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관련 업무, 농지연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제도 관련 법령의 협의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기반과의 경우에는 가뭄대비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사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방조제관리법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농업과에서는 간척지 활용·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배수개선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6-58>은 농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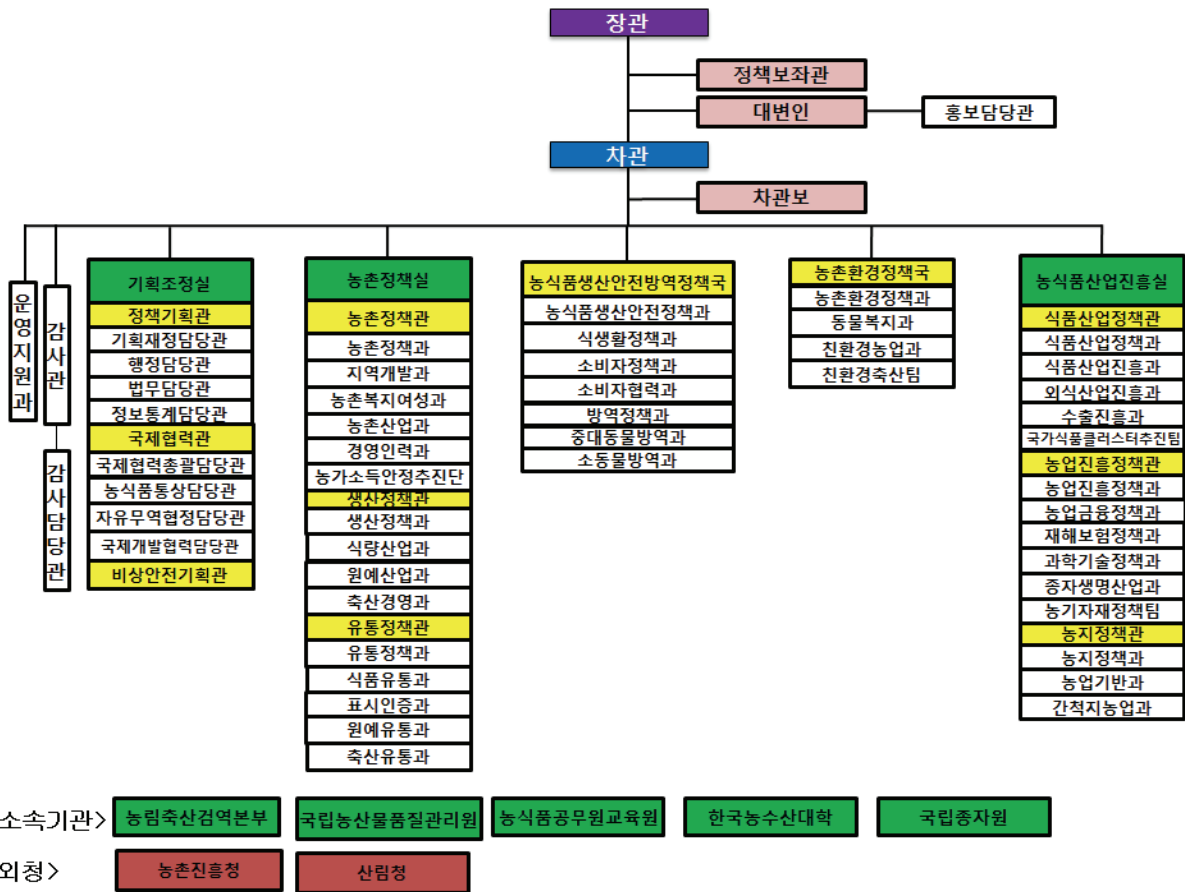
<표 6-58> 농지정책관 소속 부서별 기능 강화 및 감소 직무 대비 인력증감 분석결과

부 서	기능 강화 직무	기능 감소 직무	인력 증감
농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개발관련 협의 • 지역, 지구 등 지정 관련 협의 •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협의 • 농업진흥지역 운영 • 농지보전 제도 운영 •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협의 • 농지종합정보화 	-	2
농업기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협의회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운용 • 하천수활용 농촌용수이용대책 • 농어촌정비법 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	-
간척지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 농지이용범용화에 대한 계획 • 화용, 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 • 배수개선 계획 	-	-

다음의 <그림 6-67>은 농식품산업진흥실 재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6-67> 농식품산업진흥실 조직 재설계(안)



<그림 6-68>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재설계 (중장기 3안)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토연구원. (2009).
- 국회에산정책처. (2015). 2016년도 정부성과계획 평가.
- 기상연구소. (2011). “새로운 미래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자료 산출”, 기상청, 2011.6.27.
- 김병률·이명기·유찬희·임영아·김덕호·김종인·김정섭·정도채·김용렬·박준기·채광석·박지연·김미복·박성진·황용재·최병욱·이상현·우성휘. (2017).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완배 외. (2012). 「농업농촌 희망 설계도」. 희망제작소.
- 김윤권 외. (2012).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조직 재설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이재호·윤광석. (2014). 「정부·지방자치단체 스마트오피스 적합모델 연구」. 2014.
- 김은진. (2008). 정부 식품안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농정연구」, 통권 26호.
- 김정호 외. (20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인. (2016).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02).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2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a. (2014).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 농림축산식품부b. (2014).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 농림축산식품부a. (2017). 성과관리 계획 자료(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b. (2017). “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보도자료.
- 문유석. (2015).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2015.2. pp. 393~416(24 pages).
- 박환일. (2010). “불편한 진실 Revisited”,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법제처. (2017).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배종하·최지현·우병준·한재환. (2009).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용석 외. (2016).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사혁신을 위한 미래백서. 인사혁신처. 한국행정연구원.
- 양병우·이소영. (2010). 식품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 제34호. 여름.
- 양희동. (2014).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 「Cheil」 Cheil, 2014.10.
- 유지은. (2016). 일본의 도시농업과 관련 기술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90호.
- 윤종록. (2017).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The 포럼 융합 미래산업 발전전략(4차 산업혁명).

2017.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병하 외. (2012). 한국의기업의 워크스마트 실천방안. 「SERI연구보고서. 2012.

이용선·박미성·한석호·문한필·박한울·박지원·박성진·정도채·정대희·강마야·김윤식·한재환. (2016).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고영곤·김한호·이승정·이지은·조영득·우가영. (2012). 「2008년 미국농업법 이행 상황과 신농업법 논의동향 분석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이재호 외. (201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한국행정연구원.

이종수. (2012).

이주량. (2017).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제200호. 2017.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지훈. (2010). "기상이변의 경제학",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혜림·이지평. (2014). 「일본의 사회보장·세제 개혁으로 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고민」, LG경제연구원. 2014.5.20.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新농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정책시사점". 세계농업 제17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필성. (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 200호. 2017.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2014).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현황". 「세계농업」 KREI, 161호(2014년 4월호).

정우진. (201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무공간 구축 방법론. 2011. Microsoft Coporaion.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내부 자료.

최상기. (2002). "미국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2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호진 외. (2008). 미래선진한국의 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토마 피케티. (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전망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중국사무소. (2016). 「중국농업 브리프」(2015년 12월호, 2016년 4월호, 2016년 12월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빅데이터로 본 2017년 STEEP별 이슈 전망.

황혜신 외. (2009).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김윤권·조태준·진종순. (2009). 「농어업·농어촌 행정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허덕. (2015). 일본 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77호.

KDB산업은행. (2014).

<국외문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2005).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2005.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2010).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2010.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2012). Chronologie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2012.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2014).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2014.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2015). Bilan social 2015.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2016). Le Ministère en Actions, 2016.02.
- 프랑스 재정부. (2017). CHIFFRES CLÉS DU PLF 2017.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a. (2017). Agrest (INSEE-Comptes de la Nation).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b. (2017). Agreste-Recensements agricoles 1988, 2000, 2010 et enquête structure ESEA2013.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2014). Ausgewählte Daten und Fakten der Agrarwirtschaft 2014.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2016). Bundeshaushaltsplan 2016. Einzelplan 10.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2017). Bundeshaushaltsplan 2017. Einzelplan 10.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 2009. 60 Jahre BMELV.
- CEDA(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2015). 호주의 호주경제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기술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연구'. 2015년 6월.
- DEFRA. (2001). A new Department, a new Agenda, DEFRA Consultation Document,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a. (2002). Developing DEFRA: a report on the merger for people who lead and manage chang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b. (2002). Foundations for our future: DEFRA'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c. (2002). Departmental Report 200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Forestry Commission and the Office of Water Services.
- DEFRA. (2003). Departmental Report 200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2004). Departmental Report 2004,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2005). Departmental Report 2005,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2006). Departmental Report 2006,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2007). Departmental Report 2007,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2008). Departmental Report 2008,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a. (2009). Departmental Report 2009,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b. (2009). Resource Accounts 2008-09,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0). Resource Accounts 2009-10,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2).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1-1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3).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1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4).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3-14,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15,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DEFRA. (2016).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5-16,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Stationery Office.
- EIA. (2012). Annual Energy Outlook 2012 with Projection to 2035(Independent Statistic & Analysis),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2.
-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Democracy Index 2015: Democracy in an age of anxiety. 2006~15.
- Giulio Boccaletti, Merle Grobbel, and Martin R. Stuchty. (2010). "The Business Opportunity in Water Conservation", McKinsey Quarterly, No.1, 2010.
- House of Common. (2002). The role of DEFRA, Select Committee on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0th Report of Session 2001-02. The Stationery Office.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1.
- IPCC. (2007).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한글번역), IPCC, Geneva, Switzerland, 2007.
- Thomas S. Kuhn.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abour Party. (2001). Ambitions for Britain, Labour Party Election Manifesto 2001.
- Labour Party. (2001). Rural Britain: Leadership for the future, Labour Party Election Manifesto 2001.
- Labour Party. (2015). A better plan for rural Britain, Labour Party.
- MAFF. (1999). A better quality of life: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UK,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isheries. The Stationery Office.
- MAFF. (2000). Departmental Report 1999-200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isheries. The Stationery Office.
- MAFF. (2001). Departmental Report 2000-200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isheries. The Stationery Office.
- OECD. (2008).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 2008.
-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2011). Trend Compendium 2030, 2011.
- Stern, N. (2006).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 Press, 2006.
- USDA, (2013). 2013 budget summary.
- USDAa. (2017). Budget Summary.
- USDAb. (2017). Report to Congress: Report on the Proposed 2017 Reorga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Establish an Under Secretary for 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 World Economic Forum. (2008). Future mapping 2030.
- 參議院決算委員會 自由民主党 山田俊男 제출자료, 2009.
- 小村 智宏, 日本農業の産業化への期待, 三井物産戦略研究所, 2012.
- 新たな農業・農村政策が 始まります, 農林水産省, 2013.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農林水産省, 2014.
-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の概要(食料・農業・農村これからの10年), 農林水産省, 2015.
- 農林水産省の業務・組織改革について, 農林水産省大臣官房文書課, 2015.
- 10月以降の農林水産省の体制について, 農林水産省, 2015.
- 本澤・実, 食糧問題と我が国の農業政策 -安部政権下の農業改革, 政策科学学会年報・第5号, 2015.
- 日本型直接支払制度の概要, 農林水産省, 2017.
- 平成29年度予算の概要, 農林水産省, 2017.
- 農林水産省予算概算決定の概要, 各년도.
- 农业部. 全国农业和农村经济发展第十个五年计划(2001-2005年).
- 农业部. 全国农业和农村经济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2006-2010年).
- 农业部. 全国农业和农村经济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2011-2015年).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全国农村经济社会发展十一五规划(2006-2010年).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全国农村经济社会发展十二五规划(2011-2015年).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全国农村经济社会发展十三五规划(2016-2020年).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2006-2010年).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发展纲要(2011~2015年).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6-2020年).

<인터넷 자료>

- 김현옥. (2016). '1인 가구 증가로 농식품 소비트렌드' '미니·믹스·프레시'. 농식품 주간동향. 옥답(Okdab) 홈페이지. (URL: <http://www.okdab.com/news/issueTrend/trendView.do?listType=press&issueSeq=2966&searchYear=&searchMonth=&searchKey=&searchValue=¤tPage=1>) (접속일: 2017. 4. 30.).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홈페이지. (URL: <http://www.mafra.go.kr/devplan/>) (접속일: 2017. 4. 23.).
- 법제처.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RL: <http://korea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6%8D>)

%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C%99%80%20
%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
%9C#undefined) (접속일: 2017. 6. 15.).

- 신정규. (2016). '1인 가구에 맞는 농업 생산기술과 마케팅 필요'. 식품외식경제(URL: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09>) (접속일: 2017. 4. 30.).
- 우병준. (2015). '가축전염병 발생과 축산업의 과제'. KREI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URL: https://www.krei.re.kr/web/www/3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404564) (접속일: 2017. 4. 30.).
-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URL: http://www.maff.go.jp/j/kobetu_ninaite/n_seido/nintei_gaiyou_tx.html) (접속일: 2017. 5. 23.).
- 일본 농림수산성(URL: <http://www.maff.go.jp/j/org/quota/2015/pdf/150915-01.pdf>) (접속일: 2017. 4. 1.).
- 전성인, 노령사회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 주간경향 1122호, 2015.4.21.(UR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504141027171>) (접속일: 2017. 6. 9.).
- 조선비즈 2016.9.21. "[하이슈 기본소득]② 기재위·복지위·환노위 의원 54% 기본소득,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 (접속일: 2017. 6. 2.).
-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URL: www.agriculture.gouv.fr) (접속일: 2017. 3. 21.).
- 프랑스 재정부 (URL: www.performance-publique.gouv.fr) (접속일: 2017. 3. 21.).
- 통계청a. (2016). 소득분배지표. (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접속일: 2016. 3. 29.).
- 통계청b. (2016). 국적,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접속일: 2016. 9. 24.).
- 통계청c. (2016). 향후 늘려야할 복지 서비스. (URL: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접속일: 2017. 3. 29.).
- BBC. (2016). 로봇이 당신의 직업을 차지할 것인가?(Will a robot take your job?) 내용. (URL: www.bbc.com/news/technology-34066941) (접속일: 2016. 7. 7.).
- e-나라지표. (2016). 경제성장률. (URL: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접속일: 2016. 3. 29.).
- Forest Service. 2011. Fiscal Year 2011 President's Budget Budget Justification (URL: https://www.fs.fed.us/sites/default/files/legacy_files/fy2011-forest-service-budget-justification.pdf) (접속일: 2017. 6. 2.).
- OPM. (URL: <http://www.opm.gov/feddata/>). (검색일: 2017. 2. 23.)
- The Economist. (2011). "Global Economic Dominance: Spheres of Influence", 2011, (URL: <http://www.economist.com/node/21528591>.) (접속일: 2017. 3. 11.).
- USDA. "Cuts, Consolidations, and Savings". (URL: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uts-consolidations-savings.pdf>): 2017. 5. 23. (접속일: 2017. 2. 22.).
- USDA 웹사이트. (URL: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rganizati>

- on-chart.pdf). (검색일: 2017. 2. 23.).
- USDA. “Cuts, Consolidations, and Savings”. (URL: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uts-consolidations-savings.pdf>). (검색일: 2017. 2. 23.).
- USDA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s Financial Statements for Fiscal Years 2014 and 2013. (URL: <https://www.usda.gov/oig/webdocs/06401-0004-11.pdf>). (검색일: 2017. 2. 23.).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URL: <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검색일: 2017. 3. 21.).
- USDA Forest Service. 2011. Fiscal Year 2011 President’s Budget Budget Justification (URL: https://www.fs.fed.us/sites/default/files/legacy_files/fy2011-forest-service-budget-justificationpdf). (검색일: 2017. 6. 2.).
- USDA Forest Service. 2015. The Rising Cost of Wildfire Operations: Effects on the Forest Service’s Non-Fire Work. (URL: <https://www.fs.fed.us/sites/default/files/2015-Rising-Cost-Wildfire-Operations.pdf>). (검색일: 2017. 5. 23.).
- 農林水産省. (URL: <http://www.maff.go.jp>) 組織・定員, 各년도 (검색일: 2017. 4. 26.).
- 中国农业部. (URL: <http://www.moa.gov.cn>) (검색일: 2017. 4. 27.).
- 中国国务院. (URL: <http://www.gov.cn>) (검색일: 2017. 4. 27.).
- 农业部. 农业部部门预算“建国以来国务院组织机构图”. (URL: http://www.360doc.com/content/14/0922/21/11325398_411581126.shtml). (검색일: 2017. 3. 2.).
- Globio.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URL: <http://www.globio.info/assessments-with-globio/global-regional-assessments/78-oecd-environmental-outlook-to-2030>). (검색일: 2017. 4. 23.).
- WaterWired. (2010). Global Water Shortage in 2030. (URL: <http://aquadoc.typepad.com/waterwired/2010/08/world-water.html>). (검색일: 2017. 4. 2.).